

2013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3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3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2014.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3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2014.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목 차

I 평가 개요 / 1

| | |
|----------------------|----|
| 1. 평가의 목적 및 근거 | 3 |
| 2. 평가 추진체계 | 4 |
| 3. 평가대상 기관 | 6 |
| 4. 평가단 구성·운영 | 7 |
| 5. 평가기준 및 척도 | 11 |
| 6. 평가등급 구분 기준 | 22 |
| 7. 평가추진 일정 | 23 |

II 평가결과 종합 / 25

| | |
|-------------------------|----|
| 1. 총 평 | 27 |
| 2. 평가지표(요소)별 등급분석 | 30 |
| 3. 평가지표(요소)별 종합평 | 40 |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 57

| | |
|--------------------|-----|
|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59 |
| 2. 국토연구원 | 97 |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31 |
| 4. 산업연구원 | 167 |
| 5. 에너지경제연구원 | 209 |

목 차

| | |
|------------------------|-----|
|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41 |
| 7. 통일연구원 | 273 |
| 8. 한국개발연구원 | 305 |
| 9. 한국교육개발원 | 345 |
|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385 |
| 11. 한국교통연구원 | 423 |
| 12. 한국노동연구원 | 465 |
|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505 |
| 14. 한국법제연구원 | 545 |
|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75 |
|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617 |
|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659 |
|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701 |
|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739 |
|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781 |
| 21. 한국행정연구원 | 813 |
|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851 |
|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883 |
| 2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921 |
| 25. KDI 국제정책대학원 | 961 |
| 26. 육아정책연구소 | 999 |

IV 제도개선 건의사항 / 1037

| | |
|------------------------------|------|
| 1. 연구회·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제언 | 1039 |
| 2. 연구기관 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 1040 |

I

평가 개요

1. 평가의 목적 및 근거
2. 평가 추진체계
3. 평가대상 기관
4. 평가단 구성·운영
5. 평가기준 및 척도
6. 평가등급 구분 기준
7. 평가추진 일정



1 평가의 목적 및 근거

□ 평가 목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목적은 연구기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실적과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기능 수행 과정이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연구기관 평가는 연구기관들이 평가목적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정부 및 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평가 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47조에 근거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
 - 「2013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에 의거하여 연구기관 평가 실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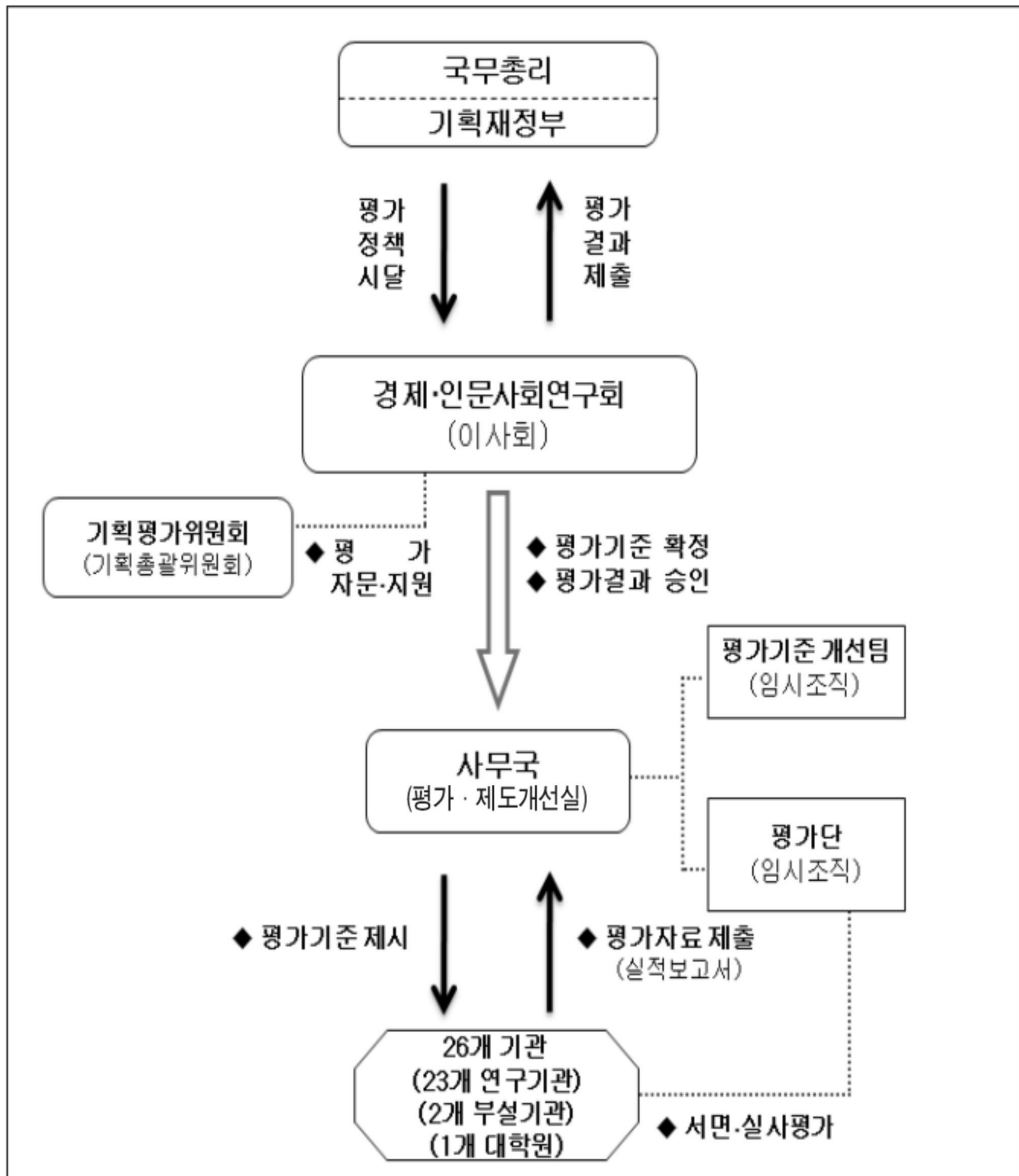
2 평가 추진체계

□ 평가 추진체계

- ① 국무총리(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감독관청)
연구기관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경영혁신 시책 등에 활용
- ② 기획재정부
연구회로부터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차년도의 예산심사, 경영혁신 시책 등에 활용
- ③ 국회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무총리로부터 보고 받고, 국회 차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육성 및 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
- ④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을 지원·육성·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연구회의 기본적인 임무 가운데 하나이며, 평가결과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구 분 | 내 용 |
|--------------------|--|
| 기획평가위원회 기획총괄위원회 | - 연구기관 평가에 관한 계획,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및 차기 평가 방향 제시 등의 지원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구성된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에 관한 상설 지원기구 |
| 이 사 회 평가분과위원회 | -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 등에 관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실질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 내의 상설 기구 |
| 평가기준(제도) 개 선 팀 | - 전년도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구성한 임시조직 |
| 평 가 단 | -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실제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구성한 임시조직 |

- 연구기관 평가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음



[연구기관 평가 추진 체계도]

3 평가대상 기관

□ 평가대상 기관 : 23개 소관 연구기관 및 2개 부설기관, 1개 대학원대학교

| | | |
|--------------|---------------|------------------|
|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9. 한국교육개발원 |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2. 국토연구원 |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1. 한국교통연구원 |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4. 산업연구원 | 12. 한국노동연구원 |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5. 에너지경제연구원 |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1. 한국행정연구원 |
|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4. 한국법제연구원 |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7. 통일연구원 |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8. 한국개발연구원 |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부설기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대학원 :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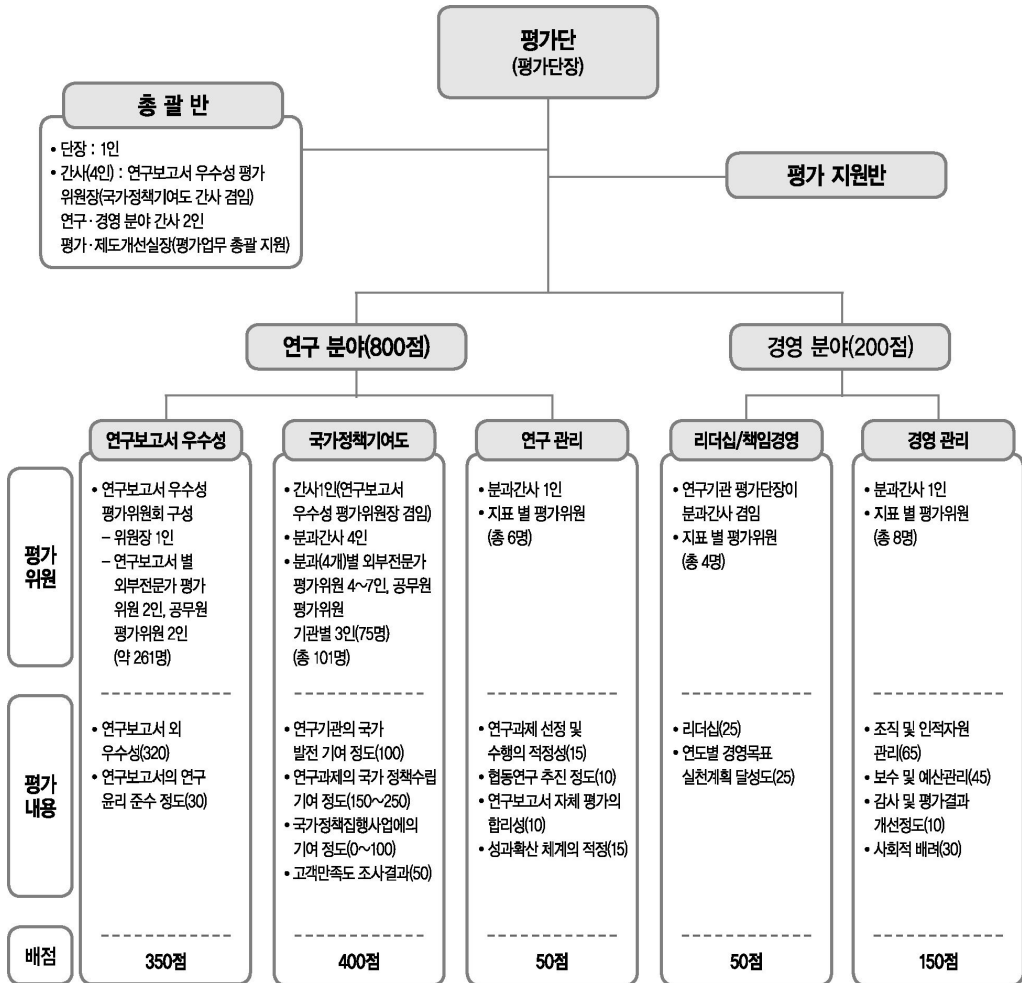
4 평가단 구성·운영

- 연구기관 평가는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
 - 연구분야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 국가정책기여도 평가, 연구관리 분야로 구분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 구성(260인)
 - ※ 1개 연구보고서당 4인의 위원이 평가(외부 전문가 2인·공무원 2인, 총 260인(위원장 제외))
 - 국가정책 기여도 평가 : 외부 전문가와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집체평가 실시(101인)
 - ※ 정부부처 공무원(75인) : 연구기관별 3인(25개 연구기관×3인)
 - ⇒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연구과제가 없으므로 공무원 평가위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연구관리분야 : ‘연구과제 관리’, ‘연구성과 확산체계’ 등 평가(6인)
 - ※ 외부 전문가(6인) : 연구기관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연구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집체평가
 - 경영분야 : ‘리더십 및 책임경영’,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보수 및 예산 관리’,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사회적 배려’ 평가(12인)
 - ※ 외부 전문가(12인) : 연구기관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경영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집체평가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괄반’과 ‘분야별 전담분과’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평가 실시

< 2013년도 평가위원 현황(총괄) >

| 구분 | 평가 단장 | 연구분야 | | | 경영분야 | | 계 |
|--------|----------|--------------|-------------|----------|---------------|------|-----|
| | | 연구보고서 우수성 | 국가정책 기여도 | 연구 관리 | 리더십 및 책임경영 | 경영관리 | |
| 평가위원 | 1 | 1 | 26 | 6 | 4 | 8 | 46 |
| 외부 전문가 | - | 130 | | - | - | - | 130 |
| 공무원 | - | 130 | 75 | - | - | - | 205 |
| 소 계 | 1 | 261 | 101 | 6 | 4 | 8 | 381 |

< 평가단 구성 : 46인으로 구성(총 381인이 평가에 참여) >



- ※ 연구분야의 '1-1. 연구보고서'의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30점)'는 201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단에서 실시한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결과'를 환산하여 적용
- ※ 연구분야의 '1-2. 국가정책기여도'의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50점)'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 평가점수' 환산하여 적용
- ※ 경영분야의 '2-2.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의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중에서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20점)'은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연구기관 보안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평가위원 현황〉

| 구 분 | | | | 성명 | 소속 | 비고 |
|-------|--------------------------------|-----------------|----------|----------------------------|----------------|----|
| 평가단장 | | | | 정인교 | 인하대 경제학부 | |
| 연구 분야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장 겸 국가정책기여도 총괄간사 | | |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 |
|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단 | | | 외부 전문가 130명, 정부부처 공무원 130명 | | |
| | 국가 정책 기여도 | 경제정책 분과 | 분과간사 | 김진국 | 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 |
| | | | 평가위원 | 구정모 | 강원대 경제학과 | |
| | | | | 류덕현 | 중앙대 경제학부 | |
| | | | | 박형래 | 강릉원주대 무역학과 | |
| | | | | 박봉규 |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 |
| | | | | 조재환 | 부산대 농업경제학과 | |
| | | | 공무원 평가위원 | | 정부부처 공무원 15명 | |
| | | 자원 인프라 분과 | 분과간사 | 이학노 |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 |
| | | | 평가위원 | 김도희 | 목포해양대 해양시스템공학부 | |
| | | | | 안승범 |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 |
| | | | | 임경수 | 성결대 지역사회과학부 | |
| | | | | 정인숙 |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 |
| | | | | 최재현 | 건국대 지리학과 | |
| | | | | 하상안 | 신라대 환경공학과 | |
| | | | 공무원 평가위원 | | 정부부처 공무원 21명 | |
| | | 인적자원 분과 | 분과간사 | 이강성 | 삼육대 경영학과 | |
| | | | 평가위원 | 김귀옥 | 한성대 교양학부 | |
| | | | |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 |
| | | | | 양미경 | 서강대 교육학과 | |
| | | | | 윤인경 |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 |
| | | | | 이원석 | 상명대 교육학과 | |
| | | | | 이윤재 | 상명대 소비자주거학과 | |
| | | | | 최윤진 | 중앙대 청소년학과 | |
| | | | 공무원 평가위원 | | 정부부처 공무원 24명 | |
| | 공공정책 분과 | 분과간사 | 오규열 | 서울디지털대 중국학부 | | |
| | | 평가위원 | 박원석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 | |
| | | | 오경식 | 강릉원주대 법학과 | | |
| | | | 홍형득 | 강원대 행정학과 | | |
| | | | 정진우 | 인제대 행정학과 | | |
| | | 공무원 평가위원 | | 정부부처 공무원 15명 | | |
| | 연구 | 간사 | | 김갑순 | 동국대 경영학과 | |

| 구 분 | | | 성명 | 소속 | 비고 | |
|----------|------------------|------|------|------------------------|---------------|--|
| 경영 분야 | 관리 | 평가위원 | 배근호 | 동의대 금융보험학과 | | |
| | | | 서덕석 | 한라대 건축학부 | | |
| | | | 서순탁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 | |
| | | | 안종태 | 강원대 경영학과 | | |
| | | | 신경아 | 한림대 사회학과 | | |
| | 리더십 및 책임경영 | 간사 | 정인교 | 인하대 경제학부 (평가단장이 겸임) | | |
| | | 평가위원 | 김용덕 | 송실대 경영학부 | | |
| | | | 오성호 | 상명대 행정학과 | | |
| | | | 윤태화 |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 | |
| | | | 이 철 | 서강대 경영학부 | | |
| | | | 간사 | 금재덕 |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 |
| | | 평가위원 | | 강정혜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 |
| | | | | 김상부 | 천지회계법인 | |
| 송용찬 | | | | 21C 정책전략연구소 | | |
| 제갈돈 | | | | 안동대 행정학과 | | |
| 이진국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 | | | |
| 송환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 | | | |
| 전영평 | 서울대 행정대학원 | | | | | |
| 계 | | | 381명 | | | |

5 평가기준 및 척도

[연구기관 평가지표]

□ 연구분야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
|---------------------|------------------------------------|--|-----------------|----------|
| | | | 요소 배점 | 항목 소계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연구의 필요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결과 제시의 논리성과 명료성 - 연구결과의 기여도 | 320 | 350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30 |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자원배분의 적정성 - 정부부처에서 수행한 국정과제 참여 및 지원 실적 -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국정과제 이행 실적과 성과 | 60 | 400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기관의 선제적 대응 정도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국가기관의 긴급 및 수 시요청에의 연구기관의 대응 정도 | 20 |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유관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 정도 - 협동 및 융·복합 연구를 위한 국내·외 관련기 관과의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실적과 성과 | 20 |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정책대안 제시의 우수성 - 대안의 정책화 과정 - 대안의 정책화 실적 - 정책의 경제·사회적 영향과 파급(기대)효과 | 150 ~ 250 |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
|---------------|------------------------------------|---|---------------|----------|
| | | | 요소 배점 | 항목 소계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연구의 독창성 및 연구결과의 선도성 - 새로운 지식이나 정책의 실현 정도 - 새로운 지식 및 정책의 파급(기대)효과 - 후속 및 관련 연구 수행 정도 및 가능성 | | |
| | 1-2-3. 국가정책 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사업계획·관리의 적정성 - 사업집행의 효과성 - 환류 및 사업개선의 적정성 | 0 ~ 100 | |
| |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30 | |
| |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0 |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시스템의 합리성 - 기본연구과제 선정시스템의 합리성 | 10 | 50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수시연구과제 수행의 적정성 | 5 |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협동연구 추진체계의 적정성 - 협동연구사업(5개) 추진실적 및 성과 | 10 |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자체평가 제도의 합리성 - 단계별 심의평가의 연구품질 제고 실효성 - 자체평가위원 구성의 적절성 | 10 |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지식자산을 효율적으로 생산·보호하려는 노력 - 연구결과 확산체계 및 수단의 적정성 - 연구결과 확산 실적 및 성과 | 10 |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연구원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5 | |
| | 연구 분야 소계 | | 800 | |

□ 경영분야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
|--------------------------|--------------------------------|--|----------|----------|
| | | | 요소 배점 | 항목 소계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기관발전 현안문제(3건) 타개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5 | 50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조직 내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기관 발전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활동 노력과 성과 | 10 |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경영윤리 이행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실적 | 5 |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5 |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의 적정성 -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 15 |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중점추진과제(3개)의 중요성, 추진실적, 파급효과 | 10 | |
| 2-2.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려는 노력과 성과 - 인력수급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 15 | 65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체제의 합리성 - 구성원 역량강화 실적 및 실효성 | 10 |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10 |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
|-----------------------------|--|--|----------|----------|
| | | | 요소 배점 | 항목 소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평가시스템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 -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 |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연구기관 보안평가 점수' 환산·적용 | 20 |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화합 및 갈등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화합을 위한 의사소통 활성화 -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의 적정성 | 10 |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연구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수시연구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 15 | 45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인건비 규모 준수 여부 -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 - 결원인건비 준수 여부 -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20 |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편성체계의 적정성 - 기본연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 준수 여부 | 5 |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연봉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 준수 여부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차등지급률 준수 여부 | 5 | |
| 2-4. 감사 및 평가 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 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 - 연구기관 평가결과 환류체계 -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실적 | 10 | 10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
|----------------|---------------------------|--|----------|----------|
| | | | 요소 배점 | 항목 소계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 채용노력 정도 -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실적 | 5 | 30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 청년인턴 운용의 적정성 | 5 |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노력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달성실적 | 5 |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휴가제의 적정한 운영 정도 - 육아휴직제의 적정한 운영 정도 | 5 |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차별 해소 규정(계획 포함)의 적정성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및 실적 | 10 | |
| 경영 분야 소계 | | | 200 | |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 교육·연구 분야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
|--|--|---|----------|----------|
| | | | 요소 배점 | 항목 소계 |
| 1-1. 교육과정 운영성과 | 1-1-1. 전문인력양성 교육성과 | <input type="checkbox"/> 학생구성의 적절성 | 50 | 300 |
| | | <input type="checkbox"/> 전체 교육과정 강의평가 결과 | 50 | |
| | | <input type="checkbox"/> 중도탈락 학생 비율 | 40 | |
| | | <input type="checkbox"/> 일반대학교와의 차별성 | 50 | |
| | 1-1-2. 교육네트워크 구축성과 | <input type="checkbox"/> 국제학생 선발 국가의 다양성 | 30 |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생간 네트워크 형성 정도 | 30 | |
| <input type="checkbox"/> 해외동문 네트워크 형성 정도 | | 50 | | |
| 1-2. 국가정책기여도 | 1-2-1. 공공부문 역량강화 기여도 | <input type="checkbox"/> 학위과정 공공부문 역량강화 기여도 | 60 | 250 |
| | 1-2-2. 발전경험 공유 기여도 | <input type="checkbox"/> 정책학 및 개발정책학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교육실적 및 성과 | 60 | |
| | | <input type="checkbox"/> 한국경제발전 경험 공유 성과 | 60 |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 이미지 제고 기여도 | 20 | |
| | 1-2-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30 | |
| | | <input type="checkbox"/> 교육수요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0 | |
| 1-3. 연구실적 | 1-3-1. 연구실적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연구업적 정도 | 200 | 200 |
| 1-4. 교육과정 운영 관리 | 1-4-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운영 | 10 | 20 |
| | 1-4-2. 교원 책임시수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국립대학 책임시수 준수 여부 | 10 | |
| 1-5. 교육·연구협력 추진 | 1-5-1.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대학원 교육과정 참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교육참여 실적 | 10 | 30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강의 참여제도 구축의 적정성 | 5 | |
| | 1-5-2.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정 참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참여 실적 | 10 | |
| | |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참여 제도의 적정성 | 5 | |
| 교육·연구 분야 소계 | | | 800 | |

□ 경영분야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
|--------------------------|--------------------------------|---|----------|----------|
| | | | 요소 배점 | 항목 소계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교육·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기관발전 현안문제(3개) 타개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기관의 교육·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5 | 50 |
| | | □ 대내·외적 소통 능력 - 조직 내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기관 발전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활동 노력과 성과 | 10 | |
| | | □ 윤리경영 - 경영윤리 이행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실적 | 5 | |
| | | □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5 |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의 적정성 -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 15 | |
| | |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중점추진과제(3개)의 중요성, 추진실적, 파급효과 | 10 | |
| 2-2.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려는 노력과 성과 - 인력수급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 15 | 65 |
| | |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체제의 합리성 - 구성원 역량강화 실적 및 실효성 | 10 | |
| | |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평가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평가시스템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 -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 10 | |
| | | □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연구기관 보안평가 점수' 환산·적용 | 20 |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
|--------------------------------|--|---|----------|----------|
| | | | 요소 배점 | 항목 소계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노사화합 및 갈등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화합을 위한 의사소통 활성화 -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의 적정성 | 10 |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기본교육사업비 편성 및 집행을 적정성 -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 15 | 45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총인건비 규모 준수 여부 - 총인건비 인상을 준수 여부 - 결원인건비 준수 여부 -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20 |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연봉 편성체계의 적정성 - 기본연봉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 준수 여부 | 5 |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성과연봉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 준수 여부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차등지급률 준수 여부 | 5 | |
| 2-4. 감사 및 평가 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 -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환류체계 -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실적 | 10 | 10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 채용 노력 정도 -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실적 | 5 | 30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 청년인턴 운용의 적정성 | 5 |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노력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달성실적 | 5 |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
|----------|-------------------------|--|----------|----------|
| | | | 요소 배점 | 항목 소계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휴가제의 적정한 운영 정도 - 육아휴직제의 적정한 운영 정도 | 5 |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차별 해소 규정(계획 포함)의 적정성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및 실적 | 10 | |
| 경영 분야 소계 | | | 200 | |

〈참고〉 연구기관별 기관자율 선택 평가지표 가중치 선정현황

| 연구기관 | 평가지표 | | |
|--------------|-------|-------|-----|
| | 1-2-2 | 1-2-3 | 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50 | 0 | 250 |
| 국토연구원 | 150 | 100 | 250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80 | 70 | 250 |
| 산업연구원 | 250 | 0 | 250 |
| 에너지경제연구원 | 250 | 0 | 250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50 | 0 | 250 |
| 통일연구원 | 250 | 0 | 250 |
| 한국개발연구원 | 180 | 70 | 250 |
| 한국교육개발원 | 150 | 100 | 250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50 | 100 | 250 |
| 한국교통연구원 | 150 | 100 | 250 |
| 한국노동연구원 | 250 | 0 | 250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 | 50 | 250 |
| 한국법제연구원 | 250 | 0 | 250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50 | 0 | 250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 | 50 | 250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50 | 0 | 250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50 | 100 | 250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50 | 0 | 250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50 | 0 | 250 |
| 한국행정연구원 | 250 | 0 | 250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50 | 0 | 250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50 | 100 | 250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50 | 0 | 250 |
| 육아정책연구소 | 250 | 0 | 250 |

*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별도 지표로 평가

□ 평가척도

| 등급 | 가중치 | 등급 부여기준 |
|----|------|--|
| S |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의 모든 세부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매우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탁월하게 기여한 경우 ·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가장 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매우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
| A | 0.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의 세부기준을 대부분 만족시킨 경우 ·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상당 수준 기여한 경우 ·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상당히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
| B | 0.7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의 세부기준을 만족시키는 영역이 절반을 초과한 경우 ·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보통 수준보다는 다소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보통 수준 이상 기여한 경우 ·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주어진 여건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
| C | 0.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의 세부기준을 절반 정도 영역에서 만족시킨 경우 ·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 일상적인 노력 외에 특별한 노력은 없었고 그 결과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의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보통 수준 기여한 경우 ·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일반적인 관리방법을 사용하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주어진 여건이라면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의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
| D | 0.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의 세부기준을 만족시키는 영역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경우 · 연구성과 개선을 위한 관심이나 노력이 부족하고 그 결과 다소 미흡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기여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관심이나 노력이 부족하고 다소 부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여건이라면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
| E | 0.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의 세부기준을 거의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 연구성과 개선을 위한 관심이나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고 그 결과 미흡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경우 ·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관심이나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고 부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미흡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
| F | 0.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의 세부기준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 연구성과 개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전혀 없고 그 결과 매우 미흡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경우 ·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관심 자체가 전혀 없고 관리방법도 매우 부적합하여 경영성과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경우 |

6 평가등급 구분 기준

□ 평가결과보고서의 평가등급 구분 기준

- 평가결과보고서의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요소)별 평가결과는 평점자체를 기술하지 않고, 평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100%인 경우 ‘S’, 90%이상~100% 미만인 경우는 ‘A’, 75% 이상~90% 미만은 ‘B’, 60% 이상~75% 미만은 ‘C’, 45% 이상~60% 미만은 ‘D’, 30% 이상~45% 미만은 ‘E’, 30% 미만은 ‘F’로 구분하여 기술함.

【평가결과보고서 기술 시 평가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구분 기준】

| 득점률 | 평가등급 |
|------------------|------|
| 100% | S |
| 90% 이상 ~ 100% 미만 | A |
| 75% 이상 ~ 90% 미만 | B |
| 60% 이상 ~ 75% 미만 | C |
| 45% 이상 ~ 60% 미만 | D |
| 30% 이상 ~ 45% 미만 | E |
| 30% 미만 | F |

7 평가추진 일정

| | | |
|---------------------------|--|--|
| 2013년도 연구기관 평가위원 선임 | - 평가위원 선정위원회 개최(후보자 3배수 선정) - 평가위원 선임(이사장) - 이사회 보고·확정 | 13.11.15.(금) 11. 22.(금) 11. 29.(금) |
| 평가단 워크숍(1차) | - 연구기관 평가단 워크숍 개최 ·평가편람 및 평가지표 이해 등 | 12. 19.(목) ~ 12. 20.(금) |
| 평가단 워크숍(2차) | - 연구성과분야(국가정책기여도) 평가단 워크숍 개최 ·평가편람 및 평가지표 이해 등 | 14. 1. 9.(목) |
| 연구기관별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접수·발송 | - 연구기관별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접수 - 연구기관별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발송(평가위원) | 1. 16.(목) 1. 20.(월) |
| 연구기관별 실적보고서 접수·발송 | - 연구기관별 자체실적보고서 접수 - 연구기관별 자체실적보고서 편집, 인쇄 및 발송 (평가위원) | 1. 16.(목) 1. 17.(금) |
| 평가단 전체회의(1차) | - 분과별 중점검토사항 논의 등 | 1. 22.(수) |
| 실사평가(Ⅰ) | - 연구관리 및 경영분야(리더십 및 책임경영 포함) 평가 | 2. 5.(수) ~ 2. 13.(목) |
| 실사평가(Ⅱ) | - 국가정책기여도 평가 | 2. 18.(화) ~ 2. 21.(금) |
| 실사평가(Ⅲ) |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 | 2. 25.(화) ~ 2. 26.(수) |
| 평가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 연구기관별 평가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3월 초순 |
| 평가단 전체회의(2차) | - 연구기관 평가결과(안) 논의 등 | 3. 4.(화) |
| 평가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예비검토 | - 평가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연구기관 예비검토 실시(대면) | 3. 13.(목) ~ 3. 19.(수) |
| 평가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제시 | - 평가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연구기관 의견제시(서면) 및 평가위원 검토의견 반영여부 등 검토 | 3. 25.(화) ~ 3. 31.(월) |

| | | |
|--------------------|---|------------------------|
| 평가단 워크숍(3차) | - 연구기관 평가결과(안) 확정 | 4. 3.(목) ~ 4. 4.(금) |
| 평가결과(안) 검토 및 승인 | - 기획평가위원회, 이사회 평가분과위원회 검토 - 이사회 심의·의결(평가결과 보고서 확정) | 4월 초 4. 18.(금) |
| 평가결과 제출 |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4. 30.(화) |

Ⅱ

평가결과 종합

1. 총 평
2. 평가지표(요소)별 등급분석
3. 평가지표(요소)별 종합평



1 총 평

□ 평가결과 총평

- 연구분야의 ‘연구보고서’, ‘국가정책기여도’, ‘수요자 만족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모두 ‘B’ 등급으로 평가됨.
- 경영분야의 ‘보수 및 예산관리’는 ‘A’로 평가되었으나, ‘리더십 및 책임경영’,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및 ‘사회적 배려’는 ‘B’등급로 평가되었으며,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는 ‘C’등급으로 평가됨.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
| 1. 연구분야 | 1-1. 연구보고서 | B |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B |
| | 1-3. 연구관리 | B |
| 연구분야 | | B |
| 2. 경영분야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B |
| | 2-2.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 C |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A |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B |
| | 2-5. 사회적 배려 | B |
| 경영분야 | | B |
| 평가결과 종합 | | B |

※ 23개 연구기관의 평가지표별 평균등급임.

□ 평가결과 활용

- 연구기관의 평가결과는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자원배분이나 인센티브 부여 기준으로 활용하며, 연구분야·경영분야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점을 활용함.
-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기관 평가등급은 연구기관의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며, 등급분류 결과(정관순)는 아래와 같음

(연구회 정관 순)

| 구분 | 등급기준 | 연구기관 | | 비 고 |
|-------------------|-------------------------|--|--|-----|
| | | 경제정책· 자원인프라 분야 | 인적자원· 공공정책 분야 | |
| 연구 기관 (23개) | 매우 우수 (2개 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1개 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개 기관) | |
| | 우수 (6개 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개 기관) | 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개 기관) | |
| | 보 통 (9개 기관) |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개 기관) |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개 기관) | |
| | 미 흡 (6개 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개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3개 기관) | |
| | 매우 미흡 | — | — | |
| | | | | |
| 부설 기관 (3개) | 매우 우수 | — | — | |
| | 우수 | — | — | |
| | 보 통 (2개 기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개 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1개 기관) | |
| | 미 흡 (1개 기관) |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1개 기관) | — | |
| | 매우 미흡 | — | — | |

※ 부설기관의 평가등급은 연구기관 평가결과 평점에 준용하여 평가등급 부여

○ 연구기관 등급분류 기준

| 구 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계 |
|-------------------|-------|-------|-------|---------|---------|----|
| | 10% | 20% | 40% | 20~30% | 10~0% | |
| 경제정책· 자원인프라 분야 | 1개 기관 | 3개 기관 | 4개 기관 | 2~3개 기관 | 1~0개 기관 | 11 |
| 인적자원· 공공정책 분야 | 1개 기관 | 3개 기관 | 5개 기관 | 2~3개 기관 | 1~0개 기관 | 12 |

※ 연구기관 유형별 분류

| 구분 |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
|-------------------|---|---|
| 연구 기관 (23개) |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부설 기관 (3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 육아정책연구소 |
| 합계 | 13개 기관 | 13개 기관 |

2 평가지표(요소)별 등급분석

1) 연구분야

- ‘연구결과의 우수성’은 전체 평가총점인 1,000점 대비 350점의 비중으로 다루어졌으며, ‘B’로 평가됨.
- ‘연구보고서 우수성’은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B’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85.62) | — | — | 11 | — | — | — | — |
| 인적·공공 (84.84) | — | — | 12 | — | — | — | — |
| 종합 (85.22) | — | — | 23 | — | — | — | — |

-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는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E’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36.36) | — | — | — | 3 | — | 6 | 2 |
| 인적·공공 (38.89) | — | — | — | 5 | — | 4 | 3 |
| 종합 (37.68) | — | — | — | 8 | — | 10 | 5 |

- ‘국가정책기여도’는 전체 평가총점인 1,000점 대비 400점의 비중으로 다루어졌으며, ‘B’로 평가됨.
-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정도’는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는 ‘B’ 평가등급이 나타났으며,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는 ‘A’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기관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세부 의제(agenda)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 연구에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며 역동적인 대응력을 보임.
 -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복수의 과제에 중복 참여함으로써 연구진의 연구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고 다양한 연구 수요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안 제시 역량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음.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88.58) | — | 4 | 7 | — | — | — | — |
| 인적·공공 (90.55) | — | 8 | 4 | — | — | — | — |
| 종합 (89.61) | — | 12 | 11 | — | — | — | — |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정도’는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B’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공청회, 세미나, 위원회 활동, 자문 활동 등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한 정도가 크게 증가한 양상을 나타냄.
 - 국가정책 수립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화 과정에서 실제적인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86.97) | — | 2 | 9 | — | — | — | — |
| 인적·공공 (87.28) | — | — | 12 | — | — | — | — |
| 종합 (87.13) | — | 2 | 21 | — | — | — | — |

- ‘국가정책 집행사업에의 기여정도’는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과 모두에서 'B'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연구 방법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환류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정책 자료와 결과를 제공하려고 노력함.
-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의 상시 고용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책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전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배정이 필요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88.26) | — | 2 | 4 | — | — | — | — |
| 인적·공공 (89.40) | — | 1 | 3 | — | — | — | — |
| 종합 (88.72) | — | 3 | 7 | — | — | — | — |

* 해당기관(10개) :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보통'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는 연구과제 수행 서비스 중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수탁연구가 가장 낮게 나타남. 서비스 차원 및 요소에 있어서는 과정품질의 대응성(친절한 응대 및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요소가 가장 높고, 환경품질의 구비성(고객 요구사항 수용체제)이 가장 낮게 나타남. 또한 환경품질의 다른 요소인 편리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고객을 요구 및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자 또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산·학·연 고객만족도’는 연구과제 수행 서비스 중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수탁연구가 가장 낮게 나타남. 서비스 차원 및 요소에 있어서는 내용품질의 전문성(업무체계의 전문성,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인력 보유) 요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고객과 마찬가지로 환경품질의 구비성(고객 요구사항 수용체제)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매우우수 (90점이상) | 우수 (85~90) | 보통 (80~85) | 미흡 (75~80) | 매우미흡 (75점미만) |
| 경제·자원 (83.46) | — | 3 | 7 | 1 | — |
| 인적·공공 (84.70) | — | 5 | 6 | 1 | — |
| 종합 (84.10) | — | 8 | 13 | 2 | — |

- ‘연구관리’는 전체 평가총점인 1,000점 대비 50점의 비중으로 다루어졌으며, ‘B’로 평가됨.
-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은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과 모두에서 ‘B’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과제발굴이 설립목적과 정책변화에 맞게 이루어지고 과제발굴을 위한 대내외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정부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한 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됨.
 - 그러나 수시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발굴·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과제의 유사 및 중복과제 선정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보고서 진도관리 및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87.26) | — | 4 | 7 | — | — | — | — |
| 인적·공공 (88.76) | — | 5 | 7 | — | — | — | — |
| 종합 (88.04) | — | 9 | 14 | — | — | — | — |

- ‘협동연구 추진 정도’는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B’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협동연구과제 관련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절히 수행하였으며, 각 기관별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구성·운영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협동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 노력의 결과에서 제시된 내용은 다소 미흡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선정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81.59) | — | 3 | 5 | 3 | — | — | — |
| 인적·공공 (84.50) | — | 4 | 7 | 1 | — | — | — |
| 종합 (83.11) | — | 7 | 12 | 4 | — | — | — |

-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은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B'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체계·구성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외부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82.61) | — | 2 | 8 | 1 | — | — | — |
| 인적·공공 (87.19) | — | 6 | 5 | 1 | — | — | — |
| 종합 (85.00) | — | 8 | 13 | 2 | — | — | — |

-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은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B'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하여 연구성과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도 평균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됨.
- 하지만,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홍보 전략 수립이 부족하며, 또한 연구성과물을 수요자 특성별로 효율적으로 배포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79.48) | — | 2 | 6 | 3 | — | — | — |
| 인적·공공 (81.58) | — | 1 | 10 | 1 | — | — | — |
| 종합 (80.58) | — | 3 | 16 | 4 | — | — | — |

2) 경영분야

- ‘리더십 및 책임경영’은 전체 평가총점인 1,000점 대비 50점의 비중으로 다루어졌으며, ‘B’로 평가됨.
- ‘리더십’은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B’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며 발전을 위한 기관장의 대내외적 소통 방법과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평가됨.
- 그러나 연구기관의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전략이 부족하며 연구윤리에 관련 내부 운영규정 및 제도 구축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88.95) | — | 3 | 3 | — | — | — | — |
| 인적·공공 (89.15) | — | 2 | 7 | — | — | — | — |
| 종합 (89.07) | — | 5 | 10 | — | — | — | — |

* 해당기관(15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는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B’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기관 내·외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연구원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하여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등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평가됨
- 하지만, 실행과제들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결과 관련 설문조사 등의 실시를 통해 정책활용도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83.45) | — | 2 | 3 | 1 | — | — | — |
| 인적·공공 (81.59) | — | 2 | 5 | 2 | — | — | — |
| 종합 (82.33) | — | 4 | 8 | 3 | — | — | — |

* 해당기관(15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는 전체 평가총점인 1,000점 대비 65점의 비중으로 다루어졌으며, ‘C’로 평가됨.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은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C’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기관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채용홍보 채널을 확대하여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채용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고 평가됨.
- 그러나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직원 이주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우수 직원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년연장, 정년 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구성원 사기진작책이 미흡하다고 평가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74.06) | — | — | 4 | 7 | — | — | — |
| 인적·공공 (74.72) | — | — | 8 | 4 | — | — | — |
| 종합 (74.40) | — | — | 12 | 11 | — | — | — |

- ‘노사관계 선진화’는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B’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노사관계 발전과 노사화합을 위하여 다양한 채널 가동을 통해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기존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됨.
- 그러나 노사갈등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전체 구성원의 하의상달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75.75) | — | 1 | 5 | 3 | 2 | — | — |
| 인적·공공 (77.48) | — | — | 8 | 4 | — | — | — |
| 종합 (76.65) | — | 1 | 13 | 7 | 2 | — | — |

- ‘보수 및 예산관리’는 전체 평가총점인 1,000점 대비 45점의 비중으로 다루어졌으며, ‘A’로 평가됨.
- ‘예산운용의 적정성’은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A’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책과제 및 기초과제 비율을 연구회의 지침에 따라 잘 준수되고 있으며, 수시연구사업비도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음.
 - 그러나, 수시연구사업비의 예산을 너무 낮게 편성하고 있으며, 퇴직금 적립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96.62) | 4 | 6 | 1 | — | — | — | — |
| 인적·공공 (98.07) | 7 | 5 | — | — | — | — | — |
| 종합 (97.38) | 11 | 11 | 1 | — | — | — | — |

- ‘성과연봉제 이행정도’는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B’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모든 연구기관에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따라 연봉 체계를 단순화(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시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됨.
 - 그러나 기본연봉을 비누적식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또한 능률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지급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76.25) | 1 | 1 | 4 | 3 | 2 | — | — |
| 인적·공공 (75.78) | 1 | 2 | 4 | 2 | 3 | — | — |
| 종합 (76.01) | 2 | 3 | 8 | 5 | 5 | — | — |

-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은 전체 평가총점인 1,000점 대비 10점의 비중으로 다루어졌으며, ‘B’로 평가됨.
-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는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B’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대다수의 연구기관이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을 위한 환류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됨.
- 그러나, 국회 지적사항 개선과 관련 절차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개선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80.34) | — | 1 | 7 | 3 | — | — | — |
| 인적·공공 (85.06) | 1 | 3 | 8 | — | — | — | — |
| 종합 (82.80) | 1 | 4 | 15 | 3 | — | — | — |

- ‘사회적 배려’는 전체 평가총점인 1,000점 대비 35점의 비중으로 다루어졌으며, ‘B’로 평가됨.
-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는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는 ‘C’ 평가등급이 나타났으며,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는 ‘B’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청년인턴 채용자 중 상당수의 인원을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고용한 실적이 있으며, 육아출산휴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차별이나 의도적인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도 전년도보다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됨.
-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6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달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율은 26개 기관 중 5개 기관만이 달성하고 있고,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에 있어서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73.82) | — | — | 5 | 6 | — | — | — |
| 인적·공공 (80.44) | — | 2 | 6 | 4 | — | — | — |
| 종합 (77.27) | — | 2 | 11 | 10 | — | — | — |

-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력 정도’는 경제정책·자원인프라 분야 및 인적자원·공공정책 분야 모두에서 'B' 평가등급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복지 부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동등하게 처우하여 차별이 없으며, 임금 부분에서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됨.
- 그러나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규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아울러 비정규직 운용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있어도 내용이 미흡한 사례가 있다고 평가됨.

| 구분 | 연구기관 수 | | | | | | |
|------------------|------------|---------------|--------------|--------------|--------------|--------------|-------------|
| | S (100) | A (90~100) | B (75~90) | C (60~75) | D (45~60) | E (30~45) | F (30미만) |
| 경제·자원 (86.09) | 1 | 4 | 5 | 1 | — | — | — |
| 인적·공공 (87.42) | 1 | 6 | 3 | 2 | — | — | — |
| 종합 (86.78) | 2 | 10 | 8 | 3 | — | — | — |

3 평가지표(요소)별 종합평

□ 1-1-1.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대부분의 평가 대상 보고서들이 해당 분야의 정책 환경과 국정과제 이행에 부합하도록 시의적절한 주제로 연구 결과를 제시함에 따라 기관 설립 목적과 경영 목표 이행에 부합함.
- 간접적인 문헌연구나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적인 심층 면담 또는 설문조사 분석, 사례 연구, 국제 비교 분석, 지수 개발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대안의 논리적 근거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기관의 특성과 전문 분야에 따라 새로운 이슈와 주제를 발굴하여 선도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연구 주제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른 정책 대안의 제시 역량과 논리적 체계는 향상되었으나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연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연구 내용을 포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핵심 논지와 정책 대안의 초점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음.
- 연구 결과와 정책적인 함의 및 전략적 방안 도출에 대한 연관성이 다소 미흡한 경향이 있고, 연구 결과를 단순 나열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설득력이 취약한 경우가 있음.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정도

[우수한 점]

- 대부분의 기관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세부 의제(agenda)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 연구에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며 역동적인 대응력을 보임.
- 보다 효율적인 국정과제 수행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별도의 조직(팀)을 구성하여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대외 지원을 강화하여 성과를 높임.

- 정부 현안 과제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대응 TF와 대외 의사소통 채널을 가동함으로써 새 정부 초기 방대한 현안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함.
-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책(실무)협의회 운영을 정착시킴에 따라 정부 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가동하고 있으며, 국외 정책연구 기관이나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임.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국정과제 수행 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적극성은 필요하지만, 복수의 과제에 중복 참여함으로써 연구진의 연구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고 다양한 연구 수요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 제시 역량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음.
- 창조경제의 국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관들에서는 융복합 연구의 환경 조성이 미진하고 전략적 실천의 성과도 미흡함.
- 대외 정책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이 활성화되었지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네트워크 활용도와 성과는 여전히 다소 미진하며, 국내의 경우 국회와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
- 수시 현안과제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유효하지만 현안 연구와 기본연구 수행의 지속가능한 균형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비전과 로드맵도 갖추어야 함.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정도

[우수한 점]

- 3년 동안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공청회, 세미나, 위원회 활동, 자문 활동 등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한 정도가 크게 증가한 양상을 나타냄.
- 특히 주요 국정과제들에 대해서는 연구 역량을 집중하여 우수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국가정책 수립의 전략적 방향과 논리적 기반을 제공함.
-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을 조망하면서 국가정책 과제를 선도적으로 논의하거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시의성있는 선도과제를 수행하여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노력함.
- 기관들이 각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 발전 전략과 최적 정책 방향의 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국가정책의 미래 전략적 방안 제시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함.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국가정책 수립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화 과정에서 실제적인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함.

- 정책 대안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장단기적 분석과 단계별 고려사항을 보다 세분화하고 세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선도와제 수행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과제 선정 및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상적 연구 수행 과정과 차별적인 연구 여건 조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1-2-3. 국가정책 집행사업에의 기여정도

[우수한 점]

-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연구 방법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환류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정책 자료와 결과를 제공하려고 노력함.
- 국가정책 연구 과정에서 정부 부처, 학계, 현장 전문가, 민간단체 등 관련자들을 활발하게 참여시킴으로써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국가정책 집행 사업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의 상시 고용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책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배정이 필요함.
-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정책 집행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차별 집행 지원 연구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함.

□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 정부고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요인 중 서비스 과정품질(준비성, 대응성, 성실성)이 다른 품질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서비스 환경품질(구비성, 편리성)은 다른 품질차원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업무유형별로는 연구과제 수행 중 공동연구의 정부고객 만족도가 다른 업무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정부고객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탁연구의 만족도는 다른 업무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문항별로는 보고회 진행 시 참석자 의견 적극적 경청 및 의견반영 노력(기본연구), 연구 목적의 정확한 이해(수탁연구)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되었으나,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기본연구), 연구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비(수탁연구)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평가됨.

[산·학·연 고객만족도]

-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요인 중 사회적 품질(합리성, 공정성, 공익성)이 다른 품질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환경품질(구비성, 편리성)은 다른 품질차원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업무유형별로는 연구과제 수행 중 공동연구의 산·학·연 고객만족도가 다른 업무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수탁연구의 산·학·연 고객만족도는 다른 업무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문항별로는 보고회 진행 시 참석자 의견 적극적 경청 및 의견반영 노력(기본연구), 연구 목적의 정확한 이해(수탁연구), 관련 지침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수행(위탁연구), 전문지식 및 의사소통능력 보유(공동연구)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나,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기본연구),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 침 반영절차 구비(수탁연구), 고객 의견 및 불만사항 제시 편리(위탁연구), 연구진행 시기 및 신청기간의 적절성(공동연구)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평가됨.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우수한 점]**

- 전반적으로 과제발굴이 설립목적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체계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과제발굴을 위한 대내·연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과제 선정 또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과제선정위원회에 정부부처 공무원을 참여시켜 과제와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음.
- 연도별 과제 수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다양한 위원회와 자문을 통해 과제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유사 및 중복 과제 선정 방지를 위한 장치 도입이나 노력이 필요함.
- 기본과제에 비해 수시과제의 발굴 및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단계에서의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보고서 진도관리 및 질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수시과제 결과물이 과제 완료 즉시 발간되고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어야 하나 발간 및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우수한 점]

- 대다수의 기관들이 협동연구의 추진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고, 규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임.
- 협동연구 과제를 다양한 국가와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
- 대다수의 연구기관이 제시한 5개 대표연구과제의 경우 협동연구의 필요성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외부에서의 연구과제 발굴노력 및 선정노력의 경우 일부 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노력의 결과제시가 다소 미흡하여 향후 협동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외부에서의 연구과제 발굴노력 및 구체적인 선정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협동연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협동연구의 경우 각 연구원별 과제 내 역할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우수한 점]

- 자체평가에 대한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함.
-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체계·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함.
- 외부평가위원 풀을 확대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함.
- 외부평가위원 풀 선정과 구성에 있어서 전공·분야·소속기관별 평가위원 구성이 필요함.

□ 1-3-4. 성과확산체계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부분의 기관들이 지식자산 보호 규정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으며, 보안 관련 시스템을 적절히 구축하고 있음.
- 기관들이 다양한 홍보채널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SNS 등 최신 채널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연구성과물 발간 후 신속히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절차 없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임.
- 대부분 기관의 연구원 1인당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이 환산편수 기준으로 1편 이상에 해당되어 평균적으로 우수한 수준임.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연구성과 확산수단에 따른 실적이 계량적인 실적에 치우쳐 있고 상대적으로 효과 및 파급력 분석은 미진함.
- 홍보의 양적목표와 효과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홍보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해외홍보 활동 시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망라하여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연구성과물을 배포한 후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수요자를 특성별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배포하려는 노력이 미흡함.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 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함.

□ 2-1-1. 리더십

[우수한 점]

- 전체적으로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노력이 돋보이며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이 잘 수립되었음.
- 전체적으로 기관장의 대내·연적 소통 방법과 채널이 다양하며, 소통을 위한 노력이 뛰어남.
-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 참여 및 지원, 그리고, 기관 발전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노력이 뛰어남.
- 전체적으로 기관 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 및 제도의 정비가 잘 되어 있음.

- 현안문제를 선정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기관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조직 내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함.
- 기관장들의 대외활동이 활발한 편이었으며, 외국 기관과도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함.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표절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에게 수시로 연구윤리 준수를 유도함.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기관의 현안문제 선정 시 현안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객관적 타당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음.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합과제 개발 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함.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전략 중 연구원의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전략이 부족함.
- 해외 네트워크 확보 노력 중 실질적 공동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다소 부족함.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윤리 경영에 관한 내부 운영규정 및 제도에 대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표절점검시스템의 결과를 연구자에게 자체적으로 알기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인사고과와 연계하는 것이 좋겠음.
- 현안문제를 선정함에 있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나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의견수렴 대상이 제한적임.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하여 현안문제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수행되는 과제의 융복합성이 잘 나타나지 않음. 융복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연구진의 구성을 학제간 또는 분야간 융복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나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지표의 객관화가 필요함. 질적인 평가라도 평가의 기준을 제시해줌으로써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대상이나 횟수에서 제한된 교육을 실시하거나, 연구윤리심사에 있어 심사 후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외부연구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기관에 따라서는 표절점검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조속한 도입이 요망됨.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우수한 점]

- 전체적으로 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음.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으며, 실천계획이 기관의 당면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천계획의 실현가능한 내용과 실현가능 수단이 잘 정리되어 있음.
- 전반적으로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의 목표치와 달성도를 설정하고 있고, 달성도가 대부분 100%를 상회하여 우수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음.
- 전반적으로 중점추진과제를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설립목적, 전략적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및 시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과정과 평가방식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선정된 중점추진과제가 전체적으로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적절성을 띠고 있음.
- 전반적으로 외부환경 및 내부여건을 분석하여 경영목표와 경영목표 실천계획 및 타당한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당면현안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실현가능 수단들을 구체적이면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
- 기관 내·외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기관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함으로써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과정을 거침.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대부분의 연구기관의 경우 미래지향적, 융복합연구, 창조경제 또는 학제적 연구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및 연계방안들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첨단 홍보수단 등을 활용한 체계적 홍보 시스템의 구체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성과지표 중 많은 부분이 과정지표이며 정성적 지표로 설정됨으로써, 달성이 용이하고 달성도 평가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음. 정성적 지표에서 나아가 계량적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가능하고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대부분의 연구기관의 경우 축적된 연구실적과 경험을 개도국에 제공하는 과제도 중요하나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국제연구 교류협력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경영목표 실천과제의 세부 실행과제별로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매년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도전적인 목표치로서는 다소 미흡함.
- 실행과제들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결과의 정책활용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피드백하여 정책활용도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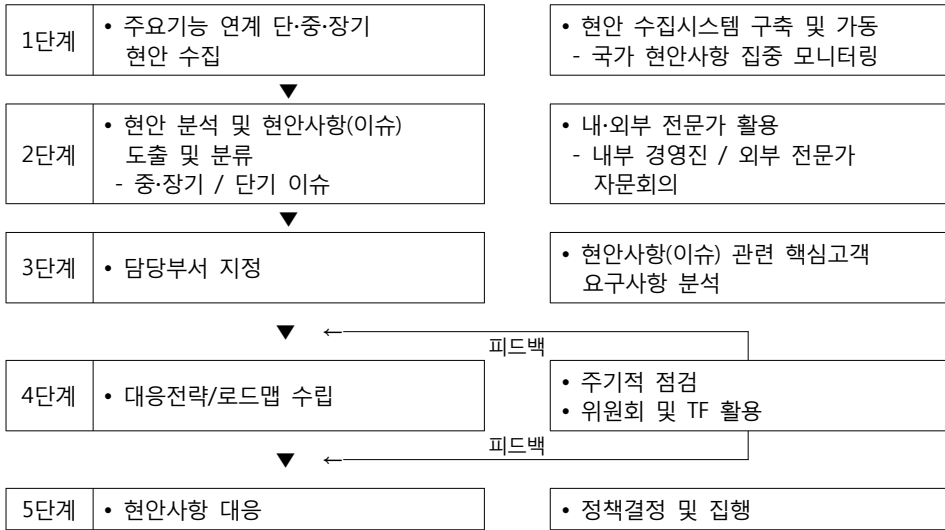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우수한 점]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무부처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담당 조직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과제화하는 노력은 우수함.
- 직무, 연구윤리, 청렴성 제고 등 관련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한 실적은 대체로 우수하며, 특히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자체 감사기능 활성화, 보고서 표절점검시스템 도입 등 관리체계 지원 노력은 우수함.
- 대부분의 기관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채용홍보 경로 확대를 통한 적합인재 발굴, 맞춤형 채용 프로세스 운영에 따른 적합인재 선발, 채용분야(직무·직급)별 전문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직종별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을 갖추고 있음.
- 개인성과 평가결과와 능률성과급, 승진, 내부 포상 등 주요 보상체계의 합리적 연계를 통하여,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동기부여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필요함.



- 현안사항 도출 기준으로는 기관의 핵심기능, 특히 연구기능 수행과 관련된 국가적 요구사항과 기관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내부 현안이 중요함.
-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환경변화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도출한 이슈도 대응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못하고 매우 포괄적임.
- 대부분의 기관들이 조직 신설, 폐지 등 조직개편 실적을 성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조직 운영의 과정이지 성과라고 보기엔 어려움.
- 현안 대응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함으로써 실적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도 포괄적이라 우수성을 판단할 수 없음.
- 모든 기관들이 주무부처, 연구회 등이 요청한 사항을 외부고객 요구사항으로 파악하고 요구에 부응한 제도개선 실적을 성과로 제시하였음. 주무부처, 연구회 등은 상호 보완관계이면서 지원기관으로서 고유한 정책기능수행과 연계된 1차 고객이라고 할 수 없음.
- 1차 고객을 고유정책기능 수행의 수혜자(국민이지만 고유기능과 연계된 국민을 대표하는 특정그룹이 1차 고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로 설정하고, 1차 고객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및 가동이 필요함.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제공·개방,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등에 충실해야 하나, 기존 홈페이지의 추상적이고 비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개선을 통한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실적 등이 미흡함.
-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환류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함.

-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중장기 발전계획,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연동하여, 우수인재 채용에서 육성, 퇴직 후 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인력 선순환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 인력구조분석(직종, 직급, 연령별), 기능과 연계한 사업별 소요인력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채용분야(직무·직급)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채용 기준과 직종별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고도화 된 채용 과정도 갖추어야 함.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인적성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구조화된 면접 실시를 위해 채용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활용하고 면접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해야 함.
- 앉아서 하는 신규인력 채용 활동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에 역부족이며, 우수한 적합인재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을 “찾아가는 인재 유치 활동(채용홍보 채널 다변화, 지원자와의 쌍방향 소통강화 노력 등 지원자 입장에서 편의성 제공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직원 이주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책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이 수립(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작업 수행이 바람직)되어야 하고, 동 중장기계획에 근거하여 전년도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종합점검과 구성원의 만족도 조사,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계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교육기관 엄선이 중요하며, 특히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 기관과의 상호 인력 교류를 통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노력도 필요함.
- 우수 직원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년 연장, 정년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구성원 사기진작책이 미흡함.
- 한정된 교육훈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역량 분석과 여건을 고려하여, 소수 정예인력을 교육훈련 대상으로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다수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분산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에서는 개인평가가 부서평가와 기관 경영목표와 연계되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하고, 직종별 핵심업무를 통해 생산되는 성과를 보다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성과평가를 계량화하는 지표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2-2-2. 노사관계 선진화

[우수한 점]

- 세종시 이전, 비정규직문제, 단체협약 갱신, 임금협약 등 주요 갈등관리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음.
- 노무담당자 훈련이 활성화되어 있고 노무담당자 교육훈련시간은 대체로 충족하고 있음.
- 노사관계 발전과 노사화합을 위한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가 분기별로 대체로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음.
- 기존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갈등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임금협상에 실패함.
- 노사협의회 등이 갈등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노사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노무교육 결과나 정보를 구성원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미흡함.
- 기존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조항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여전히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이 상존하고 있음.
- 제안제도,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종합하여 전체 구성원의 하의상달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과제 및 기초연구과제 비율은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였음.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에 있어 대다수의 기관이 과제와 무관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수시연구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음.
- 모든 기관이 퇴직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음.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부 연구기관들이 기준보다 너무 낮은 비율을 편성하고 있음.
- 퇴직금 적립에 있어 일부 연구기관들이 분기별 균등액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립, 초기 과대적립 등을 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남.

- 퇴직금 적립계좌 별도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게 중도퇴직자의 퇴직금을 일반운영비 계좌에서 먼저 지급하는 연구기관이 일부 있어 별도계좌의 의미에 대한 설명 및 개선이 필요함.

□ 2-3-2. 성과연봉제 이행정도

[우수한 점]

- 모든 연구기관에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따라 연봉 체계를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모든 연구기관에서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최소 20% 이상 책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기관에서는 최소 비율을 초과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봉을 지급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기본연봉을 비누적식으로 실시하는 곳이 전년도보다 늘어났으며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는 직원의 연봉을 증액하는 등 누적식 효과를 상쇄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함.
- 다수의 연구기관이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및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지급 시 차등지급율과 인원배분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일부 연구기관에서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지급에 있어 재정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어 업적평가결과 중심의 능률성과급 지급이라는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연구기관에서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2-4-1.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정도

[우수한 점]

- 대다수의 연구기관이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을 위한 환류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대다수의 연구기관이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완료함.
- 대다수의 연구기관이 연구기관 평가 지적사항의 개선을 충실히 완료하였으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능률성과급 등은 여전히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개선사항의 완료표시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음. 이는 지적사항의 개선과제 선정 시 개선목표의 선정이 미흡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개선목표의 타당성 있고,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개선실적의 제시가 필요하고, 개선성과(outcome)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많은 연구기관이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에 노력하였으나, 국회의 지적사항 개선절차가 작년도의 감사결과 개선시스템과 유리되어 이루어진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을 위한 개선절차를 구축하여 이의 개선을 시스템화하고 이를 경영개선에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우수한 점]**

- 정부권장정책에는 4개 분야(장애인고용분야, 청년인턴고용분야, 국가유공자 고용분야, 육아 및 출산휴가 적정성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수한 분야는 청년인턴 고용과 육아·출산휴가 분야임. 한 개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청년인턴의 채용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청년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을 적시에 잘 이행하고 있으며, 청년인턴의 고용률도 적절한 수준으로 잘 유지되고 있음.
-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청년인턴채용자 중 상당수의 인원을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고용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인턴퇴직자 중 상당수가 타 기관에 고용된 실적이 있음. 이를 위해 각 연구기관에서 청년인턴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취업지원을 양호하게 수행하고 있음.
- 금년에 처음 도입된 육아·출산휴가 분야의 경우, 전 기관 공히 육아·출산휴가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차별이나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준 사례가 없었음.
- 장애인고용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여러 개의 기관(예: 통일연구원 등)에서 장애인 고용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여나간 실적이 있으며, 장애인고용을 위한 노력도 전년도 보다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고용유지와 청년인턴의 근무내용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한 기관이 나타나고 있음(2개 기관 정도).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관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내용이 적정하며, 출산휴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허가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장애인고용을 달성도의 경우, S등급 8개 기관, C등급 4개 기관, F등급 14개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26개 기관 중 8개 기관만이 의무고용율을 달성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고용실적의 경우, S등급 5개 기관, C등급 13개 기관, F등급 8개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의무고용율 이행기관이 총 26개 기관 중 5개 기관에 그치고 있음.
- 장애인고용, 청년인턴고용, 국가유공자 고용 분야는 정부권장시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대다수임. 이에 따라 기관장을 중심으로 향후 3개 분야에 대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과 하위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의 권리의무관계를 분명히 적시한 ‘인턴 전용 오리엔테이션 교재’가 개발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을 뿐, 20여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를 실질화하지 못하고 있음. 청년인턴 처우에 대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고충해결담당관제 운영 실적이 전년도 보다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대부분의 기관이 멘토 양식개발, 멘토링 운영의 실질화 수준, 청년인턴 전담 고충해결담당관을 지정한 연구기관이 거의 없으며, 실질적 이행 수준이 미흡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우수한 점]

-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비정규직 직원의 인사, 복무 등을 규율하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복지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동등하게 처우하여 차별이 없었고, 기존에 존재하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예도 많았음.
- 임금 부분에서는 과거부터 있어 오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구원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는 등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사항 포함)

-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규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임금 부분에서는 다수의 기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차별로 인식할 수 있는 기관도 있음.
- 자체적인 비정규직 운용계획이 없는 기관이 다수 있고, 비정규직 운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도 그 운영계획의 내용이 미흡하였음.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국토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산업연구원
5. 에너지경제연구원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 통일연구원
8. 한국개발연구원
9. 한국교육개발원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 한국교통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한국법제연구원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 한국행정연구원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5. KDI 국제정책대학원
26. 육아정책연구소



0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F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1-3. 연구 관리 |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매우미흡 |
| |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
|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A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A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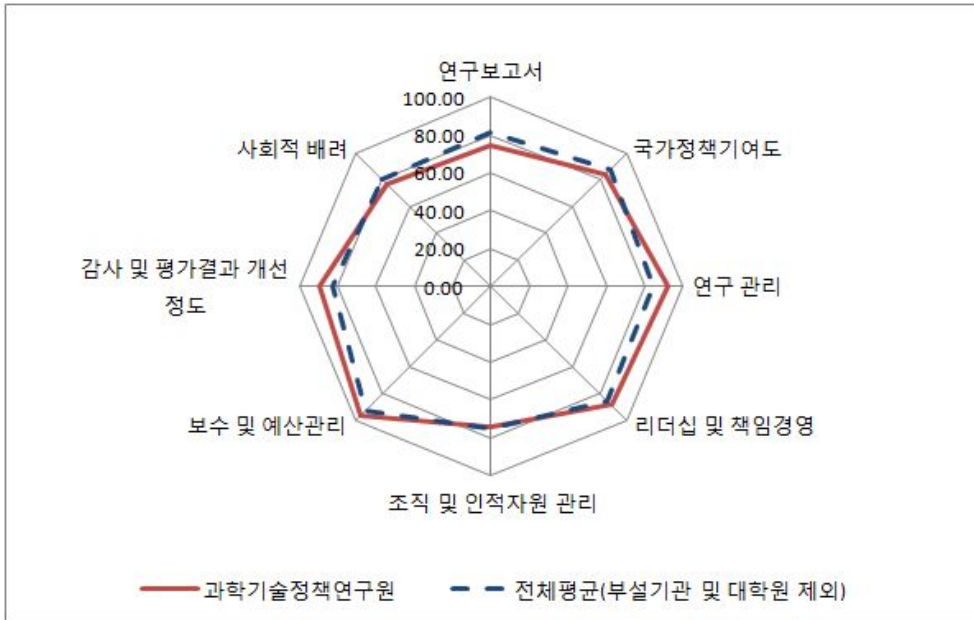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A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A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B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A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B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C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A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창조경제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연구 내용을 시의적절하고 심도있게 수행하였으며, 독창적인 연구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정책 제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재정비하고 사회문제 해결형의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방안을 제시함.
- 과학기술정책의 융합성과 복합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대외 연구/정책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로드맵 작성을 통해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기획과제를 발굴하는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과제발굴 노력이 돋보이나, 선정되지 못한 연구주제라 하더라도 일부 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심의기능이 다소 미흡함.
- 협동연구의 추진체계와 제도적 장치가 적절하게 잘 수행되어 있으며, 협동연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가시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
- 협동연구 중에서 일부과제의 경우 참여연구자 간 담당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부평가위원 풀의 선정과 구성을 확대 및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전공별·분야별 평가위원 구성의 노력이 필요함.
- 연구성과 활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성과 배포·확산 부문의 개선의견을 도출한 것은 긍정적이나,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있음.

[경영 분야]

- 기관장의 현안문제 타개와 조직 내 구성원과의 소통노력이 뛰어나나, 기관의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 현안문제의 타개, 의사소통, 경영윤리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필요한 규정을 갖추었으나, 현안문제의 선정을 위한 내·외부 의견수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의 적정성은 7대 경영목표와 18대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정하여 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였고,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으며, 실천계획의 실현가능한 내용과 실현가능 수단이 잘 정리되어 있음. 융·복합연구,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및 연계방안들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의 목표치와 달성도를 설정하고 있고, 달성도가 모두 100%를 상회하여 우수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음. 성과지표 중 많은 부분이 제도 도입 운영 등의 과정지표이며 정성적 지표로 설정됨으로써, 달성이 용이하고 달성도 평가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음. 정성적 지표에서 나아가 계량적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가능하고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중점추진과제(3개)의 중요성, 추진실적,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관·산·학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및 전 직원 대상 AHP 설문조사를 통해 중점추진과제 후보를 선정하고 외부 경영자문위원회 및 기관장과 주요 보직자 회의를 반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기관장 경영철학을 반영하여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선정과정을 거쳤음. 선정된 중점추진과제가 전체적으로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을 띠고 있음. 축적된 연구실적과 경험을 개도국에 제공하는 과제도 중요하나,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구원의 미래 발전방향에 맞는 중점추진과제 선정이 필요함.
- 경영목표 달성도 점검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며, 운영성과를 정량화하여 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및 성과가 우수하나, 주요 기능과 연계하여 외부고객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분류하여 고객 그룹별 의견 수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정량평가 시 양적인 평가에 치우쳐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질적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한 점은 좋은 사례이나, 행정직의 평가결과를 인사고과에 20점에만 반영하는 것은 평가결과의 비금전적인 보상·활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 최근 10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정부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으나, 장기간 단체협약이 교착상태에 있어 노사간의 노력이 요구됨.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예산편성비율 및 집행비율은 적정하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지 않는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소요되는 금액을 분기별로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고, 적립계좌도 일반계좌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과 성과연봉과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비간부직의 성과연봉 인원배분비율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지급기준에서 수탁연구과제 기여도를 반영하는 단점이 있음.
-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개인연차평가 및 부서실적평가와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모범을 보였으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간의 대화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연평균 고용률이 1.43%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장애인 채용과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됨.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양호하며, 청년인턴제도의 운용이 적정함.
-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1.8%에 그치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대책회의, 기본계획수립, 전담팀 구성)이 필요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 부분과 복지 부분에서 차별이 없으나, 연구원에서 수립한 비정규직 운영계획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므로, 비정규직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하여 체계적인 비정규직 직원의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대체적으로 창조경제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주제의 연구를 시의적절하고 심도있게 수행함.
- 과학기술 및 지식 이전과 산학협력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생산자(대학, 연구기관)와 수요자(정부, 기업)의 인식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산학협력 발전 정책에 대한 기여도를 높임.
- 단계별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들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경력단계별로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함.
- 신산업 발굴과 육성정책에 필수적인 유망 신산업군의 발굴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제시하려고 노력함.

<단 점>

- 융·복합 연구의 경우 연구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함에 따라 각 사업 및 조직의 특성 분석과 정책 제안 내용들의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연구 범위가 넓은 일부 보고서의 경우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대안 제시의 논지가 분산되거나 불명확하여 연구 성과의 전달력이 약화될 수 있음.
- 다양한 분석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주제 선정과 논지 구성으로 이해도와 정책 수용성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 분석내용과 정책제안의 기술적, 논리적 연계성이 다소 취약한 경우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특히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대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연구 범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
- 논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석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와 평가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선도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역량과 결과의 우수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어젠다 발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관과 관련된 26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3개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실현계획,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략위원회,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도출,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특별법 등 정부부처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기본연구과제와 수시연구과제를 통해 총 31건의 국정과제 이행실적이 있음.

<단 점>

- 기관의 연구과제의 내용 및 범위가 넓으므로, 전문특화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역량의 집중이 미흡함.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중복된 연구주제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미션에 맞게 연구수행기관으로서 심도 있는 역할 수행에 대한 노력 및 과학기술분야 미래전략수립 분야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기관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정부부처와의 협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책대안의 정책·제도 반영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후속 연구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정기적인 정부현안과제 수요조사, 현안대응TF를 구성, 현안대응정도를 평가결과에 반영 등 체계적인 현안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 자문회의 사무지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연구인력 파견 등 현안 국정과제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음.

〈단 점〉

- 지원한 현안과제가 기초자료 제공이나 해외동향 파악 중심임.
- 보다 폭넓은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새로운 이슈 창출의 다양성 정도는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 현안의 선제적 및 즉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사회 현안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가 필요함.
- 단순한 인력파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현장에서 제안된 정책대안들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주요 이슈들의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다가올 국가적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분석하여 부각될 만한 이슈들을 선점하고 시사점과 과학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정책협의체 참여, 토론회 발표 등 다양한 연구결과 공론화 채널 활용 노력과 국내·외 정책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다양한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과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함.

〈단 점〉

- 미래창조과학부 외의 부처와는 일회성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있으며, 각 부처TF, 위원회 등에 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개개인의 네트워크 차원임.
- 정책연구네트워크가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 부처와의 협력 위주이고, 사회문제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을 위한 다양한 부처와의 정책연구네트워크 실적이 미흡함.
- 단편적이고 일회성 행사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부처와의 실질적인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부처와의 협력관계 등 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 일회성 네트워크보다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등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관계 유지 및 설정이 필요함.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창조경제 하의 광범위한 규제개선과제 도출, 기술창업의 성공요인의 탐색, 국가 지식재산 전략 재정비방안 도출, 사회문제 해결형 새로운 프레임의 혁신정책 제안 등 국가정책수립에 기여함.
-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프레임 및 실질적인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 제안형식으로 이루어져, 국가정책수립에 기여함.
- 기술창업의 성공요인의 탐색과 지원정책대안 제시는 시의적절하며, 지원정책 방안의 제시를 통한 다양한 문제해결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재정비방안 등의 논의에 기여함.

〈단 점〉

- 관련 정책들의 파급효과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어, 기관에서 수행한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
- 일부 대안들의 경우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것으로 정책화하기엔 구체성이 부족함.
- 위원회 위원 혹은 자문위원으로서의 참여는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이 연구자의 전문성에 바탕을 둔 참여로 보임.
- 과제에서 제안한 정책대안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었는지의 직접적인 관련성과 그 과정에 해당 과제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불분명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들이 단순 과제로서의 의미보다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화 과정에 연구기관의 체계적인 기여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결과 제시된 대안들이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 연구결과의 정책화 과정에 간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나, 연구결과의 정책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제안한 정책대안들이 실제 어떻게 정책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 과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안한 것으로 선도성이 있으며,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형식으로 국가정책수립에 기여함.
- 사회문제 해결형 종합실천계획 수립에 구체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국정운영의 핵심인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적 해법과 실천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단 점〉

- 획기적인 새로운 지식이나 정책 실현의 구체화는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방법론의 구체화 및 독창성 제고, 문제의식의 공론화·제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전담지원조직 및 산·학·연 간 협조체제 마련이 필요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하락함. 상세 업무별 결과 수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에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함. 상세 업무유형별로는 기본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제공서비스, 수탁연구 순으로 나타남.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수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특히, 수탁연구의 경우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편리성’, ‘효과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크게 나타남.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나타내며, 특히 ‘편리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기본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낮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고객문의 및 요구사항에 친절/신속/정확하게 응대’가 높은 반면, ‘연구결과물이 업무 및 연구에 도움이 되며, 정책적/학문적

활용도 높음’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높은 반면, ‘연구목표와 임무 달성 및 연구결과의 정책적/학문적 활용도 높음’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의 경우 ‘환경변화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 제공’이 높은 반면, ‘정보이용 관련 고객의견 접수 편리’가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의 요구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고객들의 의견 및 불만사항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는 채널 마련, 연구과제 수행 및 회의진행 시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소폭 하락함. 상세업무별 결과 기본연구의 점수가 상승한 반면, 수탁연구, 위탁연구, 정보제공 서비스의 경우 모두 하락함. 상세 업무유형별로는 기본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위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수탁연구 순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수탁연구, 위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특히, 수탁연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응성’, ‘구비성’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그 외 모든 차원 및 요소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같거나 낮게 나타남. 특히, ‘공익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나타내며, 특히 ‘편리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기본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낮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높은 반면, ‘보고회 및 자문회의 등 일정 관련 사전협의 적절’,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유(성과확산) 노력’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 시 고객과 협의 및 논의 노력’, ‘연구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높은 반면, ‘고객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 ‘연구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비’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의 경우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가 높은 반면, ‘연구수행 정도 공유기회를 적절히 활용’,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수집 및 반영절차 구비’, ‘위탁연구자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 항목이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의 경우 ‘자료 검색을 위한 검색기능(창) 구비’, ‘정보이용 시 접속 및 시스템이 안정적’이 높은 반면, ‘해당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 ‘정보이용 관련 고객의견 접수 편리’가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담당자 지정 및 시스템 구비 등을 통해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제 구축, 고객들이 의견을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채널 마련과 정비, 고객과 담당자간의 접촉(전화, 이메일, SNS 등)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정책연구로드맵 작성을 통해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기획과제를 발굴하는 등 과제발굴의 체계성과 합리성이 돋보임.
- 정부부처와의 협의, 세미나, 포럼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있음.
- 과제 선정회의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과제를 탈락시키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제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연구조정위원회와 연구자문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음.

〈단 점〉

- 외부 수요조사를 2회 실시하여 50개 이상의 과제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연구조정 위원회에서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나, 제안자에게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는 않음.
- 연구기획위원회와 연구조정위원회의 외부인사가 3명이나, 이들은 대부분 중복됨. 연구조정위원회에서 수시연구과제까지 선정하므로 외부인사 3~4명이 주요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
- 연구자문위원회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 수요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과제로 발굴하여 과제 제안자에게 성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인사의 비중을 늘리고 중복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연구자문위원회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해야 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수시연구과제를 정책연구과제와 단기현안과제로 구분하여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 외부 수요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종료 즉시 보고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으며, 과제 완료시 정책대안을 관련부서에 전달하는 등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 3개월 이상 과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 주제가 기본연구과제와 차별성이 적고 과제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미흡함.
- 과제발굴과 과제선정을 위한 위원회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과제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발굴노력이 미흡하며, 6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4건)에 대한 중간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있어 진도 및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함.
- 대부분 과제종료 즉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으나, 일부 수시연구과제(2건)의 경우 홈페이지 게재가 다소 지연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구과제와 수시연구과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수시연구과제 성격에 맞게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과제발굴위원회와 과제선정위원회를 분리하여 각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물을 종료 즉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관리를 강화하고, 제3자가 파일을 찾기 쉽도록 홈페이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중간평가의 내용이 평가의견과 평가점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간심의를 통해 연구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평가의견 중심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가시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
- 협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노력을 외부수요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협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가 잘 구성되어 있으며, 협동연구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협동연구과제 발굴시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음.
- 협동연구과제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의 경우 필요성, 추진체계 및 상호협력 관계에 대한 구체적 기술과 수행은 돋보임.
- 협동연구의 과제 수행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 제시한 5개 연구과제의 산·학·연 협동연구의 필요성 및 협동연구 추진체계가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단 점〉

- 협동연구 과제 ‘국가미래 메가성장 동력원 발굴사업 사전기획연구’와 ‘실감교류 인체감응 솔루션 발전에 기반을 둔 미래제품/서비스 도출’의 경우, 참여연구자 간의 담당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연구대비 협동연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목표 등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과 관련하여 원내 연구진의 연구진별 담당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연구과제와 수탁연구과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규정을 제도화하고 있고, 평가과정 및 결과반영절차 등에 관한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조정위원회를 통한 운영방법은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편차를 보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수탁연구과제의 자체평가 시 만족도평가를 수행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음.
- 연구사업 유형별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각기 항목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 평가단계별 평가표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됨.
- 분야별, 세부 전공별로 외부평가위원 풀(Pool)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고, 균형적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단 점〉

- 선정된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전공별, 분야별 구성에 대한 기술이 없음.
- 각 전공별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평가를 위한 공개발표회 대신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상호 장·단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진도점검 평가기준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각 전공별·분야별로 외부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전공별·분야별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지적재산권 관리지침’, ‘보안업무관리지침’, ‘홈페이지 콘텐츠 게시관리 지침’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2012년 3월,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음.
- 지식정보통합 관리·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증거기반 정책연구 DB를 구축하고, ICT기반 스마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각 시스템별로 제시된 성과가 구체적이고, 정보보안시스템의 고도화 중기(2013~2015년) 계획을 수립한 점도 긍정적임.

- 홍보·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실천전략과 홍보·확산 방법을 제시함.
- 국제협력전문가를 신규 채용하였음.
-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유튜브 계정을 신설하여 연구성과 확산 수단의 다양성 폭을 넓힘.
- 연구성과물을 발간 즉시 DB로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함.
- 연구결과물에 대한 확산 수단별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적이 향상된 점은 긍정적임.
- 대내·외 홍보채널 네트워크를 고객별로 구분하여 구축한 점은 장점임.
- 홍보 실천목표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확산방법을 강구한 후 이에 대한 실적을 제시한 점은 비교적 체계적임.
- 연구성과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성과 배포·확산 부문의 개선 의견을 도출하였음.
- 연구성과 배포 및 활용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피드백을 정리화한 점은 긍정적임.
- 연구성과의 잠재 수요처를 발굴하여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파급효과를 높이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임.
- 연구성과물의 배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성과를 확산하려는 노력은 장점임.

〈단 점〉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시스템의 효과분석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부족함.
- 홍보·확산 계획에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단기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홍보·확산 실적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홍보의 계량실적을 제시하고 향상도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나 효과 및 파급력에 대한 분석은 미흡함.
-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있음.
- 해외 네트워크에 확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미흡함.
- 이슈페이퍼를 새로운 주제로 쉽고 파급력이 높은 내용을 선정해서 발간하려는 노력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전략적 활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성과지표의 활용을 권고함.

- 향후 시스템을 통해 얻는 효과를 좀 더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B/C 분석 등 경제성 분석도 추가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확산·홍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둔 성과지표와 단기 목표치의 제시가 필요함.
-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 효과성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확산 수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계량적인 실적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는 등 홍보의 질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홍보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연구결과 확산실적과 성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향후 피드백을 통해 얻을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선된 시스템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중간에 이슈페이퍼를 작성하여 검증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이슈페이퍼 자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활용도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해외에 홍보하고 전파하기 위해 정부 및 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28편(58.94건/46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전문지와 연구기관 정책지에 대한 게재가 다소 많은 편이므로 향후 보다 인증된 학술지에 게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정책협의회, 자문회의,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되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기관현안 과제를 인식함으로써 기관의 대내·외 환경 분석이 잘 이루어졌음.
- 중·장기 인력계획의 수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함.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전략이 단계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으며, 조직 개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
- 융·복합 및 새로운 연구과제를 위한 연구팀의 신설 및 개편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
- 사회적 현안 분석부터 이슈해결 및 정책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추진까지 단계별로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음.

〈단 점〉

- 현안문제 선정을 위한 내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보직자 위주로 이루어졌음.
- 대표 현안문제의 선정에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보이지 않음. 예를 들어, 국정 과제 발굴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란 현안과제에서 어떤 선제적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노력과 성과가 보이지 않음.
- 2015년 이후의 희망소요인력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여 중기 인력계획이 우수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근거로 작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관의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미흡함.
- 연구원 개개인의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들, 예를 들어 연구원의 동기 부여를 위한 노력, 평가 보상 시스템의 개선 노력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확대·운영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같이 직원의 개인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들이 중기인력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보직자 중심에서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져야 함.
- 현안문제의 선정과정에서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정량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발굴지원 위한 선제적 대응에 있어서, 기관장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정책 개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필요가 있음.
- 체계적으로 소요인력을 산정하여 인력확보를 위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현재 융·복합,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취약분야 등 막연히 설정된 채용분야를 구체화하여 공급가능성을 감안한 충원전략이나 방법 등도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 개개인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들, 예를 들어 동기 부여책, 업적 평가 보상 시스템의 개선노력 등이 보다 구체적인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연구 역량 증진 노력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 과제 수 또는 연구의 질 등).
- 사회적 이슈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융·복합과제 및 새로운 연구 과제가 보다 구체적인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전 직원 연찬회, 부서별 간담회, 콜로кви엄 등을 통하여 연구원내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노력이 구체적임.
- 국가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적인 대외적인 활동 노력이 매우 돋보이고, 성과가 높고, 국내 네트워크 확보 및 협력 추진 노력이 돋보이며, 성과가 뛰어나. 그리고 정부기관 뿐 아니라 연구기관, 과학기술유관단체,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활동을 하고 있음.

〈단 점〉

- 위원회 구성원 중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직종·직급별 대표의 참여가 다소 부족하고, 직원이 개인별로 기관장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의 확보가 미흡하여, 하부 구성원으로부터의 상향식 의사소통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 네트워크 확보 노력이 주로 행사 또는 회의 개최 등으로 이루어지고, 공동연구 등 연구 과제 수행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미흡하며, 해외 선진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확보 노력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직종·직급별 대표의 참여) 조직 내 하부 구성원으로부터의 상향식 의사소통 노력을 보다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정책현안이나 과제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근무환경이나 개인적 애로, 전반적으로 운영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내용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 해외 선진 연구소와의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연구 등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외국,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의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 경영의 청렴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운영 규정 및 제도를 잘 정비하고 있으며, 구성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음.
- 구성원 혁신제안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음.
- 기관 경영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10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 구성원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강화함.
- 인채물 및 IT기기 리스계약 업체 선정시 표준화된 정량적, 정성적 평가지표를 가지고, 선정 후 결과를 외부에 공개함.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고, 연구윤리 확보 및 준수를 위한 교육 활동이 on-line과 off-line에서 모두 실시됨.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표절검색시스템(Copy Killer)을 도입하여 사전예방에 힘씀.

〈단 점〉

- 상설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다소 부족함.
- 기관 경영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기술이 다소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성과평가에 대한 등급별 판단 기준이 미흡함.
-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사전·사후 조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상설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직종별·직급별 대표의 참여)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기관경영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익명의 내·외부 신고자 제도 및 이에 대한 포상제도 등).
- 성과평가지표 중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등급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급별 판단기준 마련 등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연구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제도적으로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확인하고 사후조치를 취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를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업적 평가 및 보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위반시 외부 참여연구자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를 가할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연구원장은 기관의 경영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기여도 제고, 연구성과 신뢰도 제고 및 기관운영의 선진화 전략목표를 세우고 7대 경영목표와 18대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설정하여 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여러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음.
- SWOT분석에 기반하여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으며, 실천계획의 실현가능한 내용과 실현가능 수단이 잘 정리되어 있음.
- 새 정부의 국정어젠다를 연구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전략 정책연구 확대, 융합연구 프로그램 도입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확대 등 실천계획에 대한

구현방안이 반영되어 있어 과학기술에 관한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역할에 부응하고 있음.

- 미래지향적 융합연구와 글로벌 협력을 통한 연구는 국정목표와 본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함.
-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의 목표치와 달성도를 설정하고 있고, 달성도가 모두 100%를 상회하여 우수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음.
- ‘글로벌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도 확대’를 위해 ‘기술혁신 기반의 개도국 발전 프로그램 운영’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연구성과 확산’은 타당함.
- ‘기술혁신 기반의 개도국 발전 프로그램 운영’과제는 개도국 지원 및 국제협력의 목표치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통하여 컨설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성과목표임.
- 과학기술분야의 국정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전략 연구에 대하여 미래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미래연구를 추진하고 EU와의 협력연구, 정부정책담당자와의 미래포럼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긍정적임.
- 융합연구프로그램 도입 실천과제에 대한 성과로서 국정과제 및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융합연구, 사회혁신, 공공연구기관 지표 통계 및 농식품 생명 R&D 등 분야의 신규프로그램 연구를 신설한 것은 바람직함.
- 능률성과급 지급 시 수탁기여도를 축소하고 연말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 성과 중심의 보상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나이지리아 소외질병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 이외에 탄자니아 및 라오스로 사업을 추가 확대하고 해외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도국 연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음.

〈단 점〉

- 경영목표의 실천계획이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연계방안이여야 하나, 연계방안의 설정이 다소 중복적임.
- 기관의 당면현안이 경영목표 실천계획과 중복되어 기관의 일상적 문제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당면과제가 혼재되어 있어서 당면현안으로서 불분명함.
- 현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한 연구기관의 당면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이 명확하지 않음.
- ‘개방형 융합연구를 통한 사회적 기여도 제고’라는 경영목표는 중요한 내용이나 융·복합연구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미흡함.
-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연구성과 확산’에서 공동연구보다는 프로젝트 및 국제학술행사를 중심으로 하고 교류협력 대상국으로 선진국들을 제시하지 않았음.

- 정책현장의 수요를 선행적으로 발굴하고 시의적절하게 정책대안을 제공하여 정책기여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정책고객 대상 수요조사를 상·하반기에 각각 2회씩 실시하고, 정책수요부처와의 정책연구협의회 5회 개최한 것은 선제적 정책 대응시스템 구축으로서는 미흡함.
- 목표성과의 성격상 비계량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가능한 한 적절한 계량지표를 도출하여야 하나, 성과지표 중 많은 부분이 제도 도입·운영 등에 대한 과정지표이며 정성적 지표로 설정됨으로써, 달성도 평가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와의 연계방안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방안을 정리하여 경영목표실천 계획이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되도록 통합하여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변화와 이러한 환경변화가 연구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한 분석함으로써 기관의 당면현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세부실천계획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융·복합연구,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및 연계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도 확대’에서 개발도상국가이외의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사람중심의 인재경영’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직원 만족도 조사를 행정직을 포함·실시하여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함.
- 미래지향적 연구에 비하여 융·복합연구가 실제로 실행계획에서 충분히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의 실효성에서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부서 간 협동연구와 산·학·연 외부 전문가의 과제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정보기술과 보건을 융합하는 산업간 융합연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중 산출이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설정하고, 정성적 지표에서 나아가 계량적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가능하고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성과목표의 객관적 선정을 위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내외·부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중점추진과제들의 선정배경, 선정 이유 및 선정 절차가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이루어졌음.
- 관·산·학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및 전 직원 대상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설문조사를 통해 중점추진과제 후보를 선정하고, 외부 경영자문위원회 및 기관장과 주요 보직자 회의를 반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기관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하여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선정과정을 거쳤음.
- 미래전략, 개도국 발전 프로그램, 인력관리시스템의 세 가지 축이 중점추진과제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선정된 중점추진과제가 전체적으로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을 띠고 있음.
- 국가 중·장기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고, 미래사회 이슈에 대한 선제적 정책연구 비중을 확대하여 기본연구과제 예산의 38%를 배정함으로써, 미래사회 이슈에 대한 선제적 정책연구를 견인함.
- 미래 중점연구영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규직 연구인력을 3명 채용하고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정과제의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의사소통채널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함.

<단 점>

- ‘기술혁신 기반의 개도국 발전프로그램 운영’이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이라는 점에서 본 기관의 핵심기능 방향에 부합되는 중점추진과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함.
- 현재의 미래전략 연구는 5년 정도의 중기 연구이나 장기적인 미래연구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하고, 미래연구를 기술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측면이 있으며, 국제적인 미래 연구 네트워크 실적이 미흡함.
- 축적된 연구실적과 경험을 개도국에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나,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사람중심의 인재경영’ 과제는 중·장기 측면보다 능률성과급제와 같은 성과 평가 및 보상에 더 치중한 면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추진과제와 국가정책, 기관 발전과의 부합연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고, 연구원의 미래 발전방향에 맞는 중점추진과제 선정이 필요함.

-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개발도상국에 대한 컨설팅과 경험 전수와 병행하여 정책연구를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수준도 글로벌화하여야 하고, OECD 등 선진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다양한 연구인력 구조를 고려할 때 개도국 발전 프로그램의 운영보다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강조하는 과제가 중점추진과제로 더 적합함.
- 인력관리에 있어서 성과중심 평가와 보상시스템이 중요하나, 연구인력의 동기 개발과 교육훈련에 보다 치중하여야 하는 것이 사람중심의 인재경영에 더욱 부합함.
- 미래전략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이므로 미래전략연구센터 발족과 함께 미래연구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및 경제와 연결되는 연구로 확산하여 미래연구의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 과정의 강화가 더 필요함.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연구원 주요 기능과 연계하여 환경변화 이슈를 적절히 도출하였음.
- 특히 미래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전략연구센터’,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 교육·훈련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글로벌 공영발전 및 리더십 확보를 위해 글로벌정책분부를 강화·확대 운영하고, ‘창조경제지수개발TF’를 구성하여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마련한 것은 뛰어난 성과임.
- 창조경제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행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체계 개발함.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특히,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관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연구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등 외부고객 의견수렴 체계가 구축되어 가동되고 있음.
- 경영목표 달성도 점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며, 운영성과를 정량화하여 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및 성과가 우수함.

- 조직 내 경력자(시니어급)의 역할 강화와 직원들의 경력단계별 성장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최상위 직급에 대하여 직급정원을 운영하는 점은 좋은 사례임.
- 채용단계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기관 활용 인성검사 실시, 신규채용 시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여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자 재임용 추천, 신규채용 심사 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연봉을 상향조정 책정 등은 우수한 운영 사례임.
- 연구조직은 정책수요와 연구주제에 따라 부서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인력 및 예산을 배정하고, 행정조직은 기능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경력 개발을 지원함.
- 직급 및 보직과 무관하게 연구과제를 선정함으로써, 공정한 연구 참여 기회를 확대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인력채용계획에 따라 객관성 있는 채용 기준 및 절차를 운영하고, 상시인재채용시스템, 우대 및 특별보상체계, 우수인력 유출방지 노력 등을 통하여 박사급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함(88.9%에서 92.1%로 상승).

〈단 점〉

- 주요 기능과 연계하여 외부고객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분류하여 고객 그룹별 의견 수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조직목표 달성을 증명하기 위한 운영성과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함.
- 2013년 3월 중기인력운영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였으나, 현황자료만 있으며 직무 및 인력구조(직종, 직급, 연령별)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함.
- 우수한 인재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인재풀 DB 구축, 채용설명회 등)이 부족함.
- 기관의 지속적인 우수인력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사 1인당 평균 1.8과제로 연구 책임자를 수행할 박사급 인력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행정인력을 현재 규모로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2008년 이후 신규 증원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박사급에 대한 결원보충이 우선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신규 채용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발전방향, 제안사항 등의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조직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다 구체적인 필요 있음.

- 직무분석, 기능과 연계한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인평가에 반영함.
- 연구연가, 직무교육, 비연구직 자기계발 실적 평가점수 반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청렴교육, 감사교육 등 공통역량 교육과 직무교육, 연구윤리교육 등 직종별 직무역량 개발교육을 통하여 현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래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함.

<단 점>

- 직종·직급별로 강화해야 할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직무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음.
- 세종시 이전, 우수인력 유출, 우수 직원을 위한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정년 연장, 재취업 등) 등 현안 극복 위한 직원 사기진작 노력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되는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계획과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정량평가 시 양적인 평가에 치우쳐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질적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혁신 제안)는 지표 도입은 좋은 사례임
- 연구직의 경우 조직 기여도, 비연구직의 경우 부서 실적이 개인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개인 성과 - 부서 성과 - 기관역량 제고로 연계됨.
- 비연구직 업적평가 계량화 지표가 타 기관에 비해 적절하게 도출되었음(비연구직 정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 기본연구사업의 질적수준 및 기관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고 평가등급(S등급) 부여 시 최소자격요건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좋은 사례임.
- 규정개선TF를 구성하여 직원 평가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한 실적이 우수함.

- 승진예비심사에 직전 5년 간 연차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최근 2년 간 연차평가등급 평균이 중간등급 이상으로서 최하위등급이 없는 경우에만 승진 추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우수한 제도임.
- 직종별 업무와 성과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평가요소를 개발하고 비중을 합리적으로 반영함(연구직 정량평가 80%, 비연구직 40%).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함.
- 평가제도개선TF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검토 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함.
-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겨우 실적에 대해 연차평가에 반영하고 우수논문에 대해 포상 수여함.
- 평가결과의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복수의 피드백 및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함.
- 근무평정 대상 제외자 선정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등급별 인원 가계배분 원칙에 따라 평가등급 부여함.
- 평가결과를 금전적 및 비금전적 보상에 반영하고, 승진심사 시 인사고과 결과를 20~25% 반영함.
- 승진심사 대상위자는 예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정량·정성평가를 거친 후 75점 이상자만 인사위원회에 상정함(2013년 예비심사 탈락률 23.8%).
- 승진심사 시 원장과 부원장을 배제한 것은 긍정적인임.

〈단 점〉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평가 시행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지 않음.
- 직원 평가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이 부족함.
- 행정직 평가결과를 인사고과 20점에만 반영하는 것은 평가결과의 비금전적인 보상의 적정한 활용에 문제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비연구직의 평가비중이 높은 업무실적 평가지표의 계량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사적인 관점에서 팀과 개인 간 성과를 연계하여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기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평가가 부서평가, 경영목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평가결과를 승진에 100% 반영하는 비금전적인 보상의 적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최근 10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정부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가 연 4회 시행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타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인 ‘출산여성직원의 연차평가 별도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인사, 경영권 침해 조항 삭제 등 기존 단체협약보다 합리적인 단체협약안을 제시
- 규정개선TF, 중·장기 인력계획TF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실시함.

〈단 점〉

- 노사갈등관리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노무관리담당자교육과 일반관리자 교육의 실시가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함.
- 노사간담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으나, 정례화·제도화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장기간 단체협약이 교착상태에 있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간의 노력이 요구됨.
-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사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노무관리담당자교육과 일반관리자교육을 충실히 하고, 그 내용을 조직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전체 조직구성원의 의사소통통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된 후 사측에서 불리한 조항을 삭제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타결되지 못한 상태로 향후 노력이 필요함.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 기본연구사업비(2,509백만원)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1,505백만원) 비율(60.0%)은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2014년 예산에서도 적정비율(66.0%)로 편성하고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12.8%(322백만원), 2014년 10.4%(220백만원)로 연구회에서 제시한 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 중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이 2012년에는 9.3%(229백만원)로 평가기준에 다소 미흡하였으나, 2013년에는 10.7%(269백만원)로 평가기준(10~20% 이내)을 준수함.
- 수시연구과제 8건의 집행비율은 예산대비 84.1% 수준으로 양호한 집행비율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수시연구과제 집행에서 전액 위탁연구비로 지급한 과제는 없음.
- 퇴직금의 적립은 회계기준에 따라 필요한 소요액을 산정하여 분기별로 균등하게 적립되고 있음.
- 퇴직예치금은 일반운영 자금과 구분되어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MMDA 등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 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1.5%)은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806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연봉에는 직무급과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이 22%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성과연봉 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등급별 차등지급율이 $\pm 1\%$ 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됨.
- 기본연봉의 등급별 인원 역시 최고-최저등급에 각 10%를 배분하고 있어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됨.

〈단 점〉

- 직무급 출납수당을 기본연봉이 아닌 경상운영비에 산입하여 집행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향후 직무급 출납수당은 경상운영비가 아닌 기본연봉으로 산입하여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간부직의 경우 성과연봉 지급 시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최저 $\pm 33\%$ 차등지급하였고, 비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15\%$ 차등지급하였는바,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됨.
- 연구직의 경우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이상,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됨.
- 능률성과급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지급하고 있으며, 인원배분비율 또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함.

<단 점>

- 행정직군 비 간부직의 성과연봉 지급 시 B등급에 60%의 인원을 배분하여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하지 못함.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산정과 지급과정에서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행정직군 비 간부직의 성과연봉에 대한 인원배분비율이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을 준수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능률성과급은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하도록 업적 평가를 중심으로 지급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임.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1건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2건의 예산·결산위원회 지적사항, 8건의 개선과제에 대한 충분한 개선을 완료함.
-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을 위해서 Matrix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성·효율성·수용성을 강화함.
- 자체개선계획초안을 수립하고 전 직원 1, 2차 설문조사를 거쳐 개선계획안을 확정짓는 기관의 고유한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를 가지고 있음.
- 연구윤리 관련자 주의조치와 함께 윤리서약서 징구 확대와 연구윤리교육 강화 등 연구윤리 준수에 충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 개선계획을 이행 점검함에 있어 상시점검,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개인연차평가 및 부서실적평가와 연계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함.
- 평가 이의신청 기한을 명시하고 평가척도를 세분화하는 등 지적된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이 모두 개선됨.
- 노무관리교육이 강화되고 다양한 소통프로그램이 새로이 운용됨.
-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유 노력, 외부고객 커뮤니케이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짐.
-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이 연구 및 경영개선에 활용되고 있음.

<단 점>

- 기존 단체협약의 불합리를 개선한 협약안을 노조와 검토 중으로서 개선실적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적된 장기근속 금품 지급 부적정과 관련하여 포상 가이드라인 제정 전이라도 과도한 포상 시정이 필요함.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간 대화 노력이 필요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3년 고용실적(1명)이 있으며 채용공고 시 장애인 구인을 포함하고 있음.
- 장애인 채용을 위한 연구원 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2013년도 장애인 1명을 채용하였으나, 장애인 연평균 고용률이 1.43%에 해당하여 평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률 2.5%를 충족하지 못함.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장애인 신규채용을 늘여가야 하고, 아울러 재직중인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기관의 체계적인 노력(회의, 계획수립, 전담팀 운영, 방문 등)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채용 및 고용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100% 충원을 달성하고 있으며, 청년인턴 퇴직 시 신속한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청년인턴 근무관리(오리엔테이션교재, 교육실시, 멘토링, 고충처리, 근무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양호한 운영을 하고 있고,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양호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년인턴 6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음.
- 청년인턴제 운영 및 이행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 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을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
- 행정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충해결담당관에 대한 인사발령 등 형식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고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우대조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2013년도 1명의 국가유공자를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국가유공자 고용률은 1.8%로 평가기준 6%를 준수하지 못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하여 보훈처에 전화하는 등 일정한 노력은 하였으나, 연구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보이지 않음.
-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매우 미흡하므로, 향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대책회의, 기본계획수립, 전담팀 구성)등이 필요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 및 단체협약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관련 규정(별정직 취업취침)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이 거의 없고, 복지 분야에서도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 2014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든 분야에서 동등하게 처우하기로 함.
- 연구원 차원의 구체적인 비정규직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다소 미흡함.
- 연구원 차원의 비정규직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하여, 체계적인 비정규직 직원의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02

국토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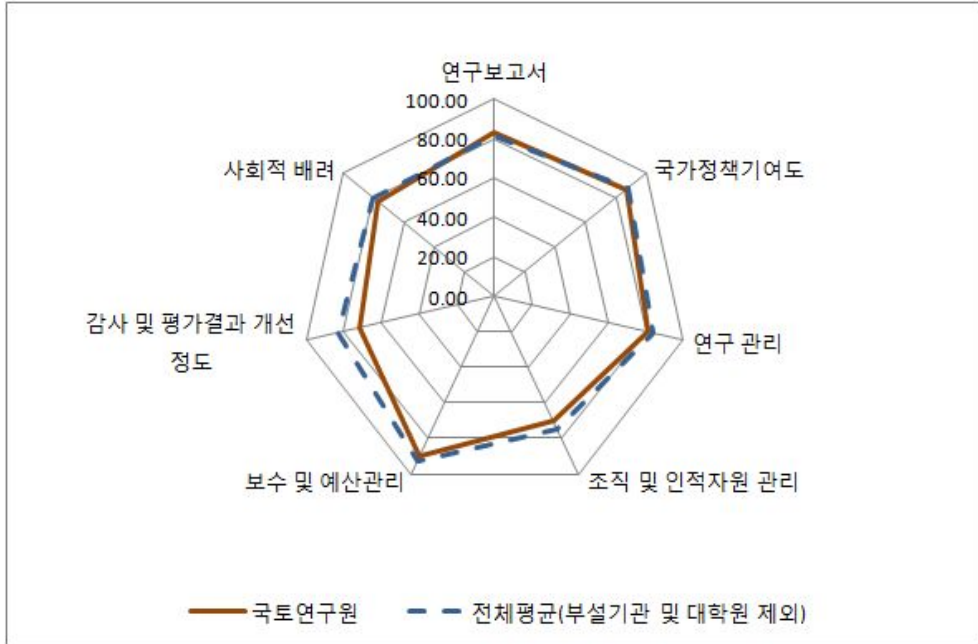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E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B |
| |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우수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C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B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D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E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C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C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B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였으며, 정책적 실천 계획의 구체성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함.
- 포괄적인 연구주제를 섭렵하여 활발한 정책연구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주거복지 정책 등에서 질적으로도 심도 있는 정책 기여도를 나타냄.
- 우수한 연구성과물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외정책연구 네트워크의 강화와 영문 보고서 발간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융·복합연구 확대와 연구주체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토분야 중·장기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점이 돋보이나, 과제선정위원회 위원 중 정부부처 공무원을 제외하면 외부위원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함.
- 협동연구사업 추진 시스템을 잘 구축하였고, 이에 적절한 규칙과 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며, 협동연구 수행여부에 대한 5% 가점 부여 및 과제평가 시 10% 가점을 주는

등 협동연구 수행을 장려하고 있음.

- 협동연구에 대한 수상, 장려금 등의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협동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이에 대한 인력 풀(Pool)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특히 연구관리시스템(KIWI)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부평가위원 풀(Pool)의 선정과 구성을 확대 및 균형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지표의 배점과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구체적 운영 및 외부평가위원 풀(Pool)의 전공·분야별 평가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KRIHS 연구성과 확산 및 국토지식 공유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KRIHS 연구성과 확산 및 국토지식 공유 추진 계획’의 성과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측정 관리가능한 성과지표도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함.

[경영 분야]

- 국민공감의 성과확산을 위해 대외협력팀을 활용하고, 개도국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나, 환경분석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 요인의 제시가 미흡함.
-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차별화된 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실적보고를 통하여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성과 중심으로 평가비중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 노사 간 수시대화 운영실적이 우수하고 인건비 현황을 전 직원에게 수차례 설명하는 등 노사갈등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임금협상에 실패하고 복수노조 간 대화단절로 노사갈등 관리가 어렵고 이면 노사합의가 존재함.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지 않는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소요되는 금액을 분기별로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고, 적립계좌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과 비간부직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 또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의 비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유아보육비를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성과연봉의 평가등급별 인원배분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자체개선계획을 통해 개선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자체개선계획 수립 및 환류체계의 구성에 구성원의 공유 및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여, 전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개선환류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직전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1.3%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거의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양호하지만, 청년인턴 운용에 관해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청년인턴제 운용이 요구됨.
- 국가유공자 고용률은 5.4%로 평가기준 6%에 약간 미달하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복지 분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전혀 없지만, 임금 부분에서는 차별이 다소 존재하고, 비정규직 운용 계획의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하므로 향후 기관의 ‘경영목표 연도별 실행계획’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조치를 분명히 명기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건설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기본정책 수립에 기여함.
-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 결과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실질적인 환경보존 또는 국토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일부 보고서에서 지표별 자료를 GIS기반으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고, 물리적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간 관련성을 분석한 점은 방법론적으로도 우수함.
-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내용을 명료하게 하고 가독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임.

〈단 점〉

- 연구의 방법론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실증분석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미진한 경우가 있음.
- 일부 보고서의 경우 법제도, 추진체계, 자원조달 등 실천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여 정책 입안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음.
-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한 점은 고무적이나 다양한 분석 결과를 논리적 체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여 정책적 시사점으로 집중시키는 노력이 다소 미진한 경우가 있음.
- 기존 체계가 유지되어온 현실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인해 정책의 역사성과 연계성이 약화되어 정책의 신뢰도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질 수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분석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부각시키고 논리적 근거가 명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도 규모가 큰 조직을 갖고 있음. 이런 이유로 국정과제 수행실적도 참여과제 수에 있어서나 참여인력에 있어서나 예산배분에 있어서나 높은 편임.
- 양적으로 많은 국정과제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선도적인 과제수행이 많았음. 특히 새 정부의 관심사였던 서민주거안정에 관한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 큰 통일에 대비한 국토공간계획 등 중요한 국정과제를 수행함.
-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에 부응하고 WB(World Bank),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DB(Asian Development Bank) 등 해외 유관기관 및 SCAG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과 같은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외부 펀드를 받아오고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다수의 과제를 브랜드로 차별화하여 분류하고, 이를 국정과제와 연구원 조직체계에 연계시키는 아이디어도 좋았음.

<단 점>

- 연구기관의 결과물이 단순한 ‘결과물 제시’로 그친 경우가 많고, 법제화·제도화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국정과제 중에서 건설시장의 침체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수요조사 때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영역을 어느 정도(약 70~80%) 확정하고, 나머지 현안 수요에 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연구본부간 협업 및 체크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총괄 컨트롤 기능이 필요함.

- 연초에 확정되는 연구과제 외에도 특정 현안에 대한 (사후적) 연구도 피드백만 잘 된다면 가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월세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부동산시장 및 건설시장의 장기침체에 원인이 있다고 볼 경우,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정현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정부 현안과제로 ‘재해예방적 토지이용체계확립’, ‘주거복지향상 및 주택시장 정상화’,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고용복지정책’, ‘창조경제 활성화 및 투명한 정부3.0 실현을 위한 정책’ 모두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과제였고, 연구원에서는 타 부처(중앙재해대책본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와의 협의와 자체 인력에 의한 선제적 대응도 우수함.
- 특히 주택바우처 제도 등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주택수요자를 위한 보조정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에 비추어 향후 주거복지의 수요가 증대할 것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 가치가 높음.

<단 점>

- 창조경제 및 정부3.0과 관련하여 U-city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실제 모델 개발 및 확산 노력이 부족함.
-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정부에 대한 선제적인 이슈제기라기보다는 정부의 현안대응이라 볼 수 있으나, 선제적 연구라고 보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영역의 확장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의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현안에 관한 연구주제로는 새마을 운동을 통한 국토공간의 재창출과 관련한 어젠다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정부부처간 협의에 의한 사업의 경우 이벤트식 행사보다는 지속성을 갖고 부처간 협동에 의해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특성화고교 지원사업(교육부-국토교통부의 협의에 의한 공간정보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내 및 국외 정책연구네트워크는 국책연구기관 중 우수한 실적임.
- 특히 국외 정책연구네트워크는 국제적 위상이 분명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이루어지고 있고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긍정적임.
- 이는 국토연구원이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등의 국제 기구와 연대하여 어떤 사업이라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인적·물적 capacity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세계무대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함.

〈단 점〉

- 민간연구기관 및 산·학·연과의 정책연구네트워크 구축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물을 국제적으로 이용(인용)할 수 있게 산출하는 부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연구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발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기관 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제휴가 필요함.
- 정책연구네트워크가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사항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축적·활용할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2011~13년까지 3년 간 국토연구원의 총 연구과제 수는 400건으로 연평균 13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이중 보고서 기록만을 계산해서 해외 기관과의 과제수행(23건) 및 세미나(66건) 등 총 89건(67%)의 국내 정부부처 협력 및 과제수행을 하였음. 기록되지 않은 정부부처 회의와 협력사항을 고려하면 양적인 국가정책 수립 기여도는 괄목할만함.
- 국가정책수립 기여도를 질적 측면에서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장애인 주거복지,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수 개발과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그 외 산지이용, 수자원이용,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투자협력시스템 구축(인프라 부문) 등이 국가정책의 기저를 이루는 아주 우수한 연구들이었음.

- 이명박 정부 이후 UN(United Nations)이나 국제기구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온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이에 관해 주도적으로 대응함.
- 전체적으로 국정과제들은 현 정부 들어서 국정기조에 바탕을 두고 우수하게 수행됨.

〈단 점〉

- 일부 과제에서 정책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 및 개선방안 등이 다소 부족함.
- 정책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다년도 연구과제는 연구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임 정부정책의 공과를 분석하고 이를 현 정부 정책에 피드백 시키는 객관성이 담보된 연구진행이 필요함.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국토이용제한지역의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의 경우 우리나라 면적의 약 65%가 산지인 점,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보면 시의성이 및 선도성이 있음.
- 또한, 산지관리를 보전, 이용, 개발의 3단계로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시대에 부합하는 산지이용기준을 마련하여 산지정책에 대한 정책기본 베이스 맵을 제시하고 있음.
-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I~III)’의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원과의 협동과제로 선정되어 물 관리에 관한 정부의 통합관리방안, 물 관리 효율성 제고, 수자원 유역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정책 기여도가 높으며, 여기에 하수도2020계획(환경부)의 기본 정책자료로 활용됨.

〈단 점〉

- ‘국토이용제한지역의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의 경우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산지개발 재해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산지이용의 기준을 입지, 이용기간, 부지조성 측면에서 조명에 치우친데 반해, 산지전용허가제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등 산지이용에 관계된 다른 법령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Ⅰ~Ⅲ)’의 경우 실질적인 갈등조정 사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며, 부처 간 구체적인 협력성고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토이용제한지역의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와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Ⅰ~Ⅲ)’ 모두 두 편의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정책화 대안 중에는 산지나 수자원의 보다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각조 인허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화가 되지 않을지 상세한 점검이 필요함.
- 따라서 무분별한 이용(산지든 수자원이든)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고, 국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무분별한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국민홍보방안도 필요함.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정도

□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장 점〉

-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이미 7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수행한 집행사업이나 연구사업 모두 괄목할만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급속한 도시성장과정에서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점, 공간의 비인간화, 사회적 관계에서의 모듬살이 가치 상실 등의 문제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시설의 환경개선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문화, 도시마을 만들기 등 바람직한 도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부동산시장 연구사업’은 8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진단 및 예측모형을 제시하고 있어서 일종의 한국형 부동산시장의 게놈 맵(genome map)을 제시하고 있음.
- ‘글로벌협력 역량강화사업’ 역시 11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지원사업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관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책컨설팅사업,

개도국 공무원 및 연구원의 연수교육사업, 글로벌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사업 등 활발한 기여를 하고 있음.

- ‘국토지식 공유사업’은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어린이를 비롯하여, 대국민 국토지식을 전파하고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음.

〈단 점〉

- ‘글로벌협력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개발협력사업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실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각종 협력사업별 사업추진 기준 등이 다소 미흡함.
- ‘국토지식 공유사업’의 경우 의도된 사업계획(목적)과 실제 집행간에 발생하는 괴리로 인해 사업의 효과에 대한 성과확산실적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일회성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국토지식공유사업의 경우 국토지식을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공유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국민이 이에 관심을 둘 만큼 여유가 있는지, 학생들에 대한 국토 교육사업 지원 프로그램이 적실한지를 재고하고 국민생활에 밀착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수탁연구, 공동연구는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한 반면, 기본연구, 위탁연구는 하락함. 연구과제별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본연구, 위탁연구, 수탁연구 순임.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기본연구, 공동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수탁연구, 위탁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전문성’, ‘대응성’, ‘공익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대비 낮았으며, ‘효율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전문성’, ‘대응성’,

‘성실성’, ‘공정성’, ‘공익성’의 경우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구비성’의 경우는 전체평균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는 수탁연구, 위탁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회의 진행 시 참석자 의견 경청 및 적극적인 의견 반영 노력’이 높은 반면, ‘해당분야의 최근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연구결과물 제공’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을 정확히 이해’ 항목이 높은 반면, ‘계획된 연구인력 투입 및 연구수행 일정 준수’,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 및 반영절차 구비’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의사소통 능력 보유’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연구자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 항목이 낮게 나타남.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 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사명감 및 연구과제 수행 책임감’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 인력의 연구역량 강화와 함께 정책적/학문적 활용도가 높은 연구결과물(보고서 등)을 산출해 내기 위하여 고객들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소폭 상승함. 상세 업무별 결과 수탁연구와 위탁연구의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기본연구와 공동연구의 경우 상승함. 연구과제별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본연구, 수탁연구, 위탁연구 순임.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기본연구, 수탁연구, 공동연구의 경우 해당 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가 나타난 반면, 위탁연구의 경우 해당업무 전체 평균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남. 특히 공동연구에서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준비성’, ‘성실성’, ‘공정성’, ‘공익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낮았으며, ‘편리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특히 ‘전문성’, ‘합리성’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위탁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회의 진행 시 참석자 의견 경청 및 적극적

의견 반영 노력’, ‘연구목적을 정확히 이해’가 높은 반면,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성과확산) 노력’, ‘해당분야의 최근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연구 결과물 제공’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임. 위탁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을 정확히 이해’, ‘관련 지침과 절차에 의거하여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이 높은 반면,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 및 반영절차 구비’, ‘고객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의 항목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 경우 ‘관련 지침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 ‘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의사소통 능력 보유’가 높은 반면,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 및 반영절차 구비’, ‘연구과제 관리방식 및 체계가 효율적이고 계획된 연구수행 일정 준수를 위한 협조’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공동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연구과제의 진행시기 및 신청기간 적절’, ‘연구 목적과 범위 명확히 제시’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과제 수행 일정 준수를 위한 노력, 효율적인 위탁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절차 및 작성서류 등 간소화 노력, 고객들의 의견 및 불만사항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는 채널 마련과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기본연구과제 유형을 정책수요대응형, 중·장기전략, 고객수요선도형과제로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함.
- 융·복합연구 확대와 연구테마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토분야 중·장기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
- 과제선정을 위해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의견수렴을 하고 있음.

〈단 점〉

- 외부 수요조사를 다각도로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과제로 체계화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와 같을 경우 외부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 기본연구과제의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심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 수요조사 등 연구과제 발굴 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제안으로 채택여부를 명시해야 하고, 외부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 제안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외부 전문가의 참여에서 참여자 수와 방식을 개선해야 함. 일회적인 평가위원 참여방식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등 자문의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권한을 지닌 기구에 체계적으로 포함해야 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수시연구과제의 정부부처 의견 반영이 적절하고, 공모형식의 외부과제 제안제도를 통해 제안된 총 9건 가운데 3건이 선정 수행됨.
- 수시연구과제의 진도 및 질 관리를 위해 중간단계에서 연구협의를 거쳐 기본 연구과제에 준하는 최종 연구심의회의를 거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 선정회의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음.
- 수시연구과제 선정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연구과제 취지에 맞게 과제선정회의도 연중 수시로 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체계적으로 참여시켜야 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사업 추진 시스템을 잘 구축하였고, 이에 적절한 규칙과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 협동연구 네트워크 구축도 정책연구협의회, 포럼, 워크숍, 연구협의회,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 협동연구 수행여부에 대한 5% 가점을 부여하고 과제평가 단계에서 10% 가점을 주는 등 협동연구 수행을 장려하고 있음.
- 협동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잘 규정되어 있음.
- 특히, 협동연구과제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 시범연구’와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및 적용방안’은 역할분담과 협동연구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명확함.

〈단 점〉

- 협동연구에 대한 장려는 하고 있어 우수상, 마일리지 부여, 융·복합 장려금 지급으로 되어 있으나 어떤 내용의 인센티브인지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즉 우수과제의 경우 포상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협동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력 풀(Pool)을 개선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성이 명확하지 않음.
- 협동연구기간과의 상호노력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세미나, 정책협의회 개최실적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 협동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의 역할분담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에 대한 수상, 장려금 등의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협동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인력 풀(Pool)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
- 과제별 연구진 특히 외부연구진의 수행업무 및 역할 분담내용이 구체적인 필요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체계의 규정과 차별화된 3단계 평가항목과 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구관리시스템(KIWI)에 의한 엄격한 평가관리를 통하여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점 80점을 기준점으로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산정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함.
- 과제유형별로 평가요소를 차별화하여 운영함.
- 평가지표를 단계별로 차별화하고,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사전에 연구진에 공지하여 공정하게 평가가 되도록 함.
- 각 과제별 중점검토위원을 두어 일관성 있는 평가가 추진되고 있음.
- 자체평가위원의 선정기준, 구성에 대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외부 전문가 풀(Pool)은 다양하게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함.
- 연구자의 풀 및 자체평가위원의 선정기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규정되어 있음.

〈단 점〉

- 각 연구수행단계별로 중점평가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점평가사항들이 평가항목 및 배점에 고려되는 사항이 미흡함.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함.
- 최종보고서평가의 경우 현재 중점검토위원과 외부평가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중점검토위원의 비중의 전체적으로 높아서 평가의 다양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위원의 공평한 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각 연구수행단계별 내부 및 외부인원의 선정 실적을 제시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각 연구수행 단계별로 중점평가사항을 실제평가와 연계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
- 연구수행 단계별 중점평가사항이 평가배점기준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단계별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위원의 공평한 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각 연구수행 단계별 내부 및 외부인원의 선정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출판관리규칙’에서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및 출판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적재산권관리지침(2013.12.31.제정)’에서 발명, 특허, 출원 등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직무의 관장,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13년 10월, 연구자료의 보호를 위한 연구DB 암호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연구자 시스템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제어(NAC)시스템, 연구정보DB 접근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출판관리 지침과 지적재산권 관리지침 등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 2013년도에 연구정보보안 시스템과 연구정보 DB접근제어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일부 성과가 있음.
- ‘KRIHS 연구성과 확산 및 국토지식 공유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음.
-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콘텐츠 등 일부 업데이트함.
- 스타연구원 육성 및 지원을 통한 홍보 확산 아이디어는 긍정적임.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기구, 해외연구소 등에 연구성과물을 제공하는 등 활발한 해외 배포활동을 전개함.
- 연구성과물을 100% PDF파일과 E-book 형태로 등록하여 제공한 점은 긍정적임.

〈단 점〉

- ‘KRIHS 연구성과 확산 및 국토지식 공유 추진 계획’의 성과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측정 관리가능한 성과지표가 없음.
- ‘KRIHS 연구성과 확산 및 국토지식 공유 추진 계획’과 확산 실적의 연관 관계가 미흡함.
- 연구결과 확산체계 및 수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2013년에 다양성 측면에서 강화된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성과가 없음.
- 미션과 비전에 부합한 전략목표와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연계성이 낮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환류도 다소 미흡함.
- 연구성과 확산실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당기의 차별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적정하게 선정, 취소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활용이 미흡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 적정성의 기준이 효과성 향상보다는 단순 배포·확대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음.
- 보고서 배포 및 활용도, 배포시기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는 성과는 미흡함.
- 이슈페이퍼를 쉽고 파급력이 높은 내용을 창조적으로 선정하여 만들려는 노력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 확산·관리 시스템 개발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계량화가 필요함.
- ‘KRIHS 연구성과 확산 및 국토지식 공유 추진 계획’상 당기 성과목표를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성과확산을 위한 조직운영과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과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연구원에 가장 효과적인 확산 수단을 선택하여 확산자원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12년도에 시작된 과제의 경우 이를 분명히 밝히고, 2013년도에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또는 어떠한 성과가 추가되었는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홍보확산 수단별로 전년대비 향상도, 목표대비 달성률 등에 대한 2013년도 성과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슈페이퍼 배포의 적정성(시기와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보고서, 이슈페이퍼의 배포 시 전략적인 배포를 통해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전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후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는데 국한되어 있으므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를 한 후 관련성과를 분석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14편(145.94건/128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전체 학술지에서 국제학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국제학술지 게재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음.

II 경영 분야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주요기능과 연계하여 환경변화 이슈를 적절하게 도출함.
 - 국토지식 공유 필요성 증대, 한국의 국토발전 경험과 지식의 개도국 전수, 국토 계획평가센터 활성화를 통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국토 관련 각종 계획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센터 활성화
- 국민공감의 성과확산을 위해 대외협력팀을 활용하고, 개도국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기능을 확대함.
- GDPC(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기능 확장을 통하여, 국토개발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교육·연수(개도국 공무원/전문가 22국가, 168인 교육) 실적은 우수함.
- 최종합격자 전형위원 8인 중 주니어(박사 입사 후 2년 이상자) 4인을 포함하는 것은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인재 채용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사례임.
- 해외 체류 중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연구발표·면접 대상자를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는 등 인재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해외 체류자 2인 합격).
- 연구브랜드별 자연감소, 업무량 분석, 인력의 활용실태, 향후 중점추진방향에 기초하여 우수인력 4명을 확보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견 연구인력 14인으로 구성된 Recruiting Committee를 운영함(1명 채용).
- 신규 박사인력에게 정책연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하여 조직 적응을 유도하고, 핵심 연구 인력에게 몰입연구 기회를 제공하며, 경력 및 사회적 형평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연봉 가산제도를 운용함.

<단 점>

- 환경분석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 요인이 다소 미흡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함.

- 조직운영 성과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가 구체적이지 못함.
- 주요 기능과 연계하여 외부고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하지 못하였으며, 고객 요구 사항의 도출과정,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고 일상적인 행정업무 처리 수준임.
- 정책고객과의 소통채널,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건의·제안, 연구성과물 배포의 한계 극복, 개발컨설팅 및 개발협력사업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
- 제시한 조직운영, 고객요구 부응 실적의 타당성 및 효과가 추상적임에 따라 우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은 있으나, 직무분석, 기능과 연계한 사업 분석, 인력구조 분석에 근거하고 있지 못함.
- 관리직 등 비연구직 비율은 정부평가기준(전체인력의 30%)에 현저히 부족하여 조직관리·운영 측면에서 충원 등 인력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안 수립 등 노력한 실적이 없음.
-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당해 연도 인력운영계획 수립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GDPC(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에서 수행한 개도국 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연수 성과가 일방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전략 및 정책 개발 수행이 필요함.
- SWOT분석의 결과와 경영목표 및 실천과제 등이 환경 변화로 제시된 요인들과 연계하여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발전방향, 제안사항 등의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심사과정에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는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인적성검사의 도입이 필요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당해연도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인력수급계획의 작성 노력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분야별로 ‘KRIHS 브랜드’ 육성방안을 마련함.

- 해외교육훈련, 안식월, 국내 석·박사과정 지원, 자비 해외유학 등 사기진작제도를 운영함.
- 교육수요조사 및 2012년도 결과분석에 기초하여 2013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함.
-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OECD 등 국내·외 기관에 파견함(9명).
- 직무교육, 윤리교육 등을 연구직 및 비연구직에 맞게 개발하여 운영함.
- 교육훈련과정 및 실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인트라넷에 공지하여 전 직원이 공유함.
- 교육 미수자에 대하여 교육비를 환수함(1명).
- 교육훈련 결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3회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음.

〈단 점〉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은 있으나, 직무분석, 기능과 연계한 사업분석, 인력구조 분석은 반영되지 못함.
- 직무분석, 기능과 연계한 사업 분석, 인력구조 분석에 근거한 체계적인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영 계획 없이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 전문분야별 ‘스타연구원’ 육성, 평생교육을 위한 구체적 교육프로그램 및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함.
- 안식월 제도는 있으나 시행 실적이 없음.
-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최장 5년 간 휴직을 통한 자비 유학을 허용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복직한 경우에는 승진, 보수에서 우대하는 제도(2013년 6인)는 유학을 가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역차별적인 비합리적 제도임.
- 구성원 역량강화 실적에서 제시한 연구원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역량강화와 무관함.
-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임에도 특별한 직원 사기진작책이 없음.
- 교육훈련성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환류체계가 미흡함.
- 연수, 특별강연 등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 비연구직 훈련비 비율이 4.8%이고 교육 인원이 5명에 불과하여, 비연구직 역량강화 노력으로는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과 연계되는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3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5년 간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는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인력의 공백으로 인한 조직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연구직의 교육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보직자/비보직자, 연구직/비연구직의 차별화된 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실적보고를 통하여 달성도를 평가함.
- 비연구직 업무성과평가는 목표관리 중심으로 평가하며 배점 기준을 계량화함.
- 평가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평가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술지 논문게재에 대한 인센티브 마일리지를 부여함.
- 평가제도개선위원회TF를 통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개최함.
- 연구직 성과평가는 16등급으로 차등화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고, 비연구직은 목표대비 실적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여 평가에 대한 수용도를 높임(근무성적평정규칙 16조).
- 신규 근무자, 휴직자, 파견자, 교육훈련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평가대상기간 중 1/2미만 근무자도 평정대상에서 제외됨.
- 성과연봉 산정 시 평가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함.
- 승진 후보자 추천은 근무성적 점수를 100% 반영하고, 전 3년 간 근무성적이 B-이상을 2회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심사함.
- 재임용 시 3년 마다 평가하여 C등급 이하는 계약기간 6개월 감축하고, 국내·외 교육연수 대상자 선정(10인 포상)에 업적평가 결과를 활용함(서면경고 5인, 6개월 감축 2인).

<단 점>

- 역량평가 비중이 전체 업적평가의 30~80%를 차지하고 있음.
- 직원 평가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실적 중 “특정인에 대한 연구의존으로 과도한 연구 부담이 소수에게 장기적으로 지속”, “상호 불신과 무사안일 등 조직문화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와 연구원의 장기적인 발전 저해”를 실태 및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전반적으로 개인평가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냄.
- 성과 미흡자를 유희인력으로 지칭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평가 시행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지 않음.
- 직전 3년 간 근무성적 B- 이상(중간 미만등급)을 2회 받은 자를 승진심사대상 기준으로 정한 것은 하향평준화된 제도임.
- 연구직본부장과 기획경영본부장의 상호평가는 평가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 게재 논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제도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역량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 성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임금협상 진행을 위하여 임금교섭 및 수시 설득 등의 노력을 진행 중임.
- 2013년도 인건비 현황을 전 직원에게 4회에 걸쳐 설명하는 등 노사갈등 관리 노력
- 노사 간 수시대화 창구운영 실적이 33회로 활성화되어 있음.
- 노·노 간 갈등상황 속에서 사용자로서의 갈등관리노력을 수행함.
- 다양한 채널의 노사간담회를 운영하였음.
- 노무관리자 교육의 내용을 전직원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수행함.
- 6회에 걸친 노사간담회, 다수의 수시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짐.

〈단 점〉

- 복수노조 상호간의 대화단절로 노사관계 갈등관리가 어려움.
- 갈등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임금협상에 실패한 한계를 가짐.
- 노사 간 갈등 상황임에도 노무역량 강화를 위한 2회의 노무담당자교육과 2회의 일반관리자 교육은 다소 미흡함.
-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못하여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
- 2001년 1월 30일자 이면노사합의(노동조합원의 희망기간과 다른 재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2/3 찬성요건 요)가 여전히 존재함.
- 단체협약 제10조 조합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고정해 놓은 것은 적정하지 아니함.

- 단체협약상 국내 석·박사과정 학자금 일부 보조, 유족보상금액의 적정성 검토 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사 간 대화를 통하여 임금협약의 타결이 필요함.
- 노사 간 갈등상황이므로 노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복수 노조 체제에서 계속적인 노사 갈등 및 해결노력이 필요함.
- 2001년 1월 30일자 이면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노사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노·노 간 갈등해결을 주도하여 노사협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고충처리제도, 업무소리함 등의 하의상달, 구성원 요구해결을 위한 제도를 체계화하여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연구사업비 편성에 있어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는 2,389백만원,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는 1,817백만원으로 76.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83.4%로 편성되어 있어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18.1%(432백만원), 2014년 25.9%(570백만원)로 연구회 제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3년 기본연구사업비 중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이 10.7%로 평가기준(10~20%이내)을 준수함.
- 2013년에는 23건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수시연구과제 중 전액 위탁 용역으로 수행된 과제는 없음.
- 2013년 입사자에 대해서도 월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추계하여 적립하고 있는 등 회계기준에 따라 필요한 소요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충분하게 적립하고 있음.

- 정규직 퇴직금의 적립은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적립되고 있고, 퇴직예치금은 일반운영 자금과 구분되어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에금 및 MMDA 등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1.3%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2,994백만원)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40백만원)을 우선 적립하고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 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2011년부터 능률성과급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였으며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구분·운영하고 있으므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함.
-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29.5%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유아보육비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책정방식을 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 기본연봉의 등급별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 기준이 없는 상태로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하도록 기본연봉은 누적식으로 책정하고 기타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는 영유아 수당은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기본연봉의 등급별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을 평가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비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15\%$ 의 차이가 나도록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하였으므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을 준수함.
- 2013년의 경우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

〈단 점〉

- 간부직의 경우 성과연봉의 차등지급을 관련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이상의 인원을 배분하여야 하는 평가기준을 미준수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간부직의 성과연봉 차등지급율과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을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5건의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함.
- 2012년 결산잉여금 처분지침을 초과 집행한 부족인건비에 대하여 향후 5년 간 분할하여 적립하도록 조치 완료함.
- 총인건비 규모 및 연봉 인상률은 정부기준을 준수함.
- 결산잉여금 처분 적정성 개선되고 성과연봉 지급기준이 개선됨.
-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급제도 도입하고, 1년 이상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해소함.
- 홈페이지 자료실 정보제공 기능 개선 및 관련 학회와의 간담회 및 협력 구축함.

〈단 점〉

- 자체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이 주로 TF 형태로 이루어져 전사적 차원에서 의견 수렴이 미흡함.
- 평가결과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의 구성에 구성원의 공유 및 의견수렴 과정이 구체화되지 못하는 등 전년도 지적사항(전년도 지적사항 “주요 보직자를 중심으로 개선계획이 추진되어 직원의 공유 및 의견수렴절차 미흡”)은 개선되지 못함.
- 수입구조 다변화 등 예산관리 강화방안 추진 실적이 미약함.
-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 실적이 부족함.
- 전년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비연구직 평가지표 계량화 노력에 대한 실적이 없음.
-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사내제안활성화방안의 강구에 대한 개선실적제시가 “활발한 제안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으로 제시되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 개선과제에 대한 개선실적이 모호하여 완료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 개선이 기관발전에 기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 추진 중인 있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평가결과 개선체계의 구성에 있어 개선결과가 다음연도의 경영에 반영되면서, 전 직원의 공유 및 의견수렴 등 구성원 전체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개선환류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
- 구체적 예산관리 강화방안과 조직운영 체계개선, 비연구직 평가지표 계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채용공고, 서류 및 면접 전형 시 장애인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관 방문 등 기초적인 노력은 하고 있으나(12월에 1명 고용), 장애인 고용실적이 1.6%에 해당하는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12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1.3%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거의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대책회의, 관련 단체 방문 등).
- 장애인고용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이 계획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100%달성), 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 공고 및 충원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청년인턴 자격요건을 준수하여 채용하고 있고, 청년인턴제 운영계획, 오리엔테이션 실시, 청년인턴근무평정 실시, 고충해결 프로그램 운영(간담회 개최 등), 인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과 지원체계가 양호하며, 청년인턴 10명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음.
- 청년인턴제 운영 및 이행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 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을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공고 시 우대조치, 가산점 표기)을 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고용을 위한 추천요청을 2회 실시하였고, 1명을 채용한 실적이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이 5.4%로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위촉직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보수(27조)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 수당 복리 후생에 대한 근거 규정도 존재함.
- 직원 복지 분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전혀 없지만, 임금 부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다소 존재함.
- 위촉직원 간담회를 통한 차별해소 노력과 위촉직 45인 면담카드 작성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
- 연구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들은 존재하지만, 구체성에 있어 다소 미흡함.
- 향후 기관의 ‘경영목표 연도별 실행계획’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조치를 분명히 명기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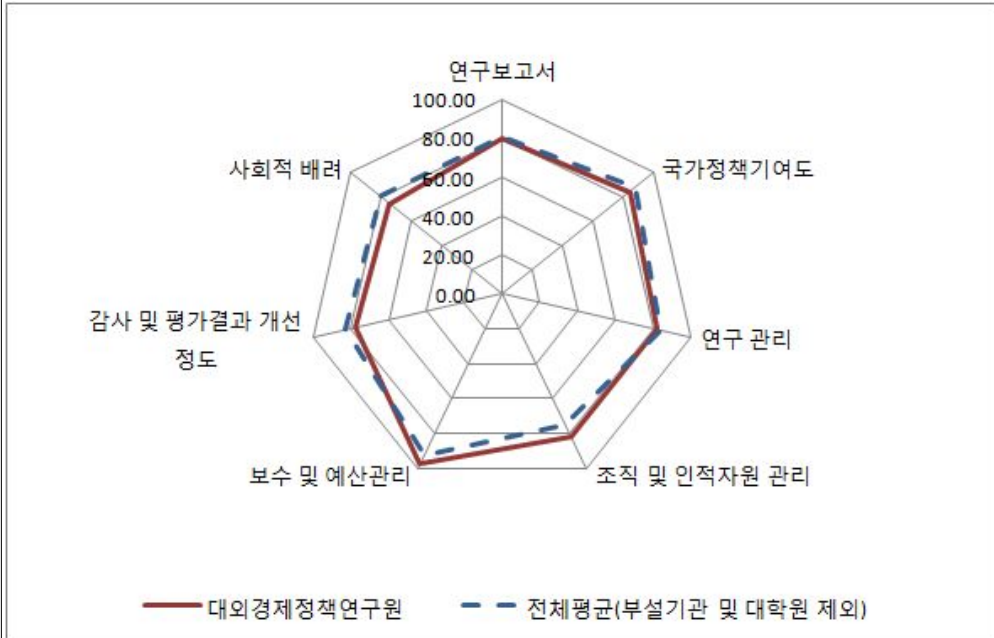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E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B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C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 | | | |
| | | |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S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A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시의성있는 대외 경제 현안에 대한 실증연구를 확충하였으며, 글로벌 서비스 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도 균형있는 연구를 심화할 필요가 있음.
- 대외경제 현안, 특히 신흥 개도국 관련 이슈에 대한 시의성있는 정책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며, 정부의 대외 경제협력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함.
- 대외 지역연구의 확충은 바람직하지만 다른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차별적인 연구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노력이 필요함.
- 「발굴 - 검토 및 수요검증 - 심의」의 3단계의 발굴 및 선정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과제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수시연구과제의 경우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등록이 지연되는 등 과제관리 노력이 다소 미흡함.
- 산·학·연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사업 유형별 단계별 추진체계 및 추진내용이 잘 규정되어 있으며,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원에 대한 10~40점의 인센티브 제도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 협동연구 추진과 과제발굴을 위한 외부 수요조사 노력이 다소 미흡하고, 협동연구 과제 발굴 및 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가 풀(Pool) 구성은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적 구성이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평가체계의 구성 배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외부평가위원 풀(Pool)의 선정과 구성을 확대 및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전공·분야별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2012년 홍보업무 만족도조사와 기관평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이나, 홍보·확산 계획에 성과지표와 성과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홍보·확산 실적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기존의 업무를 재분류한 것에 가까워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경영 분야]

-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차별화된 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실적보고를 통하여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직과 비연구직에 차별화된 평가요소와 반영비율을 연구직은 연구실적에 비연구직은 근무태도평가에 높은 가중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비연구직의 정량평가 비중은 20%에 미달하고 있으며, 정량평가항목도 보안관리 실적, 교육 실적, 제안실적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 의견수렴통로가 다원화되어 있고 제안접수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어 의결사항과 협의사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은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2013년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에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지 않는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소요되는 금액을 분기별로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고, 적립계좌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퇴직연금 등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과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이 기준에 맞지 않는 단점이 있음.
- 기본적인 평가결과 개선체계를 갖추고 내부 포털의 실시간 감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연구직 계량평가를 실시한 실적이 돋보였으나 평가결과 개선절차에 구성원의 참여가 강화되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
- 2013년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은 0.99%로 평가기준(2.5%)과는 다소 격차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기관차원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청년인턴제 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지만, 멘토링, 고충해결, 오리엔테이션 교재 작성 분야에서 이행 수준이 다소 부실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은 2.8%로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연구원 차원의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비정규직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복지, 복무 및 임금 분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이가 없음.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연구범위 설정이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양적·질적 분석이 균형을 이루어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력이 우수함.
-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심층 면담 등 최근 유용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함.
- 우리나라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 아세안간 분업구조 변화는 필연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무역 전략 변화를 시의성있게 선행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함.
-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할 태평양 동맹 체제를 다자적 관계의 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대외경제 정책 수립에 기여함.

<단 점>

- 일부 보고서에서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활용이 각 장의 논리적 연관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전반적인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해 질 수 있음.
- 한일 통상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개선방향 관련 일본의 투자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다소 미진함.
- 연구대상이 다수/다단계인 경우 개별 대상의 비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각각의 항목에 특정국가 특정산업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서술은 축약되는 경우가 있음.
-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분석이 제조업에 치우치고 있어, 서비스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CGE모형의 경우처럼 분석의 정교화를 위한 통계 기법의 사용은 고무적이나 정책 수요자와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모형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야 함.

- 산업계와의 면담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현황과 현장감을 감안한 정책 대안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제 분석에 있어서 서비스 분야,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균형있는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연구원 본연의 핵심적 국정과제인 FTA(Free Trade Agreement)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등 국정과제 수행에서 있어서의 연구역량을 평가할 수 있음.
-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주요협의체 정례 참석, 동아시아FTA 연구지원단 구성 등 정부수요에 부응하여 시의 적절하게 대응함.
- FTA분야에 대해 국내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한·중 FTA를 비롯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한·EU 및 한·터키, 한·인도네시아 FTA,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각료회담 등 정부의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
- 주요 국정과제인 FTA 및 신흥시장진출, 기후변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관련 연구의 독자성이 인정되며 국제협상에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함.

<단 점>

- 본연의 기본연구 수행 보다는 사업 위주, 중·장기 전략연구보다는 단기과제 위주의 연구에 자원을 배분하고 있음. 연구원의 본연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과제에 충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각종 지역연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산업연구원 등과의 연구주제에 있어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협상단 및 사업단 등 연구기관의 본연의 업무와는 상이한 사업 등에 다수 참여하고 있음.
- 산업자원 협력강화 주제들은 당 연구기관이 타 연구기관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하나, 산업연구원과 연구 영역이 상당 부분 중복됨.

- 동아시아FTA 연구지원단은 경제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정치·외교적 고려도 긴요하나, 관련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함.
- 선제적 대응보다는 현황파악 및 정리위주로 진행한 것으로 보여 정책적 대안제시가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제경제실 및 국제금융실의 역할과 기본사업 비중을 높여 연구원 본연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국제거시금융 및 무역정책 등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연구원 본연의 연구로서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연구역량의 제고를 권고함.
- 부처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여, 기관 본연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출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연구수행 체계를 단계적으로 제시한 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과제의 상당부분이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자문 및 발표, 대통령 해외순방에 필요한 과제 발굴 등 현안에 대한 즉시 대응하는 형태가 많은바 자칫 기본과제 수행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기본과제와 즉시대응과제 간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음.
- 지역연구는 산업연구원 등과 협동연구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정부현안과제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발표하고 있어 국가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도움주고 있으며, 다양한 현안과 정부의 국정과제 전략에 부합하는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이 보임.
- 「동아시아 FTA 연구지원단」을 발족하고 TPP 분과 및 한·중 FTA 분과를 운영하는 등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즉각 대응해 정부 정책수립에 기여함.
- VIP 유럽순방 시 청와대 요구에 대응해 경제협력 의제 발굴, EU, 프랑스, 영국, 벨기에와의 경제협력가능 이슈 등에 관한 정책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수시요청에 적절히 대응함.

〈단 점〉

- 선제적 대응으로 발표한 과제들이 대부분 국가기관의 긴급 및 수시요청에 대응하는

과제로 판단됨.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국제금융 및 국제무역 패턴 등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선제적 대응과제의 로드맵과 비전이 미약함. 즉, 과제수행이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몇몇 현안에 대한 대응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응방안이 단편적 시사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신흥국의 경제현안에 과도할 정도로 치우친 점이 있어, 국제거시금융 및 무역정책 분야 등의 본연의 연구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수탁연구과제가 기본연구과제 및 일반연구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연구원 본연의 연구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 선제적 대응보다 정부가 발주한 현안과제 위주로 대응하는 측면이 더 많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대표사례가 현안과제에 집중되고 있어 기본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즉, 선제적 대응과제의 중·단기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하고 주제별로 구분하여 선제적 대응연구 수행을 권고함.
- 정부의 현안과제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연구원 본연의 업무가 저해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음. 긴급 및 수시요청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기초연구 및 중·장기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본연구과제 수행의 비중을 높이고 자원의 배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의 핵심경쟁력은 장기적 시각에서 추진된 자체적인 선도과제가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나, 현안에 매달려 진정한 선제적 대응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선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정부현안과제, 국가긴급 및 수시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정부기관의 수시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연구원 나름의 차별화된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고, 차별화된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원 차원의 자체 평가와 방향성에 대한 환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함.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통상정책 등에 관해 청와대 서면보고 및 직접보고 수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연구 및 정책실무협의회에 참여하고 국회에 자문을 하는 등 활발하게 협력이 이루어짐.
- 다양한 학회 및 국내·외 기관과 정책연구네트워크 활동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협동 및 융·복합 연구가 이루어짐.

- 지역전문가 풀(pool) 제도 등 연구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갖추고 지역적 다양성을 가진 연구를 진행하며, 주요 국제학 전문대학원과의 공동지역연구를 실시함.
- 강좌운영, 해외연구 및 인턴십, 장학금, 지역연구지원금 지원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단 점〉

- 특정분야 특정지역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쏠림 현상이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의 협력 내용이 회의참석 및 협의 정도에 그치고 있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는 작용하지 않아, 연구자료를 넘어서 정책화 과정에 뚜렷한 결과가 미약함.
- FTA 관련 이슈 및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국회와의 접촉빈도나 국회주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특히 FTA 관련하여 민간 부분과의 연계관계가 부족하고, FTA 등 통상연구는 업계 및 여타 산업관련 연구 기관과의 정례 네트워크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KOTRA 외에 관련 협의메커니즘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유관 정부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협력체계의 내실화가 요구되며, 특히 국회에 대한 협력정도가 약해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의 성격상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나, MOU 체결이나 세미나 관련 보고서 발간 등 일반적인 제안보다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보다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낼 필요가 있음.
- FTA 관련이슈 및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국회주관 세미나 등과 같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정책방향, 현실진단, 무역대국으로서의 무역확대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으며, FTA 관련 민간협회, 민간이해관계기관과의 연계관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대외경제연구원의 특성을 살려 해외 정책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고, KEI 등 해외사무소 활용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고, 국외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신흥시장, 미, 일, EU 등 주요국 및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세미나 개최 및 외국기관과의 MOU 등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연구 기관으로서의 역량강화가 요구되며, 역량강화를 위한 외국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학회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연구의 일부를 발표하고, 많은 경우 전문가 간담회 등에 자문 및 발표 등을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하고, 후속 심층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함.
- 각 연구과제에서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 각종 정부정책에 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정책 담당자와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구체적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
- 새 정부의 통상 로드맵 수립에 참여하여 정부 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 연구원의 연구진이 정부와 연구원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착수로 초안 작성 등 처음부터 정책화 과정을 함께 진행해 가고 있음.
- 각종 FTA 협상 대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협상방안을 마련하였고, 투자협정 및 각종 통상정책 및 타 정부의 인력송출 정책 등에 연구원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이 실현되었으며, 통상정책 등의 법령 개정에도 연구진의 의견이 반영되었음.

〈단 점〉

- 각종 전략 제시 및 논의 실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정책화 과정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있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과 정책화 실적이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많음.
- 해당 연구가 향후 이루어진 각종 정책 계획 및 로드맵과 비슷하다고 해서 정책화 실적으로 보기 어려움.
- 각 연구의 정책화 과정에서 각종 회의 및 학회 발표에 그친 경우가 비교적 많았고, 부처와의 협력 내지 실질적 협의 과정 미약한 경우 많으며, 연구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음.
- 실적으로 내세운 각종 반영된 내용들이 정책 협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당 연구에 의한 정책화 실적으로 보기 어려움.
- 기술한 파급효과 내용 등이 해당 연구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밝히고 있지 않아 기술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산업통상자원부와 초기부터 로드맵을 작성하여 정책화 과정을 순조로웠으나, 한편으로 정부안에 비해 자율적인 의견 개진이 쉽지 않았을 위험이 상존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대안 및 정책화 과정 등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고, 정책대안과 연계되는 정책화 실적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연구진 의견의 실질적인 반영 여부 및 경제적·행정적 파급효과 등).
- 해당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이루어진 정책화 실적으로 판단되는 정책들을 열거하기보다, 직접적으로 정책화 과정에의 참여 및 정책으로의 채택이 필요하고, 해당 연구만을 통한 실적으로 보기에선 개연성이 큰 연구과제가 많아 해당 연구에 의한 실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각 연구과제에서 제시한 전략 수립 안건 중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담당부처와 협력하되 개별적으로 로드맵을 작성하여 일대일로 협의해 나가거나, 연구원은 가급적 로드맵을 이루는 기본구조 및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실적이 정책협의 등을 통한 정책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화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상대적으로 일반의 관심이 덜한 국제공유지에 대한 관심 환기시켰고, 세 개의 주요한 국제 공유지에 대한 포괄적 연구로 우리나라가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를 선도적으로 선정하였으며, 타 연구기관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주제로 필요한 주제를 선도적으로 쟁점화하고 있음.
- 심해저, 남극, 우주 등 국제 공유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정책 대안 제시. 국제기구 등에서 어떠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지를 제시함.
- 인류공동유산 개념의 적용 정도를 공유지별로 살펴보고 주요국의 공유지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 국제 공유지에 대한 국가 간 연구 및 협력 증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기후재원 조성 논의에 적극 참여, 조성된 재원이 GCF에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있음.

〈단 점〉

- 연구원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선도과제로 당 과제의 성격이 미흡하며, 연구 자체가 독창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제시된 정책의 실현 정도가 제시된 정책 대안과의 연계 정도가 불명확하며, GCF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각국 간 협력체계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함.

- 선도적 연구과제 제시를 통한 쟁점화는 우수하나, ‘국제 공유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에서 세 개의 공유지에 대한 타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 및 협의가 없어 연구의 깊이와 폭이 제한적임.
- 각종 정책대안과 관련하여 타 연구기관과 협력연구가 미흡하여, 정책의 실현성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한국 주도의 지역우주협력체 창설도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경쟁력을 가짐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

〈개선 및 권의사항〉

- 연구원 고유의 국제금융 및 국제무역 분야에서 선도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타 연구기관과 차별화되는 연구선정 및 연구범위를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실현 정도는 정책대안과 연계가 어려운 면이 있음. 예를 들어 GCF가 향후 기후문제로 인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갈등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등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전망과 역량이 불투명하므로,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거버넌스 분야,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국제공유지 활용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 수행에서 향후 타 연구기관 즉, 항공 우주연구원, 극지 세종연구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등과 연구과제에 대한 협력연구가 필요함.
- 정책연구 수행 시 타 연구기관과 협동연구가 미흡하므로, 협동연구를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장 점〉

- 신흥시장국가들의 유력연구기관에 속한 해외방문학자를 지속적으로 초청하여 학문적 교류를 함으로써 유대 강화와 함께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 개발이 가능함.
-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와 수시 협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도 TF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계량적인 종합평가방법으로 국제행사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수행하고 있음.

〈단 점〉

- KIEP가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연구 및 조사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인적자원 교류와 관련하여 세계지역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타 기관과의 협력이 있으나 충분하지 못함.
- 주무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및 국무조정실 등 정부회의에 참석을 통해 사업결과물의 품질제고 개선에 노력하고 있어 환류가 충분하다고 자평할 수 있으나, 주무부처 뿐만 아니라 국제행사 타당성에 대한 행사주최자로부터의 환류는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전문인력의 상시 고용 확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당 사업을 전문적으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요구됨.
- 객관적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과 타당성 조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함.
- 세계지역 연구네트워크 강화사업은 KOICA와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집행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요구되며, KOICA 및 KOTRA 등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소폭 하락함. 상세업무별 결과 교육훈련서비스에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기본연구에서 소폭 상승함. 상세 업무별로는 정보제공서비스가 가장 높고, 기본연구, 수탁연구, 교육훈련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차이가 크지 않으나, 교육훈련서비스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남.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낮았으며, ‘편리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보였고, 특히 ‘준비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모든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낮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확히 이해’가 높은 반면,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성과확산) 노력’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을 정확히 이해’ 항목이 높은 반면, ‘연구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비’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교육훈련서비스의 경우 ‘강사진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교육 참여를 통해 관련분야 정보 획득’ 등의 항목이 높은 반면, ‘고객의 요구사항 반영 창구 또는 제도·시스템 구비’ 항목이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활동 및 정책발전에 기여’ 항목이 높은 반면, ‘해당 분야의 최신 정보 제공’ 항목이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보를 활용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고객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 연구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 수립 및 동기부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하락함. 상세업무별 결과 기본연구, 위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수탁연구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 상세 업무유형별로는 위탁연구가 가장 높고, 기본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수탁연구, 교육훈련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기본연구, 위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수탁연구와 교육훈련서비스는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특히, 수탁연구와 교육훈련서비스 모두 전체평균 대비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요인 및 요소가 전년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구비성’, ‘편리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크게 나타남.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준비성’, ‘구비성’,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특히 ‘전문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구비성’, ‘편리성’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수탁연구, 교육훈련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대부분 세부항목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성과확산) 노력’, ‘해당분야의 최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 제공’,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 보유’가 높은 반면,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 및 반영절차 구비’, ‘연구와 관련된 정보제공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비’의 항목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한편 위탁연구 경우 대부분의 세부항목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과제 수행을 위한 계약서 등 관련 서류작성 및 업무처리 적절’, ‘위탁연구자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 ‘연구수행 정도를 공유하는 기회 적절히 활용’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교육훈련서비스의 경우 ‘쾌적한 교육훈련시설 및 편의시설 구비’ 항목이 높은 반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창구 또는 제도·시스템 구비’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해당 분야의 연구활동 및 정책발전에 기여’ 항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제공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 ‘정보이용 관련 고객의견 접수 편리’ 항목이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보 제공자의 입장이 아닌 정보를 활용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고객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발굴 - 검토 및 수요검증 - 심의」의 3단계의 발굴 및 선정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외부의견 수렴사항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음.
-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적절하게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과제를 합리적으로 선정함.

〈단 점〉

- 기본연구과제 발굴을 위하여 외부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부의견 수렴도가 90%를 넘고 있어, 내부 제안과제의 비중이 다소 적음.
-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을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점검하고 있으나, 중복여부를 체크하는 장치가 부재하여 한계가 있음.
- 과제 선정 절차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내·외부 심의위원들의 심의과정과 결과 반영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과제 선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내부 연구진들의 과제개발 노력이 더욱 필요함.
- 한국학술정보 (KISS) 등을 활용한 과제 중복성에 대한 검토 장치 도입이 필요함.
-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과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함.
- 과제 중복성 점검을 위한 객관적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시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음(상·하반기 총 153건 발굴).
- 수시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과제수행 중간단계에서 심의가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적절하게 과제가 수행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 선정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이 적절치 않음.
- 과제가 종료되었음에도 결과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등록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연구결과의 심의위원 수와 외부 전문가 수에 관한 정해진 규칙이 없음.
- 최종 평가에서 연구결과의 질 문제로 발간형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과제 발굴 및 선정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제선정 절차와 선정 과정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과제 심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과제종료 즉시 결과보고서가 발간되고 파일이 홈페이지에 등록되도록 과제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함.
- 연구결과의 심의위원 수와 외부 전문가 수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하여야 함.
- 중간 점검 단계를 좀 더 보완하여 최종 연구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산·학·연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사업 유형별 단계별 추진체계 및 추진 내용이 잘 규정되어 있음.
- 협동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잘 확보됨.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원에 대한 10~40점의 인센티브 제도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제시된 5개의 산·학·연 협동연구의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이 비교적 잘 기술되어 있음.
- 외부의 광범위한 전문가들과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단 점〉

- 협동연구 추진과 과제발굴을 위한 외부 수요조사 노력이 다소 미흡함.
- 협동연구과제 발굴 및 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가 풀(Pool) 구성은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적 구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협동연구 과제 참여연구진의 담당역할이 피상적임(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사업 등).
- 원내 연구인력의 경우 참여연구진의 담당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음(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사업 등).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 추진과 과제에 대한 외부 발굴노력 실적이 요구되고, 협동연구 관련 전문가 풀(Pool) 구성 시 인적구성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원내 연구인력의 경우 참여연구진의 담당역할과 수행업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체계에 관련된 규정과 제도화를 구축하고, 5단계(A·B·C·D·E)로 세분화하여 평가가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평가체계의 평가표의 구성항목 및 항목별 배점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평가단계에 따라 평가담당자, 평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평가가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연구수행단계별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하고, 연구완료 이후 정량적 평가를 통한 체계적으로 연구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함.
- 3배수 추천 및 선정을 통하여 평가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
- 자체평가결과 관련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운영 및 피드백에 관한 제도화를 함.
-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의 풀(Pool)을 전공분야에 따라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있음.
- 평가위원의 평가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사례비 증액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평가자를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단 점〉

- 외부평가위원 164명의 전공적합성을 100% 달성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포현황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평가위원 풀(Pool)의 소속기관별, 전공별 분포현황이 보다 구체적인 필요가 있음.
- 평가위원 풀(Pool)과 2013년 평가위원의 분포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여 향후 평가위원의 편향성 사전점검을 수행할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함.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련 내규’를 제정함.
-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출판물의 배포 및 발간에 대한 규정’ 등 적절히 갖추고 있음.
- KIEP 지식정보시스템과 경영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점은 긍정적임.
- 2012년 홍보업무만족도 조사와 기관평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였음.
-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한 후 추진전략별로 과제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임.
- 연구과제를 최근의 연구성과까지 모두 등록 완료하였으며, 발간과 동시에 등록한 점은 긍정적임.
- 신흥지역 정보 종합지식포털, 신흥지역 연구센터 웹사이트 등 전문 포털사이트의 구축은 긍정적임.
- 배포물에 대한 관리절차를 6단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체계적임.
- 다양한 DB사이트에 연구성과를 게시하고, 영문저널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해외 홍보를 한 점은 긍정적임.

〈단 점〉

- 2013년에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성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연구성과 관리·확산시스템의 효과분석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노력은 다소 부족함.
- 보다 다양한 신규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홍보·확산 계획에 성과지표와 성과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홍보·확산 실적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기존의 업무를 재분류한 것에 가까워 전략적 접근 노력이 미흡함.
- 성과확산 조직 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을 활용한 객관적인 성과가 미흡함.

- 홍보 조직이 2012년도와 별 차이가 없으며, 대내·외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함.
- 타겟별·특성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미흡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연구성과 확산 실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당기의 차별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있음.
- 발간물의 특성에 따른 최적 배포선을 구분하여 첨단시스템을 통해 배포한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미흡함.
- 이슈페이퍼의 발간 시기가 모두 2014년 1월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발간 시기를 분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에 대한 객관성 제고가 필요함.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전략적 활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성과지표의 활용을 권고함.
- 기록물관리지침 등 세부적인 지식재산 보호 규정을 더욱 폭넓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사이트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점은 긍정적이거나 이를 통해 얻은 개선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활동에 대한 계량적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적절한 단기목표를 설정하여 목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함.
-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연구원에 가장 효과적인 확산 수단을 선택하여 확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함.
- 채널별 연구성과 확산 실적을 전년대비 증감, 목표 대비 달성률 등을 통해 홍보 효과 우수 채널에 집중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채널이 일반적인 수준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홍보 계획은 다소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신흥지역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해외 부문 홍보 확산을 위한 노력은 전개되나 연구원 특성상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즉 KOTRA 등과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인 내용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배포한다고 하였으나, 2012년도 하였던 내용과 비슷하여 향상된 점을 찾기 어렵고, 2012년도에 이어 배포관리 절차 등을 두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실질적인 성과물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66편(71.74건/43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 경영 분야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주요 기능과 연계하여 연구 및 경영 환경변화 이슈를 적절히 도출하였음
 - (예시) 국정과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확대’ 추진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국제컨퍼런스 요구 확대, 한중일 FTA, TPP, RCEP 등 지역경제 통합의 급속한 부상에 따른 대응전략 요구 증대 등
- 거시경제분야TF 운영을 통하여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대통령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지원 및 후속조치를 주도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컨퍼런스TF 운영을 주도함.
-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채널 KINIS 제안방, KIEP 사랑방 등의 운영을 통하여 직원간 소통 활성화로 연구원의 화합 및 연구생산성 증가에 기여함.
- 우수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음.
- 국제거시금융 분야 및 전략연구 분야에서 중진급 연구인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연구자문위원 및 초청연구위원으로 초빙하여 활용하는 등 외부 전문가 활용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실적임.
- ASSA대회에 참가하여 현지에서 24명을 인터뷰했으며, 이 중 4명의 박사급 인력 채용, 2008년 시작한 GPAS 사업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학생들 중 역량이 검증된 인재를 채용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엿보임.
- 효율적인 온라인 세미나 실시를 통해 연구정보의 확산에 기여하였고,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부정책 지원 및 신흥 경제권과의 협력을 강화함.
-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연구원의 화합을 증진하고, 건강진단 수검기관의 확대에 따른 직원들의 선택권한을 강화함.
- 인력 운용 상 박사급 인력 50% 이상, 비연구인력 30% 미만, 여성인력 40% 이상을 유지함.
- 직급·직종별 채용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고 채용 우대사례(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및 특별보상체계(항공료 및 이전비 지원, 전세자금대출 알선 등)를 구축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함.

- Two-track 방식의 인력확보(인력채용 및 중·장기적 인력양성제도)제도를 구축하여 우수연구인력을 채용함.

〈단 점〉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주요 기능과 연계한 외부고객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고객요구사항의 출처가 불명확함.
- 조직 및 제도 운영 성과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직무분석, 기능과 연계한 사업 분석, 인력구조 분석에 근거한 체계적인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영 계획 없이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당해 연도 인력운영계획 수립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을 핵심 이슈와 연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운영의 타당성, 효과 및 성과를 객관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관 특성상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확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기관의 비전과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강화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정례적 프로그램에 따라 2013년 총 236건의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을 지원함.
-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파견훈련제도, 업무배양연수(6개월) 등 정례적 프로그램과 우수업적에 대한 성과보상 등 보상체계를 운영함.

- 선택적복지제도 및 종합건강검진과 자율학술모임 및 동호회모임을 지원함.
- 연구직과 지원직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함.
- 교육기획-시행-평가-결과공유의 흐름에 따라 교육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교육결과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환류를 활성화함.

〈단 점〉

- 중·장기 및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서 상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부실함.
- 정기출강제도, 학위과정 이수제도, 외부교육참가지원, 노사협력탁구대회 등을 구성원 사기진작책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함.
- 구성원 역량강화 실적이 구체적이지 못함.
-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미흡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 교육훈련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과 연계되는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
- 교육훈련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비보직자가 보직자를 평가하는 ‘상향평가’, 연구직이 지원직 부서를 평가하는 ‘단위 평가’와 지원직 개인을 평가하는 ‘고객평가’로 구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정밀성을 확보함.
- 연구보고서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실적은 우수함.

- 연구보고서 평가위원 중 원내 위원은 16.3%, 원외 위원은 83.7%로 구성
- 모든 외부평가위원 대상 연고성을 배제하는 등 달성도를 100% 달성
- 연구책임자는 외부 위탁연구가 모과제에 반영된 내역과 비율에 대한 현황 자료를 연구조정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 반영비율을 결정
- 인사고관 및 업적평가에 대하여 정밀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연구직과 비연구직에 차별화된 평가요소를 구비하고,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을 연구직은 연구실적에 비연구직은 근무태도평가에 높은 가중치를 설정함.
- 중·장기, 단기, 연구행정, 연구관련사업 및 근무태도에 대한 세부평가지표를 계량화함.
- 인턴운용에 따른 급여공제문제, 대외활동 성과 실적 처리문제 등을 개선함.
- 연구직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에 대한 표창장,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 업적평가확정 전 본인 확인 및 결과 공개, 원외 기여도 현황에 대한 공정한 점검, 업적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평가절차 및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함(연구사업운영규칙, 근무평정세칙).
- 해외사무소 파견 근무, 휴직, 신입직원, 파견훈련, 업무연수 등 해당년도 근무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 평정 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결과 계량화를 통하여 연봉, 포상금 등 금전적 보상과 승진, 재임용, 교육연수 등 비금전적 보상을 실현함.
- 연구과제 실적 등 계량화된 성과평가에 기초하여 승진심사를 실시함.

〈단 점〉

- 비연구직의 정량평가 비중은 15%로서 20%에 미달하며, 정량평가항목도 보안관리 실적, 교육 실적, 제안 실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흡함.
- 직원 평가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은 연구조정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활동 과정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 정기심사 시 평가결과를 평점부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개선 및 건의사항〉

- 분기별로 연 4회 업적평가는 평가에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횟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직원의 핵심 업무에 대한 계량 평가가 필요함.
- 전사적인 관점에서 팀과 개인 간 성과를 연계하여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노무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적용함.
- 사내 게시판에 노무정보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 구성원들간에 노무지식을 공유하고 있음.
- 성과연봉비중 변경, 복무제도, 퇴직금 적립제도 등 중요 이슈에 대하여 제도개선 위원회와 노사 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음.
- 수시/정기 의견수렴창구인 KEB사랑방, BK모임, 옴부즈만, 기관장주관 간담회 처리 결과의 피드백 절차가 기시행, 즉시시행, 실행가능, 실행불가능(예산부족, 세종시 추진 등) 등으로 명확히 분류되어 있음.
- 의견 수렴 통로가 전 직원을 부서, 직급 구분 없이 그룹화(사랑방 모임), 다른 부서 모임(BK) 등 다원화되어 있음.
- 인트라넷 제안방(48건), BK모임(42건), KIEP사랑방(228건)을 통한 제안 접수가 활성화되어 있음.
- 4회의 노무담당자교육과 3회의 일반관리자 교육을 실시함.
- 9회에 걸친 내부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소통활성화에 노력함.
- 노사간담회 10회, 옴부즈만 제도, 인트라넷 제안방 등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를 갖추고자 노력함.
- 4회 공식적 노사협의회를 개최함.
- 고충처리절차가 상대적으로 타 기관에 비해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음.

〈단 점〉

- 고과평정지침 개정,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연봉계약기준 등 협의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운영함으로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 운영실적의 기술에 있어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이 혼동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어 의결사항과 협의사항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인트라넷 제안방, BK모임, KIEP사랑방을 통한 ‘제안’과 ‘고충’을 분리·운용할 필요가 있음.
- 노사협의회와 제도개선위원회가 갈등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노사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

- 9회의 걸친 설문조사 중 매년 반복 및 중복되는 것은 통합정례화하여 구성원들의 설문조사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와 2014년도 기본연구사업비에서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6% 및 76%로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율에 있어서도 2013년 10.9% 및 2014년 10.8%로 연구회가 제시한 평가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2013년에는 22건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예산집행률은 84.5%로 비교적 양호하며, 전액 위탁용역으로 수행된 과제는 없음.
- 수시연구과제는 모두 10백만원 이하이고 대부분 6개월 이하의 연구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 없이 회의비, 인쇄비 등으로 집행하여 적정함.
- 퇴직급여충당금은 1/12(8.3%) 기준을 따라 필요한 소요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였으며, 분기별로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음.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운영 자금과 구분되어 독립된 별도의 계좌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퇴직연금 등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10.2%(225백만원)로 연구회 제시기준(10~20% 범위 내)을 준수하고 있으나, 2013년에는 7.6%(147백만원)으로 연구회 제시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권의사항〉

- 정부부처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수시연구사업비 예산을 연구회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2013년 10월에 당기에 배정된 수시연구사업비 예산에 상당하는 과제를 확정하였으나, 연도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3.5%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은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실적 미달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직무급 포함),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연봉편성체계가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기본연봉에 대하여 전년도 평가결과가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 연봉제를 적용·실시하고 있으며 등급별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pm 1\%$ 로 표준지침에 부합됨.
-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30%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성과연봉 비중 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 최저등급에 대하여 10%미만의 인원을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 산정 시 최저 등급에 대한 인원배분비율을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기준(10%이상)을 준수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간부직의 경우 성과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최저 $\pm 33\%$ 차등지급하였고, 비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15\%$ 차등지급하여 적정함.
-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이 각 10%이상이면서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함.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이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지급되도록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2013년의 경우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국회 정무위원회 지적사항 3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함.

-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개선방안 수립, 전 직원의 평가결과 최종안 공유, 평가개선위원회의 발족, 중요성·시의성·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와 추진시점을 선정하고 자체개선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체계를 갖추고 있음.
- 내부 포털을 이용한 실시간 감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 타 기관에 비하여 비연구직 계량평가를 실시한 실적이 돋보임.

〈단 점〉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항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절차가 미흡함.
- 평가결과에 대한 전 직원 공유방안에 구체적 실시방법이 모호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 중 연봉체계 개선과 장애인고용은 추진 중에 있어 개선되지 않음.
- 지적사항 개선에 대한 기술이 개선실적에 한정되어 있고, 구체화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지적사항 개선이 기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집행 부적정 지적사항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개선을 완료하여야 할 것임.
- 개선계획 추진실적 점검이 위원회(평가개선위원회, 경영위원회) 중심으로만 운용되고 있어 기관 고위 운영진의 관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 개선체계의 구성에 있어 개선결과가 다음연도의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인원배분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채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직원채용 시 장애인우대조치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가산점 부여 조항 및 실적이 있고, 2013년 3명의 장애인(경증 1명, 중증 1명)을 신규 채용한 실적이 있음.
- 그러나, 실제 장애인 고용실적은 0.99%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할 기관차원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대책회의, 계획수립, 관련기관 방문 등)이 필요함.
- 장애인 우대조치를 연구원 자체 규정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장애인 고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 목표율을 양호하게 달성하고 있으며(100%), 청년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이 적시에 잘 되고 있고, 청년인턴 1명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실적이 있으며, 청년인턴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활용한 점은 우수함.
- 청년인턴고용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인턴 근무관리, 교육지원, 취업활동 지원 분야에서 대체로 양호한 운영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멘토링, 고충해결, 오리엔테이션 교재 작성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행 수준이 다소 부실함. 멘토링 담당자를 지정 하였으나, 멘토링 프로그램 운용실적이 미흡하고, 고충해결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고충해결 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고충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인정됨.
-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고충처리 담당관 및 고충처리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멘토링 실제 이행 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을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고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가산점 부여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그 내용이 적정함.
- 국가유공자 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여, 신규 채용실적(2명)이 있음.
- 2013년 국가유공자 고용률은 2.8%로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함.
- 국가유공자 고용률 확보를 위한 일정한 노력이 보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함.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을 위한 기관장의 관심,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관방문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임금, 처우에 관한 연구원 차원의 독자적인 규정(기간제 계약직 직원 운용규칙)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함.
- 연구원 차원의 인력운용계획(안)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 복지, 복무 및 임금 분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이가 없음.

04

산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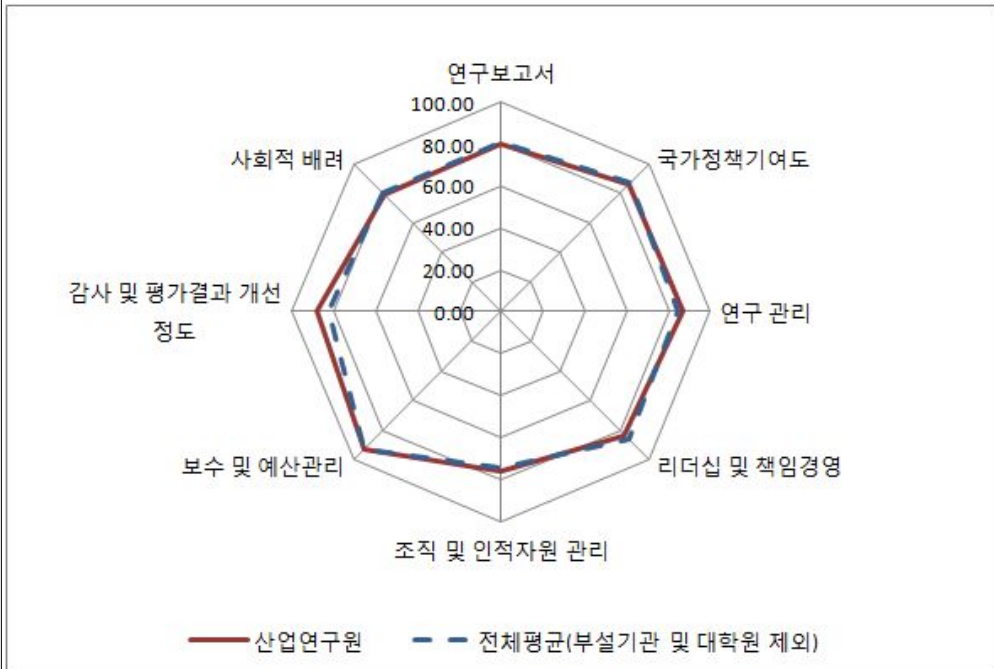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E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와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A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C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A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A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A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B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B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B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D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D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S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첨단화되고 융·복합화되고 있는 다양한 산업 부문별 정책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하였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전략 연구를 심도 있게 추진하였으며,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통합적인 선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탐구함.
- 산업 발전 흐름을 반영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산업 경쟁력 분석과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우수 연구제안과제 시상, 제안서별 정량평가, 중점연구과제 선정 등을 통해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외부인사의 평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일부 수시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길어 기본과제와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연구관리에 한계가 있음.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체계를 잘 구축하였고, 협동연구 과제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협동연구를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협동연구과제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한 외부참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과다한 과제를 제한하는 등 연구품질의 제고에 힘쓰고 있음.

- 협동연구 수행과제들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구체성과 가시적인 실적의 제안이 다소 미흡함.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부평가위원 풀의 선정과 구성을 확대 및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전공별 분야별 소속기관별 평가위원 구성의 노력이 필요함.
- 연구성과 해외 확산을 위해 20회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있음.

[경영 분야]

- 기관장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그리고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뛰어나나, 산업계와의 소통 및 연구 성과 전파 노력이 다소 부족함.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기관의 연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등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대내·외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윤리 경영을 위한 규정과 제도를 잘 갖추었음. 그러나 의견수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세계 유명 연구기관과의 연구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 경영에 대한 교육 및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의 적정성은 정책이슈발굴과 선제적 연구강화 등 11개 실천계획과 기본연구의 정책선도기능 강화 등 24개 세부추진과제가 연구원의 설립목적, 국정과제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실천계획으로 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전체적으로 실천계획이 기관의 당면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실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그러나 현 정부의 산업과 통상의 연계정책과 관련한 당면현안에 대하여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학제적 연구선도,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강화 등 기관의 핵심역량과 관련된 실천계획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양호하나, 모든 성과목표가 정성적인 지표로 제시되어 있어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국가적 어젠다가 복잡 다양화되는 환경에서 경제이외에 교육, 복지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 학제적 연구를 더욱 강화하여 기관이 지향하는 종합연구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3개)의 중요성, 추진실적,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중점추진과제가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설립목적, 전략적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및 시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과정과 평가방식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기관 내·외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음. 그러나 일부 과제의 경우 중국과의 네트워크 및 공동연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국제교육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연구를 강조하는 과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미래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첨단 및 하이테크 제조업 중심을 넘어서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연구활동이 요구됨.

- 미래산업연구실 및 산업통상분석실 신설로 국가 어젠다 및 정부정책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실 확대 개편으로 국내·외 산업정책연구허브를 구축하고 있으나, 외부고객에 대한 정의 및 분류가 되어있지 않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노사협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행성과도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고충처리 운영에 있어 성과가 미흡함.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나, 집행내역 중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은 과제(80%이상)가 일부 있어 외부위탁 비중을 줄이는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퇴직금의 적립은 소요되는 금액을 분기별로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고, 적립계좌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퇴직금 운용 예금에 직원 대출금과 관련된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의 해소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과 성과연봉의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연봉의 차등지급율이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단점이 있음.
-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를 가지고 개선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평가결과의 환류체계에서 구성원이 적극적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2013년에 중증장애인 1명(인턴)을 채용하였으나, 여전히 장애인의무고용률(6%)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1.62%),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청년인턴 채용 계획 대비 달성도는 양호하지만, 청년인턴의 근무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용해야 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은 평가기준(6%)에 다소 미흡한 수준이므로(4.3%), 기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 및 복지 부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을 두지 않음.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가치를 높였고, 고령화가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으로 엄밀하게 제시함.
- 첨단기술 발전 및 기술의 융복합화 등에 따라 신산업부문을 비롯한 전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규제완화를 넘어서 주요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규제 사례 검토, 설문조사 및 회귀분석 등을 토대로 신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원칙과 방향 등을 제공함.
- 가젤기업 연구의 경우 전체 기업이나 지역이 아닌 일자리 창출형 기업에 초점을 맞춰, 입지와 성장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정책 제언이 구체적이어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국정의 최우선 목표에 시의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범위 설정에 의한 지원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증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감을 감안하여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검증함으로써 대응 정책 수립에 기여함.

〈단 점〉

- 일부 연구에서 학술적인 내용을 상대적으로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발전 로드맵, 세부 정책의 개선사항 발굴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개념 정의, 국내외 현황 분석, 경쟁력 강화 분석, 향후 대응방안 등 연구 체계상 상호 연계가 부족하여 단절된 경우가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요인과 국내 기업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와 계층분석에서는 경쟁력 강화 방안과 연계된 핵심 요인을 도출하거나, 불일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등의 과정이 다소 미진함.
-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 확대와 영세소기업의 편중 현상 간 상관관계를 통계기법을 통해 연관성을 분석한 점은 우수하지만 상호 연관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논증하지 못함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책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 대안이 다소 미흡함.

- 중국과 동북아 국가 연구에서처럼 산업별 분석과 협력 방안 제안이 축약적이고 선언적인 경우 정책 활용도가 다소 부족한 경향을 보임.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활용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방법론과 연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중국과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 연구의 경우처럼 미시적인 산업 연구에 한계가 있는 경우 구조적 제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론이나 연구 내용의 발굴이 필요함.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정과제 실현 및 정부정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개 연구부서를 구축·운영하는 등 유기적인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미래 신산업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별 전문가를 횡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우수함.
-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원배분을 지휘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사업비 중 국정과제 수행예산이 50% 수준으로 다소 낮음.
- 미래산업정책 부문에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미래 신산업연구를 확대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실천적 연구체계가 미흡함.
- 자원배분과 달리 성과를 보면 연구기관의 국가정책수립 기여정도 평가 대상인 13건의 과제 중 산업통상 및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과제는 단 1건도 없어 성과가 미약함.
- 기관 조직의 물리적 통합에 비해 총괄부서의 역할과 권한이 모호함.
- 일부 조직(성장동력산업실 등)의 중복 연구참여로 연구 피로도가 있을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다보니 구체성은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연구사업비에서의 국정과제 수행 예산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다소 상향시켜 국정과제수행 체계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일반사업비 예산에 있어서도 국정과제 예산을 다소 상향시켜 국정과제 수행능력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수시연구 및 수탁연구과제 위주로 수행함에 따라 연구진행과정이 다소 체계적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구원의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갖추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길 바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미래산업연구실을 신설하여 연구원의 조직을 국정현안에 대비하는 체제로 구축함.
- 미래산업, 산업통상 등에 대한 전문조직 신설 및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현안과제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
- 일자리 창출, 전력부족 사태, 손톱 및 가시 제거 등 현안과제별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단 점〉

- 미래산업실 신설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과제의 성격이 선제대응이라기 보다는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정책과제가 수행되는 것이 대부분임.
- 일부 과제들의 경우 선제적 대응과제라기 보다 즉시 또는 수시과제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과제성격으로 선제적 대응과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음.
- 선제적 대응의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며, 연구기관의 통상적 업무와 구분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선제적 대응과제의 성격은 관련 정부부처의 요구 이전에 연구원에서 사전적으로 미래 정책수행에 필요한 상황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정책대안을 미리 제시하여 하는 과제로서 전체 정책과제중 일정 부분은 이에 대한 과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현안과제의 즉시 대응 정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긴급과제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도 필요함.
- 정책입안자에게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먼저 제시하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주기적인 산업분석을 통해 연구가 필요한 주제 제시 등).
- 선제적 대응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며, 내부 기획과제에 대한 선정 및 배분의 투명성이 요구됨.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정부관련 기관 및 국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대안 제시의 실효성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단 점〉

-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현안의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대안 제시에 반영하는 연계관계가 약함.
- 산업체 및 협회 등과 같은 실물부분과의 연계가 미흡함.
- 활성화된 네트워크에 비해 네트워크를 통해 거둔 성과를 통한 정책대안이 미흡하고, 국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역경제와 관련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하여 중앙차원의 지역발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주요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함.
- 협회 및 산업체와의 연계관계를 통해 실물경제의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대안 제시에 반영되는 방안을 구축하길 바람.
- 각종 포럼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반영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동연구와 세미나를 개최하되, 이들 활동의 결과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정책수립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과정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미나 개최가 관련 중·장기연구과제, 일반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등 과제성격의 구분없이 자의적으로 개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제별 세미나 개최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연구원의 장기적인 비전과 연계된 체계적인 틀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창조경제 및 미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 산업이 발전된 미국, 유럽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전체적으로 볼 때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부합한 정책개발을 제시하고 있음.
- 성과공유제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철학의 하나로 이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균형적 보완적 바이오경제 정책의 제시가 돋보이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BT분야 투자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차원의 통합적 기획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광특회계(광역시·도의 특별회계)의 구조개편 제시하여 운영효율화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안정적 재원확보 및 운영, 중앙과 지방단위에서 효율적인 추진체계구축, 표준 가이드라인의 수립, 활용을 제안하고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체계 재정립, 실질적인 조직화 및 협동화 사업모델이 창출, 개인기업의 사회안전망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방위산업의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여러가지 국정과제를 수행하여 국방획득사업의 산업파급효과, 수출가능성 등 경제성 분석 모델을 정립하고 있음.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제도를 통해 공동상표 제도의 거래가능성도 명확화, 장기적 적정수준 재검토, 제도에 적합한 물품의 발굴 및 참여유도를 통한 물품 다양화 촉진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구과제(9개월)의 경우 3월 21일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지경부장관고시 변경일 4월 21일임. 수행기간이 9개월인 기본연구과제에서 과제시작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과제가 고시개정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객관적이지 못함.
- 과제종료가 완료되고 과제로부터 얻어진 명확한 결론에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임. 중간보고서 등에서 제안되는 의견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는 불완전한 형태의 정책제안임.
- 지역발전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의견제시가 미흡하고, 지역중심의 제안,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참여 제안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편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의약산업 혁신역량 관련과제에 있어서는 산업계 내 혁신기업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정책수요파악 보다 다양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부족함.
- 개인기업의 실태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정책이 동일한 이름으로 소상공인의 지원책으로 설정되었고, 중소기업과는 차별화되는 소상공인만의 특별한 정책 제안들이 미흡함. 과제의 핵심적 정책이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정보지원 정책이나, 이러한 지원정책은 이미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는 정책으로 기존의 정책과 차별성이 없음.
- 방위산업과 관련한 연구가 비슷비슷한 성격의 과제로 상대적으로 다소 많은 편이며, 연구원이 수행한 비슷한 국방과제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연구내용 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이 미흡함.
- 일자리 창출은 전부처간의 문제로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워크숍도 이와 관련한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종합적인 워크숍 형태여야 하나 이를 진행하는 과정이 다소 미흡함.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제도 과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분야별 연구가 많이 있었던 사항으로 독창성은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산업체와의 연계관계를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연 협의체 형식의 교류가 필요함.
- 지역관련 과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제안을 하는 Down-up 방식의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제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중앙 관련부처와의 정책협의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연계해서 정책대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산업연구원의 연구성격상 지원정책에 반영하는 특성이 있어도 실제 시행령, 규칙 등의 반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화, 규칙제정의 실효적 방안제시도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지역발전과 관련한 연구에서 핵심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관건이며, 산업연구원 주도의 설문조사, 현장방문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부분 위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정책실시 이후 사후조치에 기여하는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의약산업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정책대안이 필요함.

- 소상공인 관련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특유의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지원책과 대부분 비슷하고 이름만 바꾸는 정책이므로, 중소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소상공인 특유의 정책이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우수조달 공동상표지정연구와 관련하여 공동상표 배제와 신규진입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심층적 인터뷰 및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현장 조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원가계산 적정성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선도와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방위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동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높은 부가가치 창출로 차세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수립을 제시하고 있음.
-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자원배분 정책수립 등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과제의 경우 유희노동인력을 경제활동인구로 흡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발전전략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간 선순환구조 모색필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임.
- 일자리창출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전체의 고용창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발전전략과 최적의 정책방향 도출을 모색하고 있음.

〈단 점〉

- 방위산업관련 연구에서는 연구원이 수행한 비슷한 국방과제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민간부분의 협력방안에 대한 제안의 중요성이 미흡하고, 연구의 독창성이 부족하며,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각 분야별 경쟁력 분석이 미흡함.
- 방위산업의 차별화된 경쟁력평가 방법이 미흡하고, 일반 교역상품의 수출경쟁력 평가와는 다른 방법 시도가 미흡하며, 방위산업 세부분야에 대한 연구내용 및 타국 사례 연구 등이 미흡함.
- 일자리 창출은 전부처간의 문제로 과제수행의 워크숍도 이와 관련한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종합적인 워크숍형태의 진행이 다소 미흡함.
-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연구내용은 그간 지속 제기되어 왔고, 분야별 연구가 많이 있었던 사항으로 독창성은 다소 미흡함.
- 성장원천별, 경제부문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였다고 하나, 성장원천별 상호관계, 경제부문별 상호관계 속에서 일자리 창출구조를 분석하기보다 각 부문별 독립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고, 새로운 지식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방위산업은 민간교역과 특수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쟁력을 평가하는 독특한 경쟁력평가 방법을 모색하는 시도가 필요함.
- 경쟁력 분석은 중·장기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다 단기적인 정책으로 활용할 대안이 필요함.
-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방위산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역할제고와 관련된 방안이 필요하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추가연구를 통해 정책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창출은 특정 산업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각 산업별 유기적 관련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문제로 원천별 상호관계, 경제부문별 상호관계 속에서 일자리 창출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호연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연계 관계 속에서 일자리 창출구조 고리가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크게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수탁연구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기본연구의 경우 큰 폭으로 하락함. 상세 업무유형별로는 정보제공이 가장 높고, 수탁연구, 기본연구 순으로 나타남.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대부분의 업무유형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수탁연구, 정보제공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기본연구는 다소 낮게 나타남.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높았으며, ‘효율성’, ‘효과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특히 ‘준비성’, ‘대응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기본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보고회 및 자문회의 등의 일정 관련 사전협의 적절’이 높은 반면,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성과확산) 노력’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세부항목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연구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비’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활동 및 정책발전에 기여’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 제공’,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정보 제공’, ‘정보제공 메뉴 및 화면구성 적절’, ‘정보이용 관련 고객의견 접수 편리’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공유·확산을 위한 온라인 접근성 강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연구성과 홍보 노력, 연구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 활용,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위탁연구, 정보제공은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수탁연구는 큰 폭으로 상승함. 상세 업무유형별로는 수탁연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본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위탁연구 순임.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기본연구, 수탁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위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는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특히, 위탁연구는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높았으며, ‘구비성’, ‘공정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전문성’, ‘합리성’, ‘공정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나타내며, 특히 ‘편리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위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위탁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남.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확히 이해’가 높은 반면, ‘연구과제 수행으로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성과확산) 노력’ 항목이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사회적 사명감 및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감’,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 보유’ 항목이 높은 반면, ‘연구수행 정도를 공유하는 기회를 적절히 활용’, ‘고객이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 항목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한편 위탁연구의 경우 모든 세부항목별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 및 반영절차 구비’, ‘고객 의견 및 불만사항 제시 편리’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정보자료 검색 위한 검색기능(창) 구비’ 항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락처 업데이트 등 지속적 고객관리 노력’, ‘정보이용 관련 고객의견 접수 편리’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고객들이 의견 및 불만사항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는 채널 마련, 연구과제 수행 및 회의진행 시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정책연구 강화 및 창의연구를 위해 하향식 기획시스템과 상향식 공모방식을 병행하여 효과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있음.
- 과제 발굴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 단계와 중점연구목표를 설정 등 발굴 과정이 체계적이고 중층적으로 조직되어 있음.
- 우수 연구제안과제를 시상하고, 제안서별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연구 과제 선정 등을 통해 과제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기본연구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외부인사의 평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 심사과정에서 원내·외 전문가들을 적절하게 결합하고 있으며, 결정권한도 균형있게 주어지고 있음.

〈단 점〉

- 사업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내·외 심의위원 비율이 동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실제로는 과제선정 과정에서 외부인사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으나, 연구자문 위원회와 연구심의위원회로 구분하고 있어, 그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심의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율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다양한 원내·외 과제발굴 채널을 운영하여 51건의 수시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보임
- 연구수요조사 결과 수시연구과제로 적합한 과제를 별도로 발굴하는 등 과제 발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서장이 통합정보시스템(ERP)을 활용하여 수시연구 과제 수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연구심의위원회에 통보하는 점이 돋보임.
- 수시연구과제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적기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 성격이 기본연구과제와 구분이 모호하고, 정부부처 의견반영 비율이 20%로 저조함.
- 수시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과제가 다수 있어(14건), 단기정책 과제 성격의 수시연구과제의 근본취지가 무색해질 소지가 있음.
- 3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에 대하여 중간단계에서의 연구심의제도가 없어 보고서 질 관리에 한계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연구과제에 정부부처 의견반영 비율을 좀 더 높이고, 기본연구과제와 수시 연구과제의 구분을 연구기간, 연구범위, 주제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3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의 경우, 중간연구심의를 원칙적으로 하여, 연구기간 연장 사례를 줄이는 등 진도 관리 및 보고서 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의무 규정을 기간별로 세분하여 등록하도록 하면 연구 모니터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체계를 잘 구축하였고, 협동연구 과제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협동연구를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협동연구과제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한 외부참여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과다한 과제를 제한하는 등 연구품질의 제고에 힘쓰고 있음.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융·복합연구를 중심으로 협동연구과제를 잘 선정하였고, 제안된 5개의 과제가 협동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음.
- 협동연구 참여진 구성 및 업무분담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고, 협동연구기관 간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잘 구축되어 있음.

〈단 점〉

- 협동연구 수행과제들의 시너지 효과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고, 가시적인 실적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과제를 장려하는 제도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효과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국제교류협력에 업무역량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 수행과제들의 시너지 효과가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일 필요가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 제도에 관한 규정 및 제도적 절차를 적절하게 편성·운영하고 있음.
- 6개 항목의 착수보고단계, 7개 항목의 중간보고 단계로 구성된 평가항목에 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수행함.
- 심의평가 결과는 통합정보시스템(ERP)을 통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점은 돋보임.

- 연구의 평가를 자문·평가위원회 평가와 연구심의회 평가로 2단계로 구축하여 평가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의 수행단계 전반에 걸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수행단계별 심의·평가항목을 규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연구의 질적평가를 수행하는 등 단계별 적합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단계별 자체평가를 절차화하고, ‘연구용역과제심의 소위원회’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함.
- 평가위원 구성과 선정방법을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연구과제별로 적합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 평가위원 전공적합성을 갖도록 Joins 활용 등을 통하여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있음.
- 평가위원 구성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제안되어 있음.

〈단 점〉

-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사항은 다소 미흡함.
- 평가위원 풀(Pool)의 소속기관별 분포는 제시되고 있으나, 세부전공영역별 분포 현황과 관련된 내용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관련 사항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평가기준 등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평가위원 풀(Pool)의 전공별 분포현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출판규정(제4조), 용역계약조건(제12조), 전산업무처리규정(제7장 51조), 전산업무처리규정(제53, 56, 58, 75조) 등 지식재산 보호규정을 두고 있음.

- 2013년에 연구·통계자료 93건(총 누적자료의 16%)을 등록하고, 통합로그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서버접근통제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2013년도에 보안 관련 규칙과 규정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인.
- 비교적 다양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접속수가 연구보고서 20%, e-KIET 산업경제정보 19.8%, KIET 산업경제 9.7% 증가하였음.
- 모바일 홈페이지에 페이지뷰 수준이 높은 e-KIET 산업경제정보, KIET 산업경제 등 메뉴를 추가하였음.
- 홍보를 크게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홍보팀 등 내부 조직의 네트워크를 정비한 점은 긍정적인.
- 홈페이지에서 자료별로 전년대비 접속수를 분석하고 증가율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인.
- 연구성과 해외 확산을 위해 20회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정책과제 성과 확산을 위해 ‘정책연구리뷰’를 발간하고, 분야별로 묶음집을 발간한 점은 긍정적인.
-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형 서점 위탁판매, 회원제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한 것은 장점임.

〈단 점〉

- 2013년에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기록물관리 지침 등을 포함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의 효과분석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미흡함.
- 홍보·확산 계획에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단기 성과목표가 미흡하여 홍보·확산 실적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연구결과 확산체계 및 수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효과적인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로 전년 대비, 목표대비 향상도 등을 구체적이지 않음.
- 홍보 확산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의 설정이 미흡하며, 성과지표의 설정도 미흡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연구성과 확산 실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당기의 차별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있음.
- 이슈페이퍼의 발간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할 것을 권고함.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전략적 활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성과지표의 활용을 권고함.
-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을 더욱 폭넓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올해 작성된 전산업무 처리 규정 외에도 저작권 및 기록물 관련 된 규정과 내규를 구체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음.
- 시스템을 통해 얻는 효과를 비교적 정량적으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홍보계획 및 방안’ 상 당기 성과목표를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관리 및 성과평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함.
-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연구원에 가장 효과적인 확산 수단을 선택하여 확산자원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집중·관리할 것을 권고함.
- 홍보채널별로 성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전년대비 증감, 목표대비 달성률 등을 포함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홍보를 위한 채널의 선택이 일반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하므로, 채널별 확산 실적을 분석하여 효과목표가 뛰어난 채널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산업분석은 민간연구소 등에서도 많이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발간하고 배포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네트워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가령, KOTRA 등과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물을 발간하고 배포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0.95편(82.00건/86명), A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기관장의 추진 전략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음.
- 미래 신산업 연구실을 신설하여 새로운 산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하여 선도적 연구활동을 강화함.
- 부서별로 정책적 dialogue를 강화토록 하여 정부 연구수요에 대응함.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자율형 연구학습조직의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지적 자극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 산업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현장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해외 단기연수를 실시함.
- 연구원의 중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단 점〉

-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에서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며, 외부 산업계의 의견수렴도 다소 부족함.
- 현안문제의 선정 과정에서 문제의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
- 각종 포럼별로 개최 횟수가 큰 차이가 나는 등 포럼의 운영에 있어 다소 불안정함.
-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기진작 또는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단기연수를 받은 인원이 1명으로 제한적이어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에 미흡함.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과제 개발 노력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내부 구성원 전체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설문조사 사용을 건의함.
- 외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산업계 대표들을 연구 자문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표 현안문제의 선정 과정에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포럼의 운영을 정례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 및 보상책을 강화하고, 단기연수 인원을 확대하여 적시에 해외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 또는 학제적 연구 등의 융·복합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함.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내부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이고, 개인과의 대화 확대, 티미팅, 시니어연구자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협업연구를 강조하며,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소통 채널 신설 및 강화 노력이 돋보임.
- 국가 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노력이 매우 구체적이고 뛰어남. 연구원의 성과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등 연구수요를 적기에 포착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단 점〉

- 각종 위원회에 직종 및 직급 대표자의 참여가 다소 부족하며, 하위 구성원으로부터의 상향식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의 활성화가 다소 부족함.
- 국내 학계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위한 활동이 미흡함.
- 국내 네트워크에 비해 해외 네트워크 확보 실적이 다소 부족함. 특히 구미(歐美)와의 네트워크 구성이 미흡하여, 선진국의 유사 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연구성과물의 산업계 확산 및 전파 노력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직종 및 직급 대표자의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상향식 의사소통을 위한 제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 풀(Pool)의 구성뿐 아니라 국내 학계와도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함으로써 연구인력 확충뿐 아니라 산학협력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시아뿐 아니라 미주나 유럽과의 연구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업계에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전파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각종 비용 처리 및 회계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이 돋보임.
- 기관장의 최종결재 직전에 감사실장이 검토하는 상시 감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기관 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제도를 잘 정비하였음.
- 연구과제 경합시스템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함.
-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검색시스템(Copy Killer)을 도입·운영함으로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뛰어남.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규정을 갖추었으며,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3단계 스크린 체제 운영이 뛰어남.

〈단 점〉

- 기관 경영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내외·부 신고 제도의 활성화가 다소 부족함.
- 윤리경영에 대한 전체 구성원의 공감도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규정에 대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준수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심의 위원회에서 과제선정, 조정, 등급평가 등의 업무도 하고 있으므로, 연구윤리 관련 심사가 미흡할 우려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 경영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내·외부 신고제도의 활성화 및 포상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및 청렴 경영에 대한 교육 훈련의 강화가 필요함.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자체 시스템에 대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경영목표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하기 위해 경영목표 실천계획 점검단과 세부추진과제별 추진팀을 운영하면서 경영목표TF와 유기적인 협력을 함으로써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정책이슈발굴과 선제적 연구강화 등 11개 실천계획과 기본연구의 정책선도기능 강화 등 24개 세부추진과제는 연구원의 설립목적, 국정과제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실천계획으로 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적절함.
- 전체적으로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체계적 연계성이 잘 정리되어 있고, 실천계획이 기관의 당면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실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정부의 핵심 국정전략인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하여 연구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연구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선도적 연구강화를 위해 적절함.
- 정책과제 발표에 경영진이 참석하고 정책과제 연구에 연구경험이 풍부한 선임급 연구자를 배정하고 연구과제 평가위원의 외부 전문가 비중을 50%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은 연구과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바람직함.
- 미래산업연구실과 미래산업연구회를 신설하여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강화'를 위하여 미래신산업, 전략산업 및 창의산업, 융·복합산업, 일자리 창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적절함.
- 미래신산업에 대한 전문 연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신산업연구실을 신설하고 박사 3인, 석사 4인 등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하였으며, 미래산업연구회를 신설하여 15회 운영함으로써 미래신산업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
-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 운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연구성과를 첨단 정보화 수단과 글로벌하게 확산한 것은 긍정적임.
- 우수인력 확충 및 연구원의 고령화문제를 위하여 초청연구원제도를 운영하고, OB fellowship제도를 시행한 노력 등은 전략적 중요성이 있음.

- 산·학·연정의 의견을 결집하기 위한 국내 및 글로벌 연구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단 점〉

- 경영목표로부터 실천계획이 TF 등을 통하여 도출되는 과정은 다소 논리적이거나, 산업의 현안문제를 다루는 연구에 대한 실천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함.
-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가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은 바람직하나, 일부 실천계획은 매년 일상적인 관리업무로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방안으로서는 중요성이 낮음.
- 현 정부의 산업과 통상의 연계정책과 관련한 당면현안에 대하여 본 기관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실천계획이 다소 부족함.
- 융·복합적 연구 및 통합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실천계획의 내용 및 실천수단은 다소 미흡함.
- 성과의 성격상 비계량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모든 성과목표가 정성적인 지표로 제시되어 있고, 따라서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하여 글로벌 산·학·연·정 네트워크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에 집중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들이 대부분 투입지표 또는 과정지표에 불과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결과가 정부정책에 대한 반영정도나 연구결과가 산업에 준 영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연구원의 핵심역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업종 기술간 융·복합 연구가 필요하고, 새로운 융·복합기술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융·복합연구로는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계방안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의 실질적 추진방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조직과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산업과 통상의 연계와 관련한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융·복합적인 산업의 현안문제를 다루는 연구실천계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디지털 환경변화가 연구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기관의 행정 및 재무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현계획의 추진이 필요함.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산출지표 내지 결과지표를 포함토록 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도 합리적으로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획 단계부터 정책부서의 의견조회 및 정책수요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융합기술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연구가 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목표의 객관적 선정을 위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내외·부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시스템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중국 이외에 선진국 또는 OECD수준의 국가들과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개도국발전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원의 연구부담을 최적화하고, 연구지원부서는 연구부서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함.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배경과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연구기관의 현안 및 당면과제를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중점추진과제들이 선정되었음.
- 3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성원 설문조사, 외부 이해관계자 평가 및 연구부서장 평가 단계를 두고, 각각의 가중치를 설정하고 반영함으로써, 중점추진과제의 중요성 및 시의성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음.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이 구체적인 기준들을 활용하여 타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고, 기관 내·외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음.
-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미래신산업 연구확대를 위하여 미래산업연구실을 신설하였고, 미래 신산업 전문연구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미래전략산업 및 창의산업 분야의 36개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응노력을 전개한 점이 돋보임.

〈단 점〉

- 기관의 설립목적, 국가정책, 기관발전에의 부합 등 항목별로 타당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함.
- 중점추진과제에 있어서 유관정책협의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산업 연계 통상정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부분이 선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중점추진 과제의 내용이 미흡함.
- ‘국내·외 산업정책 네트워크 활성화’과제에서 글로벌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현재는 국제적으로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어 중점추진과제로서의 적정성 및 구체성이 크지 않음.
- 미래 신산업연구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에 부응한 점은 인정되나, 상대적으로 민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중국 등 동북아 지역과는 중점적으로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노력 및 공동연구로는 다소 미흡함.
- 향후 선임연구위원의 퇴직으로 인한 연구원의 공백문제가 있기는 하나, 연구원 내부의 문제인 인적자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의 실천계획이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된 데에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외부의견보다 내부의견이 크게 반영된 결과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설립목적, 국가정책, 기관발전에의 부합 등 항목별로 타당성 있는 설명을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 및 시의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기관장 취임 시기에 따라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이 조기에 이루어져 연중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외부의견수렴에 있어서 유관 정부부처의 의견뿐만 아니라 외부 산업 및 통상전문가의 의견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인력관리에서도 초청연구원제도나 OB Fellowship제도는 바람직하나, 정규직 전환이외에도 장애인 고용과 같은 부분도 고려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우수 인력의 확보와 동기 개발을 위하여 성과중심 평가와 보상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기관의 다양한 연구인력 규모를 고려한다면, 중국과의 네트워크 및 공동연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국제교육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연구를 강조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미래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첨단 및 하이테크 제조업 중심을 넘어서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연구 활동이 요구됨.

- 대중국 연구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경사무소를 북경지원으로 위상을 격상하였으나, 협동연구 등 보다 실질적인 연구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러한 노력은 일본 대만 등 주변 주요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 선정과정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정책연구 수요변화 부응, 정부조직개편 대응, 국가정책 기여도 제고, 중국의 심층 연구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실 확대, 방위산업연구실 개편, 미래산업연구실 신설, 산업통상분석실 신설, 북경사무소를 북경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은 시의적절함.
- 미래산업연구실 및 산업통상분석실 신설로 국가 어젠다 및 정부정책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실 확대 개편으로 국내·외 산업정책 연구허브를 구축함.
- 정부 3.0 정보공개제도 홍보 및 데이터 공개 요구에 대한 운영 실적은 타 기관과 비교하여 우수함.
- AEA 등 유럽 우수인력 리쿠르팅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인력 유치(박사급 3명 채용)는 적극적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임.
- 인력고령화에 따른 부작용 완화, 기관 이전 시 인력유출 대비 및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해 우수인력을 사전 확보함.
- 2013년 인력수급계획 TF를 통하여 필요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연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 비전 달성을 위한 우수인력 채용 및 효율적 재배치를 실현함.
-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직원채용 실시하고, 근로자 대표 3명이 포함된 인사위원회 구성함.
- 연구인력 풀(Pool)과 전문인력 DB를 확보하여 우수인력의 활용을 위해 노력함.
- 상시채용제도 등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채널을 다양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인적성 검사와 논술 전형을 실시함.

- 비정규직 중 업적평가 및 근무태도 등이 검증된 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10명)하고, 정년퇴직자의 노하우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KIET OB Fellowship'을 운영함.

〈단 점〉

- 선임연구위원을 북경사무소 지원장으로 발령(상주 1인)하고 북경지원으로 격상하였지만, 중국의 심층연구 및 지원에는 부족한 실정임.
- 사이버토론폰방을 통하여 외부고객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외부고객에 대한 정의 및 분류가 되어있지 않고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부족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내부고객 요구사항인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요청 등은 일상적 행정처리 수준임.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 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미흡함.
- “우수한 스펙 위주의 채용이 아닌 지원자의 기본적인 자질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합적 우수인재 채용을 목표로 함”은 중요한 전략임에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없음.
- 서울시 주요대학에 국한하여 채용공문을 발송한 것은 지방 차별화의 오해 소지가 있음.
- 인성검사 결과는 부적격자를 제외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야 하나, 인성검사 결과를 평가 시 가점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직무분석, 사업분석에 근거한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의 작성이 미흡함.
- 채용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3년의 경우 각종 우대제도를 통한 채용 실적이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계되는 환경변화 이슈(국내 산업역량 제고를 위한 기능 수행 관련 이슈 등)를 도출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조직운영 노력 및 성과 제시가 필요하며, 성과의 계량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조직의 핵심기능, 경영목표, 주요 이슈 등이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의 요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발전방향, 제안사항 등의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채용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월 2회 주치의 상주제도를 통한 직원 건강관리는 우수한 사례임.
-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직급·직종별 대표 8인으로 구성된 ‘교육개발TF’를 운영함.
- 환류체계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진단을 실시하고, 교육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익년도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함.
- 해외 특별연수, 유연근무제, 주치의제도 등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개선방안을 상시적으로 제안하는 업무제안제도를 실시함.
- 연구부서는 기본/계층역량, 글로벌역량, 연구역량 분야로 구성하여 230건, 지원부서는 기본/계층역량, 직무역량으로 구분하여 64건의 교육을 실시함.
- 해외 업무연수 실적은 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공유하고,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교육훈련비가 전년대비 30.2%(49,502천원) 증가함.

〈단 점〉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제시한 당해연도 교육훈련계획도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없어 다소 부실함.
- 유연근무제도, One-Stop-Service 제도, 부서 및 전직원 워크숍을 구성원 사기진작 제도로 제시하는 등 특별한 사기진작책이 없음.
- 기관 고유 기능과 연계되는 특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직원산업시찰 결과를 활용하는 구체적 내용이 없음.
- ERP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국내·외 연수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하나 컴퓨터로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수준임.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교육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 비연구직 교육훈련 비중이 전년도 4.4%에서 8.7%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비연구직 역량강화에 문제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가 이월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년도 결과를 분석 점검하는 교육훈련성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차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과 연계되는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비연구직 직무교육을 다양화하고 교육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연구직/비연구직 등 직종별로 차별화된 평가요소에 의한 업적평가를 실시함.
-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을 차등 적용함.
- 연구활동에 대해 정량적 점수제도를 규정화하고, 근무태도, 교육을 30% 계량화하여 시행함.
- 비연구직 업적평가 계량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전체 평가의 20%).
- 대내·외 평가를 통해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
- 논문게재 실적은 주요 연구실적으로 분류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인사 및 보상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총연구실적 산정 시 100% 반영함.
- 모든 연구실적을 세분화·계량화하고, 과제 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배점을 차등화함.
- 연구보고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를 확보하고(4인 중 2인 외부 전문가), 평가제도 전 과정에 걸쳐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함.
- 연구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실적 평가결과는 즉시 연구자에게 피드백함.
- 휴직자, 국내·외 연수자, 파견자 등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함.
- 평가결과는 고용재계약, 승진임용, 연봉인상 등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함.
- 하위 평가자는 계약기간 단축(1년), 기관장 경고 및 교육훈련 실시 대상이 되도록 함.

〈단 점〉

- 다면평가 결과를 원장이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여 원장이 주관하는 다면평가는 평가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됨.
- 비연구직의 계량화 지표(결근, 지각 등 근무태도, 전직원대상 행사, 교육 참석)는 다소 부적절함.
- 직원 평가제도 운영실태로 비연구부서 근무평정의 계량화 공감대 약화를 제시 하였으나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 연구조정실장, 홍보팀장을 근무평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평가점수 부여 외 논문 게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우수 국내·외 학술지 포상금 상향 조정 등 우수논문상 등 논문게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근무평정 제외자를 제외한 모든 구성원들이 업적평가를 받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함.
- 평가결과를 재임용의 최저기준 10%이하로 활용하고 있어 활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갈등관리가 우수함.
- 기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연봉동결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함.
- 외부 노무전문가(노무법인, 법무법인)와 최근 노사동향, 노무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매월 정기적 노무업무 자문을 받아 노무역량을 강화함.
- 부서간 정보공유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간부회의(24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단순보고 방식을 벗어난 토론 형식의 Tea Meeting(11회)을 실시함.
- 시니어 정례모임과 주니어 정례모임으로 조직 내 세대 간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어 있음.
- 2013년 총 업무제안이 51건 이루어졌고 상반기 업무제안 포상이 12건 이루어지는 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적극적임.
- 노사협의회가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구분되어 원만한 운영을 하고 있고, 이행성과도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규칙의 내용은 적절함.

- 비정규직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화 하는 등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도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
- 업무제안제도의 시행으로 51건의 업무제안을 받고 우수제안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포상을 시행함.
- 2회의 노사간담회와 수시 대화 창구를 운영함.

〈단 점〉

- 고충처리 운영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실적이 없음.
- 노사갈등 이슈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미흡함.
- 전년도 지적사항이었던 고충처리 운영이 여전히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실질적인 노사협의회 운용으로 직원고충처리 실적이 없다고 하나, 업무제안제도 등 유사제도를 정비하고 접근의 용이성 등 이용자 친화적인 방법으로 절차 개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노사갈등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고충처리제도, 업무제안제도 등의 하의상달, 구성원 요구해결을 위한 제도를 체계화 하여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 및 2014년도 기본연구사업비에서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9% 및 81%로 편성되어 있어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10%(381백만원), 2014년 9.7%(319백만원)로 연구회 제시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10.1%(372백만원), 2013년 14.3%(546백만원)로 연구회 제시 기준(10~20% 범위내)을 준수하고 있음.

- 2013년에는 47건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수시연구과제의 수가 많음에도 개별과제별로 적정한 예산통제를 거쳐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비율도 96%로 높은 수준임.
- 퇴직급여충당금은 1/12(8.3%) 기준을 따라 필요한 소요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였으며, 분기별로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음.
- 퇴직예치금은 일반운영 자금과 구분되어 독립된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퇴직연금 등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 중 위탁용역비 80% 이상 차지하는 과제가 2건 있음.
- 퇴직금으로 운용하는 예금에 직원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된 질권이 설정(613백만원) 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위탁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연구과제가 수행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퇴직금 운용 예금은 직원 전체에 대한 것이고 직원 대출금은 각 개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질권설정 해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0.6%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394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및 이사회 후속조치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구분 없이 모든 연봉을 포함하여 누적식으로 운영하며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음.
- 기본연봉의 등급별 차등지급률은 최고-최저 $\pm 3\%$ 로 적정하며, 등급별 인원 역시 최고-최저 각 10%로 배분하여 적정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을 업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최고-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함.
- 2013년도에는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

〈단 점〉

- 성과연봉의 차등지급율에 대한 평가기준이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24\%$ 이고, 비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15\%$ 임. 이러한 차등폭은 총 연봉 기준으로 최고-최저 $\pm 4.5\%$ 와 비슷함. 그런데 산업연구원 성과연봉의 경우 간부직과 비 간부직을 구분하지 않고 최고-최저 차등폭이 $\pm 3\%$ 이므로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등급에 각 10% 미만으로 배분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과 인원배분비율을 연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기관평가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계획을 도출하고 진행도와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평가결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 개선과제 수행 실적을 경영진에 보고 후 전 부서에 공지하여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초적인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를 가지고 있음.
- 정부부처 대상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고객만족도 99%).
- 국내·외 학술지별로 차등화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정책전문지와 차별화하고 정책전문지는 연구실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전문학술지로의 논문게재 전환을 유도
- 중요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함.

〈단 점〉

- ‘평가결과 모니터링 게시판 시스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약함.
-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에서 3건이 추진 중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은 있었으나, 성과연봉 지급 시 차등지급률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미흡함.
- 협동연구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시스템이 완료되지 않고 추진 중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 지적사항의 준부와 관계없이 개선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 개선이 기관발전에 기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결과의 환류체계에서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협동연구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시스템 및 성과연봉 지급시 차등을 적용 문제가 개선 완료되지 아니하고 추진 중이므로 가시적 성과 도출이 필요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 시 장애인 가산점 부여하고 있으며, 2013년도 12월 1명(중증, 인턴)을 채용하고는 있으나, 201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62%에 불과하여 평가기준(2.5%)을 준수하지 못함.
- 전년도에 비해 장애인 고용률이 저하된 것에 대해, 기관차원의 적극적·다각적·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채용 관련 대책회의 개최, 기본계획수립, 관련기관방문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여나가야 하며, 장애인고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를 연구원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 목표달성, 청년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 적시 이행,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실적(2명)이 있음. 청년인턴 7명 중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5명을 초청연구원으로 채용한 실적은 우수함.
- 그러나, 청년인턴 전용 오리엔테이션교재 미비, 멘토링 양식과 증거 미흡, 고충처리 실적이 미흡, 멘토링 제도 미흡, 근무평정 미실시 등 청년인턴 근무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고충처리 담당관 및 고충처리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을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조치 공고 및 가산점 부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2013년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4.3%로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한 연구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하므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회의, 계획수립, 규정정비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지침(임시직관리지침)과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동일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임금 이외의 복지부분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이가 없음.

05

에너지경제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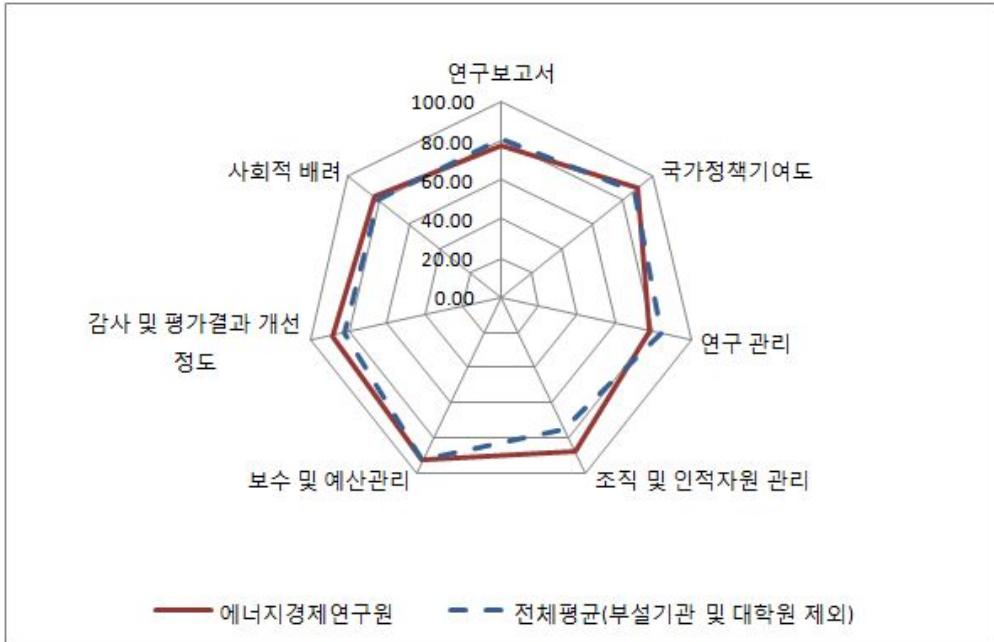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F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A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
| |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우수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A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C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D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A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B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정책 추진을 미리 고려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함.
- 정책 현안에 대해 기민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시의성 있는 에너지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성과를 나타냄.
- 에너지 부문의 제한된 연구 영역과 주제를 고려하더라도 중장기 연구의 차별적이고 심화된 논리와 대안 제시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실무협의 운영 확대, 정부정책 지원 Help-Desk 설치를 통해 전년도에 비해 외부제안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외부제안의 채택률이 낮고 선정 시기도 늦는 등 과제관리 노력이 다소 미흡함.
-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18,000여명에 대한 ERP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협동연구 추진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전문연구인력 풀(Pool)은 구축하였으나, 협동연구의 활용도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고, 일부과제의 경우 원내·외 연구인력의 역할분담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부평가위원 풀의 선정과 구성을 확대하고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전공별·분야별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구성과물관리규정(2013.11.29.)’을 제정·운영하고, 전자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을 도입한 점은 긍정적이나,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수준과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보완하는 제도적 장치와 전략적 활용에 대한 계획 수준은 미흡함.

[경영 분야]

- 산·학·연·정 협력체계에서 포럼, 협의회 등을 구성·관리하고 에너지 고위경영자 과정, 차세대 에너지리더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에너지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나, 내·외부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부서장평가 및 다면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의 익명성 보장 및 투명성 제고하는 노력은 우수하나, 승진심사 기준에서 50%가 정성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승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정부임금인상 가이드를 준수한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되고 개별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직원만족도가 조사되고 있으나, 구성원들의 수시 의사소통방안의 다양화가 요구됨.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나, 수시연구사업비에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퇴직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 등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퇴직금 적립이 분기별로 적립되고 있지 않고 연도말에 일괄하여 적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성과연봉과 능력성과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을 비누적식으로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음.
- 실효성있는 연구기관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갖추고 개선에 노력하였으나, 연봉제 개선이 미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경영컨설팅 내용이 실제 기관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1.5%) 향후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청년인턴 채용목표 달성, 결원보충 적시이행, 계약직 전환실적이 양호하며, 청년인턴 근무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13년 신규 1명을 채용하여 국가유공자 고용률 6%를 달성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임금차별이 현격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정책을 염두에 두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 점에서 우수함.
- 녹색성장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요소인 녹색기술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 시의적절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정책함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함.
- 선택적 전력 요금제 연구의 경우 국가적인 전력 수급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여 사례 분석,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분석 등을 활용하여 시의적절한 연구 결과를 제시함.

<단 점>

- 일부 보고서의 경우 연구 방법 측면에서 기존 자료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창의적인 정책 활용성이 다소 취약함.
- 국제유가와 거시경제간 문제는 제1차 석유파동 이후부터 다수의 선행연구가 수행되었고, 연구주제 및 내용도 이와 관련되었음을 감안할 때, 선도적이거나 독창적인 연구 수행이 다소 미진함.
- 민감한 사안에 비해서 분석이 세밀하거나 다양하지 못하며 해외 사례의 누락, 수요자와 생산자의 예상 반응 누락 등으로 보고서의 완결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과의 면담,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고 보고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보고서의 완결성과 연구 결과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세밀한 검토 절차와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정과제에 대하여 연구인력과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자원투입 집중도가 높음.
- 태스크포스(TF) 팀을 신속하게 가동함으로써 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체계 구축 노력을 기울임.
- 에너지 수급,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자체연구과제 수행 및 성과 도출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정책 활용에 기여함.
- 다양한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 무난하게 정부를 지원하여 국정과제를 수행토록 지원하였고, 특히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잘 마무리하는 등 에너지의 중요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함.

<단 점>

- 국정현안과제에 대한 대 국민 홍보, 설득을 위한 연구 및 노력이 미흡함.
- 연구의 결과로서 최적안 이외에도 정치적인 수용성까지도 고려한 차별화된 제2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음.
- 중·장기적인 이슈에 관한 일부 연구가 매년 반복, 재생됨으로써 연구 중복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과제 간에 연구결과의 상충이 발생하고 부문 간 연구가 별도로 수행됨으로써,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의 정합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현안과제에 대한 대 국민 설득 연구 및 예산배분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치적 수용성, 현실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정책 수용성이 높은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인 연구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정책반영 실적 및 한계 등을 서두에 제시한 후 해당 연구의 새로운 기여, 정책수단 제시의 상황 논리 등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간 정책제안 등의 상충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정하여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새 정부 출범 후 에너지 정책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에너지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함.
- 에너지 가격 현실화 등 현안이슈에 대해서 해당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정책 대안을 잘 제시하고 있음.
- ICT를 접목한 에너지수요관리 등 진일보한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 원전 계속 운전 경제성 평가 등 정부 현안과제에 대하여 연구기관의 객관적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대국민 설득의 논리를 제공함.

〈단 점〉

- 자원개발 기반 강화 등 일부 연구의 경우 해당 부문의 입장이 반영됨으로써, 국정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거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밀양 사태 등 갈등사건에 대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다소 미흡함.
- 일부 과제의 경우 정책결정의 고려요인, 근거 제시, 부작용 분석 등이 미흡함으로써, 정책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 연구부문의 포지션보다 국정과제에 적합하도록 중립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 미반영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밀양사태 등 에너지 갈등 현안에 대한 연구를 보강하고 정책결정 고려요인, 근거, 부작용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대안을 폭넓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에너지 관련 현안이 비교적 많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유관 정부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은 양호함.
- 원자력클러스터 연구 등 국내 정책 연구네트워크를 무난하게 운영하고 있음.

〈단 점〉

- 천연가스 정책, 석유가격 등 일부 에너지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해관계 업계 및 NGO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다소 미흡함.
- 민간연구기관 및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 유사 연구원 등과의 공동연구채널의 활용도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고, 민간연구기관 및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국가의 해당 분야 연구원 등과의 공동연구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일부 과제의 경우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른 연구기관과 협의체, 공청회, 관련 TF 등을 적절히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에너지 문제의 특성상 중·장기연구와 현안연구가 복합되어 있는데, 두 부문에서 적절히 자원을 배분하여 정부정책에 기여하고 있음.
- 일부 연구들에 있어서는 비교적 대안 제시가 명확하고,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등 대안의 정책화 실적도 양호함.
- 과거에 제시된 에너지 수급 정책 수단에서 더 나아가 ICT, 시장에 기반한 미국 등 선진국 정책 등을 검토·연구함으로써 정책 수단의 효과성과 다양성을 제고함.

〈단 점〉

- 일부 중·장기연구 가운데 기존 연구와 연구결과 등에서 중복되고 연구결과에서 제시되는 대안간 차별화의 논리와 제시된 대안간 정책의 차이가 미흡함.
- 쟁점 사안에 대한 일부 연구 가운데 현황 파악이 충분치 않고, 구체적인 효과 및 대안 제시 등이 현실적이고 다양한 정책 제시까지는 미치지 못함.
- 갈등사안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대안 모색도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이 없도록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일부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 간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부문의 연구들이 해당 부문, 연구 주관부서의 논리에 입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문별 연구와 에너지 총량의 연구 간에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에너지 가격 정책과 에너지 산업구조 연구간 상호 연관성을 높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최적안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차선안 등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원전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하위계획에 대한 결정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책 연구는 정책의 수용성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기여함.
- 전원구성 모델의 정교성 강화 및 최신 데이터 생성 및 활용 등 방법론적 보강으로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단 점〉

- 원자력 발전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는 기존 연구와 방법론 등에서 독창성이나 선도성을 찾기 어려움.
- 전원믹스 관련 원전비중 29% 결과 이외에는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 노력 등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주제가 독창적·선도적이지 않은 연구과제일수록 연구방법론 등의 차별화를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화하고 반 원전 입장에서 주장하는 원전비용평가 기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기본연구는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수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는 큰 폭으로 상승함. 상세 업무유형별로는 수탁연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보제공서비스, 기본연구 순으로 나타남.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수탁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기본연구, 정보제공의 경우는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모든 업무유형에서 전체평균 대비 큰 차이는 없음.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전문성’, ‘효과성’, ‘성실성’, ‘편리성’의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낮았으며, ‘편리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효율성’, ‘효과성’, ‘구비성’, ‘편리성’, ‘공익성’은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로 나타남. 특히 ‘공정성’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매우 큰 차이를 보임.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수탁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낮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연구결과물을 객관적으로 기술’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과제를 수행할 전문인력 및 관련 조직 구비’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는 ‘연구 목적을 정확히 이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 보유’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객이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하는 것이 편리’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고객 문의 및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 검색을 위한 검색기능(창) 구비’ 문항이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변화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는 노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려는 노력,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담당자와의 접촉(전화, 이메일, SNS 등) 관련 방해요인 진단 및 개선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소폭 하락함. 상세 업무별 결과 기본연구를 제외한 수탁연구, 위탁연구, 교육훈련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함. 상세 업무유형별로는 교육훈련서비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탁연구, 위탁연구, 기본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대부분의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기본연구, 수탁연구, 위탁연구, 교육훈련서비스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는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특히 교육훈련에서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전문성’, ‘준비성’, ‘구비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 및 요소가 전년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성실성’, ‘공정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특히 ‘전문성’, ‘공정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정보제공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을 정확히 이해’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유(성과확산) 노력’, ‘연구과제 수행으로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의 경우 모든 세부항목별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 및 반영절차 구비’, ‘고객이 의견과 불만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는 ‘위탁연구수행을 위한 해당부서나 연구담당자와의 접촉이 용이’ 항목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위탁연구자가 의견과 불만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 항목의 점수는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모든 세부항목별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제공 메뉴 및 화면구성이 정보를 찾기 쉬움’, ‘연락처 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고객관리 노력’,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정보 제공’ 문항이 낮게 나타남. 교육훈련서비스는 모든 세부항목별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교육생의 수준을 고려할 때 교육의 난이도 적절’, ‘다양한 교육매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교육생의 수업동기 유발 및 참여 유도’, ‘교육 기간 및 시간 적절’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가독성 및 접근성 제고 노력(홈페이지 개선·개편, 모니터링단 모집, 개선 아이디어 공모 등), 해당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정책연구실무협의 운영을 확대하고 정부정책 지원 Help-Desk를 설치하여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함
- 82개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년대비 20% 이상 과제발굴 실적을 보임
- 기본연구과제 발굴과정에서 외부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 전년도에 비해 외부제안사항이 크게 증가하였음.
- 연구원 3개년 연구사업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4대 분야별 과제를 선정한 다음, 과제를 분야별로 안배하고 있음.

〈단 점〉

- 2013년 총 17개 외부제안과제가 발굴되었으나, 그 중 채택된 과제는 1개, 부분 채택 과제 1개로 외부제안과제에 대한 채택률이 낮음.
-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와 proposal seminar를 연 1회만 개최하고 있으며, 11월 초반의 짧은 시간에 처리함으로써, 과제선정을 위한 절차가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연구사업 수행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과제 선정과 관련된 토론과 심사를 10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 과제의 경우 11월에 토론과 심사를 실시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대다수 타 기관의 경우처럼, 과제선정을 위한 절차를 연 2회 이상(상·하반기)의 세미나와 토론·심의로 구분하는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규정상의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원장 취임 일정 등 원내의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규정을 지킴으로써 심의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수시연구과제 외부 선정 평가단을 운영하여 과제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연구사업 선정 평가 항목으로 정부정책과의 관련성 항목에 높은 배점 비중을 부여함.

- 수시연구과제 선정평가단에 공무원들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종료 즉시 결과보고서가 발간되고,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전반적으로 수시연구과제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외부위원 구성이 정부부처 공무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외부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아, 과제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3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중간심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과제 수행 진도 및 보고서 질 관리에 있어 한계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 선정 평가단 위원으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과제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진도 및 보고서 질 관리 차원에서 3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는 중간심의 절차를 거쳐, 연구성과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가 구체적이며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가점제도를 운영하는 등 협동연구 장려에 대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18,000여명을 ERP정보시스템에 구축·운영하여 협동연구의 추진 용이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기본연구과제중 협동연구 응모 및 수행에 대한 검토가 잘 되어 있음.
- 참여기관별 협동연구체계를 잘 구축함.

〈단 점〉

- 전문연구인력 풀(Pool)은 구축하였으나, 협동연구의 활용도가 구체적이지 않음.

- 협동연구 ‘개도국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방안 연구’와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 공동연구’의 경우 원외 연구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대한 원내·외의 역할분담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 협동연구의 경우 원외 연구진에 치중한 결과 원내는 연구총괄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에 있어서 한계성을 가짐.
-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 공동연구’ 과제의 경우 협동연구 대표 과제로 선정 필요성에 의문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 장려를 위한 기준점수의 3% 가점을 부여함에 있어서 연구원들에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제안된 5개 협동연구사업을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원내·외 연구원들 간의 역할분담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연구사업 유형별로 달리하는 평가단계를 구축하여 착수-중간-최종발표회의 평가위원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의 형평성을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각 연구계획 단계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질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여 연구품질 및 평가수준의 고양을 위해 노력함.
- 연구사업을 기본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절하게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음.
- 평가위원 간 격차보정시스템을 독특한 계산방식에 의거하여 집계하는 점은 돋보임.
- 최종보고서 평가 후 자문검토 단계를 추가하여 보고서 품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출판심의평가를 추가하여 보고서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있음.
- 외부평가자 풀(Pool)을 관련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고, 외부평가자의 전공적합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평가를 실시함.

〈단 점〉

- 자체평가 절차가 4단계로 비교적 단순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단계별 평가 검토사항은 다소 미흡함.
- 외부평가자 풀(Pool)에 대한 소속기관별, 전공별로 분포현황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격차보정시스템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외부평가자 풀(Pool)에 대한 소속기관별, 전공별로 분포현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연구성과물관리규정(2013.11.29.)’과 ‘연구지식공유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2012. 6.5.)’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을 도입함.
- 지식재산 보호 등 규정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으며, 특히 통계자료, 모형자료 등 연구성과물의 수집, 관리, 이용, 외부제공 및 유출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점.
-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복고객을 정리하고,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발굴 하려고 노력한 점은 장점임.
- 5대 목표와 11개 전략과제를 제시하여 홍보확산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한 점은 장점임. 특히 전략이 에너지 관련 정책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긍정적임.
-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계량화된 실적을 제시하고 효과를 나타낸 점은 장점임.
- 연구사업 종료 후 연구보고서 발간 즉시 홈페이지에 100% 등록한 점은 긍정적임.
- 유관기관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콘텐츠를 연동하는 등 콘텐츠 연동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한 점은 좋은 아이디어임.
- 발간물 배포 규정에 의거하여 발간자료에 대해 배포처 및 배포기준을 결정하고 수요자별로 선택적으로 배포한 점은 긍정적임.
- 주요 에너지정책을 외국에 소개하는 ‘Selected Issues’ 서비스를 특화하여 제공한 점은 긍정적임.

- 한국의 원전산업 및 정책현황 등을 기관장 인터뷰를 통해 해외 언론에 알리고 홍보를 한 점은 장점임.
-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및 해외와 MOU를 체결하고 정보를 교류한 점은 긍정적인 점.

〈단 점〉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전략적 활용에 대한 계획이 미흡함.
- 성과를 보다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함.
- ‘2013년 연구성과 확산·홍보계획’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담당부서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산·홍보 계획의 실적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장기적인 목표 및 전략과의 연관성이 미흡함.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없음.
- 이슈페이퍼 배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없으며, 이슈페이퍼의 발간이 하반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음.

〈개선 및 권의사항〉

-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보완·개선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의 마련을 권고함.
- 기존 시스템의 피드백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시스템 활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활동에 대한 계량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적절한 단기목표를 설정하여 목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연구원에 가장 효과적인 확산 수단을 선택하여 확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홍보채널별로 2013년도 성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012년도 대비 증감, 목표대비 달성률 등을 제시하여 성과의 향상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채널별로 얻은 효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효과분석을 통해 채널별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과 배포대상에 대한 활용도를 평가하여 연구보고서가 낭비 없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이슈페이퍼 배포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측정, 평가하여 보상하는 등의 적시성 향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권고함.
- 이슈페이퍼를 보다 창조적 관점에서 발간할 필요가 있으며, 시의적절한 페이퍼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를 한 후 관련성과를 분석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해당사항 없음.

〈단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0.44편(30.36건/69명), D등급으로 저조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학술지 등 논문 게재 실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연계하여 환경변화 이슈에 적절히 대응함.
 - 선도적인 에너지 정책 이슈 발굴 및 정책대안 개발을 위하여 현안이슈 분석·서비스 체계 운영 필요성 증대
 - 일본 원전사태 이후 에너지믹스정책 재검토 필요성 제기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셰일가스 개발 본격화에 따른 국제에너지시장 변화
 - 전력수급 차질, 잦은 발전설비 고장으로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위한 근본대책의 강구 필요성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창조경제연구실을 신설하여 창조경제 관련 현안분석 및 에너지시장 변화에 대한 정보분석 능력을 제고함.
- 원내 통합정보시스템(KEEI-ERP)에 산·학·연·정 국내·외 전문인력 인적정보 시스템을 구축함(국내 18,265명, 국외 437명).
- 에너지 현안 및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 TF에 연구원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여 현안 분석과 정책대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 외부고객 및 내부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TF’, ‘경영컨설팅TF’, ‘조사발전재단컨설팅TF’를 운영하여 출장규정, 복무규정 등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함.
- 산·학·연·정 협력체계에서 포럼, 협의회 등을 구성 관리하고 에너지 고위경영자 과정, 차세대 에너지리더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에너지정책을 주도적으로 리더하고 있음.
- 2013년 11월 발전, 인력운영, 교육훈련이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은 우수한 실적임.
- 직무, 인력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이 정밀하게 수행되었으며, 향후 계획 대상기간동안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ASSA 미팅을 통해 경제학 분야 우수인재를 채용(4명)하는 적극적 노력이 엿보임.
- 울산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임직원 특별대출 협약 체결 등은 우수한 사기진작책임.
- 직급, 보직, 부서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전문가로 TF를 구성함으로써 인력운영의 유연성 및 현안이슈 대응의 신속성을 제고함.
-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직무분석에 기초한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2018년까지 전체 인력규모를 178명 수준으로 확대 추진함.
- 인력수급계획을 근거로 공정한 채용을 위한 연도별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함.
- 핵심가치 공유, 인재상 정립, 체계적 교육훈련, 보상강화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함(2013년 박사급 8명 채용).

〈단 점〉

- 연구회, 노사발전재단, 생산성본부를 주요 고객으로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은 부적절함(파악한 요구사항도 주요 기능과 연계 부족).
- 신규 직원 심사기준에서 용모가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하지 못함.
- 제시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교육훈련에 해당되는 내용임.
-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조직 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의 제시가 미흡함.
- 내·외부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하고, CRM을 통한 외부요구 파악 노력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발전방향, 제안사항 등의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부연구위원 채용 시에도 인적성검사의 도입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2013년 11월 중·장기 발전계획 및 인력운영계획과 연계되는 교육훈련 수립은 우수함.
- 직무, 인력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이 정밀하게 수행되었으며, 향후 계획 대상기간동안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역량강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함.
-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전년도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2013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함.
- 대내·외 환경변화 및 내부역량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 역량강화 목표, 전략, 중점추진 과제 등을 수립하여 시행함.
- ‘3無 Day’(가족사랑의 날)는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볼만한 사례임.
- 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타 기관에 비해 다양함.
-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상해보험가입, 해외연수, 국내·외 취학연수, 자율연구 등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를 운영함.
- 직종별 특성에 맞게 역량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규직원은 차세대에너지리더 과정, 연수 참여 등 특화된 교육을 시행함.
- 설문조사, 피훈련자 성과확산 활동, 이력관리 등을 통해 교육성과를 plan-do-check-see에 따라 환류함.
- 5개 분야 217건에 대해 211백만원(전년대비 13.4% 증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함.
- 교육훈련 결과를 원내 세미나를 통하여 공유하고, 기타 교육훈련 결과를 KMS에 등재함.

〈단 점〉

- 교육·연수 결과의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의 구축 정도 자료는 미흡함.
- 비연구직의 교육훈련비 비율이 5.9%이고, 1인당 교육비 619천원은 연구직 1인당 교육비인 2,307천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비연구직의 역량강화 노력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구성원 사기진작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멘토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성과 분석이 필요함.
- 비연구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직종별로 차별화된 평가요소를 설정하여 연구실적 및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비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함.
- 부서장평가 및 다면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의 익명성 보장 및 투명성 제고하는 노력은 우수함.
- 업무평가제도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중·장기 목표에 근거하여 단계별 제도개선을 시행함(총 30회 개선활동).
- 교정비 지원, 승진심사 가점부여, 우수논문상 등 연구직의 논문게재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함.
- 연구보고서 질적 평가 시 연고성 배제, 상호 익명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평가체계 운영의 엄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
- 대내·외 활동은 세부항목별 기준 점수에 근거하여 3단계 평가를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
- 업무 유관자 중심으로 ‘업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
- 업무평가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한 피드백 및 이의신청절차를 운영함(업무성과규정에 따라 25건).
- 경영컨설팅을 통한 외부 전문가 자문 및 내부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비연구직 업적평가 계량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국내·외 파견(2명), 안식년(1명), 신규임용(2명)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 기준을 준수함.
- 연구원 비전, 인재상, 인사전력과 연계하여 금전적 및 비금전적 보상을 시행함.
- 평가결과를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의 유인책으로 활용함.

〈단 점〉

- 기관 구성원의 기본자질을 평가하는 ‘역량평가’에 대한 비중이 높음.
- 비연구직의 정량평가지표 및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함(핵심업무성과를 계량화하는 노력 부족).

- 업무평가 결과가 최하위 10% 이내인 자를 승진후보대상자 선정 제외하는 규정은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기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평가가 부서평가, 경영목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승진심사 기준에서 성과평가결과를 50%만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정성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인사위원회가 심의기구로 되어 있고 승진의 최종 결정은 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부서장평가 및 다면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시 특단의 보안 유지책 강구가 필요함.
- 연구직의 역량평가 비율이 26.3%로 실적에 근거한 업적평가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전사적인 관점에서 팀과 개인 간 성과를 연계하여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위원 간 점수차 발생 시 보정제도에 대한 규정화가 필요함.
- 평가결과가 승진과 재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노사발전재단의 정부지원 컨설팅을 통하여 고용관련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노무 관리 역량을 강화함.
- 임금협상에 있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4차례의 교섭을 통하여 정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2013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함.
- ‘일일 인사노무 Report’로 노무지식이 구성원들간에 공유되고 있음.
- 6회의 노사간담회를 통하여 지방이전 현황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였음.
- 청사지방이전 TF를 운영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코너에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
- 3無 Day(無야근, 無자가용, 無깁연)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함.

- 매주 수요일 ‘투게더 1530’을 통한 정례화된 노사소통을 실시함.
- 홈페이지, ERP 및 K-net, 업무용 수첩 사용 등 개별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직원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단체협약 제49조 1항에서 연구원의 부당징계로 인한 구제조치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판결로 의해 부당징계로 ‘확정’되었을 때로 규정함으로서 전체 법질서 체제와 합치됨.
-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노사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수행함.
- 노무전문인력네트워크를 활용한 노사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함.
- 4회의 노사협의회를 적절히 실시하였고, 사고노조 상태임에도 컨택포인트를 설정하여 노사협의를 수행함.

〈단 점〉

- 노무교육의 결과를 구성원이 공유하는 과정은 미흡함.
- 단체협약에 규정해석이 일방에게 있어 경영권침해 가능성 조항(제22조제3항)이 존재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사갈등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일터혁신 컨설팅 결과가 향후 기관의 노사관계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집행의 노력이 필요함.
- 구성원들의 수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고충처리제도, 제안제도 등의 하의상달, 구성원 요구해결을 위한 제도를 체계화하여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함.
-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연구사업비에서 정책과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각 36% 및 52%로 편성되어 있어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과제 비중은 2013년 15.7%(370백만원), 2014년 22.8%(453백만원)로 연구회 제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11.8%) 및 2013년(10.7%) 모두 연구회 제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18건의 집행비율은 83.6% 수준으로 양호한 집행비율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퇴직예치금은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연구과제의 표절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8백만원)는 연구기자재비로 지출해야 하나 수시연구과제의 집행비용으로 일부(4백만원)를 배분하여 처리함.
- 퇴직금 예산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적립하지 않고 연도말에 일괄하여 적립하고 있음.
- 당기 중 발생한 퇴직금을 별도의 퇴직금 계좌에서 지급하지 않고 기관의 운영비 계좌에서 먼저 지급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원 전체에서 활용하는 범용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향후 연구기자재 비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퇴직금 예산 산정 후 연말 일괄 적립이 아니라 분기별로 균등하게 적립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하며, 퇴직금 발생시 퇴직금 계좌에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할 것임.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7%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1,093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2011년부터 능률성과급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여,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음.
- 기본연봉에는 직무급과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 표준지침에 부합함.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30%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표준지침(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등급별 차등지급율이 최고-최저 $\pm 1\%$ 로 연구회 표준지침에 부합됨.
- 기본연봉의 등급별 인원 또한 최고-최저 각 10%로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됨.

〈단 점〉

- 기본연봉의 연봉책정방식은 비누적식으로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을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맞게 운영되도록 누적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26\%$ 차등지급하였고, 비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16\%$ 차등지급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을 준수함.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 또한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비율에 맞게 배분 하였으며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함.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을 업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차등지급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지급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능률성과급의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등급에 각 10%,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국회정무위원회의 1건 지적사항 개선이 완료되고, 7개의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과제 중 5개 개선과제가 완료됨.
- 비정규직 능률성과급의 부적정 집행과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침에 따라 개선함.

- 기관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결과에 대한 전직원 공유가 체계적이고, 개선계획 실행 모니터링과 개선계획 실행 점검결과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기본적 수준의 연구기관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음.
- 업무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시행하여 비연구직 평가지표에 대한 계량화 등을 시행하여 기관 발전방안을 모색함.
- 인턴직원(중증 장애) 1인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는 등 지적사항을 개선함.

〈단 점〉

- 기본연봉 산정방식의 누적식 전환이 개선되지 못함.
- 개선실적이 구체화·계량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지적사항의 개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 개선이 기관발전에 기여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 개선 및 환류체계에서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노사 간 대화를 통하여 누적식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을 준수하는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방안이 구체화되어 실제 기관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고용연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채용 시 가산점 부가, 관련기관 방문들 통한 채용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3년도 중증장애인 인턴 1명을 위촉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1.5%)이 평가기준(2.5%)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장애인신규채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기관장 및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대책회의, 계획수립과 적극적 이행)이 필요함.
- 장애인 우대조치를 연구원 자체 규정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장애인 고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연구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구인활동이 요구됨.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 목표 달성, 퇴직 시 결원 보충이 적시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수인턴 계약직 전환 실적이 양호함(4명).
- 청년인턴 근무관리, 교육지원, 취업지원 전 영역에서 계획과 운영이 잘 수행되고 있으며 실적이 양호함.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을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공고,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반영되고 있음.
- 2013년 신규 1명을 채용하여 국가유공자 고용률 6%를 양호하게 달성하였음.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가 연구원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국가유공자 우대조치를 연구원 자체 규정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국가유공자 고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차별해소 규정(위촉직활용지침, 위촉연구사무원활용지침)이 있으며, 컨설팅 실적이 있음.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추진계획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교육, 복리후생, 편의시설, 휴가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 연구원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관련 규정(위촉직활용지침, 위촉연구사무원활용지침)이 존재하지만, 임금 부분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임금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 향후,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 직원의 의견수렴, 고충처리 시스템을 마련·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함.

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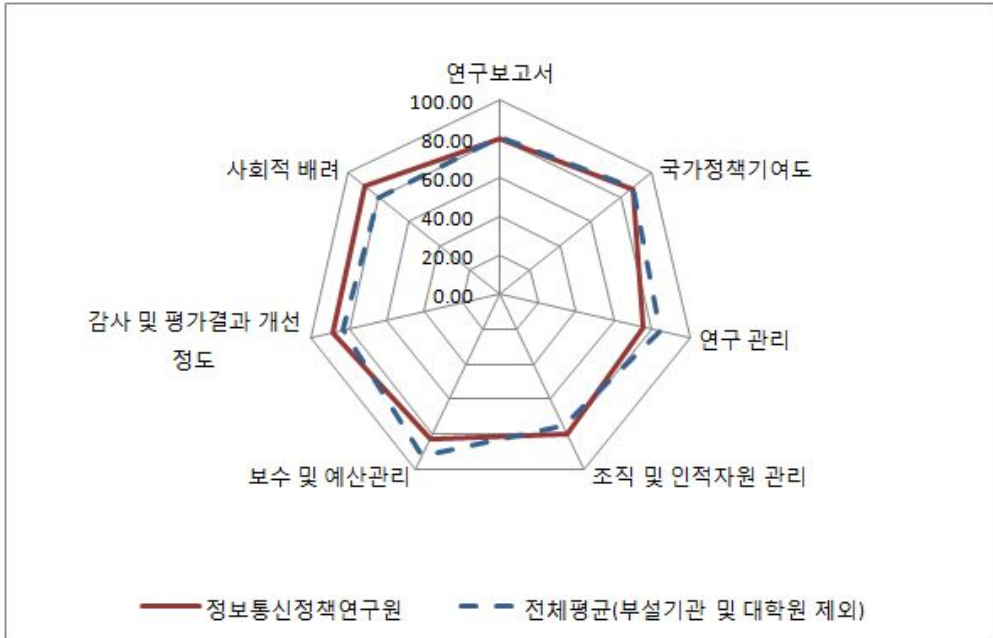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F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A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C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C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A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C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D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B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A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ICT 패러다임과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여 첨단 ICT 매체와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에 비해, 연구 결과를 수월하게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ICT산업 관련 정책은 선제 대응력이 중요한 점을 적시하여, 창조경제와 연관된 연구 주제를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선정하여 대응한 성과를 보임.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임시적 조직개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성과기반의 효율적 자원배분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기본과제의 경우 광범위한 내·외부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6개 분야별로 외부인사가 포함된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과제선정의 엄밀성을 추구한 점이 돋보이나, 수시연구과제는 과제발굴노력이 다소 미흡하고, 선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과제관리가 다소 미흡함.
- 협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협동연구기관간 역할분담 및 기관간 상호협력 추진체계가 잘 설정되어 있음.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부평가위원 풀의 선정과 구성을 확대 및 균형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전공별·분야별 평가위원 구성 노력이 필요함.
- KISDI 연구성과물을 적시에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종합홍보계획(2013~2014)’을 수립하고, 홍보 전담부서(정책홍보팀)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종합홍보계획(2013~2014)’에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주관부서, 구체적인 일정 등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음.

[경영 분야]

-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PEST분석, 내부역량 및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응전략을 도출하고 있으나,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은 주요기능과의 연계가 미흡함.
- 연구활동 전반 및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업무실적을 계량평가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적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계량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됨.
- 노사간담회와 임금교섭을 위한 대화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식적인 노사협의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 직원과 원장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통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나, 수시연구사업비 편성비율은 최근 2년간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내역 중 위탁연구비 비중이 높지 않아 적정하나, 집행비율은 전기 대비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저조함.
- 퇴직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 등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퇴직금을 연초에 집중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퇴직금 추계액보다 많이 적립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고,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 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을 비누적식으로 운영하고, 결산상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율이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실효성 있는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에서 지적사항의 자체개선계획 이행을 경영목표 실천과 연계한 것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었으나, 능률성과급 개선에 한계가 있었고, 개선실적과 개선성과를 구분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 2013년도 장애인 1명을 채용한 실적이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적정하게 달성함.
- 청년인턴 채용 목표 달성도는 양호하나, 청년인턴 전용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미비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4.0%),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도 적정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별정직관리요령, 인사관리요령)과 계획이 존재하며, 그 이행 상태가 양호하고, 기본급, 성과급에 대한 대부분 차별이 해소되었으나, 임금 중 능률성과급 부분에서 정규직(6.5%) 대비 비정규직(3.5%)의 차이가 있으므로, 능률성과급 부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ICT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롭게 전환하는 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시장 전망을 예측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수행함.
- ICT산업에 대한 산업별 걱정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계량적으로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함.
- 스마트폰 시대에 ICT 서비스의 핵심이 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경쟁의 경쟁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시의성이 높고, 플랫폼 경쟁구도를 적절하게 반영함.
- SNS와 사회관계 변화, 소셜 미디어로 인한 문화산업의 변화와 콘텐츠 확산을 통계자료 분석, 사례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 향후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함.

<단 점>

- ICT 분야의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기술혁신의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다른 나라의 규제 제도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미진함.
- 해외 인터넷 산업 연구의 경우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면서 핵심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에 한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안별 연구 내용과 결과 종합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일반적인 정책 수요자 또는 비전문가에게는 다소 생소한 통계기법이나 이론적 모형을 활용하면서도 적절한 해설이 부족하여 연구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가독성과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음.
- 온라인 조사를 활용하는 경우 조사 과정이 불명확하고 대부분 응답률이 낮아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료와 연구 결과의 신뢰도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특정 주제의 경우 연구 관련 자료 수집, 모델링 설계 분야 등 연구 진행 과정 및 정책 대안 제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또는 한계성을 언급함으로써 논리적 체계와 전달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신시장의 흐름을 통찰하고 있으나, LTE 이후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와 대응 정책에 대한 연구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새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의 실현에 맞게 ‘창조경제연구실’을 신설하는 등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기함.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 TF 참여, 관련 기관 회의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도를 보임.

〈단 점〉

- 전반적인 국정과제 참여실적은 긍정적이나 창조경제 관련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여러 건의 유사한 TF 참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발전 기여도를 제고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중·장기적인 연구과제 발굴이 미흡하고, 대부분이 정책적인 성과가 가시화된 연구과제에 집중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에 대한 참여인력 비율, 예산비율, 과제수 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동일과제나 유사과제가 중복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이어그램을 제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임시적 조직개편보다는 국민편익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 베이스의 효율적 자원배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출연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창조경제의 국정과제를 가장 성과 있게 수행하고 정책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새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로 제시된 창조경제에 대해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과제의 수립이 필요함.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ICT 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선제 대응해야 하는 측면이 강한만큼 연구주제 선정 측면에서는 연구기관의 즉시대응정도에 대한 성과가 있었음.
- 79건의 정부수탁과제를 수행하고, ‘프리미엄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정책현안과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단 점〉

- 창조경제의 경우 과제 아이템 선정 면에서 선제적 대응은 있었으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은 미흡하여 정책화실적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개선 및 권의사항〉

- 창조경제와 관련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과제의 지속적 개발과 연구수행이 필요하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향후 정책실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정책 사각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과제개발이 필요함.
- 소비자 권익보호 및 규제 합리화 등 시대적 요구 과제는 연구 수요 제기가 없더라도 선제적인 연구 제시가 필요함.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 국민경제 자문회의, 국회 등과 특정과제 전담반 및 연구반 운영, 포럼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였음.
- 다양한 정책연구기관들과 상시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부정책 입안 및 대안의 공론화에 기여함.

〈단 점〉

- 해외 네트워크의 구체적 성과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해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비의 투입이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중요한 정책연구과제(주파수 경매, mVoIP,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수행을 통해 ICT 특별법 등 법률제정 지원, 비타민 프로젝트, 정부3.0 기본계획 등 다양한 정책수립에 기여함.

〈단 점〉

- 대안의 정책화 과정에서 이용자보호대책 마련이나 이용자편익증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연구과제의 중요성과 정책대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정책화 실적이 부족함.
- 정책의 파급효과 등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예측치가 제시되었으며, 성과를 가져올만한 인과성이 다소 낮고, 국민편익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대안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 후생의 관점에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 또는 논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함.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2013년초부터 사회적 논쟁이 지속된 포털의 불공정성 논란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특히 핵심사항인 중립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킴.

- 미래창조과학부가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2013.10.4.)을 마련하고,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권고안을 준수하기로 발표하는 등의 구체적 연구성과를 가져왔음.

〈단 점〉

- 연구결과의 핵심인 정책 권고안은 사업자들이 미준수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실효성 면에서 제한적이며, 법제화 단계의 정책실현이 제시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검색의 중립성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법적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
- 또한 봉쇄율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봉쇄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좀 더 엄밀하게 테스트하기 위해 OLS 등의 분석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기본연구, 수탁연구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함. 연구과제별로는 수탁연구가 기본연구 대비 높게 나타남.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수탁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기본연구의 경우는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업무유형별 전체평균 대비 큰 차이는 없음.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높았고, ‘구비성’, ‘편리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크게 나타남.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구비성’, ‘공익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특히, ‘편리성’, ‘공정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상세업무 유형에서는 수탁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기본연구는 해당업무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을 정확히 이해’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위한 자료는 충실히 작성’, ‘연구결과물이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연구방법 사용’,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유(성과확산) 노력’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한편 수탁연구는 ‘업무 확인·처리를 위한 담당자와 접촉이 용이’ 항목의 점수가 타 항목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비’, ‘고객이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변화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는 노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최신 동향 파악 노력,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유(성과확산)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및 다양한 채널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하락함. 상세업무별 결과 수탁연구, 공동연구가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함. 상세 업무유형별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본연구, 정보제공, 공동연구, 수탁연구 순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기본연구, 위탁연구, 공동연구, 정보제공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수탁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특히, 수탁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응성’,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 및 요소가 전년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구비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크게 나타남.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나타내며, 특히 ‘구비성’, ‘편리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는 수탁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수탁연구는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모든 세부항목별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사회적 사명감 및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감’, ‘연구결과물을 객관적으로 기술’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에서는 모든 세부항목별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 및 반영절차 구비’, ‘고객이 의견과 불만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 ‘업무 수행(보고회 등) 전, 정보교류가 적절’의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사회적 사명감 및 연구과제에 대한 책임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 연구자의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공동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세부항목별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연구과제의 연구진행 시기 및 신청기간 적절’ 문항은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도 대부분의 세부항목별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 ‘정보이용 관련 고객의견(문의 및 요청사항) 접수 편리’ 문항의 점수는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고객들이 의견 및 불만사항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는 채널 마련, (수탁연구 진행 시)효율적인 업무의 확인·처리를 위한 담당자 접촉 용이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광범위한 내·외부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과제발굴시스템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6개 분야별로 외부인사가 포함된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과제 선정의 엄밀성을 추구한 점이 돋보임.

<단 점>

- 과제 발굴 단계에서 중복성 확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발굴된 기본연구과제 수가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기본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자문위원회 역할이 모호함(과제가 선정된 이후에 자문회의를 개최함).
- 선정된 기본연구과제의 수가 11개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확대 노력이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과제발굴단계에서 연구주제별 중복성 확인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함.
- 과제발굴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시도해 가야 함.
-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52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선정회의에 제시된 28건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지 않는 등 과제발굴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음.

- 과제선정 이전단계에서 자문회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과제발굴 및 선정절차와 추진현황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자문위원회를 과제발굴이나 심의과정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문위원회의 일정을 공식화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과제 발굴과 심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미래창조과학부와 정책현안 관련 전담반 및 연구반을 운영하는 등 상시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음.
- 연구반을 통한 수시연구과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과제종료 즉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함.

〈단 점〉

- 과제발굴 노력이 다소 미흡하고, 선정회의 이전에 과제를 이미 착수한 사례가 있어 (3건) 과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음.
- 발굴·선정된 수시연구과제 수가 타 기관과 비교하여 적음.
- 수시연구과제 연구수행과정에서 내부 중간점검(추진성과 보고)을 통해 과제를 관리함으로써 과제관리체계가 다소 느슨함.
-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중간 심의 대신 자율점검회의를 통해 연구수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효과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보다 적극적인 과제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과제선정규정(절차)에 따라 과제를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함.
-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발굴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현재 진행중인 수시연구과제 수가 적절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중간 심의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협동연구 5개 과제의 협동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협동추진체계가 구체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 협동연구과제의 대부분이 대형과제로서 연구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의 정도는 기술되어 있음.
- 협동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및 기관 간 상호협력 추진체계가 잘 설정되어 있음.

〈단 점〉

- 협동연구의 과제 발굴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 수요조사를 통하여 노력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다소 미흡함.
- 협동연구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과제 수행 시 외부 전문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의 주제 발굴에 어떠한 외부 수요조사를 통하여 노력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필요함.
- 협동연구 과제가 대부분 대형과제이어서 연구성과가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과제에서 원외 연구자가 다수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진체계 수립 단계에서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연구과제 평가 시 과제평가 전담부서(연구관리팀)를 두고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진행, 평가결과 통보 및 피드백 하는 평가프로세스를 잘 관리하고 있음.

- 기본연구과제, 협동연구과제와 수탁연구과제 등 연구의 특성에 따라 차별성있는 평가절차를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자체평가체계의 규정과 운영을 적정하게 함.
- 3단계 평가단계로 구분하고 연구사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평가를 활용하여 연구 품질의 제고에 노력함.
- 평가유형별로 평가시기,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과제의 유형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평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연구진행 단계에서 Peer Review를 통하여 연구품질의 제고에 힘쓰고 있음.
- 외부평가자 풀(Pool) 전공이 분야별로 잘 구성되어 있음.
- 외부평가자의 참여비율이 적정하고, 실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구성현황이 잘 제시되어 있음.

〈단 점〉

-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전공별 평가위원 분포에 대한 분석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전공별 평가위원 분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연구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연구발간물 작성 및 발간지침’, ‘연구사업관리요령’, ‘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 ‘보안업무내규’,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등 지식재산 보호규정을 두고 있음.
- 2013년 3월 KISDI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활동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2013년 12월 방송·뉴미디어 통계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자 접속환경의 수용성과 확장성을 제고하였음.
- ‘연구발간물 작성 및 발간지침’을 통해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 연구진의 지식재산 보호규정을 적절히 갖추고 있음.
- 업무종합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성과물의 활용도를 제고한 점은 긍정적인임.
-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스템별로 성과를 제시한 점은 장점임.

- KISDI 연구성과물을 적시에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종합홍보계획(2013~2014)’을 수립하였고, 홍보 전담부서(정책홍보팀)를 운영하고 있음.
- 전년대비 언론보도 55% 증가, 홈페이지 방문자수 26% 증가, 모바일웹 방문자수 128% 증가, 트위터 팔로워수 159% 증가, 웹 접근성은 6.7점(2012년 공공기관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안전행정부 2013.4. 발표) 상승한 실적은 긍정적인임.
-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홍보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4대 전략목표를 통해 홍보계획을 마련한 점은 체계적임.
- 홍보의 성과측정 시스템(I-O-O)을 운영하여 이행실적 및 전년 대비 효과 등을 분석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임.
- 홍보 성과의 분석지표를 마련하여 전년 대비 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한 점은 긍정적인임.
- 외국어 홈페이지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체계를 구축하려는 점은 긍정적인임.
- 연구보고서를 다양하게 배포하고 있음.

〈단 점〉

- 지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 자체평가시스템, 성과지표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함.
-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을 피드백하고 분석하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종합홍보계획(2013~2014)’에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주관부서, 구체적 일정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종합홍보계획(2013~2014)’이 의도하는 실적의 구체적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연구결과 확산수단의 효과성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수단 체계 조정을 위한 노력 및 성과가 미흡함.
- 원내·외 조직을 구성하고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이 다소 미흡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연구성과에 대한 확산실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당기 성과와의 차별성이 다소 미흡함.
- 연구실적 확산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있음.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확산수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성과결과의 해외확산을 위한 채널이 다양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수준임.
- 연구결과물의 배포 방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고, 발간물 관리프로그램은 다소 형식적인 수준임.

〈개선 및 권의사항〉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함.
-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전략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축된 시스템도 환류를 규칙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당해연도의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둔 성과지표와 단기 목표치의 제시가 필요함.
- 연구성과의 확산수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연구원에 가장 효과적인 확산수단을 선택하여 확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함.
- 홍보 성과측정 시스템을 통해 효과 분석을 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나,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므로 향후 더욱 정밀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홍보 확산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효과분석에 따른 홍보 채널의 차별화 전략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수요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배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해외네트워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물의 해외 확산을 위한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해당사항 없음.

〈단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0.64편(45.78건/71명), C등급으로 저조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내·외 학술지 게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권고함.
- 상대적으로 정책전문지 의존도가 높은 편이므로 전문학술지 게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Ⅱ 경영 분야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환경변화 이슈는 기관의 주요기능과 적절히 연계되어 도출하였음.
-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PEST분석, 내부역량 및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응전략 도출함.
- 새 정부 출범, 정부조직개편, ICT 생태계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 및 정책수요에 대응한 4대목표 및 13개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함.
-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조경제연구실’을 신설하고, 융합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를 위해 ‘미래융합연구실’을 개편함.
- 연구·경영환경 관련 내부요구를 수렴하여 지원부서 평가의 정량화, 연구·경영업무 효율성 제고방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
-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와 상시적인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고객요구에 부응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 우정경영연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소장직에 대해 외부공채 실시 및 특별보상체계 마련(기관장과 동일한 성과연봉 지급액 제시)과 해외 박사 국내 이주비, 교통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알선 등 지원은 우수한 사례임.
- 연구수요변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군 직종별 거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함.
- 서류 및 면접전형 심사기준에 따른 정량적 평가, 연중 수시채용(7회 공고) 등 객관적 심사기준에 따른 채용을 실시함.
- 연구수요에 기반한 우수인력 채용 및 채용방식 다양화로 최근 3년 간 박사인력 비율이 27% 증가한 63% 수준임.

〈단 점〉

-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은 주요기능과 연계가 미흡함.

- 외부 환경변화 및 내부역량 분석 등에 따른 새로운 전략 수립의 필요성 제기, 신정부 정부조직 개편 및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조직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가 다소 미흡함.
- 내·외부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직무분석, 기능과 연계한 사업분석, 인력구조 분석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당해 연도 인력운영계획 수립이 미흡함.
- 텔파이 면접은 부적절한 용어 사용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고유 기능과 관련된 우수한 외국 인재를 발굴·초빙하기 위한 해외 우수인재 지원책(정주 여건 마련 등) 마련이 필요함.
-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발전방향, 제안사항 등의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채용 심사 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인적성 검사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당해 연도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인력수급계획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직원 경력개발을 위한 중·장기 교육목표 및 로드맵을 구축하고, 전년도 지적사항 분석 및 전 직원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반영함.
-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면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차세대 핵심 인력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근무동기를 유발함.
- 전 직원 대상 교육훈련 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무별로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함.
- 연구직에 대해 학위과정, 연구윤리교육, 장단기 연수 등을 실시하고, 행정직에 대해 직무교육, 감사교육 등을 실시함.

- 학위취득자에 대해 텔파이 심사를 통한 연구책임자 전환, 리더십교육을 통해 보직순환 및 관리자 임명에 반영, 우수 계약직 1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우수 인턴직 4명에 대한 계약직 채용 등의 실적이 있음.
- 2013년 집체교육 활성화로 총 교육훈련비 예산을 절감함(전년대비 교육훈련 인원 11명 증가, 1인당 교육훈련비 289천원).

〈단 점〉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교육훈련프로그램 수요조사는 실시했으나 전년도 교육훈련성과분석 등을 통한 당해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이 미흡함.
- 고유기능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미흡함.
- 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음.
- 실무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부적절함.
- 제시한 구성원 역량강화 실적의 운영성과 및 효과 내용이 미흡함.
- 교육훈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은 중·장기 계획 및 전략없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임.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피드백이 부재하여, 교육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석·박사 학위과정에 대한 전액지원 제도의 경우 개선 검토가 필요함.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과 연계되는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비연구직 교육훈련비 비율이 9.2%에 불과하여, 향후 비연구직의 역량강화 노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연구직/비연구직별 차별화된 평가항목 및 요소를 설정하고, 차별화된 비중을 합리적으로 설정함.

- 연구활동 전반 및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업무실적을 계량평가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적평가시스템을 구축함.
- 기본연구과제 최종평가 내·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정규연구과제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함.
- 내부 1인, 외부 2인에서 외부 3인으로 전원 외부평가 위원으로 구성하고, 30점 이상 점수차가 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우수연구논문 평가지침에 의거 국내·외 공인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심사하여 장려금(우수논문상)을 지급함.
-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실적, 업무역량 및 태도 등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규정함.
- 반기별 정규연구과제 배점회의 및 과제별 참여율 조사를 통한 개인배점 계량평가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함.
- 평가자 및 평가조정자의 2단계 평가를 통한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함.
- 평가자는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평가결과 피드백 및 이의신청제도 운영으로 업적평가의 투명성 확보 및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평가요령, 연구사업관리요령 등).
- 신규임용, 휴직 등으로 인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함.
- 승진(1년 간 B등급 이하), 재임용(임용계약기간 동안 C등급 이하) 중 인사관리에 업무실적 종합평가결과를 100% 반영함.
- 평가결과를 교육대상자 선발, 포상, 연구과제 배정 등 비금전적 보상과 직접 연계하여 활용함.

〈단 점〉

- 직원 평가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조직적 개선활동 노력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연구보고서 평가결과 평가위원간 평가점수 격차가 큰 3개과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의신청 제도가 아닌 단순 재평가 제도임.
- 비연구직 업적평가 계량화 노력으로 배점기준 20%를 계량화한 노력은 인정되나, 그 시행시점이 2014년으로 2013년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인사 및 업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총 예산 중 출연금 비율이 약 13%로서, 자체수입이 많아야 하므로 O/H 기여율을

연구직 평가기준(1,800/2,200점)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해되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출연금 비율 높이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를 연구관리팀이 전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기대할 수 없어, 개선TF 구성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승진을 평가하는 업적의 최소기준이 1년에 불과하므로, 객관적인 평가결과와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승진업적 평가기준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간부회의 결과를 업무실적종합관리시스템에 상시공개하고 주요 공지사항을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 연구원의 현황을 전 직원과 신속히 공유하고 있음.
- 정부 기준 임금인상률 준수하여 임금협상을 완료함.
- 지방이전 직원 배우자의 재취업 관련 수요조사 등 노사 간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노력함.
- 지방이전 지역과 연구원과의 교류협력(충북혁신도시 노사 공동 농촌 탐방체험, 노사 공동 문화탐방)시 가족 참여 등 다양한 노사협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인력 운용, 임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5회 이상의 노사간담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관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사무환경 만족도 등 전직원을 상대로 각종 의견수렴을 하는 실적이 많음.
- 평가기준 등에서 제시한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준수하고 있음.
- 노무역량강화를 위해 인사노무관리자에 대한 5회 교육과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6회의 교육, 여성보호 및 회계 관련 교육을 수행함.
- 노사간담회와 임금교섭을 위한 대화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의 단체협약으로 개정됨.

〈단 점〉

- 노무교육 후 결과를 내부공지 등을 통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부족함.
- 전 직원과 원장과의 직접적인 소통통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단체협약 제32조 2항(“연구원은 연구원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거부, 제보, 고발한

조합원에게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과 관련하여 ‘반사회적’이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어 검토가 요구됨.

- 의견수렴 이외에 정례적인 의사소통 통로의 제도화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노무 교육 결과나 정보를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하는 제도가 필요함.
- 수시대화와 전 직원 상대로 의견수렴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구성원들이 의사전달 통로로 인식할 수 있는 정규적인 제도의 상설화와 조직화가 필요함.
- 다양한 경로를 통한 노사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제안제도,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종합하여 전체구성원의 하의상달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많은 직원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를 정례화하여 그 결과를 기관발전의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연구사업비 편성에 있어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는 838백만원, 정부제안 연구 과제 사업비는 342백만원으로 편성비율이 40%이며, 2014년에도 43%로 편성되어 있어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13%(116백만원), 2014년 24%(119백만원)로 연구회 제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3년에는 6건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업비 집행은 적정하며, 전액 외부 위탁으로 지급한 금액 없음.
- 전년도에 기중에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액을 출연금 계좌에서 지급하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2013년 3월부터 반영하여 퇴직금 계좌의 별도운영을 시행하고 있음.
- 퇴직예치금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으로 분산되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3.9%(50백만원), 2013년 6.0%(50백만원)로 연구회 제시기준(10~20% 범위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6건의 집행비율 72% 수준으로 전기(69%)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임.
- 퇴직금 계좌에서의 이자수입 제고를 목적으로 1분기에 전체금액 9억원 중 6억원을 적립함으로써 분기별 균등한 적립이 되지 않음.
- 연도말에 정확한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하지 않고 퇴직금예산 및 국민연금보험료 잔액 중 일부(44백만원)까지 추가로 적립(1억원)하였으나, 실제 정확한 추계액(34억원)보다 퇴직금 적립금액(37억원)이 많아진 결과가 나타남.

〈개선 및 건의사항〉

- 2013년도 수시연구사업비 예산은 전년보다 증액편성하였지만 평가기준에는 미달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편성기준방향 제시 등).
- 이월과제를 제외한 당해연도 말까지 완료되는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목적의 출연금 예산은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집행하지 않고 분기별 균등적립 또는 분기별 추계액 기준 등 합리적인 적립기준을 마련하여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연도말의 퇴직금 적립은 실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함.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2.3%)은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2,273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함.
- 기본연봉에는 직무급과 기타 수당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연봉에 자동 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고 있음.
-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0%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봉의 연봉책정방식은 비누적식으로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을 준수하지 못함.
- 기본연봉의 등급별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을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맞게 운영되도록 누적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본연봉의 연봉책정방식과 등급별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이 평가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28\%$ 차등지급하였고, 비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16\%$ 차등지급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을 준수함.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고 있는 바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이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되었으므로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함.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지급 시 연구직과 행정직을 포함한 경우 최고, 최저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이 10%의 기준에 부합함.

〈단 점〉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2배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을 평가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능률성과급 지급 시 연구직과 행정직을 포함한 경우 인원배분비율에 대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나, 연구직의 경우 최저등급이 10%미만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국회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이 없었고, 12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완료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하여 전직원 설문조사와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외부진단을 통하여 내·외부 의견 수렴, 과제별 AHP분석을 포함한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를 가지고 있음.
- 연구기관 평가결과 환류체계가 5단계로 명확히 분리되어, 각 단계별 조치사항과 절차가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음.
- 지적사항의 자체개선계획 이행을 경영목표 실천과 연계한 것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는 장점임.
- 일상감사 범위가 조정되고 통합자금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상시 회계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함.
- 비연구직 업무수행실적 평가지표의 계량화가 완료됨.
- 신규인턴에 대한 고충해결 지원을 강화함.

〈단 점〉

- 능률성과급 지급 시 차등지급률에 대한 조정이 여전히 미흡함.
- 지적사항의 개선완료에도 불구하고 개선실적이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를 가짐.

〈개선 및 건의사항〉

- 능률성과급 차등 지급률이 최고, 최저 등급 간 2배가 되도록 조정이 필요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채용공고, 서류 및 면접 전형 시 장애인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3년에 장애인 1명을 채용한 실적이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0%로 평가기준(2.5%)을 상회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 분담금 납부실적은 없음.
- 장애인 우대조치를 연구원 자체 규정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장애인 고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목표 달성, 청년인턴 퇴직 시 결원보충이 적시에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인턴의 계약직 전환실적(4명)이 양호함.
- 청년인턴오리엔테이션, 멘토링, 근무평정, 고충처리제도가 잘 이행되었고, 맞춤형 인턴에 대한 맞춤형교육과 취업지원 실적이 있으나, 청년인턴만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적은 다소 미흡함.
- 청년인턴제 운영 및 이행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을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대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전형 시 5% 가산점제도를 두고 있음.
- 2013년에 국가유공자를 고용한 실적이 없으며,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비율은 4%로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연구원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므로, 신규고용을 위한 기관차원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대책회의, 계획수립, 관련기관 방문 등)을 강구해야 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별정직관리요령, 인사관리요령)과 계획이 존재하며, 그 이행 상태가 양호함.
- 기본급, 성과급 임금분야에 차별해소가 되어있으며, 그 이행이 적절함.
- 복지 분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이 없음.
- 임금 중 능률성과급 부분에서 정규직(6.5%) 대비 비정규직(3.5%)의 차이가 있으므로, 능률성과급 부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07

통일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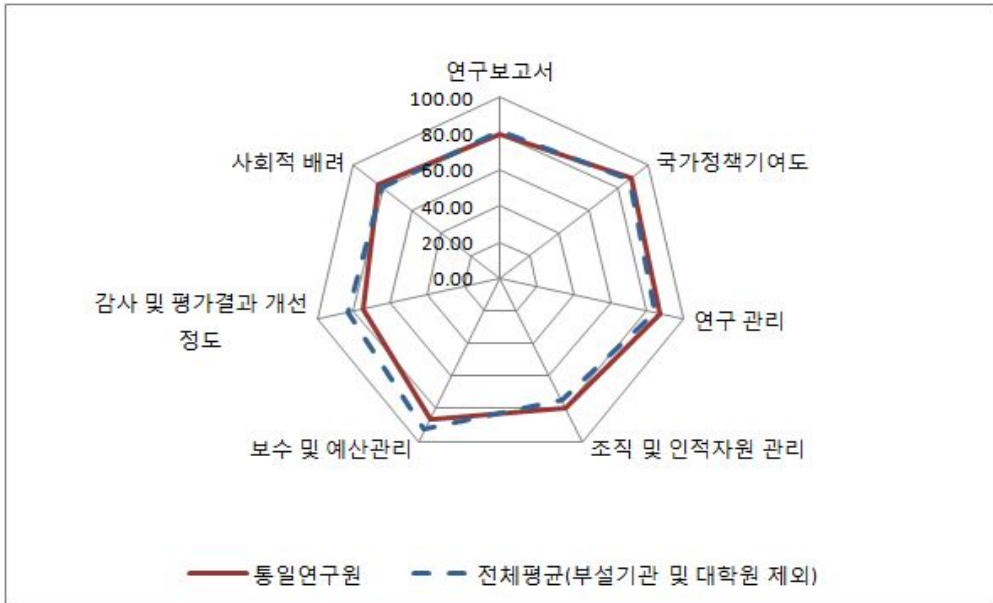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E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A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우수 |
| |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A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C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A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E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C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B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A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한 반면에 북한 현실에 대한 적응 가능성과 대북정책 함의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소 미진함.
- 외부 관련 단체들과의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킴.
- 수시과제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장기적인 기반 연구에 대한 자원 배분이 취약해질 수 있으며,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 방안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확대, 협의부처 다각화, 수요조사 확대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과제발굴노력이 전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나, 과제선정 및 배분 관련 회의에 외부위원의 참여율이 다소 저조함.
- 협동연구를 추진·발굴함에 있어서 과제수행과정 상에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목표에 협동연구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협동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임.

-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피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원내연구원의 담당역할이 다소 미흡함.
-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실적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외부평가위원 풀(Pool)의 선정과 구성을 확대 및 균형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전공분야·소속기관별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메일서비스 수신대상자에 대한 일괄 정리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이나,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수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홍보자원을 효과성이 높은 홍보수단에 집중하는 등의 효율적인 확산수단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노력은 미흡함.

[경영 분야]

- 국정과제 관련 북한비핵화팀, 한반도프로세스TF,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추진단 등 전문연구팀 및 TF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되는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연구직에 대해 과제별 평가점수의 과도한 차이 보완제도를 마련하고 비연구직에 대해 계량화 항목 개발 및 업무연계성에 기초한 그룹별 상호평가를 분리·실시하고 있으나, 재직기간(경력)을 20% 반영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임금, 단체협약 등 갈등이슈를 노사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노조와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불합리한 일부 단체협약 조항 개정을 위해 노사가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내역 중 위탁연구비 비중이 높지 않아 적정하나, 집행비율은 저조함.
- 퇴직금의 적립은 소요되는 금액을 분기별로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고, 적립계좌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에금 및 퇴직연금 등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과 비간부직 성과연봉의 차등지급을 및 인원배분비율 또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의 비누적식 운영,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호봉제의 유지, 간부직 성과연봉 차등지급을 기준은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지적사항 개선절차,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가 실효성 있게 수립되었으나 개선실적이 미흡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국회 지적사항 개선절차와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절차와 종합한 개선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2013년에 2명의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함.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양호하고 청년인턴 운용도 적정하지만, 멘토링 실적이 없으므로 멘토링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이 요구됨.
- 국가유공자 채용실적이 전무하므로 기관 차원의 조치(대책회의, 계획수립, 관련기관 방문 등)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의 신설을 권고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임금 분야 뿐 아니라 복지 분야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으나, 기간제 계약직 직원 운용규칙 제11조에서 임금 분야에 관한 정규직과의 차별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을 권고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한 연구의 풍부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화와 양질의 거버넌스 접근방법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 내용의 독창성과 분석 체계의 완성도, 연구의 심도와 정책 활용도 등의 기대효과가 높으며, 특히 방대한 시간을 투입한 면담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부가가치를 높인 측면이 있음.
- 북한의 시장화에 관한 연구의 경우 북한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
- 우리나라 통일 공공외교의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일 외교 실태를 5단계로 분석하여 체계성과 논리성을 높임.

〈단 점〉

- 북한 체제 연구의 가변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분야별 정책 전망의 근거 제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유형별로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정책 변화에 대한 고찰이 다소 미진함.
- 북한 현실에 대한 적응 가능성 및 대북정책 함의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논리적 연계성이 다소 미흡함.
- 북한 체제 연구에서, 동유럽 체제 전환 문제와 북한의 사회적 혼란 및 변화 가능성이라는 서로 상이한 문제를 연결하여 연구내용이 다소 산만한 측면이 있음.
- 적절한 주제와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일반적인 인권 논의를 연결시킴으로써 논리적 괴리를 유발한 경우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한 특수한 사안의 경우처럼,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검증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정책 대응 연구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정책대안이 지나치게 일반론적 당위론적 입장에 머물고 있어서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감안할 때 어떤 구체적 정책을 어떤 시간 스케줄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함.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기존의 5개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국정전략에 맞추어 상설연구팀과 현안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수행에 74%의 자원을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음.
- 정부의 핵심정책과제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계획에 맞추어 북한인권, 통일외교, 통일준비 역량강화 등에 균형있게 자원을 배분하고 있음.
- 새 정부의 통일정책의 이론화, 전략도출, 제도화, 확산 등 전 분야에 고르게 기여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국가현안과 관련된 신속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

<단 점>

- 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이후, 북한의 핵개발 등, 변화된 남북한 및 국제정세를 반영한 전략적 통일방안 연구가 미흡함.
- 북한의 급변 및 우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 분야를 제외한 대비계획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과 인력을 과제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체계적 모형 정립이 필요함.
- 통일부의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북한인권백서 발간은 물론 후속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공식적 업무를 대신하는 정책 자료와 통일정책 관련 대국민홍보 확대가 필요함.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통일대계연구, 북한 내부정세분석 등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결과들이 정부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장점임.
- 국가기관의 긴급 및 수시요청에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음. 특히 기획조정실 연구과제 관리위원회가 사전심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정부요청사항을 수시/긴급으로 분류하여 부응하는 점이 인상적임.
- 개성공단의 내실화, 국제화 전략은 물론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정책자문을 한 점은 높이 평가함.
- DMZ세계평화공원 사업추진단을 기관장 직속으로 신설하여 국정수행의 이론적 기반과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 돋보임.

〈단 점〉

- DMZ세계평화공원 설립 추진계획과 추진기반이 확정되기 전에 민관협의체인 코리아 DMZ협의회에 역량을 배분하는 것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을 우려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지나친 수시과제 수행으로 연구기관 고유의 장기적이고 이론적인 기반연구에 소홀해 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
- 통일 담론 형성을 위한 장기과제와 통일전략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자료의 축적이 필요함.
-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낼 수 있는 검증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동학술회의 개최가 요구됨.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고위급 정책협의와 정책자문 외에 통일부,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155회에 걸친 실무급 상시적인 협의채널의 가동이 돋보임.
- 북한인권정책연구협의회, 통일정책연구협의회 등, 외부 관련 단체들과의 융·복합 연구를 위한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권역별 학술회의를 통해 성과를 확산시킨 점이 인상적임.
- 다양한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

- 미국, 중국, 샤이오 인권포럼, 한·미·일·중·러 워크숍 등 국외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는 기관의 자산일 뿐, 아니라 통일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임.

〈단 점〉

- 유럽, 특히 독일과의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요구됨.
- 북한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대비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통일문제 관련 범정부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발히 유지,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국내, 해외 NGO와의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북한내부정세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높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 연구로 축적된 성과가 북한인권정책수립에 기여하였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보고서 채택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공론화에 기여함.
- 북한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인권문제와 연계하여, 법제화하는 토대를 제공하였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
- 국제통일전략대화를 정례화하였고, 1.5트랙 정책협의체인 한반도국제포럼을 내실화 하였음.

〈단 점〉

- 미·북회담, 6자회담, 남·북회담의 동시추진을 제시한 것은 학술적 차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겠으나, 정책적 차원에서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있음.
- 북한취약계층 지원을 인권차원에서만 접근할 경우, 남북관계 상황을 도외시 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북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북한인권문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인권법, 북한취약계층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하여 쟁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통합적 방안이 요구됨.
- 북한의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성 규명 활동을 정부와 민간시민단체의 역할로 구분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 DMZ세계평화공원 설립을 뛰어 넘는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마스터플랜이 요구됨.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철학적 기반을 제시하여 국정철학의 이론기반을 마련하였고 신뢰 관련 대북정책·외교정책 수립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
-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하여 새로운 통일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통일, 외교, 국방 분야의 정책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강점이 있음.

〈단 점〉

- 신뢰의 개념에 몰입되어 신뢰국방정책이라는 영역외의 분야까지 과도하게 논리적 확산을 꾀한 점은 아쉬운 대목임.

〈개선 및 건의사항〉

- 남북 사이에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서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함. 상세 업무별 결과 기본연구, 수탁연구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정보제공

서비스에서 큰 폭으로 하락함. 상세 업무유형별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기본연구, 공동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수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는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특히, 수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는 전체평균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남.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준비성’, ‘성실성’, ‘구비성’, ‘편리성’의 경우 전년 대비 낮게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높았음. ‘전문성’, ‘합리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크게 나타남.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준비성’, ‘편리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특히 ‘구비성’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상세업무 유형에서 수탁연구, 정보제공의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공동연구는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정확히 이해’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과제 수행으로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을 선도’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의 경우 ‘고객이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 문항이 특히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의 경우 ‘이용 목적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점수가 타 항목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이용 관련 고객의견(문의 및 요청사항) 접수 편리’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온라인 상 정보 획득이 용이할 수 있도록 메뉴·화면 구성 노력, 최신 정보의 지속적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소폭 하락함. 상세 업무별 결과 기본연구, 공동연구, 정보제공서비스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함. 상세 업무유형별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보제공, 기본연구, 수탁연구 순으로 나타남. 수탁연구는 해당 업무유형 평균대비 크게 낮게 나타남.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대부분 전체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 공동연구는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특히, 수탁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준비성’, ‘구비성’,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 및 요소가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편리성’의 경우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나타내며, 특히 ‘구비성’, ‘편리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는 공동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낮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을 정확히 이해’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결과물(보고서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 ‘연구과제 수행으로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을 선도’,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성과확산) 노력’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의 경우 모든 세부항목별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객이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 ‘관련 지침과 절차에 의거하여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 ‘연구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비’가 매우 낮게 나타남. 공동연구에서는 ‘연구과제 진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보유’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과제의 연구진행 시기 및 신청기간이 적절’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의 활용 가치’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락처 업데이트 등 지속적 고객관리 위해 노력’,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성과확산) 노력’, ‘정보이용 관련 고객의견(문의 및 요청사항) 접수 편리’의 점수가 타 항목 대비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담당자 지정 및 시스템 구비 등을 통해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제 구축, 고객들이 의견을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확인 및 정비, 고객과 담당자간의 접촉(전화, 이메일, SNS 등)이 용이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확대, 협의부처 다각화, 수요조사 확대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과제발굴 노력이 전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했음.
- 전년도 지적 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기울이고 있음.

- 발굴과제의 제안자를 명시하는 등 과제발굴과 처리에서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시행해 왔음.
- 과제선정 관련 전년도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초연구와 정책연구과제 선정지표 차별화(개선)하여 합리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 과제 심의 과정에 비보직자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

〈단 점〉

- 과제선정 및 배분 관련 회의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활동 실적도 30% 미만으로 다소 부진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선정되지 못한 기본연구과제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수요조사 대상을 유관 학회, 유관 기관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과제선정 및 배분 관련 회의에 외부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과제관리위원회에 공무원, 유관 기관 실무자, 학계와 연구자 등 외부 전문가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명시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고 외부 네트워킹을 강화하여야 함. 이러한 절차를 갖추고 있을 때만이 연구 심의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및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국내·외 정세 분석에 따라 수시연구예산을 확대함.

〈단 점〉

-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발굴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심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음.
- 과제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가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과제에 따라 가능한 경우 심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결합할 필요가 있음. 즉, 과제의 성격에 따라 외부 전문가 심의 절차를 구분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종료 즉시 해당보고서가 홈페이지에 등록될 수 있도록 과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관리에 대한 형식적 절차는 준수하고 있으나, 2013년도의 경우 1개 과제가 ‘출판불가’로 판정되었으며, 3개월 이내의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수행 점검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를 위한 추진체계를 잘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협동연구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가 보완되었음.
- 협동연구를 추진 발굴함에 있어서 과제수행과정 상에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경영목표에 협동연구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협동연구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협동연구 5개 과제 모두 대형과제의 형태를 가지고, 협동연구 추진 필요성, 협동연구 추진체계 및 각 협동연구기관별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음.
- 협동연구 결과에 대한 국제 언론홍보 등 적극적인 시너지 효과창출에 노력하고 있음.

〈단 점〉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규정만 마련되어 있음.
-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피상적이며, 원내연구원의 담당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 수행 연구진들에 대한 보다 가시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 협동연구 과제에 대한 원외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성이 요구됨.
- 과제 내 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구체성이 요구됨.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실적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음.
- 자체평가체계의 제도를 보다 개선하였고, 단계별 심의평가의 경우 과제 유형별 특성에 따라 제도화하고 있음.
- 평가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연구보고서의 과제명, 목차, 요약만 제공한 후 원외 평가자 후보를 추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연구과제 및 사업 유형에 따라 평가의 차등성을 갖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각 평가단계별로 평가표를 구축하여 품질 제고를 시행하고 있음.
- 이의신청 제도에 관한 운영실적과 피드백 절차는 돋보임.
- 평가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외평가자를 선정하고 익명성 보장을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비공개로 평가를 수행함.
- 8개의 전공분야로 다양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축하고 있음.

〈단 점〉

- 평가위원 풀(Pool)의 소속별, 전공분야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과제의 전공분야를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평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평가자 선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평가표의 기술과 더불어 제시한 양식을 작성기법에 검토가 필요함.
- 평가위원 풀(Pool)의 전공분야별 분포 등을 통하여 형평성있는 평가위원의 확보를 추진하여야 함.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연구과제 보안성 심사, 보안규정,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제·개정함.
- 2013년 11월, 북한인원DB 고도화를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함.
-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관련 시스템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음.
- 2013년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연구과제 및 일정관리의 편의성을 증대한 점은 긍정적임.
- 홈페이지 방문자 및 다운로드 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로그인 메뉴를 삭제하는 등 홈페이지의 편의성 제고도 한몫한 것임.
- 외부 확산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규 네트워크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임.
- 방원간담회 개최건수가 전년대비 42% 증가하였고, 언론인터뷰, 보도건수가 전년대비 88.9% 증가하였음.
- 이메일 서비스 수신대상자에 대한 일괄 정리 작업을 수행하여 9,100명 중 1,600명 삭제 하는 등 이메일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한 점은 긍정적임.
- 연구보고서를 해외기관 및 학자들에게 선별적으로 배포하여 해외 고객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것은 장점임.
- 국가별, 확산 매체별 연구성과 확산 실적을 제시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해외 홍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은 긍정적임.

〈단 점〉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수준과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2013년에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성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저작물 및 저작권 관련 지침과 기록물 관련 지침 등 폭넓은 내규 정비가 필요함.
- 시스템의 효과분석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노력은 다소 부족하며, 시스템의 성과를 계량화 시켜 보여주는 노력은 미흡함.
-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계획 수립이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이고, 홍보·확산 계획에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단기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홍보·확산 실적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연구성과 홍보 실적에 대한 계량화 실적도 중요하나, 양적목표에 치중하여 효과 분석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함.
- 연구결과에 대한 홍보와 홍보성과를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연구성과 확산 실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당기의 차별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 이슈페이퍼의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며, 배포기관에 대한 효과성 분석도 시행되지 않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함.
- 당해연도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구체적인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할 것을 권고함.
- 기록물관리지침 등 세부적인 지식재산 보호 규정을 더욱 폭넓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구체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개선과제를 찾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활동에 대한 계량적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적절한 단기목표를 설정하여 목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함.
-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는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확산 수단 체계를 구축하여 전략적인 홍보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권고함.
-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한 전략 수립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즉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한 후 다시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과 배포대상에 대한 활용도를 평가하여 연구보고서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성이 높은 곳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반송자료 최소화 보다는 이용도와 활용도가 낮은 배포처에 대한 배포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이슈페이퍼 발간의 적시성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수단 마련을 권고함.
- 수요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배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27편(33건/26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전문지 게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므로 향후 전문학술지 게재를 늘릴 필요가 있음.

II 경영 분야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주요 기능과 연계한 환경변화 이슈 및 고객요구사항 도출은 적절함.
- (환경변화 이슈) 북한 체제의 가변성 증대에 따른 시의적절한 정세분석 요구 증가, 2013. 3. 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결정, 정부3.0 비전에 따른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요청
- (고객요구 사항) 4대 국정기조 "평화통일 기반 구축" 추진방향 설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론 정립 및 콘텐츠 개발, 점검 및 평가 요구 등
- 국정과제 관련 북한비핵화팀, 한반도프로세스TF,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추진단 등 전문연구팀 및 TF를 운영함.
- 북한 정세급변에 따른 정세분석팀 기능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외적 관심 제고관련 대외협력팀 조직을 강화함.
- 정부 3.0 비전에 부합하는 책임관제 신설 및 정보공개를 확대함.
- 환경변화 대응 조직운영 및 고객요구 대응 운영실적, 효과는 구체적임.
- 감사원의 2012년 임금환수 결정에 따른 대응 실적은 우수함(기관장의 의지와 노조의 적극 참여로 전 직원의 임금삭감 합의 및 시행).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으로 3인 전환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노력함.
- 인센티브개선TF, 성과관리위원회 등 제도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위원회 신설·운영함.
-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정보화 체계를 통한 부서별 협업을 증진함.
-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지침 정비를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사례가 91.3% 감소함.
- 신규인력 채용 시 전공의 다양화와 소수자 배려 등 인력운영 합리성을 강화 하였으며, 무기계약직 3명을 전환함.

- 인사관리규칙 개정으로 인사 전 과정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유지하고, 행정직 채용 시 외부기관의 인적성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함.
- 응시자 편의 제공, 우수 인력에 대한 가점 부여(SSCI논문, 외국어 능통자 등), 객원연구(위)원 제도 등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함.
- 평가결과 후순위자 채용 제한제도와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운영하여 박사 지원자 비율이 전년대비 38% 증가함.

〈단 점〉

- 기관 특성을 고려한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함.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발전방향, 제안사항 등의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다소 미흡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에 근거한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이 미흡함.
-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당해연도 인력운영계획 수립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통일 관련 대국민 의식조사의 정기적 실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행정직에만 실시하고 있는 인적성 검사를 연구직에도 도입하도록 검토가 필요함.
- 독일의 통일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적극 유치 및 활용 노력 필요함.
- 연구직 채용 시에도 인적성 검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과 연계되는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포상, 소통증진, 고충처리, 복리후생 등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
- 직급·직종별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52건(전년 대비 126% 증가), 94명(전년 대비 370% 증가)의 교육 실적이 있음.
- 2013년도 교육훈련비 7,467천원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함.

〈단 점〉

-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및 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이 미흡함.
- 사내 체력단련시설의 무료이용을 사기진작 실적으로 제시한 것은 부적절함.
-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부재함.
- 외부기관과의 학술회의를 통한 구성원 연구역량 강화 실적은 통일연구원 구성원이 전문가로서 외부 비전문가를 교육한 실적으로 내부역량강화 실적으로는 부적절함.
- 교육·연수 결과의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의 구축 정도가 미흡하며, 단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고 있음.
-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교육 훈련계획의 수립이 미흡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 1인당 교육훈련비는 평균 7만9천원으로 최하위 수준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연구직은 연구실적 위주로, 비연구직은 업무실적 및 역량평가 위주로 차별화된 평가요소를 설정하고 반영비율도 차별화함.
- 연구직은 90% 구체적 계량지표로 평가하고, 비연구직은 업무자료 기한 내 제출 등 30% 구체적 계량지표로 평가함.
- 연구직의 평가 중 연구성과 비중은 70%로 적절한 수준임.
- 연구직에 대해 과제별 평가점수의 과도한 차이보완제도를 마련하고, 비연구직에 대해 계량화 항목 개발 및 업무연계성에 기초한 보직자/비보직자 그룹별 상호평가를 분리 실시함.

- 연구직 국내·외 논문게재에 대해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 연구과제 외부평가자 추천 시 연구자 정보 삭제 및 평가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폭 확대함.
- 평가결과 통보 시 평가항목별 평균평점 및 개인점수 동시 제공하고,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함.
- 기획조정실장, 평가관리위원장, 감사역, 연구연가자 등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함 (등급만 부여).
- 연구보고서 평가위원은 4인으로 50%가 외부위원이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하고 30점 차의 경우 재평가를 실시함.
- 금전적 보상으로 성과연봉, 능률성과급 지급 시 차등 지급하며, 비금전적 보상으로 평가결과를 승진, 재임용, 포상, 교육/연수 시 활용함.

〈단 점〉

- 연구직 비보직자에 대한 원장의 평가는 평가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 비연구직의 계량지표(10%)가 핵심업무실적이 아닌 근태 및 참여도에 국한되어 미흡하며, 20% 하한에도 미달함.
- 업적평가결과의 55%를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것과, 현직급재직기간(경력)을 20% 반영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함.
-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설명회 등 체계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부족함.
- 비연구직에 대한 계량지표 적용이 핵심 업무와는 상관없는 형식적인 평가의 가능성이 높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비연구직에 대한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핵심 업무실적에 대한 계량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평가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승진과 재임용에 평가결과의 최저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3년 평균 B 이상 혹은 60점 이상 등).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임금반납 사항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하는 등 갈등관리 실적이 우수함.
- 2012년 중단된 단체협약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음.
- 노조지부장과 행정국장간의 중요 안전에 대한 수시대화가 6회로서 노조와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있음.
- 고충처리 실적(2회) 있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사가 노력함.
- 노조가 노사문제 개선과 갈등상황 해결에 대해 전향적으로 임함.
- 임금, 단체협약, 정규직 전환 등의 갈등이슈를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함.
- 연구기관 평가현장에 노조조합장이 참석하여 노사현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노사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15회의 노사협의회와 4회의 수시간담회 및 6회의 수시대화를 노사간에 개최함.
-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조합원가족우선채용, 특별경조휴가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노력을 함.

〈단 점〉

- 제안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제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노무담당자 교육이 3회에 그치고 일반관리자들의 노사관련 교육이 미흡함.
- 의사소통이 노동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구성원의 의사소통통로가 미흡함.
- 2013년도의 단체협약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조항(48조 등)이 존재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제안제도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노사갈등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사협력증진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제안제도,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종합하여 전체구성원의 하의상달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의 개정을 위해 노사가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 및 2014년도 기본연구사업비에서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과제 비중에 있어서도 2013년 및 2014년 모두 30% 이하로서 연구회 제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6.6%(91백만원)로 연구회 제시기준(10~20% 범위내)에 미달하였으나, 2013년에는 15.3%(200백만원)로 개선되어 평가기준을 충족하였음.
- 수시연구과제 집행에서 전액 위탁연구비로 지급한 과제는 없음.
- 13년에는 15건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전액 위탁용역으로 수행한 과제는 없음.
- 퇴직금 예산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적립하고 있고, 퇴직예치금은 일반운영자금과 별도의 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으로 분산되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15건)의 집행비율은 73%로서 다소 낮은 수준임.

<개선 및 건의사항>

- 이월과제를 제외한 당해 연도 말까지 완료되는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0.5%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은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실적 미달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 기준에 부합함.
- 기본연봉에는 직무급을 포함하고 있으며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음.
- 기본연봉(기타수당 포함)과 성과연봉의 비율이 각 75%, 25%이므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평가기준(성과연봉 20%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봉의 연봉책정방식은 비누적식이며,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차등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호봉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기본연봉의 책정방식을 누적식으로 개선하고, 차등지급 및 인원배분비율을 평가기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비간부직의 경우 성과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최저 $\pm 15\%$ 차등지급 하였는 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였음.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이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능률성과급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각 10%,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성과연봉의 간부직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pm 15\%$ 로 평가기준($\pm 33\%$)을 준수하지 못함.
-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은 규정에서 최고-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에는 인건비를 반납하여 실질인건비가 삭감된 것을 이유로 기본연봉비율에 따라 지급하였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간부직의 성과연봉에 대한 차등지급률을 평가기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능률성과급을 규정에 맞게 최고-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임.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국회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완료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가 지적사항에 대한 전직원 공유, 개선과 기관발전의 연계, 우수기관 벤치마킹트립, 체계적인 성과관리절차, 이행에 대하여 총괄 모니터링과 주 1회 상시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등 작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음.
-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실적을 개선실적, 제도개선노력, 개선실적에 따른 성과, 경영에의 활용으로 구분하고, 기관평가 개선실적이 전년대비로 수치화되어 관리된 것은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사례임.

- 단체협약 체결 등 노사화합 및 갈등관리를 위한 역량이 강화됨.
- 성과연봉 지급 시 직원 업무평가에서 최저등급 인원을 준수함.

〈단 점〉

- 구성원 의견수렴과 전 직원 공유실적의 실질화 및 구체화가 다소 미흡함.
-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실적 완료율이 71%에서 85%로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향후반영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높음.
- 사내 제안제도 활성화를 포함한 기관 차원의 쇄신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연구지원직 업무평가 규칙을 개정하여 제도개선 제안 및 채택건수를 실적계량지표로 삼았으나 실제 개선 실적이 없음.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시행되어도 그 성과가 뚜렷하지 않음.
- 지적사항인 근속 및 경력가산금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었으나, 누적식 기본연봉제에 대한 단계적 실시가 완료되지 못함.
- 간부직에 대한 성과연봉비율 확대 및 인원배분 준수에 대하여 개선실적이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지적사항 개선절차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장점이나, 장기적으로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절차와 종합한 개선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개선지적사항이 제시될 때마다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실질적으로 사내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연구지원직 외에도 사내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환류체계가 필요함.
-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성과연봉제 관련 규정의 개선이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개선실적의 제시를 개선실적, 제도개선노력, 개선실적에 따른 성과, 경영에의 활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은 장점이지만, 보다 구체적·계량적으로 이루어지고 타당한 목표와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2013년 연구기관 차원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장애인 2명을 신규 고용함으로써, 전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0%에서 2013년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함.
- 장애인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장애인고용우대 공지, 가산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채용공고 시 장애인 구인을 포함하고 있음.
- 장애인 우대조치를 연구원 자체 규정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장애인 고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고용률 달성, 청년인턴 퇴직 시 결원보충, 청년인턴 계약직 내부 전환 실적이 2명 있음.
- 청년인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인턴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반영한 실적이 있음. 설문조사에 고충조사를 병행한 점도 우수함.
- 청년인턴의 근무관리분야의 경우, 인턴전용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있으며, 인턴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고충해결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고, 고충해결 담당관(고충상담원)이 지정되어 있음.
- 멘토링 담당자를 지정한 내용은 보이지만,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용실적은 없음.
- 청년인턴제 운영 및 이행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을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총 35건의 공개채용 홍보 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독려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한 우대 규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채용실적이 전무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가 연구원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를 연구원 규정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고용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므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1명이라도 달성하기 위한 조치(대책회의, 계획수립, 관련기관 방문 등)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사항을 담은 단체협약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지침(무기계약직운용규칙, 기간제 계약제 운용규칙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연구원 차원의 비정규직 운영계획(비정규직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이 있음.
- 기본급, 성과급, 능률성과급 등 모든 임금분야에 차별해소가 되어있으며, 그 이행이 적절함.
-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복리후생, 편의서비스, 휴가 등 처우 분야에 차별이 해소됨.
- 기간제 계약직 직원 운용규칙에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임금에 관해서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인식할 수 있는 조항(제11조)이 있으므로, 기간제 계약직 직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기간제 계약직 운용규칙 제11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08

한국개발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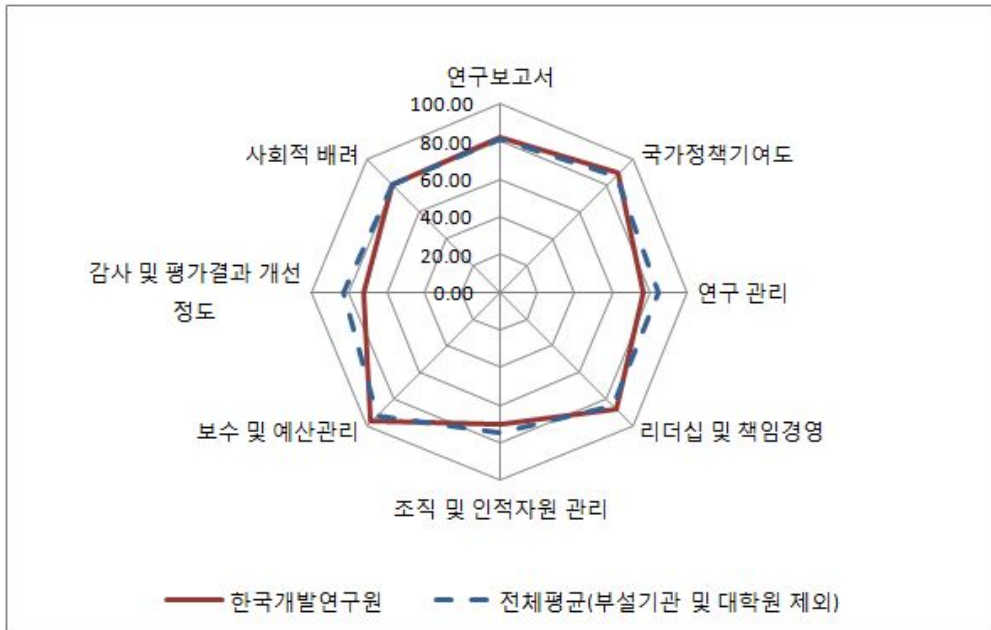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C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B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C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C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B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A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B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B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D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D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A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C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C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D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B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세분화된 실증분석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에 비해 정책적 대안 제시의 심도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임.
- 재정관리사업의 DB화 및 조사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등 과제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협동연구를 활성화시킴.
- 지나치게 포괄적인 연구범위를 섭렵하는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심도있는 실천적 세부 정책 연구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고,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다소 미흡함.
- 수석이코노미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수요처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의채널을 상시화하여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나, 과제 선정이 내부 위원회(과제관리위원회)의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등 다소 폐쇄적인 과제관리를 하고 있음.
- 협동연구의 발굴 및 수행노력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의 정부부처와 정책연구협의회의와 실무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세계은행 재정국, 일본 오사카대학 등에 해외파견을 통하여 국제적인 협동연구 수행을 활발히 추진함.

- 협동연구과제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의 정책구현 실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단계별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이의신청제도 및 전공별·분야별·소속기관별 평가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 타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함.
- 국제회의 참석 연사 및 일반 참가자의 DB를 확대하고, 영문이메일 서비스와 연계하여 무효고객을 정리한 것은 긍정적이나, 연구결과 확산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수단 체계조정에 대한 노력과 성과는 미흡함.

[경영 분야]

- 기관장의 기관 연구역량 증진 및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뛰어나고, 대외활동 실적이 돋보이나, 윤리경영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잘 구성하였으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가 부여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실시하였음.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으며,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제도를 잘 갖추었음. 대내·외 의견수렴 과정 및 상향식 의사소통의 제도적 통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표절방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의 적정성은 4대 경영목표, 10대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실천계획별로 설정한 2~3개의 경영목표에 대한 연계방안은 연구원장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로 평가됨. 실천계획이 기관의 당면현안에 대한 타개책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종합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적 어젠다를 강조하고 국제공동연구와 같은 본 기관의 강점을 살려서 대응하려는 계획은 적절한. 재정, 복지, 교육 등에 관한 다른 국책연구기관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기는 하나, 종합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융합적·학제적 연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연구성과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첨단 홍보수단 등을 활용한 체계적 홍보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학제적 연구선도,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강화 등 기관의 핵심역량과 관련된 실천계획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양호한 편임. 국제화된 연구역량을 배양하려는 연구원의 비전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과중심 평가·보상시스템 구축의 강화와 중간급 연구위원의 부족으로 우수인력 운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
- 중점추진과제(3개)의 중요성, 추진실적,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중점추진과제가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설립목적, 전략적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및 시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과정과 평가방식을 거쳐 선정되었고, 중점추진과제의 선정 배경 및 이유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었으며, 기관의 목표를 잘 반영하는 내용으로

선정되었음. 반면 국내 및 국제공동연구의 주제가 가능한 한 미래 지향적이고 융·복합적, 창조경제 관련한 내용으로써 구체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선정될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세종시 정착 실천계획은 다소 미흡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연구부서의 조직개편으로 사회적 갈등분야의 해법을 제시하는 연구를 강화하고, 경제정보센터 조직개편으로 사회적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나, 환경 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이 미흡함.
- 연구직의 핵심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에 대한 연구실적 반영 비율을 높이고 연구지원그룹에 대해서는 업무생산성 측면을 보강하기 위한 평가요소를 차별화하고 있으나, 업적평가 전반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미흡함.
- 정년, 세종시 이전 등 주요 이슈를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해결방안을 관리 하였으나 친목 외 실질적 노사협력 증진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원장과의 대화통로가 부족함.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을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하나, 2014년 예산편성에서 기초연구과제의 비율은 평가기준을 준수 하지 못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 집행 실적이 없는 등 적정함.
- 퇴직금 예산액을 일률적으로 분기별로 1/4 상당액을 적립함에 따라 연도말에 정규직에 대해 초과현상이 발생하는 등 분기별 적정액을 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과 기본연봉·성과연봉의 차등지급율 및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
- 국회 지적사항과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노력을 수행하였으나 개선실적에 개선 추진 중인 사항이 많은 한계가 있어 좀 더 실효성있고 조직적인 개선체계를 구축하여 개선노력을 강화해야 함.
- 장애인 의무고용율 2.5%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음.
- 청년인턴채용 계획 대비 달성도가 양호하지만, 청년인턴제 운용 관련 오리엔테이션 교재 미비, 멘토링 및 고충처리의 실질화 수준이 다소 부실하여 개선이 요구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2.8%에 불과하여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의 운용이 적정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복지부분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비정규직 운영세칙에 임금차별을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고, 비정규직 운영계획이 부재하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포괄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적 판단 근거를 확충함.
- 구조적인 논란이 내재되어 있는 주제에 대해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였고 국내·외 관련 연구를 포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안의 논란거리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정책적 판단을 유도함.
- 실증분석 연구에서 분석 대상을 세분화하고 분석 절차를 보완하면서 논지를 보강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수용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정책연구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노력함.

<단 점>

- 대체적으로 과제당 예산에 비해 분석 내용이 미흡한 편이며 정책적 시사점 또는 대안 제시의 심도도 미진한 편임.
- 기관의 특성상 다방면의 다양한 주제를 독창적인 연구 관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점은 가능하지만 일부 보고서의 경우 주제(제목)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연구의 목적과 초점이 산만함.
-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 현실 정책에 대한 활용 측면보다는 학술적인 분석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정책 수요자의 가독성을 저하시키고 정책 활용 가능성도 제한적임.
- 보고서별 연구방법, 범위, 시의 적절성, 논지 구성, 정책 활용도 등에서 편차가 다소 큼에 따라 기관의 연구역량에 비해 전반적인 정책기여의 신뢰도가 다소 약한 측면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공동 또는 협동연구의 경우 여러 연구자가 각 모듈을 맡아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최종 보고서는 이를 합본한 형식으로 발간하였는데 전체 모듈을 통합하여 결과를 정리하여 종합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공동(협동)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함.

- 통계분석 방법이나 학술적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함으로써 가독성과 전달력을 높여야 함.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부서의 조직을 개편하고 수석이코노미스트 제도를 도입함.
- 종합연구기관으로서 대부분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

<단 점>

- 국정과제 수행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장기과제 및 기본연구과제 수행의 부족이 우려됨.
-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이전에 수행한 연구와의 일관성 유지가 다소 미흡함(녹색경제에 관한 연구는 소멸됨).
- 모든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만큼 연구기관의 역량이 있는가, 포괄범위가 너무 넓어 연구의 깊이보다 넓이에 치중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주제까지 다룰 필요가 있는가? 외부인력을 더 활용했더라면 보다 좋은 결과가 유도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연구과제 선정에 세심한 검토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경제운용지원의 최고연구기관으로서 긴 호흡이 필요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과제 연구가 필요함(기초연구, 중·장기연구, 국정과제, 부처과제 등 다양한 연구수요 배분에 대한 지혜가 필요).
- 정부부처간의 수요 내지는 기대에 충돌이 있는 경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협업 내지는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연구성과가 물량이 아니라 법령의 개정이나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된 실질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할 것임.
- 발주기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자성을 유지하는 식의 유연성이 필요함.
- 원론적인 대안의 제시보다는 실천적인 세부 정책연구와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가 더 많아져야 할 것임.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정부출범 첫 해 당면현안이 쏟아지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음.
- 모든 대안제시의 기초가 되는 통계, 동향분석팀이 강하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축적된 자료와 인력의 적기투입이 가능함.

〈단 점〉

- 정책 발표시점과 연구과제 발표시점이 혼재되어 정부정책을 선도한다기보다는 정부정책을 백업하는 형태의 연구가 존재함.
- 현안과제 해결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일부연구가 중복됨(과거에 연구가 되지 않던 세부과제에 대한 집중연구가 필요하나 과거연구를 답습하여 원론적 수준의 대안 제시에 그침).

〈개선 및 건의사항〉

- KDI는 issue-follower가 아니라 issue-maker가 되어야 하기에 선도과제의 발굴과 대안제시에 대한 연구원의 축수를 더 민감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거의 전 부처로부터 연구를 의뢰받고 있어 이 경우 연구과제 선정원칙, 유사과제의 조정에 관한 내부 메뉴얼이 필요함.
- 수시연구과제 급증시 필요한 예산 또는 인력배분원칙, 외부역량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회에서의 포럼활동에 발제자 등으로 적극 참여하여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국내·외에 걸쳐 폭넓은 연구 및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단 점〉

- 단순한 워크숍 참석, 전문가 면담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계가 부족하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협력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 진정한 정책네트워크로 보기가 어려움.
- 특정지역, 특정분야와의 네트워크 쏠림현상이 있고 다양한 국내연구단체, 학회의 활용이나 연계정도가 취약함.

- 해외에 우리성과를 자랑하는데 치중하여 기본연구과제 등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연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개별 의원이나 정당의 무분별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협력에 관한 매뉴얼 마련이 요구됨.
- 민간연구기관, 개인연구소 등에도 훌륭한 자원이 많으므로 이들을 활용하여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선행연구가 많고 축적된 자료가 방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제시가 가능함.
- 정부부처와의 협력이나 협업연구를 통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임.

〈단 점〉

- 협동연구에서 이론에 치중하여 산업현장이나 실물기관과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함.
- 후속연구의 경우 기존 내용에 대한 진솔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한 대안제시가 취약함.
-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한 대안제시가 미흡한 연구도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거시적 연구의 경우 후속연구를 통해 실질적이고 추세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수요자중심의 글로벌한 접근,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단계적 접근, 기존에 축적된 자료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
-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 대통령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정책실현 가능성이 높음.

〈단 점〉

- 의료산업 수출, 외국인환자 유치, 외국대학생 유치 등은 이미 정부가 수년 간 추진해온 정책이므로 시장참여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이 더 높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존에 연구된 과제에 대해서는 갈등관리를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세부적인 대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연구의료, 교육, 관광 외에도 중요한 서비스 산업이 많으므로 종합적인 후속연구 추진이 필요함.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장 점〉

- 기존에 수행된 재정관리사업의 DB화와 조사결과의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과제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의 사전협의와 내부회의를 통해 상당수 사업의 추진을 억제하고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경고 효과를 거양함.
- 민간투자제도 가이드라인, 협상지원, 법률자문 등 종합서비스의 제공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함.

〈단 점〉

- 민간투자사업 검토기간 및 보고서 발간 시간이 길어 사업추진의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음.
- 연수 비전문기관의 연수가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연수를 진행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예비타당성조사 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내부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투자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성과검증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분별한 평가요구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연구기관의 참여 내지는 의견개진을 확대함으로써 평가내용의 합리성과 적용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연구원의 필수 심의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과제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나 방법이 검토되어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나 민간투자사업 평가 시 다수의 시급한 과제가 있을 경우 우선순위 결정 준칙 마련이 필요함.
-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등 각종 초·중등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제교과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기본연구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교육훈련서비스는 전년 대비 하락함. 상세 업무유형별로는 기본연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훈련서비스, 수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정보제공서비스는 해당 업무유형 평균 대비 크게 낮게 나타남.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기본연구는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수탁연구, 교육훈련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는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특히, 정보제공서비스는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전문성’,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정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반면, ‘편리성’의 경우는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함.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전문성’, ‘준비성’, ‘성실성’, ‘구비성’, ‘편리성’의 경우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난 반면, ‘공정성’은 전체평균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 기본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에서는 모든 세부항목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 목적을 정확히 이해’의 점수가 타 항목 대비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세부항목별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업무 수행

(보고회 등) 진, 정보교류 적절’, ‘계획된 연구인력 투입 및 연구수행 일정 준수’, ‘고객이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 문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교육훈련 서비스는 타 상세문항 대비 ‘고객의 요구사항 반영 창구(경로) 또는 제도·시스템 구비’ 문항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연구과제 관련 협의사항 조정 노력, 정확한 연구수행 범위 안내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교육훈련서비스는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기본연구, 수탁연구, 위탁연구, 공동연구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함. 상세 업무유형별로는 수탁연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동연구, 정보제공, 교육훈련, 위탁연구, 기본연구 순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수탁연구, 공동연구,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기본연구, 위탁연구, 교육훈련서비스의 경우는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특히, 기본연구가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 및 요소가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준비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크게 나타남.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전문성’, ‘구비성’, ‘합리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나타내며, 특히 ‘편리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는 수탁연구, 공동연구, 정보제공의 경우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으나, 기본연구, 위탁연구, 교육훈련서비스의 경우는 낮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보고회 및 자문회의 등의 일정 관련 사전협의 적절’ 이 가장 높은 반면, ‘연구결과물(보고서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 ‘해당 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 문항이 가장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확히 이해’ 등 대부분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계획된 연구인력 투입 및 연구수행 일정 준수’, ‘고객이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 문항이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는 ‘관련 지침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연구자가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으로 해당분야의 정책적 학문적 발전 선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수행 전 정보를 적절히 제공/공유 및 업무절차 및 처리 적절’의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남. 교육훈련서비스의 경우 ‘직원 및 강사는

교육생을 공정하게 대우’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고객의 요구사항 반영하는 창구/제도시스템 갖추’, ‘교육 참여를 통해 관련분야의 정보 획득’이 가장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활동 및 정책발전에 기여’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이용 관련 고객의견(문의 및 요청사항) 접수 편리’ 문항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교육훈련서비스 관련 정보의 검색 용이성 제고 노력, 교육생들을 위한 쾌적한 편의시설 구비, 홍보전략 수립 및 다양한 채널 구축을 통한 연구결과 공유(성과확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수석이코노미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수요처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의채널을 상시화하여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함.
- Brown Bag 세미나를 도입하는 등 발굴 방법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구사업 목표별로 대표공동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연구와 정책연구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음.

〈단 점〉

- 전년도에 비해 외부 수요조사를 반영한 과제를 발굴하는 등 개선되고 있으나 타 기관에 비교해 부족한 수준임.
- 기본연구과제 선정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과제선정의 공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
- 과제의 중복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절차가 부재함.
- 과제선정이 연구원 간부진(과제관리위원회)의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져 매우 폐쇄적인 과정에 머물러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구과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외부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제선정위원회에 외부 위원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 차원에서 과제의 중복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통합에서 균형과 다양성을 갖추어야 함. 학술적 관점, 연구 및 활동 분야, 민간단체, 성비(性比) 등의 차원에서 균형을 갖추고 다양한 집단이 심의 과정에 포함되어 일정 수준의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선정과제가 국민의 정책 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과제선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제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에 대해 전체 연구위원이 참석하는 중간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보고서의 질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과정하고 있음.
- 기본연구과제와 마찬가지로 중간보고서 평가 단계를 제도화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 발굴노력이 다소 미흡하며(총 4건), 과제기간도 전반적으로 길게 설정하고 있음(4건 모두 6개월 이상임).
- 수시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나 예산의 측면에서 기본연구과제와의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음.
- 수시연구과제의 평가에 있어 외부평가자는 서면검토에 그치고 있어 평가의 질 저하가 우려됨.
- 과제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가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 등 과제 관리가 허술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보다 적극적인 과제발굴 노력이 요구되며, 시급성과 즉시성을 요하는 수시연구과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연구기간도 가급적 6개월 이하로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부처의 요구에 따라 수시연구과제의 수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수시연구과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평가자도 직접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제종료 즉시(최소한 2주내)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등록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의 발굴 및 수행노력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의 정부부처와 정책연구 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세계은행 재정국, 일본 오사카대학 등에 해외파견을 통하여 국제적인 협동연구 수행을 추진하고 있음.
- 협동연구과제들의 연구필요성, 추진체계 및 상호협력 관계에 대하여 적정하게 기술하고 있음.

〈단 점〉

- 협동연구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로써 해당과제 기준점수의 3%를 가산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지 다소 의문임.
- 협동연구에 대한 평가표,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이 구체적이지 않음.
- 협동연구의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있지 않고 있음.
- 협동연구과제 참여연구자 간의 역할분담이 피상적임.
- 협동연구과제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의 구체적인 시너지효과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 장려를 위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의 선정·평가에 대한 전문가 풀(Pool) 구성이 필요함.
- 협동연구과제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의 정책구현 실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체계의 규정과 운영을 적정하게 수행함.
- 단계별로 평가 절차를 구축하고, 평가의 익명성과 평가결과의 비공개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음.

- 연구사업별(정책, 기초연구) 평가기준을 규정하여 연구형태에 의거한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기초과제와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별도의 평가 배점표를 적용하여 연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함.
- 외부평가자의 인력 풀(Pool)을 외부평가단 구성에 활용하고 있음.
- 외부평가자 비율이 기준대비 높은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단 점〉

- 연구단계별 평가자의 수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소수로 연구방향, 연구내용 평가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평가단계별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의 제시가 다소 미흡함.
- 평가가 보고서 발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함.
- 외부평가자의 인력 풀(Pool)의 소속기관별, 전공별 분포 현황이 미흡함.
- 연구보고서 평가 시 평가위원의 선정 방법 등이 다소 미흡함.
- 전공분야별 평가위원의 분포현황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단계별 평가자의 수를 확충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고양할 필요성이 있음.
- 전공분야별 평가위원의 적절한 분포 및 보고서 평가에 대한 전공분야별 평가위원의 균형있는 선택이 되도록 해야함.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KDI 저작권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KDI 저작권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유함.
-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공공저작권 바로알기’를 통해 직원들에게 쉽게 지침을 주지시키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 KDI 통합DB 관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장점임.
- 국제회의 참석 연사 및 일반 참가자의 DB를 확대하고, 영문이메일 서비스와 연계하여 무효고객을 정리함.

- 홍보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 효율화를 위해 비교적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임.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여 서비스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인 점.
- 보고서의 주제와 부합하는 기관 및 전문가에게 배포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연구보고서의 적정부수를 결정하는 절차가 비교적 체계적이며 재조사를 실시하여 배포함.
- 이슈페이퍼의 발간시기가 시기적으로 끌고루 분포하고 있는 점은 장점임.

〈단 점〉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시스템의 효과분석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노력은 다소 부족함.
- 개발된 시스템의 효과를 계량화시켜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는 노력은 미흡함.
- 연구성과 홍보·확산계획이 단기적이어서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이 다소 미흡함.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조정에 대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로 전년 대비, 목표대비 향상도 등을 구체적이지 못함.
- 전문가 맞춤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약적 배부 확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물 배포 실적만 있고, 배포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효과적인 배포를 수정·조정한 성과는 없음.
- 홍보와 성과평가의 연계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수준임.
- 연구결과물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전략적 활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과 성과지표의 활용을 권고함.
- 기록물관리지침 등 세부적인 지식재산 보호 규정을 더욱 폭넓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구체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개선과제를 찾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당해연도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둔 성과지표와 단기 목표치의 제시가 필요함.

-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연구원에 가장 효과적인 확산 수단을 선택하여 확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함.
- 홍보채널별로 2013년도 성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2012년도 대비 증감, 목표대비 달성률 등을 제시하여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 홍보를 위한 확산채널이 일반적인 수준이며 보다 첨단적인 수단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수요자 조사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
- 보고서 배포관리와 관련하여 활용도와 효과성이 낮은 배포를 취소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보다 엄격한 의미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배포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KDI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므로 성과의 해외 확산을 위해 보다 치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해당사항 없음.

〈단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0.73편(30.06건/41명), B등급으로 다소 저조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서 학술 연구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국제학술지 등에 대한 게재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II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절차가 잘 구성되어 있음.
- 수석이코노미스트 제도를 신설하여 연구진의 공백을 메우고, 연구진간의 협력을 강화함.
- SWOT분석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였음.
- Brown Bag 세미나와 같이 지식공유의 장을 형성하여 연구역량을 증진하였음.
- 학술파견제도를 신설하고, 발간된 보고서를 언론에 보도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가 부여되도록 노력함.

〈단 점〉

- 현안문제 선정을 위한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하고,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
- 수석이코노미스트의 자격과 역할은 규정화되었으나 임명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의 성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과제선정 시 Bottom-Up과 Top-Down방식의 혼합 운영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다소 있으며, 과제 수행의 결과가 불분명함.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적 연구의 개발 노력이 다소 부족하며, 수행된 과제의 학제간 융·복합성이 불분명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문제 선정을 위한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기 바람.
- 수석이코노미스트의 임명절차에 대하여 규정화가 필요함.

- 연구역량 증진 노력의 결과인 연구역량 향상에 대한 계량적 측정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과제 선정 시 Bottom-Up과 Top-Down방식의 혼합 운영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소통 목표별로 필요한 활동을 함으로써 소통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하는 등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임.
- 국가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여 네트워크를 폭넓게 확보하였음.

<단 점>

- 하위 구성원으로부터의 상향식 의사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간담회의 정례화와 같이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의견수렴과정이 미흡하며, 구성원과의 의견소통을 식사 등 비공식적 채널에서 보다 공식적 채널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 Think Tank와의 국제 교류 및 네트워크 확보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해외 홍보 노력이 다소 부족함.
- 한국개발연구원의 위상에 비추어볼 때 연구보고서의 해외발간이 제한적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구성원과의 의견소통 채널을 보다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거나, 간담회와 같은 구성원과의 의견소통 활동을 공식화하여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구성원의 의견반영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직급별, 직종별 대표를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유명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국제 교류 및 연구 네트워크 확보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 연구원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해외 홍보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 연구보고서의 해외출판횟수를 대폭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 및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감사실무자에 대한 교육이 잘 시행되는 등 기관 경영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 및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위원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음.
-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화 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였음.
- 연구보고서의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윤리준수에 대하여 이미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운영중이며, 2명의 익명의 심판제를 운영하고 있는 등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음.

〈단 점〉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전체 구성원의 교육이 다소 부족함.
- 윤리경영의 제도적 장치가 다소 미흡하고, 연구윤리가 아닌 경영윤리와 관련되어 직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이 미흡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예를 들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표절검색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연구윤리 위반 시 조치에 대한 규정화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구성원 전체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
- 윤리경영의 제도적 장치(클린센터, 부조리신고센터, 청탁등록방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권의 침해 우려가 없는 위원회에 직종 또는 직급별 대표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표절방지 소프트웨어 도입 등).
- 기관내부 및 외부 연구참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연구윤리 준수인식을 제고시키고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4대 경영목표, 10대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실천계획별로 설정한 2~3개의 경영목표에 대한 연계방안은 연구원장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임.
- 국가경제의 장기적 트렌드 파악 및 전략적 대응,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개발도상국과의 가교역할 필요성 등 기관의 당면과제를 적절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영목표 실천계획과 관련지어 구체적 실천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의 당면문제 해결에 유용한 수단들임.
- 실천계획이 기관의 당면현안에 대한 타개책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종합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국가적 어젠다를 강조하고 국제공동연구와 같은 본 기관의 강점을 살려서 대응하려는 계획은 적절함.
-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학제적 연구선도,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강화 등 기관의 핵심역량과 관련된 실천계획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양호함.
- ‘국가적 어젠다 중심 연구’를 위하여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학제적 연구를 추진하고, 이에 연계하여 ‘KDI의 국제화’에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강화를 진행하는 것은 KDI의 위상에 맞는 적절한 방향으로서 국가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중·장기전략 수립을 국제적 수준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선진국과 동일선상에서 연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선진국의 연구교육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학술지에 영어논문을 게재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및 사기진작을 제고하기에 적절한 노력임.
- 2013년도 대표공동과제 1건을 수행중이며 2014년도 대표공동과제를 3건 기획하였는데, 한국경제의 중·장기 현안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원내·외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를 선도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이를 위해 원외 전문가 그룹으로 겸임연구원 및 해외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 연구과제 관리체계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제심의 및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기준개정을 하고, 과제제안 시 과제관리위원회의 연구과제별 평가를 실시하며,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과제관리와 과제발간·평가에 각각 임무를 부여하여 이원화하는 등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된 실적임.

〈단 점〉

- 목표로부터 실천계획이 도출되는 과정과 실천계획과의 연계를 논리적으로 보여 주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구체적인 추진 조직과 추진 일정이 다소 미흡함.
- 기관의 역할이 경제개발에서 나아가 복잡다기화된 국가어젠다에 대한 연구 강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융합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다소 부족함.
- 세부실천계획에서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와 관련한 내용이 미흡함.
-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경제정책 수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구성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시설확보로는 미흡함.
- 과제의 성격상 계량적 지표를 개발하기 어려우나, 성과목표가 대부분 실천계획의 과정지표로서 정성적인 지표가 대부분이며, 성과목표가 다소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어 목표달성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 경제개발 분야 연구 및 교육강화를 위한 e-콘텐츠 구축개발은 진행중이며, K-HRT 시스템 구축은 세종시 이전 이후로 사업을 연기함으로써 성과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목표로부터 실천계획이 도출되는 논리적 과정을 제시하고, 실천계획과의 연계를 구체적,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실천계획의 구체적인 추진조직과 추진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재정 및 복지 등에 관한 다른 국책연구기관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기는 하나 기관이 종합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융합적 또는 학제적 연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학술지 게재와 같은 글로벌 연구 활동으로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로써 적절한 것인지, 반대로 연구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연구관리체계 및 인센티브제도 개선에서 중간층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인적 자원을 유치하고 정착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첨단 홍보수단 등을 활용한 체계적 홍보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연근무제 등 이외에 의료, 건강관리, 학교 등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세종시 이전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에 전념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를 위해 정책연구협의회 및 연구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활용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피드백함으로써 정책활용도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노력도 필요함.
- 국가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성과목표가 과정과 결과를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계량화됨으로써 성과달성의 동기부여 및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과목표 및 목표치의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한 계량적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KDI의 정보시스템을 더욱 개선하여 행정 및 재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체계적 연구지원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제화된 연구역량을 배양하려는 연구원의 비전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평가·보상시스템 구축의 강화 및 우수인력 운용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함.
- 국가적 어젠가가 복잡 다양화되는 환경에서 경제이외에 교육, 복지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학제적 연구를 더욱 강화하여 기관이 지향하는 종합연구를 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를 OECD 등과 공동수행하였으나, 독일 및 베트남 등 통일경험에 대한 국제적 공동연구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3대 중점추진과제는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설립목적, 전략적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및 시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과정과 평가방식을 거쳐 선정함.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배경 및 이유가 타당성이 있고, 기관의 목표를 잘 반영하였음.
-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정책방안 제시, KSP사업의 연계강화, 그리고 세종시 이전은 기관의 역할을 균형있게 잘 반영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주요한 과제들이 적절하게 선정됨.

- 국가적 현안과제에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경영목표 실천계획은 기관의 설립목적, 경영목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타당한 과제이며, 기관장의 방침을 잘 반영하고 있음.

〈단 점〉

- 각 과제의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에 대한 평가를 수치화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기관의 당면현안에 대한 중요성과 시의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함.
- ‘세종시에의 성공적인 안착’ 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실적이 미흡하고,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이 모호함.
- 중점추진과제에 있어서 ‘다변화 시대를 반영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강화’ 과제가 본 기관의 세계적인 연구수월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비전에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아, 이를 제외한 중점추진과제의 내용이 다소 미흡함.
- 내부 연구역량 및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대표공동과제를 기획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어젠다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아직은 그 결과가 국가정책 수립으로 연결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 파급효과와 기여도의 가시적 성과는 높지 않음.
- 기관의 KSP 정책자문사업과 대학원의 KSP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의 연계 과제는 콘텐츠 구축 및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연찬회를 개최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성과로서는 부족함.
- 중점추진과제 선정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의견수렴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정책 연구협의회와 연구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되어있어, 외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의견수렴 과정 및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설립목적과 새 정부의 정책어젠다에 비추어 볼 때 3대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에서 정책적 중요성 및 기여도가 높은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고려하고, 선정과정에서 평가요소별 가중치 및 구체적 평가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관의 규모와 중요성에서 볼 때 3대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을 세부실행과제 수준에서 선정하기보다 경영목표 실천계획에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및 국제공동연구의 주제가 가능한 한 미래지향적이고 융·복합적인 내용으로서 구체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선정될 필요가 있음.
- 경제개발분야 연구 및 교육 강화와 세종시에의 성공적 정착 실천계획은 성과목표의 달성이 미흡한 분야로 선정되었으므로 좀 더 기관의 대표적 실천과제가 선정되거나 대표적 실천과제로 선정되었다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연구본부와 경영지원본부를 폐지하고 4개의 지원부서를 부원장 직속으로 개편하여 내부 만족도를 제고함.
- 내부의 연구인력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연구의 공백해소 및 연구조직의 유연성을 향상시킴.
- 유연근무제 시행, 직급별 정년 차별 완화, 임시직에 능률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등 내외·부 고객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함.
- 세종시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수인력 유출과 연구업무 공백을 겸임연구위원제도의 활용으로 극복함.
- 연구부서의 조직개편으로 사회적 갈등분야의 해법을 제시하는 연구를 강화하고, 경제정보센터 조직개편으로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 과제관리를 강화하는 등 조직 안정 및 연구관리제도 내실화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 연구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상시 모니터링함.
- 겸임연구위원제도(13명)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인력을 보완하고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시로 증감하는 연구수요에 대응함.
- 지역인재(10.3%), 여성(58.8%), 고졸, 청년인턴 등 사회형평적 채용 기준을 준수함.
- 책임급 연구위원은 논문평가 및 일반평가, 연구원급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객관적 채용기준과 절차를 준수함.
- 홈페이지, 취업사이트, 관련 협회, 취업포털사이트 등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함.

<단 점>

-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조직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의 제시가 미흡함.
- 환경변화 부합 조직운영 실적을 조직개편과 겸임연구위원 임용 실적만을 나열함으로써 미흡함.

- 부원장 산하에 수석이코노미스트 그룹을 신설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도모하였다고 하나 부원장과의 역할 분담이 애매하며 오히려 결재 단계가 늘어나 비효율성을 초래함.
- 협력사업실→정책자문실 조직개편 과정에서 1개팀 증가 사유는 다소 부적절함. (개편전 1인 평균 3~4개 국가 담당에서 1개팀을 신설하여 1인 평균 1~2개 국가를 담당하게 한다면, 팀원 증가만을 통해서도 실현 가능함).
- 기능과 연계한 고객 정의 및 분류가 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제시한 고객요구사항도 내부고객 중심의 일반적인 행정처리 사항 수준임.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 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KDI의 국제화 경영목표 관련조직을 인사위원회로 적시한 것은 부적절함.
-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 우수인력 채용절차에서 채용계획(안) 수립→부서별 수요파악은 순서가 뒤바뀌었음
-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약 50여 개의 경제학 분야 명문대학의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 및 대학원생 명단 파악, 기획재정부 주최 201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여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 우수인재 채용 성과는 미흡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에 근거한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이 미흡함.
-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당해연도 인력운영을 위한 계획의 작성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경제 및 산업관련 정책수립 종합기관으로서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유사한 기능 수행기관과의 중복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됨.
- 조직의 핵심기능, 경영목표, 주요 이슈 등이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의 요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고객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수석이코노미스트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수직적 계층의 증가로 오히려 업무수행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KDI의 주전공은 경제학으로서 일반 기업과의 경쟁을 통하여 우수 신규인력을 발굴·확보하기 위한 전략 및 노력이 필요함(채용공고, 취업사이트 활용만으로는 일반 기업과의 채용경쟁에서 이길 수 없음).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당해연도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인력수급계획의 작성 노력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2013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참여 및 우수기관 선정을 통한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토대를 마련함.
-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연수의 Plan-Do-See를 체계화함.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국제기구파견, 자율연구, 학술파견, 시찰연수 등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운용함.
- 연구직 통계교육, 연구·행정직 어학연수, 박사급 국제기구 파견 등, 비박사급 유관기관 파견 등 직급·직종별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
- 연수신청-연수명령-연수진행-연수보고-교육훈련정보공유-연수신청으로 연결되는 연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교육훈련비 집행 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연수불성실 이행자 및 미수료자에 대한 제재기준 개정을 통한 교육비 환수기준을 명확히 함.

〈단 점〉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과 연계되는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다소 미흡함.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다소 미흡함(전년도 교육수요조사 2013년 9월에 실시하여 연초 계획에 반영할 수 없음).
- 경제 및 산업정책 종합기관에 걸맞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함.
- 세종시 이전기관으로서 직원 사기진작책 마련이 미흡함.
- 학위과정 등 연수 중심의 연구직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역량강화 실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미흡함.
- 교육·연수 결과의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의 구축 실적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미흡함.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실시가 미흡함.
- 연수, 특별강연 등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 교육훈련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외국 유사 기능 수행기관(비교대상기관) 리스트를 확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학술 연수 후 결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비연구직에 대한 교육훈련비 비율이 8% 수준, 1인당 교육비 242천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교육훈련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연구직은 연구·사업실적평가 중심으로 비연구직은 업무실적평가 중심으로 차별화된 평가요소를 설정함.
- 연구직의 핵심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에 대한 연구실적 반영 비율을 높이고, 연구지원그룹에 대해서는 업무생산성 측면을 보강하기 위한 평가요소를 차별화함.
- 연구직의 기관고유과제, 수탁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기본배점이 구체적으로 계량화되어 있고, 비연구직은 지원부서 평가제도에 따라 25%의 계량 항목으로 평가를 시행함.
- 연구직의 실적평가 비중은 68.6%이고 연구직(사업부서) 실적평가 비중은 60%로 기준을 충족함.
- 부서장 평가서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평가를 실시하여 보고서의 우수성 및 정책활용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이고 통일된 시각을 유지함.
- 기본연구과제의 기본배점(100점) 보다 높은 120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를 장려함.
- 평가 시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 검토 및 평가를 연구보고서 발간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심의함.

- 연구실적 점수를 최대한 계량화하고 검토 및 평가 시 외부검토자 의무적으로 참여함.
-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고서 평가결과를 포탈시스템에 실시간 공개하고, 평정의 경우 본인에게 결과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함.
- 1개월 미만 근무자, 파견자, 학술파견자 등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기준을 준수함.
- 직원평가결과를 연봉 산정에 반영하고 승진, 교육훈련 등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함.

〈단 점〉

- 직원 평가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실적으로 제시한 실태 및 문제점(보고서 질 평가 강화)과 개선실적 및 성과 내용이 상이함.
- 논문게재 인센티브 제도는 기본배점만 부여함으로써 타 기관 대비 다소 미흡함.
- 이의신청 제도는 연구보고서와 임용 및 승진 관련 제도만 운영되고, 업적평가 전반에 대한 제도는 부재함.
- 승진심사 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원장이 대상자를 결정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점.
- 최근 2년 연속 하위 10% 해당 여부를 승진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은 승진제도를 통한 기관역량 제고 목적 달성에는 다소 미흡함(최소 중간 점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바람직).
- 연구위원 승진 시 업무실적평가결과를 승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승진의사표시 확인 및 대표보고서 3편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는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점. (최소 최근 3년 간의 업적평가결과를 평균하여 100%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기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평가가 부서평가, 경영목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평가제도개선TF가 제도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여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의 체계성에 문제가 있음.
- 승진 및 재임용에 경력 및 근속연수가 산정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비연구직의 계량평가 지표가 아이디어 제안, TF 참여 실적, 교육훈련 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핵심 업무 중심의 계량지표 개발 노력이 필요함.
- 연구직의 다면평가 비율이 연구부서 31.4%, 사업부서 40%로 연구실적에 대한 60% 이상의 기준은 유지하고 있으나, 정성평가 비율을 줄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비연구직 계량평가 25%이지만, 평가지표의 계량측정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논문게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전사적인 관점에서 팀과 개인 간 성과를 연계하여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가 승진 및 재임용에 100%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승진 및 재임용 심사의 최저기준으로 평가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3년 평균 B이상 혹은 60점 이상을 승진 최저기준으로 설정).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정년차별화, 세종시 이전 등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 갈등관리 실적을 갈등원인, 갈등관리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됨.
- 2013년에 총 4회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였음.

〈단 점〉

- 춘계체육대회, 추계연찬회, 동호회 외 노사협력 증진 프로그램이 미흡함.
- 각종 수시대화 창구 운영실적은 있으나 정례화, 제도화가 미흡함.
- 2013년 노사간담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음.
- 노사협의회 방식이 의결, 협의, 보고사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총 31회의 다양한 노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세금관련 교육에 치우친 한계가 있음.
- 노무담당자교육에 비해 일반관리자에 대한 노무교육이 다소 빈약함.
- 다양한 수시대화 창구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과의 직접적 의사소통 통로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노사협의회 운영실적이 의결사항과 협의사항의 구분없이 제시되고 있고, 노사협의회 운영에서 의결사항과 협의사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고충처리위원이 노사협의회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건의 고충처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되고 있어, 고충처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대규모, 친목도모 목적의 노사협력 증진 프로그램 외의 실질적 노사협력 증진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정기적, 제도화된 노사화합을 위한 의사소통 활성화가 요구되며 기관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원장과의 의사소통 노력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호프데이 외에 간담회나 회의체 형식의 정기화된 대화창구가 필요함.
- 노사협의회 방식을 규정대로 의결, 협의, 보고사항으로 구분되어 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사갈등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기관장과의 최소한의 대화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제안제도,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종합하여 전체 구성원의 하의상달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 및 2014년도 기본연구사업비에서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6% 및 38%로 편성되어 있어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29%(676백만원), 2014년 24% (275백만원)로 연구회 제시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3년 10.5%(242백만원)로 연구회 제시 기준(10~20% 범위내)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5건)의 집행비율은 87% 수준으로 양호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시연구과제 집행에서 외부위탁연구비로 지급한 과제는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운영 자금과 구분되어 독립된 별도의 계좌로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14년도 예산편성에서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과제 비중이 30.2%(620백만원)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 퇴직금 추계액의 산정오류로 인하여 실제 적립액이 추계액보다 적게 되었고, 이를 2014년 2월에 추가 적립(20백만원)함.
- 퇴직금 예산액을 일률적으로 분기별로 1/4 상당액을 적립함에 따라 연도말에 정규직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4분기에 감액처리함.

〈개선 및 건의사항〉

- 2014년도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사업비는 예산 변경 등을 통해 '기본 연구 사업 운영규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시연구과제로서는 사업비 규모가 크고(120백만원) 연구기간이 장기(10개월)인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시연구과제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금 적립에 있어 이자수입액 적립액을 고려한 분기별 적정수준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초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함.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2%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1,656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연봉체계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 기준에 부합함.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약 50.4%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가 제시한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2010년 6월 각종 수당(중식비, 조사활동비 등)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으로 지급 하였으며, 호봉테이블 등 근속기간과 연동되어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은 없어 적정함.
- 기본연봉의 연봉책정방식을 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등급별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pm 2\%$ 로 평가기준($\pm 1\%$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 역시 최고-최저등급에 각 10%를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간부직의 경우 최고등급이 155.9%, 최저등급이 71.4%로 약 2.2배의 차이가 나도록 지급하고 있으며, 정규직 비 간부직의 경우에도 최고등급이 161.7%, 최저등급이 76.4%로 약 2.1배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특정등급에 50%이상 배분하지 않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함.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을 업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하며,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등급 간 약 2.8배의 차이가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능률성과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특정등급에 50%이상 배분하지 않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국정감사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완료함.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구운영위원회, 감사업무협의회,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함.
- 학위 지역편중 현상은 2013년도 채용부터 개선함.
- 전 직원이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부서별로 나뉘어 의견취합을 하는 등 적절한 의견수렴 활동 등 기본적인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추진절차를 구성하고 있음.
- 조직 의사소통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하위직 연구원 참여가 증가함.
- 직무교육 및 연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용한 정보를 공유함.
- 공통 지적사항인 직원채용 시 국가유공자 비율 준수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와 긴밀한 업무협조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고용노동부 취업사이트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게재하고,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3년 2명의 국가유공자를 채용함.

〈단 점〉

- 정무위원회 15건 지적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6건의 지적사항,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실적에 대하여 개선 추진 중인 사항이 다소 있음.
- 사업 집행 부실에 따른 출연금 이월 과다 문제에 대한 개선성고가 뚜렷하지 않음.
- 지적사항에 대한 구성원 공유 및 의견수렴이 노사협의회로 한정되는 등 지적사항 개선추진절차에서 조직적인 대응이 미흡함.
-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계획과 그 이행에 있어 통합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점검을 하는 사후 TF 기능이 미약하고, 개선과제가 환류시스템을 통하여 실제로 개선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가 미약함.
- 평가결과에 따른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의 구체화가 완료되지 못함.
- 기관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기관장과의 의사소통 채널이 부족한 것에 대한 개선 실적이 미흡함.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한계를 지님.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 개선이 기관발전에 기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 추진 중인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불용액에 대해 국가 반납근거 또는 별도 사용방안 마련 등 적절한 향후 처리가 요청됨.
- 평가결과 개선체계의 구성에 있어 개선결과가 다음연도의 경영에 반영되면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개선환류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고, 지적사항을 개선한 결과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정리, 점검하며 달성도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 고용률 2.5%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고, 월별 장애인 미달고용인원이 없으며, 채용공고 시 장애인 구인을 포함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장애인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채용 우대조치의 근거를 연구원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장애인 고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재직중인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권고함.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채용 계획 대비 달성도가 충실하며, 청년인턴퇴직 시 보충이 적시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 청년인턴의 계약직 전환 실적(3명)이 있음.
- 청년인턴에 대한 근무관리분야 중에서 근무평정,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잘 진행 되었음.
- 청년인턴전문 오리엔테이션 교재 내용, 멘토링 및 고충처리의 실질화 수준이 부실함. 청년인턴을 위한 청년인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고지사항 등을 담은 청년 인턴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마련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고, 인턴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과 고충해결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마련·운영이 필요함.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 지정 및 실적, 설문조사,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한 기본조치(공고문 표시, 가산점 부여 등)와 특례조항이 있고, 2013년 2명 고용실적이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2.8%로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을 위한 기관장의 관심 부여, 대책회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관방문 등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가 연구원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를 연구원 규정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고용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사항을 담은 단체협약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임금, 처우에 관한 연구원 차원의 독자적인 규정(임시직원 규칙)이 존재함.
- 입사 3년 이후에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동일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이는 입사 2년 간 비정규직 과정을 누구나 거쳐야 하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임.
-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교육, 복리후생, 편의시설, 휴가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 비정규직 운영세칙은 있으나, 비정규직(임시직원) 임금차별을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음.
- 연구원 차원의 비정규직 운영계획이 없음.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09

한국교육개발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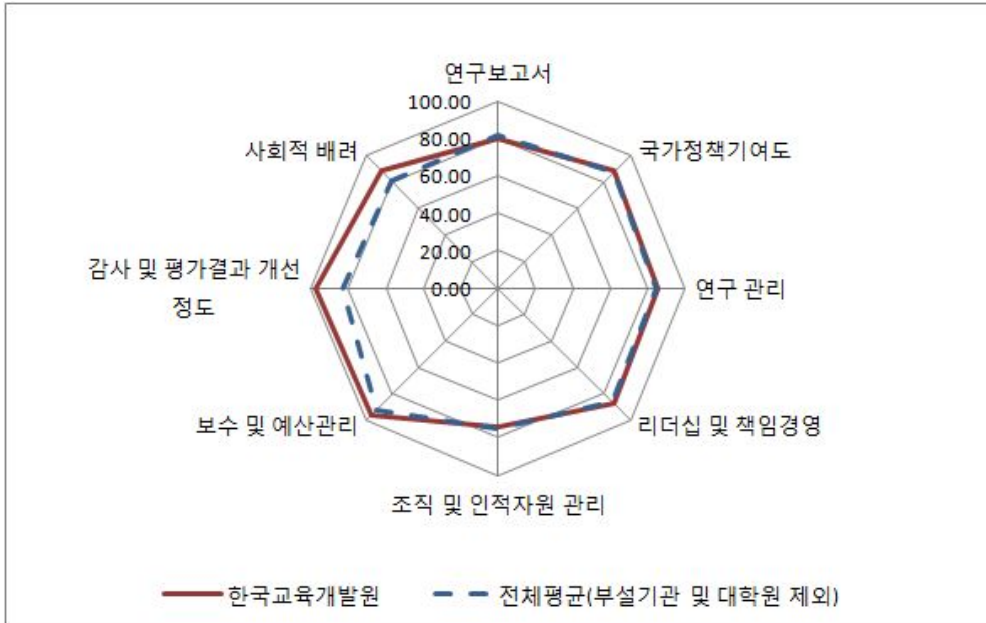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E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A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B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 | | |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B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A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B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B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B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S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S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연구를 다각도로 수행함으로써 정책 기여도를 높이하고자 노력한 반면에 정책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시스템의 개선방안 제시는 다소 미진함.
- 연구사업의 자체점검과 수요자 평가회를 통한 평가결과의 환류 체계가 우수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객관적 모니터링을 수행함.
-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관점과 대안 제시가 필요한데, 이를 테면 학교범죄 예방 사안의 경우 학교시설 확충만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함.
- 기본연구과제의 경우 KEDI-교육부 정책연구협의회와 교육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연구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과제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사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시연구과제의 경우 과제 발굴·선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미흡함.

- 협동연구의 추진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으며, 협동연구의 철저한 점검 및 평가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음.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하고, 협동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전문가 풀(Pool)의 구성 또한 다소 미흡함.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 평가위원 풀의 선정과 구성에 있어서 전공·분야·소속기관별 평가위원 구성의 노력이 필요함.
- SNS 게재물이 양적으로 전년대비 350% 증가한 것 등은 긍정적인 성과이나,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큰 것은 개선이 필요함.

[경영 분야]

- 기관장의 현안문제 타개 및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뛰어나며,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뛰어나. 그러나 융·복합과제 발굴 수행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함.
-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관장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필요한 제도나 규정을 정비함. 연구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체제를 강화하고, 해외 선진연구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의 적정성은 4대 경영목표와 12대 실천계획이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내부 경영목표TF 및 경영목표수립자문위원회 등에 의해 수립되고, 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고 공유하여, 경영목표의 적정성과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수함. 실천계획으로서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의 구체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 융·복합적인 연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 등도 좀 더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전반적으로 기관이 설정한 성과목표는 실천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들로 설정되었으며, 제시된 성과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나, 성과목표의 달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대부분 과정 지표이며,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기관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도전적인 수준으로는 미흡하므로, 연구사업의 결과가 구체적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 연구결과가 입법 또는 정책으로 채택된 비율 등을 성과목표로 관리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3개)의 중요성, 추진실적,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글로벌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제적 기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글로벌 교육연구 리더십 강화와 관련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글로벌 위상 정립과 관련된 실천과제를 집중 선택하였으며, 중점추진과제 선정 절차가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이루어졌음. 반면에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사업 확대와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한 파급효과와

기여도를 국가적 관점에서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목표 수립 시 실천과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평가와 연계하여 부서 및 실·센터 실적보고서 작성 양식에 포함하고 그 실적을 부서 및 실·센터 평가 시 활용하고 있으나,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변화 요인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려는 노력이 미흡함.
- 연구직의 연구성과 평가 시 직무평정 60점 중 40점(66.7%)을 반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평가 비중을 극대화하고 있으나, 비연구직 계량지표의 경우 건수, 횟수 등의 투입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 노사간담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단기근무로 인한 행정업무 오류를 직무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노무관리와 연계하고 있으나, 노사협력 증진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나, 집행내역 중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은 과제(80%이상)가 1건 발견되어, 외부위탁연구의 비중을 줄이는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예금 등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기본연봉·성과연봉의 차등지급율과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의 경우 연봉계약 체결 시 기본연봉에 대한 누적식 효과를 상쇄시킨 문제점이 발견됨.
- 공유→분석→순위평가→계획수립→모니터링의 연구기관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개선을 완료하였으나,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절차 수립과 개선실적과 개선성과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의무고용률(6.0%)을 초과달성을 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음.
- 청년인턴 채용 계획대비 달성도는 양호하지만, 인턴 근무관리 분야 중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및 고충처리에 대한 실질화 수준이 미흡하므로 개선이 요구됨.
- 국가유공자 2명을 신규채용한 실적은 우수하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동일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교육, 복리후생, 편의시설, 휴가 등 복지 분야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고등학교 졸업 후 초기 성인기의 성과를 청소년 시기 가정배경과 교육경험과의 연결선상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의 발달 및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 및 학술적 기여도가 높음.
- 학교 내부자(교사, 학생, 행정가)를 포함하여 관련 교육전문가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시각을 보여주는 언론 기사의 분석을 통해 거시적 측면에서 본 정책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고자 노력함.
- 고교 다양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체계적이고 현장에 근거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내용이나 방법 측면에서 선도성이 높음.
-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자료 수집 방법에 부합하게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함.

<단 점>

- 전반적으로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서술함에 있어서 통계치를 그대로 나열하거나 단순 비교하는 서술이 많은 경향을 보임.
- 일부 연구 방법(조사 대상표집의 구성, 분석 방법)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을 나타냄.
- 고교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를 탐구했지만, 국내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나 정책과의 연결성을 연결시키는데 다소 미흡함.
- 대학원의 발전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 및 대학원 차원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이나 정책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이나 시스템의 개선방안 제시가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내에서 제시된 교육에 관한 각종 통계 자체를 대상으로 그 추이를 분석하고 공과를 제시하며, 통합관리를 통해서 교육통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함.

- 전체 연구자들이 동 통합조사 및 기관 전체의 연구계획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개별 연구자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통합 조사된 자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 중복적인 연구 및 조사 실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선진 국가들과의 글로벌 교육 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개선해 나아갈지에 관한 비전과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특임센터의 설치와 국정과제 관련 TF 운영 등을 통해 새 정부 수립에 따른 업무 증가에 대처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증액을 통해 국정 현안과제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함.
- 정부부처의 국정과제 관련 정책안을 수립·지원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신규 사업의 수입 및 수행 실적이 우수함.
-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긴급현안 조사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대학입시 간소화’ 등 국정과제에 대한 의제화 및 추진 방안 수립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단 점>

- 기관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가 과다하고 과제 수행기간의 제한으로 인한 연구진의 과부하가 우려됨.
-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의 역할에 머물러 있고, 국정과제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광범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이 미흡하며,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의 국정과제 기조에 맞추어 결과를 미리 정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관행의 개선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수시정책연구에 부응하는 단기과제 이외에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긴 호흡의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이끌어내는 역할의 강화를 기대함.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새 정부 수립 전에 ‘새 정부 교육공약 실천방안’을 발간하여 필요성, 실천 방안, 예상 문제 및 대책을 제시함.
- 교육정책포럼, 포지션페이퍼 발간 보고 등을 통해 국정과제에 대한 여론수렴과 현안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함.
- 다양한 현안과제에 따른 긴급 및 수시 요청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

〈단 점〉

- 과다한 수시 및 수탁연구과제의 수임은 기존 인력의 노동 강도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임시 혹은 외부 인력에 의존하게 되며, 심도있는 연구수행이 어려울 수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선제적 대응’이라는 의미에 충실하도록 정부에서 부과하는 문제를 합리화하고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KEDI가 먼저 현안과제를 포착하고 제안하여 정부가 정책화하는 기능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함.
- 긴급 및 수시 요청에 대응하느라 기본연구과제의 수월성을 기할 수 없게 되는 본말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제도적 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교육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노력이 우수함.
- 국내·외 기관과의 정책연구네트워크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

〈단 점〉

-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와의 네트워크가 다소 부족하며, 지속적인 시스템에 의거한 협업방식보다는 다소 일회적인 회합 수준에 그치는 방식이 많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교육부 이외의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현안과제의 실천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부 연구기관 간 중복된 과제들의 내용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한 지속적이고도 주목할 만한 협업연구가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함.
- 기관 간의 네트워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네트워크 실적도 중요하지만, KEDI에서 수행해 온 방대한 연구결과들의 유기적인 활용을 통해 유사한 연구가 반복됨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개인 연구자나 민간단체가 아닌, 국가연구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방대하고 실천적이며, 여러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요청되는 연구들이 시의적절하게 수행되었음.
- 여론 및 의제 형성을 위해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함.
- 정부부처, 국회,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안건에 반영하고 연구결과를 홍보하거나 전문적 자문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연구결과의 효과성을 높임.
-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의한 실현가능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함.
- 연구결과를 관련 법령이나 지침의 제·개정에 반영하고, 많은 후속연구를 수행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단 점〉

- 정부의 발간물에 선언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지 않음.
-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본 연구결과로 제시한 대안을 실제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연구의 진행과정에 있었던 협의회 실적들을 제시하고 있음.
- 제시된 정책화 실적이 본 연구과제의 결과와 직결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정책 대안이 가지는 한계나 선행조건, 그리고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세부적 요건 및 로드맵의 구체화 노력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의 계획에 명기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책의 실효성, 타당성이 실제로 입증되도록 하는 지속적,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새로운 조직이나 기관의 설치 제안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연구방법이나 과정이 아니라, 연구가 완료된 이후의 정책화실적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음.
- 관련 부처 간 적절한 업무 분장을 통해 연구기관간의 중복 수행에 의한 낭비나 갈등 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선도와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학생안전 강화 및 학교범죄 예방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활용하도록 함.
- 관련 내용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공청회 및 학술대회 등을 통해 관심을 확산시켰으며, 추후 연구과제로 이어져 지속적인 실적을 보임.
- 국가 고등교육통계체계의 생산 및 서비스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개방, 공유, 확산을 목표로 하는 정부 3.0 정책에 기여함.

<단 점>

- 학교시설 설계의 개선이나 감시체제 강화만으로는 학교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음.
- 학교 스스로의 자발적 활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필요가 있음.
- 제시된 학교 폭력 비율의 감소가 본 연구의 파급효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고등교육통계체계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명료히 하고, 수요자의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여 정보가 산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학교범죄의 예방이 학교시설의 확충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다각적인 접근이 요청됨.
- 감시체제의 강화를 통한 학교범죄 예방이 아닌, 학생 친화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시설설계 방향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및 교사의 인권 침해 가능성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통계 체계화 작업이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대학 관계자 및 정보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으로 인해 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음.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정도

□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장 점〉

-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와 정책 상황 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참여기관 간 효율적 네트워킹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조직을 운영함.
- 새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함.
- 기관 차원의 사업 자체점검 실시 및 사업관계자와 수요자 대상 사업 평가회 개최를 통한 평가결과의 환류 노력이 우수하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연구사업의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 SWOT분석에 의한 방송고 사업 5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방송중·고 콘텐츠 전면 개편을 통한 효과성 제고 노력을 하고 있음.

〈단 점〉

- 교육 유관기관에 일부 관련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참여실적이 다소 미흡함.
- 각 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다하여 유관기관 간의 정책 협력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급변하는 학습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관 자체의 점검 및 관계자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사업의 적정성 및 발전 방안을 충분히 포착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개선 및 권의사항〉

-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시행 단계에서의 정부부처간의 협력은 물론, 정책 구안단계에서부터 관련 연구기관 간 긴밀한 연구와 시·도교육청, 학교 등과의 네트워크 운영이 필수적이므로, 본 네트워크 운영 사업에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인적 투자가 요청됨.
- 상호 정보 공개 및 공유에 그치지 말고, 중복되는 사업의 업무 분장을 명료히 하여 기관 간의 갈등 및 낭비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사업관계자 및 수요자 대상 사업 평가를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 운영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부처 및 각 관련 기관의 인식 제고를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영재교육사업의 경우, 과제의 양적 확장보다 질적인 수월성과 실효성의 제고에 더 많은 투자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영재교육센터의 내부적 충실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측면들을 구체화하여 대외적 지원체제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거시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14년에 걸쳐 지속된 영재교육센터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냉철히 분석하여 전환적 도약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정보화시대에 따른 학습환경 및 방송중·고 재학생 및 예비 학생들의 특성의 변화를 고려한 방송중·고 운영 방식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함.
- 방송중고 재학생 내에 존재하는 관심, 연령, 수준 등의 커다란 개인차의 문제에 대처하는 다각화 노력이 필요함.
- 방송중, 방송고의 효과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강화되도록 대외 네트워크 및 정부부처와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환경 및 학습자 특성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정규학교에 시범적용 되고 있고 향후 도입 예정으로 있는 디지털 교과서와 방송중·방송고의 콘텐츠와의 관계 설정 검토가 필요함.
- 학습시기를 놓치거나 중단한, 소외 청소년 및 성인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체제와 이러닝·유러닝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환경 구축을 통해 정규학교의 보완 및 대안 기구로서의 기능 간에 갈등 요인이 예상되므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상승함. 상세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와 수탁연구에 대한 만족도 모두 상승했으며, 기본연구 점수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큼. 상세업무유형별 만족도 순서는 수탁연구, 기본연구 순임.
-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정부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기본연구와 수탁연구 모두 전체 평균에 비해 높으며, 전체 평균 대비 수탁연구의 점수 차이가 기본연구에 비해 더 큼.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차원별로는 요소만족, 과정품질, 환경품질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낮아졌고, 품질요소 중에는 준비성, 대응성, 성실성, 구비성, 편리성, 공정성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차원별로는 모든 차원의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높고, 품질요소 중에는 대응성, 공정성 점수가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연구목적 정확히 이해’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결과물의 객관적 기술’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고객 문의와 요구사항에 신속히 답변, 요구 사항을 정확히 처리’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 목표와 임무 달성, 연구결과의 정책적·학문적 활용도 높음’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변화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는 노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려는 노력,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체계 수립, 연구결과물에 대한 객관적 기술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상세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 위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점수가 상승한 반면, 수탁연구, 공동연구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짐. 점수가 낮아진 상세업무유형 중 공동연구에 대한 만족도 내림폭이 상대적으로 더 큼. 상세업무유형별 만족도 순서는 수탁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본연구, 공동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위탁연구 순임.
-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는 전체 평균에 비해 높지만, 위탁연구와 공동연구는 상대적으로 낮음. 특히 위탁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차원별로는 전반적 만족, 사회품질, 거시적 성과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으며, 품질요소별로는 효율성, 대응성, 합리성, 공정성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연구목적 정확히 이해’ 항목의 점수는 높고, ‘고객 문의와 요구사항에 신속히 답변, 요구 사항을 정확히 처리’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고객 문의와 요구사항에 신속히 답변, 요구 사항을 정확히 처리’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 목표와 임무 달성, 연구결과의 정책적·학문적 활용도 높음’ 항목의 점수는 낮음. 위탁연구에서는 ‘연구 수행이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 연구결과가 고객과 연구기관 간 협력관계 조성에 도움’ 항목의 점수는 높고,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반영 절차 구비’ 항목의 점수는 낮음. 공동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사회적 사명감, 연구과제 수행에 책임감 보유’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과제의 연구진행 시기와 신청기간이 적절’ 항목의 점수는 낮음. 정보제공서비스에서는 ‘해당 분야의 최신

정보 제공' 항목의 점수는 높고, '온라인 정보이용 관련 고객의견 점수의 편리함'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과제 제안 및 접수에 대한 정확한 안내, 서류작성 및 업무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 고객만족(CS) 교육 등을 통한 고객 요구에 대한 친절성 강화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KEDI-교육부 정책연구협의회와 교육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연구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 원내·외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점검도 돋보임.
- 정부부처와 내·외부의 발굴과제에 대한 선정 비율도 균형을 이루고 있음.
- 기본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외의 전문가를 별도로 조직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단 점〉

- 원내 연구진이 제안한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선정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남.
- 기본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선정위원으로서 교사의 참여도가 다소 저조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원내 연구진이 제한하는 기본연구과제의 선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연구의욕을 높이고 장기적인 전방에서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기본연구과제라 하더라도 선정위원으로서 교사의 참여도를 높여, 연구과제 선정에서 현장지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정부요청 의견반영비율이 매우 높아 수시연구과제 취지에 맞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심사를 기본연구과제에 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연구성과를 개인별 근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진도 및 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미흡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과정에서 정부부처 의견수렴이 대부분으로 과제발굴의 다양성이 부족함.
-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정부부처의 요구 수준이 낮음.
- 수시연구과제의 보고서 발간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어, 정책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상반기 발간 1건).
- 3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의 경우 중간심의 절차가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정부부처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과제발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수시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정부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가 수시로 선정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선정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3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중간심의 절차 도입이 필요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의 추진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고, 협동연구의 철저한 점검 및 평가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음.

- 협동연구과제 5개의 협동연구 필요성과 협동연구 연구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협동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원외연구원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음.

〈단 점〉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협동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전문가 풀(Pool)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다소 미흡함.
- 협동연구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평가 정책연구”와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의 경우 국제 사례 및 개발도상국가를 선정한 이유와 이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다소 피상적임.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 장려의 인센티브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국제 연구를 위하여 협동연구 성과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 체계와 규정을 단계별로 잘 수립하고 있음.
- 연구평가에 대한 격차보정절차를 통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자체평가 시 외부 평가자를 80%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평가에 객관성을 유지하려함.
- 연구사업 유형별(기본, 수시, 수탁) 특성에 적합하게 평가하여 연구품질의 제고를 하고 있음.
- 외부 평가자의 인력 풀(Pool)을 전공적합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외부 평가단 구성에 활용함.
- 외부 평가자 비율이 기준대비 매우 높게 활용되고 있음.

〈단 점〉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실시 및 외부 평가위원 비율이 80% 수준 등 평가위원 구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외부 평가자 구성에 대한 인적 구성 중 전공분야별 평가위원의 분포현황 등 관련 사실내용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권의사항〉

- 전공분야별 평가위원의 인적 구성 및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 전공분야별 평가위원이 적절하게 분포되었는지 및 보고서 평가에 대해 전공분야별 평가위원이 균형있게 선택되었는 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웹 지킴이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적절히 갖추고 있음. 특히 연구윤리 제고와 저작권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임.
- 보안 및 보호 관련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음.
- ‘수요자 참여형 연간홍보계획’을 지향함.
- 국가수준의 빅데이터 풀(Pool)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임.
- 연구성과 홍보전략 3.0 로드맵 전략이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음.
- ‘KEDI연구=수요자와 함께 완성하는 연구’라는 모토를 내세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긍정적임.
- SNS 게재물이 양적으로 전년대비 350%가 증가하였음.
- 해외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연구성과를 공유 및 홍보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임.
- 2013년도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

〈단 점〉

- 2013년에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2013년도에 시스템 업데이트와 신규 시스템 개발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홍보·확산 계획에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단기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홍보·확산 실적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수단 체계 조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따른 실적이 계량적인 실적에 치우쳐 있고 상대적으로 효과 및 파급력 분석은 미흡함.
-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홍보전략은 미약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홍보와 성과평가의 연계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수준임.
- 일부 이슈페이퍼의 양이 너무 과다하며 이슈페이퍼의 반가량이 하반기에 발간되고 있음.
- 배포 체계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즉, 수요자를 잘 파악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로부터 배포 대상 목록을 받아서 대상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는 등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전략적 활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성과지표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 개발을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당해연도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둔 성과지표와 단기 목표치의 제시가 필요함.
-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 효과성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확산수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성과물은 차이가 있는 바 피드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홍보계획 및 방안과 실질적인 성과와는 괴리감이 있는 바, 전략 계획에 걸맞는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물에 대한 홈페이지 등록을 보다 앞당겨 자료 제공의 신속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전년(2012년)대비 홍보실적도 중요하지만 2013년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도를 체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엄격한 의미의 수요자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배포체계를 시스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슈페이퍼의 시기를 조절하고 분량을 적정하게 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페이퍼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14편(72건/63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전문지에 게재한 논문이 전체 72건 중 24건으로 약 33%를 차지해 비중이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기관 현안문제 선정을 위한 내·외부 여건 분석이 잘 되었으며, 의견수렴 과정이 단계적으로 잘 수행됨으로써, 기관장의 노력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음.
- KEDI 정책포럼, 국내·외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함.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잘 이루어져 있음.
- 연구개발 능력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임.
- 교육관련 정부기관의 수요조사, 정책연구협의회, 기관발전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 융·복합과제 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임.
- 채용인력의 전공 다양성 추구 및 파견인력의 확보를 통한 협동연구의 진행 등 융·복합적 연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함.
- 융·복합과제의 수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 국제개발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함.
-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에 활용하여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강화함.

〈단 점〉

- 3대 현안문제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방법론 사용이 미흡함.
- 의견수렴 과정이 단계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전체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함.
-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라는 현안과제를 타개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근거 자료가 다소 부족함.
-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원 개개인에 대한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에 관한 구체적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융·복합과제의 근거 및 목록이 구체적이지 않음.
- 업적평가의 일부 지표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3대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객관적인 선정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의 범위를 넓히고, 수렴된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안 도출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노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업적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의 개선 등).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과제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융·복합과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업적평가 시 능력평정과 같이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지표의 경우 객관화를 위한 기준 제시 등 정밀화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멘토링제 운영, 직종간 정례협의회 활성화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소통 노력을 경주함.
- 국가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임.
- 삼성경제연구소, 행동과학연구소 등 비교육계 기관과의 MOU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7개 교육청과 행복교육포럼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임.

〈단 점〉

- 제안제도와 같은 하위 구성원의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함.
- 직원들이 직급이나 직종별로 기관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함.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연구를 위한 교류 및 협력이 부족함.
- 기관의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홍보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해외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전체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위원회에 직종별, 직급별 대표의 참여 제도화 등).
- 하위직 구성원의 상향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제안제도의 활성화 등).
-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이외에 기관장 또는 경영진과 구성원간의 대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 등 소통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나 OECD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교류 및 협력관계 확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위상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홍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경영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 규정 및 제도가 잘 정비되었음.
- 자체 감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음.
- 윤리경영을 위한 온라인 교육이 잘 이루어져 있음.
-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음.
- 기관장이 청렴교육을 이수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임.
- 자체감사 시 외부인력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
- 모든 직원의 채용 및 계약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실시하며, 물품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수행함.
- 연구윤리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체계구축이 잘 되어 있음(표절검색시스템(Copy Killer) 도입, 연구윤리위원회 체크리스트 사용 등).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직원과의 대화나 센터별 협의회에 기관장이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윤리 준수를 강조함.

〈단 점〉

- 클린신고센터 및 청탁등록센터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치가 다소 부족함.
- 기관장과 직원 간 대화모임을 비공식적, 비정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참여에 제한을 초래할 수 있음.
- 표절과 관련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익명성 보장,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등).
-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직종별, 직급별 대표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기관장과 직원간의 대화모임을 정례화하여 예정을 통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제안할 의사를 준비토록 할 필요가 있음.
- 표절 방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이상으로 사후 조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바람.
-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업적 평가 및 인사고과와의 연계가 필요하고, 이를 규정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4대 경영목표와 12대 실천계획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내부 경영목표TF 및 경영목표수립자문위원회 등에 의해 수립되고, 전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고 공유하여, 경영목표의 적정성과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수함.
- 경영목표가 전반적으로 실천계획들과 체계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음.
- SWOT분석을 통해 외부환경과 내부역량을 고려하여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경영목표 및 실천계획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기법은 합리적임.
- 외부환경 분석과 내부환경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천계획의 실현 가능한 내용과 실현가능 수단이 잘 정리되어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통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계방안을 설정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
- 전반적으로 기관이 설정한 성과목표는 실천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들로 설정되었으며, 제시된 성과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
- ‘글로벌 교육연구 리더십 강화’를 위해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사업’, ‘교육통계 글로벌 허브 기반 구축 및 기능 강화’ 및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제시한 것은 전략적으로 적절함.
- 글로벌 교육연구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제적 교육협력 연구, 교육통계의 글로벌 허브 기반구축 노력 및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한 실적은 양호함.

〈단 점〉

- 경영목표로부터 실천계획이 도출되는 과정과 기관의 당면현안에 대한 도출 과정이 논리적으로 다소 부족함.
- 기관의 당면현안이 경영목표 또는 실천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안이 단순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부족함.
- ‘국가 교육정책 선도 기능 강화’라는 경영목표에서 국가교육 의제 제시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에서 미래지향적 연구, 융·복합연구, 창조경제와 관련한 연구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함.
- ‘연구 사업성과의 맞춤형 홍보 강화’에서 국내·외 학술지, 언론 홍보 등은 긍정적이나 첨단 홍보수단을 활용하거나 글로벌 홍보를 위한 영문책자와 같은 실천계획이 부족함.
- 인력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능률성과급제와 같은 성과중심 평가·보상시스템과 비정규직 및 장애인 채용관리에 대한 실천계획이 없어서 아쉬움.
- 세부 실천계획 중 효율적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 및 재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 국가교육정책 선도기능 강화와 관련한 성과목표는 융·복합연구 및 한국교육의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함.
- 성과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대부분 과정지표이며,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기관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도전적인 수준으로는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로부터 실천계획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기관의 당면현안에 대한 논리적 도출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당면현안에 대한 구체적 극복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기관의 당면현안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점을 설정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미래지향적, 융·복합, 창조경제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및 연계방안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실천계획으로서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의 구체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 융·복합연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 등도 좀 더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
- 국가 교육정책 선도기능 강화는 기관의 핵심역량에 관계된 경영목표이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연계방안들은 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 이외에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기관의 경영목표의 하나가 효율적인 조직 인프라 구축이므로 성과중심 평가·보상시스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과제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의 객관적 선정을 위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내외·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사업의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결과 입법화를 위한 정책수요자와의 협의회 개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연구결과가 입법 또는 정책으로 채택된 비율 등을 성과목표로 관리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 만족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의 연구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연도별 중점추진과제들의 선정배경 및 이유가 잘 기술되어 있고,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제적 기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글로벌 교육연구 리더십 강화와 관련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글로벌 위상 정립과 관련된 실천과제를 집중·선택하였음.
- 중점추진과제 선정 절차가 전체적으로 타당성있게 이루어졌고, SWOT분석결과를 재검토하고 기관장을 포함한 원내·외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선정기준에 따라 3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 적절한 과정을 거쳐 중점추진과제가 선정되었음.

〈단 점〉

- 글로벌 교육연구 리더십 강화 경영목표와 관련된 중점추진과제인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사업 확대와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는 연계방안의 내용이 유사하고 연관성이 높은 세부실천과제로 되어 있어, 중복성이 있고, 효율성이 낮을 수 있음.
- 중점추진과제에 있어서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사업 및 네트워크에 치중하여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미래지향적, 융·복합적인 연구와 관련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기관의 글로벌 위상정립과 관련하여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사업 확대를 위한 성과로 글로벌 교육개발협력 목표아래 한국교육소개자료 발간, 개발도상국 교육정책 컨설팅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건수 등은 기관의 중점과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성과로 볼 수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추진과제와 국가정책과의 부합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원의 미래 발전방향에 맞는 보다 구체화된 중점추진과제 선정이 필요함.
-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사업 확대와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한 파급효과와 기여도를 국가적 관점에서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기관의 다양한 연구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2개의 중점추진과제 중 개발도상국 교육발전 프로그램의 운영과제보다 선진국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과제가 더 적합할 수 있음.
- 교육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부서 통합 및 신설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1개 특임센터 신설 및 6개 특임센터 유지,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계획 구체화TF 등 각종 TF를 운영함.
-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를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로 하여 연구기능 강화 및 인력을 보강함(정규직 박사 2명).
- 국제연구협력 요구 증대에 대응하여 글로벌교육연구본부 신설 및 인력을 보강함(정규직 박사 5명).
-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내부요구에 따라 인사규정과 연구사업규정, 국내여비규정 등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요구에 따라 국외여비규정 등 개정 및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목표 수립 시 실천과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평가와 연계하여 부서 및 실·센터 실적보고서 작성 양식에 포함하고 그 실적을 부서 및 실·센터 평가 시 활용함.
- 모든 부서 및 실·센터에서 새 정부 교육공약 실천 방안 발간 등 총 7회의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함.
-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최근 5년 간 연구직 정원을 12명 증원시켰고, 수탁사업의 증가로 대폭 확대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충원계획에 따라 연구능력 및 전공적합성, 해당분야 지식수준 등을 고려한 2단계 전형절차를 통한 우수인력을 채용함.
-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기관 홈페이지 수시 채용사이트를 운영하고, 학계 석학과 현장전문가 등을 파견 및 고용휴직 등의 형태로 채용하고 있음.
-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개편한 조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 충원·배치함.

〈단 점〉

- 환경변화 부합 조직운영 실적을 조직개편 실적만을 나열함.
-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변화 요인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려는 노력이 미흡함.
-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조직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함.
- 조직 및 제도 운영 성과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 내용이 다소 추상적임(계량 가능 지수 또는 지표 개발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외부고객으로 분류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며, 도출한 요구사항도 일반적인 행정처리 사항 수준임.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 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경영목표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가 미흡함.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미흡함.
- 직무분석, 기능 연계 사업분석, 인력구조 분석에 근거한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특별한 기준, 노력 및 성과가 미흡함.
- 우수인재 확보 성과로써 원내 지원인력의 상위학위 취득 및 교육연수를 강화하여 연구업무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학위 취득 및 연수는 전 기관의 공통된 일반적 교육프로그램임).
- 기관의 SSCI 영문저널을 국제 학술대회에 소개함으로써 기관 신인도 제고를 우수 인재 확보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인재 확보와 연계되는 전략 및 성과를 제시하지 못함.
- 우대채용제도는 있으나 실제로 운영한 실적이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문제점을 장·단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교육정책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의 정기 실시 등).
- 조직의 핵심기능, 경영목표, 주요 이슈 등이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의 요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고객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기관 차원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당해연도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인력수급계획의 작성 노력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조직의 제도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연수계획을 부서별·직종별로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 결과 교육연수 기회는 전년대비 6.6%, 연수비용은 22.1% 증가함.
- 연구콜로키엄,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등 연구기반 연수를 통해 연구결과 공유가 활발해짐.
-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직종별 핵심 역량강화, 경력개발 지원, 인성 및 소양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연수 지원을 강화함.
-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 직원 상호간의 유대관계 개선 및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선택적 복지카드제, 동우회 활동 및 체육·문화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기관 경영목표 및 각종 제도에 기반한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직종·부서별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구성원의 핵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18종의 직종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5종, 인성 및 소양 교육으로는 3종을 운영하여 총 308건의 실적이 있음.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요구수립-계획수립-프로그램 운영-결과 공유-역량강화의 환류과정을 거쳐 그 성과 및 문제점을 익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함.
- 총 교육비는 57,477천원으로 전년대비 22.1% 증가하여 역량강화에 노력함.

〈단 점〉

- 구성원 역량강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운영중이라고 하나 계획서가 없음.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다소 미흡함.
- 교육훈련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부족함.
- 교육훈련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
- 비연구직 교육훈련비가 9.8%로 이에 대한 전략적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교육훈련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연구직, 비연구직 등 직종별로 차별화된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 적용하고, 그 반영비율도 차등 적용하고 있음.
- 연구직의 연구성과 평가 시 직무평정 60점 중 40점(66.7%)을 반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평가 비중을 극대화함.
- 연구직의 원내·외 연구활동 점수 적용방법 개선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개선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함.
- 업적평가 시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건별 1점 국제학술지는 1.5점을 부여하고,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고 있음.
- 직종별 직원들의 합의과정을 거쳐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복무 평가 시 상호방사형 다면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정과정에서 전년도 평가항목별 점수를 제공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함.
- 연구보고서 평가 시 외부 전문가 평가자의 비율을 80%로 하고,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점수를 제공함.
- 업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도입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함.
- 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평정 해당기간 중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음.
- 모든 직원들의 평가결과를 기본 및 성과연봉, 능률성과급 등급 결정 등 금전적 보상에 100% 반영함.
- 직원 승진후보자 선정 시 평가결과만으로 후보자를 100% 선정함.
- 직원들의 해외연수, 표창, 재임용 대상자 선발 등 인사 전반에 평가결과를 반영함.

<단 점>

- 연구직 및 비연구직의 업적평가기준이 매우 포괄적이며 추상적임.
- 연구직의 평가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수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비연구직 계량지표(활동평가) 중 위원회 활동, 감사수감 지적여부, 승용차 요일제 준수, PC보안, 국제협력 활동 및 설문참여 등은 행정편의적 지표이며, 핵심직무 관련성과에 대한 계량화 지표 개발 노력이 미흡함.
- 비연구직 계량지표의 경우 건수, 횟수 등의 투입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논문게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직원의 승진, 재임용제도 운영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2013년도 임금인상을 갈등과 관련하여 노사 간 협의와 직종별 협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원만하게 합의함.
- 한해 70~80명의 위촉직원이 2~3개월씩 단기근무하고, 퇴직하면서 생기는 각종 행정업무의 오류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별 해결방안을 직무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노무관리와 연계함.
- 총 13회의 노사간담회로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어 있음.
- 신청사설계, 과제 및 인사배치, 규정개정, 충북혁신도시 이주계획, 데이터 만족도 조사 등에 있어 전 직원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함.
- 노사협의회가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안전이 협의안전, 보고안전 등으로 명확히 분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제3차 노사협의회에서 공무원 휴가규정에 준용하여 일부 휴가규정을 정비함.
- 고충처리위원이 특정되어 있고 고충처리실적도 관리되고 있음.
- 노사화합 및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이슈발생→전략수립→갈등해결→성과로 이어지는 절차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 노무관리담당자 교육이 7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총 4회의 노사협의회와 7차의 직종별 간담회가 이루어짐.

〈단 점〉

-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측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측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임.
- 의사소통통로에서 기관장과의 직접적 접촉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직원체육대회, 사랑의 기금, 동우회 활동 등 노사협력 증진프로그램이 한정됨.
- 노사협의회와 직종별 간담회를 제외하고 수시 의사소통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노사협력증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사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 및 2014년도 기본연구사업비에서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9%, 82%로서 평가기준(30% 이상)을 준수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에 있어서도 2013년 및 2014년 각각 16%, 29%로서 모두 연구회가 제시한 평가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의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예산편성비율은 2012년 10.8% 및 2013년 11.9%로 모두 연구회 기준을 충족하였음.
- 퇴직예치금은 일반운영 자금과 구분되어 독립된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 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15건)의 집행에서 전액 위탁연구비로 지급한 과제는 없으나, 과제 1건의 경우 외부 설문조사가 주를 이루는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구과제 예산의 실제 집행액(40,475천원) 중 외부위탁용역비(40,000천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475천원)는 인쇄비 등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전액 위탁과제로 볼 수 있는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연구과제의 집행에 있어 외부위탁비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과제 수주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부통제가 필요함.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및 결원인건비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7%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2,375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연봉체계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함.
- 기본연봉에는 직무급과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약 29%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평가기준 (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차등지급률이 $\pm 1\%$ 이고, 등급별 인원배분기준 역시 최고-최저 각 10% 이상으로 배분되어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일부 직원(8명)의 경우 연봉계약 체결 시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누적식으로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누적식 기본연봉의 도입 취지에 맞게 누적효과를 제거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24\%$, 비 간부직의 $\pm 15\%$ 의 성과연봉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이상,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였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차등지급률이 $\pm 34\%$ 로 최고-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지급하고 있으며, 인원배분비율 또한 최고-최저 각 10%씩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 업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지적사항 중 개별지적 사항은 없고, 중점개선사항의 선정을 통한 개선을 100% 완료함.
- 주요 감사대상에 대하여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정기감사 외에도 일상 감사활동 강화를 통하여 주요사안에 대한 집행 오류를 방지함.
-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의 환류체계에서 전 직원이 평가결과 공유와 우선순위 평가에 참여하는 등 전 구성원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고, 평가결과 환류 체계가 5단계로 나뉘어 구분되어 조치되고 있고 각 단계별로 추진 주체(수행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구체적 개선과제에 대하여 수행주체에 의한 책임과 구성원 참여가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최종 점검 및 관리 단계에 전직원 기관 운영회의가 열림으로서 최종 개선결과까지 전 구성원이 공유하는 등 공유 → 분석 → 순위평가 → 계획수립 →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기관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전형단계별 5% 가점 부여 등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함.
-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결과 활용을 위해 연구보고서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공개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업적평가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함.
- 부서장 기본연봉, 성과연봉의 인원배분 비율을 준수함.
- 구성원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 지적사항의 존부와 관계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 개선체계의 구성에 있어 개선결과가 다음연도의 경영에 반영되면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개선환류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
- 구성원의 역량강화가 조직과 개인의 성과향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교육성과 모니터링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 신규채용을 연간 양호하게 실행하여, 전년도 의무고용률이 0.4%에서 2.9%로 상승함.
- 직원채용 시 장애인 우대조치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가산점 부여 조항 및 실적 있음.
- 장애인대상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등 연간 채용노력을 기울여 초과달성을 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장애인직원 고용우대 조치(고충, 애로사항 청취, 교통 약자석 지정 등) 또한 양호함.

- 2013년도 1~5월까지 5개월간 미달고용인원이 있고, 이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이 계획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100%달성), 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 공고 및 충원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청년인턴 1명의 위촉직 전환 실적이 있으며, 맞춤형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청년인턴 근무관리 분야 운영 실적이 부실하며(오리엔테이션교재 부실, 멘토링, 고충처리제 부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적응훈련 및 고충상담 관련 실적이 다소 미흡함.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을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
- 사회적 배려의 대상인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년 인턴을 위한 기관 고유의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공고 시 우대조치, 가산점 표기)을 하고 있음.
- 2013년 국가유공자 2명을 신규 채용한 실적은 우수하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이 3.5%)이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장의 관심표명, 대책회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관방문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연구원 관련 규정에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채용절차와 행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사항을 담은 단체협약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 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지침과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 계약직원 이상 비정규직 임용 시 정규직과 동일한 평정에 따라 차별없는 급여와 복리후생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동일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교육, 복리후생, 편의시설, 휴가 등 복지 분야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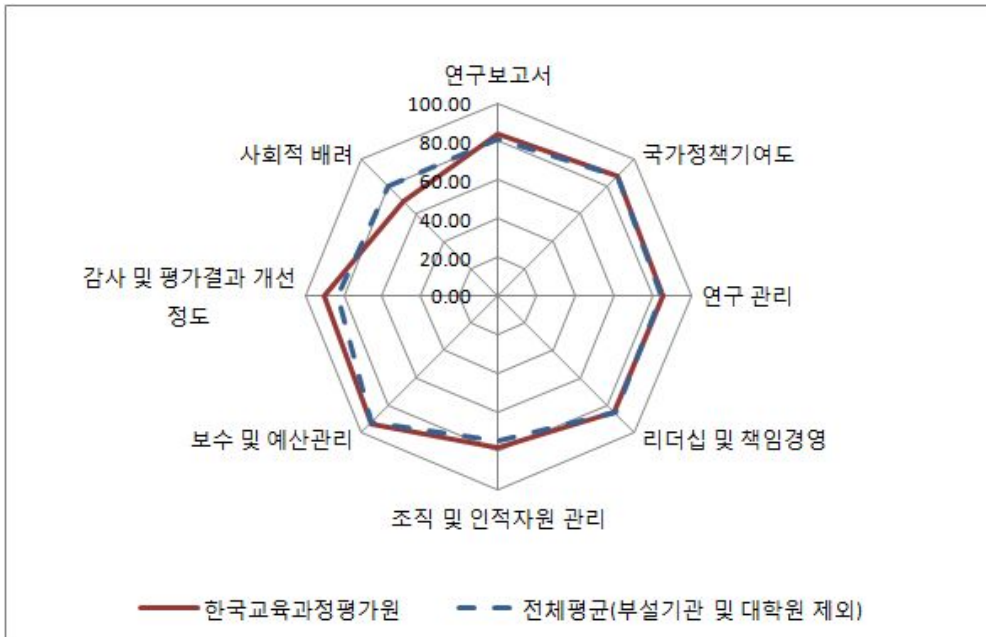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C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B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A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A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A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B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B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A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C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A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D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C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대규모 실증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책과제를 세분화하고 유형화함으로써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학업성취도 평가에 학력향상도 지표를 추가한 사례에서처럼 국가정책 수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보임.
- 교육부와의 정책협의 추진과 학교와의 네트워크 활용에 비하여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정책고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KICE-MOE 정책연구협의회의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정부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나, 과제선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 협동연구 추진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특히 추진단계별로 협동연구를 장려하는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 평가위원 풀(Pool)의 선정과 구성에 있어서 전공·분야·소속기관별 평가위원 구성의 노력이 필요함.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연구성과 관리, 확산을 위한 성과지표에 ‘NCIC이용실적’과 ‘Ku-Cu이용실적’과 같은 output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투입단위당 산출량을 측정하는 효율성 성과지표와 확산수단 간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함.

[경영 분야]

- 기관장의 현안문제 타개 및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뛰어나고, 대외 활동 실적이 높으나, 연구원의 연구역량 증진 및 융·복합과제의 발굴 수행 노력은 다소 부족함.
-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청사간 화상회의 시스템, 산·학·연 협동 등 기관내·외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윤리경영에 대한 제도를 잘 정비하였음. 교류협력국가의 확대 및 해외 선진연구기관과의 교류확대와 같이 해외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의 적정성은 4대 경영목표와 34개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설립목적 및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선도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적정함. 또한 외부 환경분석과 내부 환경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연계방안들이 상당히 압축적이고 추상적인 관계로 실천 방안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연구성과의 홍보역량 강화에서 글로벌 홍보를 구체적으로 실천계획 내에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실천과제별 달성도가 모두 100%를 달성하여 달성도가 양호하고,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나, 대부분 성과목표 및 목표치가 정성지표로 제시되어 있어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본 기관의 핵심기능 중 하나가 연구이므로 미래지향적이고 융·복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과제가 선정될 필요가 있음.
- 중점 추진과제들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것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 하는데 기여하고, 선정과정 및 절차가 타당성 있게 이루어졌으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교육 지원 실천과제’는 국가 정책적 측면과 기관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중점 실천과제이나, 성과목표가 비계량지표가 많고 추진실적은 실천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소 미흡하며, 글로벌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가 중·장기적으로 중점추진과제 내에 보완되어야 함.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과관리TF, 정보보안TF, 평정제도개선TF 등 각종 현안에 대한 TF를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분석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이 미흡함.

- 노사간 의사소통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의사소통 성과는 미약하고 주요 갈등관리 이슈인 누적식 연봉제 개선과 직원평정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경영성과 개선 노력을 찾기 어려움.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책과제 및 기초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지 않은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예금 등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기본연봉·성과연봉의 차등지급율과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실효성있는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체계를 갖추고 지적사항 개선을 완료하였으나 국회 지적사항 개선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인의 성과관리와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의 연계, 개선실적과 개선성과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인 점은 양호하나, 아직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청년인턴 채용목표 달성수준이 양호하지만,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 멘토링, 고충 처리의 실질화 노력이 미흡하여, 향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2명을 신규 채용한 실적은 우수하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미이행하고 있으므로,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복지부분에서는 차별해소의 노력이 돋보이지만, 임금 부분에서는 임금차별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운영계획도 실질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대규모 실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함.
- 기존 연구들이 학생들의 역량에 초점을 둔 것과는 달리 교사의 역량을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큼.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은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교육정책의 추진 방안 및 추진 전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의적 특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향후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교수 학습, 교육평가 개선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의 경우 최근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의 필요성이 도전 받는 현실에 비추어 사회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로 보임.

<단 점>

- 정책 제언 및 하위 실행 전략들이 백화점식 나열의 성격이 강하고 제언들이 영향력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 제시되기 보다는 흔히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다양한 제언들로 나열된 경우가 있음.
- 수요자로 분류한 교육청과 학부모는 동일한 방향을 가진 단일 수요자가 아니며 학부모 또한 동질 집단이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대립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연구 세부내용과 연구결과가 연구의 필요성에 부합되게 보고서에서 명확히 논리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교과별 성취 특성 분석 및 출제 방안 연구는 과목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출제 방안의 제시가 다소 미흡함.
-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확보하거나 다양한 외국 사례를 연구하지 못한 한계가 나타난 경우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교육 현안에 대한 국제적 비교 평가 연구의 경우 평가 결과를 단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국가 간 과목별로 투입 수업시간 및 수업형태 등 보다 세부적 비교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평가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연구보고서의 체계의 일관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으며, 정책과제를 좀 더 세분화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중·단기 구분,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시스템 개선 등 다각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법 개정 및 재원 확보, 중·단기 추진 과제, 추진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면서 입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효율적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잘 구축하고 있음.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
- 정부부처 국정과제 참여 및 지원 실적이 매우 높으며,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함.

<단 점>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체제가 미흡함.
- 국정과제에 참여함에 있어 단순한 자문 및 의견개진 등의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개편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플랜과 함께 자원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기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단순히 정부가 요구하는 과제수행을 넘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선제적으로 과제를 개발하고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의 조직개편, 자원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함.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교육부와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정부 현안과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정부 현안과제 수행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요소를 파악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가의 대표적 시험과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에 기여함.

〈단 점〉

- 기존에 수행해야 할 여러가지 사업으로 인해 현안과제에 즉시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 교육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부를 유도하는 기능이 미흡하며, 연구 및 사업성과를 국민이나 정책고객이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 현안과제 대응 시 장기적 검토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논의와 분석이 필요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이슈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수행 시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정책연구협의회,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부와와의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34개 대학, 130개 초·중등학교 등 교육정책의 현장인 학교와의 네트워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외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단 점〉

- 국회와의 협력이나 교육부 이외의 정부부처와의 협력이 다소 미흡함.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의 업무 차별화 및 실질적인 교류가 다소 부족함.

- 학교와의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으나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정책고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연구 네트워크 운영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 과정의 강화가 필요함.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의 업무 특성화,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 증진이 필요함.
- 과제수행뿐 아니라 연구결과의 현장 착근을 위해 학교와의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의 강화가 필요함.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연구과제가 교육 관련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위성을 부여하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기여함.
- 연구과제가 제시한 대안이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짐.
- 국정과제 수행 및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서 연구과제 수행이 적시적임.

〈단 점〉

- 연구과제가 제시한 대안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정책 수혜자(주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연구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선도적 차원보다는 지원적 차원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가 제시한 대안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정책 수혜자(주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강화되어야 함.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적 차원뿐 아니라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한 선도적 차원에서도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연구과제를 통해 국정과제 수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함.
- 연구의 정책대안이 단기적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정책대안이 정책화되어 실현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후속연구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선도와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향상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학술논문 5편을 게재하고 단행본 2편을 출간함으로써 지식의 실현 정도에서 매우 우수함.
- 본 연구를 통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성취도뿐 아니라 향상도 개념에 대한 지식 형성 및 이와 관련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단 점〉

- 후속 및 관련 연구가 지표 개발 및 측정과 관련된 이론적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학교 향상도 지표 개발 및 향상도 분석의 이론적 연구뿐 아니라 학교 향상도를 적용하고 공시함에 따라 나타나는 학교 현장에서의 쟁점,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등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함.
- 평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학교 향상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학교 향상도 개념의 현장친화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장 점〉

- 수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과용 도서 검정, 검정고시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평가 사업을 안정적,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인력 구성, 예산 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매년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행정적,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서술형 채점 방식 도입 등).
- 사회적으로 민감한 국가적 사업을 매우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단 점〉

-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문성에 기반한 선도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함.
- 정책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정부부처와의 의사소통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 사업 운영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 체제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문항 출제 논란’ 등 사업 수행의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별로 위기관리 조직을 상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적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로드맵이 필요함.
-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상시 시스템이 필요하며, 사업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평가시스템을 보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상승함. 상세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와 수탁연구에 대한 만족도는 올랐으며, 자격시험주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특히 전년도와 비교할 때 기본연구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오름. 상세업무유형별 만족도 순서는 기본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격시험주관서비스, 수탁연구 순임.
-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정부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기본연구와 수탁연구 모두 전체 평균에 비해 높으며, 전체 평균 대비 기본연구의 점수 차이가 수탁연구에 비해 더 큼.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차원별로는 환경품질을 제외한 다른 차원들 모두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올랐고, 품질요소 중에는 구비성과 편리성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 모두 점수가 오름.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차원별로는 환경품질만 전체평균에 비해 낮고, 품질요소 중에는 대응성, 구비성, 편리성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회의 시 참석자 의견 경청과 적극적 의견 반영 노력’ 항목의 점수는 높고, ‘최근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연구결과물 제공’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전문지식과 경험 보유’ 항목의 점수는 높고,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가 편리함’ 항목의 점수는 낮음. 자격시험주관서비스에서는 ‘공정한 시험제도 확립에 기여’ 항목의 점수는 높고, ‘해당부서나 담당자 접촉이 용이함’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 목표 및 임무 달성을 위한 체계적 방안 마련, 공정한 연구수행을 위한 관련 지침 및 절차 확인 및 개정, 연구성과의 정책적·학문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전문가 집단 활용 등), 자격시험 결과에 대한 대외 인지도 향상 노력, 심사과정의 투명성, 심사기준의 공정성, 심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함. 상세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 수탁연구, 자격시험주관서비스에 대한 점수가 오른 반면, 위탁연구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짐. 점수가 오른 상세업무유형 중 수탁연구에 대한 만족도가 큰 폭으로 오름. 상세업무유형별 만족도는 수탁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격시험주관서비스, 기본연구, 위탁연구 순임.
-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기본연구와 수탁연구는 전체평균에 비해 높지만, 위탁연구는 상대적으로 낮음.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오름.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높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의 정확한 이해’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 노력’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전문지식과 경험 보유’ 항목의 점수는 높고, ‘해당분야 정책과 학문 발전 선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위탁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범위 명확히 제시’ 항목의 점수는 높고,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가 편리함’ 항목의 점수는 낮음. 자격시험주관 서비스에서는 ‘출제, 인쇄, 재정/검정, 심사 과정의 투명함’ 항목의 점수는 높고, ‘시험 관련 정보 검색의 용이함’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만족(CS)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친절성 강화, 고객응대 매뉴얼 개발 및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한 고객문의 및 요구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노력, 자격시험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 구축,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간 정책연구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주제 발굴을 위한 협의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음.
-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장·단기 과제를 적절히 배치하고 있음.
- 내·외부에서 제안된 계획서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결하거나 계획서를 수정하는 등 내실 있게 기본과제 선정시스템을 운영함.
- 원내는 물론 교육부 등 해당 정부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음.

〈단 점〉

- 연구기획TF와 내부 워크숍에서 주로 기본연구과제가 발굴되어 있어, 연구과제의 발굴 범위가 한정될 수 있음.
- 과제선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 심의과제 수의 90% 이상이 선정되고 있음.
- 과제선정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모두 내부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의 과제제안을 위한 통로를 더욱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연구자, 교사 등)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기본연구과제선정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함.
-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다차원적인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평가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연구 개시

진 연구자가 수정·보완 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연구 종료 후 보고서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KICE와 UNESCO-IBE 디플로마 연구사업 참여방안’ 등 시의적절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는 등 수시연구과제를 합리적으로 발굴·선정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선정회의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계획서를 부결 또는 수정하는 등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연구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개인별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 선정회의 등 선정절차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음(총 16회 중 14회가 상반기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2회도 7~8월에 이루어졌음).
- 정부부처 의견을 수렴한 과제의 비중이 낮음.
-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시연구과제의 정부의견 반영 비율(29.4%)이 저조함.
- 3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중간심의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진도 및 보고서 질 관리가 철저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시급한 현안과제나 정부요청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연구과제 선정회의를 연중 수시로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과제 발굴과 선정을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정부의견 반영 비율 제고노력과 3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과제에 대한 중간심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 추진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특히 추진단계별로 협동연구를 장려하는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 특히 협동연구 추진유형에 따라 전문지식 활용형과 연구영역 융합형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있는 점은 바람직함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및 성과평가가 잘 구축되어 있음.
- 협동연구과제 5개의 협동연구 필요성, 추진체계가 잘 기술되어 있으며, 업무 및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음.

<단 점>

-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실” 운영이 다소 미흡함.
- 2012년도 연구기관 평가 지적사항인 ‘협동사업시 매칭펀드 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글로벌 협력실” 운영사업을 선진국 대상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후진국 대상의 협력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과제에 대한 자문진과 협력진의 역할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매칭펀드사업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향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연구기획실 주관 하에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평가 체계를 기본연구, 수시연구, 수탁연구의 유형별·평가단계별로 평가절차를 달리하여 합리성 있는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구성, 평가기준,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착수, 중간, 최종심사 등 연구단계별로 질 평가와 양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여 연구품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단 점〉

- 외부 평가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나, 평가위원의 전공별 인적 구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
- 평가자 중복배제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미흡함.

〈개선 및 권의사항〉

- 평가위원 전공별 평가실적을 분석하여 평가의 다양성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평가자 중복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다소 늦었지만 지식재산 보호규정을 적절하게 갖추었으며,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음.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을 비교적 다양하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을 적절하게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음.
- 교과서 검정 전산시스템을 2013년도에 구축하여 실시간 점검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점은 긍정적인임.
- 연구성과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내부 조직의 업무분담과 체계가 적절하게 구성 되어 있음.
- 언론홍보 일정 계획과 부서별 홍보일정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국내·외 성과확산을 위한 네트워크이 잘 구축되어 있음.
-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모두 등록하는 등 비교적 신속하게 배포하였으며 기타 연구성과 또한 홈페이지에 적절하게 등록하였음.
- 메인 홈페이지의 서브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편의성을 제고한 점은 긍정적인임.
- 자동기사검색알리미시스템의 운영으로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함.

〈단 점〉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핵심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비중이 낮음.
- 정량지표의 대부분도 단순 산출지표에 해당함.
-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 성과지표가 부족함.
- 일부 시스템의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엄격하게 실행하지 않는 등 적절한 피드백 절차가 미흡함.
- 전략목표와 핵심성과지표의 설정이 단순한 수준이며 구체적이지 못함.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MOU를 체결한 국내·외 기관과의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큼.
- 정보 수요자를 특성별로 분석하고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미흡함.
- 홍보의 양적 목표에 치중하여 효과목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
- 이슈페이퍼가 상반기에는 발간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피드백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각 시스템에 대한 성과물을 계량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 효과성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확산 수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채널이 일반적인 수준이므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홍보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등의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과의 해외 확산을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시의적절하게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시사적인 연구성과를 적시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13편(169.78건/151명), S등급으로 우수함.
- 학술지논문게재 실적 169.78건 중 국제전문학술지가 3.8편(2.2%), 국외전문학술지 2.28편(1.3%), 국내등재(후보)지 163.7건(96.4%)으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등급이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전문지 게재 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정책전문지도 균형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현안문제별로 대내·외 경영 여건 분석과 타개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졌음.
- 이전에 기관에서 제출하였던 현안들을 검토하여 현안문제를 선정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원내·외의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회를 활용함으로써 폭넓은 의견수렴을 함.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과제 발굴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잘 이루어졌음.
- 외부 관계기관에 대한 수요조사, 연구자문위원회, 교육부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음.
- TF의 활용, 기관 내 전문가 활용제도 운영 등 기관 내의 연구역량 활용을 강화함.

〈단 점〉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서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여 기관 내부의 인식에 편향될 우려가 있음.
- 현안문제 선정과정이 보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구성원 전체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함.
- 국가수준의 시험관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나, 문제제기 자체가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연구원 개개인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연구원의 이직률을 막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 외부 전문가 및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험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후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 방책과 기관장의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과제의 내용과 근거 자료 확보를 보다 강화하기 바람.
- 과제가 주로 교육부문 전문가들이 수행하기 적합하게 선정되어 융·복합적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조직 내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임.
- 활력넘치는 조직문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다양한 TF를 운영함으로써 기관 운영에 직원의 참여를 활성화함.
- 상시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제안된 내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직원 간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토록 함.
- 청사 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동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정부정책 지원, 기관발전 및 홍보를 위한 기관장의 대외활동 실적이 뛰어남.
-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교육분야를 다루는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해결노력을 기울임.
-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아시아권에서의 주도성을 확보함.

〈단 점〉

- 조직 내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의 인적구성이 다소 미흡함.
- 직책별, 직급별, 직종별 간담회의 정례화를 확인하기 어려움.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연구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 내 다양한 의견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직종, 직급별 대표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신규직원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들도 직급이나 부서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룹별로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심사항을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통로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를 위한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확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MOU를 체결한 기관과도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교류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교류협력국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경험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 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 및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기관 경영의 청렴성을 위한 윤리경영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음.
- 일상감사의 기준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함.
-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관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평가가 잘 정리되어 있고, 위반 사항에 대한 감점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단 점〉

- 상시 감사 및 내부 감사 실적이 다소 부진함.
- 감사실장을 개방직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하였으나 1차 개방직 운영 후 다시 내부 인력을 임명함으로써 개방직화의 의의를 감소시킴.
- 평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평가의 주관성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가표상의 등급별 기준제시가 미흡함.
- 표절검색시스템(Copy Killer) 점검 결과와 이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보고서 작성 시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윤리 준수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상시 감사 및 내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장 교체와 관계 없이 개방직을 운영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계속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표상의 등급별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가 제도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표절검색시스템(Copy Killer) 점검 결과와 사후 조치를 연계시키는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 등 연구자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표를 작성·배포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기관은 4대 경영목표와 34개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설립목적 및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선도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함.
- 경영목표들이 정책 지원, 연구의 질 관리 강화, 평가 안정화, 그리고 내부 조직 관리라는 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실천계획들과 잘 연계되어 있음. 특히 정책연구와 사업을 균형있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함.
- PEST기법과 7S 기법 등을 활용하여 기관의 내·외부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기관의 당면현안과 그 해결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도출한 것은 바람직함.
-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실천과제별 달성도가 모두 100%를 달성하여 달성도가 양호하고,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됨.
- ‘국가수준 평가의 안정화·현대화’를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화, 학업 성취도 평가의 근대화 등은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제들과 관련하여 성과목표는 충분히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성과목표치도 적정함.
- 연구보고서 평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최종보고서 심사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키고 연구의 품질평가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윤리 준수를 강화하여 연구윤리
확약서 징구, 연구윤리위원회의 윤리준수 평가 및 표절검색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함.

〈단 점〉

- 경영목표로부터 실천계획이 TF 등을 통하여 도출되는 과정과 기관의 당면현안에
대한 도출 과정이 논리적으로 다소 부족함.
- 연구성과의 홍보역량 강화에서 언론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글로벌
홍보를 위한 영문책자나 저널과 같은 실천계획이 미흡함.
- 성과의 성격상 비계량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성과
목표 및 목표치가 정성지표로 제시되어 있어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교육 지원 실천과제의 성과목표 달성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수 또는 워크숍 실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등은 과제의 성과달성도를
측정하는데 미흡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과함.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체제구축 및 시행의 고도화과제는 전략적 중요성
및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산·학·연 협동연구 강화 실천계획에 대한 성과목표로서 협동연구 발굴 및 수행을
위한 연구사업운영규칙 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성과목표로서 부적합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로부터 실천계획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기관의 당면
현안에 대한 논리적 도출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연구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성과의 홍보역량 강화에서 실천계획 내에 구체적인 글로벌 홍보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교육지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체제구축 및 시행의
고도화 실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연계방안 및 실현가능수단은 수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연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제시하여 실질적인 연계방안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도전적 수준의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로 설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여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NEAT문제는 수능보다는 토플이나 토익과 같은 다른 기존의 영어시험과 동일한 선상에서 역할 전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를 위하여 선진국 또는 OECD 수준의 국가들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대상의 ODA 사업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본 기관의 핵심기능의 하나가 연구이므로 미래지향적이고 융·복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과제가 선정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 강화 및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성과목표가 규칙 개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고방안 탐색, 컨설팅 지원 및 연수실시 등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협동연구를 강화하고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학업성취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 실천계획은 행복교육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중심의 학생평가라는 국가정책적 측면과 기관의 공신력 제고 및 수준 높은 평가 체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실천계획임.
- 중점추진과제들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것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선정과정 및 절차가 타당성 있게 이루어짐.
- 직원 의견수렴,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원내·외 의견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쳤고, 경영목표와의 연계, 전략적 중요성 및 시의성,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의 최종검토를 통해 중점계획을 선정함.

<단 점>

- 3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경영목표와의 연계, 전략적 중요성 및 시의성,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어떤 비중으로 고려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음.
- 본 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시험 평가 부분에 치중하여 중점추진과제가 선정되었음.
-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교육 지원 실천과제는 국가정책적 측면과 기관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중점 실천과제이나, 성과목표에 비계량지표가 많고 추진 실적은 실천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소 미흡함.
- 중점추진과제에 있어서 ‘역동적인 조직 운영’과 같은 경영목표와 관련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3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는 합리적이거나 구체적인 고려요소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반영는지와, 연구원장의 경영목표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고, 기관의 당면 현안과의 연계성에 대한 보완도 필요함.
- 글로벌 연구를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가 중점추진과제 내에 보완되어야 할 것임.
-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이면서 융·복합적인 연구부분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교육 지원’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과제에는 NEAT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수능의 안정적인 출제는 중요성 면에서 볼 때 중점추진과제로서 타당성이 있으나 2014학년도 수능출제체제 구축, ‘수능시험 및 관리체제의 현대화’ 등 유사한 경영목표 실천과제와 통합하여 경영목표 실천과제로 관리하고 제시한 과제들을 세부 실천과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개선 및 건의사항은 다른 경영목표 실천계획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임.
-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국제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등 국제협력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협력실을 신설함.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과관리TF, 정보보안TF, 행정제도개선TF 등 각종 현안에 대한 TF를 운영함.
- 전형위원 선정기준은 구체적이고 적절함.
- 우수인력 확보 노력은 대체로 우수함.
 - 개방형 직위 채용 성과 : 홍보실장, 감사실장(경력자를 채용함)
 - 팀장 임명 시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능력 위주로 인력을 운용(행정·전문원급 팀장 3명 발탁)
- 발간자료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

- 증원 위주의 인력관리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기구 인력운동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함.
- 연구직은 서류심사, 연구실적물 평가, 연구계획서 작성능력 평가 및 공개발표 평가,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으로, 행정직은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으로 채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원내·외 인사를 전형위원으로 위촉함.
- 열린 채용으로 직종·직급별 임용기준에서 학력기준을 완화하고, 연구직 채용 시 능력이 탁월한 경우 상위 직급으로 임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함.

〈단 점〉

- 제시한 환경변화 이슈와 외부 고객 요구사항은 핵심기능(대학입시 학력고사를 주관하는 업무 등)을 반영하지 못해 부적절함.
 - (환경변화 이슈) 글로벌 시대 기관 위상에 맞는 조직 운영 요구, 업무 확대에 인한 효율적 경영 체제 요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 운영 요구
 - (고객요구 사항) 고객서비스 개선 요구 증대, 외부 고객에 대한 홍보 필요성 증가
-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조직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의 제시가 미흡함.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경영목표 달성 노력과 성과의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며, 일상감사지침 개정은 고객요구 대응 실적과 내용이 중복됨.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 사항에 대한 조직 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경영목표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의 제시가 미흡하여 목표 달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음.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미흡함.
- 직무분석, 기능 연계 사업분석, 인력구조 분석에 근거한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 중·장기 인력수급계획(2013~2015년)은 부원장실 중·장기 전략계획으로 기술되어 있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수능고사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의 정기적 시행이 필요함.
- 조직의 핵심기능, 경영목표, 주요 이슈 등을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의 요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핵심 성과지표 설정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훈련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차별 교육훈련 추진에 따른 연도별 교육훈련 중점분야(교육인프라 확충, 상시학습체제 구축, 직종별 교육훈련과정 수립 운영)의 집중적인 계획 추진환경을 실현함.
- 직급별로 선임연구위원/책임행정원에 고급관리자 능력개발, 연구위원/선임행정원에 중견관리자 능력개발, 부연구위원/행정원에 신규임용자 직무교육을 실시함.
- 직종별로 연구직에 연구윤리와 워크숍, 비연구직에 총무인사 및 성과관리 등, 공통으로 청렴교육, 정보보안, 성희롱예방 교육 등을 실시함.
- 통계프로그램 활용 특강 제안 및 기록물관리강화 필요성 대두 등 전직원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함.
- 총 교육훈련비는 25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함.

〈단 점〉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며,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없음.
- 학습포럼을 제외하고는 고유 기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실함.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 구축의 노력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과 연계되는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개인성과 - 부서성과 - 기관 성과로 연계되는 평가시스템을 가동함.
 - 기관 전략목표에 기초하여 부서단위 성과지표/목표를 기준으로 목표대비 실적을 평가(BSC 기반 핵심성과지표(KPI) 활용)
- 비연구직의 성과평가 시 KPI를 기준으로 핵심업무에 대한 정량화 노력이 우수함.
- 학술지 논문게재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서는 부서업적평가 KPI 중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설정함으로써 논문 실적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우수함.
- 시행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수함.
 - 평가부서, 인사부서, 연구관리부서 간 평가업무 전반 협력 및 결과 데이터 교차 확인
 - 피평가자 본인, 업무 주관부서, 평가 주관부서의 교차 확인 등
- 인사위원회 심사기준도 4단계 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함.
- 직종별·직위별 특성을 반영한 역량항목을 모델링하고, KICE 직원평정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연구직의 평가항목은 연구보고서 평가, 연구수행양평가, 부서업적평가, 원내·외 활동평가, 개인역량평가로 구성하고, 비연구직은 부서업적평가, 행정분야 실/팀 업적평가, 개인업무성과평가, 원내·외활동평가, 개인역량평가로 구성됨.
- 평정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평가제도 관련 전 직원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 연구직 계량평가 비중은 35~40%이고, 비연구직은 45~50%임.
- 평가부서, 인사부서, 연구관리부서 간 평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 및 결과 데이터를 교차 확인하고,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통하여 업적평가 전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연구성과의 질 평정을 위하여 원내·외 전문가 최소 5인 이상이 평가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을 최종 반영함.
- 극단적인 평가결과가 나올 경우는 150자 이상의 평정자 의견 작성을 의무화하여 사안에 따라 재평가 지시가 가능함.
- 평가결과를 기본연봉, 성과연봉과 능력성과급 결정에 활용함.
- 승진임용에 최근 3년 간 평가결과를 5:3:2 비율로 반영하고(탈락 5명), 재임용계약에 최근 3년 간 평가결과를 100% 반영함.

〈단 점〉

- 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원장이 최종 결정토록 되어 있는 절차는 비합리적임.

〈개선 및 건의사항〉

- 논문게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함.
- ‘극히 불량한 경우’라는 재임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노무법인이나 법률자문을 통한 특정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노무관리 역량은 강화되고 있음.
- 연 8회 전 직원 회의개최, 부서별 워크숍, 인턴직원 간담회, 신규직원 간담회, 노측 의견수렴 정례화 등 노사 간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어 있음.
- 전 직원, 인턴직원, 신입직원, 행정팀장, 생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통로를 가짐.
- 4회의 노사협의회의와 2회의 노사간담회를 가짐.

〈단 점〉

- 주요 갈등관리 이슈인 직원평정 체제 개선과 누적식 연봉제 개선(기본연봉 차등 누적 폐지 및 성과연봉 차등폭 축소 요청)과 관련하여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찾기 어려움.
- 일반관리자를 상대로 한 노무관리 역량 강화 교육이나 훈련은 부족함.

- 노사 간 의사소통의 활성화 정도와 비교할 때 임금협상 등 노사간 의사소통의 성과는 미흡함.
-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관심이나 노력이 미흡함.
- 일반관리자 노무교육이 일반역량교육에 그친 한계를 가짐.
- 노사협력증진프로그램이 각종 간담회 등으로 다양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사간 대화를 통하여, 주어진 여건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의 의사소통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지침과 부합하는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적절한 노력이 요구됨.
-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사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제안제도,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종합하여 전체 구성원의 하의상달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기본협약서 제21조제2항의 임금조항(‘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은 사용자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므로 검토가 필요함.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 및 2014년도 기본연구사업비에서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5% 및 48%로 편성되어 있어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9.7%(280백만원), 2014년 21.2%(500백만원)로 연구회 제시 기준(30% 이하)을 준수함.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16.4%(491백만원), 2013년 14.7%(425백만원)로 연구회가 제시 평가기준(10~20% 범위내)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17건의 집행에서 전액 위탁연구비로 지급한 과제는 없으며 연구 항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퇴직예치금은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 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6%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3,162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연봉체계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함.
- 기본연봉은 직무급과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0%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있고, 차등지급률이 $\pm 1\%$ 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기준 역시 최고-최저 각 10% 이상으로 배분되어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33\%$, 비간부직의 경우 $\pm 15\%$ 의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등급별 인원배분비율 또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 최고-최저 각 10% 비율이 되도록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능률성과급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1.5배 차이가 나도록 지급하고 있어 평가기준 (최고-최저등급 2배 이상)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기준에 맞게 능률성과급 차등지급률을 최고-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3건의 국회 지적사항과 29건의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완료됨.
- 연구기관 평가결과 환류 체계에서 담당 주체가 성과관리부서, 담당부서, 기관장, 성과관리TF, 자체평가위원회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각각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고, 자체개선계획별 책임부서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련 특이사항을 협의·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갖추.
- ‘교육중립성 관련 검정기준 적용지침’을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에 적용함.
-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을 교육하고, 예산집행 시 각 부서에서 예산비목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예산비목에 맞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함.
- 정책대안의 구체화와 실현가능성 제고방안에 중점을 둔 최종보고서 심사회 개최함.
-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신규 채용(총 3명)하는 등 개선노력을 시행함.
-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 구축, 이메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보안USB 도입 운영 등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함.

<단 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격차를 전년대비 10%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함(85%).
- 개선절차의 구성에서 구성원 공유와 의견수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지적사항 개선실적의 구체화·계량화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1년 이상 재직한 비정규직에 대하여 정규직과 임금차별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회 지적사항의 존부와 관계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성과관리와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직원채용 시 장애인우대조치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가산점 부여 조항 및 실적이 있고,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2명을 채용하였으며, 장애인직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함(설문조사 등).
- 신규채용노력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2012년 0.8%에서 2013년 1.9%로 상승하였으나, 의무고용률 기준(2.5%)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률 달성을 위한 기관장과 기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대책회의, 계획수립, 관련기관 방문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의 사회형평채용 항목을 구체화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이 계획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100%달성), 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 공고 및 충원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청년인턴에 대한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실적은 양호하나,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 멘토링, 고충처리의 실질화 노력이 미흡하여, 향후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및 실질화, 고충처리 담당관 및 고충처리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을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공고 시 우대조치, 가산점 표기)을 하고 있고, 1명을 신규채용 실적이 있으나,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3.0%)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장의 관심표명, 대책회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기관 방문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사항을 담은 단체협약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교육, 복리후생, 편의시설, 휴가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 비정규직 차별해소 규정이 미비하며, 비정규직 관련 차별해소 운영계획이 실질화 되지 못함.
- 2013년도 비정규직 직원이 106명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원 차원의 운영계획이 존재하지 않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차별이 기본급, 성과급, 수당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 직원이 106명이나 되기 때문에, 연구원 차원의 차별해소 근거규정과 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11

한국교통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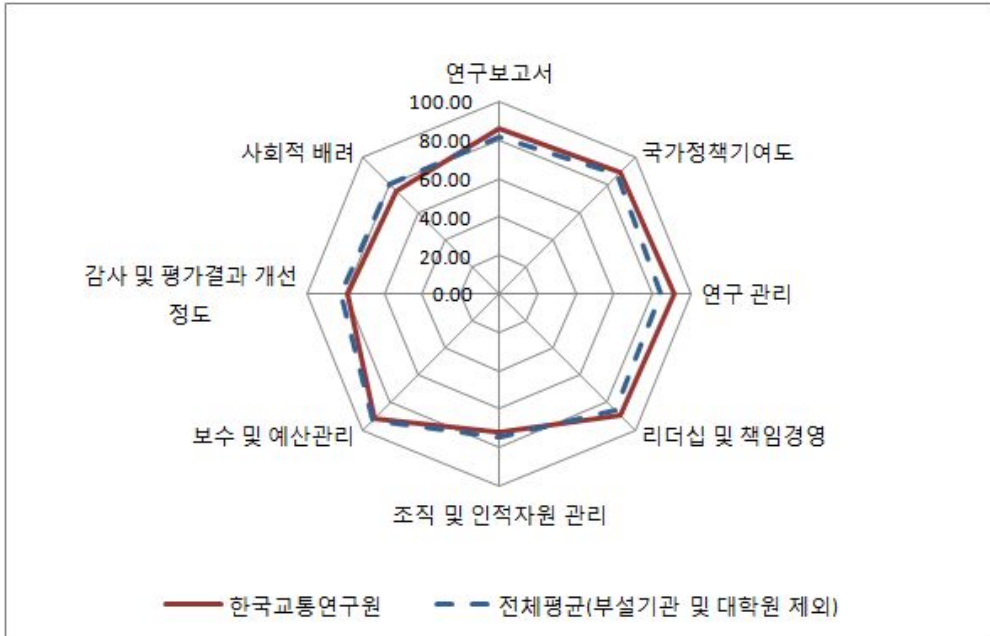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C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A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A |
| 1-3. 연구 관리 |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미흡 |
| |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우수 |
|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A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A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A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A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B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A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B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D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B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B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글로벌 교통사업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투자 평가 지침을 개발하려는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융·복합 기술의 구체적 사업 연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일관된 사업계획, 전담조직과 전문화된 업무시스템 구축, 품질 보장을 위한 전문가 검증단 운영 등 공정하고 적절한 사업관리 체계를 운영함.
- 국정과제 수행 시 과제주제와 수를 재구성하고 전문인력과 예산을 선별적으로 투입함으로써 핵심 과제 수행의 정책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173개 기관에 과제를 요청하여 31건의 과제를 외부에서 발굴하는 등 과제발굴 실적이 우수하며 과제선정위원 중 외부인사 비율을 1/2 이상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이 돋보이나, 선정된 과제의 정부부처 의견 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높일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 추진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고,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협동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음.

- 정부부처의 협동연구 발굴실적 이외에 외부의 협동연구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고, 2012년 평가에도 지적된 바 있는 협동연구와 관련된 정책활용사례 등의 구체적인 시너지효과가 제시되어야 함.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평가위원 풀의 선정과 구성이 학계에 편중되어 있는 등 전공·분야·소속기관별 평가위원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모든 보고서는 자원절약 및 스마트환경에 맞게 온라인 배포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인쇄물 배포량을 최적 수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에 더하여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영 분야]

- 기관장의 현안문제 타개,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 및 소통,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노력은 뛰어나나,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표절검사시스템의 인사고과와의 연계가 부족함.
- 해외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예산과 관련하여 기관의 경영여건을 정상화하는 등 기관 역량강화의 성과를 거두었음. 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이며,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규정 및 제도를 잘 정비하였음.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개인별 동기부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의 적정성은 3대 경영목표와 13대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SWOT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되었으며, 교통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이란 설립목적과 세계일류의 종합교통물류연구기관을 지향하는 비전에 부합하고, 구체적인 실천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관의 경영환경 및 위상진단결과, 대내·외 의견수렴내용을 바탕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당면현안을 도출하였음. 그러나 연구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인력관리 운용계획과 교육훈련을 수립하고 고용안정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실천계획에서 연구성과의 보급·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시스템의 구체성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
-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13개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하여 44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 전원이 공유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성과달성을 점검한 결과, 제시된 성과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 미래지향적, 융복합적인 연구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고, 특히 창조경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연구는 미흡함.
- 중점추진과제(3개)의 중요성, 추진실적,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기관의 내·외 고객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중요도 조사, AHP 기법 활용, 경영진 검토, 기관의 현안 고려를 통해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는 절차가 체계적이고, 선정된 중점추진과제가 전체적으로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이 있으며, 중점추진과제 선정과정 및 절차가 타당성 있게

진행되었음. 그러나 글로벌 협동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우수 해외기관과의 협력으로 인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역량강화와 위상제고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 환경변화 요인 도출 및 SWOT 분석결과에 의해 개편된 조직이 경영목표 실천과제 등과 연계되어 운영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유도하고 있으나, 별정직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과는 무관하며, 별정직 양산은 또 다른 비정규직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 ERP, 과제관리시스템, 서면작성 등으로 분산되어있는 연구활동평가 자료를 통합하고 평가 프로세스를 전산화한 실적은 우수하나, 승진대상자 후보 하한 기준이 없고 경력평점이 26%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임금협약 관련 갈등이 타결되는 등 노사간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소통이 노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70%에 이르는 노조조합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한 의사소통 제도화 수준은 미약함.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지 않는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퇴직금 지급은 출연금에서 지급하고 퇴직계좌는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성과연봉의 차등지급율과 인원배분 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을 비누적식으로 운용하고, 능률 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지적사항의 유형별 체계화를 통해 지적사항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누적식 연봉제와 능률성과급 개선이 지연된 한계가 있음. 지적사항 개선결과가 다음연도의 경영에 반영되면서,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되는 개선환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장애인고용을 위한 노력은 엿보이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됨.
- 청년인턴 채용 계획 대비 달성도는 양호하나, 청년인턴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부 미흡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청년인턴제 운용이 요구됨.
- 국가유공자 1명을 신규채용한 실적은 있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미이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의 운용이 적정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임금과 복지 부분에서 차별이 거의 없으나 위촉직원 임용규칙에 명시된 비정규직 임금조항(제16조의3)은 임금지급에 있어서 차별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차별소지가 없도록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교통 관련 법제도 뿐 아니라 ICT 관련 법제도 검토 및 개선내용과 사항별 필요 예산까지도 제시하고 있어 정책적 활용도가 높음.
- 글로벌 교통사업을 대상으로 보다 보편적인 투자평가 지침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독창적이고 시의성이 높으며, 선진국의 기준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점도 향후 우리나라의 평가지침을 개선하는데 유효할 것임.
- 국가 철도망 및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 수립의 지원, 지역개발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에 대한 지원, KTX 경제권 활성화법 제정안 마련 등을 통해 중요한 국책사업 시행에 대한 효과 분석, 영향권 분석, 나아가 합리적인 영향권의 개발 방향 등을 우수하게 제시함.
- 재정보조 방식의 전환에 대해 단순 분석 및 결과 도출에 그치지 않고 대안별로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현행 재정보조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통부문의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

<단 점>

- 구체적 사항별 현황조사 및 제도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항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정책 대안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음.
- 기존 이론 및 기술을 넘는 융복합기술로서 특성을 갖는 기술개발 및 이론적 발전을 갖는 구체적 사업 등의 제시가 다소 미흡함.
-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지나치게 외국 사례 위주로 사안을 검토하기 보다는 세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에 효과적인 방법론 도출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함.
- 스트레스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샘플수가 적고 대상 지점 및 기간이 다양하지 못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거나 일반화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 활용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SNS 등 주민참여를 통한 데이터와 기존 교통 당국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연구도 필요함.
- 기존의 다양한 교통정책을 계량적으로 종합 평가하여 거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도 필요함.
- 해외 사례 분석의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방안 도출이 필요함.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연구원 경영목표와 국정과제 수행을 연계하고 4단계 과정으로 과제 선정과 운영 절차를 객관적으로 제시함.
- 국정목표에 부합하도록 연구수행 체제를 개편하고 미래교통 창조경제본부, 창조교통 융합연구실을 운영함.
- 전체 연구과제 중 약 65%를 국정과제 연구과제로 채택하였고 기본, 수시, 수탁연구과제에서 수행하기 힘든 장기적인 과제를 메가프로젝트로 수행함.
- 창조산업 기반 조성,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등 새 정부에서 새로이 부각된 사안에 대해 발빠른 대응을 통해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정과제를 이행함.
- ‘철도운영 효율화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비전 추진전략 연구’에서 정책화 과정, 언론홍보의 수행실적이 우수하고 신설 법 제정, 기존 법·제도의 정비에 다양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단 점〉

- 국정과제 운영에서 연구기간별로 단기과제, 중·장기과제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시기별, 현안별, 단계별 접근방식 도입이 미흡함.
- 부처별, 부문별로 다양하게 국정과제에 참여하여 교통, 물류분야에 대한 집중이 부족하고 국정과제 수가 많아 자체 환류활동과 기초연구가 등한시될 수 있음.
- 연구인력에 비해 연구과제 수가 많아 한 사람이 여러 국정과제에 투입되고 있으며 자체연구의 국정과제 채택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 수행 시 단기 및 중·장기과제를 구분하고, 시기별·부문별·단계별로 나누어 국정과제와 연구사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정책기조가 분명하지 않은 국정과제에 매몰되기 보다는 자체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중·장기적 과제 발굴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유사과제를 묶거나 과제 수를 줄이고 연구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과제에서의 의미 있는 연구결과 도출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탁연구과제 비중이 높으므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간 목표와 효과가 상충되지 않도록 내부 연구자 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가 필요함.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정기적인 간담회, 보고회를 통해 현안을 발굴하고, 현안대응TF를 구성하여 선제적 대응에 노력함.
- 언론기고, 방송출연 등을 통해 연구과제의 결과를 홍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음.
- 항공사고, 택시, 철도 및 화물자동차 파업 등 현안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
- 정부부처의 요청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교통사고 제로화 등 과제를 도출·제시함.

〈단 점〉

-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문화와 관련한 주제는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실적으로서 다소 미흡함.
- 민간투자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효율화 제고와 관련한 노력이 있으나, 여러 민간투자사업에서 수요예측 과다의 직·간접적 책임을 볼 때 대응이 늦은 감이 있음.
-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 대한 정책홍보의 효과나 이미지 개선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홍보에 대한 효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사나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국민 홍보 노력이 정부부처의 이미지 개선 및 정책홍보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부현안 중 국민들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택시, 철도, 전세버스 등에 대해 단기처방 외에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해법 제시와 이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토교통부와외 정기적 정책간담회, 협의회 개최를 통해 상시 협력네트워크를 운영(장·차관 참석 35회 등)하고 정부유관부처, 국회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수행함.
- 또한, 대정부지원 TF 교육연수프로그램, 행사참여와 세미나 발표 등의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운영함.
- 타 연구기관 등과 MOU 등 10건 이상 체결, 18건 공동세미나 개최 등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융·복합연구를 수행함.
-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비전 추진전략을 적극 홍보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교통안전포럼을 지원하여 국회의 교통사로 제로화 실천 결의안을 도출함.
-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파견을 통해 국제화수준을 제고하고 국제현안사항에 적시 대응하고 있음.

〈단 점〉

- 정책네트워크와 협동연구, 외부 수탁연구과제와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해외 ODA 사업과 국제세미나의 연속성 등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음.
- 일부 용역사업 수행을 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음(회계법인 용역).
- 대외활동의 경우 형식과 횟수에 치우쳐 관성적이 될 수 있고 연구원 본래의 기능인 연구활동이 등한시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여·야의 입장이 상충하는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양적인 성과보다는 연구기관의 중립적인 입장, 혹은 정부와의 조율이 선행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의원입법의 경우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부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해외 관련 연구사업에서 일회성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함.
- 정책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국내 산·학·연 연계 병행 등을 통하여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함.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개별 연구과제 별로 기존 법안의 수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예산 확보에 있어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시의성 있는 사안에 대해 이론적 근거, 해외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정부부처 및 국회의 정책 수립에 기여함.
- 전기차, 위험물운송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고 선도적인 제도 확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해 기여하고 있음.
-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된 대중교통, 도시부 도로, 완전도로(complete streets)에 대해서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단 점〉

-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결과의 정책화실적이 다소 부풀려지거나 직접 관계가 없는 내용도 일부 포함됨.
- 스마트 공공자전거, 완전도로(complete streets), 회전교차로, 도시부 도로 지정체 관련 정책수립에서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할 때 문화, 환경, 제도, 역사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다소 부족하고 도시 성격과 특징에 따라 도입여부를 달리하는 정교함이 부족함.
- 전기차 기반 교통운영체제 연구사업의 경우 홍보 및 정책화실적이 다소 부족하고 주차장설치 상한제 등 주차제도 연구에서는 주민 반발에 따라 시행이 원활하지 못함.

〈개선 및 권의사항〉

- 연구결과가 특정 부처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연구기간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의 정책화실적을 직접 반영, 간접 반영, 참고 등으로 나누어 확실하게 분리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구의 경우 정책화와 연계한 환류활동이 필요하고 단기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초데이터 제공, 정책입안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원 내부의 자료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일부 성공사례를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하고 단기적으로 문제점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연구의 경우 후속과제나 환류를 통해 계속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교통사고 사망자 제고 비전 추진전략 연구’ 과제는 기존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 제시의 소극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정책당국자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한,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안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지표와 부합하여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가적 관심 증대와 성과를 나타냄.
- ‘ITS 융합기술을 통한 교통혁신방안 연구’ 과제는 최근의 기술발전 등을 감안하여 ITS 융합기술을 통해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도과제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였고 국민안전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부합됨.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융합기술을 교통안전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기존의 요금징수 및 소통, 교통정보 제공, 단속에서 보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을 추구함.
- 차세대 ITS가 국가 R&D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후속연구 진행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회사들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시험하는 단계이므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음.
- 특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국가 연구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충분한 후속연구들이 뒷받침되고 있음.

〈단 점〉

-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고 ITS 융합기술 도입 시 새로운 제품,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비용상승과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전체 사고의 50%를 줄여 약 14조원의 교통사고 비용을 절감한다고 제시하여 효과를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측면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나,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으므로, 재정당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선언적인 행사 정도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ITS 융합기술의 경우 업체의 기술발전 정도 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시스템 도입시 외국업체 기술에 의존할 경우 국내업체들이 고사하고, 이 경우 국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할 우려가 있음.
- 두 선도과제의 경우 대국민 홍보와 이해가 동반되어야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장 점〉

- ‘국가교통 DB 구축사업’은 사업 전담조직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계획수립과정에서 수요부처, 관계기관,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자료 활용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높음.
-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 전담조직 및 전문화된 업무시스템 구축, 품질보장을 위한 전문가 검증단 운영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 및 사업계획,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음.
-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환류를 하고 있으며 정책이용자 및 이용자 등에게 신뢰성 높은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음.
- 여러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교통조사자료를 통합 구축·관리함으로써 타당성 평가, 사업효과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화물운송시장 정보사업’에서는 신뢰성 높은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 세미나, 국회 간담회 등 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물시장 관리를 위한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 환류를 추진하고 있음.
-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서 시장정보의 적기 제공을 통해 최근 화물시장의 안정에 기여함.
- ‘종합물류기업 인증대행사업’을 통해 인증을 받은 물류기업이 늘어나고 이들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계획 및 관리의 적정성은 높음.
- 심사위원 그룹, 인증운영위원회, 전담조직을 통한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인증 이후 2년마다 재심사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강구하여 환류과정을 적절하게 마련함.

〈단 점〉

- 교통 DB센터의 경우 여전히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 화물운송시장 정보센터와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의 업무활동에 비해 대외 평판이나 인지도는 낮은 상태임.

〈개선 및 건의사항〉

- 제공되는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을 효율화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초자료를 토대로 수립된 정책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조사 및 계획수립 시 교통 DB센터의 자료 활용도를 높여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자료의 신뢰도도 높일 필요가 있음.
- 교통DB센터와 화물운송정보센터의 경우 특정 정책, 사안에 대해 수시조사나 정기조사를 통해 정책입안이나 현안사항 대응에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는 인증 후에도 인증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상세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오른 반면, 기본연구, 수탁연구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짐. 특히 수탁연구 점수의 하락폭이 기본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큼. 상세업무유형별 만족도 순서는 전년도에 조사되지 않았던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순임.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점수가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다른 상세업무유형에 비해 점수가 낮음.
-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정부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상세업무유형 모두 전체평균에 비해 낮으며, 전체평균 대비 정보제공서비스의 점수 차이가 다른 상세업무들에 비해 더 큼.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별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낮아졌고, 품질요소 중에는 대응성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 모두 점수가 낮아짐.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고객 문의와 요구사항에 친절히 응대’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결과가 도움이 되며, 정책적·학문적 활용도 높음’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고객 문의·요구에 친절히 응대’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과제 관련 사전조사 충실’ 항목의 점수는 낮음. 공동연구에서는 ‘연구일정 준수, 효율적 연구방법 채택 노력’ 항목의 점수는 높고, ‘요구사항 수집·반영 절차 구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정보제공서비스에서는 ‘분야 연구활동과 정책발전에 기여’ 항목의 점수는 높고, ‘정보이용 관련 고객의견 점수의 편리함’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담당자 지정 및 시스템 구비 등을 통해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이슈에 대한 시의 적절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세스 개발 및 표준화 작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함. 공동연구를 제외한 모든 상세 업무유형의 만족도가 오름. 특히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오름폭이 다른 상세업무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상세업무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위탁연구, 기본연구, 정보제공서비스, 공동연구, 수탁연구 순임.
-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기본연구, 위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는 전체평균에 비해 높지만, 수탁연구와 공동연구는 낮음.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별, 품질요소별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높아짐.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차원별로는 전반적 만족이 전체 평균에 비해 낮고, 품질요소 중에는 합리성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회의 시 참석자 의견 경청, 적극적 의견 반영 노력’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결과물의 체계적 작성, 연구주제에 부합한 연구방법 사용’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연구과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보유’ 항목의 점수는 높고, ‘고객 문의·요구에 신속히 답변하고, 요구사항을 정확히 처리’ 항목의 점수는 낮음. 위탁연구에서는 ‘고객 문의·요구에 친절히 응대’ 항목의 점수는 높고, ‘과제 관리방식과 체계가 효율적이고, 계획된 연구 일정 준수에 협조’ 항목의 점수는 낮음. 공동연구에서는 ‘관련 지침·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히 업무 수행’ 항목의 점수는 높고,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의 편리함’ 항목 점수는 낮음. 정보제공서비스에서는 ‘분야 연구활동과 정책발전에 기여’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락처 업데이트 등 지속적 고객관리 위한 노력’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담당자 지정 및 시스템 구비 등을 통해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제 구축, 고객들이 의견을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확인 및 정비, 고객과 담당자간의 접촉(전화, 이메일, SNS 등)이 용이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173개 기관에 과제를 요청하여 31건의 기본연구과제를 외부에서 발굴하는 등 과제발굴 실적이 우수함.
- 과제 선정과정 및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과제선정위원 중 외부 인사 비율을 1/2 이상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이 돋보임.

<단 점>

- 외부 전문가를 심의 과정에 결합시키고 있으나 심의 체계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심사의견의 반영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심의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부처 수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부처의견 반영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외부 수요조사 결과 제안된 과제의 선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선정 사유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통보할 필요가 있음.
-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원내·외 의견 반영 비율도 규정하여 심의 체계를 합리화하여야 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다양한 경로와 4단계의 체계적 절차를 거쳐 총 26개 수시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그 중, 17개 과제를 선정·수행하고 있음.
- 정부부처 의견이 반영된 과제가 50%를 넘고 있으며, 내부 제안과제의 경우에도 해당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침으로써 정부부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수행연구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수행을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수시연구과제의 경우 과제수행과 관련한 중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대부분 수시연구과제가 과제종료 즉시 발간되고 홈페이지에 등록되고 있으나,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홈페이지 등록이 지연되고 있음(2건).

〈개선 및 건의사항〉

- 과제선정 단계에서 외부 인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과제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과제선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심의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중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도 및 보고서 질 관리 차원에서 3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에 대하여 중간연구심의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 추진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고,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13년도 90건으로 전체 연구의 50%를 협동연구로 추진하는 등 협동연구 추진 실적이 활발함.

- 협동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잘 구축함.
- 협동연구 과제 5개의 협동연구 수행필요성, 협동연구 추진체계들이 세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음.
- 협동연구기관 공동의 워크숍, 과제점검 회의 등을 통하여 협동연구기관별 활발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음.

〈단 점〉

- 정부부처의 협동연구 발굴실적 이외에 외부의 협동연구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
- 2012년 평가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협동연구에 따른 정책활용사례 등 구체적인 시너지효과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의 협동연구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들중 무엇을 협동연구로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제시가 필요함.
- 향후에도 개발도상국 정부 및 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함.
- 협동연구 결과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체계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이에 따른 평가절차는 매우 잘 구성되어 실시하고 있음.
- 자체평가는 비공개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평가점수는 인비사항으로 처리하여 평가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함.
- 연구과제 선정, 점검 등의 수행점검회와 사후 평가회를 연계한 체계적인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단계별 평가의견의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구축되어 있음.
- 착수·중간·최종 점검회의 3단계 점검체계와 최종평가로 분리하여 차등화된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기초과제와 정책과제를 구분하여, 연구특성에 적합한 평가배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구사업유형별로 평가항목의 배점을 차별화하여 과제유형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평가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전문가 풀(Pool)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소속기관별·전공별로 광범위하게 평가위원 풀(Pool)을 구축함.

〈단 점〉

- 다양한 심사위원 풀(Pool)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평가위원 구성이 학계에 치우쳐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간점검과 최종점검 사이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외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인 필요가 있음.
- 평가의 편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 연구계의 심사위원 선정이 필요함.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기존에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두고 있고, 2013년에 ‘문서관리규정’과 ‘출판관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출판물관리규칙’과 ‘연구사업위탁에관한규칙’을 개정함.
- 2013년 경영목표 중 ‘원내 지식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집단지성 강화’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산출한 지식재산을 모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함.
- 지식재산 관리를 위해 전문 변호인을 확보하는 등 전담조직을 신설한 점은 장점임.
-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지식정보 공유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인 점.
-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을 세부목표, 평가지표, 이용자, 매체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성과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2013년에 출장보고서에 접촉한 관계자에 대한 명함 첨부를 의무화하여 성과확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메일링 리스트에 반영하고 있음.
- 홍보담당부서를 대외협력·도서출판팀으로 확대·개편함.
- 홍보 비전에 입각하여 목표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함.
-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한 점과 KSP사업의 전파를 확대한 점 등은 장점임.

- 모든 보고서는 자원절약 및 스마트환경에 맞게 온라인 배포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인쇄물 배포량은 최적 수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온라인 배포를 원칙으로 하여 자원절약을 시도한 점은 긍정적인 점.
- 중앙부처의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배포한 점은 긍정적인 점.

〈단 점〉

- 지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 자체 평가시스템, 성과지표 등의 체계가 미흡함.
- 구축된 시스템의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은 미흡함.
- 평가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하고, 실적과 비교할 때 달성목표의 난이도가 너무 낮음.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에 대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첨단수단을 활용한 홍보활동의 경우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의 성과가 미진함.
-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로 전년 대비, 목표 대비 향상도 등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함.
- 성과지표 활용 등을 통한 보고서 배포방법 및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활동이 미흡함.
-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배포 체계를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물은 미흡함.
- 연구성과물을 일반인 등 비전문가에게도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적절한 환류를 실시하여 시스템의 점검과 효과성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연구원에 가장 효과적인 확산 수단을 선택하여 확산자원이 효율적으로 집중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홍보채널별로 2013년도 성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2012년도 대비 증감, 목표대비 달성률 등을 제시하여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 홍보를 위한 확산채널이 일반적인 수준이며 보다 첨단적인 수단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계량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채널별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더욱 강화하여 선택과 집중의 홍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연구물 홍보와 성과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성과지표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성과의 해외 확산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네트워크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홍보의 양적 목표와 효과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홍보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36편(99.42건/73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정책연구협의회, 구성원 설문조사 등 현안문제 선정을 위한 내·외부 의견수렴을 실시함.
- 외국 정부부처와의 MOU체결을 비롯한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통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
- 노사임금교섭을 타결하고 수권인건비 증액을 달성함으로써 기관의 경영여건을 정상화하였음.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 및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려는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임.
- 학제 간 교류 특별 세미나를 실시하여 융·복합연구 추진 및 이슈발굴을 위한 노력을 함.
- OECD,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로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연구원의 연구역량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함.

〈단 점〉

-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객관적 방법 사용이 부족함.
- 정책연구협의회, 구성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현안문제 선정을 위한 전체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의 별도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함.
- 융·복합연구 발굴을 위한 TF 운영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조직개편의 성과가 불분명하고, 연구원 개개인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다소 미흡함.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 및 신규 연구과제의 구체적 내용 및 실적이 다소 미흡함.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실질적 융·복합 및 새로운 연구과제를 찾기 어려움.
- 국제기구 파견 외에 직원들이 연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단기 연수제도의 운영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문제 선정을 위해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현안문제 선정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 이외에 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안문제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조직개편이나 TF를 운영할 경우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조직을 변화시키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변화의 타당성을 대내·외에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 개개인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동기부여 및 업적 평가, 보상시스템의 개선 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융·복합 및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또는 학제적 접근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융·복합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직원들이 국내·외 연구 및 교육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장·단기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수권 인건비 부족 등 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임.
- 열린 광장 확대 운영, 기관장 직통 메일 개설, 내부 메신저시스템 구축 등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기관장과의 소통 통로를 확장함.
- 정부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노력이 돋보임.
- 개발도상국 교통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등 해외 사업을 통한 수익 증대노력이 돋보임.
- 기관장의 해외 네트워크 확보 및 협력 추진을 위한 노력이 매우 돋보이고, 성과가 뛰어난.

-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외 정부기관과 다양한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함.
- 외국의 교통시스템 발전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교통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

〈단 점〉

- 직종별·직급별 대표자와의 의사소통 채널이 다소 부족함.
- 하위 구성원의 상향식 의사소통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 직원상시대면 소통통로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음.
- 해외 네트워크 확보에 있어서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이 다소 부족함.
- 교류기관이 주로 동남아 및 아프리카 또는 국제기구에 집중되어 있어 구미 선진국과의 교류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직종별, 직급별 대표자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정기화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밑으로부터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채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포상 및 피드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통의 확대는 바람직하나 간담회 또는 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정례적 모임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대면소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선진국의 교통 관련 연구기관과의 실질적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내부 운영 규정 및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윤리경영을 위한 구성원 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음.

-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이 확대간부회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임.
- 보직자 선정, 신설조직 부서장 공개모집 등 인사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함.
- 전자입찰의 실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
- 연구윤리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음.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연구윤리준수인식을 강화토록 함.

〈단 점〉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운영 규정에 대한 전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투명한 의사 결정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 보직에 대한 지원 후 심사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단지 모집과정에서의 직원 희망조사 정도의 의의만 있음.
- 직원의 성과평가에 있어 질적 평가에 대한 판단기준의 제시가 미흡하여 주관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음.
- 연구윤리 위반 행위(표절 등)에 대한 사후 조치가 제도적으로 다소 미흡함.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준수에 관한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중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기관 차원에서 연구윤리준수여부를 사전심사 하도록 하는 제도의 운영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경영의 중요성, 내부 운영 규정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무자뿐만 아니라 전체 구성원에게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각 위원회에 직종, 직급별 대표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부패 방지를 위해 내·외부 신고 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원에 의한 보직임명을 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의 질적 평가부분에 대해서도 등급별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도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준수에 대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표절 검사 결과를 연구자에게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표절검사 결과와 사후 조치를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함.
- 연구과제 선정 시 뿐만 아니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제출 시에도 기관에서 연구윤리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여 사전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3대 경영목표와 13대 경영목표 실천계획은 SWOT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되었고, 교통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라는 설립목적과 세계일류의 종합교통물류연구기관을 지향하는 비전에 부합하며, 실천계획이 구체적 실천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 경영목표가 본 기관의 설립취지나 미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 미래지향 및 융·복합, 글로벌 강화, 혁신경영의 미션이 기관장의 의지에 잘 나타나고 있음.
- 기관의 경영환경 및 위상진단결과, 대내·외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당면현안을 도출하였음.
- 경영목표와 실천계획과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며, 실천계획이 기관의 당면 현안과 그 타개책을 잘 반영하고 있음.
-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가능 수단을 연구발굴추진, 제도 및 시스템화, 협력체계 확보, 직제개편 및 행사개최 등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점이 우수함.
- 13개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하여 44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 전원이 공유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성과달성을 점검한 결과, 제시된 성과 목표치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
- ‘미래창조, 융·복합 연구확대를 통한 새로운 교통분야 미래가치 창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비전 전략 연구과제, 통일대비 북한 및 동북아 교통물류 연구, R&D 수행과 지재권 보호, 글로벌 연구, ITC 융·복합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이념과 본 기관의 비전에 맞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협동연구 및 활동의 지원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선진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지식공유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점은 긍정적인 점.

- 기관장이 인건비 하락으로 인한 사기 저하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대외활동을 통한 노력을 한 점은 긍정적임.
- 연구원장의 현안인식 및 경영철학, 실천계획 등이 담당부서 및 성과관리부서를 포함하여 전 구성원에게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함.

〈단 점〉

- ‘미래창조, 융·복합연구 확대를 통한 새로운 교통분야 미래가치 창출’과제는 현 정부의 국가정책을 반영하는 중요한 내용이나, 융·복합연구과제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창조경제와 관련한 실천계획이 명확하지 않음.
- 세부 실천계획 중 효율적 행정 및 재무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실천계획은 없어 보임. 따라서 ‘창의혁신 업무방식 도입 및 확산을 통한 경영효율화’와 같은 내용은 실천계획으로 간주하기에는 모호함.
- 우수인재 확보와 함께 연구인력의 과다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추진조직과 일정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세부실천계획에서 연구성과의 홍보 강화와 관련하여 구체성과 현실성 보완이 필요함.
- 교통정책 수요자의 참여를 주로 정부 유관기관으로 보고 있어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참여의 기회는 다소 미흡함.
- 각 성과 목표의 최종달성목표를 거의 계량지표로 도출한 것은 긍정적이나 성과 목표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함.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한 성과목표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전년도에 비하여 상향된 비율이 9.1%로 도전적인 목표치에는 다소 미흡하며, 다수의 성과지표들이 제도시행, 계획수립, 교육시행 등 투입과 과정을 측정하는 지표들로 실천계획의 결과를 측정하지 어려운 면이 있음.
- 미래비전전략 및 융·복합연구, 글로벌 협동연구 등은 연구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목표치의 달성도를 질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인력관리 운용계획과 교육훈련을 수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애인 고용과 같은 고용안정화 노력이 필요함.
- 구체적인 실현 기능과 수단에서 추진 조직과 추진 일정 등을 제시하고, 교통의 문제는 기술적 문제에서 나아가 경제, 통일, 사회, 법 등 다양한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 의견과 참여를 통한 협력적·융합적 접근 시각을 더욱 넓혀 나갈 필요가 있음.

- 실천계획에서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시스템의 구체성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성과목표 및 달성치를 가능한 한 계량 지표로 개발하되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미래지향적, 융·복합,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연구 등은 성과목표치와 달성노력을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를 통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계획에서 본 기관의 행정 및 재무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이 필요함.
- 과제수행에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기관의 내·외부 고객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중요도 조사 실시, AHP 기법 활용, 경영진 검토, 기관의 현안 고려를 통해 3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는 절차가 체계적이므로, 중점추진과제 선정과정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음.
- 선정된 중점추진과제가 전체적으로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을 띠고 있으며, 중점추진과제 선정과정 및 절차가 타당성있게 진행됨.
-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의 부합성, 중요도 조사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7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방법론이 명확하고 타당함.
- 각 중점추진과제별로 담당조직과 성과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추진계획에 대한 로드맵과 모니터링 및 추진전략을 시행함으로써 설정한 성과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함.

<단 점>

- 세 개의 중점추진과제들이 모두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여, 기여정도를 보다 객관화된 지표로 표시할 필요가 있음.
- 미래지향적, 융·복합적인 연구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고, 특히 창조경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연구가 미흡함.
- ‘글로벌 협동연구 및 활동의 지원과 실효성 확보’ 과제에서 해외기관과의 MOU 체결, 해외교통공무원 훈련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류확대 및 지식공유는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우수역량 기관과의 공동행사 개최, 해외학술지 논문게재 등의 과정은

바람직하나, 선진국과의 글로벌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실질적 파급효과와 기여정도는 미흡하며, 국제학술지 게재에 대한 성과배점이 너무 적어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임.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추진과제의 정책발전과 기관발전의 기여 정도가 보다 객관적일 필요가 있고, 기여정도가 보다 구체적인 필요가 있음.
- ‘근무안정성 강화’ 과제에서도 인건비 재원의 확보에 지나치게 치중하는데 비정규직 인력관리에서도 정규직 전환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과 같은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고, 우수인력의 확보와 동기 개발을 위하여 성과중심 평가·보상시스템도 함께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함.
- 글로벌 협동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해외기관과의 협력으로 인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역량강화와 위상제고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내부 연구원의 의견수렴 과정과 교통관련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래지향적, 융·복합, 창조경제 관련한 연구는 상당히 도전적인 연구이므로 이러한 연구들은 착수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주요 기능과 연계한 외부고객 요구(국민 체감형 정책 및 기술 개발 요구) 파악 및 대응은 적절함.
- “정부부처별 원내 실·본부 지정 제도” 운용, “국가교통수요검증 실무위원회” 구성
- 대내·외 환경변화 요인 도출 및 SWOT분석결과에 의해 개편된 조직이 경영목표 실천과제 등과 연계되어 운영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유도함.
- 정부 등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부처와의 정책연구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정책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를 확산함.

- 교통수요 예측결과의 대국민 신뢰성 재고를 위한 수요검증위원회를 내실화함.
- 미래교통·창조경제연구본부, 물류정책연구기술본부 등의 운영으로 인간중심적 교통환경 구현과 미래가치 창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함.
- 글로벌협력북한연구본부, 철도정책기술연구본부 등의 운영으로 글로벌 교통 선진 기관과의 MOU 체결, 해외 연구기관과의 세미나 및 간담회 등 실질적인 연구교류를 활성화함.
- 연구직 지원부서 파견제도를 도입하여 연구부서 인원 79.6%를 유지함.
- 서류심사, 필기시험 또는 채용세미나(박사급), 면접시험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함.
- 채용절차 간소화와 인재DB 구축 및 관리를 통한 우수인력을 상시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회 및 인력채용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채용 공고를 하고, 명예연구위원 제도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함.

〈단 점〉

- 기관 고유기능과 연계하여 환경변화 이슈를 도출하였으나, 2013년에 국한된 환경 변화라기 보다는 중·장기 이슈에 가까움.
 - 미래 선도형 교통기술 개발 요구, 기후변화, 고유가, 고령화 등에 대비한 교통정책 요구, 교통분야 글로벌 국가위상제고 요구
- 기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물류정책 관련된 환경변화 이슈 도출이 미흡함.
- 외부 고객보다는 내부 고객 요구사항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내부고객 요구사항도 일반적인 행정처리 수준임.
 - 정책기여 및 연구성과 홍보, 비합리적 규정에 대한 개정요구 등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고객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 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경영목표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의 제시가 미흡하여 목표 달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음.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이 미흡함.
- 중·장기 및 연도 인력운영계획 수립 없이 인력을 운용함.
- 국내·외 교통분야 종사자 및 잠재교통인력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고 하나 확인이 어려움.
- 별정직 제도(전문원 제도)를 통해 우수인력 확보 및 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나, 별정직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과는 무관하며, 별정직 양산은 또다른 비정규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기준과 채용절차에서 실적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심사과정에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는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발전방향, 제안사항 등의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경영목표 점검시스템은 구축되어 가동되고 있으나,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연계된 성과를 정량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환경변화 요소를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함.
- 채용 심사 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외부 기관의 인적성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운영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당해연도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인력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인적성검사 도입 및 면접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연구원 전체 워크숍 등을 통하여 구성원 간 소통 기회 및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포상제도 등으로 공정한 조직문화 창출과 사기진작에 기여함.
- 이달의 KOTI MAN 시상, 자전거 복지포인트 지급, 선택적 복지제도 등을 통한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가족화합을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함.
- 개별 구성원의 요구와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추진 및 업무특성과 전문분야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함.
- 교육 연수 완료 후 교육자료 및 결과보고서 등은 원내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공유시스템에 있는 지식공유방을 활용하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 2013년 1인당 교육비는 24만 1,034원이며 전년대비(2012년 14만5,492원)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집행을 증액함.

〈단 점〉

- 중·장기 및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이 없으며 실적으로 제시한 ‘연구원 워크숍’은 사기진작책으로 보기 어려움.
- 구성원 역량강화 운영성과 및 효과 등 구성원 역량강화 실적이 부실하고, 교육·연수 결과의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가 부실함.
-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에 기초한 당해 연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미흡함.
- 교육훈련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 구축이 부족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ERP, 과제관리시스템, 서면작성 등으로 분산되어있는 연구활동평가 자료를 통합하고 평가 프로세스를 전산화한 실적은 우수함.
- 경영목표달성 지원정도를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써 개인-부서-기관성과가 연계되어 평가의 목적 달성에 부합함.
- 승진후보자 심사기준의 근무성적 평점은 최근 3년 간 성적의 61%가 반영되고, 기준도 대체로 합리적임.
- 부서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부서와 지원부서 업무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요소를 적용하며, 평가요소별 지표를 구체화하고 계량화하여 평가함.
- 연구부서는 연구성과와 근무성적을 76%, 24% 비율로 평가하고, 행정직은 근무실적과 연구지원실적을 70%, 30% 비율로 평가함.

-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계량화 노력으로 계량항목 평가 비중은 30%이고, 연구직의 연구성과 평가 비중은 60% 이상임.
- 연구활동평가체계 검토TF를 통하여 연구활동평가규정을 재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연구활동평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함.
- 연구진의 논문게재 실적에 대해서는 개인평가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금전적 보상 및 비금전적 보상에 적극 활용함.
- 업적평가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활동평가규정에서 제시하는 동일한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로 공정성을 확보함.
- 연구활동평가자료를 통합하고 평가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평가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함.
- 업적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연구활동평가규정 제28조에 의해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시행함.
- 연구직 중 휴직자 3명, 신규 근무자 1명, 비연구직 중 감사실장, 노조전임자, 신규 근무자 2명은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됨.

〈단 점〉

- 논문게재는 해당 건을 점수화하여 연구활동평가 연구실적에만 반영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이 다소 미흡함.
- 승진대상자 후보 하한 기준(일반적으로 직근 3년 간 평균 이상 등급)이 없고, 경력 평점이 26%를 차지함으로써 과다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직급별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우수논문상 등 논문 게재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승진 및 재임용 시 평가의 최저기준 설정이 필요함(3년 평균 B이상 혹은 60점 이상 등).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수권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임금 협약 관련 갈등을 7차례에 걸친 임금협상으로 타결함.
- 임금동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사 공동으로 ‘재정개선TFT’를 구성하여 수권인건비를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둠.
- 8회에 걸쳐 규정개정기획평가위원회를 열어 여비규정, 복무규정 등 각종 규정들을 수정함.
- 구체적인 노무관련 쟁점에 대하여 14회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함.
- 분기별 4회 노사협의회와 임금 관련 노사 쟁점을 협의하기 위한 총 6회의 노사 협의회를 열어 노사 간 타협을 이끌어냄.
- 연구원 주요 규정 제·개정 시 총 4회의 노사간담회를 열어 노사 의견을 반영함.
- 전 직원설명회, 인턴직원 간담회, 신입직원간담회, 생일자 간담회 등 정례화된 간담회로 노사화합을 위한 의사소통을 활성화함.
- 단체협약 개정이 근로시간 면제조항 신설, 퇴직금 이자율조정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됨.

〈단 점〉

- 노무 관련 직무교육이나 훈련 결과가 구성원에게 공유되는 측면이 미흡함.
- 노무관리담당자 교육이 3회에 그치고 일반관리자 노무교육 실적은 많지만 성격이 불명확한 한계를 가짐.
- 의사소통이 노동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70%에 이르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구성원의 의사소통 통로는 제도화 수준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직무 관련 직무교육이나 훈련 결과의 구성원 공유가 필요함.
- 제안제도,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종합하여 전체 구성원의 하의상달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연구사업비 편성에 있어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는 약 2,013백만원, 정책과제 사업비는 약 670백만원으로 33.3%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2014년에도 30.3%로 편성되어 있어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과제 비중은 2013년 20.0%(403백만원), 2014년 15.1%(136백만원)로 연구회 제시 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18.2%(약 438백만원), 2013년 14.1%(약 285백만원)로 연구회 제시 기준(10~20% 범위 내)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24건의 집행에서 전액 위탁연구비로 지급한 과제가 없음.
- 분기별로 퇴직금 지급액을 추계하여 분기별로 퇴직금 소요액을 적립하고 있음.
- 퇴직예치금은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1.2%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1,996백만원)은 퇴직급여적립금 부족분을 우선 적립(166백만원)하고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은 직무급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적정함.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30%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봉의 책정방식이 비누적식으로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 또한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이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맞게 운영되도록 누적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본연봉의 책정방식과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간부직/비간부직 모두 성과연봉에 최고-최저 $\pm 25\%$ 차등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 또한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비율이 되도록 배분하였으며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함.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고, 등급별 인원배분비율도 최고-최저등급에 각각 10%,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였음.

〈단 점〉

-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3% 차이로 기준(2배 이상)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을 기준에 맞게 최고-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1건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1건의 예산결산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완료함.
- 교통수요 예측도 제고방안을 위하여 KTDB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지침과 모형을 개발하는 등 예측통행량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작업을 수행함.
- 결산잉여금의 부적정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함.
-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한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과 구성원 의견 수렴, 개선 추진TF의 구성을 통한 총괄적 추진점검, 지적사항의 분석을 통해 유사한 성격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체계화에서 개선계획에 이르는 절차를 구성한 것은 장점임.
- 연구심의위원회의 원외위원 비율이 향상되었고, 연구과제 선정 시 구성원(하위직)이 참여함.
- 보안체계 강화 실적이 우수하여 국무조정실 표창을 수상함.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평가기준(2.5%)을 준수하였음.

〈단 점〉

- 29건의 개선사항 중 기본연봉 누적식 차등운영과 능률성과급 차등지급률 준수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가짐.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절차가 다소 미흡함.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 및 결과에 대하여 전 구성원이 공유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output)이 구체적이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 개선이 기관발전에 기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결과 개선체계의 구성에 있어 개선결과가 다음연도의 경영에 반영되면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개선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개선정도에 대하여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참여하는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연봉이나 능률성과급의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사 간의 노력이 필요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output)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outcome)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직원채용 시 장애인우대조치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가산점 부여 조항을 두고 있음.
- 2013년 장애인 신규 채용실적이 없고, 신규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여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35%), 장애인 고용률 달성을 위한 기관장과 기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 (대체회의, 계획수립, 관련기관방문 등)이 강구되어야 하고, 중·장기인력운영 계획의 사회형평채용 항목을 구체화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우대조치를 연구원 자체 규정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장애인 고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이 계획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고(100% 달성), 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 공고 및 충원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인턴 2명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고, 청년인턴 대상 오리엔테이션 교재, 근무평정 실시, 취업활동 실적은 양호함.
- 기관 차원의 청년인턴제 운용계획이 없으며, 멘토링 담당자를 지정한 내용은 보이지만,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용실적은 없고, 고충해결 담당관을 지정한 자료가 없으며, 인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미흡하므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 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 등을 잘 이행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공고 시 우대조치, 가산점 표기)을 하고 있고 2013년 1명의 국가유공자를 신규로 채용하였음.
- 국가유공자 신규채용한 실적이 있음에도,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3.9%로 평가기준(6%)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장의 관심표명, 대책 회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기관 방문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가 연구원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를 연구원 규정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고용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사항을 담은 단체협약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부재한 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임금, 처우에 관한 연구원 차원의 독자적인 규정(위촉직임용 규칙)이 존재함.
- 연구원 차원의 비정규직 운영계획(워크숍 자료)이 있음.
- 복지 및 복무 분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
-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이가 없고, 다만 능률성과급에서는 차이를 두고 있음.
- 위촉직원임용규칙에 비정규직 임금조항이 있으나, 특히 제16조의3(위촉직원 보수 지급의 특례)은 임금지급에 있어서 차별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차별소지가 없도록 조항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

한국노동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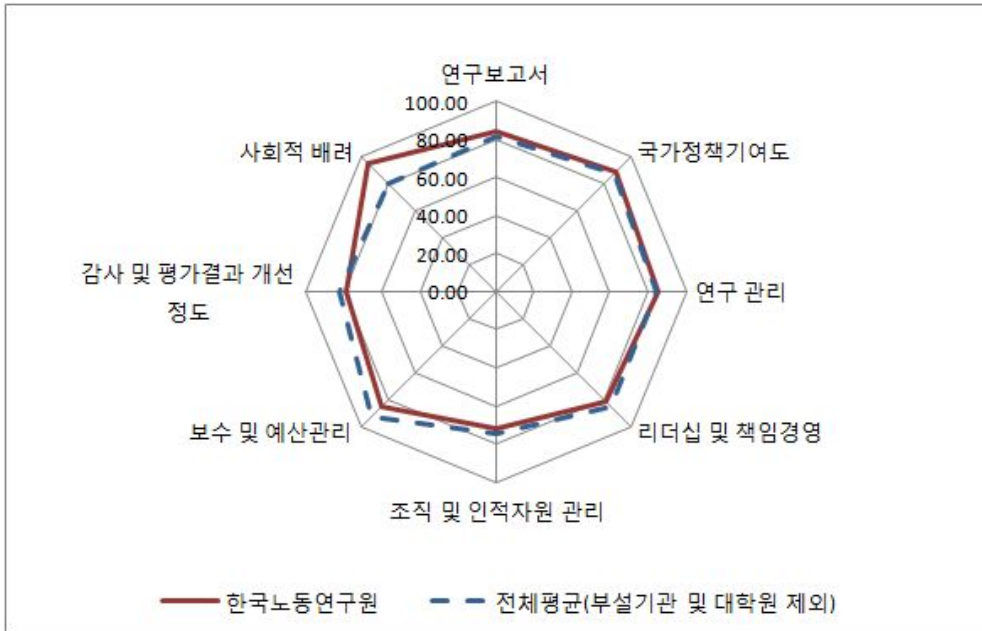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C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A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A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A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A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C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A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A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B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C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C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D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C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A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노동조합의 정책 역량에 대한 연구가 돋보이며, 심도있는 이론적 분석을 응용하여 구체적인 정책 제언의 논지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통상임금 범위 확대, 장시간 근로 개선, 정년 연장, 노사정 사회적 연대 강화 등 민감한 쟁점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사안에 따라 정책 반영과 입법화를 추진함.
- 고용 정책이 복지, 교육, 여성 등의 부문과 융·복합적으로 연계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부처 및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다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수요층을 대상으로 수요자별 특성에 적합한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부부처와의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장기 전략과제 및 다년간 수행이 필요한 중점연구과제 선정 노력이 미흡함.
- 협동연구의 추진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연구원에게 동기유발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게함.
- 협동연구 추진아이템 발굴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등의 구축을 통한 다양한

협동연구 추진노력을 도모해야하며, 협동연구 시너지효과 중 정책기여도를 보다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위원 간의 평가보전 방법, 외부평가위원 풀의 선정과 구성에 있어서 전공·분야·소속기관별 평가위원 구성의 노력이 필요함.
- 2013년에 방화벽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안티바이러스시스템에 대한 구축·운용이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이나,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경영 분야]

- 기관장의 현안문제 타개와 구성원과의 소통노력,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은 뛰어나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다소 부족함.
- 비정상적 기관운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도화하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의 적정성은 3대 경영목표와 15대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바람직함. 각 실천과제별로 실현 기능과 수단을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실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두드러짐. 연구수월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실천계획에 치중하였으나, 연구결과의 정책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계획을 개발하고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제시된 성과목표치를 적절히 달성하였음.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대부분 계량적인 지표로 명확히 설정하고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어 성과목표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정도가 양호함. 국제협력의 내실화를 위하여 선진국 또는 OECD 수준의 국가들과 국제연구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개발도상국 발전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3개)의 중요성, 추진실적,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중점추진과제들이 기관의 당면 현안과 연계되어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보이고, 중점추진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선정기준을 추진과제의 필요성 30%, 전략적 중요도 30%, 과제의 효과성 30% 및 실행용이성 10% 등으로 가중치를 명확히 설정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바람직함. 창조경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노동연구와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융·복합적인 노동연구를 다루는 실천계획을 중점추진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센터, 노동시장분석센터, 고용보험평가센터, 임금 직무센터 등의 설립과 함께 이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전문가 외 6개 채널을 통하여 외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노동통계 원자료 공개, 예결산제고 개선 등 12건의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조직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의 제시가 미흡함.

- 연구책임자와 평가위원 간 상호 익명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직무수행능력, 직무태도, 기관발전기여도 등 업무성과평정 점수의 평정방법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
- 단체협약 갱신, 임금 협약 등 주요갈등 관리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누적식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고 단체협약 일부 규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나, 집행내역 중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은 과제(80% 이상)가 2건 발견되어 외부위탁 비중을 줄이는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당기 퇴직금의 적립은 소요되는 금액을 분기별로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고 적립계좌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률이 추계액보다 미달(87%)되어 지속적인 추가 노력이 필요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비간부직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과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을 비누적식으로 운용하고, 간부직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기관평가를 조직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고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장치를 통해 개선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성과연봉제의 개선이 미진함.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개선실적과 개선성과를 구분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근무자가 1명 감소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경계수준에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청년인턴 채용목표 달성도가 양호하지만, 청년인턴 운용과 관련하여 오리엔테이션, 멘토링 분야의 실질화가 요구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비율을 초과달성하고 있어(6.1%) 양호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차별 없는 급여와 복리후생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정규직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 차원의 비정규직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공공조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의미있는 연구를 수행함.
- 자료 분석, 인터뷰, 국제 사례연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시도하여 현상 분석과 실태 파악에 주력하였고, 특히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노동 실태를 다양한 산업, 직업군을 망라하여 분석함.
- 노동조합의 정책 역량에 대한 학술적, 실천적 분석이 사회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부응하여 이론화에 필요한 분석틀과 풍부한 실증 자료의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무기계약 전환 사례를 대표적인 업종과 기업을 선정하여 이론적 분석 체계에 따라 심도있게 분석하였고, 체계적인 구성과 그림, 표를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임.

〈단 점〉

- 보고서의 전반적인 논지가 취약하고, 일관된 연구라기보다 소주제의 연구 결과를 취합하여 편집한 형태의 보고서로서 종합적인 결론이 취약한 경우가 있음.
- 분석 방법이나 내용은 충실하나 향후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있음.
- 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과 결과 그리고 정책적인 함의와 방향성에 대한 연관성이 다소 미흡하며 연구 결과를 단순 나열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설득력이 취약한 경우가 있음.
- 전반적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 검토가 다소 부족하거나 방법론적 정합성이 다소 취약하여 구체적인 정책 제안의 논지가 약한 측면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대상별 평가 사례 분석에서 결과를 종합적인 표로 재구성하여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음.
- 실증분석 계산식에 투입된 변수의 전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방안은 우수하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시스템의 제공이나 중·장기 추진 단계나 추진 로드맵을 보완함으로써 정책적 기여도를 높여야 함.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하여 ‘고용률 70% 달성’, ‘맞춤형 고용-복지’,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연구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함께 인력과 예산을 집중 배치함.
- 특히, 고용영향평가센터 등 4개 센터를 신설함으로써 국정과제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은 적절함.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물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실시한 국정과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협의, 지원 활동을 수행함.
- 청와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박사급 인력을 파견하여 정부 정책수립에 직접적으로 참여·지원하고 있음.
- 특히 고용률 70% 로드맵 입안,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연구 등 핵심 국정과제들에 대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단 점>

- 국정과제 수행 책임자가 일부 연구원으로 집중되어 있어 연구 인력 배치의 효율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됨.
-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 청년, 장년층 등 대상별 일자리 정책 연구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반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가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특정 연구자에게 너무 많은 과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내부 연구인력 풀(Pool)을 확대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신설된 신규센터의 경우, 국정과제 수행 이외에도 중·장기 업무 개발과 효율적 인력배치, 조직 체계화 등을 통해 전략적 자원배분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 청년, 장년층 등 대상별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고용률 70% 달성,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정부의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정과제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집중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함.
- 특히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추가 재정부담 규모 추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함.
- 또한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여러 정부부처의 현안과제 요청에 대해 수시과제 및 단기과제 형태로 각종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적극 대응함.
- 고용영향분석에 기반한 고용정책 수립과 고용보험사업의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해 고용영향평가센터, 고용보험평가센터 등을 설립함으로써 국정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내부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대응함.

〈단 점〉

- 정부의 현안과제에 대해 수시 또는 단기과제를 통해 대응한 실적이 많은데 반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미흡함.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수시 대응이나 활동 내용 등이 활동 실적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
- 철도노조 파업 등 일부 긴급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의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생산 뿐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현안 대응팀 (가칭)’과 같은 TF를 운영하여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대응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주최하는 회의, 간담회,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연구 협의, 발제, 토론 등을 통해 고용노동 관련 현안들의 합리적인 해결을 적극 지원함.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전문위원을 파견하고 정책연구협의 및 자문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산하 소위원회의 위원 참여 등 적극적인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노사발전재단, 대학 및 학회 등과 협동과제 수행 등을 통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감.
- 국외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일본, 중국, 인도 등 매우 다양한 관련 기관이나 국가들과 공동연구, 정책 간담회,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정책연구네트워크를 활성화 함.

〈단 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여성고용, 청년일자리, 직업능력개발 등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다소 미흡함.
-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 연구기관 주도성과 지속성이 미흡하여 단순 참여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의 융합화를 고려할 때, 고용-복지, 고용-교육, 고용-여성 등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산업계 등과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책네트워크에서 연구기관의 주도성과 지속성을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ODA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고용노동정책 개발, 자문 활동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국가의 고용노동정책의 발굴, 연구,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고용률 제고,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안정 등의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국가 고용노동전략 수립에 기여함.
- 연구내용은 중요한 현안이거나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 대체로 시의성이 높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공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응함.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시간근로 개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선, 노사정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정책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거나 입법화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지역일자리 사업 평가체계 구축’은 중복·유사 일자리 사업의 폐지와 재정 효율성 제고, 지역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됨.
- 고용영향평가사업은 정부 정책·법·제도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고 고용친화적 개선대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고용률 70% 추진은 물론 국가 전체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단 점〉

- ‘사회적 대화’에 관한 연구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화 주체간의 신뢰가 부족하고 정치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대화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연구는 통합의 틀이나 방법 등에 있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고용창출 및 예산절감 효과 등 파급효과에 있어서도 구체성이 떨어짐.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결과 제시되는 대안들이 정책화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연구기관의 중·장기 정책연구과제로서 기본연구과제 발굴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장시간근로 개선의 경우, 법·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시간근로에 대한 기업의 관행과 의식, 문화의 개선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함.
- 고용영향평가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전평가제도 개선작업 뿐 아니라 정책 제안에 대한 정부부처의 수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공무원 노조합법화 10년을 맞아 법외노조의 문제, 해직자 문제, 교섭 문제 등에서 불안정한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중요성과 선도성이 인정됨.
- 공무원 노조운동의 사회적, 국제적,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의 기본 방향 정립에 기여함.
-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법외노조인 ‘전공노’ 및 해직공무원 문제의 해법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공공부문 임금직무체계 개선사업 연구를 통해 공공부문의 합리적 임금·직무체계 발전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단 점〉

- 선도과제 발굴과 선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다소 미흡함.
- 연구과정에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학술대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참여나 개최실적이 미흡함.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의 제·개정 반영 실적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정에서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함.
- 선도과제 선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상세업무유형별로 살펴 보면, 전년도와 비교가 가능한 기본연구와 수탁연구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냄. 점수의 하락폭은 기본연구가 수탁연구에 비해 다소 더 큼. 상세 업무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수탁연구, 기본연구, 교육훈련 서비스 순임.

-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정부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수탁연구를 제외한 모든 상세업무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으며, 전체평균 대비 공동연구의 점수 차이가 다른 상세업무들에 비해 더 큼.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차원별로는 과정품질을 제외한 다른 차원들 모두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낮아졌고, 품질요소 중에는 대응성과 성실성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 모두 점수가 낮아짐.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차원별로는 과정품질과 환경품질을 제외한 차원 모두 전체평균에 비해 낮고, 품질요소 중에는 효율성, 효과성, 준비성, 합리성, 공정성, 공익성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회의 시 참석자 의견 경청, 적극적 의견 반영 노력’ 항목의 점수는 높고, ‘해당분야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전문지식과 경험 보유’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 목표·임무 달성, 결과 활용도 높음’ 항목의 점수는 낮음. 교육훈련서비스에서는 ‘교육과정 문의 담당자 지정’ 항목의 점수는 높고, ‘교육 내용이 업무와 역량강화에 도움’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변화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는 노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최신 경향을 파악하려는 노력,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수립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높아짐. 상세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 수탁연구, 위탁연구 전 부분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음. 특히 기본연구에 대한 점수 오름폭이 다른 두 상세업무에 비해 큼. 상세업무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위탁연구, 교육훈련서비스, 수탁연구, 기본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순임.
-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정보제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세업무가 전체평균에 비해 높으며, 전체평균 대비 위탁연구의 점수 차이가 다른 상세업무들에 비해 더 큼.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오름.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높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정확히 이해’ 항목의 점수는 높고, ‘보고회, 자문회의 등 일정 관련 사전협의가 잘 이루어짐’ 항목의 점수는 낮음. ‘업무수행 전 정보교류가 적절히 이루어짐’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 관련 정보제공과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위탁연구에서는 ‘연구과제 관리 전문지식 보유, 과제 진행 위한 의사소통능력 갖추’ 항목의 점수는 높고,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의 편리함’ 항목의 점수는 낮음. 공동연구에서는 ‘연구과제 진행 위한 전문지식 보유’ 항목의 점수는 높고,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의 편리함’ 항목의 점수는 낮음. 교육훈련서비스에서는 ‘교육과정 문의 위한 담당자 지정’ 항목의 점수는 높고, ‘다양한 교육매체나 도구를 활용한 교육생 수업동기 유발과 참여 유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정보제공서비스에서는 ‘정보자료 검색을 위한 검색기능 구비’ 항목의 점수는 높고, ‘제공되는 정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해당분야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한 동향 분석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관리 노력,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시스템 및 절차 진단 및 개선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정책수요층을 대상으로 수요자별 특성에 적합한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발굴함.
- 원내·외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부처와의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유사 및 중복과제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간 수행한 과제목록을 제공하는 등 선정과정 및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과제심의위원회와 연구자문위원회 등 중층적인 심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음.

<단 점>

- 중·장기 전략과제 및 다년 간 수행이 필요한 중점연구과제 선정 노력이 미흡함.

- 노동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기업, 노동조합, 연구자집단)과의 공식적인 협력이 보이지 않음.
- 노동시장의 약자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집단과의 소통이나 채널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제안된 과제 선정단계에서 외부 위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과제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10% 정도에 지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전략과제 및 다년 간 수행이 필요한 중점연구과제 선정 노력이 필요함.
- 연구주제의 발굴에서부터 노동관련 다양한 집단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정책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중복과제 해소를 위한 장치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탈락된 과제의 미선정 사유 기재도 필요함.
-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비율을 늘려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수시연구과제=단기정책과제’라는 인식하에 과제를 적절하게 발굴 및 선정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운영위원회에 내·외부 전문가가 고루 분포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중간심의를 철저히 하여 결과보고서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에도 중간보고서 심의 과정을 제도화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회의 시 외부 위원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심의 과정에서 탈락된 과제나 수정된 사례가 없어서 위원회 운영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임.
- 연구운영위원회의 성비 역시 매우 불균형하여 여성위원은 12명 중 1명에 불과함.
- 과제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시연구과제 발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연구과제선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연구운영위원회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여 노동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음.
- 과제기간 종료 즉시 발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의 추진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연구원에게 동기 유발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협동연구를 내부역량 강화형, 현장적합형, 대형 융·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협동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원들 간의 상호협력 등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단 점〉

- 협동연구 발굴과 추진의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부족함.
- 협동연구 선정 및 평가를 담당하는 외부 구성원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인적 구성 풀(Pool)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 정책기여를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에 대한 내용이 피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 추진아이템 발굴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등의 구축을 통한 다양한 협동연구 추진노력을 도모해야 함.
- 협동연구를 내부역량 강화형, 현장적합형, 대형 융·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함.
- 협동연구 시너지효과 중 정책기여도를 보다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체계에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고, 과정평가, 결과평가를 평가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평가위원이 처리하도록 된 절차가 돋보임.
- 기초과제, 정책과제를 차등화한 평가배점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연구보고서의 자체평가절차가 객관적이며 체계적임.
- 평가의견이 자필로 기재된 경우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객관성 유지에 힘쓰고 있음.
- 심의평가는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로 구분하여 연구의 성격에 적합하게 연구품질 제고를 하고 있음.
- 이의신청 및 피드백은 규정에 의해 적절하게 시행함.
- 평가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 평가위원을 인적 풀(Pool)에 기초하여 소속기관별, 전공별로 선정하여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음.

<단 점>

- 평가위원 간의 평가 차이에 대한 편차 보정의 사항이 없음.
- 평가위원 풀(Pool)에 대한 실제 분야별 평가위원의 선정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의 편차 보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심사위원 풀(Pool) 대비 실제 분야별 심사위원 선정실적을 분석하여 가능한 심사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2013년에 방화벽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안티바이러스시스템에 대한 구축·운용이 이루어졌음.
- 지식재산 보호 규정을 잘 수립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타 기관에 전파한 실적은 긍정적인.

- 보안 관련 관리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음.
- 2013년도 발행된 성과물을 100% NKIS에 등록한 점은 긍정적인임.
- 국제협력실을 통해 국외 홍보 체계를 담당하게 함.
- KLI 정책 리포트를 발간하여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전망한 자료는 적절함.
- 사업체 패널과 노동패널 등 별도의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한 점은 긍정적인임.

〈단 점〉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 수준과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전략적 활용에 대한 계획이 미흡함.
- 다양한 관리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이 미흡함.
- 2013년도 시스템의 개발 성과 중 보안 분야를 제외한 지식재산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제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함.
- 홍보·확산 계획에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단기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홍보·확산 실적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홍보확산을 위해 수립된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주요 내용도 상당히 일반적인 수준임.
- 원내 홍보를 위한 조직구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연구성과 확산 실적을 채널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전년 대비, 목표대비 향상도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첨단 정보매체의 활용 실적이 부진하며 홍보의 효과분석도 소홀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큼.
- 정보 수요자를 특성별로 분석하고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성과물의 배포 체계가 상당히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효율적인 배포 전략이 부재함.
- KLI 정책 리포트를 제외하고 이슈페이퍼를 시의적절하게 발간하지 못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전략적 활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성과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에 제시된 시스템은 대부분이 정보 보안 관련 시스템으로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한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 개발을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원의 경영목표와 연계한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당해연도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둔 성과지표와 단기 목표치의 제시가 필요함.
-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연구원에 가장 효과적인 확산 수단을 선택하여 확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채널이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향후 연구원의 전략에 맞춘 효과적인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홍보채널별로 2013년도 성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2012년도 대비 증감, 목표대비 달성률 등을 제시하여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성과의 해외 확산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네트워크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성과물의 배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채널별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홍보의 양적 목표와 효과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홍보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29편(30.97건/24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기관의 대내·외 환경 분석이 잘 이루어졌음.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뛰어남.
- 재정구조의 안정화와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현 기관장 취임 후 비정상적 기관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함.
- 정부정책용역사업을 회복하여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확보함.
-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잘 정리되어 있음.
- 원자료 생산기능 복원 및 확대 노력이 뛰어남.
- 정부로부터 2014년까지 총 8명의 정규직 연구인력 증원을 승인받아 우수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 한국노동패널 재이관을 통해 원자료 생산기능을 복원·확대함.

<단 점>

- 기관 현안문제 선정에서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함.
- 중·장기인력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인력수요예측을 위한 업무량 분석 및 계획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가 미흡함.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원 개인에 대한 동기 부여 등 사기 진작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연구역량 확대의 성과 지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
- 기관의 연구역량 확대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함.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과제의 개발이 다소 부족하고, 융·복합연구의 근거가 다소 부족함.
- 해외 기관과의 협력, 기관 내 연구자의 장·단기 연수제도 활성화 등이 계획수준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 현안문제 선정에서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 현안문제의 선정에서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의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객관적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분야별 업무량분석을 통해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중·장기인력계획의 정밀화가 필요함.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원 개인의 동기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연구역량 확대의 성과 지표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를 먼저 정의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학제적 접근 방법을 썼는지, 또는 공동연구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음.
-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도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내부 갈등해소를 위한 기관장의 소통 노력이 뛰어남.
-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한 멀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음.
- 열린 경영시스템과 정보공개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기관장실을 개방하여 수시면담을 활발히 수행함.
- 홈페이지의 의사소통시스템을 정비하고 제안, 고충처리 등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함.
- 생일자 오찬, 기관장과의 문화공연관람 등 감성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국가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실적이 뛰어남.
-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국내·외의 연구기관, 국제기구, 학회나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함.
- 국가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나 세미나 등 모임에 활발히 참여함.

〈단 점〉

-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서 직종별, 또는 하위직급 대표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 직종별 및 직급별 간담회와 같이 그룹별로 주제가 집중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통로가 미흡함.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다소 부족함.
- 노동관련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함.
- 기관운영의 파행이 언론보도에 기인하였다고는 하나, 기관장의 언론노출을 자제하는 것은 기관의 홍보 및 전문가 의견을 사회에 제시하는데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서 직종별, 또는 하위직급 대표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직종, 직급, 부서별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동 관련 타 연구기관과의 제휴 등 협력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기관과 공동연구에서 더 나아가 인력교류 등 협력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신중한 판단에 근거하여 기관장 및 기관의 언론노출빈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 경영의 청렴성·투명성을 위한 내부 규정 및 제도,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음.
- 기관 경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상의 여러 사항을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함.
- 비수도권 인재에 대해서도 채용의 기회와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함.
- 감사실장의 겸직을 중단하고 전임 업무자로 임명함으로써 감사업무의 집중도를 높임.
- 연구원도 연구과제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균등한 기회보장이 되도록 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내부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음.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각종 위원회 및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음.
- 표절검색시스템을 도입하여 예방노력을 강화함.

〈단 점〉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규정에 대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중 내·외부 신고시스템의 활성화가 부족하며, 내부 고발자의 보호 장치가 부족함.
- 근무성적평가가 등급화되어 있으나 주관적 판단을 억제할 수 있는 등급별 판단 기준의 제시가 미흡함.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표절검색시스템의 검색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외부에서 참여한 연구진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한 교육이 보다 자주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부패 방지를 위한 내·외부 신고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책을 마련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각종 평가가 평가요소별로 등급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횟수를 늘리기 바람.
- 표절검사결과를 연구자에게 자체적으로 말기는 것보다 표절검사결과와 제재 조치(평가에 반영)를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내부 연구진뿐 아니라 외부 연구진에 대해서도 연구윤리준수를 강조하고 윤리기준 위반 시의 조치사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3년간의 파업 및 장기간의 연구원장 공석으로 인한 비정상적 운영과정을 마감하고, 미래지향적 연구의 강화, 국정과제 관련 연구 및 학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의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함.
- 전체적으로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체계적 연계성이 잘 정리되어 있고, 실천계획이 기관의 당면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음.
- 3대 경영목표와 15대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은 바람직함.
- 각 실천과제별로 실현 기능과 수단이 잘 정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실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두드러짐.
-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제시된 성과목표치를 적절히 달성하였음.
-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대부분 계량적인 지표로 명확히 설정하고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어 성과목표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정도가 양호함.
- ‘연구의 수월성 확보’라는 경영목표를 위하여 연구품질 제고를 통한 국가정책 기여도 제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국제협력 연구강화 및 연구자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연구의 질과 역량강화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함.
- 구성원 간 협력적 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원장과의 대화, 열린 원장실 운영 및 동호회 활성화 등 연구원장과의 소통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구성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매우 바람직함.

〈단 점〉

- 장기간의 파업 및 연구원장 공석으로 인해 연구역량이 저하되고 관계부처와의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단계에 머물게 되어 국가정책연구의 기여도제고를 위한 실천계획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 ‘국제협력 연구 강화와 연구자 교류 확대’ 목표를 위하여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 교류와 개발도상국 자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실천계획의 실현성과 구체성이 미흡함.
- ‘생산적 노사관계 확립’에 치중한 나머지 능률성과급, 누적식 연봉제를 포함하는 성과연계형 인사관리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적극적이지 않음.

- 정부정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부처 정책담당자들과의 정책간담회 및 정책연구협의회 2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수시진행 등의 연계방안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방안으로는 부족함.
- 국제협력연구 및 연구자 교류를 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교육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이 미약하고,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 기관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실천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약함.
- 정책현안 관련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률 70% 활성화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6회, 고용동향포럼 17회, 노사관계포럼 7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못함.
- 신속한 정책현안 대응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연구포럼 구성 및 운영은 바람직하나 언론사를 통한 성과에 대한 정책홍보를 하지 못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정책기여도 제고 및 신속한 정책현안 대응체계 운영 실천계획에 대한 실적으로 동시에 제시됨.
- 고객참여 확대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연구관리에 고객이 참여하는 연구과제 자문위원회 운영이 목표에 미달하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이메일서비스 확대는 시행하였으나 모바일 웹페이지는 예산상의 이유로 미구축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수월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실천계획에 치중하였으나, 연구결과의 정책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계획을 개발하고 이에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중심 평가·보상시스템과 함께 비정규직, 장애인 인력관리에 대한 연구도 실천계획에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계획에서 연구성과의 보급·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의 대표사업 중 하나인 일과 가정의 균형, 퇴직에서 은퇴까지 제2의 근로생애 연구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노사정위원회 등과의 정책연구협의회를 확대하여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참여시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및 달성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가능한 한 계량적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국제협력의 내실화를 위하여 선진국 또는 OECD 수준의 국가들과 국제연구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개발도상국 발전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개발도상국 자문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따른 자문서비스 추진에서 나아가 정례적인 ODA 사업을 확대하여 연구성과를 개발도상국에 확산하는 역할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계획에서 체계적인 행정 및 재무 정보시스템, 홍보 시스템의 도입 및 실시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례적 정책연구포럼이 보다 실질적인 정책현안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고 언론홍보를 병행하여 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배경과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중점추진과제들이 기관의 당면현안과 연계되어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보임.
- 3대 중점추진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선정기준을 추진과제의 필요성 30%, 전략적 중요도 30%, 과제의 효과성 30% 및 실행용이성 10% 등으로 가중치를 명확히 설정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바람직함.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이 구체적인 기준들을 활용하여 타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음.
- 기관이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정책연구와 정부 추진 정책 간에 정합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와의 연구과제 공동개발 체제 강화 및 정책연구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고유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바람직함.

〈단 점〉

- 평가요소별로 구체적인 선정 배경과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며, 선정배경 및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의 제시가 부족함. 또한 각 과제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결과가 부족함.
- 연구운영위원회에서 6대 중점추진과제 선정기준은 명확히 제시되고 있으나 3대 중점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함.
- 3개의 중점추진과제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책이념에 부합되는 미래지향적 연구, 융·복합 연구, 창조경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연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함.

- 중점추진과제가 세부추진과제에서 선정되어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가 다양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요소별로 선정 배경 및 이유에 대한 수치적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과제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대한 계량적 평가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창조경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노동연구와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융·복합적인 노동연구를 다루는 실천계획을 중점추진과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9명의 우수인력이 확보되어 목표가 달성되었으나, 연구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센터, 노동시장분석센터, 고용보험평가센터, 임금직무센터 등의 설립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고객참여 확대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연구과제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자문함으로써 연구기획단계부터 고객이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원장과의 대화, 열린 원장실 운영, 동호회 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및 활동을 바탕으로 성과연동형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 선정과정에 있어서 내부 연구원 및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정책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연구센터 설립 및 타 기관으로 이관된 위탁사업을 복원함.
- 정책과제의 적극적 수행을 통하여 퇴직금 적립률 87.7% 달성, 임금인상률 2.8% 인상 등 재정구조를 안정화함.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구축을 위하여 직제규정 외 53건 규정을 정비함.
- 외부 전문가 외 6개 채널을 통하여 외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노동통계 원자료 공개, 예결산제도 개선 등 12건의 제도를 개선함.
- 정보 공개 및 공유와 관련된 외부 고객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적절하며 실적도 우수함.
 - 각종 노동통계에 대한 원자료 제공,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제공
- ASSA(Allied Social Science Association)에 참가하여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현지 연구원과 면담하고, 국내로 초청하여 Job Seminar 개최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한 실적은 우수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원 홈페이지 내 인재등록란 개설, 연구인력 DB의 지속적 확대 및 상시 채용제도 운영은 우수함.
-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시간선택 근무제 도입 및 연구원 임시사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채용 시 가산점(5%)을 부여함.
- 직종별 채용 자격과 절차, 그리고 심사기준을 차별화한 객관적 채용제도를 구축함.
- ASSA Annual Convention 참가, 정기 및 상시채용 운영 등을 통하여 2013년 석·박사급 연구인력 9명을 채용하고 2014년 박사급 연구인력 4명을 채용할 예정임.

<단 점>

- 제시한 환경변화 이슈는 고유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어느 기관에나 적용 가능하여 내용이 미흡함(특히 기관 정상화를 위한 우수인력 확보 및 재정구조 안정화).
-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조직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의 제시가 미흡함.

- 고유 기능과 연계한 외부 고객요구 사항이 파악되지 않음.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 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이 미흡함.
- 중·장기 및 연도 인력운영계획 수립없이 인력을 운영함.

〈개선 및 권의사항〉

- 조직의 핵심기능, 경영목표, 주요 이슈 등을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의 요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고,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채용절차에서 용모, 예의, 품행에 대한 항목을 외부기관에 의한 인적성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인력 DB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기준과 채용절차에서 실적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심사과정에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는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관 차원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2011년 11월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교육훈련통합시스템에 따라 교육훈련이 대체로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직무역량 강화, Global 역량 강화, 신입직원 OT 및 교양교육, 연수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연구직(부연구위원 이하) 및 비연구직 연수제도(1개월 교육휴가제도로써 2013년 3명 선발 외국기관 연수)는 우수한 사례임.
- 내부 전산망에 ‘개인별 교육이력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자기개발계획서(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 관리를 통한 교육·연수 결과의 환류체계 구축은 우수한 사례임.
- 직군·직무별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직무역량교육 21건, 글로벌 역량교육 9건, 신입직원 직무교육 2건, 직급 또는 전 직원 집합교육 9건 등 총 41건의 교육훈련을 실시함.
- 연구생산성 행사 및 개인역량 개선을 위하여 연구직(부연구위원 이상)은 연구년(1년) 및 방문연수(1개월), 연구직(전문위원 이하) 및 비연구직은 교육휴가(1개월)의 연수제도를 운영함.
- 매년 교육훈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개인별 교육이력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요자와 교육담당자 간의 실시간 점검 및 피드백을 진행함.
- 교육 수료 전·후 교육성과와 업무반영 계획을 연계하여 교육이 조직의 역량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추진함.

〈단 점〉

- 교육훈련프로그램 중 Global 역량 강화는 어학교육뿐임. 고유 기능을 연계한 Global 역량 강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전년도 교육훈련성과에 대한 분석 및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당해 연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미흡함.
- 연수, 특별강연 등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 멘토링에 대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13년 교육훈련비 10,364천원으로 전년대비(12,460천원) 감소하였고, 특히 비연구직 1인당 교육비는 80천원으로 매우 낮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
- 프로그램을 직무교육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직종별로 차별화된 평가요소에 근거하여 연구직을 대상으로 연구실적평가를 시행하고, 비연구직을 대상으로 업무실적평가를 시행함.
-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실적평가와 정성평가를 7:3 비율로 동일하게 반영함.
- 연구직의 연구성과 평가의 비중은 70%로 기준을 충족함.
- 외부 평가위원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연구본부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책임자와 평가위원 간 상호 익명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함.
- 취합된 활동실적을 피평가자-평가부서-부서장의 3단계로 검증하여 공정성을 확보함.
- 평가단 구성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
- 연구보고서 평가의 경우 ‘간행물심의 및 출판규정’에 근거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함.
- 교육훈련, 파견, 휴직, 직위해제, 신규채용 등의 사유로 8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당 연도 근무성적 평가에서 제외됨.
- 성과연봉, 능률성급급, 승진(승진 탈락률 41%), 재임용, 포상, 교육·연수, 연구과제 배정 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인재육성, 역량강화 유인책으로 활용함.

<단 점>

- 연구직 및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지표 및 기준(특히 실적평가의 정량기준)이 불명확함.
- 비연구직의 실적평가를 성과에 근거하지 않고, 상급자와 본인이 지정한 다수의 동료 5:5 비율로 평가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함.
- 논문게재는 해당 건을 점수화하여 연구활동평가 연구실적에만 반영함으로써 논문 실적 제고에는 다소 미흡함.
-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환류 및 이의신청 제도는 구비되어 있으나, 근무 평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시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특별한 제도나 시스템도 부재함.
- 비연구직의 업적평가지표가 정성평가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계량지표의 비율이 매우 미흡함.
- 연구직 연구원 업적평가의 평정방법이 정성평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의 문제가 있음.
- 기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평가가 부서평가, 경영목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비연구직의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 없어 제도화에 문제가 있음.
- 직무수행능력, 직무태도, 기관발전기여도 등 업무성과평정 점수의 평정방법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제량평가의 비중을 높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전사적인 관점에서 팀과 개인 간 성과를 연계하여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화하여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평정방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단체협약 갱신, 임금협약 등 주요 갈등 관리를 원만하게 수행함.
- 주요 노사간 갈등 이슈가 갈등원인, 해결노력, 갈등해결 결과 순으로 명확하게 단계별로 관리되고 있음.
- 고용의 양과 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일자리 공유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노무관리 담당자 교육/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열린 원장실 수시대화(2013년도 754회), 월 1회 경영설명회 등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수시 대화 실적이 우수함.
- 직군간담회, 신입직원과의 대화, 원장과 노동조합의 수시대화(37회), 노사간담회(15회) 등 개별적·집단적 대화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음.
- 2013.5.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과 구 단체협약을 비교할 때 단체협약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경되었음.
- 단체협약 중 특별휴가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함.
- KLI노사관계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하여 기관의 중·장기 발전을 추진함.
- 노무역량강화프로그램을 다양한 내용으로 모범적으로 실시함.
- 총 5회의 노사협의회를 실시함.

〈단 점〉

- 원장과 구성원 간의 대화 채널에 비해 중간관리자와 구성원 간의 대화채널이 미약함.
- 단체협약 제42조 고용안정위원회에 의결기관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음.
- 누적식 성과연봉제는 지속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 구성원의 고충과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간관리자와 구성원 간의 대화 채널 활성화가 필요함.
- 다양한 노무역량강화프로그램을 다른 연구기관과 공유하여 타 기관의 노무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사갈등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의사소통의 통로가 ‘열린 원장실’ 등 원장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이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부조금 규정 등 거의 사문화되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는 1,005백만원이며,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는 647백만원으로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에서 기본연구사업비 1,045백만원,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 320백만원으로 45.9%를 편성하고 있어 연구회에서 제시한 기준 (3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27.9%(280백만원), 2014년 20.1%(210백만원)으로 연구회에서 제시한 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19.4%(220백만원), 2013년 19.9%(200백만원)로 연구회가 제시한 평가기준(10~20% 범위 내)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의 예산대비 집행비율은 86.8%로 양호한 수준임.
- 퇴직금의 적립은 분기별로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균등하게 적립하고 있고, 퇴직 예치금은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 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 8건의 집행에서 전액 위탁연구비로 지급한 과제는 없으나, 외부 위탁 비율이 높은(80% 이상) 과제가 2건 포함되어 있음.
- 자체수입 초과 잉여금 추가 적립 등의 영향으로 2012년(55.4%)과 비교시 적립비율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연도말 추계액 기준의 87.7% 수준의 적립률을 보이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연구사업비 내역 중 외부위탁용역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률이 100%가 되도록 지속적인 추가 노력이 필요함.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7%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364백만원)은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255백만원)을 우선적으로 적립하고 능률성과급 및 이사회 후속조치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2011년부터 능률성과급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여,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함.
- 기본연봉에는 직무급과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0년 호봉제를 폐지한 이후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7.3%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봉의 책정방식이 비누적식으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연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 배분 비율이 없는 상태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을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누적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연봉의 책정방식과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 또한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비간부직의 경우 성과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최저 $\pm 15\%$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에 각각 10%,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함.
- 능률성과급의 경우 2013년 개인 업적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아 연도말에 지급이 되지 않았으며, 향후 업적평가를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임(능률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사협약이 진행 중에 있음).

〈단 점〉

- 간부직의 경우 성과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최저 $\pm 15\%$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pm 33\%$)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간부직에 대한 성과연봉 차등지급률 기준(최고-최저 $\pm 33\%$)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에 관해서는 차년도 평가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년도 실적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3개 국회 지적사항, 1개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됨.
- 그동안 실무진에 국한되어 온 기관평가 대응방식에서 전 직원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한 대응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기관평가가 조직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
- 자체평가단TF 구성을 통해 5개 장치를 통한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만들.
- 당초의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연구사업비 전용이 없음.
- 원내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무진이 업무에 몰입되어 간과하기 쉬운 점을 보완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11회), 정책연구협의회(3회) 등 정책연구네트워크를 강화함.
-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정부부처 수요조사 등 수시연구과제 운영 시스템을 개선함.

〈단 점〉

- 연구기관 평가 지적사항 23개 중 성과연봉제 1개가 완료되지 못함.
- 평가결과 환류체계의 기술에서 평가결과 개선책 추진과 결과에 대한 점검이 미약함.
- 누적식 기본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음.
- 간부직의 경우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을 준수하지 못함.
- 개선실적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를 가짐.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 개선이 기관발전에 기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사항에 대한 부서별, 개인별 담당 운영제나 구체적 점검체계가 미약함.
- 누적식 기본연봉제, 차등지급률 제도, 간부직 성과연봉제 표준지침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실적이 요구됨.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를 연구원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채용 공고, 서류 및 면접전형 시 장애인 우대조치를 명시하고 이행하고 있음.
- 2013년 연구원에 재직 중인 2명의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였으며, 장애인 연평균 고용률 2.5%를 달성함.
- 전년도에 장애인 근무자가 1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에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며,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함.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채용목표 달성, 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 적시이행, 인턴사원 계약직 전환실적(1명)이 있음.
- 청년인턴에 대한 근무평정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인턴상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점은 우수함.
-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 매뉴얼이 실질화되어있지 않으며, 멘토링 양식 미비, 멘토링 기록이 부실하므로, 고충처리의 실질화 및 기록화가 필요함.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 등을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우선고용근거가 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2명 신규고용실적이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비율을 초과달성하고 있음(6.1%).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규정과 단체협약서가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함.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에 있어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계약직직원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계약직원 이상 비정규직 임용 시 정규직과 동일한 평정에 따라 차별 없는 급여와 복리후생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단체협약서에 비정규직 차별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연구원 차원의 구체적인 비정규직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연구원에 비정규직이 소수에 불과하여 비정규직 운영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적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 차원의 비정규직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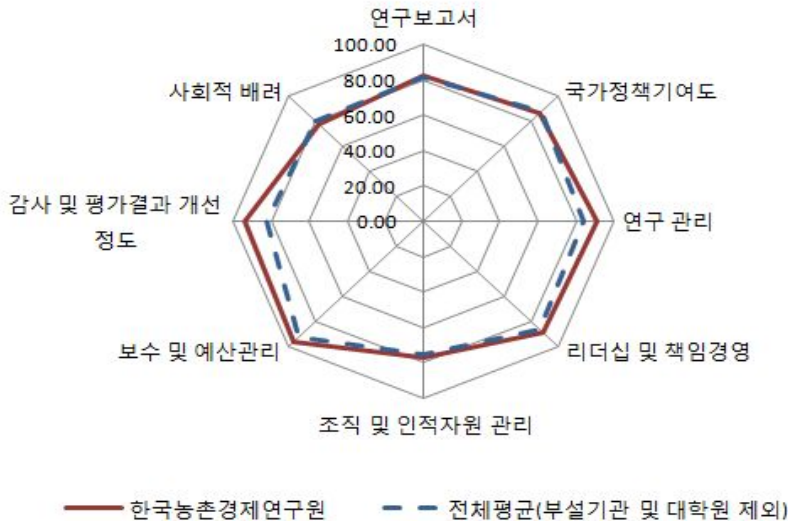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E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B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A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A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A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B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B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A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A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B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A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통계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장·단기적 접근 방식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 농업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 구조 변화와 농산물 교역 구조 변화 전망, 농업에 대한 기후 변화 영향 평가 등 경제적, 사회적 파급영향을 다양하게 분석·연구하였고 상응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
- 농업 관측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정례화하고 품목별 예측력 평가지표 개발, 심층적인 수요 조사, 맞춤형 사업 계획 등의 시스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농촌연구자문단 운영, KREI리포터 운영, 외부 우수제안 포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178개 과제를 광범위하게 발굴한 점이 돋보이나, 과제선정회의에서 외부인사의 참여가 다소 제한적임.
- 협동연구의 추진체계와 제도적 규정과 지침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협동연구의 장려를 위한 협동연구추진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구축되어 있음.
- 해외기관과의 협력이 선진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의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정책의 기여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시너지효과의 기술이 보완되어야 함.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평가위원 풀의 선정과 구성에 있어서 전공·분야·소속기관별 평가위원 구성의 노력이 필요함.
- rankey.com 조사결과 경제연구소 분야 홈페이지 방문객 수 상위 4위로서, 국책연구기관 중에는 1위를 기록한 성과는 우수하나, 연구결과 확산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수단 체계 조정에 대한 노력과 성과는 미흡함.

[경영 분야]

- 기관장의 현안문제 타개와 연구역량 증진, 그리고,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대외활동 실적은 뛰어나나, 해외 선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노력 및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표절방지 노력은 다소 부족함.
- 현안문제의 선정과 대응이 시의성 있게 이루어졌으며, 기관장이 대내·외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 요망됨. 또한 표절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의 적정성은 5대 경영목표와 16대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기관의 경영비전과 연계되도록 연구분야와 경영분야 추진조직과 연계하고, 기관의 규정 및 시스템 등 각종 제도와 연계되도록 설계되었음. 실천계획이 전체적으로 기관의 당면 현안에 대한 타개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천계획과 연계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잘 정리되었음. 실천계획 중에서 미흡한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35개 세부실천과제 중 32개 과제는 성과목표를 100% 초과달성하고 3개 과제만이 목표에 미달하였는데, 목표미달 과제들은 정부방침의 변경이라는 통제불가능한 외부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전반적인 성과달성도는 양호함. 각 성과 목표의 최종달성목표를 감안하면 적절한 계량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좋으나 정성지표가 많이 제시되어 있음. 지방이전 및 연구 인력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우수인력 확보 및 연구역량 제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인센티브가 구체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함.
- 중점추진과제(3개)의 중요성, 추진실적,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경영개선 과제 수요조사 및 원내외 의견수렴, 외부정책관계자 자문, SWOT분석 및 경영목표 수립TF 논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등에 비추어 볼 때 핵심적인 추진과제가 선정되었음. 중점추진과제의 선정배경 및 이유가 타당성 있게 정리되었고,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절차가 타당성이 높게 추진되었으며, 각 중점추진과제의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국제협력 강화’ 과제를 위하여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설치 외에 국제기구 및 선진국 국제교육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연구를 강조하는 과제로 보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전략적 목표관리(MBO) 체계를 통한 경영목표 달성도 점검시스템을 구축·가동하고 있으나,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인력은 연구활동 중심으로 근무평정 및 연구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지원인력은 경영 효율화와 업무성과 위주로 근무평정 및 업무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이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노조가 있으나 지부장이 없는 여건 속에서도 갈등관리가 전 직원을 상대로 충실히 행해지고 있으며 노사간담회도 활성화되어 있고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의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지 않은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예금 등으로 적절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성과연봉과 결산상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인원배분비율에 대한 기준 미준수와 능률성과급 지급 시 재정기여도를 반영하는 문제점이 있음.
- 5단계에 걸친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절차를 통한 개선노력을 수행하였음. 연구기관 평가와 연계된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절차의 구성이 필요하고 개선실적과 개선성과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고용실적이 매우 미흡(0.44%)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청년인턴채용 계획 대비 달성도가 양호하지만, 청년인턴제 운용과 관련하여 청년인턴전용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고충처리제도 운영의 실질화가 요구됨.
- 국가유공자 채용 실적이 양호(5.2%)하지만,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기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에서도 아무런 차별이 없지만, 중·장기인력 운영계획 중 비정규직 운영계획이 충실하지 못하므로 이를 실질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무리한 정량적 분석을 지양하고 선행연구 및 자료 검토, 기존 정책 평가, 핵심 집단 면접, 전문가 델파이조사, 국내 지자체 대상의 사례조사, 선진국 사례 조사 등을 활용하여 대체적으로 논지가 뚜렷하게 나타남.
- 현행 제도상 농촌 노인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에서 농촌의 취약노인에 대한 연구는 정책적으로 시의적절하고 유의하며, 모범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도 효과적임.
-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전문 분석 자료, 통계 자료, 수치 자료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과 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높임.
- 기존 농업협동조합의 역할과 실태를 조사하고, 농업인의 참여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역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논리의 전개가 체계적임.

<단 점>

- 농촌 개발에 관한 통계조사나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나열은 풍부하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진하며, 연구목적과 정책 적용 대상에 대한 심도있는 문제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전략 수립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음.
- 설문조사, 제한적인 국내 지역이나 해외 사례 조사에 대한 의존가 상대적으로 높아 논리적 체계의 균형이 부족하여 정책 방안 제시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일반적인 대안 제시에 그친 경우가 있으며, 각 개별 변수를 선정한 이유 등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시가 미흡하여 자의성이 강한 연구로 저평가될 수 있음.
- 여성 농업인이 중요해지는 사회적 맥락, 문화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여성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제약사항들을 고려한 학제적 연구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제언에서 장단기적 접근 방식에 따라 보다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이 요구됨.
-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 측면에 있어서 연구개시 시점에서부터 연구 결과의 수요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목표 지향적인 고려가 필요함.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변수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2013년 국정과제 관련 연구과제 수행실적에 기초하여 국정과제 수행체계, 인력 및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서술하고 있음.
- 국정과제 관련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여 42개 기본연구과제 중 39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전체 42개 과제 중 39개 과제(93%), 총 5,406백만원의 사업비 중 5,333백만원(98%), 총 연구인원 76명 중 68명(90%)이 국정과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국정과제 관련 연구과제의 적정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단 점〉

- 국정과제 관련 연구과제 수행에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써 농정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과제 발굴 노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
- 국정과제 관련 연구과제에 인력과 예산을 지나치게 배분함으로써 오히려 농촌경제의 근본 문제를 다루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개별 연구과제 건당 연구금액이 타 연구기관 대비 대단히 큰 바 소액 수시연구과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연구수행체계에 대한 5개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후 국정과제 관련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인력의 구성, 연구예산 규모 증감, 국정과제 연구 수행예산 비중 변화, 연구조직 체계 개편 등 자원배분 적정성 측면에서 과거와의 차이점,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농림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가소득증대 등 정부 현안과제에 폭넓게 대응하였음.
- 유통구조 개선 관련 관측센터가 전방위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한·중 FTA 협상팀과의 협업이 원활하였음. 특히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과 실적, 그리고 성과 등이 높게 평가됨.
- 새 정부 농정방향 수립, 농림축산업 신성장 동력화 등 새 정부의 농정정책 토대를 마련하는 선제적 대응 노력이 돋보임.
- 각종 협의체, 포럼 등을 통해 정부현안과제 발굴 및 피드백이 적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정부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단 점〉

- 농림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가 부족함.
- 선제적으로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정부의 현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부족함.
- 정부부처에서 미리 생각하지 못한 주제와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부처와의 협력과는 별도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정책대안들이 국정 과제 연구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함.
-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새 정부 5개년 정책 로드맵 속에서 정책과제 선정,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 연구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별도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특성 및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연구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내·외 농업유관기관과 학회,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긴밀한 정책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 유관 정부부처 중 농림축산식품부와와의 협력 및 교류는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이루어짐. 특히 조직화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짐.
-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화할 수 있는 포럼 등의 형성을 통해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음.

〈단 점〉

- 기관이 제시한 과거 선행연구와 후속 연구, 정책협의 등 일련의 과정 및 과거 대비 최근 운영실적과 성과 제시 실적은 정책 기여도와 연계성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권의사항〉

-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다양한 자문회의,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이 산발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면서 집약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종 토론회, 포럼, 현장 설문조사 등을 개최하는 것과 별도로 연구기관이 선제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하거나 또는 정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일련의 가시적 성과를 해당사업 예산 지출규모 대비 성과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나주 이전에 대비한 대국회, 대정부 소통 및 확산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국정과제와 관련된 정책대안임을 명시하고, 정책대안 내용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연구회 등을 통하여 대안의 정책화 과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
- 농어촌복지포럼, 토론회, 국회 농어촌발전포럼 정책세미나 등의 주제발표, 토론 등을 통하여 대안의 의제화에 기여함.

〈단 점〉

- 제시된 정책대안의 일부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유사하거나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증액에 불과하여 창의성이 부족함.

- 공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간담회, 협의회, 포럼, 자료집, 보고서 작성, 계획서 작성, 제도개선, 기구설치, 법률안 개정, 정책개발 등의 일련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고, 또한 정책화에 기여하였는지 정도를 구분하여 제시하는데 미흡함.

〈개선 및 권의사항〉

- 과거 국정연구과제와 현재 국정연구과제를 비교하여 선행 연구과제와의 차별적인 점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정책대안 내용의 독창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정책대안 도출에 있어 기존 정책 및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선도과제 발굴노력과 선정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연구주제 선정 배경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농정포커스 발간, 논문발표, 국제심포지엄 발표 등을 통하여 정책의 실현을 도모함.
- 본 과제 완료 후 후속 및 관련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서술함.
- 기존의 가격경쟁력 및 비교우위지표에 근거한 양허전략 수립방식에서 탈피하여 양국 농업구조 변화 전망,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등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 참신한 대안을 제시함.
-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통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는 관련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단 점〉

- 선행 연구과제 또는 타 연구기관의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이 부각되지 못함.
- 기존 FTA관련 선행연구와 대비하여 한·중 FTA의 연구성과 및 기여도 측면이 부각되지 못함.
-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의 중·장기적인 영향과 이에 따른 대책을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의 중·장기적인 영향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정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례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관련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과 새로운 정책실현 과정을 소개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의 선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농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장 점〉

- 정부부처, 학계, 농민, 소비자 등과의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정부 소관부처, 학계, 품목 전문가, 산업피해 농업인 단체 등을 참여시켜 정책 집행 과정에 환류효과를 최대화하고 있음.
-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 계획 및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

〈단 점〉

- 농업관측사업 예산 및 인력운영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농업관측사업의 비용·편익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부족하고, 농업관측사업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함.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의 경우 농업인 상담 안내를 위한 콜센터 운영 등은 다분히 형식적이며 실효성이 없음. 또한 농어민교육의 경우 정부 정책안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농업관측에 대한 연구방법, 성과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개적인 연구회를 정례화함으로써 농업관측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농업관측시스템 내에 품목별 예측력 개선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농업관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농업관측사업 정보 수요층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수요자 맞춤형 사업계획,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함.
- 농업관측사업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장기적으로 예측력이 낮은 품목에 대해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의 경우 산업피해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피해보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함. 상세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탁연구는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오른 반면, 기본연구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도보다 낮아짐. 상세업무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수탁연구, 기본연구 순임.
-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정부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모든 상세업무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으며, 전체평균 대비 기본연구의 점수 차이가 다른 상세업무들에 비해 더 큼.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차원별로는 전반적 만족, 내용품질, 과정품질, 미시적 성과 등에서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낮아졌고, 품질요소 중에는 전문성, 편리성, 공정성, 공익성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 모두 점수가 낮아짐.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차원별로는 환경품질을 제외한 차원 모두 전체평균에 비해 낮고, 품질요소 중에는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품질요소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의 정확한 이해’ 항목의 점수는 높고, ‘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담당자 접촉 용이’ 항목의 점수는 높고, ‘고객 요구사항 수집·반영절차 구비’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 의견을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확인 및 정비, 고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노력,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수립, 변화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는 노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함. 상세업무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탁연구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오른 반면, 기본연구와 수탁연구는 낮아짐. 특히 수탁연구의 하락폭이 기본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큼. 상세업무 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위탁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수탁연구, 기본연구 순임.
-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모든 상세업무별 만족도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으며, 전체평균 대비 기본연구의 점수 차이가 다른 상세업무들에 비해 더 큼.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고, 품질요소 중에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 모두 점수가 낮아짐.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모든 차원의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고 품질요소 중에는 편리성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 모두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회의 진행 시 참석자 의견 경청,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 노력’ 항목의 점수는 높고, ‘해당 분야의 최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 제공’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정확히 이해’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 관련 정보제공과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위탁연구에서는 ‘고객 문의와 요구사항에 친절히 응대’ 항목의 점수는 높고,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의 편리함’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결과의 체계적 작성 노력, 연구 수행 일정 준수 노력,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농촌연구자문단 운영, 외부 우수제안 포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178개 과제를 광범위하게 발굴한 점이 돋보임.
- 농촌연구자문단, KREI리포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우수제안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한국학술정보(KISS)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주제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검토하는 등 발굴과제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과제 선정에서 의사결정권한을 지닌 연구기획조정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결합시키고 있음.
- 과제의 중복성 여부를 연구기관 차원에서 엄밀히 검토하고 있음.

〈단 점〉

- 과제는 매우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나, 과제선정회의에서 외부인사의 참여가 제한적임.
- 연구기획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들의 선정 기준,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다년도 시행되는 일반연구과제의 경우, 마지막 해가 아닌 연도는 연구기간을 12월 3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현재는 10월 31일).
-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과제선정회의 시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탈락된 과제의 미선정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획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들의 선정 기준,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한 기관들의 목록을 작성한 후 이 기관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수시연구과제를 ‘적시적, 효과적 정책현안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정책현안연구’로 규정하고 전략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 과제발굴을 위한 외부 네트워크가 잘 조직되어 있음.
- 과제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제발간 지연 시 10% 감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제관리체계를 강화함.
- 수시과제 수행을 점검할 수 있는 연구세미나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음.

〈단 점〉

- 과제선정회의에서 탈락된 과제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함.
- 수시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심의는 서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종료된 수시연구과제는 홈페이지에 등록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중간보고서 평가단계가 없어 연구진행 중에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과제의 발굴 및 선정위원회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부처의 담당공무원의 참여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도 직접 참여하여 집중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Proposal Seminar와 심의 방식으로 운영).
- 수시연구과제의 심의 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함으로써 과제 선정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진도관리 및 보고서 질 관리 차원에서 과제수행 중간단계에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함.
- 수시연구과제의 중간보고서 평가 절차를 수립하여 연구결과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의 추진체계, 제도적 규정과 지침이 잘 마련되어 있음.
- 협동연구의 장려를 위한 협동연구추진 가이드라인 등 인센티브 제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협동연구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학술대회 개최, 국내·외 기관과의 연구협력서 체결 등의 노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음.
- 협동연구 과제의 대부분에 있어서 필요성, 상호협력관계 및 역할분담을 잘 기술하고 있음.
- 특히 협동연구기관별 역할분담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 점>

- 해외 MOU 체결 등이 선진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음.
- 협동연구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도 등의 제시가 미흡함.
- 제시된 5개 과제의 경우 시너지효과가 높은 협동연구인 것으로 판단되나, 정책의 기여효과 등의 구체적 시너지효과의 기술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해외기관과의 협력이 선진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의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의 구체적 시너지효과 및 참여 연구자들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도 등의 제시가 필요함.
- 정책의 기여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시너지효과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체계의 규정과 운용이 적정함.

- 연구단계별(설계세미나, 중간검토세미나, 중간평가, 결과세미나, 보고서 정밀검토, 원내·외 품질평가 및 발간심사)로 구체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하도록 함.
- 고유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등 연구사업별로 차별화된 세부평가기준을 구축하고 있음.
- 평가단계별 평가기준의 배점기준이 과제특성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음.
- 외부 평가자 풀(Pool)을 구성함에 있어 자체 전문가 풀(Pool)뿐만 아니라 우수논문 게재자를 선별하여 풀(Pool)을 구성하는 등 평가위원의 구성을 선진화하고자 노력하였음.
- 외부 평가자가 전체평가위원의 70%에 달하는 등 평가위원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각 전공별 다양한 평가위원의 선정실적이 제시되어 있음.

〈단 점〉

- 외부평가자 풀(Pool)의 소속기관별, 전공별 분포 현황에 관한 내용이 미흡함.
-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함에 있어서 비농업분야의 전문가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 평가자 풀(Pool)이 소속별, 전공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 평가위원 풀(Pool) 중 비농업분야의 전문가가 보완되어야 함.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간행물발간규칙’에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2013년에 개인정보보호솔루션 등 보안시스템을 개선·구축함.
- 지식재산 보호규정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갖추고 있음.
-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제시한 점은 긍정적임.
-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함.
- 온라인 성과확산 촉진을 위해 지식정보팀을 분리하고, 고객관리업무를 배부 업무와 통합하여 운영함.
- 2015년 연구원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에 대비하여 전라남도, 목포대학교, 영남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함.
- 경제연구소 분야 홈페이지 방문객 수 상위 4위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는 1위를 기록함(조사기관 : rankey.com, 2013.12.31.).

- 3대 홍보 실천목표와 9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성과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임.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이전에 대비하여 해당 지역의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해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 점은 긍정적임.
- 홈페이지 방문객 수 상위 4위와 정부출연연구기관 1위에 랭크되는 등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인 점은 장점임.
- 성과확산을 위한 내부 조직을 유기적으로 잘 연계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 성과확산 추진을 위해 지식정보팀을 분리하는 등 상황에 맞추어 조직의 변화를 꾀한 점은 긍정적임.
- 성과확산 노력의 결과로서 전년대비 방송 보도실적 159%, 일간지 보도실적 111%, 총 보도실적 116%가 증가함.
- 간행물 형태에 따른 고정배부처 분류를 세분화하고 수요자조사를 통해 맞춤형 배부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 2,000여명이 참가하는 농업전망발표대회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연구결과 요약 및 목록을 배포함.
- 간행물 형태에 따라 고정 배부처의 분류를 세분화하여 수요자 조사를 통해 맞춤형 배부체계를 구축함.
- 통합고객관리시스템(CRM)을 통해 고객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개인별 수령 희망 발간물을 등록하는 등 배포 관리에 노력을 기울임.

〈단 점〉

- 지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 자체평가 시스템, 성과지표 등의 체계가 미흡함.
- 연구성과 홍보·확산계획이 단기적이어서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의 제시가 미흡함.
- 홍보·확산 계획에 성과지표와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홍보·확산 실적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에 대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정량적인 측면의 성과에 치중하고 있으며 홍보의 효과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연구성과물 배포 실적만 있고, 배포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효과적인 배포를 수정·조정한 성과는 없음.
- 연구성과물을 일반인 등 비전문가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연구성과의 해외확산을 위해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전략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축된 시스템도 환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를 제외한 별도 시스템 확충을 위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당해연도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둔 성과지표와 단기 목표치의 제시가 필요함.
-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연구원에 가장 효과적인 확산 수단을 선택하여 확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함.
- 확산 수단별로 실적을 계량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물 위주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채널별 효과분석을 통해 파급력이 큰 홍보매체에 선택과 집중하는 노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보고서 배포관리와 관련하여 활용도와 효과성이 낮은 배포를 취소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에는 연구성과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가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배포한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그 구체성이 떨어짐. 즉 어떻게 수요자를 선별하며 차별화된 맞춤형 배포를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물 홍보와 성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성과지표를 구축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연구물의 표절 관련 검증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49편(95.67건/64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현안과제 선정 사유 및 시의성이 잘 정리되었음.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한·중 FTA에 대한 포럼을 운영하고 원장이 참여하는 등 정책현안에 대비하는 적극성을 보임.
- 청사지방이전 설명회 개최, 유연근무제 확대 등 현안에 따른 구성원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함.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단계별 전략이 잘 정리되었고, 이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임.
- 해외 리쿠르팅 제도를 신설하여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
- 연구자 우수논문 발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연구의 동기부여를 강화함.

〈단 점〉

- 첫번째 현안문제로 선정된 ‘농업정책 현안 대응’은 너무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체성이 부족함.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함.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음.
- 클라우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였으나, 유연근무제의 시행방법, 컴퓨터를 통한 외부에서의 근무가능여건 구축 등 시행을 위한 세밀한 방안 수립이 미흡함.
- 연구원 개인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 또는 인센티브 제공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 및 새로운 과제의 내용이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안문제의 선정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 타당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제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을 사용하기 바람.
- 유연근무제의 개념을 기관이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 명확히 하고, 세부운영규정 또는 지침이나 매뉴얼을 구비하여 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클라우드시스템의 활용을 증대시키면서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및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 개인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책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 사회적 이슈를 먼저 정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융·복합 및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 및 새로운 과제의 근거 제시가 필요함.
- 협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나, 그 활동들이 구체적인 융·복합연구과제의 발굴 및 수행으로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열린 경영 및 경영 정보 공개 등 구성원들을 경영 혁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돋보임.
-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소통 활동이 뛰어남.
- 간담회, 워크숍, 온라인 활용 등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통로를 운영하였음.
- 온라인의 열린 원장실이 직원 의견을 파악할 뿐 아니라 경영현안에 대한 추진 상황과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쌍방향으로 운영되었음.
- 국가정책 참여와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이 뛰어남.
-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와 협력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뛰어나며, 국내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연구협력을 강화함.
- 기관 발전과 홍보를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이 뛰어남.
- 주요 정책현안을 위한 포럼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책대안 제시능력을 향상 시킴.

〈단 점〉

- 열린 경영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끌어내기에는 다소 부족함.
-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 직급별 간담회가 미흡하여 연구원이나 부연구원 등 계층상 중·하위직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통로가 미흡함.
- 농민 단체 등 농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네트워크 확보 및 협력 추진 노력이 다소 부족함.
- 해외기관과의 협력이 지속적 관계 구축보다 공동심포지엄과 같은 단기성 협력 중심임.
- 전문적 분야의 언론 외에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의 활용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구성원들의 상향식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비공식 간담회보다 제도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직종별 또는 직급별 대표를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간담회가 의견수렴의 중요한 통로인 바, 부서별 및 직급별 간담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민 단체 등 농업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네트워크 확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신문이나 방송 등에 있어서 주요 매체에 대한 기관장 및 기관 활동의 긍정적 노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 규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내부 감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내부 감사가 잘 실시되고 있음.
- 법무정보를 공개하여 법무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음.

-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함.
- 연구윤리 규정이 내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음.
- 연구윤리 확보 및 준수를 위한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 원내 게시판을 통하여 연구윤리동향을 공지함으로써 전 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단 점〉

- 법인 카드의 적법 사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다소 부족함.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부패 방지를 위한 여러 신고 제도들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이 있음.
-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미흡함.
- 연구윤리준수 여부가 자가 진단에 의존하며, 연구윤리 점검을 위한 시스템은 다소 부족함.
- 표절검색시스템(Copy Killer)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음.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부패 방지를 위한 내·외부 신고 제도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상제도를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채용 및 성과평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자 구성 및 평가방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표절 방지를 위해 표절검색시스템(Copy Killer)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표절검사결과를 연구자에게 자체적으로 말기는 것보다 표절 검사 결과와 제재 조치(평가에 반영)를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내부 운영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위반 시 조치에 내·외부 연구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점검 및 정비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5개의 경영목표가 기관의 취지와 설립 목적, 그리고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실천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나주 이전 당면과제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짐.
- 기관의 5대 경영목표와 16대 경영목표 실천계획은 기관의 경영비전과 연계되도록 연구 분야 및 경영분야 추진조직과 연계하고, 기관의 규정 및 시스템 등 각종 제도와 연계되도록 설계되었음.
- 실천계획이 전체적으로 기관의 당면현안에 대한 타개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천 계획과 연계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잘 정리 되었음.
- 기관의 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컨설팅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분석을 농정환경, 고객환경, 연구환경 및 경영환경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환경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분석이 되도록 하였음.
-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35개 세부실천과제 중 32개 과제는 성과목표를 100% 초과달성하고 3개 과제만이 목표에 미달하였는데, 목표미달 과제들은 정부방침의 변경이라는 통제불가능한 외부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전반적인 성과달성도는 양호함.
- ‘창조경제, 6차산업 선도정책 이슈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조경제, 6차산업 관련 연구, 농정선도 전략과제, 신성장동력 연구, 타 분야 연구원과의 공동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함.
- 창조경제, 6차산업 관련 연구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연구 자문단, 외부관계자, 언론 등을 통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려는 목표는 적절함.
- 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환경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고 긍정적인.
- 모니터링 활동이 체계적이고 대규모이며,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운용됨.
- 정책파트너와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전문가를 채용하였으며, 정책워크숍을 통해 정책평가과제를 다수 발굴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기초과제 주요평가항목은 학술적 기여도를 중시(35%)하고 정책과제의 경우는 정책활용가능성을 중시(50%)하도록 하고, 박사급 연구자 중 89%가 국정과제 연구 수행을 함으로써 국정과제 수행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한 것은 바람직한 추진실적임.

〈단 점〉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에 대한 실천계획이 중국에 치중되어 있음.
- 경영의 내실화, 지식경영이라는 중점과제의 실천계획으로 사회공헌 활동, 열린 원장실 등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으로는 미흡한 내용이고, 해당 계획들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함.
- 각 실천계획의 구체적인 추진조직과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각 성과 목표의 최종달성목표를 감안하면 적절한 계량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좋으나 정성지표가 많이 제시되어 있음.
-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우수인력 확보 및 연구역량 제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 2013년 5월 말에 기관장이 취임하고 취임이후 경영목표 수립 및 중점추진과제 선정을 하게 되어 추진과제들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국정과제 추진전략 연구확대 및 과제선정방식 개선,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연간 개선 세부실행과제는 국정과제 정책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현황조사, 위원회 논의 및 현황점검 등이 추진실적이어서 그 중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달성으로는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로부터 실천계획이 도출되는 논리적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고, 세부추진 과제들에 대한 연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에 대한 실천계획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다변화를 위한 계획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영의 내실화, 지식경영이라는 중점과제의 실천계획으로는 본 기관의 행정 및 재무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함.
- 각 실천계획의 구체적인 추진조직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실천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목표 및 달성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가능한 한 계량적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미래지향적, 융·복합적,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연구에 대한 성과목표치의 설정근거가 모호하여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계량화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이전에 따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안식년가 및 해외연수 기회확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외부와의 공동연구 등 인센티브가 구체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세부추진과제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동시에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경영개선 과제 수요조사 및 원내·외 의견수렴, 외부정책관계자 자문, SWOT분석 및 경영목표 수립TF 논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등에 비추어 볼 때 핵심적인 추진과제가 선정되었음.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배경 및 이유, 선정절차에 타당성이 있고, 각 중점추진과제의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이 높음.
- 실용적 미래지향적 농정방향 선도 경영목표에서 2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정책지원기능과 창조경제 및 6차 산업을 선도하고 정책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관운영이 합리적임.
- 농업분야 창조경제 6차산업 관련 협업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조직(TF)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현장토론회 및 현장투어를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사례분석내용을 관련부처에 제공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단 점〉

-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제의 전략적 중요성 및 시의적절성, 경영목표와의 연계성 등 선정기준 및 가중치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평가요소별로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다소 부족함.
- 연구 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추진력 저하를 포함한 내부 연구역량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추진과제 선정에 있어서 전략적 중요성 및 시의성, 파급효과와 기여도 등 선정기준을 계량화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중요성이 높은 중점추진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평가요소 별로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 강화’ 과제를 위하여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기구 및 선진국 국제교육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연구를 강조하는 과제로 보완하는 것이 더 적합함.
- 정책 지원시스템 개편과제에서 실천계획 중에서 미흡하였던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시스템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농업 관련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고유 기능과 연계한 환경변화 이슈 도출이 매우 적절하며, 조직 운영 실적도 우수함.
 - 농업·농촌 개발협력(ODA) 지속 확대 및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의 필요성 제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수행 증대 필요 등
- 경영혁신TF, 정부3.0 추진TF 등을 통하여 경영목표 추진계획 수립 및 정보공개 서비스를 강화함.
- 연구과제의 국정과제 연관성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해외 리쿠르팅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경륜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을 명예연구위원으로 임용함.
- 청사 이전 관련 조직 운영 노력도 타 기관 대비 우수함.
 - 청사이전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7.3)하여, 청사이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이주직원 조기정착 지원과 근무환경 제공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함.
- 내·외부 고객요구에 부응한 제도개선 및 운영 실적이 매우 우수함.
 - 연구과제의 국정과제 기여 강화, GWP(Good Work Place) 만들기 운동 등
 - “KREI 리포터” 운영 등 상시 여론 수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함.
- 전략적 목표관리(MBO) 체계를 통한 경영목표 달성도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함.
- 지방이전에 따른 물리적 환경변화와 인력구성원의 세대교체기 도래에 따른 우수 인력 확보 및 안정적 세대교체를 위한 수급체계를 운영함.
- 해외 리쿠르팅 제도 도입, 상시채용 제도 마련, 초청연구원 제도 개편, 채용 심사 기준 개선, 외부 심사위원 초빙, 명예연구위원 제도 등 우수인력 채용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적 우수자 2호봉 추가 및 부연구위원 임용 시 6호봉 가산함.
- 기관 이전에 따른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하여 박사급 연구원의 초임을 높이고, 승진 보상액을 확대하고, 근로계약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늘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부연구위원(박사급) 신규임용 초임연봉 산정 시, 현행 3호봉 가산에서 6호봉 가산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작년도에는 해당자가 없음.

〈단 점〉

-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조직 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의 제시가 미흡함.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 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경영목표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의 제시가 미흡하여 목표 달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음.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미흡함.
- 중·장기 및 연도 인력운영계획 수립 없이 인력 운영함.
- 석사급 초청연구원 제도는 비정규직으로서 또 다른 비정규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인력수급분석을 통한 2013년도 인력수급계획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고유기능과 연계한 외부 고객 정의 및 분류가 필요함.
- 조직 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발전방향, 제안사항 등의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당해 연도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인력수급계획의 작성 노력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한 창조적 업무역량 제고를 목표로 2013년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함.
- 신입 원장 3년 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역량을 갖춘 KREI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2014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함.
- 직급 및 직종별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함.
- 연구인력은 직무 및 어학, 엑셀합수 및 데이터, STATA, AHP, 연구윤리, 멘토링 등 11종류의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인력은 직무 및 위탁, 한글, 글쓰기, 스마트워크 등 5종류의 교육을 시행함.
-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설 전에 참여희망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함.
- 교육·연수 희망 과목 선정, 적정 교육시기 설정, 우수 강사 추천 등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여 자발적 교육 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 교육훈련비 집행내역에 대한 분석은 적절함.

〈단 점〉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부재, 연도 계획은 있으나 전년도(2012년) 성과에 대한 분석(만족도 조사만 실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이 부실함.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나주시 이전대상 기관임에도 사기진작책이 미흡함.
- 유연근무제 시행 및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은 역량강화 제도로 볼 수 없음.
- 직종/직급별 교육과정 자료가 없음.
- 교육훈련 결과 공유시스템이 없음.
- 교육훈련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부족함.
- 연수, 특별강연 등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연구인력은 연구활동 중심으로 근무평정 및 연구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지원인력은 경영 효율화와 업무성과 위주로 근무평정 및 업무실적 평가를 실시함.
- 연구과제는 실제 참여정도를 기준으로 기여율을 산정하고, 연구논문은 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기준으로 배점을 정하고, 원내·외 연구활동은 항목별 기준배점 및 한도를 부여함.
- 연구직의 연구성과 비중은 75.7%임.
- 연구논문 등급별 게재 점수를 계약연봉 산출 종합점수에 반영하고, 학술진흥활동의 활성화 목적으로 연구논문의 기준 배점을 상향 조정함.
- 고유 연구평가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세분하고, 연구윤리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최종평가에 5% 반영하고, 평가의 환류체계 명료화를 규정화함.
- 연구진이 직접 참여하여 과제별 기여율을 산정하고, 원외 평가위원을 70%로 구성하고 외부 평가위원 선정 시 전공 적합성을 고려하며, 자연·학연 및 과제 연관성을 원천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함.
- 지식경영 포털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평가등급, 평가지표별 개인점수, 해당 평가그룹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공개함.
- 평가그룹에 따른 농업관측센터 평가협의회 운영으로 공정성 및 합리성 요구를 반영함.
- 평가결과를 보수 차등 및 인사, 교육·훈련, 연구과제 등에 활용하여 성과제고 및 개인 역량 배양, 인재육성 유인책으로 활용함.
-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제도를 통하여 평가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함(보고서 1건, 평가등급 2건).
- 평가결과를 계약연봉 및 능력성과급 차등지급, 승진심의에 엄격하게 활용함.
-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항목별 승진기준 충족 직원에 한하여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2/3 이상 적격 판정 추천자를 대상으로 원장이 최종 승진자를 결정함.

〈단 점〉

- 논문게재는 해당 건을 점수화하여 연구활동평가 연구실적에만 반영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이 다소 미흡함.

- 평가결과의 환류제도 자료는 평가결과의 금전적, 비금전적 활용 여부 및 실적과 완전히 중복되며, 평가 시행 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특별한 제도는 없음.
- 승진대상 기준이 불명확함(최근 3년~4년 평가결과 종합점수 포함 3개 항목 이상 일정수준 충족).
- 비연구직의 평가지표 계량화의 노력이 미흡함.
- 업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이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의견수렴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의 구축이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비연구직 평가지표의 계량화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업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이 공식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체계적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여 인사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노조가 있으나(노조 가입비율 26%) 노조지부장 지원자가 없어 노조지부장이 선출되지 않은 여건 속에서, 갈등관리가 전 직원을 상대로 충실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 기간제 초청연구원의 고용 안정에 대하여 직급별 직원간담회와 노무법인 자문결과 등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함.
- 노조가 있으나 노조지부장이 없는 관계로 전 직원과 노조를 상대로 한 의견수렴 실적이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외에도 29건으로 활발함.
- 노사협의회가 연 4회 열렸으며, 노사간담회도 14회로 활성화되어 있음.
- 원장과 부서별 수시 대화창구 운영실적이 21회로 우수함.
- 원장과 부서별 대화 창구로써, 직원 5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로 온·오프라인으로 원장과 대화신청을 하여 식사, 호프데이, 공연관람, 등산, 체육활동을 같이 하는 상향식 소통프로그램을 만들어 하향식 원장과의 대화와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단체협약 제12조는 조합 관련 외부인이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이용 및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여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확보함.
- 단체협약 제59조 연차휴가 규정은 합리적임.
- 갈등이슈에 대한 입장차이, 이해관계에 기초한 갈등관리는 관리역량측면에서 장점을 가짐.
-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원장의 수시대화운영 및 각종 의견수렴은 기관의 장점임.
- 중요한 기관의제에 대하여는 직원설명회와 전 직원투표를 통한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의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음.

〈단 점〉

- 고충처리 실적이 다소 미흡함.
- 갈등이슈가 1건으로 갈등이슈의 발굴이 미흡함.
- 2회의 노무관리담당자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교육 내용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상향식, 하향식 소통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정례화되고 조직화된 고충처리가 필요함.
-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사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노동조합 조합원 이외 구성원의 하의상달 통로를 제도화하여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제안제도,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종합하여 전체구성원의 하의상달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연구사업비의 편성에 있어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는 1,555백만원이며, 정부 제안 연구과제 사업비는 685백만원으로 44.4%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하며 2014년에도 36.6%로 편성되어 있어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19.9%(310백만원), 2014년 5.2%(86백만원)으로 연구회에서 제시한 평가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3년 12.8%(200백만원)로 연구회 제시 평가기준(10~20% 범위 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12.0%로 편성되어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과제의 집행비율은 98%로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과제별 집행에서 전액 위탁연구비로 지급한 과제는 없으며 예산 항목별로 적정한 통제를 거쳐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운영 자금과 구분된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별도의 계좌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각 사업별로 적정하게 분기별로 적립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7%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1,562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표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적정함.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3.2%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에 대하여 전년도 평가결과가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 연봉제를 적용·실시하고 있으며, 등급별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pm 1\%$ 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 최저등급이 약 8%로 평가기준(10% 이상)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에 대한 인원배분 시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하게 인원배분비율을 준수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33\%$, 비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15\%$ 차등지급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성과연봉을 지급할 때,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좌우대칭의 분포가 되도록 인원을 배분하였으므로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함.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산정 및 지급 시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 있어 최고-최저 각 10%,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 최저등급을 8%로 배분하여 평가기준(10% 이상)을 준수하지 못함.
- 능률성과급 지급 시 일부분의 재원을 재정기여도와 공헌도에 따라 지급하였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기준에 맞게 최저등급에 대한 인원배분비율을 준수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지급 시 재정기여도와 공헌도에 따라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제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임.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1개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고,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실적이 모두 완료됨.
- 전 직원 의견수렴 설문조사, 경영목표수립 TF, 경영혁신 TF, 외부자문단이 포함된 5단계에 걸친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절차를 운영함.
- 개선실적 이행과 모니터링에 있어 TF 외에도 원장의 적극적인 개선실적 독려가 있음.
- 직원 추가검진비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함.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모든 연구직원이 1회 이상 윤리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음.
- 보안 솔루션 도입 등으로 정보보안 교육과 시스템 보완이 실질적으로 이행됨.

〈단 점〉

- 수탁연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결과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 장애인 신규 채용실적이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은 지적사항 개선을 완료하지 못함.
- 개선실적의 기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를 지님.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 개선이 기관발전에 기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수탁연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평가결과 개선체계의 구성에 있어 개선결과가 다음연도의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 평가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우대조항, 가산점부여 등의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장애인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당해 연도 장애인 고용실적이 전무하며, 장애인 고용실적이 매우 미흡(0.44%)함.
- 장애인 고용률이 최하위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기관차원의 특단의 노력(대책회의, 계획수립, 관련 단체 방문 등)이 필요함. 중·장기인력 운영계획에 장애인, 청년인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계획을 포함시키고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채용 계획 대비 달성도, 청년인턴 퇴직 시 적시 충원, 청년인턴의 계약직 전환 실적이 양호함(6명 전환).

- 인턴직원 운영 계획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인턴 근무관리 대부분의 영역에서 양호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오리엔테이션, 근무평정, 취업활동 지원, 맞춤형교육, 고충해결 등 분야), 향후 청년인턴전용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고충처리 담당관 및 고충처리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 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 등을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한 기본조치(공고문 표시, 가산점 부여 등)와 특례조항이 있으며, 2013년 1명을 고용하였음.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5.2%)은 평가기준(6%)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장의 관심표명, 대책회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기관 방문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가 원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를 원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사항을 담은 단체협약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 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부재한 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운영규칙)의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중·장기인력계획이 존재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에서도 차별이 없음.
- 연구원 차원의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 중 비정규직 운영계획이 충실하지 못함.
- 중·장기인력계획 중 비정규직 운영분야가 다소 모호하여, 이를 실질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14

한국법제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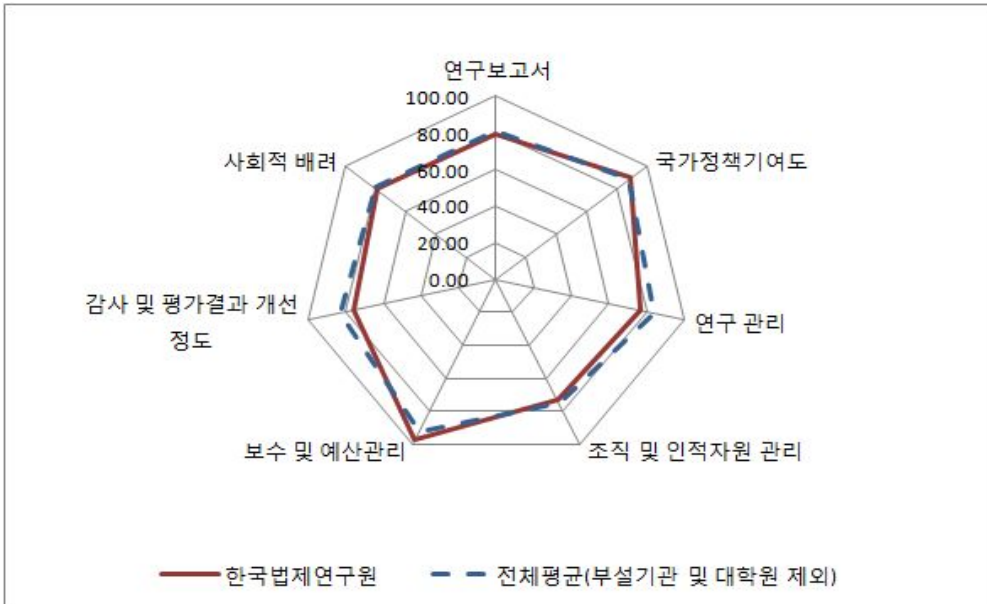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F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C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C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 | | | |
| | | |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D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B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D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A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시의성있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법치행정과 거버넌스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책 대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모든 정부부처와 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연구, 수탁연구, 정책 자문, 인력 교류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활용함.
- 반면에 여러 정부부처로부터 지나치게 다양한 수시과제를 요청받고 있어 수용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기본연구의 경우에는 매우 협소한 분야를 대상으로 과다한 수의 과제를 수행함.
- KSA/ISO 품질절차서에 따라 타당성을 확인하고 과제를 선정하는 등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중·장기 전략연구과제 발굴 노력이 다소 부족함.
- 협동연구 추진체계의 관련 규정과 협동연구 발굴 및 수행을 위한 지침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단계별 평가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연구단계별(착수, 중간, 최종심사 등) 평가의

활용성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의신청제도 및 전공·분야·소속기관별 평가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 타 기관의 보고서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함.

- 연구원의 타깃에 적합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신자 DB를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나,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계획 수립이 피상적이며, 전년 대비 홍보의 향상도나 목표 대비 달성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

[경영 분야]

- 재정수반법령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국가입법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하여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연구관리체계를 개선하였으나,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이 미흡함.
- 노무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가족초청을 통한 노사협력증진프로그램 등 노사협력 실적이 우수하나 노사협의회가 규정대로 열리지 못함.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지 않은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예금 등으로 적절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기본연봉·성과연봉·결산상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인원배분비율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단점이 있음.
- 기관 자체적으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개선하고, 정기 자체감사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은 자율성의 장점을 지나 미흡한 지적사항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고 국회 지적사항 개선절차, 개선실적과 개선성과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2.5%)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청년인턴제도의 운용이 매우 양호함.
- 국가유공자 1명을 신규채용한 실적은 우수하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복지 분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별이 없고, 임금 부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미소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과거에 있던 임금차별을 몇 년에 걸쳐 해소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관세법의 분법에 관한 연구’의 경우처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법령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임.
- 녹색성장을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그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관협력을 제안하고, 그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시의성과 중요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법치행정과 거버넌스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있고 정책적 수용성이 높음.
- ‘교육복지법제의 국제적 비교 연구’는 교육제도의 소개에 치중하지 않고, 교육복지 차원에서 선행연구들과 달리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에 맞추어 북유럽국가의 무상 교육과 소외 계층 지원 교육제도를 탐구한 점에서 독창성이 있으며, 수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분석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함.

<단 점>

- 정책 개발의 당위성에 대한 논증은 충분한 반면에 대안 제시는 다소 부족하여 정책 활용도가 미흡한 경우가 있음.
- 연구 내용이 개별 규제 법령을 나열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규제 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와 법령간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여 규제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기준이나 규칙 등 이론적인 측면이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있음.
- 해외 사례와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풍부하게 검토되지 못하였고, 향후 법안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한계가 있음.
- 국제 환경협약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국제 환경협약을 우리나라에서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민관협력에 대한 외국 사례와 국내 관련 법제 분석을 좀 더 다양하게 진행한다면 보고서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임.

-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사례나 결과들을 표와 그림으로 도식화 함으로써 비교 분석한 결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주제의 경우 법제화 방안을 제시할 때 세부적인 검토 및 분석을 보강해야 함.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과제선정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음.
- 법제처,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서울특별시 등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국정과제의 발굴 및 선정과정에서 국정과제 기여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연구과제의 대부분이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있음(기본연구과제 17건 중 15건, 수시연구과제 14건 중 11건).

<단 점>

- 법제연구의 특성상 선도적으로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부분은 미흡함.
- 총 수행과제 대비 기본과제, 일반과제, 수시과제, 수탁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자원배분의 적정성에 관한 관리원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정과제와 전담 기구와의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조직 개편 및 예산 배분이 필요함.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기관 고유의 자원배분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국가의 긴급한 입법수요에 대한 현행법제분석, 외국법제분석, 법률안 분석 등을 통해 국가 주요현안에 대한 긴급하고 즉각적인 현안분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임.

- 단기간에 요구되는 현안 법률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맞춤형 고용·복지 등 5개 분야에 다양한 실적을 제시함.

〈단 점〉

- 수시대응과제의 성과가 보고서, 이슈페이퍼 등의 단순한 형태로만 제시됨.
- 개별 부처의 중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미비함.
- 여러 부처의 지엽적 과제에 대한 긴급 및 수시 요청이 많음.
- 제시된 연구보고서의 선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개별 부처의 중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함.
- 정부부처의 긴급한 수시요청에 대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연구·사업 성과와 수시대응과제 연구성과의 형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많은 기관과 공동연구 수행, 워크숍 수행 등의 다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정부부처와 정책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연구수행, 인력교류, 수탁연구, 정책자문, 연구과제 참여, 공동학술대회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특히 법제처, 국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FTA 지원사업, EU 배출권거래제 관련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단 점〉

- 정책연구 네트워크 운영실적과 성과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제시됨.
- 국외 네트워크가 다양한 형태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연구과제와의 관련성이 미흡해 보이고, 단발성 행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성과위주의 해외 MOU가 보이며, 국외 네트워크 확대 및 유지의 전략적 접근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력 네트워크에서 과제 중심보다 연구원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국외 네트워크가 다양한 형태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연구과제와의 관련성이 미흡해 보이고, 단발성 행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해외 저명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한 국제적 지명도의 제고가 필요함.
- 정책연구 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를 국정과제 수행과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형식적이고 단순한 교류행사를 지양하고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외 교류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제별 네트워크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국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과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보다 많은 자원 배분이 필요함.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법제 연구’ 및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국가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음.

〈단 점〉

-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정부부처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개별 부처 국정과제와의 긴밀성이 미약함.
- 기본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틀 제시가 다소 미흡함.
-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결정의 기준이 미흡하며, 기관이 수행한 과제 중 국정과제 대표 사례가 특별히 어떤 특징과 실적이 있는지 불분명함.
- 별도의 연구기관을 갖춘 곳인 서울시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사업까지 지원하는 것이 연구인력의 배분상 적절한지 의문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개별 부처의 핵심 국정과제 연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부처별 핵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협의회 마련이 필요함.

- 인력대비 효율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과제 사전검토체제 마련이 요구됨.
- 지나치게 다양한 부서로부터 수시과제요청을 받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차원의 검토 및 평가과정이 필요함.
- 정부부처 중 별도의 연구기관이 없고 예산이나 그 밖의 자원 등이 약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본연구가 매우 협소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기본연구과제의 선정방식을 보다 장기적·거시적 계획 하에 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수시, 긴급 및 현안과제 지원에 보다 많은 비중이 필요함.
- 기본연구에서는 법률안을 직접 입안하는 방식의 도움보다는 보다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한 체계적·기본적 연구를 해나가는 보다 더 근본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법제교류지원사업(VI)>으로 2003년부터 구축·운영되어 온 ALIN(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은 우리법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법률분야의 ODA에 선도적인 기여를 함.
-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사업(VI)-배출권거래제법령 제정 이후 후속 지침제정 지원사업>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인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사업”을 개발하여 국가정책수립에 기여함.
- 특히 2013년에는 배출권거래제법령 제정 이후 후속 지침제정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배출권거래소 지정평가기준이 환경부고시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됨.
- 배출권거래제 법령의 해외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지침마련을 위한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음.

〈단 점〉

- <법제교류지원사업(VI)>의 경우 구체적 ODA 실적이 부족하며, ODA 대상국 또한 특정 국가에 국한되어 있음.
-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보다는 정보의 공유에 초점이 맞추어짐.

〈개선 및 건의사항〉

- <법제교류지원사업(VI)>의 경우 구체적인 ODA 실적과 대상국의 확대가 필요함.
- 단기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활동을 통한 공동연구보고서 발간 등이 필요함.
- 배출권의 권리로서의 안정성 확보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상승함. 상세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상세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올랐으며, 특히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오름. 상세업무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본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수탁연구 순임.
-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정부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모든 상세업무가 전체평균에 비해 높으며, 전체평균 대비 공동연구의 점수 차이가 다른 상세업무들에 비해 더 큼.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오름.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높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회의 시 참석자 의견 경청, 적극 의견 반영 노력’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과제 수행 전문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보유’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정확히 이해’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 관련 정보제공과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정보제공 서비스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적 정보 제공’ 항목의 점수는 높고, ‘제공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된 연구인력 투입 노력, 연구 관련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체계 구비 노력, 고객의 소리(VOC) 관리 시스템 진단 및 개선 노력, 고객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아짐. 상세업무유형별로 볼 때,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으나,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큰 폭으로 하락함. 점수가 상승한 상세업무 중에서 수탁연구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큼. 상세업무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교육훈련서비스, 수탁연구, 기본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순임.
-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모든 상세업무별 만족도가 전체평균에 비해 높으며, 전체평균 대비 공동연구의 점수 차이가 다른 상세업무들에 비해 더 큼.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올랐고, 품질요소 중에는 공정성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높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회의 시 참석자 의견 경청, 적극 의견 반영 노력’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 위한 노력’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고객 문의와 요구사항에 친절히 응대’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과제 수행으로 해당 분야 정책과 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의 점수는 낮음. 공동연구에서는 ‘고객 문의와 요구사항을 신속, 정확히 처리’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과제 수행으로 해당 분야 정책과 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의 점수는 낮음. 교육훈련서비스에서는 ‘고객 문의와 요구사항에 친절히 응대’ 항목의 점수는 높고, ‘쾌적한 교육, 훈련시설과 편의시설 보유’ 항목의 점수는 낮음. 정보제공서비스에서는 ‘온라인 정보이용 시 접속과 시스템이 안정적’ 항목의 점수는 높고, ‘고객의 이용 목적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노력, 고객 의견을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확인 및 정비,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유(성과확산)를 위한 다양한 채널 개발 및 홍보전략 수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한국표준협회(KSA)/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절차서에 따라 고객요구사항을 결정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과제 발굴을 위한 단기적 목표와 사업 운영 방향을 적절히 수립하고 있음.
- 과제선정단계에서 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함으로써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음.
- 과제 선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결합 방식이 주목할 만함. 관련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선정 비율과 내용,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기여도에서 모두 우수함.

<단 점>

- 중·장기 전략연구과제 발굴 노력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전략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계획 및 로드맵이 필요함.
- 보고서에는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간 목표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초 과제나 다년 과제를 발굴해 나가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외부 제안제도를 통해 296개 과제를 발굴하는 등 과제 발굴 노력이 현저함.
- 외부 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외부 위원의 참여 속에 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 연구회의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관련 수행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연구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단 점〉

- 과제 선정 수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함.
- 과제 종료 후 적절하게 결과보고서를 발간했으나, 일부 파일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 등 홈페이지 관리에 문제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연구과제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과제 발굴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함.
- 홈페이지 관리 강화가 필요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 추진체계와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음.
- 협동연구 발굴 및 수행을 위한 지침과 규정은 마련되어 있음.
- 협동연구 필요성에 의하여 5개의 과제는 적합하게 수행되었음.

〈단 점〉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이 기술되어 있지 않음.
- 협동연구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가 없음.
- 협동연구 발굴 및 추진, 협동과제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전문가 풀(Pool)의 인적 구성에 대한 기술이 없음.
- 협동연구가 대형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내·외 연구원들 간에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협동연구를 통한 정책기여 확대 정도 등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술이 피상적으로 되어 있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필요할 것임.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연구원의 동기유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협동과제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전문가 풀(Pool)의 인적 구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면 필요하고, 다양한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원별 역할분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협동연구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너지효과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체계의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평가를 과제별 특성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음.
- 과제유형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와 단계별 심의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연구단계별 심의평가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수탁연구과제와 협동과제의 평가를 차등화하여 연구품질 제고에 노력함.
- 기본연구과제와 협동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를 분리하여 평가위원 선정과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단 점〉

- 평가단계 중 내부 평가, 외부 평가, 평가결과 피드백에 관한 구체적 기술이 없음.
- 연구단계별(착수, 중간, 최종심사 등) 평가의 활용성을 확인할 수 없음.
- 평가단계별 평가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미흡함.
- 외부평가위원의 풀(Pool)에 대한 소속기관별, 전공영역별 분포를 알 수 없음.
- 평가위원의 전공적합성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점수의 편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별첨자료에 제시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평가 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이 원칙임.
- 평가위원의 풀(Pool)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함.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정관에 저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이의 창출·보호 및 활용 장려를 위해 ‘지식재산관리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 홈페이지를 적절하게 업데이트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고객에 적합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신자 DB를 확대한 점은 긍정적임.
- 이슈페이퍼를 기존 정책과제에서 재생산하지 않고 이슈에 따라 창조적으로 생산한 점은 긍정적임.

〈단 점〉

- 2013년에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 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지식재산 보호 규정이 2013년도에 처음 제정되었으나, 향후 기록물 관리 지침 등 보다 다양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에 체계성이 없으며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소홀함.
- 홍보·확산 계획에 성과지표와 성과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홍보·확산 실적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략적 차원의 접근 노력이 미흡함.
- 성과 확산 조직 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을 활용한 객관적인 성과의 제시가 미흡함.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에 대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계획 수립이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임.
- 연구결과의 홍보와 성과를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전년 대비 홍보의 향상도나 목표 대비 달성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적이 계량화되어 있지 못함.
- 홍보를 위한 원내 조직의 네트워크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유기적 연대성이 떨어짐.
- 연구성과 확산 실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당기의 차별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제시가 미흡함.
-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만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큼.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확산 수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성과결과의 해외확산을 위한 채널이 다양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수준임.
- 연구결과물의 배포 방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관리 시스템이 미흡함.
- ‘실효성 있는 배포처 개선 및 보고서의 배포’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함.

〈개선 및 권의사항〉

-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 관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보완, 개선해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보완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인 수준이며 보안 및 보호 관련 시스템의 구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시스템의 도입에 다소 소극적이며 향후 다양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전략과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당해 연도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둔 성과지표와 단기 목표치의 제시가 필요함.
-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확산 수단을 선택 하여 확산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한 후 다시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의 확산 실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널별로 계량화된 실적, 전년대비 향상도, 목표대비 달성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홍보에 대한 성과지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홈페이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미진하며, 결과에 대한 피드백 과정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 맞춤형 배포 관리 체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배포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해외네트워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물의 해외 확산을 위한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1편(42.9건/39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Ⅱ 경영 분야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기획력 강화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획조정본부의 기능을 강화함.
- 세종시 이전 관련 대응 조직 구성은 적절함.
- 비정규직 차별 해소 요구에 부응하여 초청연구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고, 공무항공 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지침을 제정하고, 정부3.0 관련 법규의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함.
- 재정수반법령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국가입법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제도를 활성화하여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연구관리체계를 개선함.
- 법령영역 DB 고도화로 법령영역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과연봉제를 내실화하여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확산함.
-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법령영역 전문가 및 학제 간 연구를 위한 타전공자 채용계획을 마련함.
- 최근 3년 간 총 21명 증원으로 연구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연구인력 대비 지원인력 비율을 82.7%로 유지함.
-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직은 서류심사/논문심사/필기시험/3년 간 연구계획서 발표회/면접심사(박사논문 제외 최저 연구실적 200% 기준), 행정직은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으로 선발함.
- 로스쿨 채용박람회 공동개최를 통하여 우수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정규직 이탈방지를 위해 각종 이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이탈방지를 위해 차별 해소를 위한 무기계약제 도입 및 보수개선에 노력함.

〈단 점〉

- 고유 기능과 연계되는 환경변화 이슈(모든 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이슈 제시) 도출이 매우 미흡하며, 조직 운영 노력 및 성과, 타당성 및 효과에 관한 자료가 부실함.

-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조직 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 제시가 미흡함.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 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세종시 이전 관련 조직운영 성과는 구체성이 부족함.
- 경영목표 달성 노력 및 그에 대한 성과 자료가 매우 미흡함.
-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없이 인력을 운영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 자료가 미흡함.
 - 로스쿨 채용박람회, 세종시 이전에 따른 우수인력 이탈 방지 노력이 전부임.
- 직무분석, 사업분석에 근거한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의 작성이 미흡함.
-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당해 연도 인력운명을 위한 계획의 작성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의 핵심기능, 경영목표, 주요 이슈 등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의 요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고,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외부 전문기관의 인적성검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당해 연도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인력수급계획의 작성 노력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미흡하나마 수립함(구성원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연간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
- 교육·연수 결과의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의 구축 정도는 양호함.

- 교육종료 후 교육 참여율, 전년도 교육만족도 및 수요 조사·분석, 부서별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차기 교육계획을 수립함.
-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노력, 직군별 맞춤형 교육, 외부 위탁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종료 후 교육 참여율을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함.
- 연구년 실시, 우수직원 해외연수 등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를 운영함.
- 매년 교육연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직종별, 직무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함.
- 교육 완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교육·연수 실적 및 환류체계를 구축함.
- 소규모 기관의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 위탁교육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함.
- 교육훈련포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훈련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함.

〈단 점〉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이 없음.
- 연도 계획 수립 시 기능과 연계한 직무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의 충실성, 구체성이 미흡함(역량강화 전략 부재).
- 연구직의 고유기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가 초청을 제외하면 “법제실무교육”과 “규제영향분석과 방법론 교육” 뿐임. 포럼은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려움.
- 교육훈련 성과 및 효과가 구체적이지 못함.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기관(막스플랑크 국제사법연구소(독일), Academy for Legislation(AFL, 네덜란드))과의 연대를 통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평가제도개선작업반 운영을 통한 직원 평가제도의 문제점 분석 등 평가제도 운영 실태 분석과 개선실적은 양호함.
- 승진 심사 시 최근 3년 이내에 평정한 등급 배점 80% 반영은 적절함.
- 연구직은 연구평정(70), 근무평정(30)으로, 비연구직은 성과평가(60), 근무평가(40)로 차별화된 평가요소를 설정하고, 비연구직의 계량지표는 30%를 유지함.
-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은 근무성적 평정규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함.
- 근무평정 이후 매년 다양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규정 및 평가과정에 반영함.
- 연구직의 논문게재 실적에 대하여 연구평정에서 40/20점을 부여하고 연봉 및 능력성과급의 차등 지급에 반영함.
- 평가시행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평점산정예규에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함.
- 근무성적평정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자, 휴직자, 파견자, 인사이동자 등 평정 대상 제외자를 정함.
- 평가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 등 금전적 보상, 승진 및 재임용 등 비금전적 보상에 적정하게 활용함.

〈단 점〉

- 업적평가제도 개요 및 특징에서 제시한 대형프로젝트 사업평가제도, BSC성과 관리시스템은 평가지표에 나타나 있지 않아 반영 여부 확인이 불가함.
- 연구직 업적평가의 계량화 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계량화 정도의 확인이 불가함.
- 논문게재 인센티브 제도는 연구평점 산정에만 반영됨으로써 논문 실적 제고에 미흡함.
- 평가결과 이의신청 제도는 연구실적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연구평점산정에 관한 예규)는 있으나 업적평가 전반에 관한 제도는 부재함.
- 인사이동자 3인을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 비연구직의 평가지표 계량화의 노력이 미흡함.
- 연구평정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1건의 실적은 있으나, 근무평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미흡함.
- 승진에서 12개월 마다 1점씩 부여하여 최대 5점까지 가점을 허용하는 경력산정에 문제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승진 심사과정에서 다면평가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논문게재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제도개선TF의 직원 평가제도 운영실태 분석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모든 구성원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함.
- 이의신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정규직의 근무불안 요소로 야기된 갈등 사안에 대해 현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후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
- 노무관리 역량 강화프로그램이 다양함.
- 전체직원 현안설명회, 부서장 간담회(Tea time), 원장과의 간담회 등 활발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음.
- 행정부서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연 8회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체의견을 수렴함.
- 노사협의회가 의결, 협의, 보고사항으로 구분되어 노사협의회 규정대로 명확히 운영되고 있음.
- 연봉계약체결 과정 등 노사협의회 의결, 협의, 보고사항의 이행성도가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음.
- 5건에 걸친 노무관리담당자 교육과 7건의 일반관리자 교육을 실시함.
- 가족초청을 통한 노사협력증진프로그램은 기관 구성원의 공동체意識 함양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로 타 기관의 모범이 됨.

〈단 점〉

- 기관장 공석의 사정으로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1회 열리지 못하고 3회 열림.
- 기관의 갈등이슈를 발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미흡함.
- 기관장 공석기간 중 노사협의회를 직원현안설명회로 대체한 한계가 있음.
-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1건의 고충처리는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사협의회는 노사 대화 및 의사소통을 위한 핵심제도이므로 분기별로 1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 고충처리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위원회 내에 전담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관 내에 잠재한 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8회의 걸친 의견수렴활동 중 매년 반복 및 중복되는 것은 통합정례화하여 구성원들의 설문조사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제안제도 등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소통통로와 고충처리제도를 종합하여 공식적·비공식적 하의상달절차를 제도화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연구사업비의 편성에 있어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는 1,046백만원이며, 정부 제안 연구과제 사업비는 625.5백만원으로 59.7%를 차지하고 있어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 되며, 2014년에도 61.8%로 편성되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0%, 2014년 4.4%(40백만원)으로 연구회에서 제시한 평가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13.0%(150백만원), 2013년 11.6%(121백만원)로 연구회가 제시한 평가기준(10~20% 범위 내)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규모가 적정하고 규모가 큰 과제 등은 수탁연구로 전환하는 등 수시연구과제의 성격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14건 중 외부 위탁용역비 지급 건은 없음.
-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추계액 기준 100%를 적립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모든 수당을 제외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연구회에서 제시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당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7%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335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직무급 포함),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표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음.
-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30%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에 대하여 전년도 평가결과가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 연봉제를 적용·실시하고 있으며 등급별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pm 1\%$ 로 표준지침에 부합됨.

〈단 점〉

- 기본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 최저 등급에 7%를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 (10%)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하도록 기본연봉 산정 시 최저 등급에 10% 이상의 인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시 간부직과 비간부직 모두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pm 24\%$ 가 되도록 적용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함.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산정 및 지급 시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3년의 경우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음.

〈단 점〉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 최저 등급에 7%를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 (10%)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하도록 성과연봉 산정 시 최저 등급에 10% 이상의 인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개별기관 국회 지적사항은 없음.
- 개선계획 수립에 있어 외부 전문가 검토, 평가결과 공유, 자체개선계획안에 대하여 전체직원 의견 수렴 등 기관 자체적으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이행 및 점검을 실시한 것은 자율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짐.
- 연구 및 경영전반에 대한 정기 자체감사를 통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함.
- 연구 분야 개선 실적은 우수함.
- 부서장회의, 전 직원 현안 설명회를 통하여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개선함.

<단 점>

- 연구분야 4건, 경영분야 8건의 지적사항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기본연봉 지급적정성 확보 등의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이 지연되고 있음.
-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중 평가결과 공유가 설명회 참석과 평가결과 내부보고로 이루어진 것은 공유의 의미가 미흡함.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정례화를 통한 기관 운영의 환류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추진 중인 개선사항의 완료가 요구됨.
- 국회 지적사항이 없어도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절차는 기술할 필요성이 있음.
- 기관 자체적으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하는 등의 장점을 표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이를 지면에 표현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기관 평가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가 연구원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적정하나(워크숍 참여, 사무실 우대배정 등), 장애인 고용실적이 1.5%로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고용률(2.5%)에 미달하고 있음.
- 직전년도 고용률이 매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기관차원에서 적극적,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대책 회의, 계획수립, 관련 단체 방문 등).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목표대비 달성률이 우수하며(100%), 청년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이 적시에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청년인턴 1명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
- 청년인턴채용 및 근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관리지침이 있고, 오리엔테이션 교재로 교육을 실시함. 근무평정, 맞춤형교육, 교육지원 등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음.
- 멘토링 담당자를 지정한 내용은 보이지만, 멘토링 프로그램 운용실적은 없음.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등 각 영역을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고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 2013년도 1명의 국가유공자를 신규 채용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이 1.0%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장의 관심표명, 대책회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기관 방문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 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임금, 처우에 관한 연구원 차원의 독자적인 규정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적정함.
- 연구원 차원의 비정규직 운영계획(2013년 인사종합계획안)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함.
- 복지, 복무 분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없음.
- 임금 부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미소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과거에 있던 임금차별을 몇 년에 걸쳐 해소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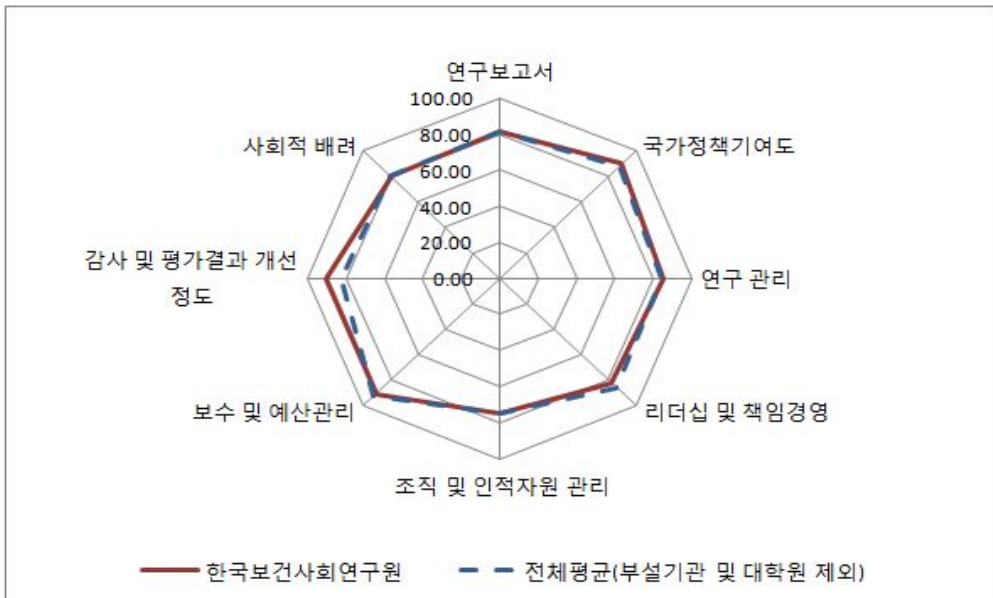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E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A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1-3. 연구 관리 |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
| |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우수 |
|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C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A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B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B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B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C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D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A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D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D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A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해외 전문가 면담과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연구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임.
- 노인 빈곤 실태 문제, 기초연금 논의, 저소득층 소득 지원제도 논의 등 민감하지만 구조적인 논란거리를 내포하고 있는 정책 사안들을 선도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을 기울임.
- 융·복합 연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하고,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복수의 정책 대안들에 대한 비교분석, 예상 파급효과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정합적인 관점의 정책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함.
- 대내·외 환경분석, 국정과제 및 정부시책 반영, 설립목적 및 사회요구 반영 등의 체계적인 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과제발굴을 위한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실적이 1회에 불과할 정도로 기본과제 발굴노력이 미흡하고 과제선정회의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협동연구를 위한 추진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협동연구 발굴과 추진실적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고, 수행노력이 좋음.

- 협동연구 장려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협력의 경우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과의 협력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외부평가 위원 풀의 선정과 구성에 있어서 전공·분야·소속기관별 평가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지표 배점을 달리하여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홍보 확산을 위한 계획과 방안이 목표별로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비교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점은 장점이나 정량적인 측면의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홍보의 효과분석을 통한 질 제고에는 미흡함.

[경영 분야]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구성원과의 소통 노력 및 대외 활동 실적은 높으나,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 융·복합 과제의 발굴 수행 노력 및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 구축 노력은 다소 부족함.
- 기관의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기관 내·외의 의사소통도 강화하였으나,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미흡함. 해외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협력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의 적정성은 3대 경영목표와 10대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설정하고 경영목표 실천계획별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세부 실천과제들은 경영목표 실천계획과 연계되어 있고 실천계획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실천계획으로서 특히 글로벌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홍보 관련 실천계획이 미흡함.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와 연계한 미래지향적, 융·복합, 일자리창출 연구 등과 같은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지표별로 제시된 성과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계량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연구의 질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다소 어려움. 연구인력에 대한 자율성 이외에 능력 성과급과 같은 성과중심 평가보상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구성원의 동기부여 노력이 필요함.
- 중점추진과제(3개)의 중요성, 추진실적, 파급효과는 중점추진과제의 선정과정에서 기관의 내·외부 환경진단, SWOT분석 활용 및 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하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있어 선정과정은 타당함.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이 구체적인 기준들을 활용하여 타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음. 복지시스템 연구와 사회 정책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에 있어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국제교육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연구를 강조하는 과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사회 다양성 증대에 따라 학제 간 연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Global & Local 연구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나,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적을 단순히 조직개편 내용 중심으로 제시하여 타당성 및 효과 분석은 구체적이지 못함.
- 연구역량 배분과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하여 실적평가 상한제도를 실시하고 근무기간에 따른 평가 실시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승진심사 기준에서 경력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평가결과를 100%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정부기준 임금인상률을 준수하고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강화하였으나 고용세습과 관련된 조항 등 단체협약 중 일부 규정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지 않은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예금 등에 적절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였으며,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비간부직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과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을 비누적식으로 운용하고, 간부직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능률성과급 지급 시 재정기여도를 반영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국회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와 연구기관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고 있으나 연봉제와 관련한 지적사항의 개선이 미흡함. 지적사항 개선이 개선성과와 경영의 연계 속에서 활용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흡(1.5%)하므로, 장애인 직원 채용과 보충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변화된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 실적이 양호하나,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링 양식 개발, 고충해결, 간담회 개최 등 인턴운용의 적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비율이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복지부분에서 아무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임금 부분에서는 임금단체교섭을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였으나 비정규직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관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통계 자료의 활용, 각국 전문가와의 면담, 국제 공동연구 등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방법을 적절히 활용함.
-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계량화하고 유형화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적 개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우수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고, 독창성이 있는 이론적, 정책적 자료를 제공함.
-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유기적인 연관성을 높인 노력이 돋보임.
- ‘출산 건강에 대한 연구’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여 시의적절하게 수행하였고 특히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 실태 분석을 실시한 점이 우수함.

<단 점>

- 연구보고서의 체계가 전반적으로 논리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이론에 대한 소개 및 서술 부문에 있어서 지나치게 개념적, 학술적으로 고찰된 측면이 있고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방안 수립 시 필요한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구체적인 정책 대안별 분석은 다소 미흡함.
- 방대한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면서 무수한 가정과 추계식들이 도입되는데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미진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약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일부 보고서에서 유사한 명칭의 기초과제 연구 보고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림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가독성과 일관성을 저하시키는 개념이나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상세한 분석을 표나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표나 그림으로 제시할 경우 핵심에 접근하는 것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 단순한 실태조사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구방법론의 검토가 필요함.
- 사례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 형태와 교육 가능기관을 제시한 경우에는 서술 내용이 열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유형화하여 교육 유형별, 기관별 정합성이나 연계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청와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서 수행하는 국정과제에 적극 참여하고, 국정과제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국정과제 성과확산을 지원함.
- 조직개편을 통해 포괄적 본부체제로 전환하여 칸막이 폐해를 없애고, 현안 대응팀 운영 및 정책연구 실무협의회를 통해 국정과제 수시 대응 점검 등 국정과제 수행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보건복지관련 국정 현안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함.
- 특히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 사회보장통계센터를 독립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관련 재정 및 통계 생산을 담당하고, 실증자료에 기반하여 상시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며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은 매우 적절함.
- 미래전략팀이 큰 과제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주력하고 현안대응팀이 작은 과제 중심의 즉시적 대응에 주력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매주 회의 개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현안파악을 하고 있음.
- 특히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통과 이후 새롭게 활성화된 사회보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연금법 및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비용 경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의 굵직한 국정현안에 대응하여 유일한 보건복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함.
- 보건복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정책제안,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구축, 의료보장 중증질환 등 핵심적 국정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성과를 거둠.

〈단 점〉

- 보건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중복기능이 거의 없는 고유한 정책영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연구인력에 비해 보건복지 관련 국정과제 수요가 매우 높아 과제 건당 투입인력 자원의 부족이 우려됨.
- 이슈는 많고 연구인력은 제한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정과제 이슈에 대응하여 정부부처를 지원하는 연구자가 소수 혹은 일개인이 되면서, 연구자 개인적 견해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가적으로 보건복지 어젠다가 국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연구 수요는 폭주하고 있으므로, 정규 연구인력과 위촉 및 외부 연구인력들을 잘 활용하여 폭증하는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소수인력에 일이 몰리지 않도록 배분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그에 따라 조직을 확대하여 예산과 인력 배분 비중을 다소 늘릴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에 균형감을 갖고 해당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인력 풀(Pool)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특정 이슈별로 복수의 연구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과제가 연구자 개인적 견해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안 이슈와 관련해서 정부와 일반 여론의 인식과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도적 대응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제시된 대안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과제 이행수단에 대한 부처 간·기관 간 연계 가능방안 등에 대한 제안도 중요하며, 4본부 조직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대상별 연구가 약화되지 않도록 세부분야 연구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청와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의 국정과제 추진 단계에서 선제적 정책 어젠다를 선정하고 제도설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주요 과제에 대해 기초연구 등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
- 사회보장통계센터 및 사회보장재정추계, 미래전략연구본부 등의 조직을 새롭게 마련하여 선제적 정책대응을 위한 구조적인 자원할당 및 조직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주요 정책영역에 대해 전문가 포럼을 정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대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현안과제 수요가 상당한 만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으며, 그 역할에 충실히 대응함.

〈단 점〉

- 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긴급 및 수시 요청의 과다로 인한 연구진의 과부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부족함.
- 정책 현안과제 수행 시 연구자 개인의 개인적 견해가 연구기관의 대표의견으로 제안되는 것을 여과시키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보건복지 정책수요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므로 보건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실증분석 등 근거기반 정책지원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수시 요청하는 과제의 경우에도 수동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축적된 연구결과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경우에도 즉자적 대응을 지양하고 장기적·전체적 관점에서 근본적 대안 제시를 위한 접근이 필요함.
-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견해 간에 체계적 관계정립이 필요하며, 영향력이 큰 과제의 경우 단계별 대응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여러 정부부처, 국회, 청와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함.
- 학계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주요 이슈를 기획하여 언론 네트워크를 공고히 한 점 및 해외 네트워크 건수 중심의 형식적 관계에서 탈피해서 공동연구를 추진한 점은 높이 평가됨.
-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예산정책처 등과 국정과제 추진과정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정책 발전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국회와의 협력이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음.

〈단 점〉

- 외부 요청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이 대부분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도의 능동적 네트워크 구성이 부족함.

- 학술대회의 한 세션을 마련하거나 단순히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것은 융합적 지원이라고 보기에 미흡함.
- 주로 정부부처 회의 참석과 자문 등 일회성 참여에 치우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부 및 국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관련 연구기관과 개별과제별 협력을 넘어 융합적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지속적 연계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함.
- 연구·조사 결과 등의 관련인 이외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언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산·학·연, 해외 국제조직과의 협력을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체가 된 보다 능동적인 네트워크 조성 노력이 필요함.
- 보유한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 되는 정보와 재원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평가대상인 연구과제들이 국정과제로서의 중요성이 높고, 정책 파급효과가 크며, 국정과제의 정책화 실적이 우수한 과제들이 많음.
- 평가대상 과제로 제시된 과제들이 대부분 2~3년 전에 선도적 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수행되었던 과제였기 때문에, 준비된 연구과제들이 2013년 국정과제와 매칭 되면서 정책화 실적이 우수함.

〈단 점〉

- 유사한 주제의 연구보고서들이 동일한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경우, 각 연구보고서가 다른 연구보고서에 비하여 가지는 정책기여의 차별성이 명확히 부각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가정책 방향이 정해진 것에 맞추어 정책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선도성을 충분히 살려서 근거에 입각하여 여러 정책 대안의 철저한 비교분석, 그리고 정책시행 시 예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까지 수행함으로써 종합적 관점에서 정합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평가보고서에 연구보고서와 정책기여 간 명확한 연관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과제로 인한 정책화 실적을 평가대상 단년도에 국한하지 말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긴밀한 기여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유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전 연구와의 차별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사한 주제의 연구보고서가 평가에 같이 제출될 경우 각 연구보고서의 기여 부분의 역할분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현세대 노인의 빈곤실태 및 소득보장방안 연구’의 경우 노인빈곤 실태 및 외국과의 비교와의 유기적 연계에 한국의 기초연금 개선대안 모형을 제안하고 비교·평가하여, 현 한국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기초연금 모형을 제안함. 이는 선도적 정책연구 과제로, 2013년 기초연금 도입 모형의 근간이 되었음.
- 기초연금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초연금 도입 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로써 기여하고 있으며, 노인 빈곤실태 및 제도모형과 연계하여 기초연금 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고, 정부의 기초연금 모형을 실증분석 자료에 기반 하여 지원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하는 상황에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부분의 개편방안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함.
- 정책의 개편방향과 맞물려 반드시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소득인정액 혹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cut-off 방식에 대한 구체적 비교, 순재산 및 총재산 중 타당한 재산기준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연구를 먼저 수행하고 준비하는 연구의 성격으로서 국정수행에 기여하고 있음.

- 소득 및 재산기준 선정기준 변화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의 변화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정책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단 점〉

- ‘현세대 노인의 빈곤실태 및 소득보장방안 연구’의 경우 과제 수행 이후 정부정책 논의내용에 따른 지속적 대응 및 논의과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개선 및 권의사항〉

- ‘현세대 노인의 빈곤실태 및 소득보장방안 연구’의 경우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도 실증적 분석자료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노인빈곤 감소효과 및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 기초연금 논의가 현재진행형이므로 연구결과 및 연구모형에 기반하여 기초연금 모형별로 빈곤감소 효과 등의 정책판단의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연금 논의가 쟁점을 이루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자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 따라 이 연구의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노인빈곤 감소 효과와 개인 특성별 공적연금 보장수준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초연금 도입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의 분석결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증적 분석자료에 기반하여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분석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의 경우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소득인정액체제로 가는 방안과 각각의 cut-off로 적용하는 방안의 장·단점, 총재산 및 순재산 적용방안, 각각의 선정기준의 적절한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맞춤형 급여체계를 통하여 급여별 수급대상자의 변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기초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선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설정에 있어 관련 연구가 계속 활용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계속적 지원 및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맞춤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하며, 맞춤형 기초보장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제도 개편에 따른 파급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책의 파급효과와 기대효과, 고려할 점 등을 연구자료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상승함. 상세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탁연구의 만족도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아짐. 상세업무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기본연구, 수탁연구 순임.
-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정부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기본연구는 전체평균에 비해 높지만, 수탁연구는 상대적으로 낮음.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올랐고, 품질요소 중에는 편리성과 공정성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모든 차원의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으며, 품질요소 중에는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요소의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연구결과가 업무·연구에 도움, 정책적·학문적 활용도 높음’ 항목의 점수는 높고, ‘해당 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고객 문의와 요구사항에 친절히 응대’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 관련 정보제공과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비’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 목표 및 임무 달성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 연구성과의 정책적·학문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전문가 집단 활용 등), 연구 관련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체계 구비, 연구수행 일정 준수를 위한 계획된 연구인력 투입,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함. 상세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연구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낮아지기는 했으나, 기본연구와 수탁연구에 대한 만족도는 오름. 특히 수탁연구 점수의 오름폭이 기본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큼. 상세업무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기본연구와 공동연구가 같고, 수탁연구는 두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음.
-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기본연구는 전체평균에 비해 높지만, 수탁연구와 공동연구는 상대적으로 낮음.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오름.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모든 차원의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높으며, 품질요소 중에는 공익성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연구목적 정확히 이해’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 위한 노력’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연구목적 정확히 이해’ 항목의 점수는 높고, ‘고객 문의와 요구사항에 신속히 답하고 요구사항을 정확히 처리’ 항목의 점수는 낮음. 공동연구에서는 ‘관련 지침과 절차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수행 정도를 공유하는 기회의 적절한 활용’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 고객들이 의견 및 불만사항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는 채널의 마련, 연구 과제수행, 회의진행 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해당 담당자들과의 접촉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대내·외 환경분석, 국정과제 및 정부시책 반영, 설립목적 및 사회요구 반영 등 체계적인 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연구과제의 발굴과정에서 2차에 걸친 수요조사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실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음.
- 연구회의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을 준수하는 등 과제 선정과정이나 선정이 전반적으로 적정함.
- 제시된 과제의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음.

<단 점>

- 과제발굴을 위한 정책연구협의회 개최실적이 1회에 불과할 정도로 기본연구과제 발굴노력이 미흡함.
- 연구자문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것은 인구·가족·보건 관련 연구에서 적절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될 수 있음.

- 기본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회의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연구과제 심의, 선정 단계에서 내부 연구진으로만 구성된 연구심의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연구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상시 개최하여 과제발굴과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문위원회의 성비 균형을 위해 여성위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정부 위원회의 경우 40% 수준임).
- 기본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회의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심의, 선정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수시연구과제의 선정 시 정부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연구회의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11개의 수시연구과제 모두 연구책임자 1인 1과제 배분원칙에 따라 과제를 수행함.

〈단 점〉

- 탈락된 과제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과제발굴 노력이 부족하며, 과제선정회의에 외부 인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연구수행기간을 최대 10개월 이상까지 허용하고 있어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수시연구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중·장기 전략과제 등은 기본연구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시연구과제 수와 탈락률이 낮음.
- 수시연구과제 선정위원회에서 외부의 참여가 전혀 없음.
- 수시연구과제의 수행단계에서 진도관리 및 보고서 질 관리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과정이 생략되어 있음.
- 대부분의 수시연구과제 결과가 연구기간 종료 즉시 발간되었으나 1건은 6개월이 지연되었으며, 홈페이지 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과제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과제선정회의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연구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여 수시연구과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제 선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와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관리를 포함한 과제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
- 수시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을 3~10개월까지 폭넓게 설정하고 있는데, 수시연구과제의 성격상 10개월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꼭 필요한 과제에만 한정해야 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를 위한 추진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 협동연구 발굴과 추진실적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고, 수행노력이 좋음.
- 전체과제 수 대비 협동연구비율이 62.2%로 협동연구 추진실적이 우수함.
- 협동연구의 필요성과 적절한 인적 구성 및 배분이 이루어져 있음.
- 협동연구 참여 연구진 구성과 업무분담이 적정하며, 상호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한 실적이 우수함.

〈단 점〉

- 협동연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로 실적점수 가중치 1.5배 범위 내 부여는 연구원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가 다소 미흡함.
- 협동연구 발굴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으나, 그 실적의 제시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함.
- ‘향후 5년간 사회보장분야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발굴’의 경우 대형과제로서 외부 연구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연구원별로 피상적 분담으로 이루어져 있음.
- 협동연구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 장려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제수요발굴을 관련기관 공문 및 이메일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과제발굴 워크숍이나 네트워크와 같은 오프라인 수요발굴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의 경우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과의 협력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협동과제별 연구진의 담당 역할과 업무분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성이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에 관련한 규정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자체평가 과정을 객관성있게 유지하기 위한 연구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가위원 간의 평점 차이 15점 초과 시 조정을 거치도록 함.

〈단 점〉

- 평가지표 배점을 달리하여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기술이 없음.
- 과제성격에 따라 기초/정책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 배점을 달리하여 평가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보고서상에 기초/정책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 배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최종평가 시 외부 전문가 2인이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평가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2013년 3월 연구성과확산TF를 구성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함.
- 연구사업 보안관리, 간행물 발간 등 지식재산 보호규정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음.
- 모바일 홈페이지를 신규로 오픈하여 홈페이지의 접근 편리성을 높이고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임.
- 연구성과 홍보·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였음.
- 국내·외 MOU 체결기관 수가 전년도에 비해 9개 기관(13%) 증가함.
- MOU 등을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절히 구축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임.
- 홍보 확산을 위한 계획과 방안이 목표별로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임.
- 유료 간행물 회원을 4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여 간행물회원제를 운영하여 배포한 점은 긍정적임.
- 발간자료를 배포체계에 따라 다양한 배포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히 배포한 점은 장점임.
- 이슈페이퍼가 시의적절하게 발간되고 있으며 비교적 활발한 간행물 실적을 보여 주고 있음.

〈단 점〉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과거 구축된 시스템의 경우 2013년도 업데이트와 운영의 향상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함.
- 지식재산의 보안 및 보호 관련 시스템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홍보·확산 계획에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단기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홍보·확산 실적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정량적인 측면의 성과에 치중하고 있으며 홍보의 효과분석이 미흡함.

- 추진목적에 대한 세부목표의 수립이 추상적인 수준임. 예컨대 수요자 특성별 분석에 따른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주요내용은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물만 제시되고 있음.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연구성과 확산 실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당기의 차별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제시가 미흡함.
-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큼.
- 연구성과물 배포시 피드백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해외홍보 확산 실적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2013년에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 관련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기존 시스템의 피드백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의 활용 전략을 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활동에 대한 계량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적절한 단기목표를 설정하여 목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연구원에 가장 효과적인 확산 수단을 선택하여 확산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확산 수단별로 실적이 계량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물 위주로 제시되어 있어 향후 채널별 효과분석을 통해 파급력이 큰 홍보매체에 선택과 집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의 업로드를 좀 더 빨리 하여 오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물을 배포한 후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수요자를 특성별로 분석한 후 효율적인 배포를 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홍보 활동 시 보다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망라하여 효율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2.01편(98.5건/49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전문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이를 낮출 필요가 있음.
- 등재지 이상 논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II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잘 정비되어 있음.
- 기관 내부에서 단계적 절차를 거쳐 현안문제를 설정함.
-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력계획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고 결원인력을 신속히 채용 보충함.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잘 정리됨.
- 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인력 풀(Pool)제 운영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임.
- 직종간 차별 없는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여 능력개발시스템을 강화함.

<단 점>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부족함.
- 주요 현안문제 선정에 타당성을 부여할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할 객관적 방법론이 부재함.
- 노조와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 등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함.
- 노조와의 협약에 의한 업적평가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 및 새로운 과제의 개발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직원교육이 통계교육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임이 확인되지 않음.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 및 새로운 과제를 개발한 결과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의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잘못된 단체 협약의 문제 등 노조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관행을 고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동기부여책을 개발하고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진 업적 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를 먼저 정의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 방법 또는 타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융·복합 과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전에 방향성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훈련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학제적 융·복합 과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오찬 간담회, 인트라넷을 통한 상시의견수렴 등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노조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돋보임.
- 국가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이 뛰어남.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이 잘 정리되었음.
- 국내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뛰어남.
- 기관 발전과 홍보를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이 뛰어남.
- 기고 및 인터뷰 등 언론을 통한 정책 및 기관 홍보를 활발히 실시함.
- 사회복지분야단체장 간담회에 참여하여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

〈단 점〉

-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비공식적 접촉(예: 식사 등) 노력은 많이 하나, 제도적 의사소통 체계는 다소 부족함.
- 개별 연구원이 기관장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가 미흡함.
- 인사위원회에 노조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경영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
- 해외 세미나 또는 회의 참석 등의 교류 이외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확보 노력은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을 보다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직종별·직군별 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개별 연구원과의 면담 강화도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 각 위원회에 노조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은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의의는 있으나 인사위원회의 경우 경영권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원칙상 노조대표의 참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확보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 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 및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연구윤리 확보 및 준수를 위한 체계 구축이 잘 되어 있음.
- 연구 중복 검증 시스템을 통한 중복 검증 및 검증 결과 피드백 실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윤리 위반 시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으로 명문화함.

〈단 점〉

-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내부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사 실적이 없음.
-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 실적평가에 있어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요소가 있음.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중복 검증 결과가 업적 평가 및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내부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기 감사 및 상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부패 방지를 위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내·외부 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포상제도를 연계하고, 내부 고발자의 보호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적평가 시 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별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복 검사 결과를 연구자에게 자체적으로 알기는 것보다 중복 검사 결과와 제재 조치 (업적 평가와 인사고과에 반영)를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과제수행이 진행되는 과정에 채택,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다단계에 걸쳐 중복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3대 경영목표와 10대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설정하고 경영목표 실천계획별로 세부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세부실천과제들은 경영목표 실천계획과 연계되어 있고 실천계획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적으로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체계적 연계성이 잘 정리되어 있고, 실천계획이 기관의 당면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음.
- 실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지표별로 제시된 성과 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계량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 ‘사회정책의 국가 비전 선도’의 경영목표를 위하여 ‘한국상황에 맞는 창의적 복지 패러다임 연구’, ‘국가의 사회 정책 평가와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지속가능하며 위기에 대처가능한 복지시스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함.
-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인력에게 학회, 국내·외 학술지 게재 등 학술활동을 포함하여 많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개선한 노력은 긍정적임.
- 근거기반 연구를 위한 통계정보 인프라 강화 과제에서 전국규모 사회조사, 조사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패널조사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도입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음.

〈단 점〉

- 경영목표로부터 실천계획이 도출되는 논리적 과정이 다소 부족하고, 구체적 계획의 실현을 위한 추진 조직과 추진 일정 등이 부족함.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계방안이 단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기관의 규모와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체계성 및 구체성이 떨어짐. 또한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 사회정책의 국가 비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 실천계획에서 특히 융·복합, 창조경제 등과 관련한 계획이 미흡함.
-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연구인력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이 적극적이지 않음.
- 실천계획으로서 연구성과의 개방과 공유 확산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특히 글로벌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홍보관련 실천계획이 미흡함.
- 세부 실천계획 중 연구중심의 지원체계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선진화하는 기관의 행정 및 재무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실천계획이 미흡함.
- 성과의 성격상 비계량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모든 성과 목표가 계량지표로 제시되어 있음.
- 연구인력에 대한 자율성 이외에 능률성과급과 같은 성과 중심 평가보상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구성원내의 동기부여 노력이 미흡함.
- 경영목표 실천과제당 세부실천과제들이 약 3개씩 제시되어 있는 반면 제시하고 있는 성과목표들은 연구과제 수행 건수 등 세부실천과제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미흡한 지표들이며, 성과지표의 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로부터 실천계획이 도출되는 논리적 과정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현 기능과 수단에서 추진조직과 추진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관의 당면현안에 대한 해결방안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와 연계한 미래지향적, 융·복합, 일자리창출 연구 등과 같은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인력의 고령화에 대처하여 신규인력채용, 비정규직 및 장애인 인력의 활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과 중심 평가보상 시스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필요함.
- 실천계획으로 본 기관의 규모를 고려할 때 행정 및 재무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및 달성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가능한 한 계량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나 필요시 질적 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수행건수 등 과정도 중요하지만 세부실천과제별로 실천과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과정지표와 결과지표 등을 적절히 안배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실천과제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다각도의 측정치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와 관련한 공동 프로젝트나 공동연구, 국제세미나 등의 확대를 위한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및 국제공동연구의 주제가 가능한 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융·복합적인 내용, 창조경제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 내용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배경과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연구기관의 현안 및 당면 과제를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중점추진과제들이 선정되었음.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과정에서 기관의 내·외부 환경진단, SWOT분석 활용 및 선정 위원회에서 확정하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기준들을 활용하여 타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음.

〈단 점〉

- 기관의 설립목적, 국가정책, 기관발전에의 기여 등 항목별로 중요성과 시의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함.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절차를 3단계에 걸쳐 내·외부 환경진단, SWOT분석 및 확대 간부 회의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중점추진과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자문회의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함으로써 선정과정이 필요이상으로 복잡한 반면, 전략적 중요성 및 시의적절성 등 중점추진과제로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은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하였음.
- 중점추진과제들에서 글로벌 연구를 위한 네트워킹 특히 선진국과의 연구협력 또는 공동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미흡함.
- 실증데이터에 기반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을 위해 통계인프라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등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상황에 맞는 창의적 복지패러다임 연구 실천과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되 기관의 입장에서 전략적 중요성 및 시의성 등 요인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관의 설립목적, 국가정책, 기관발전에의 기여경영 등 항목별로 타당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복지시스템 연구와 사회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에 있어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국제교육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연구를 강조하는 과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 중점추진과제인 ‘지속가능하며 위기에 대처 가능한 복지시스템 연구’의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시스템 체계화 방안 제시 등의 목표와 관련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 측정치가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도록, 파급 효과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점추진과제의 결과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치를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선정과정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고유 기능과 연계하여 환경변화 이슈를 도출하여 대체로 적절함.
 - 사회 다양성 증대에 따라 다학제간 연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Global & Local 연구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함.
- 경영진의 의사결정의 효율적 지원과, 통합적 연구지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획조정 본부 신설(연구기획실과 경영지원실 통합)은 적절함.
- 국민의 복지수요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연구본부 신설(과학기술과 의로서비스의 융합정책 추진)은 시의적절함.
- 국정과제와 새로운 보건복지 어젠다에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각 본부에 특화된 센터를 운영함.
- Global & Local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5개 지역복지기관과 MOU를 체결함.
- 인간 대상 연구 수행 시 윤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운영위원회를 운영함.
- 기관 고유 기능과 특성에 부합하는 외부 고객 요구사항 파악 및 제도개선 실적이 우수함.
 - 모바일 웹도서관 운영, 장애인 웹접근성 강화를 통한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무료예식장 운영 등
- 경영목표 이행 점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실적이 우수함.
-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내부 직원의 욕구를 파악하고 사기진작, 능력개발 및 업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함.
- 3대 경영목표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지원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여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함.
-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및 사회형평적 인력, 특히 장애인, 유공자,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를 수립하여 채용을 확대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전문연구원 및 연구원이 19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및 효율적 운용으로 39명 감소함(연구인력 84.8%).

-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인력에 대하여 2%~10% 가산점을 부여하여 국가유공자 1명, 장애인 3명, 고졸인재 1명 등을 채용하고, 정규직 채용 12명 중 비정규직 전환인력이 5명으로 국가시책에 부응함.
- 연수과정을 통한 채용, 원격 화상발표·면접을 통한 채용 등 채용방법을 다변화하고, 임용일자외 탄력적 운영과 비공식적 연구위원급의 인재추천제도 등의 노력이 있음.
- 원격 화상발표·면접을 통한 채용 실적은 우수함.
 - 해외채류 우수인력 3인, 총 5회에 걸친 원격채용을 통해 연구인력을 채용함.
- 논문발표 평가, 필기시험 출제·채점 시 외부 전문가 활용(50%)으로 공정성을 제고함.

〈단 점〉

-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 실적을 단순히 조직개편 내용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활동 실적, 타당성 및 효과 분석은 구체적이지 못함.
-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조직 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의 제시가 미흡함.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 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직무분석, 인력구조 분석없이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시한 자료의 내용 상 특별한 전략은 없음.
-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기관 차원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의 핵심기능, 경영목표, 주요 이슈 등을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의 요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채용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인적성검사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기준과 채용절차에서 실적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심사과정에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는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은 없으나, 연도 계획은 수립하여 시행함.
- 내부 전문가를 활용한 통계이론, 통계패키지, 빅데이터 교육은 우수함.
- 역량강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순한 직무중심 교육에서 개인의 전반적인 경력 개발을 돕는 교육훈련시스템으로 발전함.
- 담당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휴직 및 수학기회 독려, 원내 통계교육 활성화, 신입직원 더블 멘토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함.
- 의식교육의 다각화, 성폭력예방, 연구윤리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의식함양을 선도함.
- 직무교육의 만족도 및 횟수 뿐 아니라 효과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필수 커리큘럼 및 시간을 선정하여 이수 정도를 상급자 근무평정에 반영함.
-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체 식당을 운영함.
- refresh! 3, 6, 9를 통하여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직무전환기의 동기와의 협력을 제공하여 사기진작을 경주함.
- 연구휴직자를 매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연구결과물 제출을 의무화함.
- 직종간 차별 없는 국내 수학으로 총 10명 중 연구직 5명, 비연구직 5명의 수학을 허가함.
- 석사이상 과정 수학 희망자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하여 2명이 국외수학을 진행하고 있음.
- 사회 공헌 및 의사가 있으나 개별 참여가 어려운 직원들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 교육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교육추진 소속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함.
- 교육수료 실적을 정량적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업무분장, 소속배치, 승진인사 과정 등에 개인별 교육성적을 반영함.
- 2013년 교육훈련비는 13,025천원으로 전년도 12,071천원보다 증가함.

〈단 점〉

-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함.
- 고유 기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함.
-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직원 사기진작 실적이 아님.
- 구성원 역량강화 실적 자료가 부실함.
- 교육체계수립TF를 구성·운영하였으나, 안건 발의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실적은 없음.
- 1인당 평균 교육비가 58,000원 정도로 너무 적어 교육훈련 실적이 무의미함.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목표·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목표·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음.
- 1인당 교육훈련비를 증가하고, 직무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집중화하고, 내부 전문가를 이용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등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비연구직의 단위업무평가 제도는 우수함.
 - 개인당 수행하고 있는 주요단위업무(3개)에 대해 소속 팀장 및 팀원의 업무량(5점), 업무난이도(5점), 업무달성도(5점) 평가 후 “인원수에 따른 표준배분비율”에 따라 상대평가로 배분함.
-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평가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실적이 우수함.
- 업적평가는 실적평가와 근무평가를 종합하여 100점이며, 연구직은 연구실적 80%와 다면평가 20%, 비연구직은 정성평가 70%와 정량평가 30%로 구성됨.
-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직종·직급별 차별화된 업적평가 기준을 적용함.

- 개인별 업적평가결과는 5개 사항(동일직군 평점, 최고점, 최저점, 본인 평가점수, 평가등급)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함.
- 매년 피드백에 의한 조치결과, 평가제도 개선의견 등을 취합하여 업적평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함.
- 보고서 평가, 정책현안작업, 논문, 연구활동평가 등 실적평가 시 계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함.
- 평가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기준 개정 시 전 직원의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함.
- 연구역량 배분과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하여 실적평가 상한제도를 실시하고, 근무기간에 따른 평가 실시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함(해당 부서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부서별 다면평가 결과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부간 평가점수 표준화를 실시함.
- 업적평가 결과를 성과연봉, 능력성과급 등 금전적 보상에 적용하고, 승진(탈락자 2013년 8명), 재임용, 포상, 교육훈련, 연구휴직 등 비금전적인 보상에 적용함.

〈단 점〉

- 논문게재 인센티브 제도는 연구실적 평점 산정에만 반영됨으로써 논문 실적 제고에 미흡함.
- 연구직의 업적평가 평가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함.
- 연구보고서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미흡함.
- 연구업적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명문화가 부족함.
- 승진심사 기준에 경력을 산정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업적평가의 평가지표와 방법을 구체적·객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평가가 부서평가, 경영목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전사적인 관점에서 팀과 개인 간 성과를 연계하여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연구보고서 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업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제도적인 운영을 해야 함.
- 승진대상자 선정에서 평가결과를 최저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3년 평균 B이상 혹은 60점 이상).
- 승진심사 기준에서 경력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평가결과를 100%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노사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부기준 임금인상률을 준수하고 성과중심 임금 체계를 강화함.
- 각종 양식이나 지침 개정 전 전문적 노무 자문을 받는 등 노무관리 역량이 강화되어 있음.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갈등관리로써 임금차별 등을 시정함.
- 시간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전 직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이 활발함.
- 1사 1촌 농촌사랑운동 및 일손돕기 프로그램, 지역아동복지센터 시설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노사화합을 도모함.
-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조항인 근무상·업무상 재해나 질병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의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 2013년 총 10회에 걸친 노무담당자의 외부 노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총 5회에 걸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사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함.

〈단 점〉

- 공무원 규정과 비교할 때 휴가일수 규정이 느슨함.
- 적극적 갈등관리를 통해 임금협상이 이루어졌으나 성과연봉 차등률은 2015년에 기준을 맞추는 한계를 가짐.
- 고용세습과 관련한 규정 등 단체협약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상존하고 있음.

〈개선 및 권의사항〉

- 단체협약 중 근무상 업무상 재해나 질병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의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나 타결이 필요함.
- 단체협약 제93조 제4항(‘사용자는 조합원이 주택구입, 유지, 보수, 개선 혹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가 금전적, 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노사관련 교육에 연구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수시대화창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도화하여 의사 소통이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비합리적인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별직원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 중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율은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50%로 편성되어 있어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28%, 2014년 27%로 연구회에서 제시한 평가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17%, 2013년 11%로서 연구회 제시 기준(10~20% 범위 내)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집행비율은 96%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수시연구과제 11건 중 전액 외부 위탁용역비로 지급된 과제는 없음.
- 퇴직예치금은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 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0.7%)은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1,257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2011년부터 능률성과급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여,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됨.
- 기본연봉에는 직무급과 표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적정함.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30%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봉 책정방식이 비누적식으로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연봉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 또한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 산정방식을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맞게 누적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연봉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 또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비간부직의 경우 성과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최저 $\pm 15\%$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 각각 10%,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결산잉여금에 대한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하고 있으며, 등급별 인원배분비율도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간부직의 경우 성과연봉 지급 시 최고-최저 $\pm 15\%$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어 평가기준($\pm 33\%$ 이상)을 준수하지 못함.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기여도(재정 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간부직 성과연봉에 대한 차등지급률이 평가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능률성과급이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업적평가를 중심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국회 지적사항 5건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었고, 5개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과제 중 4개가 완료됨.
- 국회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공통 지적사항으로 조직개편을 위한 변경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등 공통 지적사항을 성실히 개선함.

- 평가결과 및 미흡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 지적사항 개선에 대하여 전문성과 업무적합성을 고려하여 부서별·개인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기관평가 TF를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가 강화됨.
- 능률성과급 지급기준이나 지급재원 등에 대한 지적부분이 개선됨.
- 교육훈련에 따른 참여실적 등을 실적점수로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장려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급여체계 동일화에 대한 노사 합의를 완료하고 개선함.
-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원(12회) 등 외부 연구자와의 소통을 확대함.

〈단 점〉

- 기본연봉, 성과연봉에 대한 평가결과(지적사항)가 임금체계 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누적식 연봉제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사협의를 이루어진 상태임.
- 성과연봉과 관련하여 간부직 차등지급 기준 미준수한 상태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에 대한 구체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개선성과와 경영에서의 활용 수준도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성이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채용공고 시 장애인 고용 우대조치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 채용과 고용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관계자회의, 복지원상담, 교재비치, 실무자 워크숍 등), 장애인 신규채용 3명 실적이 있음.
- 장애인 채용을 위한 장애인고용공단 방문, 장애인고용공단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도 신청 및 운영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나, 201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흡함(1.5%).

- 장애인직원 결원 시 즉각적인 보충과 채용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변화된 기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대책회의, 계획수립, 관련 단체 방문 등).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을 채용계획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결원 시 보충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청년인턴 4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음.
- 청년인턴 근무관리 영역에서, 교육지원(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근무평정, 취업지원 활동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음.
-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 매뉴얼, 멘토링, 고충해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청년인턴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턴 전용 오리엔테이션 매뉴얼 및 멘토링 양식을 개발하고, 고충해결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턴운용의 적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 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 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 등을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규정이 있고, 구체적으로 시행하였음.
- 국가보훈처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
- 2013년도에 1명의 국가유공자를 신규 채용하였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비율을 현격하게 미달성하고 있음(1.7%).
- 고용률 미이행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고용달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대책회의, 계획수립, 관련 단체 방문 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 휴가 사용 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관련 독자적인 규정이 존재하고, 고용·임금·복무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 2013년 9월 기존의 무기계약직 직원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존재했으나 2013년 7월부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단체교섭을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였음.
- 2013년 임금단체교섭에서 6개월 초과 근무자의 임금을 해당직급의 정규직 임금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단체협상을 체결하였음.
- 처우부분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
- 연구원 차원의 구체적인 비정규직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기관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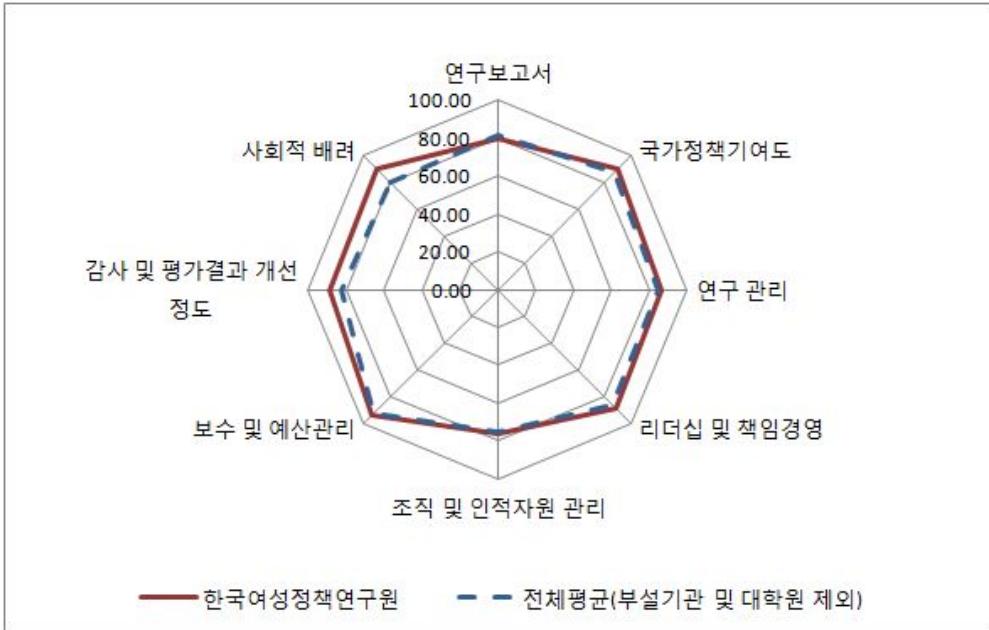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E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A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A |
| |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
| |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우수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A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B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A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A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B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A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A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D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B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다문화정책의 중·장기적 연구 방향을 제시한 점은 고무적이며, 관련 제도의 통합적 연구, 해외 비교 연구 등을 통한 심층적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함.
-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성폭력 인프라 관련 법률 정비,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안 등 주요 국가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 여성 친화정책 전략 사업, 성인지 예산 운영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 방안 연구를 심화하고, 성인지 의식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계층별, 직업별, 성별로 적절하게 시행하고 관리하는 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기본연구과제의 경우 분야별로 체계적이면서 다양하게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평가 - 과제심의 - 선정·배분이라는 3단계 절차를 거쳐 과제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수시과제의 경우 원장이 수시과제 책임을 맡는 등 과제관리에 문제가 있음.
- 협동연구의 추진체계는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고, 적정규모의 협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은 돋보이며, 특히 협동연구 선정과 평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 연구원 특성에 적합한 협동연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연구기관 간의 참여연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부 평가위원 풀을 전공·분야·소속기관별로 구성하고 있음.
- 미션과 비전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점이 체계적이며 스토리텔링 방식의 홍보 전략도 긍정적임.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배포 전략이 미흡하며 피드백을 통해 개선한 실질적인 사례가 부족함.

[경영 분야]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 및 소통,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노력은 뛰어나나, 융·복합 과제 발굴 수행 및 표절검사시스템의 인사고과와의 연계가 부족함.
-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관 내·외의 의사소통도 활발히 함. 현안문제 선정 등에 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연구기관과의 실질적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추진계획별로 도전과제 또는 보완과제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하나, 세부 추진과제별로 성과목표와 달성도를 상세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효율적 운영 실적에 대한 정량적 효과 분석은 우수하나,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조직 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의 제시가 미흡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 지표는 해당 지표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의 모든 지표를 계량화하고 있으나, 연구직에 대해서도 팀KPI를 통한 개인성과를 부서 및 경영목표와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미체결상태의 단체협약을 노사실무협상을 통해 체결하고 육아휴직과 관련된 갈등관리를 해결하였으나 노사협의회와 노사간담회 외 수시대화창구가 정례적으로 개설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 일부 불합리한 규정이 남아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의 집행이 없는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예금 등에 적절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성과연봉과 결산상 능력성과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을 비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점이 있음.

- 실효성 있는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추진절차를 구성하여 지적사항 개선노력을 수행하였으나 개선실적이 모호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개선내용이 차년도 경영에 반영되고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구체화되면서 개선실적이 개선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중증장애인 고용실적(1명)이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1.9%),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함.
- 청년인턴계획 대비 채용 목표 달성도는 양호하고, 청년인턴 운용실태가 양호함.
- 국가유공자 고용률은 6%로 평가기준(6%)을 준수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돋보이나, 비정규직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정규직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 차원의 비정규직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결혼이민자의 정착 과정과 가족관계의 변화 과정, 장기적 사회통합의 문제를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차원에서 중대하게 문제제기한 점은 매우 유의미함.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관련 법제도 및 대책 방안에 대하여 문헌연구, 외국 입법례 및 정책 분석, 전문가 심층면접과 자문회의, 해외 인신매매 관련 현지 출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 개정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노력함.
- 젠더 관점에서의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인뿐만 아니라 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 패러다임을 재점검하고 변화를 추구한 점이 우수함.
-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10인 미만 영세기업인 점을 고려한 여성 고용의 맞춤형 인력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특히 중소기업 인력 정책이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에 특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실증적, 사례적, 통계적으로 적확하게 직시하였고 실효성있는 정책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한 점이 우수함.

<단 점>

- 일부 보고서의 경우 전반적인 논리 체계가 산만하고, 방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병렬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독자들이 핵심적인 논지에 초점을 두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 성과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필요, 통계 모형을 통해 양적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나 정책 제언은 설문조사의 결과에만 의존하여 현실 적합성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 제도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중심의 연구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고 일반적인 내용의 결론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 전반적으로 선행연구, 국내 관련 제도의 통합적 연구, 국외 제도 비교 분석 연구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 프로그램의 발굴 노력이 필요함.

- 젠더 통합적인 다른 분야 정책이나 선행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심화시키고 선진국의 젠더 통합적 정책 분석에 대한 연구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정책의 수혜자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참여자를 면담하거나, 관련 사례 분석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정과제 추진 지원을 위해 3대 TF, 정책지원 특임부서, 8개 작업반, 여성가족부 지정 3개 위탁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상호협력을 통해 정책현안을 효율적으로 지원함.
-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건강한 가정 만들기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적절하게 배분함.

〈단 점〉

- 국정과제를 다소 협소하게 해석하여 적극적으로 연구인력을 운영하여 연구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함.
- 핵심추진체계에 주요 연구 인력의 50%만을 투입하는 것에 그침.
- 4대악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이행 점검에 참여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여성경제활동, 다문화 등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슈와 관련된 인력 확충방안 모색이 필요함.
- 오랫동안 개발·연구한 여성 및 가족 관련한 주제와 국가정책, 국정과제를 결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여성폭력 관련법 및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이행 점검, 제도관련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함.
- 여성정책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대정부·대국민 설득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전체 국정의

관점에서 여성정책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자리매김 시킬 수 있는 탄탄한 논리와 근거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과제와 사업 중심의 소개의 편중에서 벗어나 과거 수행 과제와의 연계 및 비교를 통해 사업성과의 변화 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여성경제 활동 촉진TF, 여성폭력 방지TF 등을 구성하여 현안과제에 적극 대응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위·수탁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과 여성친화정책전략단을 상시 가동하여 포럼이나 이슈브리프 등을 발간하고 정책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 분석, 정부3.0 과제 발굴 등 여성·가족 관련 수시 요청 과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함.

〈단 점〉

- 수탁연구과제 중심으로 과제가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선제적 대응이 다소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 우려됨.
- 수시요청의 대부분이 여성가족부에 국한되어 있어 대응방향이 편향되지 않았는지 우려됨.
- 여러 행정 기관 등과의 관련성이나 대국민적 홍보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주제들을 현안과제로 개발하여 정부기관에 의제화 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함.
- 2014년에는 국가정책 주제를 개발하고 대안적 방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정부가 현안과제를 넓혀나가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실현시키는 정책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조달, 자원배분 관련 사회구성원 합의의 측면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함.
- 대국적 홍보 방안을 다양화, 다층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양성평등이나 여성과 관련된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긴밀한 협의 과정을 밟았음.
- 여성가족부 외에도 사안 별로 여러 정부부처와 협력하였음.
- 다른 연구기관에 비하여 비교적 국회와의 협력 정도가 높아 입법을 위한 활동들이 많았음.
- 국내 네트워크에 있어서 40~50개의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의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운영 실적이 많음.
- 국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아시아 나라들과 다양한 사업 체결을 하고 있음.

〈단 점〉

- 여성가족부 정책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경찰청(성폭력, 가정폭력) 등 정부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며, 여성가족부 외 타 부처와의 협력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부족함.
- 융·복합 연구 및 협력 사업의 구체적 성과가 드러나 있지 않음.
- 특정지역 등 제한적 정책네트워크 활동에는 한계를 보임.

〈개선 및 건의사항〉

- 노동, 교육 등 분야와 관련된 정책네트워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등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몇 년간 여성정책 추진이 정체되어 있던 중, 2013년 새로운 여성 및 양성평등 정책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국민들이 편중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고객층과 교류 사업 등을 넓혀나가고, 상설적 활동과 교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국외 사업에서는 MOU를 체결하거나 일회성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계속 개발하며, 국내 사업에 외부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융·복합 연구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에 대해 보다 널리 알리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의 하나이므로 국가적 지원방안을 제안한 점은 긍정적이며, 현행의 아동양육비 관련 제도를 심화발전시킴.
- 여성가족부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외에 다양한 정부부처, 특히 국토교통부와의 정책화 과정이 중요한데 정책연구자와의 협의 과정을 충실히 거쳤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대상별로 존재하는 특수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은 2000년에 ‘유엔 국제 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외정서’에 가입한 후 최근까지 국내적으로 비준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성폭력인프라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종사자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시스템을 갖추고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 경력단절여성의 특성별·대상별 새일센터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여 경력단절여성 문제에 대한 국정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일정 정도 모색되었음.

〈단 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수당 제도는 오히려 보편적 국가정책 수행에 역행할 우려가 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은 늘어난 반면 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개념의 도입은 중요하지만, 국가정책과 연결되는 설명이 부족함.
- 성폭력 예방·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인프라 개선방안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적응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리는데 반해 현행 제도의 갈등과 문제점의 원인 등이 충분히 진단되지 않음.
- 새일센터 담당자들이 각 계층의 여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능력과 정보, 동원력이 필요한데 새일센터의 융·복합형 인력과 지속적인 자원 등의 확보 문제가 불분명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양육비는 중요한 물적 토대가 되지만, 정부와 함께 사회적인 꾸준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일반적인 가족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상의 개선 노력도 함께 필요함.
- 다양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수혜층에게 이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사각지대 정책방안이나 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등은 단기적으로 실적내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므로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정부나 정책연구네트워크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국가재정 마련, 정책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대국민 홍보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하며 실질적인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함.
-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과 근접한 직종이라는 조건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조건이 정규직 조건 못지 않게 중요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과 법제도적 노력, 여성들의 인식 전환 노력도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함.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 예산 분석·평가사업(Ⅲ)’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국가 및 지방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분석·평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행하는데 기여함.
- 위 연구과제는 대상사업 선정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함.
-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등도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매뉴얼을 마련함.
- 국제사회, OECD 국가들 중에서 낙후된 한국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였고, 한국형 성인지 예산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함.

〈단 점〉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Ⅲ)’은 예산을 중심으로 한 분석·평가 사업이므로 결과와 관련하여 실제로 성인지 목표 실현을 점검할 틀은 부족함.
- 위 연구과제는 획기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예산에서 성인지도를 보는 것은 재정 지표의 일진보이지만, 일정 정도 시행이 되면 과정에서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결산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상시 가동하여 사회 전체가 양성평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성인지 예산 운영을 둘러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결과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부여해야 함.
- 국민적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국민 브로셔를 발간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체감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정부 관계자,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장 점〉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III) :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은 국가 및 연구기관의 인력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의 협력기관의 인력들과 적절한 협력을 통하여 아태지역 사업으로서의 목표와 내용을 분명히 함.
- 인력 활용에 50% 미만, 회의와 홍보, 협력 사업 등에 50%를 투입하고 있어서 예산도 적절히 배분하여 관리함.
- 국내 ODA 사업 관련 정부부처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피드백된 정책을 반영하고, 사업 집행의 환류를 통해 입법화 사업도 전개함.
-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은 정부유관부처나 여성 NGOs와의 정책네트워크, 협력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남녀노소로 구성된 생활체감정책단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용함.
- 2013년 상황에 국한하여 여성친화정책만을 제시한데에서 그치지 않고 통일분야에서의 여성의제를 개발하거나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성주류화 목표에 부응함.
-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위탁’ 사업계획추진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위한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위탁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과 분야별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함.

〈단 점〉

- 한국 ODA 사업은 국정과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에서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함.
- 일회적인 사업, 워크숍과 같은 회의 사업을 중심으로 성주류화 의식, 젠더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는 어려움.
- 여성친화정책전략사업에서 연간 상·하반기별로 실적 보고를 통한 효과성을 형식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실제 여성친화적인 내용은 무시된 채 업적주의, 수량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기도 전에 여성친화피로감을 줄 수 있음.
-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실적표를 보면 2011년에 비하여 2012년 성차별적 요인이 사라지고 양성평등적 정책이 급증하게 되었음. 이는 큰 성과이지만, 1년만에 급증하는 결과는 현실의 전변을 의미하는지, 매뉴얼대로 정책 작성을 했기 때문인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한국 ODA 사업이 전개되고 있어서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사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ODA 부문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한국의 여성 ODA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ASEAN 대학내 젠더 관련 강의개설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사업 등은 과거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어서 정부사업으로 채택될 수는 있으나 ODA의 기본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이므로 현지국가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업들을 개발사업으로 발굴·발전시켜 나가야 함.
- ODA 사업의 지속성, 상호소통력을 높여나가야 하므로 피드백 과정에는 국내 정책네트워크만이 아니라 국내·외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점검하고 진단하여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성인지 의식교육,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계층별, 직업별, 젠더별로 개발 및 시행하여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생활체감정책단 활동에서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단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들이 여성친화정책의 보급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자연스럽게 대국민적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소폭 낮아짐. 상세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탁연구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기본연구는 소폭 낮아짐. 상세업무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기본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수탁연구, 위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순임.
-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정부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기본연구와 수탁연구는 전체평균에 비해 높지만, 위탁연구와 정보제공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낮음.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차원별로는 내용품질과 미시적 성과를 제외한 다른 차원들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고, 품질요소 중에는 전문성, 효과성, 준비성, 구비성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사회적 만족과 사회품질 차원의 점수가 전체 평균에 비해 낮으며, 품질요소 중에는 전문성, 효율성, 대응성, 합리성, 공정성, 공익성 점수가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회의 시 참석자 의견 경청, 적극적 의견 반영 노력’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결과물의 객관적 기술’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연구목적 정확히 이해’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 관련 정보제공과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위탁연구에서는 ‘고객 문의와 요구사항에 친절히 응대’ 항목의 점수는 높고, ‘관련 지침·절차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 항목의 점수는 낮음. 정보제공서비스의 경우 ‘검색기능 구비’ 항목의 점수는 높고, ‘지속적 고객관리 노력’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담당자 지정 및 시스템 구비 등을 통해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제 구축, 고객들이 의견을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확인 및 정비, 고객과 담당자간의 접촉(전화, 이메일, SNS 등)이 용이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함. 상세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와 위탁연구는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으며, 수탁연구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짐. 점수가 오른 상세업무 중 기본연구 점수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더 큼. 상세업무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위탁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순임.

-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정보제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세업무가 전체평균에 비해 높으며, 전체평균 대비 수탁연구의 점수 차이가 다른 상세업무들에 비해 더 큼.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차원별로는 내용품질, 환경품질, 거시적 성과 등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고, 품질요소 중에는 전문성, 성실성, 구비성, 편리성, 합리성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높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보고회와 자문회의 등 일정 관련 사전 협의가 잘 이루어짐’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유 위한 노력’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연구수행 정도 공유 기회의 적절한 활용’ 항목의 점수는 높고, ‘고객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의 편리함’ 항목의 점수는 낮음. 위탁연구에서는 ‘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보유’ 항목의 점수는 높고,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의 편리함’ 항목의 점수는 낮음. 정보제공서비스에서는 ‘해당 분야의 연구활동과 정책발전에 기여’ 항목의 점수는 높고, ‘온라인 정보이용 시 접속과 시스템 안정적’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이 문의 및 요청사항을 제시하기 편리하도록 기존 고객과의 의사소통 채널 관리 강화와 고객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 지정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5개 분야별로 체계적이면서 다양하게 과제를 발굴함.
- 3년 간의 연구사업 로드맵에 따라 연구과제를 충실히 발굴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관련성이 매우 높음.
- 발굴된 과제에 대해, 제안평가 - 과제심의 - 선정·배분이라는 3단계 절차를 거쳐 과제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선정과정이 체계적이고 중층적으로 조직되어 있음.

〈단 점〉

- 최근 5년 간 기 추진과제 목록 제공이나 정책연구 중복시행 방지 프로그램(프리즘)을 활용하는 등과 같은 발굴과제의 중복성을 체크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함.
- 외부 의견 수렴 결과 발굴된 과제가 2건에 불과함.
-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과제심의 및 선정·배분위원회에서 탈락 및 수정 반영된 실적이 미흡함.
- 심의 과정에서 학계 이외의 외부 전문가(여성단체 등)의 참여가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발굴된 과제의 중복성을 체크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부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일반 시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과제제안평가위원회에 여성단체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과제심의 및 선정·배분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개진되고 반영되었는지를 기록하고, 탈락시 그 사유를 적시할 필요가 있음.
- 기초과제는 허용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하되, 정책과제는 정책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연구관리가 필요함.
- 연구 분야의 설정은 연구과제의 발굴과 선정 범위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 여성고용분야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과제선정배분위원회와 과제심의위원회에도 여성단체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정부부처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의견 반영 비율이 80.0%로 매우 높음.
- 수시연구과제 수가 많음(20개)에도 불구하고 과제종료 즉시 보고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함.
- 외부 정책수요 대응형 과제의 경우, 해당연구를 요청했던 부처담당자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보고서 내용에 반영함.
- 전반적으로 연구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의 발굴위원회와 선정위원회가 통합되어 있어서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움.
- 원장이 수시연구과제 책임을 맡는 사례가 발견됨.
- 수시연구과제의 수가 타 연구원에 비해 다소 많은 편임. 수시연구과제의 경우 시의적 요구로 인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제의 수가 많고 예산도 18.3%에 달해 비중이 매우 큼. 이는 정부부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연구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연구성과의 질도 보장하기 어려움.
- 모든 수시연구과제를 진도보고 등을 통해서만 관리하고 있어 보고서 질 관리에 한계가 있음.

〈개선 및 권의사항〉

- 과제심의기능과 과제선정·배분기능을 분리하여 위원회를 두고 각각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로 제기되는 부분 중 기본연구과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과제는 변경하도록 하고 연구원들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부처의 요구를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3개월 이상의 수시연구과제는 원칙적으로 중간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도관리 및 질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중간보고서 심의 대신 진도 관리로 대신하고 있으나, 3개월 이상의 연구에서는 중간보고서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연구결과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의 추진체제는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특히 적정규모의 협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은 돋보임.
- 협동연구 선정과 평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고 있음.
- 협동연구제안 및 발굴 노력은 다양한 기관과의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잘 확립하고 있음.
- 협동연구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연구사업규정을 통해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있음.
- 제시된 협동연구의 필요성과 추진체제는 적정하게 이루어짐.
- 협동연구의 과제 수행 시 협동연구기관 간 상호협력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짐.

〈단 점〉

- 협동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보고서 평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3억원 이상의 대형과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협동연구 수행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이 미흡함.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II) :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 제도 시행과정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의 경우 대형과제인 관계로 방대하여 연구원들 간의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개선 및 권의사항〉

- 연구원 특성에 적합한 협동연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함으로써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체평가 과정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인정됨.
- 자체평가 절차와 규정을 제도화하여 연구사업 유형별로 평가표를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음.
- 2차에 걸친 이의신청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의신청의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음.
- 사업계획평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평가의 단계별로 구체적인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이 제시되어 있음.
- 연구관련 사업과제에 대한 질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방향은 바람직함.
- 평가위원 구성방법과 선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화하고 있고, 특히 ‘여성정책전문관련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고 이 중 과제연관성, 전공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4배수 추천 후 평가단 구성위원회에서 2배수를 다시 선정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위원 구성을 하고 있음.
- 평가위원 위촉단계별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최종보고서 평가에서 외부 평가위원이 평가(75% : 원내 1인, 원외 3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잘 준수하여 객관성을 가지고 있음.

- 최종보고서 평가에서 외부 평가위원이 평가를 전담하게 하고 내부 평가위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위원별 역할이 잘 배분되어 있음.

〈단 점〉

- 평가위원 개개인의 질적 평정을 실시하였다 하나, 평점 방식과 점수부여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음.
- 평가단계별 평가방법, 평가기준을 과제 5점 척도에서 10점 척도로 개선하였다고 하나, 평가보고서상 이를 확인할 수 없음.
- 외부 평가위원은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공무원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선정한 평가위원에 대한 인적 구성을 확인할 수 없음.

〈개선 및 권의사항〉

- 연구관련 사업과제에 대한 질적 평가 방식의 보완이 필요함.
- 평가단계별 평가방법, 평가기준을 5점 척도에서 10점 척도로 개선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선정된 외부 평가위원의 인적구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관리규칙’, ‘통계사무 및 원시자료 서비스 지침’, ‘연구발간물 작성 지침’, ‘학술지원고투고지침’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지식재산 보호 등 규정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으며, 간행물에 의해 공표된 통계자료의 이용에 대한 원칙을 2013년도에 추가로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
-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인지 통계시스템’은 매년 업데이트하여 여성정책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음.
- ‘2013 KWDI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홍보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추진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발굴하여 전년대비 향상된 실적을 달성하였음.
- 성과확산을 위해 KWDI 홍보자문단과 정책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음.
- 홍보TF를 통해 ‘30가지 여성정책 이야기’ 시리즈를 제작하여 일반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창출하였고,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문자음성변환코드(Voice Eye Code)를 도입함.

- 홍보TF를 별도로 구성하고 수시 전략회의를 통해 성과확산을 수행함.
- 미션과 비전에 맞춰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점은 체계적임.
- 국내·외에 적정한 수준의 MOU를 체결하여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은 긍정적임.
- 홍보채널별로 2012년도 실적과 2013년도 실적을 비교하고 성과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임.
- 심포지엄·세미나·포럼, 뉴스, 전문자료, 인터넷, SNS, 정책자료집, 이슈페이퍼, 정기·비정기 간행물을 통한 연구확산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향상되었음.
-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원시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인포그래픽과 스토리텔링 등 첨단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성과 확산을 하려는 노력은 장점임.
- 인지도조사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중·장기 홍보계획 수립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임.
- 조직의 규모에 비해 해외 확산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기의 성과도 달성되었음.

〈단 점〉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 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홍보·확산 계획에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단기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홍보·확산 실적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계량화된 실적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양적 목표에 치중하여 효과 분석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함.
-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큼.
- 배포방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이슈페이퍼 발간시기가 하반기에 거의 집중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보완·개선해 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시스템의 피드백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시스템의 활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당해 연도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둔 성과지표와 단기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홍보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피드백을 실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피드백을 통해 진정한 제도개선 사례 등의 실질적인 성과물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성과확산 수단의 다양성도 좋지만 연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과 배포대상 선정, 유지, 취소를 연구보고서의 효과적 활용도를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배포 전략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이슈페이퍼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실시하여 활용도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해당사항 없음.

〈단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0.75편(33.68건/45명), B등급으로 저조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전년도에 이어 연구원의 논문 게재 실적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 미흡하므로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잘 정리되어 있음.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지원이란 현안과제가 잘 선정이 되었으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연구윤리 준수 강화란 현안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보상체계를 동일하게 하였음.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연구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책, 업적평가보상시스템의 개선이 잘 이루어져 있음.
- 직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인 1교육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장·단기 연수를 실시함.

〈단 점〉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서 보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함.
-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현안문제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았음.
- 대내·외 경영여건분석과 내·외부 의견수렴과정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미흡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 과제의 개발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융·복합 과제의 근거가 다소 부족함.
- 연수자 선발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흡함.

〈개선 및 권의사항〉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각 문제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정책수요와 연계한 현안문제 선정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를 먼저 정의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제적으로 접근하는 융·복합 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개인별 역량강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절차의 제도 보강이 필요함.
- 인재충원을 위한 학력차별철폐가 기관의 특성상 바람직한 제도인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이 잘 정리되어 있음.
- 원내·외 의견 수렴을 통하여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해결한 점이 돋보임.
- 직군별, 부서별, 직급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룹별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이 뛰어남.
-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및 협력 추진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행정부뿐만 아니라 법원 및 국회와의 협력활동도 수행함.
- 정부기관 외에 학회, 대학, 여성정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등과도 학술교류 및 공동학술 활동을 수행함.

〈단 점〉

- 상향식 의사소통 채널이 비공식 채널(개별 면담)로 많이 이루어져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운영은 기관의 운영상 필요한 것이므로 기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해외 네트워크 확보 및 협력에 있어서,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다소 부족함.
- 기관발전을 위하여 언론과 관계되는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기고 토론 등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활동에 있어 주요 언론사의 활용도가 떨어짐.

〈개선 및 건의사항〉

- 상향식 의사소통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직종별, 직급별 대표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소통은 주로 수직적 소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협업을 강조하는 기관장의 정책방향에 비추어 부서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평적 소통통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관 및 기관장의 언론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고 특히 영향력이 큰 언론사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경영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시스템 구비가 잘 되어 있음.
- 각종 위원회에 노조위원을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임.
- 정기 감사 시 외부 감사인을 활용하여 감사의 객관성을 높임.
- 업무담당자별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성 및 투명성을 높임.
- 연구윤리 확보 및 준수를 위한 체계 구축이 잘 되었음.
- 유사도검색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구윤리 준수 시스템을 보다 개선하였음. 특히, 최종 보고서 인쇄 전 표절검색시스템(Copy Killer)를 활용한 검색을 2회 실시하도록 하여 점검을 강화하였음.
-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단 점〉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홈페이지에 마련된 각종 신고 센터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연구윤리 위반 결과(표절검사 결과 등)가 업적 평가 및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외부 연구진에 대한 조치는 불분명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각종 내·외부 신고 센터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와 연계하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법인카드사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평가위원회의 노조위원 비율 50%가 노사협력의 관점에서는 유용하나 노조의견의 과다반영 우려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표절 검사 결과를 연구자에게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업적 평가와 인사고과에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외부에서 참여한 연구진의 윤리위반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명문화하여 연구윤리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3가지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연계방안과 수단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였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기여도 실적 제고를 중요한 연계수단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함.
- 연구네트워크 강화 및 다변화 경영목표를 새로운 연구영역 발굴 실천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녹색교육, 창조경제와 관련한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연구수요조사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연구영역의 연구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한 점이 양호함. 또한 융·복합과제 발굴 실천계획과의 연계수단으로 일반사업의 신규 협동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기관과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과제 선정시 융·복합과제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 하도록 한 것은 적절함.
- 경영목표별로 기관의 당면현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들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관의 당면현안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연계성이 우수함.
- 경영목표는 기관의 당면 현안들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경영목표 추진계획별로 새롭게 추진하거나 강조하여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도전과제 또는 보완과제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함.

- 연구결과가 입법 또는 규정화 등 정책에 반영된 결과를 나타내는 정책기여도 평가 지표를 설정하였고 정책기여도 실적도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나타냄.
-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106%에서 138%로 계획한 성과목표치를 모두 초과달성함.
- ‘성평등 정책 연구의 현장성 제고’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인 성평등 및 여성인권 보장, 성평등 관련 제도 정착 연구, 여성과 가족 정책 연구를 통하여 성평등정책이 현 정부의 이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타당함.
-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통일과 여성 및 가족이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개발하고 가족친화기업, 장애인 고용 확대, 직장보육시설 운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임.
- 여성과 가족정책 연구 분야에서 입법화 및 정부부처 안전에의 정책반영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

〈단 점〉

- 성평등 및 여성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진전되어 있으나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 노력은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함. 여성과 가족정책 연구가 중요한 실천과제로 설정되어 있으나, 성평등에 관한 연구에서 나아가 인구감소, 다문화 현상, 이혼의 증가 등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미래지향적 연구로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연계방안이 다소 부족함.
- 주요 환경 변화와 이들 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의 분석내용과 수준이 다소 미흡하며,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연계 수단이 다소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음. 또한 구체적인 추진 조직과 추진 일정에 대한 기술이 부족함.
-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9대 중점추진과제별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추진과제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시가 없음.
- 국내·외 산·학·연 협력관계 체계화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협동연구 등 연구기관 간 실질적 협력은 다소 미흡하며, 호주의 뉴캐슬대학교와의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실시하였으나 미래지향적 연구를 위한 다변화된 선진국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부족함.
- 여성 정책연구의 국제 공조 및 글로벌화를 위하여 국제심포지움 및 국제 연구공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성평등 및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에서 나아가 미래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가족과 관련된 연구를 좀 더 강화하고, 융·복합적 연구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여성가족부

이외의 관련부처와의 협력 및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 환경 및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보다 강화하여 현안을 도출하고, 연계방안을 보다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추구하고 있는 창의적 연구과제 발굴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융·복합적, 창조경제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실천계획에서 연구성과의 개방과 공유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시스템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중점추진과제별로 제시하는 동시에 세부추진과제별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세부추진과제별로 성과목표와 달성도를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산·학·연 협력관계 체계화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융·복합적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 가족 관련연구를 위해 호주 이외에 북유럽 등 선진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계획에서 국내·외 특히 해외 네트워크 강화 과제에 대한 내용이 보다 강화 및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연구네트워크 강화 및 다변화’라는 목표에서 융·복합연구, 창조경제 관련 과제를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활발한 활동과 연구성과를 고려할 때, 연구성과의 홍보 강화를 위한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성과의 성격상 비계량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비계량지표가 다소 제시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각 성과 목표치를 적절한 계량지표로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원내·외 설문조사, 경영전략회의 및 성과관리위원회의 선정 등 선정절차가 합리적이며, 고객만족도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있고 과제의 중요성, 전략과의 연계성 및 과제의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가중치를 설정하는 등 중점추진과제 선정이 체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짐.
- 여성인권 안전에 관한 연구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안)에 반영되고, 여성 불평등 및 취약분야 연구가 학교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반영되는 등 여성정책을 통한 성평등 및 여성인권 보장 중점추진과제의 연구내용들이 정부의 정책 및 입법에 반영되어 정책기여도 실적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중점추진과제들의 선정배경 및 이유가 적절하고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이 잘 반영되었음.

〈단 점〉

- 여성과 가족정책연구 중점추진과제는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한 일·가족 양립 연구, 돌봄의 사회적 지원 연구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연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술발표실적 및 학술지 게재실적 등 연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상대적으로 정책기여도를 높이는 정도로까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음.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 배경 및 이유들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기회위협, 강·약점과 연계되지 못하였으며, 일선 연구원의 의견 및 현장 여성 및 여성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함.
- 중점추진과제들에서 미래지향적, 융·복합적, 창조경제 관련 연구의 구체성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고객에 대한 기여도 심화 및 다변화와 관련하여 모든 중점추진과제의 정책 기여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정책고객을 여성가족부에서 타 부처로 확대하면서 국제기구 등 해외로부터 다양한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대처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각 과제의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중점과제 2개가 성평등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소통과 화합을 통한 성과관리라는 경영목표에서 사람중심의 인력관리측면으로 특히 누적식 연봉제 등의 성과 중심 평가·보상 시스템과 연구 인력의 동기 개발 및 교육훈련 등이 중점추진과제 내에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 선정에 있어서, 내부 연구원 및 여성관련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고유기능과 연계한 환경변화 이슈는 대체로 적절함.
-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효율적 운영 실적에 대한 정량적 효과 분석이 우수함.
- 경영목표 달성도 점검,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가동 실적이 우수함.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연구사업 추진 및 정부 대응성 제고를 위해 각 연구실의 연구주제와 국정과제의 연계성을 강화함.
-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대응으로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대책TF, 여성경제활동촉진TF, 정부3.0 여성미래전략TF를 구성하여 운영함.
- 급변하는 가족 내의 환경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 강화 요구에 맞추어 가족 정책 및 성주류화 정책과 관련된 여성친화도시건설팀단을 운영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지정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함.
- 외부 요구사항 10건, 내부 요구사항 13건 등 총 23건의 제도를 개선함.
- 승인통계작성기관으로서 통계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표절검색 시스템(Copy Killer)의 도입을 통해 연구과제 수행의 효율성을 증대함.
-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각 경영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영목표별 3가지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운영함.
- 연구네트워크 강화와 다변화를 위해 정부부처와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결과 확산에 노력함.
- 경영목표 달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적 연구환경 변화, 인력운영의 합리성이 적절히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인력채용을 실행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통일한국에 대비한 여성정책 및 법에 대한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해당 전공 우수인재 확보 노력이 우수함.
- 새 정부의 정책수요에 맞는 사회정책학, 사회학, 북한학, 경영학 전공자를 채용함.
- 인력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직·행정직 모두 각 직급별 자격기준이 있으며 자격 기준을 충족한 인력을 채용함.
- 2013년 현재 예산상 정원 97명을 모두 충원하였고, 연구직 비율 74.2%, 연구직 내 박사비율은 72.2%임.

-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채용과정상의 제한 및 차별을 없애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함.
- 채용절차과정에 외부 기관 인적성검사를 도입하여 직무능력 및 적성, 조직 융화력을 검증함.

〈단 점〉

- 제시한 환경변화 이슈는 중·장기 이슈이며, 2013년도에 국한된 이슈 도출은 미흡함.
- 외부 고객에 대한 정의 및 분류가 미흡함(정부부처와 연구회는 외부 고객이 아니며 지원기관).
-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조직 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의 제시가 미흡함.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 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중·장기 및 연도 인력운영계획 없이 인력을 운영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에 근거한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의 작성이 미흡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기준과 채용절차에서 실적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심사 과정에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는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기관 차원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의 핵심기능, 경영목표, 주요 이슈 등을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의 요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당해 연도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인력수급계획의 작성 노력이 필요함.
- 채용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외부 심사위원 초빙, 인적성검사 도입 등),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직원채용, 교육훈련, 휴직에 따른 자기개발 등 중·장기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함.
- 장기교육,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자기개발 및 능력개발을 통한 능력 향상을 지원함.
- 가족친화제도(유연근무제, 맞춤형 근무제, 홈데이,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 직장보육 시설 설치) 운영을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 및 만족도를 제고함.
- 연구직 대상으로 연구연가, 단기연수 제도를 운영하여 재충전 및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직 대상으로 단기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증진함.
- 전 직원 대상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통해 직급별·직종별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인별 수요조사에 근거한 교육, 단체교육, 부서 차원 교육 등을 실시함.
- 교육·연수 종료 후 교육이수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 만족도 및 효과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에 반영하고, 연구연수 후 결과물 게재를 의무화함.
- 교육훈련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1인당 5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1인당 평균 교육훈련비 사용액이 전년대비 51,406원 증가함.

〈단 점〉

- 중·장기 및 연도 교육훈련계획이 없음.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한 당해 연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미흡함.
- 연구직 교육훈련비에 대한 예산 배정이 부족함.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성과가 명확하지 못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노력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혁신학습활동 제도는 우수하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내부 구성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전문가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멘토링에 대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비연구직은 팀KPI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개인-부서-기관성과를 연계함.
- 평가시스템에서 연구직은 연구성과평가(76.6%), 비연구직은 근무평정(63.7%)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평가요소를 차별화함.
- 평가위원회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제고함 (행정직 원내·외 활동평정을 4.4%에서 2.0%로 줄여 업무활동에 집중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 지표는 해당 지표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의 모든 지표를 계량화함.
- 비연구직 업적평가 지표의 36.6%를 계량화함.
- 상대평가에 따른 조직 구성원 간 위화감 완화를 위해 평가등급 배분비율을 조정하고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수탁과제 평정점수, 원내·외 활동 평정점수, 근무평정관련 사항을 개정함.
- 학술지 게재를 위한 학회등록비 및 학술지 심사비용 지원을 통해 연구직의 논문 게재를 장려함.
-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직급, 보직자/비 보직자, 노사 등이 균등하게 참여하도록 함.
- 연구보고서 평가단 선정 기준 준수(4명 중 외부 3명), 평가자 익명성 보장, 점수차 보정제도(25점 차의 경우 재평가), 팀KPI 평가 및 근무평정 전산화를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함.
- 평가결과의 환류 및 이의 신청제도를 운영함(2013년 연구보고서 질평가 경우 재평가 2건, 직원평정 종합점수 이의신청 1건 발생).
- 휴직, 연구연가, 파견, 감사역 등은 평정 제외대상으로 단체협약 및 규정에 명시된 대상에 한하여 평정 제외자로 분류함.

- 직원평정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연봉, 능률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비금전적 보상(승진, 재임용, 포상, 교육연수, 연구과제 배정 등)에도 평정결과를 활용함.
- 평가결과는 연봉산정 및 인사고과에 100% 반영함.

〈단 점〉

- 근무평정표에 관리능력, 수행능력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평가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서 상대평가비율 중 B등급 비율 확대 개선 실적은 성과 제고에 역행하는 것임(평준화 유도).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환류, 별도의 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가 없음.
- 평가결과의 비금전적 보상 중 최근 3년 간 평균 C등급 이상인 자를 단기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함.
- 승진심사과정에서 원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3배수 내에서 선정하는 제도는 부적절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직에 대해서도 팀KPI를 통한 개인성과를 부서 및 경영목표와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논문 게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승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최저기준의 설정이 필요하고, 재임용제도를 비금전적 보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2012년 단체협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미체결상태의 단체협약을 8차례의 노사 실무 협상을 통해 1년 7개월 만에 체결함.
- 육아휴직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대체자 확보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나 갈등관리를 통하여 육아휴직기간 연장 문제를 타결함.
- 노무 관리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노무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비정규직 고용제도 개선을 위한 무료컨설팅을 받아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 2013년 단체협약을 통해 유일교섭단체권 조항을 삭제하고 경조휴가를 공무원에 준하여 조정하는 등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

-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의 수립 등의 노사협력 노력이 돋보임.
- 6회의 노무관리담당자 교육, 4회의 일반관리자 교육을 실시함.
- 4회의 노사협의회와 4회의 노사간담회를 실시함.

〈단 점〉

- 단체협약 제53조 제2항에서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 조합지부의 동의 없이 조합원의 임금을 종전보다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라는 조건이 현실과 부합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극단적 표현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노무교육 내용의 전 구성원 공유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기화된 수시대화 창구 개선을 통한 노사 의사소통 활성화가 필요함.
-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사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노사의 갈등이슈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제안제도,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종합하여 전체구성원의 하의상달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불합리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노사 간의 노력이 필요함.
- 노조조합원 이외 조직구성원의 의사소통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과제 사업비 비율은 54%이며, 2014년 예산도 50%로서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의 경우 17%, 2014년은 22%로 연구회에서 제시한 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의 경우 2012년 18%, 2013년 18%로 연구회 제시 기준(10~20% 범위 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13%를 편성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91%로 매우 높으며, 수시연구과제 20개 과제 모두 자체연구사업으로 위탁용역비 지급실적이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운영 자금과 구분되어 독립된 별도의 계좌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예산편성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에서 퇴직금 계좌로 이체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전체 예금잔액 38억원의 상당부분(27%)을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바, 2013년 1년 간 퇴직금 지급금액이 70백만원(예금잔액의 2%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보통예금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6%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163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2011년부터 능률성과급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여,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됨.
- 기본연봉에는 직무급과 표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4%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봉의 책정방식이 비누적식이며,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기준이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의 책정방식과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을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 지급 시 평가결과에 따라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33\%$, 비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15\%$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인원배분 비율 역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였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을 업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지급하고,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능률성과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등급 각각 10%,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3건의 국회 공통지적사항, 26개의 개선과제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고,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을 기술한 것은 장점임.
- 자체개선계획 초안에 대하여 전직원과 노동조합, 기관장 및 보직자가 참석한 경영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본적인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추진절차를 구성하고 있음.
- 인턴채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함.
-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개정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함.
- 단체협약 갱신을 완료함.
- 중증장애인 2명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함.

〈단 점〉

-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절차에 대한 기술이 미흡함.
- 평가지적사항 개선절차에서 제시된 구성원의 인식공유 및 의견수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제고에 대한 개선실적이 미흡함.
- 최종보고서 평가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개선실적이 미흡함.
- 지적사항 개선실적에 대한 기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를 가짐.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 개선이 기관발전에 기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이 필요함.
- 평가결과 개선체계의 구성에 있어 개선결과가 다음 연도의 경영에 반영되면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개선환류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 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 채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으며(다양한 채널유지, 채용박람회참여), 장애인직원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이 양호함(면담 6회 실시).
- 중증장애인 고용실적(1명)이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1.9%), 의무고용률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함(대책회의, 계획수립, 관련 단체 방문 TF 구성 등).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계획 대비 채용 목표 달성, 청년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 청년인턴 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실적이 양호함.
- 청년인턴채용 및 근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정하고 있으며, 오리엔테이션, 멘토링 프로그램, 고충해결제도운영, 근무평정, 인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취업활동 지원 실적이 매우 우수함.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 등을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고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고용 시 우대조치 관련 규정이 있음.
- 2013년도에 국가유공자 2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하여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실적이 인정됨.
- 국가유공자 고용률 6%로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6%와 일치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계약직직원관리지침)과 계획이 잘 정비되어 있음 (과거 지침 폐지하고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 마련).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 TF 구성운영, 원내·외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였음.
- 연구원 차원의 구체적인 비정규직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행정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이 존재하지 않지만, 연구직의 경우 임금차별이 존재함.
- 연구원에 비정규직이 소수에 불과하여 비정규직 운영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적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 차원의 비정규직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C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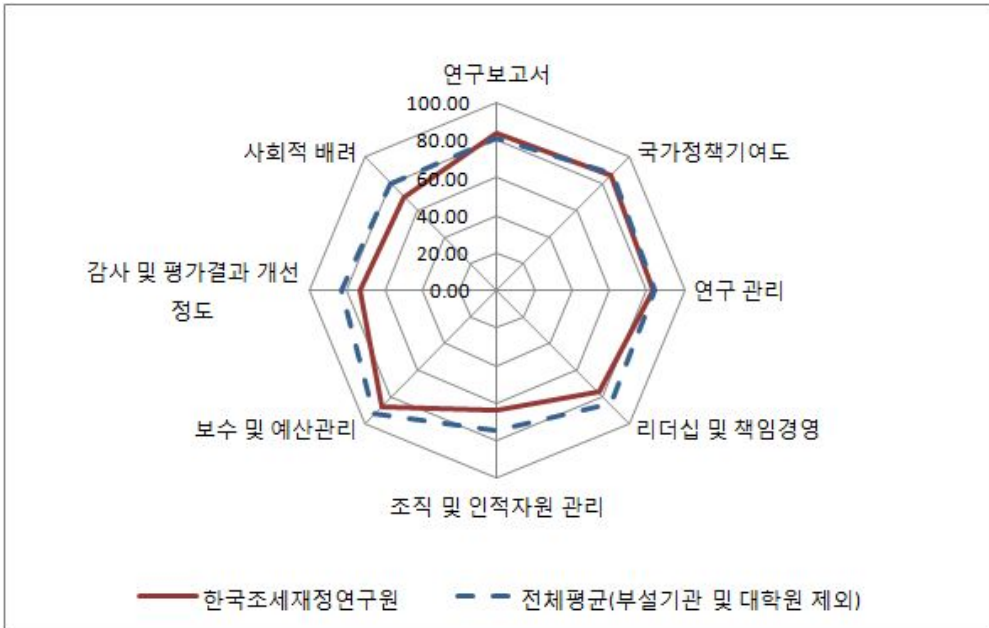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C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A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C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 | | | |
| | | |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B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C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C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D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C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D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C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C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F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A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노인보험을 분석한 점은 유의미하며, 연구 내용과 결과의 나열식 서술 방식을 개선하고 전달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부부처 및 국회와 매우 폭넓고 조직화된 협력 채널을 운용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협력을 심도있게 추진함.
- 재정 평가 기능의 강화로 기관 고유 업무인 조세 부문에 대한 기본연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수시연구과제 중 수탁과제의 비중이 높아 기관의 고유 연구역량과 중·장기적 전략 연구가 약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기본연구과제의 경우 중점 연구주제 선정과 수요조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했고, 과제선정 및 배분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일정비율의 과제를 탈락시키는 등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수시연구과제의 경우 과제 발굴노력이 다소 부족함.
-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재정전문가, 세정전문가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동연구를 통하여 국제화 노력, 정보교류를 적절하게 진행하였고,

산·학·연 협동연구 수행의 효율적 추진으로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개발도상국 대상의 지속적인 국제화 노력이 필요하고, 과제별 참여연구 인력의 역할 및 연구기관별 역할분담이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 단계별 평가체계 및 외부 평가위원 풀의 전공·분야·소속기관별 평가위원 구성 등을 지침에 맞게 시행하고 있음.
- 매체별로 특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환류형 연구성과의 확산체계를 구축한 점이 긍정적임. 또한 매체별로 목표고객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작하고 콘텐츠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장점이며,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49% 증가하였고 새로 구축한 재정패널 사이트도 긍정적임.

[경영 분야]

-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노력은 뛰어나나, 현안 문제 타개의 내용 및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고, 연구역량 증진의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며, 구성원과의 소통 노력의 구체적 내용 및 융·복합 과제의 발굴 수행 노력이 부족함.
- 기구의 통합을 통해 기관에 요구되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정책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였음.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음.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실질적 연구협력 노력이 필요함. 또한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를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경영목표 실천계획과 당면현안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정하는 동시에 연계방안과 타개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의 기능이 조세, 공공지출, 공공기관 운영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제정비 지원 노력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성과는 우수하나, 고유 기능과 연계한 외부 고객을 파악하지 못함.
- 연구위원과 일반직원 연구직, 비연구직의 평가지표는 평가항목과 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배점이 연구원의 평정세칙에 명시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한 계량화 지표 활용도가 높으나,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과 개정안의 검토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함.
- 노사협의회가 분기별로 적정하게 시행되고 다양하게 노사간담회가 열리고 있으나 노조지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노사협약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단체협약 중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조항이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기초연구과제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 하고 있으나, '14년 예산편성에서 정부제안 연구과제 비율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이 낮은 수준이며, 집행내역 중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은 과제(80% 이상)가 1건 발견되는 등 집행실적 제고 노력 및 외부 위탁 비중을 줄이는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퇴직예치금 적립 지연, 퇴직예치금 적립금액 계산 오류(미수이자 금액 포함) 등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일부 직원의 누적식 기본연봉의 차등효과를 완화시키는 연봉계약 체결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됨.
- 실효성 있는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교차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 비연구직 평가개량화는 완료되지 않은 한계를 가짐. 개선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개선실적이 개선성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0.98%)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기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
- 청년인턴채용 목표달성, 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 전환실적은 있으나, 청년인턴 근무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복지 분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임금 격차는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관 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의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지난 30년 간 제도 변화 내용 및 주요국 제도 비교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 복지패널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노인보험을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실증적 정책 자료를 제시함.
- 현행 무상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였고, 여성 경제활동 증가 및 출산률 제고를 위해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구분하고 민간/공공 공존 보육 시스템을 운용하여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추구하였으며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정책적 대안 제시가 우수함.
- 소득의 증대에 따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에 의한 효율적인 사회 서비스 공급(재정 효율성)에 대한 융·복합적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요도가 높은 3개 분야(보육, 노인요양 및 돌봄, 문화향유)의 사업들을 외국사례 검토, 공급모형과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단 점>

- 일부 연구의 경우 정책 방안 시행에 필요한 선결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이 병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안에 대한 분석과 연구 결과가 일관된 결론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과잉 의욕으로 정책적 활용도를 약화시키는 연구들이 있음.
- 연구 내용과 결과가 입체적이라기보다는 나열과 병렬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 재정 효율성의 개선을 위한 초점과 정책 대안의 제시 과정의 연결이 다소 미흡함.
- 재정 성과 결정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법체제와 정치체제 등을 영향요인으로 고려한 점은 적절하지만, 객관적인 분석이나 논리적 입증 없이 대부분 연구자의 직관만을 활용했다는 점은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재정 효율성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 현재 상태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개선될 경우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필요함.
- 결론의 명료성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의 확산이나 활용에 미진한 측면이 있고, 문장 기술방식이 어렵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 또는 비문이 있어서 전달력과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기관 명칭변경을 통한 연구영역과 조직의 확대를 통해 조세재정연구의 본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재정성과평가센터’를 확대·개편하여 14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재정평가기능이 강화됨.
-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배분해 적극적인 국정과제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 수준을 제고함.
- 세입기반 확충 및 건전재정 기조 정착 2가지 과제에 특화되어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정부핵심 조세재정정책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발하게 참여한 것이 두드러지며, 중·장기 조세정책, 공공기관 정책평가 및 기관평가 등도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정부의 국정과제에의 참여가 활발함.
- 연구기관이 수행한 2013년 연구실적 60건 중 국정과제 관련은 24건이지만, 모든 연구과제는 실질적으로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새 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 연구도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 중심의 창조경제와 민생경제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회·공청회·포럼·워크숍의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관 본연의 역할인 세입기반 확충, 건전재정 기조 정착에 관한 핵심적 국정과제 수행에서 있어서의 연구역량이 우수함.
- 특히 수시연구과제의 형식으로 정부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했으며, 국가부채를 범주화하여 대응한 것, 소득세법 개정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사례는 주요한 실적임.

〈단 점〉

- 조직개편 및 기능 확충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이 충분치 않으며, 재정평가기능 강화 이외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자원배분이 뚜렷하지 않아 기본연구인력의 적절한 배분과 기본연구과제의 원만한 수행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
- 재정평가기능 강화에 따른 센터조직의 확대로 기관 고유업무인 조세부문 등 기본연구과제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정부수시과제의 편중(기획재정부 세제실·예산실)이 부처 간 이익에 복속될 수도 있고 영역확대에 비해 정부부처 중 기획재정부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큼.
- 또한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 관련 연구 등 특정분야에의 지나친 쏠림 현상이 있으며, 수탁연구가 많아 기본연구사업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담당과제가 많아 결과물이 모호한 과제도 다수 존재하고 선도적인 어젠다 발굴 노력이 부족하며, 과제수행결과가 관련부처의 법령개정 및 제도 구축 평가 피드백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고, 공공 및 재정분야는 결과물이 뚜렷하지 못해 사회적 영향력이 확고하지 못한 경향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각종 센터사업 확장에 따라 기관 본연의 사업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센터사업 수행에 부하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정과제 배분에 대한 제도적 프로세스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조직의 확대에 의해 본연의 기본연구과제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도 예산증가율은 3.2%에 불과한데, 원활하고 적극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요구되며 적절한 인력 및 자원의 배분·확충이 필요하고, 국정과제 참여 및 지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시적이며 실속있는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기본연구과제의 수를(3년 평균 18개)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연구인력의 인원 확충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상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함.
- 연구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다양한 부처 및 국회 등의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국정과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새 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 연구에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수탁 집중은 기관의 고유 연구역량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연구수행체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중·장기과제 및 전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적절한 정책 어젠다를 제공하고, 자문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보고서 외에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 부채관리 등의 사회적 이슈는 일회성 공청회 개최에 머무르지 말고 여론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세입기반 확충, 건전재정 기초 정착 등에 대한 대응은 내실 있게 이루어졌으며, 공공기관 부채 등과 관련된 새 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돋보임.
- 조세 및 재정 분야에 집중된 정부현안과제 수행 실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며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짐.
- 기본연구 및 해외동향 등을 통하여 선제적인 정책개발과 통계 및 외국사례 등을 활용한 국제적인 시각이 제공되며, 또한 선제적 정책이슈의 제기(국가채무 개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 등)가 돋보임.

〈단 점〉

- 특정 정부부처에 편중된 현안과제의 수행에 따라 부처에 예측되거나 종속될 가능성이 높음.
-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 등의 국가기관의 요청에 의해 즉시적으로 수행하는 단기과제(1개월 내 수시단기과제 178건)가 너무 많아 연구원의 본질적 기능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이론적 연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반영하는 기본연구과제 수행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대응방안이 단편적·일반적 시사점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구 수행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의 긴급 및 수시요청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함.
- 긴급, 수시 과제요구에 대해 과제의 결과가 피드백이 되고 피드백의 결과가 연구원의 피드백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화되어 과제수행의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긴급 및 수시과제 비중 및 업무로드를 중·장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연구자료 등의 DB화 추진이 필요함.
-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이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행 중인 연구들 간의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유관 정부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은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조직화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협력이 심도 있게 이루어짐.
- 외국의 조세 및 공공정책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세입 확보 등) 등이 돋보임.
- 개별 국회의원실과 정책협의 내지 정책보조가 두드러지고, 기획재정부 및 정책협의회, 재정네트워크 및 학술단체 등과 다양한 정책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및 글로벌 기관과의 수준급 국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유용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단 점〉

- 유관정부부처나 개별 국회의원실과는 네트워크가 활발하나 기관의 연구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타 기관(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협력이 다소 미흡함.
- 또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조세재정정책의 영역과 관련된 타 부처와의 네트워크가 부족함.
- 해외 국제기관과의 연구네트워킹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정책연구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가 불분명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다양한 유관 정부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협력체계의 내실화가 요구되며, 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함.
- 기관의 연구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 기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공동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유관 정부부처 및 국회와의 다양한 자문회의·위원회·협의회·심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이 산발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며 집약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의 다양한 네트워크와의 협력 및 교류가 기관의 정책연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에 우리나라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의 경험을 우리나라에 적극 소개할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조세체계 개편방안 등 다수의 연구과제는 시의성이 매우 크며, 당해 연도 세법개정안과 별도로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제시하여 중·장기적 시계를 제시한 것은 좋은 시도임.
- 다수의 연구에서 중기적 시계에서 조세 및 재정제도 개선필요성에 대한 이슈화에 성공하여 제도개선 및 법률 제정·개정에 기여함.
- 유관부처 간 중간보고 등을 통해 대안의 정책화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안의 대부분이 정책화에 반영됨.
- 연구진이 제도개편TF 및 국회토론회에 참여하여 공론화에 기여함으로써 연구과제의 활용도를 제고함.

〈단 점〉

- 연구과제의 주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향이 있고, 대안의 정책화 과정에서 당해 연구가 어떻게 보완, 발전되었는지 불분명하며 홍보 및 여론화과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
- 과제수행기간이 정부예산안 제출이나 세법개정 등 제도개선 이전에 공표·발표·발간 되지 못해 사회적 이슈화의 기회를 놓침(2014년 세법개정안 등).
- 다수의 연구는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정책화에 한계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주요 과제는 기관의 기본업무로서 매년 보완연구가 필요함.
- 다수의 연구과제에 있어서 제도 개편 및 정책 시행결과를 점검하여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한 후속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내용만이 아니라 관련 정책이슈가 제기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재정개혁이나 세제개편 등 관련보고서 발간 시 입법 등 정책화 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 제출이나 제도개편 이전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서 공론화되도록 함으로써 활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2012년에 관련 연구를 발전시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 연계함.
- 공공기관 부채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의 틀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함.
- 2014년 1월말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은 동 연구에 바탕을 두고 각 기관 및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작성됨.
-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한 자료로 향후 공공기관 부채에 관한 다양한 정책(공공기관 기채 시 어떤 범위에서 관리할지 등)에 활용이 기대됨.
- 향후 공공기관 혁신과 부채관리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연구대상보다 더 넓은 공공기관 범위에 대한 연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함.
- 선도과제의 정책실현 및 성과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방만경영지침, 부채감축지침으로 실현되었음.

〈단 점〉

- 2013년에 수행한 연구실적은 과거에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독창적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종합적인 재무상환 진단 및 보다 상위 개념에서의 부채관리 방안으로서 한계가 있음.
- 부채감축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 있음(요금인상 합리화로 비춰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개선 및 건의사항〉

-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부채관련 내용이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개혁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단순 부채해소를 요금인상, 정부지원 확대 등의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안보다는 사업개편 등에 대한 연구로 연계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부채의 수혜층이 국민인 경우 부채축소에 따른 국민 편익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향후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능 재정립, 효율적인 운영의 강화가 필요함.

-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강화는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많이 하락함. 상세업무유형별로 기본연구와 수탁연구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둘 중에서는 수탁연구 점수의 내림폭이 상대적으로 더 큼. 반면 정보제공서비스는 전년에 비해 소폭 오름. 상세업무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정보제공서비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본연구, 수탁연구 순임.
-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정부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정보제공서비스는 전체평균에 비해 높지만, 기본연구와 수탁연구는 낮음. 특히 수탁연구의 점수 차이가 기본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큼.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의 정확한 이해’ 항목의 점수는 높고, ‘해당 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전문지식과 경험 보유’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과제의 체계적 수행’ 항목의 점수는 낮음. 정보제공서비스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분야의 전문적 정보 제공’ 항목의 점수는 높고, ‘제공되는 정보의 활용 가치가 높음’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관련 지침과 절차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과제 수행 노력,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 수립, 연구결과와 공유(성과확산)를 위한 다양한 채널 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도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상세업무유형별로 기본연구와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올랐으나, 수탁연구, 위탁연구, 공동연구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짐. 특히 수탁연구 점수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큼. 상세업무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위탁연구, 기본연구, 정보제공 서비스, 수탁연구 순임.

-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기본연구, 위탁연구, 공동연구는 전체평균에 비해 높지만, 수탁연구와 정보제공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낮음.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차원별로는 전반적 만족, 미시적 성과, 거시적 성과 등을 제외한 다른 차원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고, 품질요소 중에는 전문성, 효과성, 대응성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차원 중 전반적 만족, 환경품질, 미시적 성과를 제외한 나머지 차원들, 품질요소 중에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회의 시 참석자 의견 경청, 적극적 의견 반영 노력’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과제 수행으로 해당 분야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전문지식과 경험 보유’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수행 정도를 공유하는 기회의 적절한 활용’ 항목의 점수는 낮음. 위탁연구에서는 ‘고객 문의와 요구사항에 신속히 답변, 요구사항을 정확히 처리’ 항목의 점수는 높고,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의 편리함’ 항목의 점수는 낮음. 공동연구에서는 ‘계획된 연구일정 준수, 효율적 연구수행 방법 채택 노력’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과제 수행으로 해당 분야 정책과 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정보제공서비스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분야의 전문적 정보 제공’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락처 업데이트 등 지속적 고객관리 노력’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이 문의 및 요청사항을 제시하기 편리하도록 기존 고객과의 의사소통 채널 관리 강화와 고객 요구사항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 및 부서 지정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과제발굴을 위한 3가지 중점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수요조사와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을 통해 총 71건을 발굴함.
- 탈락된 과제의 경우, 미선정 사유를 기재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과제발굴 노력이 돋보임.
- 기본연구과제 발굴에 앞서 연구위원 워크숍을 통해 중점연구주제를 선정함으로써 세부 연구주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함.
- 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함.
- 기본연구과제 선정 및 배분심사과정에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정비율의 과제를 탈락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
- 배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함.

〈단 점〉

- 선정과정이 연 2회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하나 상반기와 하반기에 심사대상 과제가 다른 것으로 보아 조건부 통과 계획서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지더라도 질적으로 엄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 배분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의견도 서면으로 이루어지나(공개세미나에는 참석은 하지만 심의 결과는 서면으로 제시함), 서면 평가서의 작성 수준에서 위원들 사이의 격차가 큼.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엄격한 심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수시연구과제의 발굴 및 선정과정이 비교적 합리적이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에서 정부부처의 의견 반영 비율이 77.8%로 높은 수준임.
- 수시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심의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진도관리 및 보고서 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임.
- 전반적으로 연구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외부 제안제도를 통해 발굴된 과제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외부 과제의 대부분이 정부요청과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수시연구과제 발굴노력이 다소 부족함.
- 수시연구과제의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함.
- 수시연구과제의 경우 중간평가 과정이 생략되고 있어 연구결과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학회, 대학, 유관기관 등의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과제발굴 노력이 필요함.
- 외부 노출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개방이 가능한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의 심의를 다각화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심의와 중간평가 절차를 좀 더 체계화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재정전문가, 세정전문가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동연구를 통한 국제화 노력, 정보교류를 적절하게 진행함.
- ‘재정전문가 네트워크’의 경우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세정전문가 네트워크 등 시의성 있는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산·학·연 협동연구 수행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단 점〉

- 협동연구 추진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음.
- 협동연구 과제 발굴과 장려를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자료의 제시가 미흡함.
- 전체과제 중 협동연구과제의 수행비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협동연구기관별 역할분담이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의 추진체계, 발굴 및 수행노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개발도상국 대상의 국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과제별 참여연구인력의 역할, 협동연구 기관별 역할분담이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 체계를 착수보고심의회, 중간보고심의회, 최종보고심의회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의신청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재심청구를 하도록 함.
- 평가위원의 구성은 관련 전문가 풀(Pool)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위원 선정 관련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위원들을 선정하고 있음.

〈단 점〉

- 5대 평가항목, 10대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에 관한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 평가지표에 적합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음.
- 과제유형별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평가단계별 평가표의 배점 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 16개 분과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인적 구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5대 평가항목, 10대 평가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과제유형별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평가단계별 평가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16개 분과에 어떤 전문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최종보고서의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제한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기관 간행물출판규정 제11조에 지식재산 보호규정을 두고 있음.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음.
-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보안 관련 내규를 잘 정비하였음.
- 다양한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도에 보안시스템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임.
-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을 통해 분류체계를 체계화하였으며 기초자료에 대한 검색 및 활용도를 향상시킨 점은 장점임.
- 홍보 관련 연구원 내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TF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 2013년도 3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한 점은 체계적인 홍보전략임.
- 매체별로 특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환류형 연구성과의 확산체계를 구축한 점은 긍정적임.
- 매체별로 목표고객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작하고 콘텐츠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임.
- 무분별·무차별적인 배포로 인한 보고서의 낭비와 사장을 막기 위해 핵심그룹과 일반그룹으로 구분하여, 연구보고서는 핵심그룹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일반그룹은 정기간행물을 중심으로 배포하여 선택과 집중식 전략을 채택한 것은 장점임.
- 기본연구과제 영문보고서를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해외 주요기관 및 국제기구 등(114개 기관)에 배포하고 있음.
- 성과물 배포 시 목표고객의 사전 수요 예측을 통해 필요로 하는 유관기관에 선별적으로 배포한 점은 긍정적임.

-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49% 증가하였고 신규 구축한 재정패널 사이트의 호응도 좋은 점은 긍정적인.
- 해외 확산을 위해 코트라 등 유관기관을 활용한 점은 장점임.

〈단 점〉

- 관련 성과의 완료시점이 2013년 2월이어서 이후 성과에 대한 제시가 없음.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구축된 시스템의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은 미흡함.
- 홍보·확산 계획에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단기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홍보·확산 실적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연구과제의 업로드를 보다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비율이 91% 수준에 그침.
-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큼.
- 연구성과물을 일반인 등 비전문가에게도 서비스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전략적 활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성과지표의 활용을 권고함.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환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적절한 환류를 실시하여 시스템의 점검과 효과성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홍보·확산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장·단기 목표수준을 체계적으로 개발·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의 확산 실적을 계량화하여 제시한 점은 좋으나 전년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성과의 향상정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이슈페이퍼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생산하고 배포기관을 적절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물 홍보와 성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성과지표를 구축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18편(36.6건/27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전문지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해외학술지 등 공인된 학술지 게재를 늘릴 필요가 있음.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전략 수립이 잘 이루어졌음.
- 부서별 간담회를 통하여 내부 의견수렴을 하였음.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잘 정리되었음.
- Top-down과 Bottom-up 방식을 조화하여 시의성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기구의 통합을 통해 재정부문의 연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였음.

<단 점>

- 연구원 명칭 변경은 이미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절한 현안문제가 아님.
- 국내·외 환경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함.
-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보여줄 객관적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음.
- 기능의 확대로 신청사증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청사 증축 이외에 유연근무제를 포함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실적의 제시가 미흡함.
- 연구원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동기 부여책 등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의 개선이 미흡함.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적 연구 과제 개발 노력이 부족하고, 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발굴 수행한 근거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분석을 보다 철저히 하여 현안문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연근무제와 더불어 주거, 교통 등 청사이전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해 동기부여책 등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를 먼저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학제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융·복합적 또는 새로운 연구 과제 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전 직원 간담회를 매월 개최하여 구성원과의 공감대 형성과 의사소통을 시도한 노력이 돋보임.
- 국가정책 참여를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이 뛰어남.
- 국내 네트워크 확보 및 협력 추진 노력이 뛰어남.
- 기관 발전과 홍보를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이 뛰어남.

〈단 점〉

- 기관장의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함.
- 상향식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채널이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음(간담회).
-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의 개발 노력이 부족함.
- 기관운영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이 미흡함.
- 유사 관련 연구를 하는 타 연구원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다소 부족함.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개발하고 의사소통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향식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직종별, 직급별 대표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부서별 간담회와 더불어 직급별, 직종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룹별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연구를 하는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 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음.
- 교차 감사 실시 등 감사 방법이 다양하고, 상시 감사 모니터링 운영이 잘 되고 있음.
- 배치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성취도를 고취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
- 연구윤리 규정이 잘 정리되어 있음.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금지하여 연구실적에 대한 공정성을 높임.
- 표절검색시스템(Copy Killer)을 도입하여 연구윤리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단 점〉

- 기관 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운영규정 및 제도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함.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부족함.
-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신고 센터들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됨.
- 계량화된 실적평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등급별 판정에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음.
- 연구윤리 확보 및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연구윤리 확보 및 준수 활동 실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함.
- 연구윤리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실적을 확인할 수 없음.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내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각종 부패 방지를 위한 신고 센터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포상 제도와 연계하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표의 등급판정에 대해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부분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규정 내용을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연구윤리 위원회의 활동을 제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표절검사 결과를 연구자에게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업적 평가와 인사고과에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기관의 설립목적을 바탕으로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경영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함.
- 기관의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가능수단들의 타당성은 인정됨.
-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인원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청사건립 공정률이 목표에 미달한 것을 제외하고 설정된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음.
- 재정을 통한 국정기능 전반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발표실적과 공공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적 연구과제의 분야별 연구실적 수행 건수는 목표를 초과 달성함.
- ‘국내연구역량 결집의 구심체’를 위하여 세정, 재정, 공공경제 전문가 네트워크 및 공동연구, 국제 네트워크 및 공공연구, 연구협업시스템 구축을 상설화하여 정책 개발의 기초가 되도록 진행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음.

- 인접학문 분야 연구기관과의 공동학술 행사, 제도 및 법정제학적 시각 추가, 연구위원 유치 시 비경제학 전공자의 비율을 높인 점 등은 긍정적인.

〈단 점〉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실천과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연계방안이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어 구체성이 부족함.
- 기관의 중요성과 규모에 비하여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며, 당면현안이 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구체성이 부족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함.
- 당면 현안에 대한 논리적 분석 과정이 미흡하고, 목표 실천계획 및 연계방안들이 매우 모호하거나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진행 및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세부 실천계획 중 본 기관의 행정 및 재무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실천계획은 없어 보임.
-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중간 연구인력의 심각한 부족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다소 미흡함.
- 실천과제에 대한 성과목표가 다양한 성과측정치로 제시되지 않고 대부분 실천과제의 진행에 대한 과정지표로서 과제를 이행하여 나타나는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가 모두 100%로 나타나 실천과제별로 어느 정도의 상대적 성과달성도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음.
-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세부과제에 있어서 재정전문가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네트워크별 공동연구 수행이 1건으로 기관의 연구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는 실천계획에 비하여 성과가 저조함.
- 각 성과 목표의 최종달성목표를 감안하면 적절한 계량지표를 도출할 수 있는데도 비계량지표가 많이 제시되어 있음.
- ‘현장을 중시하는 정책연구’ 과제를 통하여 현안과제 및 수시과제로 인한 연구원의 연구업무 부담이 가중되므로 연구원의 적정 연구업무 부담에 대한 분석과 성과중심 평가보상제도의 검토 및 수정, 비정규직 인력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다소 미흡함.
- 국정경험의 국제적 홍보를 통한 개발도상국 교육 운영 이외에는 연구성과의 홍보에 관한 성과지표가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 실천계획별로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계방안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논리적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연계방안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일 필요가 있음.
- 우수 연구인력 확보 이외에 비정규직 인력관리에서도 정규직 전환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과 같은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고, 실천과제에서 미흡한 연구원의 성과중심 평가와 보상시스템을 보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추진조직과 추진 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개발도상국 교육을 통한 국정 경험의 국제적 홍보과제 이외에는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실천 계획에서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세부과제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과제의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산출지표 또는 결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고객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만족도는 만족도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만족도 수준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관리가 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명예와 자부심, 보람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수한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하여 우수신규인력 채용과 함께 기존 연구 및 행정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계획도 필요함.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SWOT분석, 내·외부 의견수렴과정 및 연구원장의 추진의지 등을 반영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추진과제의 중요성(40%), 시급성(30%), 난이도(30%) 등 선정기준을 계량화하여 평가에 반영한 점은 합리적인 선정과정 및 평가방법임.
- 중·장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문연구기능 강화 과제는 중·장기적 관점과 정치사회 통합관점을 가지고 많은 조세재정, 재정정책 및 공공기관정책 분야의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함으로써 선제적 정책지원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전체적으로 선정배경과 이유가 잘 정리되었으며, 중점추진과제들의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이 높음.
- 전체적으로 선정과정이 타당성 있게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경영개선TF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과제를 실천함.

〈단 점〉

- 기관의 설립목적, 핵심기능 및 경영목표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문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중점추진과제이나 저성장과 고령화, 지하경제와 역외탈세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실적은 다소 미흡함.
- 정책현안에 대한 적시적 연구의 성과목표로서 정부요청 현안과제 수행비율 및 협의회 개최 횟수 등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조세재정공공기관 연구네트워크 강화’ 과제에서 특히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는 실적이 상당히 미흡함.
- ‘중·장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문 연구기능 강화’ 과제는 실천과제명이 일정하지 않고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관련하여 미래지향적, 융·복합적, 일자리창출에 대한 실천과제들이 명확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문 연구를 강화함에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저성장 및 고령화,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등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대응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를 과제별로 복수로 설정하여 과제의 추진성과의 과정 및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선진국 또는 OECD 수준의 국가들과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미래지향적, 융·복합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실천과제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연구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연구원의 기능이 조세, 공공지출, 공공기관 운영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제정비 지원 노력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성과는 우수함.
- 세종시 이전 가시화에 따라 세종시 이전팀을 ‘세종시이전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경영지원실 주도로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함.
- 재정연구본부 내 ‘아태재정협력TFT’를 ‘아태재정협력센터’로 출범하고, 세제 및 세무행정 관련 협업 필요성 증대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함.
- 공공·재정사업평가 업무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성과관리센터를 재정성과평가센터로 확대 개편함.
- 본부별 성과보고회 및 우수 연구과제 성과확산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확산을 유도함.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미국평가학회(AEA)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고, 리쿠르트TF를 구성·운영한 실적은 우수함.
- 연구직의 인력비율은 71%이며, 비정규직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가보훈 대상자 1명, 비수도권 1명을 채용우대제도로 선발함.

<단 점>

- 고유 기능과 연계한 외부 고객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제시한 요구사항도 일상 행정처리 사항 수준이며 고객요구사항으로는 미흡함.
-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조직 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함.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 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제시한 3개의 경영목표는 목표로 부적절하며, 운영성과 내용도 매우 미흡함.
- 경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미흡함.

-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은 없으며, 중기 인력운영계획(2014~2016)도 직무분석, 인력구조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에 근거한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의 핵심기능, 경영목표, 주요 이슈 등을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의 요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외부 면접위원 비율을 높이고, 박사급 인력 채용의 면접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기준과 채용절차에서 실적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심사 과정에 외부 심사위원 초빙, 인적성검사 실시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기관 차원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신입직원 OA 교육, 오리엔테이션 교육 내용은 적절함.
- 교육·연수 활용 효과 분석은 적절함.
 - 학회발표 논문을 입수하여 과세방법의 대한 실증분석 결과로 활용
 - 성과주의 예산제도 및 재정정보시스템 운영관련 조사를 통한 향후 운영방안 모색 등
- 전문부서는 현장 실무에 대한 적합성에 초점을 맞춘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직무능력 배양에 노력함.
- 신입직원 OA 교육과 기본 소양교육, 박사급 연구인력의 자율연구제도, 국내 학위 취득 훈련 등 직군 및 근속기간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원함.
- 연구직에는 공통교육과 리더십교육 이외에 직무에 필요한 직무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직에는 정보시스템 이용, 예산결산, 인사 노무 등 기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

- 내부 연구진의 국내 박사학위과정 교육 지원, 자율연구를 통한 자기개발, 석사인력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의 실적이 있음.
- 정부방침에 의한 기록물관리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의 경우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과정을 지정함.

〈단 점〉

- 중·장기 및 연도 교육훈련계획 없이 교육훈련을 실시함.
- 자비로 취득하는 석·박사 학위과정은 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려움.
- 기관 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미흡함.
- 구성원 사기진작책이 미흡함(세종시 이전 대비 유연근무제 도입 위한 설문조사는 실시하였으나, 실시계획은 미수립).
- 직급별 교육과정은 없으며, 교육·연수 결과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를 확인할 수 없음.
- 교육훈련프로그램과 기관의 경영목표상 추구하는 인재상과의 연계성이 부족함.
- 교육훈련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부족함.
- 교육훈련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되지 않음.
- 비연구직 교육훈련비 비중이 9%고 23명 중 5명만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교육 훈련비 집행에 문제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
- 멘토링에 대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교육훈련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업적평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우수함.
 - 분기별로 실적평가표 작성 및 피평가자에게 피드백
 - 연구물에 대한 질적 평가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 레퍼리 리포트 기초로 등급 설정
 - 일반직원의 업무실적보고서(업무지시자, 업무지시일자, 업무완성일자, 구체적 업무내용 등 적시) 활용 평가
- 구성원들의 업적평가는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크게 연구위원 업적평가와 일반 직원에 대한 업적평가로 구별하고, 일반직원에 대한 평가는 연구직과 비연구직 업적 평가로 구별함.
- 연구위원의 업적평가는 연구물에 의한 실적평가(정량평가), 질적평가 및 기관장평가(정성평가)로 이루어짐.
- 연구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본인이 작성하는 업무실적보고서와 상급자가 작성하는 근무평가에 기초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짐.
- 근무평정은 업무실적평가 50%, 역량평가 40%, 규율준수 평가 10%로 운영됨.
- 연구직, 비연구직의 평가지표는 평가항목과 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배점이 연구원의 평정세칙에 명시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한 계량화 지표 활용도가 높음.
- 외부 학술지 기고에 대해서는 30~200점의 인센티브를 업적평가에 부여함.
-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이의신청제도의 개선을 통해 평가결과가 향후 개선사항에 반영됨.
- 구성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반드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내용을 본인에게 공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향후 개선에 대한 상담이 가능함.
- 다단계의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본부장 및 실장으로 구성된 근무평정위원회가 최종 조정을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함.
- 1차 평정 후 저성과자에 대해 결과를 피드백하고,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성과향상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함.
- 업적평가제도는 연봉책정, 성과급 지급 등과 같은 대표적인 금전적 보상체계와 연계되고, 승진, 재임용, 포상, 교육훈련, 특별휴가, 퇴직금 등과도 연계되어 운영됨.
-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부처 업무공로 표창에 상신하는 등 평가결과는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의 유인책으로 기능함.
- 직원 승진 시 호봉제에 기초한 승격방식을 폐지하고, 최소 근무년수와 근무평정 결과기준을 모두 적용함.

〈단 점〉

- 일반직 연구원 및 비연구직의 성과물 분류를 통한 평가지표 세분화 및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논문게재 인센티브 부여 여부의 확인이 어려움.
- 연구위원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90% 이상 차지하지만 질적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짐.
- 비연구직의 평가지표 계량화의 노력이 미흡함.
-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함.
- 연구보고서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규정이 미흡함.
- 승진과 재임용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업적평가의 계량비중을 높여 평가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비연구직의 계량지표 도입을 실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위원의 분기별 실적평가표 전달 시 메일 활용보다는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도록 전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평가제도 개선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사적인 관점에서 팀과 개인 간 성과를 연계하여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평가에 관련된 제 규정을 정비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를 비금전적인 보상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노사협의회가 분기별로 적정하게 개최됨.
- 노사간담회, 수시 창구 대화실적이 양호함.
- 4회에 걸친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고, 다양한 차원에서 노사간담회가 이루어짐.
- 노조원의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비노조원도 포함하여 노사협의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단 점〉

- 노조지부장이 없어 노조 사무국장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노사협의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음.
- 노사 간 임금협상을 통해 인건비 차등기준률이 0.1%로 정해졌으나 연구회의 기준에는 미달됨.
- 노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가 미흡함.
- 재임용 관련규정, 고용조정위원회 규정, 부조금지원규정, 건강검진 규정 등이 현실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음.
-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조 사무국장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노조 대표자 창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이후 특별한 분규 없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고 있으나, 단체협약 중 제45조 제2항 7호 ‘징계절차 하자시 인사위원회 결정 효력무효’, 제51조 ‘고용조정위원회의결사항’, 제68조 ‘부조금 지원’ 조항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워크숍, 직원간담회, 사회공헌활동 등의 노사협력증진프로그램이 있으나 이를 더욱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차원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감제안방, 건의함 등의 익명성 제안제도와 고충처리제도 등의 비익명성 제도를 보완하여 구성원의 요구가 제시·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연구사업비의 편성예산 대비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 비율은 2013년에는 55%, 2014년에는 50%로서 적정한 수준임.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 2013년에는 28%, 2014년에는 27%이므로 적정한 수준임.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10.4%, 2013년 10.8%로 연구회가 제시한 평가기준 (10~20% 범위 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10.0%를 편성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3년 총 9건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전액 외부위탁용역으로 수행된 과제는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운영 자금과 구분되어 독립된 별도의 계좌로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의 편성예산 대비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 비율은 56%로서 적정한 수준이나, 2014년도의 경우 정부제안과제 사업비 비율이 26.6%(279백만원)으로 연구회가 제시한 평가기준(30% 이상)을 준수하지 못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63.2%로 다소 낮은 수준임.
- 과제예산의 실제 집행액(22,050천원) 중에서 외부위탁용역비(20,000천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실질적으로 전액 위탁과제로 볼 수 있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퇴직예치금의 실제 적립이 연도 말에 이루어지지 않고 2개월을 지연하여 적립되었으며, 실제 적립금액 계산에 있어 연도 말까지 발생한 미수이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추계액에 미달하는 결과가 되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2014년도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사업비 비중을 예산안의 변경을 통해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집행에 있어 외부위탁비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과제 수주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부통제가 필요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예산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급여충당금을 분기별로 적시에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예치금 적립금액 계산에 있어 미수이자 금액을 제외하고 적립금액을 산정하고 연도 말의 적립잔액을 추계액과 일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0.8%)은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은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실적 미달로 인해 발생하지 않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됨.
- 기본연봉에는 직무급과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적정함.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약 50%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가 제시한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책정방식을 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은 최고-최저등급에 각 10%를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봉의 등급별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pm 0.1\%$ 로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효과가 매우 적고 평가기준($\pm 1\%$ 이상)을 준수하지 못함.
- 연구직 일부 직원의 연봉계약 체결 시, 누적식 차등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차등폭을 임의로 조정한 사례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이라는 누적식 기본연봉의 도입 취지에 맞게 차등폭을 확대하고, 일부 연구직의 누적식 차등효과를 제거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이 간부직의 경우 지침을 준수함.
- 성과연봉 지급 시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함.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을 업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최고-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3년에는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

〈단 점〉

- 성과연봉 지급 시 비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pm 15\%$ 차등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연봉 지급 시 차등지급률을 평가기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7건에 걸친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완료됨.
- 박사급 인력 다변화를 위한 유럽대학 박사학위 소지자의 채용, 비즈니스 항공료 축소편성 등 국회 지적사항 개선을 충실히 이행함.
- 공통 지적사항인 국가승인통계를 국가통계포털(KOSIS)와 연계하는 등 개선실적이 우수함.
- 실사평가 완료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3.5.부터 담당 부서별로 지적사항을 검토하는 등 조기에 연구결과 평가 환류작업이 시작되었고, 경영개선TF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평가결과 환류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2013년 자체감사를 유관기관 간 교차감사로 실시함.

<단 점>

-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절차에 대한 기술이 미흡함.
- 5개의 평가결과 개선과제 중 3개만 완료되고, 장애인 고용률, 비연구직 평가개량화는 추진 중인 한계를 가짐.
- 평가결과 개선방향 수립 및 개선계획 수립에 있어 TF 중심으로 움직이고 전사적 의견 공유가 미흡함.
- 개선계획추진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 배제에 대한 개선실적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비연구직 평가 계량화 지표 도입 등 개선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 개선이 기관발전에 기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결과 개선방향 수립 및 개선계획 수립에 있어 전사적 정보 공유 하에 추진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 환류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 체계가 좀 더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개선사항의 합리적 개선이 기관 단위가 아닌 연구회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법의 공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직원 채용 공고와 채용과정에서 기초적인 장애인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며, 장애인 고용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0.98%).
- 2013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장애인 기본계획을 여전히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채용을 위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구인활동을 한 실적이 보이지 않으며, 2013년도에 장애인 고용실적이 없음.
- 직전 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1.2%에서 0.98%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이 매우 미흡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대책회의, 계획수립, TF 구성, 관련 단체 방문 등).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계획 대비 목표달성, 청년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 청년인턴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실적이 있음.
- 청년인턴 근무관리 분야 중 취업활동 지원 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다른 영역에서의 실적이 미흡함.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 매뉴얼, 멘토링, 고충처리실질화가 잘 안되고 있으며, 연구원 차원의 청년인턴 운용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년인턴에 대한 근무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 등을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고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정책에 부합하고 있음.
- 서울지방보훈처와 연계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2013년도에 1명의 국가유공자를 신규 채용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이 0.5%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장의 관심표명, 대책회의, TF, 기본계획 수립, 관련기관 방문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3년 7월부터 임금 및 근로조건 차이를 해소하려 노력하였음.
- 직원 복지 분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 비정규직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보수 관련 규정이 상세하지 못함.
-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를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 기관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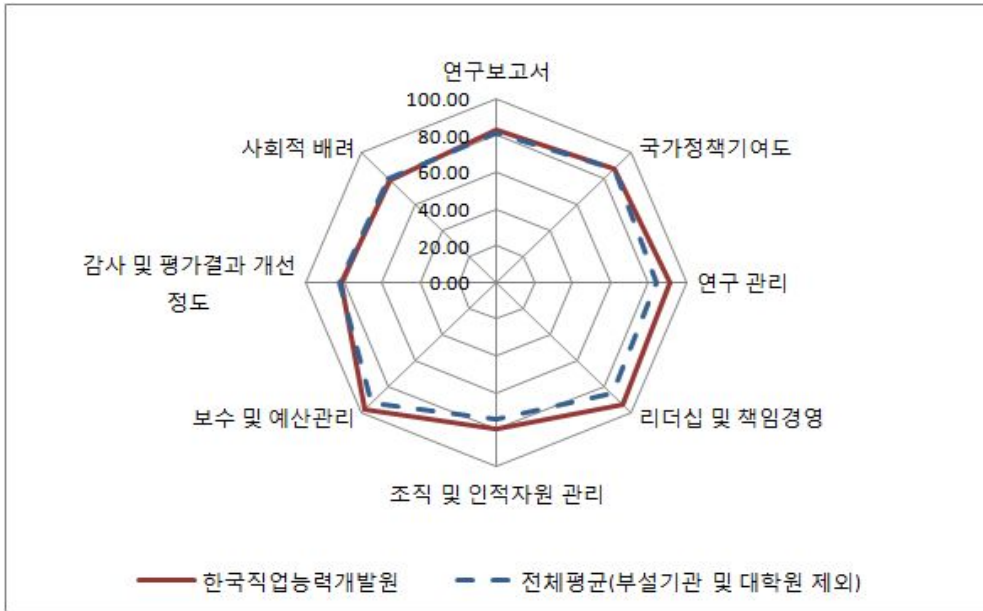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C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B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A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A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A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S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A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A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B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A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B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C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인재포럼을 운영하여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연구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높였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의 추진 로드맵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6개 국정과제에 대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성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부처의 TF, 추진단, 위원회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수립 기여도를 높임.
-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법, 제도 개선(개정)의 결과가 정책적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정례화하고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문분야별 과제발굴과 기본과제 발굴계획안을 통한 공모 등 체계적인 과제발굴 노력과 외부 위원 참여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제선정 노력이 돋보이나, 외부 과제 선정 위원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함.
- 협동연구 추진체제는 연구계획서 심의, 중간 심의, 최종보고서 심의, 최종보고서 평가의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동연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협동연구 전문가 풀에 대한 인적 구성의 전공별, 소속별 기술이 필요하고,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내지 포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부 평가위원 풀의 선정과 구성을 확대하여 균형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실적과 내역이 미흡함.
-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제시한 점이 긍정적이며, 홈페이지의 환경 및 기능을 개선하여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인지도를 향상한 점도 장점임.

[경영 분야]

- 기관장의 현안문제 타개,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 및 소통, 구성원과의 소통노력,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은 뛰어나나, 표절검사 시스템의 인사고과와의 연계가 다소 부족함.
-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였음.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였으며, 경영윤리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하였음. 현안문제 선정 시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별로 연계방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세부실행과제 설정단계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Repository 신규 구축에 따른 학술·연구기관과의 메타 데이터 제공을 통한 지식공유 활성화 실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우수 사례이나, 학별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정기적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임금협상이 타결되고 구성원동의절차를 거쳐 이면합의를 기획재정부 알리오에 공시하는 등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갱신 중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결이 지연되고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 집행이 없는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보험 및 퇴직금전용 적립계좌(MMF)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단점이 있음.
- 우수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성과연봉제는 개선하지

못한 한계를 가짐. 개선실적이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개선성과와 경영개선으로 발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평가기준(6%)을 초과 달성하고 있으므로 양호함.
- 청년인턴제 운용이 대체로 적절하지만, 인턴 전용 오리엔테이션 교재 미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실적 관련 결재 등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비율이 4.1%로 평가기준(6%)에 미치지 못하므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처우(교육, 복리후생, 편의시설, 휴가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거나 적어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항을 관련 규정과 운영계획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인재포럼을 운영하여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연구과제로 추진함으로써 포럼과 연구의 유기적인 연계 및 조기 연구 착수의 형태를 도입한 것은 매우 유효한 사례임.
- 고졸 초기 경력자의 직장 적응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를 통하여 고졸 초기 경력자들의 상황을 현장감있게 분석한 점은 우수함.
- 정부의 정책 수요가 높은 부분인 ‘미래창조과학’과 ‘복지’ 부분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인력수급 전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과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과제, 인력수급 불일치 과제, 부분별 정책과제, 고등교육분야의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인프라 개선 과제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함.
- 대·중소기업의 교육 훈련의 고용 성과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저숙련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공급되지 못하는 현실을 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인적자본의 교육 투자와 고용 창출 관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단 점>

- 일부 연구의 경우 설문조사와 빈도분석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서 추구하는 정책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례 분석도 미국 사례에 국한되어 편향성이 내재됨.
- 선행연구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연계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정책 방안을 체계화시키는 노력이 다소 미흡함.
- 일부 보고서라 하더라도 정책 방안과 추진전략 및 로드맵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여 정책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있음.
- 직업 훈련/교육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층(예. 대학생)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의 정책 제언의 경우 중단기적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도별 연구 주제와 방식 및 특성이 상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논리적인 흐름과 분석이 주는 시사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리는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시사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정책적 제언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화되거나 세분화되어야 함.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신속한 조직개편과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인력,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투입함.
- 6개 국정과제에 대한 고른 연구 수행과 현장성 높은 연구를 수행함.
-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
-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의견 수렴이 활발함.

〈단 점〉

- 국정과제 중 국가지원사업비 비중이 높은 과제에 연구역량이 편중된 부분이 있음.
- 센터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포에 있어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음.
- 기존에 수행하였던 연구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가로 수행된 과제와의 연계성, 중복성 방지 등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자체적인 평가 및 피드백 과정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업강화가 필요함.
- 연구과제 수행에 정규직 인력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현장파급력이 높은 과제는 과제 수행시기를 조정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개발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한 다수의 추진단 운영 등 선제적 노력이 적절함.

〈단 점〉

-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서 정부 요청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함.
- 기초연구가 현안으로 발전 될 수 있는 어젠다 발굴이 다소 부족함.
- 추진단 등에 관련 외부 기관의 참여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 해결보다 현안 발굴 노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효율적인 과제수행을 지원 및 보장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진의 과부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계속되는 위탁사업인 경우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이와 연계한 자체연구 과제의 발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다양한 직업능력 유관기관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직업교육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직업교육을 해외에 수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고객집단과의 면담, 자문회의 등 연구진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효과를 제고시킴.

〈단 점〉

- 국가정책 현안 등에 대한 국제동향이나 연구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네트워크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산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융합 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지원 상황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조직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대학특성화와 연결한 대학과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함.
- 고객집단의 대상을 각급 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일반 국민 등으로 더욱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능력중심사회 구현 등 6개 국정과제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과제를 다수 수행하여 정책수립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
- 국정과제별로 해당 부처에서 조직한 TF, 추진단, 위원회 등에 연구진이 다수 참여하여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함.
- 중소기업 등 현장관련 연구를 통해 연구의 현장적합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단 점〉

- 국정과제 지원 상황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조직 역량의 강화가 미흡함.
- 연구과제 중 단기과제의 비중이 높아 장기과제와의 균형성이 부족함.
- 연구수행 과정에서 해당 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 또한 연구결과를 해당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자료나 기회 마련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관 조직 내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협업과 홍보를 위한 지원역량 강화가 필요함.
- 연구 전반에서 기업 등 현장 실무진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선도와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새 정부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의 구현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담당전문인력의 양성 등도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진로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진로교육인증제, 전담인력의 제도화, 중앙 및 시·도 교육청의 전담 부서 설치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진로교육우수사례 선정 등 양질의 진로교육프로그램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함.

〈단 점〉

- 기초연구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연구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효과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함.
-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이나 양성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진로교육 우수사례 발굴 등을 더욱 확산시키고, 그에 따른 자료의 보급 및 활성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모델의 발굴이 필요함.
- 기초연구와의 차별화된 정책 대안 개발이 필요함.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장 점〉

- 직업능력과 관련되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적절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문위원회,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있음.
-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연구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단 점〉

- 양적 지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활용률 등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함.
- 후속연구인 경우 선행연구와의 연계성과 차별화에 대한 분석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과제에 따른 연구방법의 다양화로 그에 상응하는 연구의 질적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진로교육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및 반영이 필요하며, 진로상담 교사의 역할 등 학교 내 다른 구성원의 시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진로교육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적 노력이 필요함.
- 과제전반에 걸쳐 법 개정의 결과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등 정례화와 채널 구축이 필요함.
- 국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 및 조사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함.
- 자격제도 등 과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하락함. 상세업무유형별로 기본 연구 점수가 소폭 오르기는 했으나, 수탁연구, 공동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점수는 낮아짐. 특히 정보제공서비스 점수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큼. 상세업무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수탁연구, 기본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순임.
-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정부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수탁연구와 공동연구는 전체평균에 비해 높지만, 기본연구와 정보제공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낮음.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전체 정부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차원 중에서는 환경품질, 품질요소 중에서는 구비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고객 문의와 요구사항에 친절히 응대’ 항목의 점수는 높고, ‘최근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가능한 연구결과물 제공’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관련 지침·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과제 관련 사전조사 충실’ 항목의 점수는 낮음. 공동연구에서는 ‘관련 지침·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 항목의 점수는 높고, ‘해당 분야 정책과 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정보제공서비스에서는 ‘고객 요구에 맞는 정보 제공’ 항목의 점수는 높고, ‘고객의견 점수의 편리함’ 항목의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 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결과물(보고서

등)의 체계적 작성 노력, 고객들이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확인 및 개선, 효율적으로 업무 확인·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와의 접촉(전화, 이메일, SNS 등) 용이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함. 상세업무유형별로 공동연구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오르기는 했으나 나머지 상세업무유형의 만족도는 낮아짐. 특히 수탁연구 점수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큼. 상세업무유형별 점수의 순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본연구, 정보제공서비스, 수탁연구 순임.
-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 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과 비교할 때, 기관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공동연구를 제외한 모든 상세업무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으며, 전체평균 대비 수탁연구의 점수 차이가 다른 상세업무들에 비해 더 큼.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전체 산·학·연 고객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모든 차원과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체평균에 비해 낮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에서는 ‘고객 문의와 요구사항에 친절히 응대’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과제 수행으로 해당 분야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의 점수는 낮음. 수탁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의 정확한 이해’ 항목의 점수는 높고, ‘고객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가 편리함’ 항목의 점수는 낮음. 공동연구에서는 ‘연구과제 진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보유’ 항목의 점수는 높고, ‘연구과제의 시기와 신청기간 적절’ 항목의 점수는 낮음. 정보제공서비스에서는 ‘기관 목적과 운영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 항목의 점수는 높고, ‘온라인 정보이용 관련 고객의견 점수의 편리함’ 점수는 낮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효과적으로 연구 목표 및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 진단 및 개발 노력, 고객들이 편리하게 의견 및 불만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VOC) 관리 시스템 확인 및 개선, 효과적인 업무 확인/처리를 위한 담당자 접촉(전화, 이메일, SNS 등) 용이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8개 연구분야별 자문위원을 10명 내외로 두어 전문분야별 과제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과, 기본과제발굴계획에 따라 공모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임.
- 기본과제 발굴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원내에서 연구진 간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구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있음.
- 기본연구과제 선정권한이 있는 연구사업운영위원회에 10명의 외부 위원을 확보하여 운영함으로써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노력이 돋보임.

〈단 점〉

- 발굴과제는 대부분 내부 제안에 의한 것임. 이는 외부 제안과제를 통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수요조사나 외부 의견 수렴 역할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증임.
- 정부부처를 제외한 외부 제안이나 산·학·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실적이 저조함.
- 연구주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KRIVET 자문위원회)이 사회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 의견수렴과 수요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의 외부 제안이나 산·학·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비율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자문위원의 선정에서 사회 전체 계층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의 대표나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자문위원 선정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의 구성과 운영, 활동 평가에 관한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수시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총 심의과제 27건 가운데 탈락과제가 10건에 이를 정도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임.
- 수시과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선정위원회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 연구기간에 따라 수시연구과제의 과제수행 예산을 적정화·차등화하고, 그 성과를 업적평가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임.
- 연구비 규모와 연구인원의 책정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과제의 수행 시기가 연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외부 인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선정의 투명성 확보에 다소 문제가 있음.
- 과제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제의 경우 보고서 발간과 홈페이지 등록이 지연되고 있음.
- 3개월 미만의 단기 보고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과제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과제선정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한해 정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함.
- 과제 종료 즉시 결과보고서의 발간 및 홈페이지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과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개월 미만 단기 보고서의 비중을 줄이고 연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중간보고와 적절한 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 추진체제를 연구계획서 심의, 중간심의, 최종보고서 심의, 최종보고서 평가의 4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평가항목 등급을 세분화하여 평가위원가의 평가편차를 최소화함.
- 협동연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협동연구 발굴 및 수행노력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협동연구 5개 과제의 협동연구 필요성, 역할 분담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
- 협동연구를 통해 협동연구의 우수성 홍보, 정책기여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국내·외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단 점〉

- ‘개도국 직업훈련 지원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연구참여자별 담당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권의사항〉

- 협동연구 전문가 풀(Pool)에 대한 인적 구성의 전공별, 소속별 기술이 필요함.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내지 포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 발굴 및 수행노력정도의 추진체계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성이 있음.
- MOU를 체결한 국가와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연구참여자별 담당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의 규정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4단계 심의와 평가로 수행하고 있음.
-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대·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을 외부 전문가 4인(100%)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구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추진기간 동안 중점검토전문가가 검토를 하고 있으며, 또한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추진 중에는 평가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음.
- 평가단계별 평가표의 배점을 기초·정책과제에 적합하게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식포털시스템(EKP)에 외부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여 전공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평가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구축은 바람직함.

〈단 점〉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실적과 내역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지표에 적합한 보고서 기술이 필요함.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지식재산 보호 관리 지침’(2013.6.30.)을 제정함.
- 지식존 등록건수, 지식맵 등록건수 등이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지식재산 보호규정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갖추고 있음.
-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제시한 점은 긍정적인임.
- ‘2013 홍보 확산 및 관리 방안’(2013.2.15.)을 수립함.
- 2013년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전사적 연구성과 마케팅 체계 구축과 고객지향적 홍보서비스 강화를 선정하고 세부 실행전략과 성과지표를 수립함으로써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함.
-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행전략별로 성과지표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인임.
- 연구원 내에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홍보 조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한 점은 장점임.
- 홍보성과를 계량화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제시한 점은 긍정적인임.
- 2013년도는 홈페이지 등록비율 100%를 달성함(2012년도 98.6%).
- 전년도에 비해 기관장 및 연구진의 대외 언론홍보 실적과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연구성과 DB 구축건수 및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증가하였음.
- 홈페이지의 환경 및 기능을 개선하여,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인지도를 향상한 점은 긍정적인임.

- 2012년도 대비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원 수가 대폭 증가한 점은 성과로 인정됨.
- 해외사절단의 방문을 통해 해외 홍보를 확대하고 국제행사 개최도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임.
- 연구보고서 배포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을 두고 배포 리스트를 공동 관리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인임.

〈단 점〉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 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다양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홍보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사례가 미흡함.
-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있음.
- KRIVET Issue Brief 발간 외에 이슈페이퍼의 발간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발간 시기도 또한 특정시기에 편중됨.
-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한 맞춤형 배포 전략이 미흡함.

〈개선 및 권의사항〉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전략적 활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성과지표의 활용을 권고함.
-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전략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축된 시스템도 환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보안 관련 시스템 등 시스템의 확충을 위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당해 연도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둔 성과지표와 단기 목표치가 필요함.
-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이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성과 향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연구성과 확산 채널별로 효과분석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13편(66.78건/59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전문지 게재 논문 비중을 줄이고,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현안문제 선정을 위한 과정이 잘 기술되어 있고,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 문제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선정의 타당성을 높였음.
- 현안문제별로 담당조직을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였음.
-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럼, 연구회 등 자체 연구모임을 지원하였으며,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표를 활용하여 연구보고서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함.
- 노조와의 이면계약서를 공개하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를 정립함.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중·장기인력계획을 수립하여 퇴직대체 연구직을 조기에 채용함으로써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함.
- 학습포럼, 학술연구모임, 학술회의 참가 및 게재 지원 등 자체적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함.
- 융·복합과제를 다학문적 연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연구로 정의하고 10개의 기본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토록 함.

〈단 점〉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 기관장과 부서장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함.
- 현안문제 선정 시 자문위원 이외의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음.
-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동기부여책 등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개선이 다소 부족함.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의가 부족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직원의 역량강화 노력이 제시되지 않았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 내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안문제를 파악함에 있어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하여 내부 시각에 얽매이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하여 연구원의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평가 및 보상제도의 개선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융·복합 및 새로운 과제의 개발에 있어서, 먼저 이들 과제가 해결하려는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음.
- 연수제도와 같이 국내·외 기관들을 직원의 역량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구성원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고 있음.
- 직원들의 고충처리를 해결하기 위해 ombudsman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상설 위원회 및 임시 TF에 1인 1개 이상 참여를 촉진함.
- 각종 원내 위원회에 노조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경영에 노조의견이 간접적으로 반영 되도록 함으로써 상생적 노사관계를 추구함.
- 국가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이 뛰어남.
-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및 협력 추진 노력이 뛰어남.
- 관련 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의 협력 추진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부서별 자문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여 연구집단으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함.
- 기관 발전과 홍보를 위한 기관장의 대외활동 실적이 뛰어남.

〈단 점〉

- 하위 구성원들의 상향식 의사 개진을 위한 제안 제도의 활성화가 다소 부족함.
- 구성원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비공식 채널(수시 면담 및 간담회)들의 제도화가 부족함.
- 직급별, 직종별 간담회와 같이 그룹별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함.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및 협력 확보 노력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제안 제도 등 상향식 의사 개진을 위한 채널들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구성원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한 비공식 채널들을 정례화하는 등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경영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직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의사소통 활동을 하고 있으나, 간담회를 좀 더 활성화함으로써 그룹별로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와 공식적이고 정례화된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운영규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내부 규정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각종 위원회에 구성원들의 참여율을 높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음.
- 내실 있는 내부 감사시스템을 잘 운영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였음.
- 청렴 교육상을 마련하여 청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 일상감사의 기준을 50만원 이상으로 하여 일상감사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원내·외 활동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외부활동이 상시 점검되도록 함.
- 연구윤리 확보 및 준수를 위한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특히 연구윤리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사전적 점검체계를 강화함.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윤리 규정에 대해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윤리 사전 점검 강화를 위한 표절검사시스템 도입이 잘 이루어졌음.
- 기관 외 공동연구자에게도 연구윤리서약서와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토록 함.

〈단 점〉

-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 중 신고시스템의 운영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이 있음.
- 연구윤리 위반 결과가 업적 평가 및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검사를 과제 종료 후에 실시하여 시작과 중간단계에서의 검사 실시가 불분명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부패 방지를 위한 상시 신고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와 연계하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사실장을 개방직화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표절 검사 결과를 연구자에게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업적 평가와 인사고과에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해서 과제 시작단계부터 표절 가능성 여부를 심사하고, 중간보고서 제출 시에도 점검토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수시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전반적으로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경영목표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천계획별로 연계방안의 내용들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계획들로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연구원장은 경영목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의 변화된 정책환경 및 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NCS기반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 체계 구축 세부추진 과제를 신설하고, 연구보고서 질 제고를 위한 운영 개선 등 4개 과제에 대하여는 그 방향을 수정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적절히 변경하여 설정하고 운용하여 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을 높이려 노력하였음.
- SWOT분석에서 나아가 연구부서장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해 검토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사업 방향과 연결시킴으로써 환경변화에 대하여 구성원이 공유하여 당면현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당면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단들에 대한 책임부서를 명확히 한 점도 바람직함.
- 경영목표 및 실천계획들은 본 기관의 설립취지와 당면현안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구축되었으며, 체계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음.

- 각 실천과제별로 실현 기능과 수단을 정리하고, 실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조직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고, 전체적으로 실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두드러짐.
- 성과중심의 연구사업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 실천계획에 대한 세부실행과제에 있어서 정책수요에 부합을 위해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연 83건 실시하고, 심의평가제도 개선 및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관리시스템의 효율화 향상에 기여하고, 연구보고서 질 제고를 위해 연구윤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연구윤리검사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사업 관리체계의 개선실적이 인정됨.
- NCS 기반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체제 구축 실천과제는 기관의 매우 중요한 중점과제인데 교육과정 개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보고서를 3종 발간 하였으며 학습도구를 505종 개발하는 등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제시된 성과목표치를 적절히 달성하였음.
- 중점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 및 성과지수는 전반적으로 계량화되어 있음.
-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하여 과제발굴생성의 체계화 및 정책수요 부합 제고, 시스템적 연구관리 및 효율화 지속, 연구보고서 질 제고를 위한 운영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본 기관의 연구의 질 제고에 대한 적극적 자세임.
- ‘국제협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 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공동연구, 한국 직업교육훈련, 해외통신원제도 등을 진행하여 선진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을 함으로써 긍정적임.
- 비정규직 운영개선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임시직원과 장애인 고용을 추진한 것은 지방이전 대비와 효율적 인재운영과제로서 긍정적임.

〈단 점〉

- 기관의 당면현안에 대한 구체적 실현가능 수단을 요약하여 제시하여 실천계획에 대한 구체적 추진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전사적 연구성과 마케팅체제 구축’과 ‘고객지향적 홍보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홍보에 관련한 실천계획은 다소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실시를 목표로 반영하는 측면이 미흡함.
- 현재 사업성격이 강한 본 기관의 성격상 중·장기적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고 연구성과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로서는 다소 미흡함.
- 세부실행과제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중 전문교과목 성취평가 기준 67종 중 56종 개발, 온라인기반 진로상담 심리검사 제공 건수 300만건 이상 중 284만건 및 산업체·학교 교육기부 협약 20건 중 9건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원에게 2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주는 것은 연구원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하여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움.
- 상생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노사협의회 및 노사간담회를 수차례 하였으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한 성과가 제시되지 않음.
-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마케팅 체계와 고객지향적 홍보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첨단 홍보수단 활용, 영문보고서 발간 등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당면현안에 대한 분석은 타당하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경영 목표에 대한 실천계획의 연계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문제해결 방안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관 내·외부 연구협력을 강화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 실천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사례 확산도 중요하나 독일이나 스위스 등 직업교육이 활성화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벤치마크하고 연구를 확산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환경 변화와 수요자 집단의 고객요구 분석을 실천계획에 반영하고, 추진 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계획에 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행정 및 재무 정보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창조경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연구와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융·복합적인 연구와 사업을 다루는 실천계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를 전년도와 달리 설정하거나 도전적으로 설정한 것은 인정되고,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일부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업방향의 지연 등의 이유가 있으나, 세부실행과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세부실행 과제를 설정하고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사업의 정책기여도를 제고하고 보고서의 우수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고객의 만족도 및 정책으로 반영되는 정도를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의 내실화를 위하여 선진국 또는 OECD수준의 국가들과 국제연구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내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써 연구원의 연구부담을 최적화하고, 연구 지원 부서는 연구부서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본 기관은 연구와 사업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이 중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연구부서장 워크숍 및 자문위원회 등 기관의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과제별 중요도를 계층분석(AHP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을 고려하고 연구기관 평가결과 및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3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합리적임.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 체제구축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중점추진과제로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조직 및 체제정비, 학습모듈개발 및 활용체제 구축 및 직무능력평가제 도입기반 구축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연구보고서 질 제고를 위한 운영 개선 과제의 수행에서 구성원 연구역량 강화 및 협업도 제고, 연구윤리 감독 및 보고서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신설 및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의 개발, 연구윤리 검사시스템의 시범 적용은 새로이 추진한 성과로 인정됨.
- 중점추진과제들이 기관의 당면 현안과 연계되어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보이며, 전체적으로 선정 배경 및 이유가 잘 기술되어 있음.
- 중점추진과제 선정 과정이 시기별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며, 부서장, AHP조사, 경영자문위원 의견 수렴, 추진 점검반의 의견수렴 과정이 체계적임.

〈단 점〉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과정에서 능력개발과 자격의 연계강화 실천과제가 중요성 및 시의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선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최종 선정단계에서 연구기관 평가결과 및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음.
- 평가요소별로 구체적인 선정 배경과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며, 선정배경 및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부족하고, 각 과제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부족함.
- ‘연구보고서 질 제고를 위한 운영개선’ 과제에서 내부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운영된 인센티브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국제협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 과제에서 국제공동학술행사의 개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등은 존재하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교육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실적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3대 중점추진과제의 선정과정이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개선되었는데 최종선정과정에 대한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중점추진과제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소별로 선정 배경 및 이유에 대한 수치적 평가결과 및 과제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대한 계량적 평가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중심 평가와 보상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 과제에서 선진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내부 연구원 및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기관의 핵심 기능 수행과 관련된 국가적 요구사항, 국가현안 대응, 내부현안 극복 기관발전 대응 실적이 우수함.
- Repository 신규 구축으로 학술·연구기관과의 메타 데이터 제공을 통한 지식공유 활성화 실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우수 사례임.
- 경영목표 추진점검반을 가동하여 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경영목표 운영성과 내용도 충실함.
- 새 정부 출범 등 연구환경 변화 대응 및 국정과제 수행지원을 위해 ‘국가직무능력 표준교육과정개발·운영지원센터’를 신설함.
- 정책고객 요청사항 및 구성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7실 10센터를 1본부 6실10센터로 기능적·수평적·협업조직으로 재편함.
- 신규 연구사업 발굴 및 정책지원을 위한 새 정부국정과제지원TF, NCS기반교육과정개발추진단TF 등을 운영함.
- 간담회 등 내부 고객 의견수렴으로 위임전결규칙, 직원근무성적평정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

- 비정규직차별철폐 노력으로 능률성과급지급지침을 개정하고, 연구윤리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연구윤리위원회 및 연구윤리담당제를 신설함.
-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으로 NCS학습모듈 55개 분야 개발, 훈련기관평가, 기본과제 35개 및 수시과제 17개 발굴, 국정과제 지원조직 구축 등의 성과를 도출함.
- 인사규정 및 직원채용규칙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공개채용 시 우대 가점제도를 유지함.
-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신규로 배출되는 경력없는 박사소지자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수인력 확보기반을 마련함.
- 신규확보 인력을 조기에 채용하고 퇴직 인력 발생 시 즉시 체계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안정적 연구기반을 조성함.

〈단 점〉

- 환경변화에 부합하려는 기관의 노력의 타당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고유 기능과 연계하여 정책 시행의 수혜자인 외부 고객 대상 수요 파악이 미흡함 (직제 규정 개정은 고객의 요구사항으로 볼 수 없음).
- 중·장기 및 연도 인력운영계획 수립 없이 인력을 운영함.
- 공개채용 우대제도의 실적이 없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사업관련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정기적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변화, 내·외부 고객의 요구, 경영목표 달성도에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조직 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우수인력 채용 절차에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관 고유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중·장기 경력개발 프로그램으로써 “KRIVET Academy(KRIVET 경력개발체계) 로드맵” 수립, 동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직원 경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구성원 역량강화 및 기관 경쟁력 제고 실적은 우수함.

- 2007년 교육진단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매년 ‘직원 경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구성원 역량강화 및 기관 경쟁력을 제고함.
- 자기 주도적으로 직렬별(연구직/비연구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경력 개발은 물론 기관의 역량강화에도 기여함.
- 직급/직렬별 맞춤형 교육 실시로 개인 경력개발 및 기관역량을 강화함(연구직은 연구연가, 해외연수, 연구윤리교육 등 비연구직은 전문직무교육, 해외교육훈련 연수 등).
- 직원경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직급/직종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함(직무교육 145건, 외국어교육 73건, 정보화교육 2건 총 220건, 1인당 평균 교육훈련비 216천원, 예산집행액 31,720천원).
- 교육·연수 결과의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의 구축 정도는 매우 우수함.
 - 개인사명 및 성과목표서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보고서 작성
 - 교육훈련 이수 실적 근무평정에 반영(10%)
- 직원 교육훈련(연수/세미나 포함)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교육훈련 이수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 해외교육훈련(연수) 및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공유를 통한 환류체계를 운영함.

〈단 점〉

- 구성원 사기진작책이 미흡함.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실적의 제시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매년 기관 차원의 교육훈련성과 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세종시 이전 대비 사기진작책 수립이 필요함.
- 연수 결과물에 대한 논문 게재 등 엄격한 관리체계가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매년 초 경영목표와 연계한 부서(팀) 운영 목표와 개인사명서 제출, 이를 기반으로 연도말 연구/직무수행 및 자기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하는 업적평가시스템은 개인-부서-기관성과를 연계시켜 평가제도의 목적 달성을 최적화함.
- 연구직의 연구수행능력평정점수(80%)는 소관부서(기획팀)에서 소정의 열람기간(5일) 동안 열람 및 확인, 정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함.
- 최근 3년 간 근무평정 점수 반영(3년 전 80%, 2년 전 90%, 1년 전 100%)은 적절함.
- 연구직, 비연구직, 보직자별로 직무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요소를 운영하고, 비연구직의 계량화지표는 20%였으나 2013년 PC보안 이행 5%를 신설하여 25%로 확대함.
- 연초에 제출하는 성과목표서와 연말에 제출하는 자기보고서를 기반으로 담당업무별 업적평가에 활용함.
- 연구직은 연구성과 평가비중을 80%로 운영함(계량지표).
- 업적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 근무평정연구제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원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 전 직원 설명회, 원규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도를 개선함.
- 연구직이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기타 연구활동 실적으로 5점 한도 내에서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금전적 보상을 시행함.
- 근평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노조측 의견을 참고하여 다수 노조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근평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부서별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2회 수렴함.
- 보고서 평가의 공정성과 질 담보를 위해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보고서 평가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을 3배수 이내로 선정함(기본과제 외부 위원 4명).
- 평정결과 열람 및 이의신청제도와 연구수행능력평정 점수 열람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이의 제기 및 정정절차 운영함.
- 당해 연도 업적평가에 의한 능률성과급 지급 시 개인별 평정등급을 통보하여 평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이의신청 기회 부여함.
- 종합 평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휴직자 및 직위해제자, 연구연가 연구직원 등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 차등(기본연봉 차등인상 및 누적, 성과연봉 차등), 능률성과급 차등 등 금전적 보상과 연계함.
- 평가결과는 승진(탈락 22명) 및 재계약, 포상, 교육훈련, 익년도 연구과제 배정 등 비금전적 보상과 연계함으로써 평가결과를 엄격하게 활용하여 적정성을 유지함.

〈단 점〉

- 비보직자의 자기보고서에 대한 원장 평가는 부적절함.
- 평가 종료 후 기관 차원의 종합적인 평정 분석을 미 실시함.
- 연구보고서 평가위원들 간 점수차에 대한 보정제도의 도입이 부족함.

〈개선 및 권의사항〉

- 직무수행능력 평가지표는 비합리적 지표로서 비중을 최소화 또는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연구직 계량지표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논문게재에 대한 인센티브의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평가결과를 비금전적인 보상인 재임용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2013년도 임금협상 시 누적식 기본연봉제 수정과 정부기준 초과 인상 등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내용의 임금협상을 타결함.
- 연구지원직 직무분석, 부서장 회의결과, 정년차별, 세종시 이전 등 갈등관리 운영실적이 우수함.
- 노사화합을 위한 전직원 연 2회 워크숍 개최로 구성원 상호간 화합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
- 전직원이 참여하는 기관장 주재 월례조회, 기관장과 부서별 간담회, 기관장과 구성원 개별 면담 등 수시대화 실적이 우수함.
- 2013.8.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노사협의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을 정부의 비정상화 관행의 정상화 과제로 제출하는 등 운영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투명경영의 일환으로 (구)단체협약상 부속 합의서(이면합의)를 구성원 동의절차를 거쳐 기재부 알리오에 공시함.
- 단체협약과 별개의 이면합의서를 공개한 것은 투명경영과 장기적 갈등관리의 기반이 될 수 있음.

〈단 점〉

- 2013년도 분기별(1/4, 2/4, 3/4) 노사협의회가 노사간 갈등으로 인하여 미개최됨.
- 기관장과 부원장의 직원 간의 의사소통 채널 외에 중간급 관리자와 직원간의 수시대화 채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단체협약 갱신 중이며 법준수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부분합의 상태로 19개 항목의 미합의 쟁점사항의 해결이 지연된 한계를 가짐.
- 노무관리 담당자 교육이 초청교육에 한정됨.

〈개선 및 권의사항〉

- 4/4분기 노사협의회는 개최되었으나, 노사 간 갈등관리를 위하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중간급 관리자와 직원 간의 수시 대화 채널 등 조직 전체 상호 간의 의사소통 확충이 필요함.
- 단체협약 갱신과정 중에 있는 바, 미합의 쟁점 사항에 대하여 정부지침을 준수한 원만한 타결이 요구됨.
- 노무담당자와 관리자들의 교육이 외부교육 참여 등으로 다양화될 필요성이 있음.
- 사회공헌활동, 칭찬문화 이외에 노사협력 증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의사소통 통로가 움부즈맨, 고충처리 등과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재설계될 필요성이 있음.
- 문제가 된 부속합의서의 비합리적 내용을 제거하기 위한 노사 간 노력이 필요함.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율은 37%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하며, 2014년 예산에서도 32%를 편성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4%, 2014년 7%로 연구회에서 제시한 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3년 11%로 연구회 제시 기준(10~20% 범위 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10.0%를 편성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81%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수시 연구과제 17건의 집행에서 전액 위탁연구비로 지급한 과제는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적립하고 있고, 퇴직예치금은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퇴직보험 및 퇴직금전용 적립계좌(MMF)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0.5%)은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1,891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2011년부터 능률성과급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여,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됨.
- 기본연봉에는 직무급과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 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음.
-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5%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본연봉에 대하여 전년도 평가결과가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 연봉제를 적용·실시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등급별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pm 1\%$ 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등급별 인원배분비율 역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 있어 최고-최저 각 10%,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이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함.
- 능률성과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각 10%,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성과연봉 지급 시 차등지급률의 경우 간부직/비간부직 모두 최고-최저 $\pm 4.5\%$ 수준으로 평가기준(간부직 $\pm 33\%$, 비간부직 $\pm 15\%$)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연봉 지급 시 간부직과 비간부직의 차등지급률을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6개 자체개선계획 중 5개를 완료함.
- 연구기관평가 책임담당제 실시, 해당지표를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연중 상시 관리하는 등 연구기관 평가 지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천은 우수한 평가결과 환류체계임.
- 정책연구협의회,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대외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함.
- 평가결과 개선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됨.

〈단 점〉

- 지표관리계획 추진실적 중 점검 주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 성과연봉 차등폭을 현행 유지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과연봉 차등폭을 개선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연봉 차등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국회 지적사항의 존부와 관계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음.
- 평가결과 지적사항의 개선정도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체에 대한 구체화된 체계 수립이 필요하고, 평가결과 개선을 위한 지표관리계획과 전산화 예정인 개인, 조직, 기관의 목표관리를 연계하여 경영목표와 성과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고용을 위한 우대조치, 가점제도 실시, 공고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률을 초과 달성하여(월 8명 대비 10명 달성: 3.0% 달성), 2013 우수사례 선정된 성과가 있음.
- 채용률을 달성하였으나, 장애인고용 유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장애인직원의 욕구 파악 시스템 구축, 그것에 기초한 직무, 배치, 이동 등)를 수행하고, 장애인 우대조치에 관한 연구원 차원의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채용과정에서의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장애인 채용의 체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계획에 입각한 인원(7명)을 100% 채용하였고, 결원 시 적시 충원을 하고 있으며, 청년인턴 계약직 전환실적(3명)이 있음.
- 청년인턴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인턴에 대한 교육, 평가, 증명서발급, 취업지원 휴가 발급 등을 잘 이행하고 있고, 청년인턴에 대한 교육지원과 취업활동지원 실적이 우수함.
- 청년인턴 전용 오리엔테이션 교재가 없고, 일반적인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교재를 청년인턴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청년인턴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음. 청년인턴프로그램의 이행 체계는 이해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적 자료가 미비함. 청년인턴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관련 공문이나 결재 등이 없어 실질적 운영을 판단하기 어렵고 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약함.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 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 등을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개채용 시 전형단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우선고용에 관한 연구원 차원의 명문의 규정이 부재하고, 보훈관련 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채용에 관한 공문을 접수하기는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우선고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들을 우선채용하기 위한 연구원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므로 이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즉시 채용한 실적(1명)이 있으나, 여전히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비율이 4.1%로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우선채용과 고용유지를 위한 규정체계를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문제해결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 규칙이 존재함(임시직원 운영지침 등).
- 비정규직 처우(교육, 복리후생, 편의시설, 휴가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고, 비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차별적 조항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거나 적어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항을 관련 규정과 운영계획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는 부분이 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침을 존중하여 향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연구원 차원의 단기적 및 장기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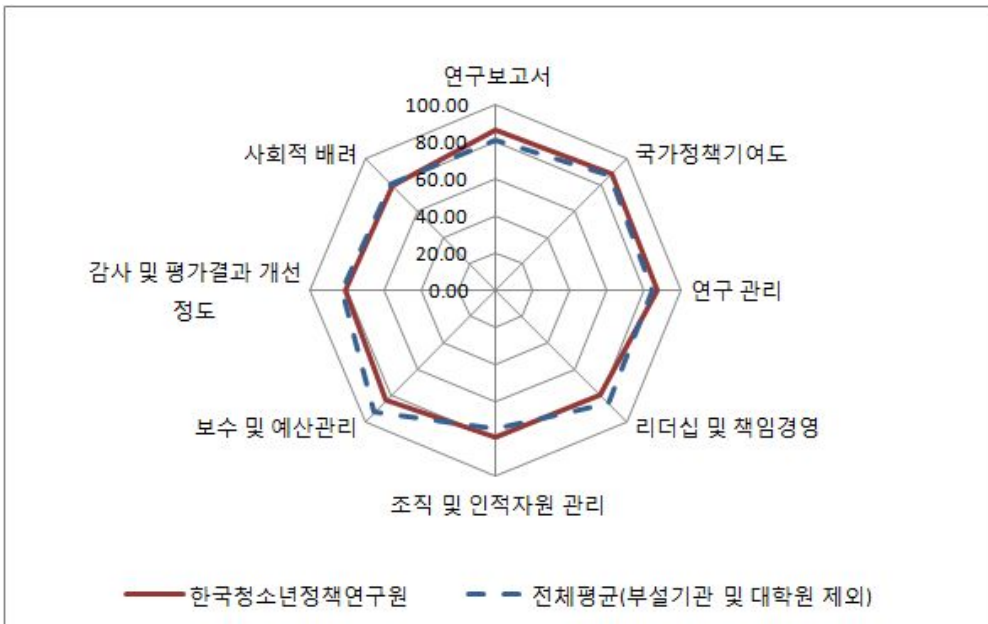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C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A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A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A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A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A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A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B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C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B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D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D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B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청소년 문제 행동 관련 변인들을 추론하기 위해 전국적인 표본조사와 학제 간 고찰을 시행하였으나,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함.
- 청소년의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설정과 역량지수 개발을 통해 학력 중심의 평가 기준을 역량 중심의 기준으로 개선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함.
- 학술적 기초연구, 기본 정책연구와 주요 현안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 자원 배분과 투입 체계를 확립해야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함.
- 청소년정책 SWOT분석을 통해 중·장기 연구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나, 청소년 관련 민간기관이나 전문가 등 외부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노력이 다소 부족함.
- 협동연구 추진체계는 규정과 지침을 잘 마련해 두고 있으며, 협동연구 발굴 및 수행을 위한 국내·외의 네트워크 등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함.
- 협동연구 장려 및 연구아이디어 확보를 위한 협력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계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효과성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부평가위원 풀의 선정과 구성을 확대 및 균형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평가자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3대 목표를 기반으로 ‘2013 홍보 NYP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및 평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이나, 연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의해 홍보성과를 창출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경영 분야]

- 기관장의 현안문제 타개,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 및 소통,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은 뛰어나나, 융·복합 과제의 발굴 수행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노력이 부족함.
- 기관의 대내·외 환경분석이 잘 되었으며, 현장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였음. 내부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였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를 잘 정비하였음. 현안에 대한 기관장의 파악이 미흡하므로 주도성의 강화, 과제와 성과의 구체적 설정을 통한 효과의 확인이 필요함.
- 당면현안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구체적인 실현 수단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당면현안과 관련된 경영목표 실천 계획의 실현 수단들을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NYPI 중장기 연구마스터플랜 및 2013년도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정·보완을 통해 기관의 경쟁력과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선정하고 있으나, 제시한 환경변화 이슈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타당성 및 효과성이 다소 미흡함.
- 직군 간 차별화된 평가지표와 척도를 적용하고 연구직의 경우 연구성과 평가비중을 강화하고 있으나, 평가결과 활용의 승진심사 기준에 경력이 20점 반영되어 있어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 노사 간 TF 중심으로 갈등관리를 하고 있으나 갈등관리의 실적은 저조한 편임.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나, 집행내역 중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은 과제(80% 이상)가 1건 발견되어 외부위탁 비중을 줄이는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 예금 등으로 적절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였으며,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을 기준에 맞게 책정하고 있으나,

기본연봉의 비누적식 적용, 성과연봉과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 기준을 미준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유목화하여 개선과제를 선정하는 등 기본적인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성과연봉제와 장애인 고용의무이행의 개선이 미흡하며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개선실적에서 개선성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의 구성이 필요함.
-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다소 저조하므로 관련기관, 장애인단체 방문 등 다각적인 채용루트 개발 노력이 필요함.
- 청년인턴제도는 평가기준에 맞추어 잘 운영하고 이행하였음.
-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3.5%로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차별개선 개선을 위한 조직적·제도적 운영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기본·성과연봉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심층 면접, 국내외 스마트폰 정책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 내용을 체계화하고 서술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려고 노력함.
- 청소년 문제 행동 관련 변인들을 추론하기 위해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학제간 이론들을 다차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수월성을 높임.
- 예방 중심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정책 수립, 학교기반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 전문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의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아동 정신건강지표 및 현장 적용 프로그램은 정책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문헌검토, 통합조사 분석, 해외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여 일반적 정책 차원과 교육적 차원에서의 민주 시민역량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활용도를 높임.

<단 점>

- 학교에서의 정신 건강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실천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단계별 추진 방안이나 로드맵 제시는 다소 미흡함.
- 단일 주제로 3개의 보고서를 출판한 대형과제의 경우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거나 논리성과 체계성이 취약하여, 독자에게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독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설문조사나 면접을 활용한 연구의 경우 면접 결과만 제시되어 있고, 분석 방법 및 분석 과정에 대한 논의가 누락되거나 면접 결과가 정책 제언에 통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현행 정부정책에 대한 고찰이 단순한 현황 제시에 국한되고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은 다소 미진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학업 중단 청소년 연구를 사례로 든다면, 학업 중단의 원인, 학업중단 청소년과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요 외국의 사례를 탐구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제언이나 방안이 개별 보고서 간 상호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중·단기별 보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관점의 청소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중단 연구의 병행이 필요함.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운영을 하면서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문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정책 리포트 11건, 17개 시·도 컨설팅 등의 실적을 창출했고, 내부에 국정과제 및 정책대응TF를 구성하여 정책현안의 제안과 대책 제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모니터링단 운영, 청소년정책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등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적절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
-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국정과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업기관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부 등 주무부처나 기관의 자문 활동도 수행하고 있음.
- 36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14개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를 한 것은 기관 규모에 비해 높은 성과를 성취하였고, 특히,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강화 대책에 기여하였으며, 위기·취약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여성가족부·교육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종합 대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 또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정 과제로서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였고,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시설과 연계 협력방안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 등 국정과제 이행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부처 기본계획 수립 등 법령 개정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정책수립의 협업 링크 역할을 담당하여 제도적·행정적 연계를 강화함.

-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청소년정책 수립·평가에 정책수요자를 직접 참여시켜 청소년참여기구의 활성화를 유도한 것은 적합성 높은 정책수립의 모델이 됨.

〈단 점〉

- 청소년 정책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미흡함.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 학교폭력예방 근절 대책 등은 교육부 주관 정책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도사업이나 정책기여 분야로 보기 어렵고, 협업연구 분야로 분류해야 할 것임.
- 학술 기초 연구 및 기본연구과제 수행과 주요 현안 국정과제 수행에의 합리적 자원 배분과 투입 노력이 부족함. 매년 유사하게 수행되는 기초 조사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고 시급한 현안과제에 비중 있게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함.
- 연구과제의 건당 연구과제비가 타 연구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팔목할 만큼 많이 증가된 예산에 걸맞는 역할의 제고가 있었는지 명료화되고 있지 못하고, 2013년에 새롭게 추진되거나 특성화시킬 만한 사업 및 연구과제가 미흡하여 연구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부분 과제들이 2013년에 수행한 과제여서 국가정책과 현안문제에 기여한 성과가 미흡하여 국가정책기여도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 중앙부처 중심의 연구지원에 편중되어 있어서, 입법부나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하향식 정책전달이 될 우려가 상존함.
- 타 연구기관과 중복된 과제가 많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정체성과 임무가 전반적으로 모호하며, 기존의 연구와 다른, 2013년에 특화되어 새롭게 창출된 연구 주제들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에 대한 자원 배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즉 매년 유사 문항으로 이루어지는 전국 단위 기초조사 등의 필요성을 재점검하여 자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국정과제 관련 주요 현안이슈나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안모색을 위한 연구과제의 개발과 지원에 자원 투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도 수행가능한 현장밀착연구를 늘려나가는 등 연구과제의 자원 배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주요 현안이슈를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중추적으로 이끌어가는 선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즉, 타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주요 정책 연구에의 참여나 협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적 어젠다의 개발과 대안제시에

있어서 청소년 전문인력이 핵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적 영향력과 기여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소년 정책의 일차적 지원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청소년 현장에서 자치단체와의 협업 및 제도적·예산적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도 중요하지만, 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의 주력 사업을 개발하고 전문적 방안을 모색하여 기관의 정체성과 타 연구기관과 차별화된 전문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된 여러 연구기관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화된 세부과제를 명확하게 하여, 상호 중복과 갈등 또는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해병대 캠프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청소년 시설 안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밖에 자유학기제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실태 등 현안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률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신규 제도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함.
- 주요 정부 현안과제에 대해 연구분석을 통한 대안의 제시뿐만 아니라 세미나 참여, 협의회 개최와 자문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종합대책 수립에 기여함.
- 정부 현안과제 수행에 있어서 청소년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함.
- 국회, 정부부처의 종합 대책자료 지원, 정책요구자료 제공, 공청회 주제 발표 등을 적극 지원하고,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국가기관과 수시로 자문, 회의, 토론회, 협의회 등 다양한 대응을 실시함.
- 학교 폭력, 학업중단 청소년, 태안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사망사건, 자유학기제, 청소년 아르바이트 침해사례 등과 관련한 요청에 적극 대응했으며, 이를 통해 종합대책 마련(학교 폭력, 학업중단 청소년), 법률개정(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등), 정책시행(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 도우미사업,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강화 등)에 기여함.
-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현안과제가 의미있게 실천되도록 노력함.

〈단 점〉

- 청소년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현장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하달된 정부 시책을 뒷받침 하는데 치중하여 현장의 문제 진단과 요구의 수렴과 반영에 효과적인 대응이 부족함. 예를 들어, 해병대 캠프 사건 이후에 추진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추진에 대한 현장의 반발과 애로사항들에 대한 고려와 정책에의 반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관련하여 개인차원보다 조직차원 참여 및 지원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정책의 특수성과 독자성이 부족한 채 다른 연구기관과 유사한 접근 방식과 정책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현안과제의 직접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유사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인상을 주고 있음.
- 청소년으로부터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절차적 노력에 비해 그 성과를 보여주는 차별성 있는 산출물은 미흡함.
- 주요 사업들을 정부부처나 전문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대중과의 소통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이슈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전문가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중재 및 소통역할의 확대가 필요함.
- 청소년모니터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재정 확보와 상시 소통시스템의 가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학교 및 학생 중심의 기존 교육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국가 청소년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종합적 안목과 패러다임에 근거한 정책 대응 노력이 필요하고, 장애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과제에 대한 조기 예측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사전 예방,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문제를 포착하고 정책화하는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현안과제와 관련하여 전문 연구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사회변화 예측에 따른 적절한 의제 개발과 제안을 선도하고 예기치 못한 사안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교육정책의 보완이나 틈새정책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학생을 포함한 국가 청소년 전반을 대상으로 근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대안을 전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 요청에 응하여 하향식 과제를 합리화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에 머물지 말고, 국정과제의 실천을 어렵게 하는 제반 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추상성,

비현실적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견제 역할도 해줄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주요 사업들이 정부부처나 전문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대중과의 소통이 미흡하므로, 현장의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등과의 연계를 보다 활발히 하고 언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청소년정책이 여러 부처와 기관을 아우르며 전개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다양한 연계와 협력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10개 부처와 정책연구협의회 4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32회 등을 개최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13개 자치단체에 개별 정책수행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연계활동을 수행한 바 있음.
- 연구기관, 단체, 학회, 교육기관 등과 약 42회에 걸친 협동연구 수행, 토론회 및 세미나 공동개최, 정책자문, MOU 체결 등을 통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UNESCO 등 18개 국외 학술기관, 단체와 연계협력 및 정책현안 정보 공유 등 긴밀한 네트워크를 운영함.

〈단 점〉

- 다양한 협력 관계를 조성했으나 일부의 경우 단순한 자료제공이나 회의 참석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형식적인 관계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속적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 성과가 미흡함.
- 많은 정책과제가 교육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책 대안이 실현되기 위한 교육부처, 시·도교육청 등과의 유기적 협력이 다소 미흡한 실정임.
-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성과 과시를 위한 네트워크 실적 제시가 상당 수 있음.
-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의 지속적인 운영은 바람직하나,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협력적인 연구협력 성과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관련 부처의 업무에 대한 일회적인 기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체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기관간 협력연구 등을 활성화 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수립,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예산과 조직의 선택과 집중이 보완되어야 함.

- 청소년(학생)은 의사결정권이 학부모에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책연구 시 학부모 참여 등과 같은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교육부처, 시·도교육청 등과의 유기적 협력이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MOU 체결이나 방문, 간담회 수준에 그치지 말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외에도 현안문제 해결, 정책개발 중심 네트워크 운영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
- 청소년의 가족 공동체, 학교, 지역 사회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망도 확대해 가고 현장의 기관과 지도자와의 소통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WARDY 소속 국가를 확산시켜 나감과 동시에 연구원의 과제별 특성에 따라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는데 참여시켜, 불필요한 해외출장이나 예산 소모를 줄이고 지속적·실질적인 연계와 협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해야함.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관련부처, 단체, 기관들과 활발하게 연계를 맺고 협력관계 속에서 과제를 추진함. 대표적인 사례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II’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관련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코디네이터 기능수행 수련시설과 학교 내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 기관간의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한 바 있으며, 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교육청, 학교와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해서 체험활동 운영의 좋은 협력사례를 제시함.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에서도 관계부처(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의, 회의, 자문 등을 하고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TF를 구성하여 관련부처 간의 연계와 정책화에 노력함.
- 정책의 수요자이면서 일차적 대상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밖의 학부모와 지도자 등 현장의 요구와 의견 반영에 노력함.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에서는 정책수혜자인 청소년, 학부모 대상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활용,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워크숍 등을 수행한 체계적인 정책화 과정을 수행함.

-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현장전문가 자문,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정책화 작업을 하였고, 그 밖의 대부분의 과제에서 청소년 모니터링단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함.
- 국정현안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해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화의 성과를 보여줌.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을 가능하게 한 바 있고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 수립 시행에 기여하였으며, 사례관리 및 학업숙려제 등 구체적인 정책실행 수단을 제시하였음. 또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척도 개발 연구”에서는 정책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여성가족부 고시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즉시적 반영 성과를 보여주었고,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거론돼 온 청소년 카드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열고 외국 및 국내 카드 등의 활용 체계를 분석하여 정책화 실적에 기여함.

〈단 점〉

- 연구주제 및 관련 개념이 불명료하여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 대안 제시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에서 ‘행복한 마을’에서의 ‘행복’의 개념과 ‘마을’의 범위 등에 관한 의미와 성격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에서도 자발적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자발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념 구분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에서는 ‘청소년 직업체험’과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활동의 성격에 있어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두 활동을 한 과제로 묶어 수행하는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 연구과제의 취지와 내용이 타 부처 혹은 타 연구기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관련 정책 방안 제시에 있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독자성·참신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책화 과정의 선도적 역할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에서는 정책화 실적 내용에 있어서 기존 정책안들과 차별되는 참신한 정책안의 제시가 미흡하고, ‘자유학기제’ 관련 과제들은 교육부나 한국교육개발원의 선도적 활동의 부분적 역할에 국한되는 측면이 강함.
- 대부분의 제시된 과제들이 2013년도 과제이거나 중·장기 사업의 1차년도 과제들이기 때문에 정책화 과정을 아직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정책화 실적이 미미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음. 9편의 평가 대상 과제 중에서 6편의 과제가 2013년도 과제인 관계로 기초적인 추상적인 정책 방향 제시에 그치고 구체적 정책화 실적이 미흡함.

- 또한 중·장기 연구과제가 많고 과제 예산도 타 연구기관에 비해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년 유사한 연구활동의 반복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적 요소들에 대한 점검과 효율적 예산 집행의 근거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주제와 관련 개념들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여 정책대상과 범위의 설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기관의 전문적 특수성을 발휘하여 독자적이며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고 주도함으로써 타 연구기관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연구범위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연구의 경우 업무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연계 속에서 역할과 기능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문기관 간 공동연구도 활성화하여 정책의 집행력과 효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평가대상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책화 실적이 적은 최근 과제의 비중을 줄이고, 정책화 실적과 국가기여도가 높은 과거 5년 이내의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함.
- 중·장기 중단연구의 경우, 단계별 정책 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유사한 업무를 중복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예산 집행의 과정과 절차를 항시 점검하여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과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설정과 역량지수 개발을 통해 학력중심의 평가 기준을 역량중심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함.
- 아직 청소년 역량에 대한 개념화 및 지표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4가지 영역으로 역량을 분류·제시한 것은 연구의 독창성과 선도성을 보여주는 부분임.
- 입시중심의 교과학습의 편중 현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경험학습과 역량함양 중심 학습으로의 전환이 기대됨.
-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2008~2012)’에서 ‘청소년 역량강화’가 핵심 청소년정책 이념으로 반영되었고, 연이어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이 정책과제로 반영되어 본 연구가 정책기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교육부 교육과정의 기본흐름은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인 바, 꿈과 끼를 키우는 것이 기존의 학력중심에 편향되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인간관계, 정의적 영역의 핵심역량으로 통합되는 흐름에 적절함.

- 2013년부터 교육부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진로·직업 체험 등 역량강화를 위한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 중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결과가 각 활동과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로 인해 제5차 청소년 기본계획에 과제로 포함되어 여성가족부는 2013년도에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부도 학생 인성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단 점〉

- ‘교과중심 학습’에서 ‘역량중심 학습’으로의 전환의 의미, 이론적 배경 제시가 미흡함.
- 본 연구에서 청소년 역량을 4가지(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자율적 역량, 사고력)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분을 위한 명료한 근거가 부족함.
- 핵심역량 영역, 세부지표들이 다양한 틀로 제시되고 있어서 일관성있는 측정에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지표가 필요함.
- 민간영역에서는 정책의 실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정부차원에서는 아직도 초기 단계로 정책 실현정도가 낮음.
- 청소년 핵심역량 지수에 따른 일선 학교 교육과정 및 환경에 있어서 실질적 변화에의 기여효과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
- 청소년 역량 유형화 및 진단에 따른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역량중심 학습의 의미와 역량 구분의 이론적 근거가 명확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 및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양한 역량요소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가 교과교육 및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이 필요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 체험학습 비중 확대가 필요함.
- 청소년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시설, 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교육관계 연구기관 간 상시 협의를 통해 조정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
-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자율적 행동역량, 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역량지수 및 지표개발이 필요함.
- 아직 역량중심 학습은 검토와 시범사업 수준에 있고 실질적인 국가의 정책으로 도입 되지 못해 그 파급효과가 적은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정책화 작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함.

- 실제 수혜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에 역량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활동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에게는 역량결과에 따라 그에 필요한 역량개발 활동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와 지원이 필요함.
-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에서 검증을 거쳐 제시한 역량지수 및 지표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역량지수 측정 및 강화역량 발굴과 대안이 필요함.
- 청소년 역량지수를 진단하고 개별 청소년별 역량개발 활동(맞춤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기본연구가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반면, 수탁연구는 상승함. 연구과제에서는 기본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수탁연구 순임.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보제공 모두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냄. 특히 기본연구에서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준비성’, ‘성실성’과 ‘구비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낮았으며, ‘효율성’, ‘편리성’, ‘공익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성실성’과 ‘공정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제공을 제외한 모든 상세업무 유형에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높으나, ‘전문 인력/조직 보유’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수탁연구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높으나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성도’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한편 정보제공의 경우 ‘제공 정보를 수용하기 쉽도록 구성’, ‘고객 문의 및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확산 노력)’ 등의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고객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이나 시스템을 갖춰 체계적인 고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소폭 상승함. 상세 업무별 결과 기본연구, 공동연구, 정보제공 등이 전년 대비 점수가 소폭 하락한 반면, 수탁연구, 위탁연구 등은 상승함. 연구과제에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위탁연구, 수탁연구, 기본연구 순인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중에서는 정보제공이 가장 낮음.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정보제공을 제외한 모든 상세업무가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음.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구비성’과 ‘합리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높았으며, ‘전문성’과 ‘공익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전문성’과 ‘공정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특히, 공동연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으나, ‘보고회·자문회의 일정 협의 원활’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수탁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높으나, ‘연구 관련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체계 구비’와 ‘해당연구에 대한 사전조사 충실’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한편 위탁연구의 경우 ‘의견, 불만사항 수집 및 반영 절차 구비’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공동연구의 경우 ‘고객의 요구사항 수집 및 반영 절차 구비’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정보제공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 및 접속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고객의견 접수 편리’와 ‘지속적인 고객관리에 노력’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고객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이나 시스템을 갖춰 체계적인 고객만족도 조사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청소년정책 SWOT분석을 통해 중·장기 연구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있음.
- SWOT분석을 통해 연구목표를 찾고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여 연구주제의 선정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함.
-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발굴과제의 심의 및 연구과제(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합리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 연구과제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비중있게 참여시키고 있음.

〈단 점〉

- 작년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으나(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등), 아직도 발굴과정에서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의 결합이 부족함.
- 연구과제를 심의하는 단계에서 학계(교수)와 공무원, 민간기업 전문가들은 참여하고 있으나, 교사나 청소년 전문가 등 현장 실무자들은 포함되지 않음.
- 선정된 기본연구과제가 선정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만큼 정확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청소년 관련 민간기관이나 전문가 등, 외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제선정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허용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장밀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의 청소년 전문가들을 심의단계에 체계적으로 결합시키도록 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수시연구과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할뿐만 아니라, 과제선정 시에도 정부부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연구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8개 수시연구과제 모두 종료 즉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함.
- 3개월 이상의 과제에 대해 중간보고 절차가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성실한 심의가 이루어짐.

〈단 점〉

- 수시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외부위원은 접수된 과제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판단할 뿐, 수행타당성 판단에서는 배제되어 있음.
- 선정기준에서 수시연구과제의 성격과 무관한 내용들이 있음.
- 홈페이지 등록 시 발간 월(月)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지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의 수행타당성을 판단하는 회의에도 외부위원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선정기준을 수시연구과제의 성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보고서 발간 시 또는 홈페이지 등록 시 발간 월(月) 표기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3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의 경우 과제의 진도 및 질 관리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심의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 추진체계는 규정과 지침을 통해 잘 마련해 두고 있음.
- 협동연구 발굴 및 수행을 위한 국내·외의 네트워크 등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협동연구 과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 체계 개발 연구 III’의 경우 추진체계, 상호협력 및 시너지 효과의 내용은 충실하게 이루어짐.

〈단 점〉

- 협동연구 추진체계에 대한 실제 운영내용에 대한 기술은 피상적임.
- 협동연구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포상지급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다양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음.
- 협동과제 대부분이 연구기관 및 연구원 간의 역할분담이 구체적이지 않음.
- 협동연구가 학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력관계로 확대가 필요함.

〈개선 및 권의사항〉

- 협동연구 장려 및 연구아이디어 확보를 위한 협력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계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다 효과성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협동연구과제를 담당 수행하고 있는 역할관계가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 절차의 체계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고유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등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평가체계를 관리하는 등 평가체계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연구보고서 평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배정에 따른 집체평가를 실시하고 최고점과 최하점을 배제하는 방식의 평가점수 편차의 개선을 하고 있음.
- 연구사업 유형별·단계별로 맞춤형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연구품질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고 있음.
- 연구사업 유형별 맞춤형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이 있으며, 특히 실행계획서 단계, 중간보고서 단계, 최종보고서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연구품질을 제고하고 있음.
- 평가단계별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평가표를 통하여 평가가 수행되고 있음.
-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절차, 선정기준이 제안되고 있음.

- 다양한 분야의 외부 평가자 풀(Pool)을 확보하고 있으며, 평가위원의 적합성에서 관련분야 연구실적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집체평가가 참신한 방식임은 인정하나, 집체평가를 할 경우 평가위원의 분야별 편중가능성, 1인당 평가부담이 증가함을 고려할 때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평가위원 풀(Pool)대비 실제 평가인원이 소규모인바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늘리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공동연구원 계약서와 외부 전문가가 집필한 연구보고서에 저작권 및 논문 발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2013년에 정보보호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메뉴를 신설·운영하였음.
- 정보보안 업무 시행 세칙을 2013년도에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음.
- 원내 직원들에게 강화된 연구윤리 관련 지침을 제시하는 등 연구윤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을 2013년도에 새롭게 구축하고 업데이트한 점은 긍정적임.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타깃별 맞춤형콘텐츠 제공, 해외 홍보 활성화라는 3대 목표를 포함한 ‘2013 NYPI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행 및 평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함.
- 홍보 채널별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인 점은 장점임.
- 메일링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함.
- ‘2013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를 발간하여 배포한 점은 긍정적임.

- WARDY 회원국과의 교류를 위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식 등 이를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해외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은 장점임.

〈단 점〉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 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을 피드백하고 분석하는 절차가 미흡함.
- 홍보·확산 계획에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단기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홍보·확산 실적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연구결과 확산수단의 효과성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수단 체계 조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대내·외 홍보네트워크의 유기적 결합이 다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성과지표 활용 등을 통한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배포대상, 배포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 성과지표 활용 등을 통한 보고서 배포방법 및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이 미흡함.
- 이슈페이퍼의 발간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됨.
- 홍보의 양적목표에 치중하여 효과목표에 대한 고려가 다소 소홀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전략적 활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성과지표의 활용을 권고함.
-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전략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축된 시스템도 환류를 규칙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당해 연도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둔 성과지표와 단기 목표치가 필요함.
-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 효과성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확산 수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채널별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이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성과 향상도가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보고서를 과제 종료후 더욱 빨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보고서에는 연구성과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가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배포한다고 하나, 구체성이 떨어짐. 즉 어떻게 수요자를 선별하며 차별화된 맞춤형 배포를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슈페이퍼를 이슈에 맞춰 상반기와 하반기에 골고루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언론 홍보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함.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0.86편(26.86건/31명), A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전문지에도 균형있게 논문을 게재하고 해외학술지에도 게재를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을 권고함.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기관의 대내·외 환경 분석이 잘 되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중·장기 연구계획에 따른 연차별 추진과제 계획 수립이 뛰어남.
- 연구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SWOT분석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였으며, 키워드를 설정하여 연구계획의 방향성을 정함.

〈단 점〉

-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방법론의 사용이 부족함.
- 현안문제 선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함.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활동결과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여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기관장이 현안문제 도출 및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 및 성과가 부족함.
- 연차별 추진과제가 포괄적이고 선언적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연구원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동기부여책 및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의 개선이 부족함.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 및 새로운 과제발굴 수행 노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 과제의 내용 및 근거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문제 선정 과정에서 원내·외 의견수렴을 보다 강화해야 함.
-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현안문제에 대하여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인식하고 추진하여 효과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성과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분명히 설정하여 각 활동의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기관장의 노력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원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동기부여책과 평가 및 보상 시스템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학제적 접근방법을 사용한 융·복합 과제의 개발 및 수행 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와 성과의 구체적 설정이 필요하고, 경영목표와 추진전략에 따라 구체적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그 달성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책에 대한 대안제시에 있어서 정부의 수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나, 환경분석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정부의 정책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려는 체계가 잘 정리되어 있고, 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고충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와 익명 신고센터의 운영이 뛰어남.
- 상향식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안제도와 위원회 위촉직의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제도는 우수함.
- 루키보드, 부서간 크로스미팅과 같이 참여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통 노력을 기울임.
- 국가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이 뛰어남.
- 기관장이 연수, 세미나, 워크숍 등 대외 행사에 참여하여 기관의 의견 제시 및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함.
- 학회, 개별연구 및 교육기관, 관련단체들과 협의회, 업무협력, 학술교류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함.

〈단 점〉

-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여러 채널(간담회 및 직원 면담 등)의 제도화가 다소 부족함.
- 직급별, 기능별로 기관장이 의견수렴을 하는 간담회와 같은 제도적 통로가 미흡함.
- 국내 유관 연구기관과 단체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확보 노력이 다소 부족함.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보 노력이 부족함.
- ‘다문화’와 같이 국가적으로 주요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업노력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여러 비공식 채널을 제도화하여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개별 면담 이외에도 간담회를 대폭 실시하여 개인 중심이 아닌 그룹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국내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 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한 구성원 교육이 잘 이루어졌음.
-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음.
- 주요 기안문서를 기관장에 앞서 감사관이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미연에 방지함.
- 평가의 기준 설정, 외부 전문가 평가 참여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제도를 실시함.
- 연구윤리 확보 및 준수를 위한 체계 구축이 잘 정리되었음.
-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연구윤리 예비조사 위원회와 연구윤리 위원회)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표절검색시스템(Copy Killer)을 일찍 도입하여 운영함.

〈단 점〉

-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 중 부패 신고 및 청탁 등록 시스템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됨.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을 상대로 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표절 방지를 위한 실제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규정상 명문화되어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부패 방지를 위한 신고 시스템과 청탁 등록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와 연계하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바람.

- 각 위원회에 직원의 참여를 강화하는 제도의 시행은 바람직하나,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예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을 상대로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표절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표절검사 결과를 연구자에게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인사고과에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경영목표 실천계획은 경영환경 분석, 연구기관 평가결과 반영, 대내·외 의견수렴 및 연구 경영전략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연구원장의 경영목표와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수립하였음.
- 3대 경영목표와 13대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한 연계방안이 실천계획별로 구체적인 수립되어 있으며 경영목표 달성에 필요한 방안들임.
- 기관의 당면현안을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당면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구체적인 실현가능수단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 바람직함.
- 실천계획의 실현가능한 내용과 실현가능 수단이 잘 정리되어 있음. 추진조직과 인력, 일정을 기술함으로써 경영목표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임.
- 경영목표 실천계획별로 성과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투입·과정·산출 단계별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치와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성과관리 구축정도가 우수함.
- 추진과제들의 성과목표 달성도가 연구윤리강화, 직원소통구조 및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제외하고 100%를 초과하여 달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성과달성도가 양호함.
- ‘연구성과 및 홍보 체계적 관리 증대’ 현안에 대하여 인터넷 환경 하에서 연구모니터링 환류시스템 강화와 연구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인 의미가 있음.
- 청소년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책연구협의회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를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현황을 직접 청소년들로부터 얻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연구성과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하여 첨단 정보화 수단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것과 영문판 제작 배포를 통한 해외홍보는 도전성이 인정됨.
- 연구중간에 심의와 공무원 중심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보고서의 질을 향상시킨 것은 타당함.

〈단 점〉

- ‘청소년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의 구체적 연계방안들이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등으로 연구강화의 실효성이 낮고,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네트워크 및 융합적 연구를 위한 노력이 미흡함.
- 연구성과 및 홍보의 체계적 관리증대 당면현안은 기관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수단은 계획수립, 세미나 활용 등 다소 추상적인 내용들로 설정되어 있음.
- ‘청소년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강화’라는 목표에서 창조경제를 지향한 미래지향적 연구나 융·복합연구를 통한 정책연구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함.
- 내부 현안에만 치중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약한 편으로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들 중 과정지표들의 성과는 양호하나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인 운영프로그램 만족도, 중점연구과제 평가점수 및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있어서는 미흡함.
- 성과의 성격상 비계량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성과목표가 비계량지표로 제시되어 있음.
- 성과목표에 해외홍보 활성화와 관련한 해외홍보 네트워크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이 나타나 있는 반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관련하여 추진전략 및 계획이 없이 진행되어 다각적인 글로벌 협력 및 연구활동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청소년과 관련된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내 다양한 전공자, 여러 관련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들과 융합적 연구 및 협동연구를 증대할 필요가 있음.
- 당면현안과 관련된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구체적 실현 수단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로 검토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외부 환경의 주요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청소년을 직접 다루는 일선 관계자의 요구 분석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현안문제를 다루는 연구 실천계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연구 중심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정책연구에 관하여 글로벌 이슈 및 네트워크가 중요하여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현안이 중요한 글로벌 과제들의 연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및 공동 연구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지표 중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산출 및 결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및 달성치가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고, 가능한 한 계량적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를 공동세미나, 공동연구 등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체제 구축 후 지속적인 피드백과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경영전략회의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기관에 적합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침.
-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목표가 모두 산출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과제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고 관리되는 점은 우수함.
- 선정된 중점추진과제가 전체적으로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을 띠고 있음.

〈단 점〉

- 3대 중점과제의 선정이 9월에 이루어짐으로써 추진과제의 실행과정에 대한 피드백과 이를 통한 목표관리가 다소 부족함.
- 중점추진과제 선정과정은 합리적이거나,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 설립목적과 경영 목표와의 부합성, 파급효과의 정도 등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청소년 행복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선도 등 중점추진과제의 파급효과와 기여도가 기관이 선정한 중점추진과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낮음.
- ‘청소년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 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청소년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연구기관 고유의 발전방향에 맞는 중점추진과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함.

- ‘우수인재 확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제는 추진 노력에 비하여 결과는 미흡하고, 성과중심 평가·보상시스템 구축 등에 소홀한 면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을 상반기 이내에 하고, 중점추진과제의 집행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3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정하여, 기관에 적합한 중점추진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효과와 기여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선정 기준이 보다 객관적일 필요가 있고, 중점추진과제와 국가정책과의 부합 연계성을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소규모 연구인력의 구조와 최근의 글로벌 이슈의 부각을 고려한다면 선진국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보다는 개발도상국 발전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조하는 과제가 중점추진과제로 적합함.
- 중점추진과제 선정에 있어서 청소년 관련의 다양한 외부 전문가 그룹 등의 의견수렴 과정의 강화가 필요함.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연계한 환경변화 이슈 도출이 적절함.
- NYPI 중·장기 연구마스터플랜 및 2013년도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정·보완을 통해 기관의 경쟁력과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선정함.
- SWOT분석에 의하여 도출된 8가지 경영환경 외적 요인에 맞추어 조직운영 효율화를 추진함.
- 16개 시·도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구성(총 162명)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 파악,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한 사례는 우수함.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및 성과는 양호하고 경영목표 추진전략별로 대응조직을 운영하여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함.
- 조직운동을 통하여 청소년정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이루어내는 등의 다양한 성과를 창출함.
- 직무분석과 사업분석에 근거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통하여 과학적인 정책연구와 청소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직종별, 사업별 5개년 인력수급계획을 확정함.
 - 직무기능분석, 부서별 AS-IS 분석, 직무성격 분석, 부서별 To-Be 분석 등
- 세종시 이전에 따른 숙련 인력의 이탈을 예방하고, 연구직 채용 시 차년도 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조기 채용,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경력직 보안전문가 채용사례는 우수함.
- 인사규정, 직원채용시행세칙의 채용심사기준에 따라 3단계 심사(서류심사, 논문발표 및 면접심사, 원장면접)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채용자격에 게재실적 최저기준 (200%)을 명시함.
- 연구사업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 확보와 지식재산과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인재를 채용함.
- 선제적으로 무기계약직 5명을 전환하고, 퇴직예정자에 대해 조기 채용을 실시함.

〈단 점〉

- 환경분석의 결과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조직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의 제시가 미흡함.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제시한 환경변화 이슈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타당성 및 효과도 구체성이 결여됨.
- 고유 기능과 연계된 외부고객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제시한 고객요구 사항도 일반적인 행정처리 사항 수준임.
- 연구직 논문 발표, 면접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청소년 모니터링단의 의견수렴을 통한 요구사항 파악이 필요함.
- 경영목표 실천계획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적성, 사회성 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보다 고도화된 채용절차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정책 부처의 요구에 부응 및 과학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지원을 위한 청소년 국가기초통계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패널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구기간이 확대됨에 따른 패널의 유지 보수 등 원활한 연구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패널 및 통계조사사업 전문 연구인력 확충 필요함.
- 청소년 행복도가 OECD 국가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삶의 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연구 추진이 필요함. 이를 위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2013년부터 10년차 연구) 및 청소년영향평가 연구, 청소년권리모니터링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의 핵심사항 추진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환류 연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가출, 자살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청소년 보호 및 복지 관련 문제의 중·장기적 대응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이 필요함.
-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 및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가 객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조직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가 객관적일 필요가 있음.
-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경영목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한 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은 매우 우수함.
- 교육·연수프로그램을 비롯한 10가지 역량강화 제도와 Rookie Board, 기념일, 조기 퇴근제와 같은 7가지 사기진작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자기개발 수요 충족과 기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함.
- 교육만족도 조사, 실적 분석 결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연수지침을 개선하는 등 환류체계는 우수함.
-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교육훈련연수계획 수립을 통하여 우수인재의 확보 및 우수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함.
- NYPI 인적자원개발계획에 따라 공통, 기관, 개인역량강화 교육 등 3개 부문의 교육을 계층별, 필요역량별로 분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함.
- 교육훈련비 집행은 전년 대비 36%가 증가함.

〈단 점〉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한 성과의 객관화 노력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연구직은 연구과정평가, 연구성과평가, 부가활동평가, 상호평가, 원장평가로 구성되어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재심 후 최종 확정함.
- 지원직은 직무설계평가, 직무성과평가, 부가활동평가, 상호평가, 원장평가로 구성됨.
- 직군간 차별화된 평가지표와 척도를 적용하고, 연구직의 경우 연구성과 평가비중을 강화함(65%).
- 인사이동으로 인해 두 개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 30일에서 90일로 근무기간을 확대 조정함.
-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논문에 심사·게재비를 지원하고 논문 발표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논문발표 실적에 대한 부가업무 점수를 인정함.
-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가 공증제도 실시 및 업무성과평가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평가결과 공개범위의 강화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함.
- 비연구직 직무설계평가 및 성과평가과정에서의 이의신청 및 피드백제도 도입,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을 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함.
- 업무성과평가 대상자 48명 중에서 연구 연기자 3명, 휴직자 1명, 감사관 1명 총 5명을 제외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함.
- 업무성과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성과연봉, 능률성과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평가 결과를 승진 및 연구연가, 역량증진 휴가 대상자 심사 기준으로 활용함.

〈단 점〉

- 평가 시행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이 부족함.
- 직원 승진심사 시 최근 3년 간 업무성과평가 점수(평균)를 30%만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 비연구직의 평가지표 계량화 노력이 미흡함.

- 기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평가가 부서평가, 경영목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연구직의 연구업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규정화가 미흡함.
- 연구과제 평가위원 선정위원회에 대한 규정만 있고, 연구보고서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규정의 구체화가 부족함.
- 평가결과 활용의 승진심사 기준에 경력이 반영되어 있어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비연구직의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계량적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지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전사적인 관점에서 팀과 개인 간 성과를 연계하여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을 포함한 업무성과평가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 승진심사 기준에 100%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 세종시 이전, 업무평가, 인건비 인상률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노사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이 이루어짐.
-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노사협의체에서 소외될 수 있는 바,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1인을 노사협의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직원 제안제도가 제안,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심사결과에 따른 추진상황, 추진담당(부서명)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제안도 활발함.
- 비정규직이 고충처리절차에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고충처리전담조직(고충처리위원회) 내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충처리전담자(총무팀장)를 추가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4회의 노무관리담당자교육과 4회의 일반관리자 교육을 실시함.
- Host-day, Cross Meeting 등의 의사소통통로를 제도화함.
- 4회의 정기노사협의회와 1회의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함.
- 고충처리 절차 안내를 충실히 하였고, 2건의 고충을 처리함.

〈단 점〉

- 주요 이슈에 대한 노사관계 갈등관리 실적의 결과는 성과연봉, 개인업무성과평가 면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여 미흡한 실정임.
- 갈등이슈의 발견을 위한 제도화가 미흡함.
- 노무교육의 구성원공유가 미흡함.
- 노사간담회의 실시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사협의를 통하여 정부지침에 부합하는 성과연봉 및 능률성과급 제도 개선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내는 갈등관리가 필요함.
-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사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제안제도,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종합하여 전체구성원의 하의상달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의 비율은 55%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 예산에서도 42%에 이르고 있어 적정하게 편성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25%, 2014년 18%로 평가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15%, 2013년 10%로 연구회가 제시한 평가기준(10~20% 범위 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11%를 편성하고 있어 적정함.
- 2013년에 8건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85%로 나타나 적정한 수준임.
- 퇴직급여충당금은 분기별로 균등하게 적립하였고, 퇴직예치금은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 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 중 1개의 과제의 외부위탁용역비 비율이 80% 이상임.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연구사업비 8개 과제 중 외부위탁비율이 80% 이상(85.1%, 집행액 기준 88.9%)인 과제가 1개 과제가 있으므로, 외부위탁비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연구과제 수주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부통제가 필요함.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8%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645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2011년부터 능률성과급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여,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됨.
- 기본연봉에는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비로 구성된 직무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약 29%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제시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봉의 책정방식이 비누적식이며,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 또한 갖추어져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의 책정방식과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2012년 12월 성과연봉의 차등지급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한 결과 2013년부터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에 대한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 있어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였음.

〈단 점〉

- 성과연봉 지급 시 간부직과 비간부직의 차등지급률이 $\pm 13\%$ 로 운영되고 있어 평가기준을 미준수하고 있음.
- 연구직의 성과연봉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저등급에 2명만을 배분함으로써 평가기준(10% 이상)을 준수하지 못함.
- 능률성과급에 대한 차등지급률($\pm 3.9\%$)이 평가기준(최고-최저 2배이상)을 준수하지 못함.
- 능률성과급을 업적평가결과에 더하여 수탁과제 수행실적(재정기여도)을 반영하여 지급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연봉의 차등지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에 맞게 차등지급률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직의 성과연봉에 대한 인원배분비율에서 최저 등급에 3명 이상을 배분함으로써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능률성과급 차등지급률이 업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등폭 또한 평가기준에 맞게 최고-최저 2배 이상이 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직원설명회를 통하여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개선계획 추진에 있어 상시점검과 정기점검이 이루어지는 등 기초적인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를 가지고 있음.
-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유목화하여 개선과제로 설정한 것은 장점임.
- 청소년 현장의견 반영 위한 채널 가동 등으로 청소년 등의 연계강화와 연구성과가 연결됨.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이 전년대비 29%가 증가함.
- 법인카드 익일 모티터링 개선으로 예산사용의 건전성이 확대됨.
- 공동연구자의 경우 계약서에 원고내용, 연구의 양(원고지 페이지 명시) 등을 명시하여 협의사항을 명확히 함.

<단 점>

- 19개 개선과제 중 성과연봉제와 장애인 의무고용은 여전히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
- 개선계획 및 추진절차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약함.
- 개선실적을 개선사항과 성과를 구분한 것은 잘한 일이나, 이의 내용이 목표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를 가짐.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 누적식 도입과 장애인고용 의무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회 지적사항의 준부와 관계없이 개선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 개선이 기관발전에 기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결과의 환류체계에서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기관 평가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도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채용공고, 서류 및 면접 전형 우대조치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저조함 (1.1%).
-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노력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고용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 채용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기관, 장애인단체 방문 등 다각적인 채용루트 개발 등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 목표 달성, 퇴직 시 결원보충을 적시에 이행하고 있음.
- 청년인턴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잘 이행하였으며,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 실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고충 해결담당관 운영, 근무수행능력·태도 정기적 평가를 잘 이행하였음.
- 청년인턴제 운영 및 이행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 등을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한 규정,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고용 시 우대조치 관련 규정이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하여 보훈처에 전화하는 등 일정한 노력은 하였으나 연구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은 미흡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시도하여 1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이 3.5%로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TF 같은 조직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장애인고용, 청소년인턴채용 분야와 통합 운영 가능).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을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과 계획이 잘 정비되어 있음.
- ‘2013년 비정규직 차별개선TF’를 운영하는 등 차별개선 개선을 위한 조직적·제도적인 운영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였음.
- 직원 복지 분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미한 수준의 차별이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기본, 성과연봉에서 차이가 있음.
- 기관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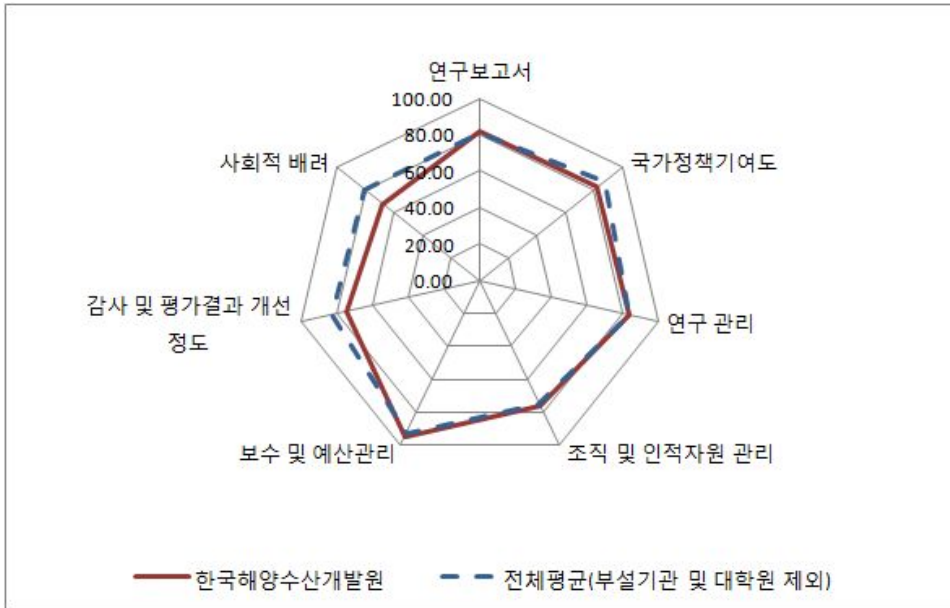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E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A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C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A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C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C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F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B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수산 외식산업 분야에 관한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제의 특성과 연구 범위에 따라 정책 사안별 제약 요인, 재원 소요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선원인력 수급 기본계획,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국가 항만 보안 계획, 연안 침식 관리, 무인도서 관리, 어선 금융제도 도입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 해양수산부 외 유관 부처, 대학, 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확충과 협력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북극해 종합연구 등을 감안할 때 국외 정책 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
- 분야별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심의, 공개발표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는 등 짜임새 있게 과제를 발굴·선정하고 있으나, 해당분야 정책현안주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어 중·장기 과제 발굴 노력이 부족함.
- 협동연구 활성화와 심화를 위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협동연구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협동연구의 장려를 위한 가산점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하고 있음.

- 협동연구 수행 시 연구진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성과 결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부 평가위원 풀(pool)의 선정·구성을 확대 및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평가위원의 과제검토 수에 대한 규정 검토가 필요함.
- 연구성과물을 규정에 입각하여 배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연구성과물 배포 시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실질적인 환류시스템에 대한 성과는 미흡함.

[경영 분야]

- 중국 현지의 중국연구센터 업무전담 지원부서를 지정·운영하여 활동실적 점검·모니터링 강화, 센터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해 감사실 등의 예산집행실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도출된 환경변화 이슈 및 고객요구사항은 고유 기능과 연계성이 부족함.
- 연구직은 연구활동실적에 대한 배점 부여기준 및 배점 부여방법을 구체화하고 행정직은 업무성과평가 시 30% 이상을 계량지표로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승진심사기준에 원장 평가(10%)와 인사위원회 평가(50%)는 정성평가로서 부적절함.
-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구성원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노사 간 대립상황 속에서 노사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이 교착상태임.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나, 집행내역 중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은 과제(80%이상)가 1건 발견되어 외부위탁 비중을 줄이는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 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분기별 균등적립이 아니라 3/4분기까지 최대한 많이 적립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을 평가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도록 전년도 기본연봉에 62,000원을 더하고 있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인원배분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됨.
- 실효성 있는 평가결과 개선절차를 가지고 개선노력을 수행하였으나 단체협약 미체결이 지속된 한계를 가짐. 지적사항 개선실적이 성과를 통해 경영개선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전체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장애인 고용률이 평가기준에 상당히 미흡(0.5%)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기관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다각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함.

- 청년인턴 고용계획 대비 달성률이 다소 미흡하며(87.5%),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고충처리 담당관 및 고충처리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고용률(3.9%)이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하므로,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임금 부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가 다소 존재하므로 기관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항만 물동량 연구에서 CGE모형, 네트워크모형, 중력모형 등 세 가지 모형을 병행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고 또한 세 가지 모형에 대한 한계점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독자나 정책 입안자들이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함.
- 수산 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추진전략의 경우처럼 일부 보고서에서 구체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정책 제안을 제시함.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외식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 외식산업 분야에 관한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함.
- 위성계정을 통하여 외항 해운산업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법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단계적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외항 해운산업의 산업 연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함.

<단 점>

- 해운과 연안에 관한 연구 대상에서 중국의 비중이 지대하다 하더라도 외국의 사례 연구가 중국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연구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도 있음.
-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연구에서는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인력양성에 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여타 산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함.
- 수산지표 전망 모형 개발을 위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적 유용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다소 불명확하며, 또한 주요 수산정책 지표 전망치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움.
- 소비자의 수산 외식산업 선택 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은 단순 나열식 형태를 보임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찰이 다소 미진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주제의 특성과 연구 범위에 따라 정책 제언별 제약요인, 자원 소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형식을 나타내면서도 특정 방법 (해외 사례 등)에 집중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정비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정량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해양수산부 신설에 대응하여 직제를 재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체제를 구축함.
- 신규 국정정책 수행을 대응하기 위해 수시과제 20%, 전년대비 22% 증액 배분함.
- 독도, 북극해, 해양레저,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해사안전, 해양환경보전,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발협력 사업과 FTA(Free Trade Agreement) 대비한 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단 점〉

-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자원 관리에 관한 국정과제 수행이 미흡하며, 해양신산업 플랜트 건설 등의 현 정부의 정책 수행 실적이 미흡함.
- 국민의 힐링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 조성사업에서 국민생활과 관련된 실적과 다양성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적인 정책과제의 발굴 및 대응전략 구축이 요구되고, 연구원의 경영방침이나 목적사업과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해양수산정책 연구과제의 중복성, 효율성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해양 수산인들의 삶의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에 더 정책이 집중되어야 함.
- 항만물류와 안전사고 예방, ODA 사업에 대한 인력과 예산배분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국제동향, 안전사고 예방, 해양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수행이 더 요구됨.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해양수산부 신설에 대응하여 국정과제를 도출하였고, 일본 원전방사능 대책과 북극해종합정책 추진에 기여함.
- 해운, 수산물유통구조개선, 연안침식관리, 한중 FTA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해운보증기금 등 긴급한 현안과 관련하여 수시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함.
-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 창조경제 연구TF를 운영, 해양수산 산·학·연 정책협의회를 운영함.

<단 점>

- 신설된 해양수산부의 신성장, 창조경제 전략과제의 도출과 해양영토 보전, 일본 원전에 대한 수산물 식생활 안전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다소 미흡함.
- 창조경제에 관련된 대응과 관련해서는 다소 선제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수산물의 안전성, 불법어업 근절, 해사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미흡함.
- 해양레저과 신설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관련 연구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해양수산부의 신성장 과제 수행과 해양영토보전, 일본원전에 대한 수산물 식생활 안전과 신뢰도 구축이 요구됨.
- 그 외 수산물의 품질관리, 불법어업 근절,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요구됨.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정책협의회, MOU체결, 세미나, 포럼, 워크숍이 이루어짐.
- IT가 융합된 국가정책 추진과 다른 분야와 기술이 융합된 연구 활동이 있음.

<단 점>

- 정책과제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와 활동 및 해양수산부 외 관련부처 간 협력관계가 부족함.
- 국정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활동과 도출된 국정과제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네트워크 활동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활동과 도출된 국정과제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네트워크 활동이 요구됨.
- 인문, 사회, 경제, 자연과학, 공학, IT가 융합된 국가정책 도출 연구활동이 요구됨.
- 해양수산부 외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사업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
- 국외 정책연구네트워크 구축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공동연구나 구체적 ODA 활동이 요구되며,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강화가 더욱 요구됨.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선원인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해기사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함.
- 수산물 유통개선을 통해 유통경로 단축, 유통비용절감, 수산물의 품질위생관리, 식품안정성을 제고함.
- 연안침식관리 구역을 우선지정 가능하게 하여 연안침식 피해 감소, 유실된 모래해안 복원, 연안정비사업의 효율성이 증가됨.
- 국가항만보안계획을 제안하여 항만보안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도모함.
- 해양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 체계를 수립함.
- 무인도서 관리유형을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 방지에 기여함.
- 어선금융제도를 도입하여 어선 표준선형 개발과 함께 어선에 새로운 금융방법인 리스와 펀드 제도 도입을 제안함.

〈단 점〉

- ‘선원인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해기사 양성 증원에 있어 구체적인 현황조사와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와 의견수렴이 부족함.
- 해양시설물별 해양사고 예측 및 해양사고 종류별 대책이 미흡함.
- 항만재난 재해 발생 시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를 포함한 재난재해 종류별 구체적인 대응방안 제시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선원인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해기사 수급 동향

- 분석이 요구되며, 해기사의 사회요구에 따라 정원 조정이 요구되며, 정원 증원에 따른 시설, 교수증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해기사교육의 질적 향상에 예산 투입이 요구됨.
- ‘수산물 유통 관련법의 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에 따라 수산물의 유통경로단축, 수산물의 품질관리, 위생관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원활한 정책시행을 위해 농림부와 도매상인, 유통업계의 협의와 홍보가 요구됨.
 -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체제 구축 방안’과 관련하여 해양시설별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매뉴얼이 요구됨.
 - ‘제1차 국가항만보안계획 재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항만보안을 위한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항만공사(PA) 등 항만보안 관련 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항만시설별 안전관리 대응이 요구됨.
 - ‘무인도서 법령 및 지침 개선연구’와 관련하여 무인도서 개발사업 승인 지침에 근거하여 정확한 기초조사 자료에 따라 무인도서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난 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항만청,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 관공선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해 타 기관과 협의와 조정, 보완이 요구됨.

□ 선도와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기존의 육상수조식 양식기술을 이용한 기술과 산업이 복합된 기술임.

〈단 점〉

- 실제 적용 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제시가 다소 미흡하며, 경제성, 타당성 검토와 함께 시행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선행기술 확보와 제시가 미흡함.
- 고비용 저효율과 친환경 녹색성장에 배치되며 기존양식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존 양식어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책이 요구되며, 경제성, 타당성 확보와 시행 전에 기존양식장에 미치는 영향, 빌딩양식장과 주변시설과 주민들과의 조화, 원수확보와 빌딩양식장의 수 처리 기술 등 해결해야 할 사회, 경제, 기술적인 문제점과 선행 조치가 요구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하락함. 상세업무별 결과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보제공 등이 전년도 대비 점수가 소폭 하락함. 연구과제에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수탁연구, 기본연구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 공동연구와 정보제공은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냄. 반면, 기본연구와 수탁연구는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구비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낮았으며, ‘효율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효율성’, ‘효과성’, ‘준비성’을 제외한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구비성’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기본연구를 제외한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의 정확한 이해’가 가장 높은 반면, ‘연구결과물의 체계적 작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 및 정책적·학문적 활용도’ 항목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고객의 문의 및 요구사항에 친절하게 응대’가 가장 높은 반면, ‘해당연구에 대한 사전조사 충실’ 항목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한편, 공동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높으나,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유지’와 ‘연구수행일정 준수 및 효율적인 연구수행법 채택’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정보제공 경우 대부분의 항목은 높은 편이나 ‘고객의견 접수 편리’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과제가 계획된 일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연구과제 관리체제의 보완이 우선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하락함. 상세업무별 결과 위탁연구를 제외한 모든 상세업무가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함. 연구과제에서는 위탁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동연구, 기본연구, 수탁연구 순임. 상세업무 중에서는 교육훈련이 가장 높은 반면, 수탁연구가 가장 낮음.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수탁연구를 제외한 모든 상사업무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수탁연구, 위탁연구,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교육훈련에서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전문성’과 ‘구비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낮았으며, ‘공익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공정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수탁연구를 제외한 상사업무 유형에서도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특히, 교육훈련의 ‘대응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보고회 참석자 의견 경청 및 의견 적극반영 노력’이 가장 높은 반면,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선도’ 항목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높으나, ‘업무 수행 전 정보교류 적절성’ 항목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 경우 ‘필요 전문지식 보유’가 높은 반면, ‘고객의견 및 불만사항 제시 편리’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임. 공동연구의 경우 한편 정보제공 경우 ‘해당부서 및 담당자와의 접촉용이’가 가장 높은 반면, ‘고객의 연구역량강화에 도움 및 고객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관계 조성에 도움’과 ‘연구진행 시기 및 신청 기간 적절’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한편, 정보제공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은 높은 편이나 ‘고객의견 접수 편리’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훈련은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의 점수가 높으나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창구 및 시스템 보유’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양하고 유용한 최신 정보를 얼마나 잘 공유하고 있는지, 시의 적절하게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관리가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연구주제 선정단계부터 정책담당자를 포함하는 과제발굴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정부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점이 돋보임.
- 기본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원내 다양한 행사(공청회,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분야별로 100건을 발굴하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심의, 공개발표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는 등 짜임새 있게 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 과제발굴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를 확정하는 등 선정 절차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단 점>

- 과제발굴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없음.
- 해당분야 정책현안주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나, 중·장기 과제에 대한 발굴 노력이 부족함.
- 과제발굴위원회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선정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음.
- 특히 선정평가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1~2인에 불과해, 2012년도 지적사항인 외부 전문가(학계 등)와의 연계성 보완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

<개선 및 건의사항>

- 발굴위원회에도 가능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중·장기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년도 핵심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선정평가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고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소관부처 통합·신설에 따른 정책수요에 대비하여 과제발굴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점이 돋보임.
- 과제 선정기준 등 발굴과 선정을 위한 원칙을 갖추고 있으며 선정평가를 위한 외부위원풀(Pool)을 운영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심의과정에 정책담당자 참여를 보장하고 활용성과에 따른 가산평가 제도를 운영함.
- 과제 선정 검토단계에서 연구참여자 사전검토를 통해 적절한 연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

<단 점>

- 수시연구과제중 ‘해양수산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방안 연구’는 원장지시로 과제선정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과제발굴의 합리성이 다소 결여 되었음.
- 학회, 대학 등을 포함하여 좀 더 적극적인 과제 발굴 노력이 요구됨.
- 수시연구과제의 진도관리 및 보고서 질 관리 차원에서 중간 및 최종 심의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과제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과제 결과보고서가 발간되지 않고 있어 수시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음.
- 6개월 이내 과제일 경우 중간평가 대신 진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
- 수시연구과제 보고서 발간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모든 과제가 예외없이 과제선정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외부 과제 수용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개월 이상 수시연구과제의 진도 및 질 관리를 위한 중간/최종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제 종료 즉시 결과보고서가 발간되고 홈페이지에 탑재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 강구가 필요함.
- 수시연구과제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위해 6개월 이내 연구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시연구과제 보고서의 품질과 발간, 홈페이지 등록 등 전반적인 연구결과 관리를 개선해야 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 활성화와 심화를 위한 연구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협동연구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음.
- 협동연구의 장려를 위한 가산점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하고 있음.
- 협동연구 발굴 및 수행 노력은 발굴위원회 등의 원내 기구를 통하여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

<단 점>

- 협동연구 과제 5번(‘제2차 연안정비 변경계획수립’)의 경우 연구진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음.
- 협동연구의 성과 및 시너지효과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진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성과 결과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 체계의 규정과 제도화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착수심의평가, 중간평가, 최종심의평가, 연구보고서 최종평가가 분리·운영되고 있음.
- 중간평가에서 평가결과를 피드백하는 등 연구품질 제고노력을 함.
- 품질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공식에 의하여 연구품질의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음.
- 이의신청에 대한 프로세스가 비교적 잘 설정되어 있음.
- 연구수행 단계별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평가함.
- 평가위원의 인적 구성 풀(Pool)이 전공영역별로 적절하게 되어 있음.

〈단 점〉

- 평가단계별 평가기준이 있으나 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음.
- 최종평가의 경우 학계만의 평가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임.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단계별 평가기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 외부평가위원의 과제검토수에 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 전문가 풀(Pool)내의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풀(Pool)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추진해야 함.
- 각 연구평가 단계별 다양한 평가위원 선정을 고려해야 함.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원문 저작물 보호 체계를 일부 갖추고 있음.
- 대외협력·홍보실에서 ‘Ocean Vision 2013’과 ‘2013 KMI 연구성과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 ‘201·1·1 전략’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홍보활동을 전략적으로 접근함.
- ‘연구활동평가규칙’ 내에 ‘홍보 및 성과확산 실적’ 관련 별도 평가기준을 두고 있음.
- 언론홍보 및 행사 개최 실적을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위해 평가지표를 계량화한 점은 긍정적인 점.
- 연구성과물을 규정에 입각하여 배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점.
- 2013년도 연구성과물에 대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차별화하여 배포한 점은 긍정적인 점.

〈단 점〉

- 2013년에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지식재산 보호 규정이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2013년도 업데이트 실적이 부진하며, 저작권, 저작물, 기록물관리 등 지침과 내규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함.

-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이 체계성이 없으며 새로운 시스템도입에 소홀함.
- 시스템도입에 따른 성과가 미흡하며, 2013년도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하지 못함.
- 홍보·확산 계획에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단기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홍보·확산 실적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홍보·확산을 위해 수립된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주요 내용도 일반적인 수준임.
- 원내 홍보를 위한 조직구성이 산만하며 효율적으로 조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못함.
- 연구성과 확산 실적을 채널별로 전년 대비 변화, 목표대비 향상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
- 첨단 정보매체의 활용 실적이 부진하며 홍보의 효과분석도 소홀함.
- 연구성과물 배포 실적만 있고, 배포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효과적인 배포를 수정·조정한 성과는 없음.
-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큼.
- 2013년도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제시가 미흡함.
- 연구성과물 배포시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환류시스템에 대한 성과가 미흡.
- 해외홍보 확산 실적이 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구체적인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할 것을 권고함.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전략적 활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성과지표의 활용을 권고함.
-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보완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인 수준이며 보안 및 보호 관련 시스템의 구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 당해연도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둔 성과지표와 단기 목표치의 제시가 필요함.

-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 효과성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확산 수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채널이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향후 연구원의 전략에 맞춘 효과적인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홍보채널별로 2013년도 성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2012년도 대비 증감, 목표대비 달성률 등을 제시하여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추진목표에 ‘지식정보서비스 확산과 고객만족도 제고’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성과물 배포의 효과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이슈페이퍼 발간의 적시성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수단 마련을 권고함.
- 연구성과물을 배포한 후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수요자를 특성별로 분석한 후 환류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해외홍보 활동시 보다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망라하여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08편(45.28건/47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Ⅱ 경영 분야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국정과제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화 및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러시아 활동해 신사업개발TF 등 4개의 연구분야 TF를 운영함.
- 중국 현지의 중국연구센터 업무전담 지원부서를 지정·운영하여 활동실적 점검·모니터링 강화, 센터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해 감사실 등의 예산집행실적 관리 감독을 강화함.
- 단기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외부고객 요청 수시연구과제 15건 중 9건을 선정하여 수행함.
-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인성검사 실시하고, 박사급 채용시 외부 전문가를 전형위원 (8인 중 5인)으로 활용한 실적은 우수함.
- 국내 대학(6개 대학)을 방문하여 취업상담회 개최,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 대학 한인학생회, 유학생 협의회 등을 활용한 채용공고 실적은 우수함.
- 채용예정 직무의 요구 역량 등에 따라 채용 절차를 달리하여 채용의 합리성을 향상하고, 공개채용 및 외부 전문가 활용(8명 중 5명 외부인사)을 통해 채용의 객관성·전문성을 향상하고, 전형단계별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채용의 투명성을 향상함.
- 채용상담회 개최, 해외 채용공고 게재 등의 다각적인 채용채널 활용으로 2013년 연구인력 4명(박사 2명, 석사 2명), 비연구인력 1명 채용함(연구인력 비율 81.3%).

〈단 점〉

- 도출된 환경변화 이슈 및 고객요구사항은 고유 기능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반적인 행정처리 사항 수준임.
 - 연구원 개인실적 평가 합리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 대외협력 업무 및 연구성과 홍보 활성화 필요
 - 문화·체육의 날 행사일정 변경 등
- 외부고객 정의 및 분류가 안되어 있고 요구사항 파악 노력도 미흡함.

-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조직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함.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 사항에 대한 조직 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미흡함.
- 2010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2010~2015년)을 수립하였으나, 직무분석, 기능 연계 사업별 소요인력 분석 등 정밀한 분석 작업이 수반되지 않았고, 담당부서 차원에서 작성한 업무계획 수준임.
- 중·장기계획 내용과 2-2-1-㉔ 인력운영 체계 자료 내용 연계성 부족
- 연도별 인력운영계획 수립없이 인력을 운영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기준과 채용절차에서 실적의 최저기준 설정이 미흡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사인력 비율이 55.2%에 그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의 수혜자인 해양수산 종사자 대상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조직의 핵심기능, 경영목표, 주요 이슈 등을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의 요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기관 차원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해외 교육 훈련(해외 업무연수 2명, 해외 단기연수 4명 실시) 실적은 양호함.
- 정년퇴직 직원의 신청이 있을 시 전직에 필요한 교육비(어학, 기술 등) 지원 제도는 우수함.
- 고유 기능 연계 연구직 역량강화 실적 대체로 양호함.
 - 아세안 지역전문가 양성, 도시복합개발경영, 물류센터 시뮬레이션 설계과정교육
- 교육제도는 교육수요에 따라 7대 프로그램을 분류한 후 직무별 구분에 의한 총 20대 세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연구역량 강화교육으로 프레지 교육 등 12회, 해외 교육훈련으로 해외업무연수 2명, 해외 단기연수 4명, 직무역량 강화교육으로 감사역량 강화과정 등 총 26회 실적이 있음.
- 개인/부서 자율학습으로 개인 어학교육 14회, 콜로키움 등 부서 자율학습 23회, 일반 교양교육으로 초청특강 12회, 강연 3회 등의 실적이 있음.
- 교육훈련과정 환류시스템에 의하여 퇴직예정자 전직 지원 확대, 퇴직자 초청강연, 연구대상자 확대, 명사 특강 횟수 확대, AHP 통계교육 진행 및 통계프로그램 구매를 실현함으로써 구성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함.

〈단 점〉

- 교육수요조사 없이 수립한 2013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은 부적절하며 내용도 부실함.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미흡함.
- 영어 교육에만 한정된 글로벌 능력강화 프로그램 실적은 미흡함.
-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류체계도 미흡함.
 - 교육훈련제도 개선TF 지적사항 반영 실적 미흡(특별휴직/연수 확대, 퇴직직원 지원 제도 개선 실적만 제시함으로써 정밀한 분석이 미흡)
- 연수, 특별강연 등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부족함.
- 교육훈련비가 100,160천원으로 전년대비(53,422천원)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연구직의 예산 집행액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교육훈련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연구직은 업무활동평가와 근무평가로 행정직은 업무성과평가와 근무평가로 평가요소를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직책, 직급에 따라 평가요소 반영비율을 차등 적용함.
- 연구직은 연구활동실적에 대한 배점 부여기준 및 배점 부여방법을 구체화하고, 행정직은 업무성과평가 시 업무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되 업무목표의 30% 이상을 계량지표로 설정하여 평가함.
- 연구직 평가 시 연구성과 평가비중을 69%로 운영함.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에 대해 업적평가 시 점수 부여함.
- 연구보고서 평가시스템의 이원화, 평가위원 별도 운영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가위원 선정 시 위촉절차 비공개 운영 및 외부평가위원 활용함.
- 연구보고서 평가 시 비밀 서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상호 기여도 평가 및 근무평가 시 다면평가를 시행함.
- 연구활동평가, 업무성과평가, 종합평가에 걸쳐 개인별 평가점수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를 명문화함.
- 우수논문상(150만원), 게재료 지원 등 논문게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평가결과를 연봉 산정, 능률성과급 지급, 승진, 재임용, 교육훈련 등에 적극 반영하고, 개인 평가결과, 인사위원 평가, 자기성과기술서 평가 등에 기초한 성과위주 승진 제도를 운영함.

〈단 점〉

- 평가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실적이 미흡함.
- 승진심사기준에 종합평가결과 반영비율(40%)이 낮고, 원장 평가(10%)와 인사위원회 평가(50%)는 정성평가로서 부적절함.
- 비연구직의 계량지표 비율이 15%로 연구회의 기준인 20%에 미달함.
- 기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평가가 부서평가, 경영목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함.
- 승진 대상자 선정 시 평가결과 활용에서 최저기준 설정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자체수입의 비중이 55%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구직의 수탁연구과제 O/H 반영 비중 45%는 매우 높은 수준임. 장기적으로 출연금 비중을 높이고 O/H 반영 비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비연구직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핵심 업무에 대한 지표의 계량화가 필요함.
- 전사적인 관점에서 팀과 개인 간 성과를 연계하여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연구보고서 평가위원 선정위원회 구성과 위원들 간 점수 차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를 승진 및 재임용의 최저기준 설정에 활용하고(예를 들어, 3년 간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 등), 평가결과를 100% 승진심사에 활용하여 인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관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2009년 전후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기관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해지한 전전임 기관장과 직원을 상대로 한 노조의 각종 소송, 뒤이은 전전임 기관장 사망 등 노사간의 대립이 격화된 여건 속에서 의사소통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음.
- 임금 TF 결과 설명회, 수탁점수 상한폐지에 대한 의견수렴 등 대부분의 현안에 대하여 전직원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구성원간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이 활발함.
-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2013년 임금 TF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에 대하여 찬반 의사를 물어 정부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임금 인상안을 도출함.

- 노조와의 대화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갈등관리 TF’를 통한 갈등해결 노력을 경주함.
- 원장-직원간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노사협력을 증진하는 노력을 시행함.
- 2013년에 총 5회의 노사간담회가 개최됨.

〈단 점〉

- 계쟁 중인 노동 관련 소송이 많은 바, 분쟁 발생 전에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받아 사전 갈등 예방 노력이 필요함.
- 노사간 대립 상황에서 노사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음.
- 일반관리자 대상 교육이 일반교양과 리더십에 치우친 한계를 가짐.
- 노동자들의 수시 의사소통 통로의 제도화가 미흡함.
- 단체협약의 해지로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이 교착상태임.
- 고충처리제도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사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활용하여 분쟁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노사화합을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노력을 통하여 노사협의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그동안의 노사갈등이 심해진 배경, 노동관계법을 준수한 개정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사간 화합에 노력하여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일반관리자 대상 교육을 노무 및 인력관리로 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기존 노조와의 대화가 차단된 현실에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는 800백만원이며,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는 약 446백만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한 수준이며, 2014년 예산에서도 42%를 편성하고 있어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19%, 2014년 10%로 연구회에서 제시한 평가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13%, 2013년 15%로 연구회에서 제시한 평가기준(10~20% 범위 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15.6%를 편성하고 있어 적정함.
- 13년에는 11건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전액 외부위탁용역으로 수행한 과제는 없음.
- 퇴직예치금은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 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함에 있어 분기별로 균등적립하지 않고 3/4분기까지 최대한 많이 적립하였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퇴직급여충당금을 분기별 균등한 수준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8%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은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실적 미달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연봉체계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됨.
- 기본연봉에는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비로 구성된 직무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30%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이 누적식이며, 차등지급률 또한 $\pm 1\%$ 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전년도 기본연봉에 62,000원을 더한 후 정책인상율(2.8%)을 적용하고 있어 기본연봉이 자동 인상되도록 운영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 최고-최저등급에 대한 인원배분이 각각 8.4%, 6.3%로 평가기준(10% 이상)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기본연봉의 자동 인상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기본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이 성과연봉제에 대한 연구회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 지급 시 평가결과에 따라 간부직과 비간부직 모두 $\pm 24\%$ 의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에 대한 차등지급률이 $\pm 33\%$ 로 최고-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 기본연봉과 같이 최고-최저등급에 대한 인원배분이 평가기준(10% 이상)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도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국회 정무위원회 지적사항 2건의 개선이 완료되고,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과제 14건 중 13건의 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5건 중 4건의 개선이 완료됨.
- 기관평가 상시점검반을 구성하고 해당지표 실무담당자에게 책임부여, 매월 추진성과를 월례조회시 공유하여 개선정도를 전 구성원과 공유, ‘자체평가TF’, ‘자체평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평가결과 개선절차를 가지고 있음.
- KMI 해양아카데미 운영시 일반 교원연수에 대하여 확대·운영함.
- 북극해시대에 대비한 국가전략수립연구 사업의 예산을 감액 조정함.
- 전문성 강화시스템 중의 하나로 해외 단기업무연수 대상자 등 연수기회를 확충함.
- 정보보안을 위하여 전담 담당인력을 충원(1명)함.

〈단 점〉

-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개정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으나 미타결 상태임.
- 연구기관 평가결과와 개선계획에 대한 구성원의 공유 및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과제 중 단체협약 미체결은 지속적으로 미완료 상태임.
- 평가결과 개선실적 및 성과가 경영개선으로 활용되는 과정에 대한 기술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개정 단체협약안의 체결 노력이 요구됨.
- 국회지적사항의 개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 개선이 기관발전에 기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이 개선실적과 성과를 통해 경영개선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전체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 개선성과도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채용공고, 서류 및 면접 전형 시 장애인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3년 여성장애인 1명 신규 채용한 실적이 있음.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구인을 요청하고, 서울서부지방노동청 주관 장애인 설명회에 참석하여 장애인 구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노력이 인정됨.
-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실적이 매우 미흡(0.5%)한 수준이며, 전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이하로 저하됨.
- 장애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 우대조치가 연구원 자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고용률이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기관장과 기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대책회의, 계획수립, TF 구성, 관련 기관방문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의 사회형평채용 항목을 구체화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고용계획 대비 달성률이 미흡하나(87.5%), 청년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 청년인턴 1명을 위촉연구원(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실적이 있음.
- 청년인턴 취업활동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고충해결담당관 제도 운영은 양호하나, 청년인턴 전용 오리엔테이션 교재가 부실하며, 근무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부실하며 청년인턴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고충처리 담당관 및 고충처리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 등을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를 신규채용한 실적(‘12년 11월 1명)은 있으나 여전히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3.9%로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장의 관심표명, 대책회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기관 방문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고용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조치 관련 규정이 있으나 불명확하므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수부여의 근거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을 두고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 복지부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관차원의 실질적인 계획이 미비함.
-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에 임금 차이가 다소 존재함(10% 이상).
- 기관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권고함.

21

한국행정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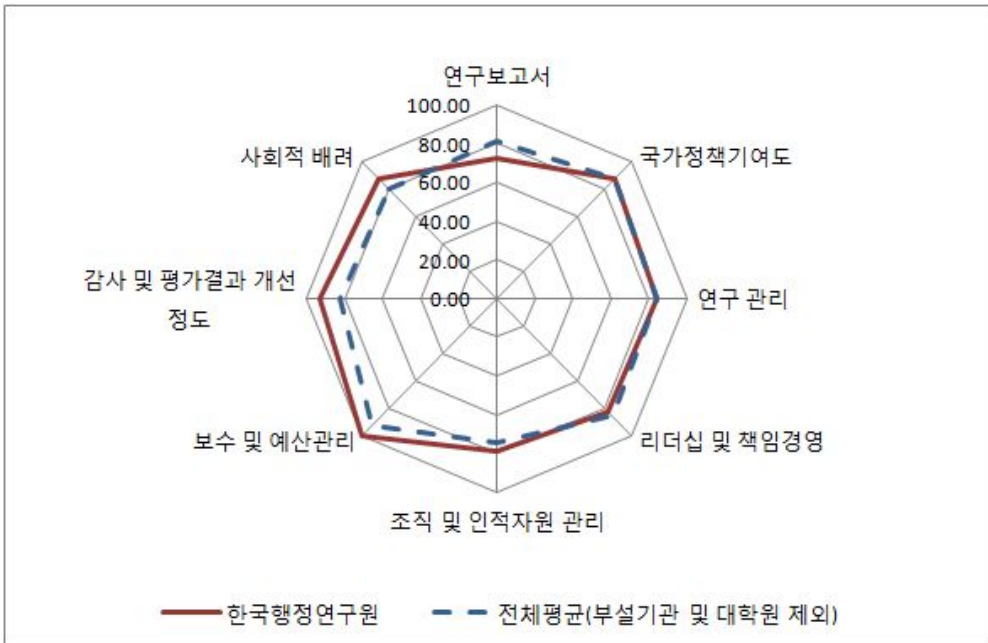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F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선도와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1-3. 연구 관리 |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
| |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
|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A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C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B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B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A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B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B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B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A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A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B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정부 업무 평가제도에 대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 반면에 설문 조사나 심층 면담 분석을 다차원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정부 조직개편, 정부 3.0 추진 등 당면현안과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전문 인력 풀을 확대함으로써 인력 부족의 한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외부수요조사, 내부제안을 통해 과제를 균형 있게 발굴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를 과제선정위원회에 포함시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으나, 외부 수요조사 결과 반영이 지나치게 정부부처의 요구에 집중되어 있음.
- 2012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2013년도의 개선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및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협동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장려제도를 규정화하고 추진체계 시스템을 현실성 있게 구축하고 정비함.

-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진의 역할분담이 보다 구체적인 필요가 있으며,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 또한 구체적인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평가위원 풀(pool)의 선정과 구성에 있어서 전공·분야·소속기관별 평가위원 구성의 노력이 필요함.
- 2013년도 구체적인 성과 확산을 위한 결과물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확산수단별로 제시한 실적이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배포 전략도 상대적으로 미흡함.

[경영 분야]

- 기관장의 현안문제 타개, 기관의 연구 역량 증진 및 소통,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은 뛰어나나, 현안문제 선정 시 내·외부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하고, 표절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 아직 부족함.
- 기관의 경영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내·외적 의사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규정과 제도를 잘 정비하였음. 상향식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 해외 연구기관과의 실질적 연구협력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표절검점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당면현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들이 상세히 설정되어 있어 연계성이 양호하나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실질적인 연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나타내는 방안들로 설정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연구수요 및 영역의 확대 대응 및 국가발전의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정책기여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은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계하여 적절히 도출하고 있으나, 정책 수혜자를 고객으로 정의하여 고객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노력은 다소 부족함.
- 성과역량평가에서 기관 전략지표, 고유지표와 부서/개인의 성과역량평가가 연계되는 개인의 성과가 부서의 성과, 최종적으로는 기관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은 우수하나, 승진심사 기준에서 가점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노사협의회가 다양한 안건으로 열리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전년도 지적사항인 노무관리 교육 개선실적이 우수하나 노사협의회 일부 조항은 개선이 필요함.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지 않는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과 기본연봉·성과연봉·결산상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은 평가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
- 국회 지적사항 내부 제도개선절차, 업적평가 및 경영목표와 연계된 모범적인 연구기관 평가환류체계를 가지고 지적사항의 개선에 노력함. 개선실적의 단순한 계량화를 지양하고 개선목표의 타당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 2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였으나, 월별 장애인 미달고용인원이 있음.
- 청년인턴 채용목표 달성도는 양호하지만, 오리엔테이션, 멘토링, 고충처리제 운영의 실질화가 필요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이 3.1%에 불과하여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능률성과급 부분에서 비정규직 그룹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비정규직에서 근무평정 점수가 가장 높은 연구원의 능률성과급이 정규직에서 근무평정점수가 가장 낮은 연구원의 능률성과급보다 낮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관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권고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공무원 시험 제도를 개혁한다는 취지에서 역량평가제도를 고찰한 연구는 사회적 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부응하였으며 역량 기반 인사제도 모델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 구체적 추진 전략 등의 정책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규제성과 평가를 위해 규제지수 산출을 모색하고 규제의 강도와 산업별 규제 체계의 성과에 대해 선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산업별 규제지수와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부 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평가 환경, 평가 투입, 평가 방법, 평가 결과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하고 유의미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다문화 가정이나 공동체로 생활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 연구는 선도적이고 사회적 반향도 크게 나타낼 것으로 판단함.

<단 점>

- 일부 연구에서는 이론적 구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통계적 분석도 단면적이어서 결과에 근거한 다차원적인 정책적 함의 도출과 정책적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전문가 텔파이의 참여자 수가 소수이거나,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 일부는 설문조사에서 제외됨으로써 연구 결과가 편향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
- 연구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방대하여 서술 방식이 수평적이고 나열적인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연구의 초점이 흐려진 경우가 있음.
- 사회 변동에 관한 최근의 논의가 부족하고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방법도 지나치게 단순하여 정책적 제언의 구체성과 정책 활용도가 다소 낮은 경우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일부 연구는 단순 설문조사→실태 분석→해결방안으로 단순하고 평면적인 구성을 보임으로써 심층 분석을 통해 실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해외 사례 연구의 경우 선정된 국가의 장점이 지나치게 부각된 반면, 제도화 과정에서 각 국가가 경험한 장애요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와 분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임.
- 해외 사례를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구성하는 경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원내 조직별로 인력 및 예산이 균형 잡히게 배분되어 있음.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특화된 연구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절한 국정과제 수행체제를 구축하였음.
- 140개의 국정과제들 중 20개 과제를 연계·수행하고 있어 국가정책 수립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정부조직개편 등 시의성 있는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정부 3.0추진을 위한 지원역할 및 국정과제 평가분야에서 국가정책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미래전략, 국정관리, 규제개선 등의 분야별 연구결과들의 정책화 및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소통과 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 산출이 탁월한 수준임.
- 국정과제별 연구기관의 참여 및 지원실적, 성과가 체계적으로 설명되었고, 각 연구과제별로 적절한 인력, 기간 및 예산 등이 투입되었음.
- 연구기관이 수행한 국정과제 대표사례 2개(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새 정부 기조에 맞는 평가기준 개선연구)는 시의적절하며, 과제수행 과정 및 세부 내용이 적정함.

<단 점>

- 국정과제 수행에 거의 대부분의 자원을 배분하여 기관의 고유한 장기적인 미션 수행을 위한 자원 배분은 거의 없음.
- 정책화 및 법제화 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 및 대응방안 마련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 수행·지원만을 위한 자원배분뿐만 아니라 기관 고유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과제 개발·수행을 위한 적절한 자원배분이 요구됨.
- 단순 연구결과물 산출이 아닌, 연구결과가 현실의 개선으로 보다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한 사후적인 연구·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새 정부의 출범에 대비한 글로벌 행정환경 분석 및 국정과제 관리방안 등을 연구하여 이를 인수위원회, 관련 정부기관 등에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의 원천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보여주었음.
- 새 정부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적절한 분야의 정책 및 현안들을 과제로 수행 하였음. 특히, 새 정부 출범 시 현안과제였던 국가 위기관리 조직개편, 정부3.0 개념정의 및 추진방향 설정 등에 적절히 대응함.
- 긴급 및 수시요청 과제에 대해서 가용한 인력·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였음. 한편, 직접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도 추진 방안, 기관 섭외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적절히 수행하였음.
-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기관의 긴급 및 수시 요청에 적절한 대응실적을 제시 하였으며, 현안문제 해결에 적절한 도움을 주었음.

〈단 점〉

- 정부요청에 앞서 국정과제와 관련된 이론적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은 다소 미흡함.
- 조직 구성의 경직성 등으로 정책현안이 물리는 상황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국가정책 지원에 한계를 보일 수도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부에 앞서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선제적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원내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정책현안 등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 전문인력 풀(pool) 확대 등 적절한 대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정책협의회 및 정책실무자협의회의 효율적 개편 및 운영으로 국가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 정부, 국회, 관련 기관과의 다양한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세미나, 포럼 등을 활용하여 정부·국회 등과의 협력 강화에 노력함.
- 미국, 영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르완다,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과도 국외 정책연구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 국내 학계, 기관, 단체 등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접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주요 기관과의 MOU 체결 등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였음.

<단 점>

- 특정 부처에 대한 국정과제 중점지원으로 인해 타 국정과제와의 연계 등 융·복합적 정책지원 측면에서의 한계가 우려되며, 유관 정부부처에 비해서 국회와의 협력 정도가 다소 미진함.
- 국내 정책연구네트워크의 경우 행정학 관련 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문의 다양성이 다소 미흡함.
-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으나, 이 중 다수가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다양한 부처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로 상호 연계된 정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국회와의 협력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국회의원실은 물론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여러 상임위원회 등과 보다 다양한 협력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정책연구네트워크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학회와 연계를 다각화하여 융·복합 시대에 대응하는 종합적 연구수행이 필요하고, 유관 연구기관, 공공기관과 자료 공동활용, 인적교류 등을 도모하는 등 네트워크 범위확대 및 연계·협력정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MOU체결 등 지속적·실질적인 협력네트워크를 더욱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로 중요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음. 특히, ‘특정평가결과의 효과적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는 정부업무평가의 취지를 살려 국정운영의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였음.
- 제안된 정책대안이 구체적이며 현실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며,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통합체계 연구’ 등은 향후 관련 분야 제도개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임.
- 대안과 관련된 정책참여자, 활동내역, 대안의 정책화 과정 등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음.

〈단 점〉

-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의 의견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
-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다부처 협업과제의 경우 주관부처가 아닌 협력부처에 대한 평가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부처, 관련 기관, 협회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사항을 확인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파급효과를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다부처 협업과제의 경우 협력부처도 보다 적절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업 평가제도와 관련된 개선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미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하여 인수위원회 조직개편 방향에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에 상당부분 반영됨.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체계의 사전적 정비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음.
- 행정부처 조직개편과 관련된 유사한 후속 연구과제들을 다수 수행함.

〈단 점〉

-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연구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연구되는 인기 있는 분야로서 본 보고서가 단순 인용되었다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후속연구라고 보기는 어려움.
- 소프트웨어적 기능조정에 대한 고려 및 연구결과와 실제 조직개편과의 비교 연구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하드웨어적 조직개편과 소프트웨어적 기능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함.
- 본 보고서에서 주장한 조직개편 제시안과 실제 정부조직개편 내용 사이의 논리 비교 및 장·단점 분석이 요구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소폭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기본연구와 교육훈련이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반면, 수탁연구와 정보제공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함. 연구과제에서는 수탁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본연구 순인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중에서는 정보제공이 가장 높은 반면, 기본연구가 가장 낮음.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 기본연구, 수탁연구는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은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냄. 특히 정보제공에서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효과성’, ‘성실성’, ‘구비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높았으며, ‘구비성’과 ‘합리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큰 반면, ‘효과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효과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기본연구와

수탁연구를 제외한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낮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과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 및 정책적·학문적 활용도’ 항목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 관련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체계 구비’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한편, 정보제공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높으나 ‘주요 이슈에 대한 시의 적절한 정보제공’, ‘지속적인 고객관리 노력’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교육훈련의 경우 ‘친절한 응대’가 가장 높은 반면, ‘교육기간·시간 적절성’,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창구·제도·시스템 보유’ 등의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고서 작성하여 정책적·학문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소폭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공동연구를 제외한 모든 상세업무가 전년 대비 상승함. 연구과제에서는 기본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동연구, 위탁연구, 수탁연구 순인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중에서는 교육훈련이 가장 높은 반면, 수탁연구가 가장 낮음.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 교육훈련은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기본연구, 수탁연구, 위탁연구, 공동연구, 정보제공 등은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수탁연구에서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실성’, ‘구비성’, ‘편리성’ 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높았으며, ‘공익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구비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훈련을 제외한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낮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의 정확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 및 정책적·학문적 활용도’와 ‘보고회·자문회의 일정 협의 원활’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 관련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체계 구비’, ‘업무 확인·처리 담당자와의 접촉용이’ 등의 항목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 경우 ‘고객의견 및 불만사항 제시 편리’ 항목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의 정확한 이해’와 ‘고객 요구에 대한 친절성’이 가장 높은 반면 ‘고객 요구사항 수집 및 반영 절차 구비’ 항목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정보제공 경우 ‘지속적인 고객관리 노력’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훈련의 경우는 ‘친절한 응대’가 가장 높은 반면, ‘쾌적한 교육·훈련시설 및 편의시설 구비’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고객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이나 시스템을 갖춰 체계적인 고객만족도 조사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외부수요조사, 내부제안을 통해 기본연구과제가 균형있게 발굴되고 있음.
- 전년도 기관평가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과제발굴실적도 현저히 개선됨.
-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수요조사를 대폭 확대하였음.
- 선정된 과제(15개) 모두 국정과제 및 기관의 사업목표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연구진의 전문성에도 부합하는 등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과제를 선정함.
- 외부 전문가를 과제선정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써 심의 단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음.

<단 점>

- 외부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선정된 과제가 정부부처의 요구에만 제한되어 있음.
- 심의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결합시키고는 있으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구 조정회의는 내부 연구진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시, 탈락된 과제에 대한 미선정 사유를 유형별로 적시하여 과제발굴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체계화하여 과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협력을 조직함으로써 외부 수요조사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함.
- 과제발굴절차와 관련하여 과제선정의 합리성 제고 차원에서 자문회의를 선정회의 이전에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조정회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개선해야 함.
- 외부 전문가 참여는 현재 교수들의 개인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관기관(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의 책임자 참여, 즉 기관별 결합으로 전환되어야 함.
- 학계 전문가 참여는 행정학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학문분야로 확대하여야 하며, 성별 불균형도 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도 필요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의견반영 노력이 나타남.
- 수시연구과제의 예산액이 규정에 부합하며, 정부부처와의 협의도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과제품질평가와 고객만족도평가를 통해 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정부부처가 비공개로 요구한 2건을 제외한 모든 수시연구과제가 과제종료 즉시 발간보고서를 발간하고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함.
- 과제평가를 과제품질 평가와 고객만족도 평가로 다각화하고 있음.

〈단 점〉

- 발굴 및 선정된 수시연구과제 모두 정부부처에서 요구한 과제로 과제발굴의 다양성이 부족함.
- 간담회와 평가를 통해 연구진도 및 보고서 질 관리를 하고 있으나, 연구심의 기능이 없어 한계가 예상됨.
- 중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통제방법은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부처 이외에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과제발굴 대상기관의 확대가 필요함.
- 수시연구과제의 발굴도 외부의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과제수행의 중간단계에서 연구진도 및 보고서 질 관리 차원에서 심사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중간심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질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2012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2013년도의 개선 실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제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음.
- 협동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장려제도를 규정화 하여 시행하고 있고, 추진 체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정비하였음.
- 특히 협동연구 수행 전 연구조정위원회에서 점검하여 협동연구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품질제고를 위한 심의장치를 활용하고 있음.
- 협동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는 돈보이고, 잘 수행하고 있음.

<단 점>

- 협동연구 5개 과제 모두 협동연구진의 역할분담이 구체적이지 않아 역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과제 2(새 정부 기조에 맞는 평가기준 개선 연구)는 협동연구라기 보다는 공동연구의 성격에 가까우며, 과제 5(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의 경우 중국 연구진에 의한 결과를 취합하여 원내에서 종합한 것으로 판단됨.
-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에 대하여 다소 피상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진의 역할분담을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으며,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또한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2012년 평가결과 대비 개선실적을 대비하여 잘 추진함.
- 특히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지적사항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종 달성도를 성과역량에 반영하는 등 개선노력이 돋보임.
- 자체평가체계의 규정 및 절차가 구체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음.
-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별로 과제유형의 특성에 맞게 심의·평가 수행절차가 구체적임.
- 6단계의 연구품질 제고를 위한 절차에 따라 노력하고 있음.
- 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들을 대상으로 국가기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연구품질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평가자 풀(Pool)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자 선정 위원회를 통하여 평가자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연구과제 평가는 기본연구과제 7인, 수시연구과제 3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를 수행하는 등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노력함.

<단 점>

- 평가결과로서의 연구품질 수준은 최근 2년 간 평균점수 87.53점에 대한 근거가 다소 미흡함.
-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20:80의 비율로 평가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미흡함.
- 외부평가자의 소속기관별, 전공영역별로 풀(Pool)을 구성한 분포현황이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자 풀(Pool)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속별, 전공별 현황 등이 제시되어야 함.
- 2013년도 평가위원들의 소속별, 전공별 현황들을 분석하여 평가자 풀(Pool)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보고서 평가는 기본연구과제 7인, 수시연구과제 3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전문 영역에 편중되는 경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연구자료 보호와 관리·운영을 위해 행정DB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보3.0(정보공유, 개방)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업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안전조치 후 보관하도록 체계를 마련함.
-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규정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음.
-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지식정보 공유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임.
- 목표, 체계 및 단계별 계획, 담당자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학술대회, 언론기고, 이슈페이퍼, 웹진,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한 결과 전년 대비 언론홍보실적이 273%(총 287건) 증가함.
- 성과확산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임.
- 홍보 확산을 위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확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단위업무 KPI로 연구보고서의 대외 요청에 대비한 배포 소요일수를 2일 이내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개인성과 역량평가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음.
- 2012년에 1회 발간했던 이슈페이퍼를 2013년에 8회로 확대함.
- 해외 규제동향 분석을 위해 5개국에 해외조사원을 위촉하여 분기별 발간하고, 각계에 약2만명을 대상으로 메일링서비스를 한 점은 긍정적임.
- 단위업무 KPI로 연구물의 대외요청에 대비해 배포 소요일수를 2일 이내로 설정한 점은 긍정적임.
- 이슈페이퍼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묶음집을 발간한 점은 긍정적임.

〈단 점〉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구축된 연구성과관리 및 확산·운영 시스템의 성과를 계량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드백도 다소 미흡함.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2013년도 실적과 2012년도 실적이 혼재되어 있어 2013년도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확산 수단별 실적이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큼.
- 연구성과물 배포방식 및 관리가 다소 체계적이지 못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배포 전략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전략적 활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성과지표의 활용을 권고함.
- 시스템의 구축 이후에도 적절한 환류를 실시하여 시스템의 점검과 효과성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 효과성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확산 수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확산 수단이 매우 일반적인 수준이므로 보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첨단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더 많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홍보 실적을 점검한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피드백 성과나 결과물을 제시하여 환류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를 한 후 관련성과를 분석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제 세미나 참석 및 포럼 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권고함.
- 연구성과물을 배포한 후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수요자를 특성별로 분석한 후 효율적인 배포를 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해당사항 없음.

〈단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0.84편(27.56건/33명), B등급으로 저조함.
- 전년도 실적 1.22편에서 실적이 크게 낮아짐.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전문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논문게재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대내·외 경영 여건 분석이 잘 이루어졌고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돋보임.
- 현안문제로 선정된 국제사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ODA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함.
- 기관의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뛰어나고,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잘 정리되었음.
- 신입직원에 대한 멘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적응도를 향상시킴.

<단 점>

- 국제사회의 우호협력 관계를 통한 글로벌 선순환 구조 구축이 과연 한국행정 연구원의 현안과제인지 의문이 듦.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서 문제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등 현안문제 선정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으며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함.
- 외부 전문가 및 행정관련 시민 단체의 의견수렴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방책이 보이지 않음.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과제의 개발 노력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제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방법을 사용하기 바람.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보강하여 구성원의 참여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책 및 평가 보상 시스템의 개선을 강구하기 바람.
- 사회적 이슈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 과제의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어떤 학제적 접근방법을 사용했는지 또는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함.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 전략 및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내부 구성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뛰어남.
- 전 직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협의회나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를 구축하려 노력함.
- 여름 간식행사, 겨울 조식행사 등 직원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함.
- 국가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활동 실적이 뛰어남.
- 국내 네트워크 확보 및 협력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뛰어남.
- 기관장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관에 필요한 외부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단 점〉

- 구성원의 상향식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직급별, 부서별 간담회와 같이 논의 범위를 좁힌 의견수렴과정의 실시가 미흡함.
- 연구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주요 제도에 대한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결과가 향상되었으나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 어려움.
- 해외 네트워크 및 협력 체제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함. 특히 2013년 해외 협력대상이 된 국가와 기관이 제한적임.
- 선진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를 위한 협력관계가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구성원의 상향식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바람.
-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서 직종별, 직급별 대표의 참여를 강화하기 바람.
- 업무수행과 관련된 의견수렴 과정을 증대시키고 집단 간의 의견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내부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직급, 부서, 직종 중심의 간담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해외 네트워크 및 협력 체제를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특히, 선진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연구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 지속적인 공동연구의 수행, 직원 간 교류 등 발전을 위한 협력기관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 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규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규정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졌음.
- 정기 감사와 일상 감사, 감사에 따른 사후 조치가 잘 이루어졌음.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음.
- 액수가 큰 사업의 실시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토록 함.
- 성과역량평가 시 등급별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임.
- 사무인계제도를 실시하여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함.
- 연구윤리 확보 및 준수를 위한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품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

〈단 점〉

-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중 청탁등록시스템의 운영이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규정에 대해 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연구윤리 위반 행위(표절, 변조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검색시스템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부패 방지를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포상 제도와 연계하고,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바람.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규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연구자에게 맡겨두는 것보다 업적평가와 인사고과에 연계시키는 등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음.
- 표절검색시스템을 도입하여 표절에 대한 사전방지 조치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3대 경영목표와 12대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천계획에 대한 다양한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대부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이 되고 있음.
- 기관의 당면현안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이 상세히 설정되어 있어 당면현안과 실현수단들 간의 연계성이 양호함.
- 세부실천과제별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성과지표들이 대부분 계량 지표로 설정되어 있고,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으며 달성도가 명확히 제시되어 성과관리 방법이 잘 구축되어 있음.
- 실천과제별로 대부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정책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유효성 확대, 정부요청 수시연구과제 수행 강화, 노사화합프로그램 개최 및 고객중심의 적극적 홍보노력은 양호한 성과임.
-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창의적 연구 수행’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융합적 연구수행, 세계화 지향의 연구활동, 국가정책 기여도 제고, 연구과제의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함.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개발도상국 교육 사업을 추진 하여 국제 연구 협력 네트워크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간 점은 긍정적인임.
-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존 연구 및 행정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계획은 긍정적인임.

<단 점>

- 기관의 규모와 역할을 고려할 때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의 내용이 다소 미흡함.
- 경영목표로부터 실천계획이 도출되는 과정과 실천계획과의 연계를 논리적으로 보여주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연구인력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세부 실천계획 중 본 기관의 행정 및 재무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실천계획이 미흡함.
- 정책고객만족도 향상 및 연구윤리 내부시스템 보완 성과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선진국과의 협동연구 및 교류활성화는 학술행사는 바람직하나 협동연구실적은 미흡함.

- 실천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성과목표를 정하는 과정 및 성과목표치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 과정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국정경험의 국제적 홍보를 통한 개발도상국 교육운영 이외에는 연구성과의 글로벌 홍보에 관한 성과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 실천계획 중 유사한 것은 통합하여 설정하고 실천계획에 대한 세부 실행과제를 설정·제시함으로써 경영목표에 대한 실천계획 관리방식의 개선을 권장함.
- 우수연구인력 확보 이외에 실천과제에서 미흡한 연구인력의 성과중심 평가·보상 시스템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비정규직의 체계적 인력관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중심의 행정지원체계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선진화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를 과정지표와 함께 산출 및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 지표 관리를 하도록 권장함.
-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고객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실천과제의 실행과정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성과목표 달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및 달성치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고, 가능한 한 계량적 지표를 개발 하는 것도 중요하나 필요시 질적 지표로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인력의 유치와 함께 연구인력이 연구에 대한 명예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체계와 교육훈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중점추진과제 후보군을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거쳐 부서장회의에서 3개로 압축 확정하는 절차로 선정함으로써 적절한 의견수렴이 되었음.
- 창조적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국가정책 기여도 제고 중점추진과제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응하는 합당한 과제로 정책과제의 연구결과 기여도가 높고 정책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추진실적이 양호함.

- 전체적으로 중점추진과제의 선정배경과 이유가 잘 정리되었으며, 선정과정이 타당성 있게 이루어져 있음.
- 중점추진과제 기관의 목표를 잘 반영하는 내용으로 선정되었고, 전략적으로 주요한 과제들이 적절하게 선정되었음.

〈단 점〉

- 전략적 중요성, 시의적절성, 파급효과 등 3대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과제에서 특히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는 실적이 미흡함.
- ‘창조적 연구과제를 수행을 통한 국가정책 기여도 제고’ 과제는 본 기관의 핵심기능인 정책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고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관련하여 미래지향적, 융·복합적, 일자리창출에 대한 실천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과정에서 대내·외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하나 중점추진 과제로서의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외에 선진국 관련기관들과의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선정배경과 사유를 기관의 핵심기능, 국가정책, 당면현안과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선진국 또는 OECD 수준의 국가들과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미래지향적, 융·복합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실천 과제들을 중점추진과제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 선정에 있어서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연구원의 의견수렴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SWOT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조직개편, 조직운영, 제도개선, 과제수행 등)을 통해 기관의 당면현안을 타개함.
-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연구수요 및 영역의 확대 대응, 국가발전의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정책기여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은 고유 기능과 연계하여 적절히 도출함.
- 조직개편을 통하여 새 정부에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전략 기능 담당 부처와의 협력 대응 및 관련 정책기여도를 제고하고, 연구지원 부서 간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연구관리의 효율성 및 연구성과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둠.
-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목표, 부서목표, 개인목표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성과역량평가 시스템을 개선함.
- 원내 규정에 근거한 제도화된 위원회를 구축·운영하고, 긴급한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등을 활성화함.
- 직종/직급별 전문성 확보 및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 및 절차를 보유함.
- 외부 전문가를 면접위원(50%)으로 활용한 사례는 적절함.
- 연구중심 인력운영을 위하여 최근 3년 간 우수 연구인력 확충을 위주로 신규채용 실시함(최근 3년 간 총 19명 중 16명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함).
- 면접 시 전형위원에 외부위원 포함을 규정화하여 채용과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외·부 전형위원 선정 시 지역, 연고 등 배제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함.

<단 점>

- 조직개편 중심의 조직운영실적은 다소 부적절하고, 조직 개편은 하나의 과정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
- 경영목표·기관평가와 연계된 업적평가시스템 구축,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우수한 연구보고서 산출을 위한 연구품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한 감사반 구성 및 운영 등은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슈임.
- 정책 수혜자를 고객으로 정의하여 고객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노력이 부족함.
- 인사규정 개정, 성희롱예방조치 지침 제정 및 교육 실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및 제안제도 운영규칙 등은 일반적인 행정처리 수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은 경영목표 달성도의 평가척도로 부적절함.
- 적합인재 유치체계 및 노력(채용홍보 채널 다변화, 적극적 인재 발굴, 지원자와의 쌍방향 소통강화 노력 등 지원자 입장에서의 편의성 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발전방향, 제안사항 등의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직무분석, 인력구조 분석, 사업별 소요인력 예측 등을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 및 전략을 기반으로 우수인재 채용에서 퇴직 후 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인력 선순환 절차의 확립이 필요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채용 심사 시 외부 전문기관의 인적성검사를 도입하는 등 우수 인력 채용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연도별 교육훈련계획 수립은 적절함.
- 연구역량 제고 제도로써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은 우수함.
-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계한 연구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적은 양호함.
 - 복잡계 여름특강, 위기관리 특강, 2013 미래 창조 융합 국가지도자과정 등
- 12대 전략과제 중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융합적 연구수행’, ‘연구지원 기능의 효율화’, ‘대내·외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강화’에 근거하여 중·장기 교육 훈련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함.
- 2013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E-KIPA를 통한 전자결재 시스템화’이고, 2014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각 프로그램 및 단계별 학습체계 마련’으로 설정함.
- ‘행정직/연구직 직무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총 59건의 직무훈련(정규직 34건, 비정규직 25건)을 이수함으로써 직무교육훈련 이수실적은 전년대비 2배 이상이 증가함.

-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차년도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환류체계를 마련함.
- 매년 초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교육훈련 관련 예산 등에 대해 노사협의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급(개인)별 의견을 반영함(전반적인 만족도 96.5%로 전년의 78%보다 증가함).
- 2013년 총 교육훈련 집행액은 28,456천원으로 전년대비 8,249천원이 증가하고 교육훈련 실적은 78건으로 전년대비 약 55%가 증가함.

〈단 점〉

- 프로그램 및 단계별 학습체계 마련(2014), 개인별/단계별 교육훈련 실적관리 체계화(2015) 등 연도별 추진계획은 교육훈련계획의 기본 내용으로서 수립시기가 다소 늦음.
- 교육·연수 결과의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의 구축 정도 내용이 부실하여 환류 체계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음(전년도 성과분석 자료 부재, 중· 장기(2013~2015) 교육훈련 계획 부재).

〈개선 및 건의사항〉

- 연도별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사전 수요조사 및 전년도 성과분석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성과역량평가에서 기관 전략지표, 고유지표와 부서/개인의 성과역량평가가 연계되는 개인의 성과가 부서의 성과, 최종적으로는 기관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은 우수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실행력을 강화하여 구성원의 성과가 자동적으로 기관의 성과제고로 연결되도록 지표를 개선한 실적은 우수함.
- 평가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실적이 우수함.

- 성과관리위원회 개최, 기관평가 결과분석, 전 직원 설문조사, 그룹별 설명회, 직급별 간담회 개최 등
- 성과역량평가 결과가 낮을 경우(하위 30%) 해당연도의 승진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적절함.
- 비연구직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른 정성평가(50%)를 중심으로 하되, 단위업무 KPI 및 부서평가를 확대하여 개인별 및 부서별 목표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함.
- 개선된 성과역량 평가지표는 평가그룹별 실제 수행업무의 반영도를 제고하여 구체성을 높이고 계량화 비율을 확대함(연구직 91%, 비연구직 45%).
- 연구직의 ‘과제품질도’의 비중을 60%로, 하고 익명성을 보장한 100% 외부평가 실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의 토대를 마련함.
- 성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년도 문제점 및 기관평가 결과분석, 전 직원 설문조사, 그룹별 설명회, 직급별 간담회, 노사협의회, 원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성과역량평가 개선안이 마련됨.
- 저자 수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SSCI학술지/국내·외전문학술지, 등재지 이상, 등재후보지/정책전문지로 차별화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개인 업적평가에 반영함.
-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이의신청 등 심의안건에 포함된 경우 제척, 평가그룹을 연구직/비연구직, 간부/비간부로 구분하여 유사업무 및 직급별로 구성, 상위자 평가 시 동일 평가그룹에 포함되지 않도록 평정자 구성, 성과역량평가 책임자와 담당자를 평가그룹에 분리하고 등급을 고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함.
- 과제평가의 경우 접수된 이의신청 1건을 외부 평가위원에게 통보하고 재평가하도록 하여 재심결과를 연구자에게 피드백하고, 업적평가의 경우 세부 성과지표 인정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1건을 접수하여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연구업무관리규칙, 성과역량평가규칙).
- 보직부서의 특수성 및 업무의 독립성을 감안하여 기획조정본부장, 정년대상자, 행정실장, 감사역, 성과관리 담당자, 비서, 기사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함.
- 성과역량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및 능률성과급에 100% 반영하여 차등 적용하고, 승진, 재임용, 포상,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등 비금전적 보상에서 활용함.
- 승진 시 평가결과 하위 30%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은 재임용 거부 사유가 됨.

〈단 점〉

- 평가 시행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은 부재함.
-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이 최종 결정하는 제도는 불합리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원장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람직)

〈개선 및 건의사항〉

- 논문 게재료 지급 등 논문 게재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승진심사 기준에서 가점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정년연장, 연구기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활용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함.
- 노사관계 갈등관리를 위한 정례화된 제도로서 노사협의회가 8회 열려 복무규정, 연구업무규정 등 각종 규정을 제·개정하고 생활상의 불편사항(실내온도 적정 등)도 협의하는 등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음.
- 부서간의 의사소통과 전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목적의 KIPA 협의회를 통하여 노사협력과 복지증진을 협의함.
- 부서별 워크숍, ‘나도 한마디’ 여론함 등을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함.
- 혹서기와 혹한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Break time과 Breakfas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한 업무괴리를 해소하고 전직원 화합을 도모함.
- 전 직원에 대하여 연봉계약, 복지, 건강검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함.
- 노사협의회가 의결, 협의, 보고사항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
- 전년도 지적사항인 노무관리 교육실적 미흡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무담당기관의 노무교육이수를 충실히 수행함.
-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2013~2015)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노사 화합과 의사소통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제안제도 운영규칙개정을 통해 제안자에게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단 점〉

- 노사협력증진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적이 동호회 활동에 치우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충처리 운영실적이 전무한 한계를 가짐.

〈개선 및 건의사항〉

- 고충처리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가 필요함.
- 다양한 갈등이슈를 해결하였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의 갈등이슈를 발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가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음.
- ‘나도 한마디’ 여론함, 공식적 제안제도,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결합하여 조직구성원의 제안과 불만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사소통통로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 비율은 85%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하며, 2014년의 경우에도 69%를 편성하고 있어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7%, 2014년 15%로 연구회에서 제시한 평가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3년 19.2%(약 203백만원)로 연구회가 제시한 평가기준(10~20% 범위 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19.9%를 편성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83%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이며, 수시연구과제 12건의 집행에서 전액 위탁연구비로 지급한 과제는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기준은 예산편성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에서 퇴직금 계좌로 이체하고 있고, 퇴직예치금은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8%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653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연봉체계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됨.
- 호봉테이블 등 근속기간과 연동되어 기본연봉의 자동 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 혹은 급여성 복지후생비 수당은 존재하지 않음.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9%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제시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연봉계약부터 기본연봉에 대하여 전년도 평가결과가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 연봉제를 적용·실시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등급별 차등지급율은 최고-최저 $\pm 1\%$ 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등급별 인원배분비율 역시 최고-최저등급에 각 10%로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 지급 시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등급간 $\pm 24\%$, 정규직 비 간부직의 경우 $\pm 15\%$ 차이가 나도록 지급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 역시 간부직과 비 간부직 모두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의 인원을 배분하고 특정등급에 50%미만으로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을 업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차등지급률도 최고-최저 등급간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능률성과급 인원배분비율 역시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특정등급에 50%미만의 인원을 배분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국회 정무위원회 지적사항 1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전년도 평가결과 보통 이하 3개 평가지표 11건 지적사항의 개선을 완료함.
- 국회지적사항에 대한 내부의 제도개선 절차에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포함되어 있는 등 충실한 개선절차를 가지고 있음.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가 일단위까지 구체화되어 있고, 개선과제에 대한 목표치 달성도를 측정하여 평가시 상당한 차등폭을 둔 점수로 반영하고, 지적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새로운 목표를 발굴하여 단위업무 KPI를 부여하고 평가에 가중치로서 반영하는 등 기관평가 개선과제를 개인 및 부서의 업적 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제도임.
- 심의·의결기구로 성과관리위원회, 외부 의견수렴기구인 외부 자문위원단, 실무 부서로서 기획조정본부, 담당 실명제 운영을 통하여 전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됨.
- 인쇄비 추계방식을 변경하고 인쇄업체 경쟁입찰을 통한 가격인하로 연구사업 예산전용비율이 대폭 개선됨.
- 행정관련 외부(NGO 등)로부터의 과제수요를 위하여 시민단체 등 766곳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 과제선정위원 비율을 30%로 확대함.
- 정보 접근 관련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대외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만족도를 조사함(79.25점).
- 평가지표별 지적사항을 유사항목별로 범주화하여 관련된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개선을 추진한 것은 타 기관의 모범사례임.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과제 수행기관 학계편중 현상이 전년대비 약 3% 하락(58.9%)하였으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개선실적의 단순한 계량화를 지양하고 개선실적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개선목표의 설정을 계량화하기 위한 노력은 타 기관에 비해 앞서 있으나, 설정된 목표의 타당성에는 한계가 있으니 계량화된 목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선성과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2013년 사회적취약계층 고용확대방안 수립계획’을 마련하고, 장애인우대채용, 가산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인턴 구인 시 장애인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채용한 점은 우수함.
- 장애인업무 적응을 위한 멘토링제(모범직원 멘토임명)를 잘 시행하고 있음.
- 2013년 중증장애인 2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매달 장애인 고용률 2.5%를 준수함.
- 다만, 2013년 6월 퇴직으로 인해 평가기준을 미준수하였으나, 3개월 이내(7월)에 채용하여 장애인 고용률 기준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목표를 달성(100%)하였고 청년인턴 퇴직 시 즉각적인 결원보충을 실시하였으며 청년인턴 1명을 비정규직(계약직)으로 전환함.
-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취업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
- 연구원 차원의 2013년 인턴직원 채용계획이 있으며, 인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 청년인턴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음.
- 청년인턴 전용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의 실질적 운영, 고충해결 제도의 실제이행 수준이 부실함.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고충처리 담당관 및 고충처리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 등을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한 규정체계가 적정하며, 공고 시 우대조치를 두고 있으며, 이를 적정히 운영한 실적이 있음.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가 연구원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내용이 적정함.
- 2013년도 2명의 국가유공자를 신규 채용하였으나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3.1%에 불과하여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단 관련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되었음).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차별해소 근거규정(계약직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동일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교육, 복리후생, 편의시설, 휴가 분야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연구원 차원의 구체적인 비정규직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능률성과급 부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비합리적 차별이 있음. 비정규직 그룹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비정규직에서 근무평정점수가 가장 높은 연구원이 받는 능률성과급이 정규직에서 근무평정점수가 가장 낮은 연구원보다 낮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능률성과급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기관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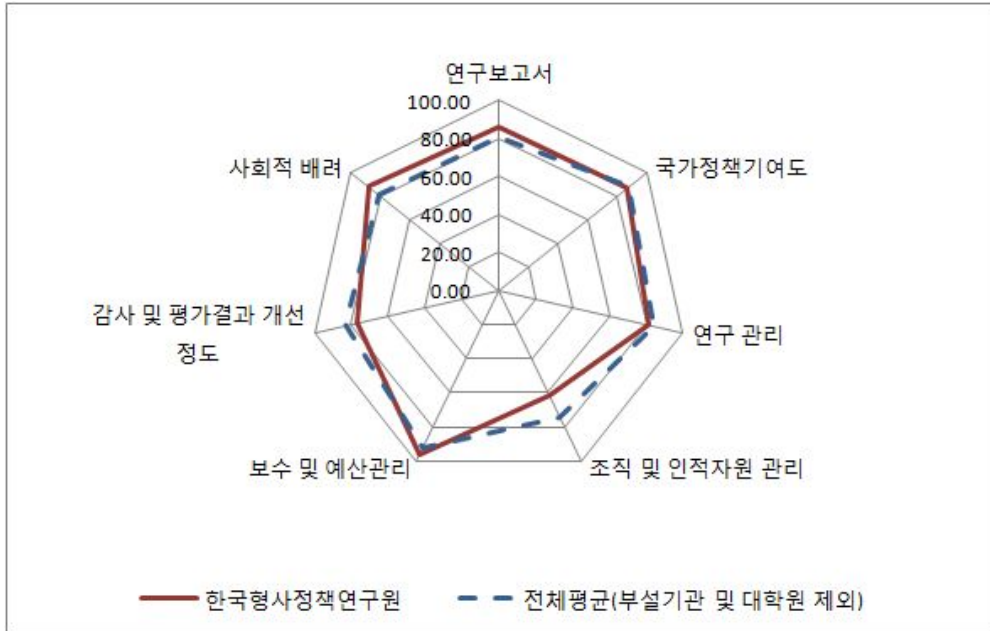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C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우수 보통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C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C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D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C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A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A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SNS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항목들을 실증분석하였으며,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의 논리적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과제 중심의 유연한 부서 운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실적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전공의 연구 인력을 그룹으로 구성하여 융복합 연구의 효율성을 높임.
- 국정과제 수행에 적합한 고유한 시스템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연구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유관부처, 형사정책연구협의회, 형사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수요를 매우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과제선정회의에 다수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과제를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가 수요조사 및 공모과제 제안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과제의 정책연계가 명확하지 않음.
- 협동연구를 위한 추진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되고 규정화되어 협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협동연구 과제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발굴추진실적이 제시되어야 하며, 협동연구를 장려할 수 있도록 기관 특성을 감안한 연구원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격차 보정과 평가항목별 평가척도에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이버범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 점은 긍정적이나, 연구성과 확산 채널별로 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수단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의 노력은 미흡함.

[경영 분야]

- 동북아시아의 범죄동향 및 정보교류 활성화 및 국내 유관기관 간의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2010년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2010~2013)을 수립하였으나, 후속 계획이 없음.
- 직종/직급별 차별화된 평가요소 설정 노력이 양호하며 연구직의 경우 2단계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는 등 평가절차가 적절하나, 승진심사 기준에 경력점수 25점이 반영되어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 단체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고, 연봉협상도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체결되었으나, 노무담당자 훈련이 미흡하고, 원장과의 소통프로그램이 미약하며, 노조가입 대상이 아닌 일반구성원과의 대화통로 제도화가 필요함.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내역 중 위탁연구비 비중이 높지 않아 적정하나, 집행비율은 저조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성과연봉과 결산상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의 비누적식 적용 및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지급 시 재정기여도의 반영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실효성 있는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지적사항인 기본연봉 누적식, 비정규직 차별 개선이 미흡한 한계를 가지며, 개선결과의 경영반영, 구성원의견수렴 및 개선실적이 성과로 이어지는 개선절차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 연평균 고용률은 2.5%를 달성하여 적정하나, 장애인 추가 고용이나 현행 고용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청년인턴제 운용이 적정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수준이 평가기준(6%)과 비교하여 미흡(3.8%)하므로,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절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임금 부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미세하게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국내외에서 인터넷 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SNS 환경에서의 범죄와 형사 정책적 대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는데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항목들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한 연구진의 노력이 돋보임.
- 뇌과학의 발전이 인간행동의 이해에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선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계기를 제공한 점은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함.
- 재외 국민 범죄 피해 실태조사와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상당히 풍부한 인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범죄 예방 교육 자료로써 정책적 가치를 높임.
-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연구과정에서 방대한 자료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강구하여 데이터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대상을 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함.

<단 점>

- 일부 연구에서 개별 논제에 비해 연구 내용 및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연구 내용과 결과가 개론적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어서 중심 논지가 분산됨.
- 몇몇 연구에서는 쟁점 사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이에 기반한 대안 제시의 노력이 부족하며 대안의 구체성과 논리적 치밀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음.
- 일부 보고서에서는 연구 주제의 핵심 내용보다는 개론적인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 내용을 상당히 장황하게 전개함으로써 연구 목적인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의 논리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 회복적 사법 등 대안적 분쟁 해결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내용은 여전히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체 분쟁해결 제도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양상을 보임.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 주제가 광범위한 경우 통합적인 연구의 장점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세분화함으로써 핵심 내용들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에서 CCTV의 경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증적인 자료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형사 제재화 방안에서 활용 사례 및 현장에서의 인터뷰를 통한 실제 적용에서의 장단점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연구정책자문위원회와 연구운영위원회의 과제 배분의 적절성과 효율성으로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한 대응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실태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기법과 연구원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역량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부서형태가 인정됨.
- 수탁과제의 신속한 입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제 참여 연구원의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 학회 등 외부전문가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정확한 이론적 자료와 입법 자료 제공 하여 국정과제 수행에 기여한 우수성이 인정됨.
- 대부분의 정부수탁과제가 즉각적이고 현안적인 사안이므로, 시간과 기간의 적절한 배분으로 정책 대안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예방정책에 중점을 둔 연구과제 뿐만 아니라 치료프로그램의 개발로 보다 실제적 형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
- 외교통상부가 주최한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사이버범죄 분과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여성가족부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며, 법무부 등 주최 성폭력 근절 대책 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협력하고 있음.

〈단 점〉

- 형사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연구과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국정과제 기여도가 낮은 연구과제가 다수 있음.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다른 국가적 현안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연구인력 및 예산부족이 우려됨.
- 국정과제 수행의 효과적 배분과 차별화의 필요에 따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평면적인 자원배분이며, 전략적이고 우선적인 자원배분에 대한 전략이 부재함.

〈개선 및 건의사항〉

- 4대악 관련 범죄 예방과 대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며, 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의 지속적 확충 방안이 필요함.
- 기초연구과제와 비교해서 형사정책 국정과제의 비중의 상향이 필요함.
- 통계청과의 협업으로 범죄통계의 효율적 DB구축이 필요함.
- 국정과제 결과물의 피드백을 통한 홍보의 중요성 제고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국정과제수행을 위해 적합한 시스템의 구축과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국회나 정부부처와 효율적 협력이 인정되나, 타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지속적 총량의 증가실적이 부족함.
- 중·장기적 과제로 통일 후 형사정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선행연구의 효율적 활용으로 매년 축적되는 연구과제를 국정 현안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음.
- 입법화를 위하여 국회,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련 학술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다양하게 개최함.

〈단 점〉

- 수동적 수탁과제 수주가 아닌 능동적 과제발굴을 위한 정부부처와의 협력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준비한 정부현안과제에 대해 기관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는지의 실적과 노력이 다소 미흡함.
- 국정과제 수행 실적에 따른 연구과제의 방향설정을 위한 내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정부 현안과제인 경우에도 민간 NGO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구분하여 연구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과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검토가 필요함.
- 선제적 대응과 함께 선행연구의 연결점이 필요함.
- 정부현안과제에 대응하는 전담부서의 제도화와 대응매뉴얼이 필요함.
- 실무협의회를 통한 국정과제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 비중의 상향으로 내실 있는 연구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4대약 적결 과제 중 성폭력범죄에 과제가 집중되고, 불량식품이나 가정폭력 분야는 다소 미진하여 향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정부부처의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력관계의 효율성이 돋보이며, 과제 중심의 유연한 부서 운영으로 인한 전문성 제고와 실적의 우수성을 유지함.
- 장기적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부서 지원 시스템으로 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와 평가지표를 잘 운용하고 있음.
- 다양한 전공의 연구인력 구성을 통해 협동 및 융·복합 연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음.

〈단 점〉

- 예산의 한계는 인정하나 관련 부처의 외국주재관을 통한 외국선진국과의 협력 시스템의 매뉴얼의 부재로 개인 연구원에 의존하는 업무가 많음.
- 자원배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조직, 예산, 인력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관 자체적인 모형이 마련되지 못함.
- 형사법 전공과 타 전공(범죄학, 사회학, 통계학 등)의 비율의 불균형이 있으며, 형사법 관련 국내 학회와의 교류가 미진함.
- 국내·외 정책연구네트워크가 일회성 세미나, 방문 등의 행사위주로 이루어짐.

〈개선 및 건의사항〉

- 다양한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 형사법 학회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정책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함.
- 유관 정부부처 정책의 실효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과제개발을 위한 연중 정례화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함.
- 일부 편중된 과제참여자에게 실질적 동기부여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의 하나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과제개발과 지속적 연구로 국정과제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 협력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연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부처 이외에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국정과제 중 4대약 체결을 위한 형사정책 분야 등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과제로 국가정책 수립 기여도가 높은 과제를 수행하였음.
- 연구과제의 성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회와 정부부처와의 협업시스템이 잘 진행되었으며, 외부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활용함으로써 연구과제의 정책 활용도와 이론적 활용도가 병행되어 입법화에 기여함.

〈단 점〉

- 범죄사회학 및 통계학에 근거한 연구과제에서 예산과 기간 부족, 연구대상 범위의 제한으로 국정기여도가 낮은 과제가 있음.
- 정부부처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센티브 비중의 약화로 국정 기여도가 낮은 결과물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음.
- 외부전문가 풀(Pool)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외부참여 인력이 중복하여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와 기본연구과제, 일반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와의 구분이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 수행 시 학계의견에 대한 반영도를 높여, 심도 있고 다양한 자문에 대한 성과물 생산이 필요함.
- 중앙부처와 함께 자치단체 및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의 연구과제 발굴에 참여함으로써 국정기여도 수행지표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형사정책에 대한 국정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형사정책적 국정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 개정법 연구를 법무부 등 주무부처와 협동으로 진행하여 보다 충실한 정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SNS의 실태 분석으로 범죄환경에 취약한 부분과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기초 자료의 제공으로 IT강국을 표방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의 목표에 부합함.
- 과제수행을 위해 IT관련 기업과 전문가의 참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의 형성을 통해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
- 선도과제의 수행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에 기여함.
- SNS등 관련 IT산업 발전에 선도과제가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형사정책적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국정지표에 기여함.

<단 점>

- 선도과제의 일부분 중 국정기여도에 대한 실적이 될 수 없거나 제안에 대한 평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음.
- 입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정책반영으로 인한 국가의 부담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연관 산업과 관련 분야에 대한 협업 연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실질적 국정 대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결과에 대한 국정과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워크숍과 학회 등의 홍보와 입법화 작업을 위한 과정을 정부부처와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연구기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며,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평가분석에 따른 과제설정의 방향을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제안과 대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실적으로 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 필요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기본연구, 정보제공이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반면, 수탁연구는 크게 상승함. 연구과제에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본연구, 수탁연구 순인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중에서는 정보제공이 가장 낮음.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정보제공을 제외한 모든 상세업무가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냄. 특히 공동연구에서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효과성’과 ‘공익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높았으며, 특히 ‘구비성’과 ‘편리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전문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제공을 제외한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와 공동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탁연구의 경우 ‘고객의 요구사항 수집 및 반영 절차 구비’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한편, 정보제공의 경우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확산) 노력’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발굴 및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공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 및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소폭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수탁연구가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반면, 기본연구, 공동연구, 정보제공은 상승함. 연구과제에서는 기본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동연구, 수탁연구순인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중에서는 수탁연구가 가장 낮음.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소폭 상승함. 기본연구와 정보제공은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수탁연구, 공동연구 등은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수탁연구에서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효율성’, ‘효과성’ 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높거나 같았으며, 특히 환경품질의 ‘편리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효율성’, ‘준비성’, ‘구비성’, ‘편리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합리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수탁연구와 정보제공을 제외한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낮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보고회 참석자 의견 경청 및 의견 적극 반영 노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 인력·조직 보유’와 ‘연구결과물의 체계적

작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의 정확한 이해'가 가장 높은 반면, '연구 관련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체계 구비'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공동연구의 경우 '고객 요구에 대한 친절성'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의 사명감 및 연구(업무) 수행의 책임감'이 가장 높은 반면, '연구진행 시기 및 신청 기간 적절성'과 '의견, 불만사항 제시 편리' 항목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정보제공의 경우 '온라인 정보검색기능(창) 구비'가 가장 높은 반면, '고객의견 접수 편리'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 및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관리와 연구 관련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 확인 및 관리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유관부처와 형사정책연구협의회 및 형사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전문가 중심의 형사정책연구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수요를 매우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연구과제 심의 절차를 다층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학회의 대표들을 자문위원회로 조직하는 등 외부 네트워킹도 적절함.
- 과제선정회의에 다수의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계획서를 심의·선정하는 등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61건 심의, 31건 선정).
-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결합하고 있음.

<단 점>

- 과제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과거 5년 간 주제 목록 제공, 표절검색시스템(Copy Killer) 사용 의무화 등)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 선정된 기본연구과제들의 정책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음.
- 탈락된 발굴과제 가운데 제목이나 일부 내용을 활용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외부 전문가 수요조사 및 공모과제 제안의 활용도가 저조함.
- 연구심의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이 존재함.
- 선정 과제의 수가 적어 탈락률이 다소 높고, 법무부와 내부제안 과제만이 선정되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과제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사용의 의무화가 필요함.
-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부처와의 협력 방안이 필요함. 예를 들어, 연구완료시 연구결과를 정부부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하는 워크숍 등 연구의 정책 기여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탈락된 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분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함.
- 연구심의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함(정부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권장 비율은 40%).
- 외부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부분 통합 등), 선정 과제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정부요청과제 이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한 외부 과제발굴 및 선정을 효과적으로 하는 등 외부제안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발굴에서 외부 민간단체의 제안을 수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수시과제 연구내용상 필요에 따라 내외·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개인성과에 반영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연구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선정된 수시연구과제 수가 적고, 정부요청과제 비율이 43%로 다소 낮으며, 수시연구과제 주제와 기본연구과제 주제간 차별성이 적음.
- 3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중간심의 절차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간심의를 생략하고 있어 체계적인 진도관리 및 보고서 질 관리에 한계가 있음.
- 대부분의 수시연구과제가 종료 즉시 발간되고 있으나, 일부과제의 경우 지연되고 있음(1개의 수시연구과제가 9월 종료되었으나, 12월에 결과보고서가 홈페이지에 등록됨).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연구과제 특성에 맞게 주제의 특수성, 연구범위를 좁혀 6개월 이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수시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수준에서 선정과제 수를 늘려가야 하며, 정부부처 반영률의 향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의 경우 중간보고서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질을 향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를 위한 추진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되고 규정화되어 협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85개 연구과제 중 선정한 협동연구 과제 5개의 대부분이 협동연구 필요성을 적절하게 기술하고 있고, 협동연구 기관 간에 상호협력을 잘 하고 있음.
- 협동연구의 학제 의존도를 다양하게 확대시킨 점은 장점임.

<단 점>

- 협동연구 과제 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미흡함.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함.
- 협동연구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과 ‘범죄 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는 협동연구기관 간 역할분담이 구체적이지 않음.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의 경우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피상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 과제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발굴추진실적이 제시되어야 함.
- 연구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협동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협동연구 과제에 있어서 필요성, 역할분담, 상호협력, 시너지효과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평가시스템을 착수-중간-최종 3단계별로 구성하고, 평가단계마다 평가절차를 평가위원 선정→ 평가실시→ 이의신청 및 평가완료의 3단계로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법학/사회학/학제 간 등 3단계로 나누어 동일분야 내 연구과제 간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 연구사업의 유형별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단계별 심의평가 체계를 통해 연구품질 제고에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단 점>

- 평가격차의 보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
- 최종보고서 평가를 6명의 외부평가자로 하게 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자 사후 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의 경우 5명이 평가를 한 사유가 불분명함.
- 470명의 평가위원 풀(Pool)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절차와 객관성 확보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최종보고서 평가를 소수의 외부 평가자가 집중하여 평가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격차 보정에서 평가등급별 분포비율이 기본으로부터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정한다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최종보고서 평가를 소수의 외부평가자가 집중하여 평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는 이해가 되나 너무 과도하게 소수의 평가위원에 평가가 집중되는 사항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지식재산 보호 규정은 마련하였고, 2013년 1월 대외협력홍보팀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단 점〉

- 지식재산 보호 규정으로서 현행의 자료관리규정은 매우 미흡한 규정임.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지식재산 보호 규정이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음.
-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이 체계성이 없으며, 신규 시스템의 도입에 소홀함.
- 성과확산을 위한 조직운영과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성과 전략성이 부재함.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계획 수립이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임.
- 연구결과와 홍보와 성과를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전년 대비 홍보의 향상도나 목표 대비 달성률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계량화하지 않았음.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있음.
- 첨단 정보화 서비스를 통한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미흡함.
- 성과결과의 해외확산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구체적인 실적이 부족함.
- 연구결과물의 배포 방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부재함.
- 해외확산을 위한 채널이 다양하지 못하며 MOU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수준임.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재산 보호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을 권고함.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함.
-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보완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인 수준이며 보안 및 보호 관련 시스템의 구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표절검색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도입하는 등 연구윤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의 확산·홍보를 위한 중·장기계획과 이에 바탕을 둔 단기 계획, 세부목표, 성과지표의 개발과 보완이 필요함.
- 성과확산을 위한 조직운영과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과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할 것을 권고함.

-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 효과성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확산 수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즉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한 후 다시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의 확산 실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널별 계량화된 실적, 전년대비 향상도, 목표대비 달성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함.
- 홍보에 대한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이슈페이퍼 배포의 적시성을 측정, 평가하여 보상하는 등의 적시성 향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권고함.
- 연구성과 확산 채널별로 효과분석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수요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배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이슈페이퍼를 적절한 이슈에 따라 생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홍보 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연구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과제를 보다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07편(36.5건/34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원 내 정책전문지 등 자체 학술지를 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음.

II 경영 분야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계한 환경변화 관련 이슈 도출은 우수함.
 - 4대 사회악 국정현안과제 대두, 지하경제양성화와 창조경제 대응 필요, 민간의 범죄예방 역량강화 및 범죄피해자 지원
- 조직 운영실적 및 노력 우수함.
 - 법무부와 공동으로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교육사업 계획 수립,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중앙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한 사업전담팀 구성 사업추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공동으로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 동북아시아의 범죄동향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 유관기관 간의 연구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함.
- 원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원규의 재·개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하고,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환경지침’ 제정으로 장소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함.
-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함.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형사정책분야 학회 및 관련 대학교 학과에 채용정보 제공, 국내·외 MOU 체결기관과의 인력 정보 교환, 추천의뢰 등 적극적인 리크루팅을 실시하여 2013년 박사 2명, 전산경력자 1명을 채용함.
- 인턴연구원 출신 중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인턴연구원제도에 대한 활성화 실적이 양호함.
- 국내·외 MOU 체결기관과의 인력 정보 교환, 형사정책분야 통합 연구인력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널 다양화 노력은 우수함.
- 고유 기능과 연계한 유관부처 파견공무원 활용 제도는 우수함.

〈단 점〉

- 조직운영 성과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의 우수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고유 기능 수행에 따른 정책 수혜자(외부고객)를 대상으로 한 요구사항 파악 미흡함(조직편제, 원규 제·개정, 비정규직 개선, 근무환경 개선은 일반 행정처리 사항 등).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미흡함.
- 2010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2010~2013) 수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후속 계획이 없으며, 연도별 계획도 수립되지 못함.
- 중·장기 인력운영 체계의 경우 직무분석, 인력구조 분석 없이 숫자만 나열하는 등 내용면에서 다소 부실함.
- 특별보상체계로서 제시한 최종 합격자 중 전직이 있을 경우, 업무 종료 후까지 임용일을 연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제도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지표) 개발 필요함.
- 조직의 핵심기능, 경영목표, 주요 이슈 등을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의 요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당해 연도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인력수급계획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기준과 채용절차에서 실적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심사과정에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는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면접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인적성 검사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기관 차원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직급·직종별로 국내·외 학술대회 및 초청강연/토론회 18회 개최, 연구계획 발표회와 중간보고서 발표회 개최,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MOU 체결(5회), 형사사법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연구 역량 및 실무현장 업무 습득(2기관), 자발적 소모임 활성화(4개), 연구연가제도(2명) 등을 운영함.
- 고유 기능 연계 외부 전문가 초청교육 실적은 양호함.
-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총 6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를 다양한 단기, 중·장기 연구보고서 및 담당업무 개선의 성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
- 교육내용을 공유하고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에 자료를 공유하는 등 교육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인력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함.

〈단 점〉

- 중·장기 및 연도 교육훈련계획 없이 교육훈련을 실시함.
- 국내·외 관련기관 및 MOU 체결기관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음.
- 기관 고유의 교육프로그램 및 사기진작책이 미흡함.
- 직급·직종별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실적 미흡함(형사사법시설 견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임).
- 교육·연수 결과의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의 구축 정도가 부실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기관의 경영목표상 추구하는 인재상과의 연계성이 부족함.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집행실적은 2012년도 115,569천원에서 2013년에는 95,978천원으로 16.9% 감소함.
- 각종 연수, 특별강연 등에 대한 환류가 없어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멘토링에 대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직종/직급별 차별화된 평가요소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양호하며, 연구직의 경우 2단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는 등 평가절차가 적절함.
- 전년도 연간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 연구책임자 선정 시 배제는 적절함(기본연구과제 과제책임자 배정 시 근무평정 우수자를 우선 배정).
- 연구직은 연구보고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연구직보다 업무성과의 비중을 높이고 복무성과의 비중을 낮춤.
- 비연구직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전면적인 다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업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계량지표의 비율은 20%를 유지함.
- 연구직 업무성과 평가요소는 연구회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항목 및 배점을 준용함.
- 연구직의 연구성과 배점은 부서군장의 경우 60점, 부서군원의 경우 70점으로 적정함.
- 검토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기술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정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 이외에 연구윤리 위반사항과 종합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 논문 게재 시 논문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업적평가에 반영하며, 우수 논문상을 운영함.
- 평가시스템 시행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정의 비공개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복무평가는 평가주체를 다양화하여 상향평가, 하향평가, 동료평가, 내부 고객평가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함.
- 연구보고서 평가위원 50% 이상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점수차에 대한 보정제도를 실시함.
- 우수논문에 대한 장려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함.
- 평정점수 및 평정등급이 확정된 즉시 본인에게 통보되며,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 프로세스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
- 평정기준일 현재 직위해제 된 자, 평정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휴직, 특별연가, 연구연가 중인 자, 평정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국내·외 출장 중인 자, 신규 직원으로 임용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평가 기준을 준수함.
- 근무성적평정결과를 토대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차등하여 산정하고, 승진, 보직인사, 재임용 심사, 연구과제 배정 및 교육대상자 선발, 우수 직원 포상 등에 활용함.

〈단 점〉

- 비연구직 정량평가요소별 계량화(기여도 평가) 항목은 핵심업무를 제외한 교육 참여, 지식등록, 위원회 참여 등 비핵심업무에만 국한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제외하고는 제도 시행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없음.
- 승진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시 최근 3년 간 근무성적평정결과의 30%만 반영하고, 승진심사 기준에 경력점수 25점이 반영되는 것은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결과를 승진 및 재임용의 최저기준 설정에 활용하고(3년 간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 등), 평가결과를 100% 승진심사에 활용하여 인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관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2013년도 연봉협상과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관련된 노사갈등을 정부지침을 준수 하며 원만하게 해결함.
- 노사협의회가 연 4회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음.
- 노사간담회 및 수시대화 창구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어 있고,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를 통하여 원만하게 단체협약이 갱신됨.
- 연봉협상과 비정규직 차별개선의 갈등이슈를 적절히 관리함.
- 4회의 노무담당자 교육과 5회의 일반관리자 교육을 실시함.

〈단 점〉

- 노무담당자 훈련 내용 중 노무관리 부분이 미흡함.
- 노사간담회와 수시대화창구가 동일한 참여자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함.
- 노사 간 갈등이슈를 발견하는 통로가 뚜렷하지 않음.
- 단체협약에 약간의 불합리한 규정(건강진단 등)이 상존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노무관리담당자 훈련에 있어 일반적인 정책 교육훈련 외에 노무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훈련이 필요함.
- 노사 소통프로그램 중 기관장과의 소통 기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
-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사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일반구성원 특히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구성원들의 대화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제안제도,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종합하여 전체구성원의 하의상달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불합리한 단체협약 규정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과제 사업비 비율은 2013년도 30.9%에서 2014년도 45%로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인 편성비율은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30.0%, 2014년 24.8%로 적절한 수준임.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20.1%, 2013년 10.1%로 연구회가 제시한 평가기준 (10~20% 범위내)을 준수하고 있음.
- 2013년도 수행한 7건의 수시연구과제 집행에서 전액을 위탁연구비로 지급한 과제가 없음.
- 퇴직금의 적립은 매분기별로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고, 퇴직예치금은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7%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138백만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우선적으로 적립하고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연봉체계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됨.
-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0%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제시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에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기본연봉의 차등지급율이 $\pm 1\%$ 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인원배분비율 역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봉의 책정방식이 비누적식으로 ‘성과연봉제 표준지침’ 및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전환하여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의 지급 시 평가결과에 따라 간부직과 비 간부직 모두 $\pm 33\%$ 의 차등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등급별 인원배분비율 또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율이 최고-최저 2배이상 차이가 나도록 지급하고 있으며, 인원배분비율 또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3년에 제도개선을 통해 수탁과제 수행실적에 의한 재정기여도를 중심으로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업적평가와 수탁과제 수행실적에 의한 재정기여도를 각각 5:5로 반영하여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였음.

〈단 점〉

- 능률성과급 배분 시,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2013년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긍정적이지만 능률성과급이 업적평가를 중심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전 직원 평가결과 공유 후 의견 수렴, 격월로 개선 및 추진실적에 대해 1차 담당자, 2차 기획조정실별로 체계적인 점검 실시, 성과분석 및 평가 단계에서 개선 사항 전직원 설명회를 통하여 결과까지 구성원과 공유하는 등 기초적인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를 가지고 있음.

- 연구사업에 총 65개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등 외부 참여진들의 구성이 다양화됨.
- 실질적 일상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규정을 개정함.

〈단 점〉

-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에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미약함.
- 환류체계는 잘 되어 있으나 개선실적 추진 속도가 다소 느린 한계가 있음.
-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 평가로의 개선이 완료되지 못함.
- 기본연봉 누적식에 대해 노사간 협의 중임.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해소 노력이 미흡함.
- 개선실적의 제시가 구체화·계량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개선실적 추진을 강화하여 구체적인 개선결과 목표 달성이 필요함.
- 기본연봉 누적식, 비정규직 차별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실적이 필요함.
- 국회지적사항의 존부와 관계없이 개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 개선이 기관발전에 기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결과 개선체계의 구성에 있어 개선결과가 다음연도의 경영에 반영되면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개선환류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output)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outcome)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채용공고 시 장애인 구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류 및 면접전형 시 장애인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 장애인 연평균 고용률 2.5%를 달성하고 있으나, 장애인 추가 고용이나 현행 고용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채용 목표 달성(100%), 청년인턴 결원 시 적시 보충, 청년인턴 1명 계약직 전환 실적이 있음.
- 청년인턴 맞춤형 교육지원, 취업활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양호하며, 기관 차원의 청년인턴 채용 및 관리지침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적정함.
- 청년인턴에 대한 근무평정 실시, 인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멘토링제도 운영, 우수인턴상 제도를 마련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우수청년인턴직원 중 위촉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지속적임(2년 간 2명을 위촉직으로 전환)
- 오리엔테이션 교재의 실질화, 멘토링 양식 개발, 고충처리담당관의 실질화, 고충 처리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 등을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고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고용 시 우대조치 관련 규정이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이 미흡함(3.8%)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채용활동(대학 취업처, 고등학교 취업처, 일자리소개소 등 취업관련 단체방문 등)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을 위한 기관장의 관심, 기본계획 수립,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함.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단체협약서에 있고, 내용이 적정함.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과 단체협약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원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원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연구원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시정 개선안이 있고, 그 내용이 적정함.
- 직원 복지 분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
- 임금 부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미세하게 존재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미세하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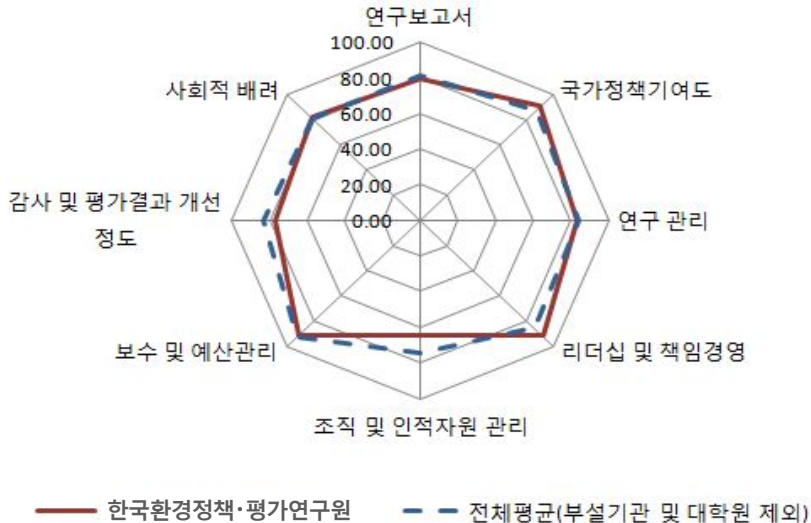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E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A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와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A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A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C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A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A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A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A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A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C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C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E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C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핵심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한편 연구의 독창성과 정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논리적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적응, 탄소 배출권 거래제, 화학물질 관리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내실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발전 기여도를 향상시킴.
-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산업계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내외 정책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환경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정책 연구도 이에 부합하여 연속적 추진이 필요함.
-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개방적인 과제발굴시스템을 통해 중·장기과제 및 중점연구과제 등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외부 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는 노력이 돋보이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참여가 서면평가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평가에 한계가 있음.
- 기관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동연구를 위한 전문가 DB 확충 등 규정과 제도 등을 잘 정비하고 있으며, 협동연구 발굴 및 장려를 위한 가산점 부여 등 장려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전년대비 성과를 높이고 있음.

- 연구회 지침에 의거하여 평가제도 등을 구축하고 있으나, 연구원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자체의 평가기준이 필요하고 보다 구체적인 제도 설정이 필요함.
- 정책결정자, 일반인, 전문가 그룹으로 타깃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홍보하려는 노력은 적절하나, 홍보에 대한 성과지표를 구체화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강화하는 노력은 부족함.

[경영 분야]

- 기관장의 현안문제 타개,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 및 구성원과의 소통,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은 뛰어나나, 융·복합 과제의 발굴 수행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노력이 부족함.
- 연구성과의 공유와 보급의 강화, 안식월 제도를 통한 사기진작 등 현안문제 타개 및 기관의 역량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통로를 운영하였음. 현안문제 선정과 같은 주요 의사 결정시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력 확대가 필요함.
-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계량지표이고 실천계획별로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경영목표 실천과제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환경지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연구분야별 정책고객 풀(Pool)이 전년대비 25.6% 증가하는 등 활기차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있으나,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이 미흡함.
- 연구과제별 전체 참여연구진의 기여율 확인서 제출로 연구실적평가의 투명성 확보하고 있으나, 승진심사기준은 연구실적, 근무성적, 소속 부서장 의견으로 결정되어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 정부지침을 준수한 임금인상률이 합의되고 의사소통이 강화되고 있으나 불합리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책과제 및 기초과제의 비율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의 집행이 없는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과 수당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물론 기본연봉의 차등지급을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간부직 성과연봉의 차등지급을 기준 미준수, 기본연봉·성과연봉·결산상 능률성과급의 인원배분비율 기준 미준수,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지급 시 재정기여도의 반영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계획→이행→점검→환류에 이르는 개선추진체계와 모니터링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성과연봉제의 개선이 미흡하고 개선실적이 추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성원의견수렴이 보다 구체화되고 개선실적의 구체화와 이의 개선성과로의 발전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이행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1.7%)이므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청년인턴 채용 목표 달성도 및 청년인턴제 운용실적이 양호함.
-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6.3%로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6%를 상회하고 있어 매우 양호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하여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중·장기계획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므로, 기관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녹색기후기금의 환경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기구의 특성, 재원의 조성, 재원의 활용, 국내 산업과 기업들의 이용 방안 모색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복잡한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함.
- 녹색경영 확산 연구의 경우처럼,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검토된 부분들은 과감히 제외하고, 핵심 주제에 집중하여 다수의 현장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제도의 한계점도 동시에 명시한 사례가 있음.
- 산업단지 환경 영향평가 관련 연구에서 우수 사례와 실패 사례를 모두 수집 분석하여 외국과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분야인 사회 영향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요소를 정리하였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회 영향평가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사례의 적용성 평가까지 수행함.
- 해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제도, 금융, 영향 사전 점검, 신용 심사, 정보와 기술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한 점이 돋보임.

〈단 점〉

- 실효성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분석이 필수적인데 자료의 활용 및 분석이 미비하고 결과적으로 연구의 독창성과 정책기여도가 미흡한 경우가 있음.
- 물환경 관리에 대한 논의가 전체적으로 체계화되었으나, 연구 결과에 비해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이 방향 설정 위주여서 정책 활용 가능한 측면에서의 구체성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전략 환경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이론적 고찰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자료도 이론적 측면만 제시되었을 뿐, 현상적 문제점 제시가 부족한 실정임.
-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 협력 연구의 경우처럼 광범위한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합적으로 시행할 경우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고 종합적인 대책 보다는 분야별 대책이나 전략을 나열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환경정책의 중·장기적 추진 전략은 있다 하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해 향후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보완이 필요함.
- 정책 연구의 핵심은 해당 사안의 제도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는 사례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목적과 논리적 체계성이 미진한 경우가 있음.
- 전반적으로 참고자료가 미국의 사례에 집중되어 유럽에 대한 자료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화학물질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화학산업의 기여도가 높은 일본의 대응체계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분석 자료의 다양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 환경영향평가 등 전담조직이 예산지원 등에서 탄탄하게 지원하고 있음.
- 화학물질 관리,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 적응 등 비중 있는 국정과제의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환경부 국정과제 추진평가단 참여는 주관부처와의 좋은 연계성을 보여줌.
- 기후변화 적응 및 환경매체 통합관리 등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에 관한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함.

〈단 점〉

- 환경분야를 다루는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의 지속성 측면(예, 녹색성장) 및 저탄소기반 정책의 연속적 추진이 부족함.
- 정부부처에서 수행한 국정과제 참여 및 지원 실적에 대한 홍보 전략이 부재함.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보고서 도입 추진계획 수립’, ‘국가기후변화 세부계획 수립 이행계획’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지원전략제시’에서 산업계나 이행당사자들의 경영피해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녹색창조경제, 환경분야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는 관계부처의 기존 데이터 및 업무와 연관성(중복 배제 및 종합 조정)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 현안과제로서 국정과제의 연구 뿐 아니라 정책화(법령제정 등) 측면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대와 우려 해소,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 홍보전략 마련과 이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기본마스터플랜에 맞게 콘텐츠를 설정하여 연구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되는 여러 부처와의 연계 및 실행력 확보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화학물질 사고대응 및 초미세먼지에 우수하게 대응하였고, 환경분야에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긴급과제로서 국정과제를 수행함.

〈단 점〉

- 화학물질 등 정부현안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언론 대응 강화에 있어서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화학물질 등 정부현안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별 대응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함.
- 에너지상대 가격조정 등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동일한 연구과제로서 환경 차원에서의 협력적 내용과 차별성 있는 내용의 제시가 필요함.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환경문제의 특성상 다부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연계협력에 노력함.
- 국회와의 협력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네트워크는 입법을 위한 노력의 결과임.
- 개도국, 선진국의 여러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내용의 협력사업을 추진함.

〈단 점〉

- 유관 정부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입법 이전의 단계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활동이 다소 미흡함.
- 해외로부터의 연구 펀딩을 통한 공동연구 활동이 다소 미흡함.
- 국제적 포럼 및 국제회의를 제외한다면 다양한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환경부의 대국회 활동과 연계한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
-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및 외국의 유명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 수주를 통하여 연구 역량 강화 및 우수성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을 연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연구정책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국가과제 정책대안 수립기여도는 11편의 국정연구과제에서 기본 5편, 수기 2편 및 수탁 4편으로 수행하여 국가정책 수립 실적이 우수함.
- 국가정책수립 기여도는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견고한 사회적 기반구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물환경조성에 기여함.

〈단 점〉

-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산업체가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제시가 필요하며, 정책화 과정에서 엑스포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의지가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의견 수렴과정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타부서(부처)간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부서(부처)간 협의기구 및 포럼운영 등이 필요함.

- 국정과제 정책 및 연구네트워크는 다양한 정책적 네트워크와 정책의견 수렴을 위한 이행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다양한 결정체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선도와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초미세먼지,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 안전, 환경오염 통합관리 등 현안이 되고 이슈가 될 것이 예견되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였음.

〈단 점〉

- 현안과제 연구 내용의 정교성, 구체성이 관건이나 자료로 파악이 불가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연구과제 발굴 체계 마련이 필요함.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장 점〉

- 환경영향평가 검토 사업의 경우 환경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부 전략환경 영향 평가 검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부 위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고, 사업 집행 전후 비교에서 2012년과 비교하여 2013년 70건의 환경영향평가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집행의 환류 절차수행에 있어서 개선 효과가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사업사업의 경우 개발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우수하며, 사업집행 환류노력의 성과에서 검토의견을 분석하여 모니터링이나 QR서비스 등이 우수함.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제68조와 제70조에 의해 환경부에서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였음.
- 정부 3.0 국정과제 수행이 우수하고,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2012년도 보다 늘어났으며, 콜센터 원격지원, 사용자 개선요구 사항을 분석 반영한 차기년도 계획 수립 등은 우수함.

<단 점>

- 사회집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확보 기여도에서 부실환경영향평가 신고제도가 누락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가정책 실현과정에서 사이버정책교육원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강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제도운영 개선을 위한 CQI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사회집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확보 기여도에서 부실환경영향평가 신고제도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수탁연구가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반면, 기본연구와 정보제공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함. 연구과제에서는 위탁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본연구 순인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중에서는 정보제공이 가장 낮음.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기본연구, 수탁연구, 위탁연구는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냄. 특히 위탁연구에서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효율성’, ‘준비성’, ‘구비성’ 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보다 높았으며, ‘공익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환경품질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정보제공을 제외한 모든 상세업무 유형에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보고회 참석자 의견 경청 및 의견 적극반영 노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성 및 정확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의 정확한 이해’가 가장 높은 반면, ‘고객 요구사항 수집 및 반영 절차 구비’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한편, 정보제공의 경우 ‘정보 탐색이 용이한 메뉴·화면구성’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고객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이나 시스템을 갖춘 체계적인 고객만족도 조사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수탁연구와 정보제공이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함. 연구과제에서는 위탁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본연구, 수탁연구 순인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중에서는 정보제공이 가장 낮음.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모든 상세업무가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위탁연구에서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도보다 높았으며, ‘합리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합리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모든 상세업무 유형에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고객 요구에 대한 친절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선도’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수탁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의 점수가 높으나 ‘연구 관련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체계 구비’ 항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의 점수가 높으나 ‘고객 요구사항 수집 및 반영 절차 구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한편, 정보제공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 제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객의견 접수 편리’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의 문의 및 요청사항 제시가 편리하도록 기존 고객과의 의사소통 채널 관리를 강화하고, 고객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 지정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체계적이고 개방적인 과제발굴시스템을 통해 중·장기과제 및 중점연구과제 등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12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정부부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기본적인 발굴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음.
- 9개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음.
- 외부 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서면평가 등의 두 차례 평가를 통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 탈락과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음.

〈단 점〉

- 중·장기과제의 기준이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함.
-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참여가 서면평가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평가에 한계가 있음.
-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기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기나 선정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외부 전문가평가위원회와 연구심의조정위원회의 성비가 지나치게 불균형적임.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과제 발굴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것을 실현할 현실적 절차가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함.
- 환경정책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시민단체를 목록화하고 기관별 협력방식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부 전문가평가위원회와 연구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성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기획단계에서부터 발굴, 선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한 점이 돋보임.
- 과제 종료 즉시 결과보고서가 발간되고 홈페이지에 등록되었음.
- 과제 선정과 심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포함시키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의 정부부처 의견반영비율이 37%로 타 연구기관에 비해 다소 낮고, 과제선정회의가 상반기에 편중되어 있음.
- 외부(대학/학회) 제안 과제가 모두 선정되지 못했음에도, 이들 과제가 선정되지 못한 사유가 명시되지 않음.
- 과제 진행과정에서 별도의 중간단계 심의 없이 진도관리로 대체하고 있어 연구의 질 관리에 한계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활성화, 과제선정회의 상·하반기 확대 등을 통해 정부부처 의견반영비율 제고 노력이 필요함.
- 보고서 작성 방식에서 제안 과제의 탈락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제안 과제가 모두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3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의 진도 및 품질 관리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중간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과제 관리 강화 및 연구결과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기관차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동연구를 위한 전문가 DB 확충 등 규정과 제도 등을 잘 정비하고 있음.
- 협동연구 발굴 및 장려를 위한 가산점 부여 등 장려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전년대비 성과를 높이고 있음.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원 인센티브 제도가 잘 구축됨.

- 협동연구 5개의 과제는 협동연구기관 연구진들 간에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음.
-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인력과 광범위한 협동연구를 수행함.

〈단 점〉

- 협동연구 선정과정에 대한 추진체계가 미흡함.
- 협동연구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는 구축하였으나, 협동연구 선정 및 평가에 적합한 인적 구성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다소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의 선정 및 평가에 적합한 인적 구성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체계와 관련한 규정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연구보고서에 대한 착수-중간-최종점검은 집중검토위원들이 평가하여 연구진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최종보고서 평가는 여타 평가위원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자체평가의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음.
- 연구과제 유형별 및 단계별로 차별화된 심의평가를 실시하여 연구품질의 제고에 노력함.
- 최종보고서 평가의 경우 내부위원 1/3, 외부위원 2/3가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보고서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음.

〈단 점〉

- 기본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자체적인 평가기준이 부재함.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구체성이 미흡함.
- 외부평가위원의 소속기관별·전공별 분포현황이 미흡함.
- 보고서 선정평가위원의 기준이 되는 평가위원 DB라고 기술되어 있는 ‘KEI 환경 전문인력 DB’의 소속별·전공별 분포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원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자체적인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함.
- 평가지표에 적합하게 보고서 기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신청 프로세스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KEI 환경전문인력 DB’의 소속별, 전공별 분포내용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연구성과 관련 보안 관련 규칙 및 규정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인임.
- 비교적 다양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 분야별로 특화된 조직을 운영하여 홍보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였음.
- 기본연구, 수시연구, 일반연구 등 연구성과를 홈페이지에 100% 등록 완료했으며 신속성 차원에서도 긍정적인임.
- 정책결정자, 일반인, 전문가 그룹으로 타깃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홍보하려는 노력은 적절함.
- ‘KEI포커스’ 창간을 통해 정책과제의 이슈페이퍼 발간 및 배포를 확대함.
- 국제세미나 참석 실적이 활발하고 관련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적절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성과를 해외에 확산하는 노력이 긍정적인임.

〈단 점〉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수준과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전략적 활용에 대한 계획이 미흡함.
- 자료관리 내규와 지침을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저작물 및 저작권, 기록물관리 지침 등의 구체화가 다소 미흡함.
- 시스템의 효과분석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미흡함.
- 연구성과 홍보·확산계획이 단기적이어서 장기적인 목표 및 전략과의 연관성이 미흡함.
- 홍보·확산 계획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담당부서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홍보·확산 계획의 실적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에 대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계획 수립에서 전략 설정이 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함.
- 연구결과의 홍보와 성과를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전년 대비 홍보의 향상도나 목표 대비 달성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적을 계량화하는데에 미흡함.
- 연구성과 확산 실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의 차별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제시가 미흡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적정하게 선정, 취소하는 관리시스템의 활용이 미흡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 적정성의 기준이 효과성의 향상보다는 단순 배포확대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함.
-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보완, 개선해 갈 수 있는 체계와 절차의 마련을 권고함.
- 현재 보고서에 제시한 규정은 보안 관련 시스템에 대부분 할당되어 있으므로,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을 폭넓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을 통해 얻는 효과를 보다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활동에 대한 계량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적절한 단기목표를 설정하여 목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함.
-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가장 효과적인 확산 수단을 선택하여 확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하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함.
-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즉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한 후 다시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의 확산 실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널별 계량화된 실적, 전년대비 향상도, 목표대비 달성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함.
- 홍보에 대한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과 배포대상에 대한 활용도를 평가하여 연구보고서가 낭비 없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이슈페이퍼 배포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측정, 평가하여 보상하는 등의 적시성 향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권고함.
- 연구성과 확산 채널별로 효과분석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수요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배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이슈페이퍼를 정책과제에서 재생산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페이퍼로 생산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0.95편(45.6건/48명), A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제 및 등재 학술지 게재 실적이 많은 것은 긍정적이거나, 향후 정책전문지 게재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현안문제 선정의 배경 및 기관 발전에의 중요성이 잘 정리되었음.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추진전략이 잘 정리되었고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임.
- 통합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결과를 손쉽게 공유토록 하였으며, 정책이슈 간행물을 발간하여 연구성과 보급을 강화함.
- 비정규직 우수인력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정책방향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연구인력수요에 대응함.
- 원내 조직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직 개편을 실시한 것이 돋보임.
- 부서별 워크숍 및 연구원 리더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 하려고 한 점이 돋보임.

<단 점>

- 내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함.
-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제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았음.
-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않음.
- 연구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적 노력이 부족하고, 동기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함.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 및 새로운 과제의 개발 노력 및 근거가 부족함.
- 환경정책포럼을 운영하여 환경정책방향 및 핵심의제를 발굴하였다고 하였으나, 기관 역량강화의 구체적 성과 또는 정책역량의 강화를 판단할 수 있는 과제의 개발을 확인하기 어려움.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환경문제와 관련된 현장방문의 타당성 및 성과의 확인이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내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제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 및 평가 보상 시스템의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 과제의 개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융·복합 과제의 개발에 있어서 어떤 학제적 접근방법을 사용했는지 또는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했는지를 보다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 포럼, 조직개편 등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 목적과 목적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나 지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내부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3개 그룹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통전략을 사용한 것이 돋보임.
- 기관장과의 대화, 독서토론회, 티타임 등 기관 내부에서의 다양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운영함.
- 국가 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이 뛰어나.
-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및 협력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뛰어나.
- 환경부 등 정부 유관기관,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산업계 및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확보 노력이 뛰어나.
- 외국 기관과의 워크숍이나 MOU체결을 통하여 협력추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함.

〈단 점〉

- 내부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비공식 채널(대화의 시간, 티타임 등)의 제도화가 부족함.
- 위원회의 구성에서 전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함.
- 선진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를 위한 협력관계가 다소 부족함.
- 언론을 통한 기관의 홍보가 활발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내부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비공식 채널을 제도화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서 직종별, 직급별 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업무관련성보다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한 모임(독서토론회 등)이 참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선진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연구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장의 대언론활동을 증가시켜 기관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부기관 뿐 아니라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형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운영규정과 제도가 잘 정비되었고, 내부 시스템이 잘 구비되었음.
- 기관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졌음.
-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서 직종별/직급별 대표와 노조 1인을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음.
- 윤리경영위원회 구성, 윤리경영사례집 발간 등 윤리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
-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를 위한 내부 규정이 잘 정비되었음.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윤리확보에 대한 자체 감독기능을 강화함.
- 표절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기능을 강화함.

〈단 점〉

-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 중 신고 시스템의 운영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 검색 시스템의 도입이 너무 늦어 2013년도에는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함.
-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이 다소 부족함.

- 연구윤리 위반 행위(표절, 변조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제도적으로 다소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연구윤리를 위반한 외부연구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에 대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패 방지를 위한 신고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포상 제도와 연계하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채용 및 성과평가 등 평가를 위한 도구에서 평가척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표절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도록 표절 검사 결과를 연구자에게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업적 평가와 인사고과에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외부에서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 내용을 제도화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환경에 관한 연구는 연구 분야가 다양하고 변화가 많아 미래예측과 관련하여 연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연계방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외부환경과 내부연건을 고려하여 SWOT분석을 실시하고 전략을 개발하였고, 기관의 당면현안이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 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수단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었음.

- 전체적으로 연구기관의 경영목표가 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전에 부합된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체계적 연계성이 잘 정리되어 있음.
- 실천계획이 기관의 당면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계량지표이고 경영목표 실천계획별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달성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됨.
-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100% 이상이며, 특히 연구성과의 계량적 실적이 우수함.
- 위탁기관 설문조사 시행, 정책연구 성과발표 실시, 정부부처 제안 수시과제 반영 등은 실천과제의 결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실적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실천과제가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적절한 계량지표를 도출하여 계량지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지표별로 제시된 성과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
- ‘행정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하여 연구중심의 행정지원 체제 효율화는 연구기관의 핵심적인 효율적 경영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적절함.
-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하여 주한 외국대사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KEI Bief를 발간하는 등 국내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대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어 긍정적임.
-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중심의 행정지원체계를 선진화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연구원의 야근의 급격한 감소 등 가시적 성과를 얻는 노력이 긍정적임.

〈단 점〉

- 삶의 질을 제고하는 현안문제를 다루는 연구 실천계획에서 특히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한 계획이 미흡함.
- 우수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인력채용,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과 중심 평가보상 시스템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계획이 명확하지 않음.
- 세부 실천계획 중 연구중심의 행정지원 정보시스템의 선진화는 긍정적이나, 윤리 경영이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들이 해당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포함되어 있음.
- 구체적 계획의 실현을 위한 추진 조직과 추진 일정 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실천계획으로서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관련 실천계획이 미흡함.
- 경영목표의 실천계획에 대한 성과지표가 너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 실천계획의 성과가 달성된 것인지 종합하기 어려움.
- 연구성과의 보급확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강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하였으나, 이러한 활동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구체적 실현기능과 수단에서 추진조직과 추진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미래지향적, 융·복합, 일자리창출 연구 등과 같은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로서 특히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시스템의 구체성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계량지표의 비중을 좀 더 증대하고 실천과제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를 개발하며, 필요시 질적 지표를 일부 도입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을 권고함.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기관장의 경영방침을 반영하고 원내·외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운영 위원회를 거쳐 경영전략자문위원회 및 경영목표실무위원회에서 3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구원장의 경영방침이 반영된 중점추진 과제가 선정되었음.
-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환경정책연구 강화 중점추진과제의 생활환경 정책연구 활성화 및 살고 싶은 국토환경 창출 관리 정책연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가 양호함.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배경과 이유가 타당하고, 연구기관의 현안 및 당면과제를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중점추진과제들이 선정되었음.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이 타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고, 기관 내외 구성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며, 특히 경영전략자문위원회와 경영목표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절차도 우수함.

〈단 점〉

-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글로벌 지식협력 네트워크 실효성 제고 실행과제의 해외 연구기관과의 행사위주의 대외협력은 다양하나 실질적인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은 다소 미흡함.
- 기관의 설립목적, 국가정책, 기관발전에의 기여 등 항목별로 중요성과 시의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함.

- 중점추진과제 ‘글로벌 지식협력 네트워크 실효성 제고’에서 글로벌 연구를 위한 네트워킹 특히 선진국과의 연구협력 또는 공동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추진과제 선정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각각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기관의 핵심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설립목적, 국가정책, 기관발전예의 기여경영 등 항목별로 타당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과제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상대적 평가 지표로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임.
- 국내 및 국제공동연구의 주제가 가능한 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융·복합적인 내용, 창조경제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 내용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음.
- 본 기관의 다양한 연구 인력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국제교육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연구를 강조하도록 과제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과제 선정과정에 있어서 환경관련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환경평가 기능 확대에 따른 검토업무 강화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지원 업무 증가로 기능 확대에 부응하는 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행정시스템 정보화 TF를 구성함.
- 선진환경정책 연구개발 강화 노력으로 환경정책 연구 수행이 12.7% 증가하였고,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는 100% 증가하였음.
- 환경지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연구분야별 정책고객 풀(Pool)이 전년대비 25.6% 증가하고, 보고서 온라인 평가 등 연구관리시스템 개선 및 연구역량 강화, 활기차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있음.

- 해외사이트 이용 공고 및 해외현지 리쿠르팅(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2013) 채용 홍보부스 운영) 실시로 우수 인재 발굴 채용 노력은 양호함.
- 외부 채용심사위원 참여(40%)를 통해 면접전형의 내실을 제고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인적성검사를 도입하고, 학력연고 배제원칙을 준수하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
- 수시채용시스템 도입으로 우수 전문 연구원의 적시 확보를 실천하고, 학생 인턴제 도입으로 잠재적 연구인력에게 연구원 홍보 및 연구경험 기회를 제공함.
- 정년퇴직자에 대한 명예연구위원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의 직무적합성과 조직적합성, 인재역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함.

〈단 점〉

- 도출한 환경변화 이슈와 고객요구사항이 기관의 고유기능을 반영하지 못함.
-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조직 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함.
- 조직 및 제도운영 성과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의 구체성이 결여됨.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 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경영목표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의 제시가 미흡하여 목표 달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음.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미흡함.
- 직무분석, 인력구조 분석, 사업별 소요인력 파악 없이 제시한 인력운영방향 및 계획은 무의미함(대내·외 여건변화, 필요성 내용 부실).
- 기관의 기능과 연계한 사업분석 및 직무분석 등에 근거한 체계적인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의 핵심기능, 경영목표, 주요 이슈 등을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의 요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운영계획의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KEI 인재상 마련 및 교육훈련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기관 경영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와 연계함.
- 자율연구 및 안식월 시행(3명), 학습동아리 운영, 학위과정 지원, 동호회 구성·지원, 우수 보고서 및 논문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하여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함.
- 연구원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직급 및 직종별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함.
- 교육·연수 확대 추진으로 인원은 1,965명(전년대비 15.4% 증가)이고, 총 교육훈련비 집행예산은 662,956천원(전년대비 19.6% 증가)으로 향상됨.
- 연구윤리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윤리교육 실시를 확대하고(4회),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에 직원파견 및 교류(3명), 학위과정 지원(3명),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실시(5명)의 실적이 있음.
- 교육만족도 및 업무연관성·적용성 평가 후 익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개별 위탁교육 결과발표 및 공유를 위하여 자율학습조직(CoP), 교육훈련방, 학습동아리 발표 및 인트라넷에 게시 등을 실시함.

〈단 점〉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이 수립되지 못함.
- 연도별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기관 고유 기능과 연계되어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함(2012년과 2013~2014년 계획이 유사).
- 기관 구성원에 대한 특별한 사기진작책이 없음.
- 교육훈련 성과 분석 내용이 부재하는 등 교육·연수 결과의 활용을 위한 환류 체계의 구축 정도에 관한 자료가 다소 미흡함.
- 기관 고유 기능에 부합하는 직급/직종별 교육과정 개발 노력이 미흡함.
- 연수, 특별강연 등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비연구직의 교육훈련비 비율이 8.8%로 비연구직 역량강화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평가결과의 환류 및 이의신청 제도는 양호하며, 특히 연구실적과 종합평가에 대한 2차례의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이의신청 횟수가 현저히 낮아진 성과는 우수함(2012년 4건, 2013년 1건).
- 평가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자 교육 및 평가결과 평균을 이용한 2차례의 보정을 실시함.
- 연구과제별 전체 참여연구진의 기여율확인서 제출로 연구실적평가의 투명성 확보하고, 평가결과의 공정성·투명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개선함.
- 연구실적과 종합평가에 대한 2차례의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직원평가규칙), 평가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함.
- ‘직원평가규칙’에 명시된 연간 근무일수 대비 1/2미만 근무자와 연구회 평가지침에 의거한 평가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 5단계의 평가결과는 연봉에 반영하는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승진, 우수 직원 포상, 재임용계약, 자율연구, 안식월 및 해외교육훈련 등의 비금전적 보상에도 적극 활용함.
- 2013년 승진은 23명 중 8명이 승진하여 승진률은 34.8%임.
- 직급, 직무, 직종 등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실적 및 역량평가요소를 적용하고, 업무 특성별·직급별로 평가요소 반영비율을 차별화함.
- 평가지표는 ‘직원평가규칙’, 및 ‘직원평가 세부요령’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업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량화된 평가지표 40%를 적용하여 운영함.
- 평가의 정확성,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직원평가 개선 TF, 간담회, 연찬회,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시스템을 보완하고, 과제평가 정확성 제고를 위해 참여율 적용대상자를 확대함.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우수논문 포상(33편) 및 업적평가 시 개인평가 점수에 반영함.

〈단 점〉

- 업적평가 중 역량평가 비중이 다소 높음.
-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개정안 마련,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의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함.
- 승진심사기준은 연구실적, 근무성적, 소속 부서장 의견으로 결정되어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재 고유과제 및 학술활동 평가비중이 무제한이므로, 평가비중에 대한 상한선 기준 마련이 필요함.
-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이 시스템화 되어 체계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를 100% 승진심사에 활용하여 인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관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노사 간 대화로 인건비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지침을 준수한 임금인상률로 합의함.
-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실시되었음.
- 수시대화가 수시로 열리는 것 외에도 전체회의, 연구운영회의가 월 1회, 주 1회 등으로 정례화되어 노사 간 의사소통이 강화되어 있음.
-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준수하고 있음.
- 7회에 걸친 노무담당자 교육, 2회의 일반관리자 교육을 시행함.
- 2진아웃제를 노사갈등관리를 통해 2014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

〈단 점〉

- 노무관리 교육결과를 전 부서나 직원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미흡함.
- 노사협력증진프로그램이 체육대회와 각종 성금전달 및 자원재활용 행사로 구성되어 있어 미약함.
- 불합리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체협약 규정이 다수 존재함.
 - 37조 쟁의기간 중 민형사책임과 일반 법리와 충돌 여지가 있음.

- 41-2조 경제윤리, 사회윤리 위배한 사용자명령에 대한 조합원 거부권리 인정하는 바, 법규와 윤리의 규범성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 53조 휴직연장시 상한 규정이 없음.
- 66조 노동부, 노동위원회, 재판의 확정에 대한 구분이 없이 사용자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66조·3 부당징계 및 해고시 고의, 중과실의 ‘징계관련직접행위자’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이상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의무규정함으로써 징계 등급을 사전적으로 확정 부여하고 있으며, 징계사유 3호(직무상 명령 또는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와 중복가능성 있어 ‘징계관련 직접행위자’에게 이중(二重)의 가혹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징계권에 과도한 제약이 있음.
- 81조 유급휴일 노사합의로 정한 날

〈개선 및 건의사항〉

- 노무교육 결과를 내부공지나 요약된 결과보고 회람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전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노사 윤리경영 선언이나 노조 기념 행사 참여보다는 실질적인 노사협력 증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노사협력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단체협약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단체협약이 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노사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고충처리제도, 윤리경영위원회, 창의적 제안제도 등 연구원에 존재하고 있는 하의상달, 구성원 요구해결을 위한 제도를 체계화하여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함.
- 단체협약서의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의 경우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책과제 사업비는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의 경우에도 60%를 편성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과제 비중은 2013년 16.5%, 2014년 16.2%로 연구회에서 제시한 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9.9%로 연구회 제시 기준(10~20% 범위내)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2013년 10.4%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85%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20건의 집행에서 외부위탁연구비를 지급한 과제 없음.
- 퇴직금의 적립은 매 분기별로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예치금은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5%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1,297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2011년부터 능률성과급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여, 전체 연봉체계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됨.
- 기본연봉에는 직무급과 기타 수당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 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3.3%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제시 평가기준 (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에 대하여 전년도 평가결과가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 연봉제를 적용·실시하고 있으며, 등급별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pm 1\%$ 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봉이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 최고(1명)-최저(3명)등급에 각 1%, 3%를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10% 이상)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을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 지급 시 비 간부직의 경우 등급별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pm 15\%$ 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연구위원 이상 직급의 경우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지급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함.

〈단 점〉

- 성과연봉 지급 시 간부직의 경우 등급별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pm 15\%$ 로 평가기준 ($\pm 24\%$)을 미준수하고 있음.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 역시 기본연봉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 부연구위원이하 직급의 경우 능률성과급 차등지급률에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 능률성과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 최고-최저 등급에 각 3%의 인원을 배분하여 평가기준(10% 이상)을 준수하지 못함.
- 수탁연구과제 수행실적 기여도(재정기여도)에 따라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25%를 지급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과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을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능률성과급이 업적평가를 중심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존 재정기여도에 따른 지급의 수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능률성과급 차등지급률 및 등급별 인원 배분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기관의 개별 국회 지적사항 없음.
- 계획→이행→점검→환류에 이르는 지적사항 개선추진체계를 갖추.
- 제도개선TF·담당부서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실적이 우수함.

〈단 점〉

- 협동연구 사업 등 공통지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작업을 찾기 어려움.

- 연구기관 평가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평가요소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지적사항 개선추진체계에서 구성원의 공유 및 의견수렴 절차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개선실적의 기술이 매우 추상적으로 완료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연봉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사가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국회지적사항의 준부와 관계없이 개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도화하여 둘 필요성이 있음.
- 구성원의 공유 및 의견수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 개선추진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활동과 조치(대책회의, 가점부여, 아이디어 발굴, 공단과의 지속적 접촉유지)를 적절히 수행하였음.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무기계약직 전환, 격려금 지급)을 적절하게 하였음. 기관장이 부서장 평가 시에 장애인고용노력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있음.
- 2013년도 장애인 3명(중증 1명, 경증 1명)을 채용하였으나, 아직도 의무고용률 이행수준이 미흡하여(1.7%)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기관장과 기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대책회의, 계획수립, 관련기관방문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중·장기인력운영계획의 사회형평채용 항목을 구체화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우대조치를 연구원 자체 규정에 명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장애인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이 요구됨.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목표 달성, 청년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 청년인턴의 정규직, 계약직 전환 실적이 우수함(9명).
- 청년인턴의 근무관리, 교육지원, 취업지원 전 영역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운영이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음.
- 연구원 차원의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의 적절성, 청년인턴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용, 청년인턴에 대한 근무평정 실행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 인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 등을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중·장기인력운영계획, 직원신규채용운영요령에 국가유공자 우선고용근거를 두고 있음.
- 국가유공자 3명을 신규 채용한 실적이 있음.
-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6.3%로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6%를 상회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를 연구원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우대조치를 연구원 자체 규정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국가유공자 고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그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재택근무시행규칙)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연구원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관련 규정(임시직운용규칙)이 존재하고, 임시직운용규칙에서 임시직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제10조의2).
- 비정규직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이 존재함.
- 직원 복지 분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
- 연구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이 존재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임금격차의 해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담고 있지 않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하여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음.
-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있으나 임금차별해소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관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권고함.

2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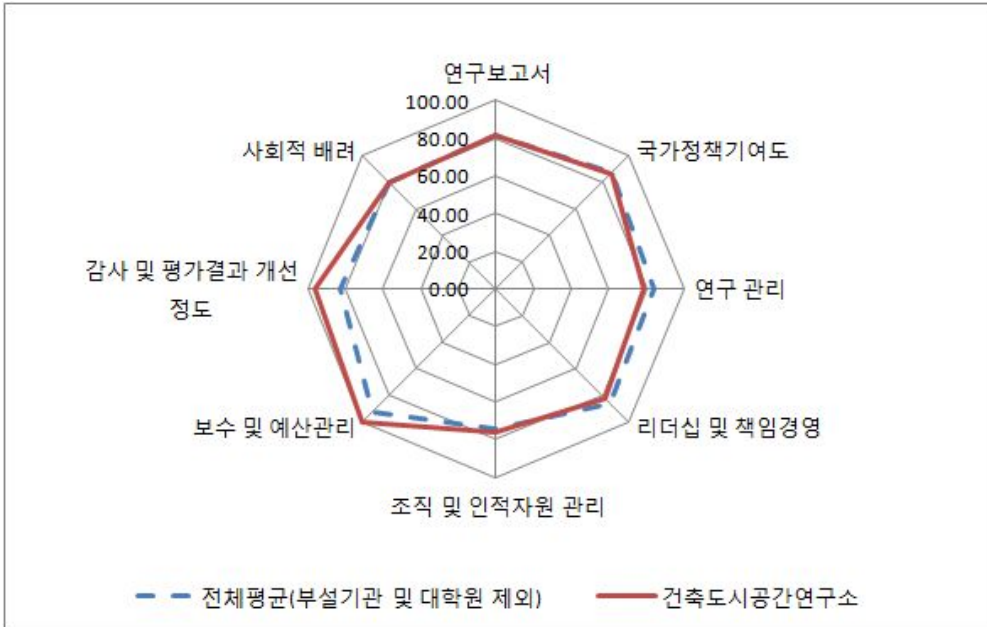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F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1-3. 연구 관리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C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A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B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A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B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B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B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A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B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B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적인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체계화 하였으며, 연구 범위와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논지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수행 과제 대부분이 법률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나타냄.
- 국정과제 참여 연구진 1인이 여러 과제에 중복 참여함으로써 전문성과 집중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건강, 환경 등과 연계된 융복합의 과제 발굴도 필요함.
- 건축도시분야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정기 및 상시관리체계를 운영하여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예비 기본과제를 선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나, 외부참여가 서면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과제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협동연구 추진체계를 잘 구성하고 있으며, 협동연구 발굴을 위한 14건의 채널을 운영하여 노력한 점은 적절함.

- 공동연구 장려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 인력 풀(Pool)의 구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부평가위원 풀의 선정과 구성을 확대하여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평가자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풀(Pool)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홍보 확산수단별로 2013년도 실적을 전년대비, 목표율대비 향상도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홍보를 차별화하는 전략과 노력도 미흡함.

[경영 분야]

- 기관장의 기관 구성원과의 소통,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은 뛰어나나, 대내·외 환경 분석이 다소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및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부족함.
- 제한된 인력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등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기관 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실시하였음. 대내·외 환경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할 것이 요망됨. 또한 상향식 의사소통 통로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당면현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되고 타개방안들도 실현가능한 방안들이나 기관의 핵심 역량 발휘를 통한 성과창출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연구인력 및 자원을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우수인력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장 개입요소를 최소화하여 외부위원을 관련 학회에 직접 추천받고 연고자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구성한 사례는 우수하나,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연구직/비연구직, 보직자/비보직자 등에 따라 성과/능력, 계량/정성 등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달리하여 개인의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승진 심사 시 평가결과를 40~80% 반영하고 나머지는 평정은 정성평가 요소로 심사하고 있음.
-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기관최초로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근로자 고충처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조직 내 잠재하고 있는 갈등관리 이슈를 관리하는 절차의 체계화가 필요함.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지 않은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에금 및 보통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과 기본 연봉·성과연봉·결산상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
- 실효성 있는 국회 지적사항 개선절차, 연구기관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가지고 개선을 충실히 수행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목표설정, 목표달성에 기초한 개선실적이 개선성과 및 경영기여로 이어지는 개선시스템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채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장애인 2명을 신규 채용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어 양호함.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양호하지만, 청년인턴교육, 멘토링, 고충해결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이 다소 미흡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운용이 요구됨.
- 국가유공자 2명을 신규채용한 실적은 우수하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채용 노력이 요구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복지부분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지만 임금 부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있으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충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기관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해외 사례 연구와 해외 가이드 라인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함.
- 기관의 규모에 비해 방대한 연구 분량을 수용하고 논리적 체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임.
- 보고서의 가독성과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적인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수용성을 높임.
- 특히 중소도시에서 현안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시의적절하에 탐구하고 다양한 사례조사와 폭넓은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단 점〉

- 연구의 범위가 방대하고 다양한 분석 내용을 복합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논지를 분산시키거나 논리적 구성이 미진한 부분이 있음.
- 일부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는 사업수가 매우 방대하여 실제적인 본질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 결론의 완결성이 미흡하거나 연구의 창의성과 정책 활용성이 다소 미흡하여 연구의 완성도가 다소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 대상지 선정에 있어 규모, 지역, 주민 수, 성별, 도시성격 등 다양한 분류조건에 따라 보다 보편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사례 연구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중심으로 대상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민 복지가 발달한 북유럽이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를 선정하여 조사를 한다면 적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건축도시공간 분야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정책 어젠다 발굴, 국가건축정책 위원회의 어젠다 발굴에 공헌함.
- 국토연구원 산하의 연구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연구소이나, 건축공간 분야에서 2013년도 총 11개 국정과제 관련 총 29개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각 국정과제에 대하여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의 건축설계분야의 육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 국유지 개발, 행복주택 개발, 녹색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도시 재생, 보행자도로 및 특별가로지구 등과 관련한 법률제정, 한옥활성화 사업, 건축 행정정보 사업 등에 참여하여 법령, 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함.
- 국정과제 수행 모니터링 및 월별 점검회의 운영 등 기관 내부 대응체계를 구축함.

<단 점>

- 연구자원에서도 20명 내외의 소규모 연구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어 대형·장기적인 국정과제 수행 등에 제약이 있음.
- 국정과제에 개별 연구원이 담당하는 과제가 3건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문성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과제 배분체계가 다소 미흡함.
- 정책어젠다 수행을 위해 TF 등 자원을 배분하는 명확한 기준과 역할을 제시하는데 다소 미흡함.
- 공모전 수행이나 시범사업 기획 및 운영 등이 연구사업과 구분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과제와 국정과제와의 실질적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과제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단편적인 과제보다는 종합적이고 제도개선과 관련된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제의 제목이나 내용에 따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체계를 따르면 연구내용과 국정과제 내용이 일치하지 못하는 모호성이 발생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구초기부터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연구결과의 정책화, 제도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에 대한 자원배분을 높이고, 연구인력과 자원 확보를 위해, 연구인력 충원, 외부와의 협력, 아웃소싱 등 연구원 내의 자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인력 및 재원상의 제한이 있겠지만 연구사업의 분야가 건축서비스, 공공건축지원, 건물디자인, 근린환경조성, 한옥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건강, 환경을 위한 건축·도시공간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과제 발굴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과 중복된 과제에 예산 인력 배분의 조정이 필요함.
- 연구기관의 방향 설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이외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의 현안에 대하여 연구기관의 참여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여 연구기관의 입지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과의 관계에서 차별화된 연구영역을 설정하여 연구기관의 고유한 존립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학계, 산업계와의 유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연구과정에서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정보교류를 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확산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에서 대외 확산 공유를 건축위원회 이외에 다양한 네트워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건축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의 협력관계 이외에 정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높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건축도시환경 분야에서 근린 환경 조성 정책, 인간중심 도시공간 창조, 에너지 효율화, 층간소음 문제 개선, 1인 가구, 노령화에 대비한 실버·건강 등에 대한 건축, 도시환경 개선 정책 연구 등으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공공건축 효율화 및 품격 향상,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지방하천정비 사업, 근린 도시재생, 녹색건축물 조성,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 한옥활성화 관련 현안 등의 건축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법률 제정 등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함.
- 건축 분야에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강릉시, 익산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교통상부 등의 현안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함.
- 도시재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등 정부현안과제에 대한 긴급 및 수시 연구요청에

대응하여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법령 제정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을 수행한 성과가 있음.

〈단 점〉

- 「건축과 도시공간」 계간지 발간은 발행형태나 배포방식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행복을 위한 공간복지 구현’이라는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에는 구체적 성과가 미흡함.
- 연구과제의 일부(포럼 개최나 공모사업)는 선제적인 대응성이 약함.
- 연구의 방향성이나 가치와 관련하여 정부 실무진과의 실질적 협의가 부족함.
- 건축 관련 기준, 통계 등에 대한 개선안이 기존의 정보 DB화 및 통계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이슈에 대한 기관의 대응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관 외부의 자문그룹이나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 당해 연도의 기본과제를 정하고, 이런 기본과제가 1~2년 후에 정부의 현실적 수요에 대응한다면 정책 채택 가능성도 높아져 연구기관의 국정기여도를 높이며 선제적 대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임.
- 기후변화에 대응한 부실 건축물, 방재, 에너지 효율과 공간복지 실현 등의 관련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 이외의 정부부처, 타 연구기관 등과의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부처의 수요를 파악하면서 정부현안을 제시하고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건축과 도시공간」의 발간은 국민행복을 위한 공간복지의 구현이라는 취지에 맞게 성과 관리와 국민홍보가 필요함.
- 연구결과의 제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회 등과 상시 협력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 통계 등의 정보 DB화를 수행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건축환경의 안전, 건강, 환경 등 현안 분야에 대한 적극적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 확산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정성적 측면에서 연구 전문성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가건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외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관련 건축 현안에 대하여 협력한 실적은 우수함.
- 한국국제협력단, 대한무역진흥공사, 여성건설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에서 주관한 자문회의와 세미나에 참여한 실적은 우수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산시, 익산시, 강릉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단 점〉

- 법령에 관한 어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토론회 등 국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다소 미흡함.
- 산·학·연을 포괄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동 및 융·복합 연구의 실적이나 적극적인 연구과제 발굴이 부족함.
- MOU 체결 건수는 제시되었으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미흡하며, 대부분 해외사업이 지원이나 세미나 등의 일회성 사업에 머물고 있음.
- 연구기관의 부족한 연구인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관련 학회와의 실질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시민참여가 필요한 연구사업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주택과 관련한 어젠다가 문화유산 보존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차원의 전통문화와 한옥에 치우쳐 있고, 연구원의 고유한 업무를 고려하여 국가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유형에 대한 정책 네트워크의 운영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와 토론회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함. 국토연구원 산하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국회와의 직접적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일정 부분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함.
- 자문이나 수시과제 수행에서 나아가 유관부처와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나 자문회의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건축분야의 학교, 업체, 학술단체 등과 산·학·연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유명연구소 등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 연구소의 위상강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나 시민영역과의 협력관계를 확장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토대로 유관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협동 연구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협력이 자문이나 수시과제 수행에 그치고 있어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나 자문회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수행한 연구과제의 대부분이 법률 제정과 함께 국가 정책 수립에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함.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및 설계품질관리시스템 연구’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평가를 시범 적용함으로써 효율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건축 제도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연구임.
- ‘건축행정정보 개선안 연구’는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소요기간 통계지표, 건축행정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 연구로서, 건축제도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 정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건축통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은 바람직함.
- ‘근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연구’는 시범사업 추진과 창조센터 등을 마련한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함.
- ‘특별가로구역에 대한 연구’는 가로환경 개선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에 효과적인 연구이며, 특히 건축법 개정(입법예고, 국회 설명 등)으로 제도 개선에 기여함.
- ‘노후주거지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연구’는 건축협정제도 활용 방안과 소규모 필지 단위로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제도화한 시의적절한 연구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연구’에서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기반을 제시하고 특별조치법 제정안 마련에 기여하였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 유형별 업무기준, 대가기준, 해외 진출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규칙 등 하위규정 제정에 기여하여 실효성을 높인 연구임.
- ‘건축자산에 대한 연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건축자산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관리체계를 제시한 중요한 연구임.
- ‘저층주거지의 통합적 근린재생을 위한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세미나를 통한 복지, 문화, 경제 등 다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전문가로 구성된 TF에 참여하여 정책 제안을 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선도지역 사업추진에 반영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

〈단 점〉

-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급급하여 중·장기적인 현안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해외사례와의 비교 연구,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구체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연구결과를 도출한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국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하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 직접적인 관련기관의 협의체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 효율적으로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 등 실효성 방안, 실현 가능한 하위규정내용 및 운영지침 등이 미흡함.
- 장기방치건물의 경우 시범사업 등 추진방안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방치 건축물의 처리실태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작동 가능할 수 있는 사례가 없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및 운영지침이 미흡함.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하위규정 정책 제안이 미흡함.
-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제고 연구’에서는 설계자와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정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범위에 대한 정립, 지속적인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에 대한 연구성과가 미흡함.
-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성을 고려한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사전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반영되지 못함.
- 건물단위의 정비 뿐 아니라 도시차원의 다양한 정비기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공감대 형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부족함.
- 투입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음.
-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보이지 않음.
- 관련 법률과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의 워크숍, 유관 정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과정, 규제 도입으로 인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직접적인 관련기관의 협의체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 효율적으로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 등 실효성 방안, 실현 가능한 하위규정내용 및 운영지침 등이 필요함.
- 장기방치건물의 경우 시범사업 등 추진방안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방치 건축물의 처리실태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작동 가능할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및 운영지침이 필요함.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선정, 보존,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하위규정 정책 제안이 필요함.
-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제고 연구에서는 설계자와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정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범위에 대한 정립, 지속적인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 건축자산 정보 연구에서는 국민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과 제공,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특별가로구역 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등 타 제도와의 연계방안과 지방자치단체와 실제 계획 및 설계를 담당하는 업계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 등 소통과정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성을 고려한 세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전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영하여야 함.
- 건물단위의 정비 뿐 아니라 도시차원의 다양한 정비기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함.
- 건축협정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에 대한 고려와 적용 시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향후 개선방향, 기존 제도와의 연계방안, 민간제안 가능 여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임.
- 투입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국가의 주요정책인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로서, 국가 정책인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의 정책에 부응하여 녹색건축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과 한옥건축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언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정책에 반영된 연구임.
- 건축산업을 고부가가치인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구조개편하기 위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육성 정책에 대한 지속적 연구는 적절함.
- 연구결과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 등 다양한 법률 및 하위 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적과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과 각종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

〈단 점〉

- 국내 건축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중·단기 대책 수립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제안은 미흡함.
-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 등은 다소 미흡함.
-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내용과 녹색성장 간 관련성이 낮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건축산업의 해외진출방안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을 건축설계 산업에 제한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건축산업의 해외진출방안에 대한 법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향후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과 세부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그동안의 제도적 기반 구축성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세밀한 하위규정과 시행기준 마련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함.
- 향후 녹색성장을 고려한 건축법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크게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보제공 등 모든 상세업무의 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함. 연구과제에서는 수탁연구가 가장 높고, 기본연구 순인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중에서는 기본연구가 가장 낮음.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특히 수탁연구는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로 나타남.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높았으며, ‘구비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합리성’에서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상세업무별 분석결과, 모든 상세업무의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보고회 참석자 의견 경청 및 의견 적극 반영 노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 인력·조직 보유’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의 점수가 높으나, ‘업무 수행 전 정보교류 적절성’ 항목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한편, 정보제공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의 점수가 높으나, ‘지속적인 고객관리 노력’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인력 차원에서는 연구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관에서는 전문 인력 충원 및 전문 자료를 보유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기본연구와 수탁연구가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연구과제에서는 기본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수탁연구 순인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중에서는 정보제공이 가장 낮음.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보제공 모두 해당업무 전체 평균 대비보다 점수가 높거나 비슷한 수준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는 전년 대비 높았으며,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효율성’, ‘구비성’, ‘편리성’ 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성실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유형별로도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임.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보고회 참석자 의견 경청 및 의견 적극 반영 노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 인력·조직 보유’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수행 일정’, ‘고객 요구사항 수집 및 반영 절차 구비’, ‘의견, 불만사항 제시 편리’ 등의 항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한편 정보제공의 경우 ‘온라인 정보검색기능(창) 구비’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제공된 정보를 수용하기 쉽도록 구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객이 문의 및 요청사항 제시를 편리하게 하도록 기존의 고객과의 의사소통 채널 관리를 강화하고, 고객 요구사항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 및 부서 지정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건축도시분야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정기 및 상시관리체계를 운영하여 135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함.
- 연구회의 규정에 맞게 외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예비 기본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단 점>

- 외부 수요조사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명시되지 않음.
- 과제선정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서면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과제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는 서면평가로만 처리되고 선정 권한은 내부 연구진으로만 구성된 연구조정위원회에 있어 실질적 결정은 내부 연구진에만 맡겨짐.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 수요조사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과 선정여부 및 사유가 명시될 필요가 있음.
- 기본연구과제 선정과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있음.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참석, 토론 방식으로 변경하고 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발굴·선정된 수시연구과제(9건) 모두 정부부처가 요구한 과제일 정도로 정부부처 의견반영 비율이 높음.
- 과제 수행과정에서 해당부처 담당자를 연구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과제 및 진행방향을 점검하고 있음.

〈단 점〉

- 연구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수가 부정확하여 판단하기 어려움.
- 일부 과제의 경우, 과제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 파일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
- 3개월 이상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중간 심의 단계가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연구과제가 지연될 경우, 페널티 규정을 두는 등 과제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 3개월 이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중간 심의 절차를 제도화하여 연구 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 추진체계를 잘 구성하고 있음.
- 협동연구 발굴을 위한 14건의 채널을 운영하여 노력한 점은 적절함.
- 협동연구 5개의 과제는 협동연구기관 연구진들 간에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음.
-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인력과 광범위한 협동연구를 수행함.

〈단 점〉

- 협동연구 장려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 인력 풀(Pool)의 구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 일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과제 추진 시 시너지효과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특히 협동연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는 초기여서 연구원들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협동연구 추진 시 공동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전공별 전문가 풀(Pool)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체계의 규정과 운영을 적정하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체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단계별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설정한 것은 돋보임.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평가 절차가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음.
- 연구과제의 유형에 따라 연구품질 제고에 노력함.
- 평가위원 구성과 선정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연구심의회와 최종보고서를 구분하여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
- 연고배제원칙을 준수하여 평가위원 선정에 반영함.

<단 점>

- 연구사업유형의 특성을 감안한 각 평가단계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이 차등화 되지 않음.
- 외부 평가위원의 소속기관별, 전공별 풀(Pool)의 분포 내역에 대한 기술이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사업유형의 특성을 감안한 각 평가단계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체평가위원 풀(Pool)이 보다 구체적인 필요가 있음.
- 외부평가자의 소속별, 전공별 구성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형평성 있는 평가위원 구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지식재산보호규정과 관련하여 정보보안 및 보호 규정을 적절하게 도입하여 갖추고 있음.
-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절하게 시스템을 활용하였음.

- 중기적으로(2012년~2015년)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개편 전과 개편 후의 결과를 비교하여 성과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인임.
- Auri brief를 통해 이슈페이퍼를 적절한 시기에 골고루 발간하고 배포한 점은 긍정적인임.
- 2013년도에 늦었지만 영문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 점은 일부 성과로 인정됨.

〈단 점〉

- 지식재산 보호가 정보보안규정 위주로 구축·운영되고 있음.
- 2013년에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성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수준 및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전략적 활용에 대한 계획이 미흡함.
-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과정이 미흡함.
-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지 않아 시스템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 연구성과에 대한 확산·홍보 계획이 구체성과 체계성 측면에서 미흡함.
- 성과확산을 위한 조직운영과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성과 전략성이 부재함.
- 연구결과 확산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 수단 체계 조정에 대한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홍보 확산 수단별로 제시한 실적이 전년대비 성과, 목표율대비 성과 등의 형태로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함.
- 기관의 홍보를 차별화하는 전략과 노력이 미흡함.
- 연구성과 확산 실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의 차별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적정하게 선정, 취소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활용이 미흡함.
- 성과지표 활용 등을 통한 보고서 배포방법 및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활동이 미흡함.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확산 수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성과결과의 해외확산을 위한 채널이 다양하지 않음.
- 연구결과물의 배포 방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미흡함. 보고서에는 배포대상의 차별화, 배포시스템의 고도화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적재산권 보호가 지식재산보호의 핵심이므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문서관리와 관련된 규정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할 것을 권고함.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함.
-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보완, 개선해 갈 수 있는 체계와 절차의 마련을 권고함.
-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전략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축된 시스템도 환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스템으로부터 얻는 효과를 계량 및 비계량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활동에 대한 계량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적절한 단기목표를 설정하여 목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함.
- 성과확산을 위한 조직운영과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과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할 것을 권고함.
-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는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확산 수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경영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지만 체계적이지 못함. 즉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한 전략을 미션과 비전에 연계한 후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다시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기관의 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홍보 전략이 필요함. 또한 첨단매체를 통한 홍보 방법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수요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요자 맞춤형 배포 관리 체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것을 권고함.
-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 배포의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일반인 등 비전문가에게도 연구기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해외네트워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물의 해외 확산을 위한 채널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전년도 실적 0.1편에서 실적이 크게 향상됨.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0.95편(13.34건/14명), A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잘 정리되었음.
- 조직을 개편하고, 연구인력의 지원사업투입을 최소화하는 등 제한된 인력의 활용 효율성을 높임.
- 홈페이지가 모바일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지도와 접근성을 강화함.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잘 정리되었음.
- 연구사업부문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잘 정비되었음.
-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함.

<단 점>

- 대내·외 환경 분석이 미흡함.
- 현안문제 선정에서 내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함.
- 경영여건 분석 및 기관발전 저해요소 확인을 위한 외부 의견수렴 활동이 불분명함.
- 기관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한 기술 부분이 미흡하며,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
- 고객과의 소통 채널 확대 강화를 위한 노력 중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함.
- 업무협약이나 협동연구 등 협력관계를 맺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한정되어 있음.
- 현안과제 타개를 위한 활동과 성과 내용 중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
-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았음.
- 기관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노력이 부족함.
-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책이 부족함.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 과제의 개발 및 근거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대내·외 환경 분석을 강화하기 바람.
- 현안문제 선정에서 내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바람.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기술을 보다 구체화하고, 직접 관련된 내용만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기관의 성격상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도 중요하니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책 및 평가 보상 시스템의 개선을 강구하기 바람.
- 사회적 이슈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 과제의 개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융·복합 과제의 개발에 있어서 어떤 학제적 접근방법을 사용했는지 또는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여부 및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중·장기 발전계획의 진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지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의사소통시간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노사화합을 도모하였음.
- 비정규직 간담회를 통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파견나간 직원의 수당 관련 건의사항 반영 등 직원의사의 반영을 위해 노력함.
- 사내 메신저를 구축하여 직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 국가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이 뛰어남.
- 국내 네트워크 확보 및 협력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뛰어남.
- 국가정책지원을 위한 회의 및 언론과의 소통활동을 활발히 함.
- 정부기관, 전문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기관 등 다양한 부문의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함.

〈단 점〉

- 하위 구성원으로부터의 상향식 의사소통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위원회 구성이 보직자 중심으로 되어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함.
-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채널 이용이 다소 부족함.
- 직종이나 직급별로 현안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정례적 의사소통통로가 미흡함.
- 해외 네트워크 확보 노력이 다소 부족함.

- 해외 선진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등 실제적 연구를 위한 협력관계는 부족함.
- 협력관계를 맺은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적임.
- 르완다 이외의 외국기관과의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하위 구성원으로부터의 상향식 의사소통 채널을 제도화하여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함.
-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간담회의 운영을 직종이나 직급 등 전직원이 그룹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속 집단의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구성에 직급별, 직종별 대표를 참여시켜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함.
- 해외 네트워크 및 협력관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를 공동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함.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 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규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법인카드 사용내용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음.
-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구축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외부 전문가로 심사토록 하여 연구책임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임.
- 연구윤리 규정 및 체계가 잘 정리되어 있음.
- 표절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표절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음.

〈단 점〉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다소 부족함.
- 위원회의 구성이 보직자 중심으로 되어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다소 미흡함.
- 직원의 성과관리에 있어 등급화를 하였으나 질적 평가에 대한 판단기준의 제시가 미흡하여 주관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음.
- 연구윤리 위반 행위(표절, 변조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제도적으로 다소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연구윤리의 준수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기술이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함.
-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윤리준수여부를 심사하여 집중도가 떨어질 염려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의 구성에 직종별, 직급별 대표를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 성과평가지표의 구성 시 등급을 정할 뿐 아니라 각 등급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표절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표절 검사 결과를 연구자에게 자체적으로 알기는 것보다 업적 평가와 인사고과에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윤리준수여부 외에 연구과제의 선정이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표절에 대한 최종점검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국민행복을 위한 공간정책을 선도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4대 경영목표와 10대 경영목표 실천계획 및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연계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함.
- 기관의 당면현안은 외부환경과 내부여건을 반영한 경영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도출되었으며 타개방안들도 경영목표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들임.
- 경영목표가 본 기관의 설립취지나 미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고,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음.
- 실천계획이 기관의 당면 현안과 그 타개책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잘 정리되어 있음.
- 실천과제별로 성과목표와 달성실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실천계획의 성과 달성도가 100%로 주어진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됨.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 구현 관련 정책연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의 정책연구 3건 및 현황진단 및 평가연구 2건을 시행하여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국민 행복을 위한 공간정책 어젠다 선도기능 강화’라는 경영목표를 위하여 생활 밀착형 공간정책, 낙후된 건축도시체계 연구, 대내·외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함.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로서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점과 글로벌 계획으로서 개도국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단 점〉

- 연구의 정책기여도 및 실무활용도 강화와 고객맞춤형 연구성과 보급 및 확산의 실천계획이 다소 유사함.
- 경영목표와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연계방안이 세부실천과제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으로 연계방안으로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구체성도 떨어짐.
- ‘생활밀착형 공간정책 관련 연구’와 ‘낙후지방자치단체 건축도시체계 연구’과제는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한 연구이나 현 정부의 국가정책을 반영하는 융·복합연구, 창조경제 일자리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명확하지 않음.
- ‘연구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에서 TF를 운영하고 정보시스템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실천계획으로서는 미흡함.
- ‘고객맞춤형 연구성과 확산’ 과제에서 보고서 발간 형태를 개편하고 연구소 SNS 및 영문성과물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실천계획에서 연구성과의 홍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보완이 필요함.
- 연구분야별 국내·외 핵심 외부 전문가 구축 및 활용 실천과제의 성과로서는 아직 DB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활용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함.
- 각 성과목표의 최종 달성목표를 거의 계량지표로 도출한 것은 긍정적이나 성과 목표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함.
- ‘대내·외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에서 주로 국내의 학술행사, DB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하고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상당히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와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연계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로 설정하고 특히 고객맞춤형 연구성과 보급 및 확산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운영 등의 실천계획에 대하여는 연계방안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내 갈등 및 기관의 연구업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됨.
- 융·복합,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및 연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시스템의 구체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행정 및 재무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함.
- 기관의 핵심역량 발휘를 통한 성과창출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연구인력 및 자원을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및 달성치를 가능한 한 계량 지표로 개발하되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함.
- 글로벌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에서 개도국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외에 선진국 또는 OECD 수준의 국가들과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경영목표 추진단이 5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 및 자문, 전 직원 의견수렴 및 경영목표 추진단 회의를 거쳐 3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내외·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함.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이 조기에 이루어져 실행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은 바람직함.
- 건축·도시 정보 확충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중점실천과제에서 건축자산과 한옥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기반 확보 및 정보통계를 통해 정부·지방자치단체·학계 및 연구기관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점은 바람직함.
- 중점추진과제들의 선정배경 및 이유가 잘 기술되어 있고, 중점추진과제 선정과정 및 절차가 타당성 있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선정된 중점추진과제가 전체적으로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을 띠고 있음.

〈단 점〉

- 연구의 정책기여도 및 실무활용도 강화 과제는 중점 추진과제 후보로 선정되었으나 모든 연구에 반영되는 사항이라서 중점추진과제의 선정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러한 정책기여도 및 실무활용도에 대한 고려가 실제로 중점추진과제들에 스며들어 있지 않음.
- 중점추진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 및 경영목표와의 연관성 등 평가기준이 활용되지 않음.
- 2건의 중점추진과제가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인 연구 및 창조경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연구는 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 글로벌 교류협력에서 외국과의 글로벌 연구를 위한 네트워킹에 대한 실적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생활밀착형 공간정책 관련 연구 강화는 기관이 중시하는 실천과제이므로 노후 주거지의 도시재생, 건축 도시공간의 안전성 및 보행환경 등 연구결과가 정책기여도 및 실제 활용도 향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선정배경, 전략적 중요성 및 시의성 등의 측면에서 중점추진과제로서의 당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중점추진과제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선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와 국가정책과의 부합연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관의 미래 발전방향에 맞는 보다 구체화된 중점추진과제 선정이 필요함.
- 중점추진과제 중 사람중심의 인력관리측면에서 성과 중심 평가·보상 시스템과 연구 인력의 동기 개발과 교육훈련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 선정에 있어서 건축 관련 다양한 외부 전문가 그룹 등의 의견수렴 과정의 강화가 필요함.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고유 기능에 부합하는 환경변화 이슈를 도출하였고 운영실적도 양호함.
 - 정책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팀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TF를 운영
 - 연구소의 연구윤리의식 제고와 기강확립을 고려한 엄정한 처분과 예방조치 시행 (직권면직)
 - 녹색건축센터 지정
-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노력 및 성과는 양호함.
- 인성검사 실시, 외부면접위원 활용은 적절함.
- 채용시기 조정운영 및 접수기간을 14일에서 평균 43일로 확대 운영한 노력은 우수함.

- 우수인력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장 개입요소를 최소화하여 외부위원을 관련 학회에 직접 추천받고 연고자 배제기준(지원자의 논문지도교수 등)을 적용하여 구성한 사례는 우수함.
- 외부위원을 관련학회에서 추천받아 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지원자들의 연구 발표 및 면접을 공개하여 채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
- 전형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는 제외하여 위원들의 평가 성향에 따른 점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함.
-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및 팀워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도입함.
- 지원자를 우선 고려한 채용계획 수립으로 채용 지원자가 27% 증가하고, 유관 학회와의 관계증진을 통한 우수인력 충원 기회를 확대함.
- 신규채용자재임용규칙에 의거한 재임용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연구윤리 위반자를 직권면직 하는 등 연구윤리를 강화함.

〈단 점〉

-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조직 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의 제시가 미흡함.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고유 기능과 연계한 고객요구사항 파악 노력이 부족하며, 요구사항의 구체성도 결여됨.
- 인력수급계획 사전협의 정례화 제도개선 실적(2012. 12. 31)은 2013년 실적이 아님.
-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함.
-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 노력의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없음.
- 경영목표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의 제시가 미흡하여 목표 달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음.
- 정밀한 분석 없이 제시한 증원계획은 신뢰성이 부족함.
- 기존인력의 검증강화와 신규우수인력의 충원기회 확대는 무관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의 핵심기능, 경영목표, 주요 이슈 등을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의 요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당해 연도 인력운영을 위한 계획의 작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교육제도의 직종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연구직 역량증진 해외연수를 신설하고 해당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개선함.
- 전담부서 지정 및 예산지원을 통해 유형별 교육지원의 체계를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지원과 정규직/비정규직, 연구직/비연구직 등 교육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함.
- 해외연구연수 성과보고회 개최를 통해 해당성과와 학술자료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제도는 우수함.
- 국내교육연수 2명, 해외연구연수 1명의 교육지원 실적이 있음.
- 지원교육훈련규칙에 의해 교육·연수 결과보고서 등록과 성과보고회 운영을 통한 교육성과 환류체계 운영과 신규수요사항 점검과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훈련제도 개선의 환류체계 운영 실적이 있음.
- 2013년 교육훈련 지원대상인원은 전년 대비 5배 증가하고, 총 교육훈련비 집행 실적은 전년 대비 1.5배 증가함.

<단 점>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의 내용이 부실함. 경영목표 및 전략, 인력운영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한 계획이 부재함.
- 직무분석을 통한 맞춤형 직급별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교육훈련기본계획 개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 교육훈련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부족함(교육·연수 결과의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의 구축 정도 자료 부실).

-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부족함.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
- 교육훈련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비연구직 교육훈련비 비율이 6%로 비연구직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전사적인 관점에서 팀과 개인 간 성과를 연계하여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연구직/비연구직, 보직자/비보직자 등에 따라 성과/능력, 계량/정성 등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달리하여 개인의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평가를 실시함.
- 평가방법, 절차, 이의신청 등의 내용에 연구업무수행규칙 및 근무성적평정규칙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운영함.
- 연구직의 평가점수는 근무평점 30%, 연구평점 70%로 배점기준 60% 이상 준수함.
- 평가자 배제 기준 마련, 이의제도 규정 명시, 평가위원 간 점수차 보정, 연구보고서 평가의 일관성 확보, 연구윤리 점검 결과의 평가지표를 반영함.
- 연구평가, 승진평가, 논문게재비 실비 지급, 우수논문상 등을 통하여 논문게재 인센티브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연구직의 자기개발 노력을 유도함.
-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해당분야 전문지식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한 평가자를 선정하고, 기획조정실장은 전문가를 2배수 추천하고 소장이 이를 검토하여 최종 선정함.
- 연구과제와 무관한 전문가를 선정하고, 평가자 명단의 비공개 및 무기명 평가자료 활용으로 편향적 평가를 지양하고 공정성을 제고함.
- 평가결과 통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행정실장 접수,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재평가 여부 결정의 이의제기 절차로 투명성을 제고함(연구업무수행 규칙, 근무성적평정규칙).

- 업적평가 결과를 성과연봉과 능률성과급 등 금전적 보상과 승진, 재임용, 포상, 교육, 연수, 연구과제 배제 등의 비금전적 보상으로 활용함.

〈단 점〉

- 업적평가 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자료가 부실함.
-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계량화 노력이 미흡함.
- 평가 시행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
- 승진심사시 최근 3년 간 평가결과 30~75% 반영은 부적절함.
- 승진 심사 시 평가결과를 40~80% 반영하고, 나머지 평정은 정성평가 요소로 심사하고 있음.
- 인사위원회가 심의기구로 되어 있어 승진 결정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승진 심사 시 평가결과를 100%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인사위원회를 의결 기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인력 수급계획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TF 운영, 현황조사, 협의(안)마련, 노사간 의견수렴, 직원설명회, 최종 합의 여부 등으로 체계적으로 갈등을 관리하였는 바, 주요 갈등이슈별로 갈등관리 절차를 수립하여 합의를 도출한 것은 돋보이는 장점임.
- 인사·노무 이슈 관련 교육 등 노무관리 교육이 충실함.
- 매주 보직자회의와 직원회의, 매월 1회 전 직원 Happy Hour를 통해 노사협력을 증진함.
- 7회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활발히 함.
- 수시대화로 비정규직 간담회 4회를 실시함.
- 제안제도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제안 의견을 수렴함.
- 계약직 직원의 고용상담 등 근로자 고충처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기관최초로 2013년 9월에 단체협약이 체결됨.

〈단 점〉

- 단체협약 제16조2항 전임자의 처우에서 ‘노조 전임자의 승급, 승진, 인사 고과 등 인사상의 처우는 상위 수준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비전임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절대평가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무담당자 교육의 활성화에 비해 이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공식적 제안제도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단체협약 제16조2항 전임자의 인사상의 처우는 타 기관 사례와 비교할 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음.
- 조직 내 잠재하고 있는 갈등이슈를 발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의 체계화가 필요함.
- 노동조합 조합원 이외의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통로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관장과의 소통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제안제도, 고충처리 등의 하의상달통로를 전체적으로 제구성하여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기본단체협약의 체결에 이어 본 단체협약의 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에서 정부정책 연구과제 사업비는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예산에서도 44%로서 적정한 수준임.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26%, 2014년 25%로 연구회에서 제시한 평가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19%, 2013년 19%로 연구회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10~20% 범위 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예산편성에서도 18%를 편성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음.
- 2013년 수행한 수시연구과제 9건에 대한 사업비의 집행비율은 84%로 나타나 적정한 수준이고, 단기간에 걸쳐 이월과제 없이 완료되었으며, 집행에서 전액을 외부위탁 연구비로 지급한 과제는 없음.
- 수시연구과제 사업비 집행내역에 있어 미지급비용에 대한 계상 없이 과제와 관련성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은 매분기말 전체인원의 추계금액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고, 퇴직예치금은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던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7%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258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연봉체계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에 부합됨.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3.3%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호봉테이블 등 근속기간과 연동되어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은 존재하지 않음.
- 기본연봉에 대하여 전년도 평가결과가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 연봉제를 적용·실시하고 있으며 등급별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pm 1\%$ 로 표준지침에 부합됨.
- 기본연봉의 등급별 인원 또한 최고-최저등급에 각 10%로 인원을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정규직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등급간 $\pm 33\%$ 의 차이가 나도록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있어 표준지침에 부합함.
- 성과연봉의 지급 시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등급간 $\pm 33\%$, 정규직 비 간부직의 경우 $\pm 15\%$ 차이가 나도록 지급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특정등급에 50%이상 배분하지 않아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을 업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최고-최저 등급간 2배의 차이로 지급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능률성과급의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특정등급에 50%이상 인원을 배분하지 않아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해당 단독 지적사항 없으며, 공통 지적사항(연구분야 2건, 경영분야 1건)에 대하여도 충실히 계획을 세워 이행성과를 냄.
- 공통지적사항인 퇴직금 예치적립금의 수익률 제고와 관련하여 2013년도 퇴직충당금 적립총액의 12.5%를 이자수입으로 충당함.
- 구성원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유, 내·외부 진단을 통한 개선노력, 워크숍을 통한 개선계획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발표, 지적사항의 범주화 등 연구기관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수립하여 개선을 실시함.

- 개선제언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이 우수함.
-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노사 간 의사소통화 실적 등 노무관련 사항이 개선되고 있음.
-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따라 간부직의 성과연봉 인원배분비율을 준수함.

〈단 점〉

-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실적과 개선성과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output)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장애인채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공고 우대표기, 가산점 부여)가 존재하며, 2013년 장애인 2명을 신규 채용하여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음.
- 장애인채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갖추고는 있으나, 신규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장애인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를 원규에 명시하고, 연구원 차원의 장애인 고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 목표 달성하였고, 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하였으며, 청년인턴 자체 계약직 전환 실적이 양호함(4명). 연구원 차원의 2013년 인턴직원 채용계획이 있고 그 내용이 적정하며, 청년인턴에 대한 근무평정 실시, 취업활동 지원 실적이 양호함.
- 청년인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 교재가 부실하고, 청년인턴만을 위한 고충해결 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멘토링 담당자를 지정한 내용은 보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운용실적이 없으므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 등을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고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 2013년도 2명의 국가유공자를 신규 채용하였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함(5.7%).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가 연구기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연구기관 규정에 명시해야 함.
- 국가유공자 2명을 신규채용한 실적은 우수하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장의 관심표명, 대책회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기관 방문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그 내용이 적정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부재하므로, 이를 연구소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정(위촉직임용규칙)과 계획(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이 있음.
- 복지부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이 존재함.
- 기관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충실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25

KDI국제정책대학원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교육·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교육과정 운영성과 | 1-1-1. 전문인력양성 교육성과 | <input type="checkbox"/> 학생구성의 적절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전체 교육과정 강의평가 결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중도탈락 학생 비율 | S |
| | | <input type="checkbox"/> 일반대학교와의 차별성 | A |
| | 1-1-2. 교육네트워크 구축성과 | <input type="checkbox"/> 국제학생 선발 국가의 다양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생간 네트워크 형성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해외동문 네트워크 형성 정도 | A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공공부문 역량강화 기여도 | <input type="checkbox"/> 학위과정 공공부문 역량강화 기여도 | C |
| | 1-2-2. 발전경험 공유 기여도 | <input type="checkbox"/> 정책학 및 개발정책학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교육실적 및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한국경제발전 경험 공유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 이미지 제고 기여도 | B |
| | 1-2-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우수 |
| |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우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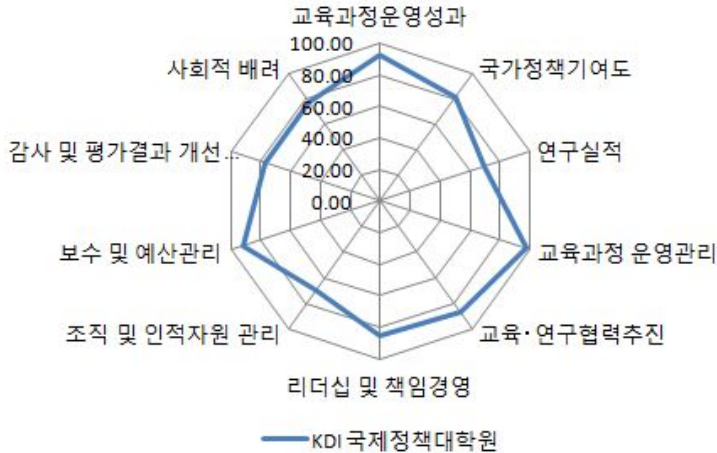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3. 연구실적 | 1-3-1. 연구실적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연구업적 정도 | C |
| 1-4. 교육과정 운영 관리 | 1-4-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운영 | A |
| | 1-4-2. 교원 책임시수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국립대학 책임시수 준수 여부 | S |
| 1-5. 교육·연구 협력 추진 | 1-5-1.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대학원 교육과정 참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교육참여 실적 | A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강의 참여제도 구축의 적정성 | B |
| | 1-5-2.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정 참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참여 실적 | A |
| | |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참여 제도의 적정성 | B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A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B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A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B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B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C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B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E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A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다양한 국적의 공공부문과 기업체의 우수한 종사자를 학생으로 유치하여 우수한 강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공공부문 역량을 강화함.
- 학위과정의 역량 강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유사 교육기관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유효할 것임.
- 개발 및 공공정책분야 국제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개발정책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연간 주당 18시간 (6과목 18학점)의 책임시수를 잘 준수하고 있으나, 교수진의 전공다양성은 다소 부족함.
- 2013년 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교육참여실적 및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참여실적이 우수함.
- 단순히 연구과제 참여만을 독려하는 것보다는 과제의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한 차별성 있는 평가제도의 모색이 필요함.
- 교원의 연구업적과 전임교수 1인당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수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위상과 명성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임.
-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67개국에서 학생들을 골고루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중도탈락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점.

[경영 분야]

- 기관장의 현안문제 타개,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 및 구성원과의 소통,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은 뛰어나나,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고, 해외 교육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우수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고, 다양한 국적의 교수인력을 충원하는 등 현안문제 타개를 위해 노력하였음. 그룹별 소통전략의 수립, 해외 동문회 활동 지원 등 대내·외적 의사소통을 강화하였음. 그러나, 기관장이 주도하는 의사소통 통로 및 상향식 의사소통 통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전 교직원에 대한 경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당면현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였으나, 산출 및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성과지표를 통해 실천과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캠퍼스 이전에 대한 능동적 대응, 세계 유수의 개발·정책대학원으로서의 발전, 대학원 우수 구성원 확보 및 효율경영,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의 유기적 확대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계된 환경변화 이슈로는 다소 미흡하며, 운영실적도 조직 신설 및 개편 실적 위주임.
- 업적평가시스템 개선 노력으로 정량지표를 4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평가 시행 전 직원근무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 실시하고 있으나, 승진, 정규직 전환, 재임용 기준에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
- 노사관계 갈등관리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사협의회 안건의 경우 의결, 협의사항이 구분되어 운영되지 않고, 노사협의회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노사협의회 외 다른 대화통로를 통한 갈등관리 역량이 다소 미흡함.
- 기본교육사업비 편성에 있어 정규학위과정 예산편성액 등을 감안하면 적정하며, 사업비 집행비율도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산정액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추계액 기준 전액을 적립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고,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였으며,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과 기본연봉·성과연봉·결산상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지급 시 재정기여도를 반영하는 문제점이 있음.
- 기본적인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추진절차를 구성하고 지적사항 개선에 노력하였으나 많은 개선과제가 완료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구성원 의견수렴, 개선결과의 경영 반영, 개선실적의 성과연계 등이 포함된 개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고용률이 수년째 평가기준을 미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관 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근무관리 전반에 있어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고충해결 프로그램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이 매우 저조(2.0%)하므로 기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행정직 직원에 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복지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비정규직 직원에 관한 규칙이 다소 미흡하므로, 비정규직 임금 및 차별해소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I 교육·연구 분야

1-1 교육과정 운영성과

1-1-1. 전문인력양성 교육성과

□ 학생구성의 적절성

<장 점>

- 국내 공공부문의 우수 인적자원을 선발하여 60%의 공공부문 학생을 충원하고 있음.
- 개도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국제학생 78%를 선발하여 지도 육성하고 있음.
- 국내 및 국제학생 공공부문 비율이 평가기준을 충족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재 국외학생과 국내학생의 비율이 55%대 45%로 국외학생의 비중이 다소 많으나, 향후 국외학생 비중을 더욱 높여나갈 것을 권고하며, 국내학생들은 다른 대학들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확실한 차별화를 위해서 국외학생쪽으로 특화한다면 성과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임.

□ 전체 교육과정 강의평가 결과

<장 점>

- 강의평가의 연봉 연동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Best Teaching Award’를 선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점.
- 강의평가가 저조한 교원에 대해 승진 및 정년임용 신청을 불허하는 등의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음.
- 학위과정 전체의 강의 평가 평균은 88.9점으로 B등급에 해당함.

〈단 점〉

- 강의평가 결과가 저조한 교원에 대한 페널티가 다소 형식적임.
- 현재까지 승진과 정년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은 교원이 없다는 점은 제도의 한계임.
- 강의평가 평균이 2년 연속(2011년 90.5점, 2012년 90.1점) 소폭 하락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강의평가 만족도 조사를 2013년도 수치만 제시하고 있어 전년대비 향상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3~4년치 만족도 조사를 추세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중도탈락 학생 비율

〈장 점〉

- 중도탈락 학생비율이 국내학생의 경우 3.09%로 S등급, 국제학생의 비율이 0.96%로 S등급을 기록함(중도탈락 학생 비율은 2.14%로 S등급에 해당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재 중도탈락률이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중도탈락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대학교와의 차별성

〈장 점〉

- 외국인 학생이 절반을 넘고, 개도국 학생들을 교육시켜 한국에 우호적인 인재를 키우고 있음.
- Korean Economic Development 등 163개 전공강좌 개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음.
- 전공별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에서 수학한 우수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고, 사회과학 네트워크(SSRN)에 등재된 학술논문 다운로드 횟수 국내 3위, 세계(미국대학 제외) 164위를 기록함.
- 전과정이 100% 영어로 강의되고 있고, 정책학 석·박사과정과 개발정책학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 국내 공공부문 학생비율은 60%이고, 국제 공공부문 학생비율은 78%로서 공공부문의 학생비율이 높음.

- 2013년에 7개국의 동문회를 신규 결성하여 총 21개 동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 총 25회 국제 동문간담회를 개최함.

〈단 점〉

- 교수진이 경제학 위주로 구성되어 전공의 다양성 면에서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교수진의 전공다양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충원 노력이 필요하고, 국내 연구원 인력을 교수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내학생의 경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객관적인 계량지표를 통해 일반대학원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차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로드맵의 구축을 권고함.

1-1-2. 교육네트워크 구축성과

□ 국제학생 선발 국가의 다양성

〈장 점〉

-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67개국에서 학생들을 골고루 선발함.
- 국제학생 선발 국가 수는 67개국으로 S등급(40개국 이상)에 해당함.
- 국제학생 선발인원 대비 선발국가의 상대적 비중은 37.6%로, S등급에 해당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국내·외 학생간 네트워크 형성 정도

〈장 점〉

- 설문조사 결과 5.0만점에 4.18점으로 A등급에 해당함.
- 정부신임관리자와 외국공무원 간 국제 정책세미나를 개최(143명 참가)하였음.
- 세미나와 특강 이외에 시찰 및 견학, 문화·체육행사,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함.

-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총 25회의 세미나 및 특강을 개최함.
-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전개됨.

〈단 점〉

- 학생 간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2년 연속 소폭 하락하고 있음 (2011년 4.41점, 2012년 4.21점).

〈개선 및 건의사항〉

- 학생 간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더욱 자세히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네트워크 형성 매개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동문 네트워크 형성 정도

〈장 점〉

- 2013년 현재 총 21개 국제동문회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에 7개국에서 신규 동문회를 추가 결성함.
- 교원의 해외 출장 등을 활용하여 2013년에 19개국에서 25번의 동문간담회를 개최함.
- 동문활약사례 공모전을 개최함.
- 매년 말 일반학위과정 및 단기과정 동문을 전수조사하여 국내·외 동문DB의 최신성을 유지함.
- 해외동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동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학원 지원 등 사후관리가 긍정적임.
- 해외동문 졸업생의 우수사례가 긍정적임.

〈단 점〉

- 현재의 네트워크에 대한 환류과정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해외 동문들의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음.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공공부문 역량강화 기여도

□ 학위과정 공공부문 역량강화 기여도

<장 점>

- 공공부문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구비되어 있음.
- 우수한 공공부문 및 기업체 학생 유치 및 강의평가를 통해 학위과정 공공부문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음.

<단 점>

- 졸업생들의 역량강화와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의 학위과정 이수 간 상관관계가 다소 미흡함.
- 민간부문 입학생의 졸업 후 활동사항은 공공부문 역량강화 기여도와는 상관관계가 약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학위과정의 역량강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강의평가에 따른 보상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있음.

1-2-2. 발전경험 공유 기여도

□ 정책학 및 개발정책학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교육실적 및 성과

<장 점>

- 외국인 학생의 국가별 다양성이 충족되고 있음.
- 공공부문 외국인 학생 중 과장급 이상 직급이 과반에 육박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함.
- 교육과정이 외국인 학생이 돌아가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지향적인 강의로 이루어져 있음.

<단 점>

- 외국인 졸업학생의 활약상이 교육의 성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힘들.
- 입학 전 어떤 직위에서 졸업 후 어떤 직위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성과의 질적 평가를 위한 지표로 강의평가보다 더 나은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학위과정의 교육수행과 승진 및 변화된 지위와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경제발전 경험 공유 성과

〈장 점〉

- 교육과정에서 한국경제발전의 경험을 공유하는 설문조사 내역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그 결과도 만족스러웠으며, 결과활용도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 KDI국제정책대학원 소속 교수진이 한국경제발전 지식공유사업(KSP)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성과를 교육에 활용하였음.
- KDI국제정책대학원 소속 교수진에 의한 다양한 국가에 대한 한국경제발전경험 연수사례가 있음.

〈단 점〉

- 설문 문항이 너무 적어 정성적인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강의평가와 구분되지 않음.
- 초빙교수제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외에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강사섭외 실적이 다소 미흡함.
- 경제발전경험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홍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강의평가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방안(연도별 변화추이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들어진 지역별 포럼의 활동은 정규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업의 질과 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음.
- KDI국제정책대학원 학생들의 KDI 인턴십 제도를 강화하고 KSP 현지 컨설턴트로의 활용/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교육 참여에 있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 위주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연구기관 연구진의 참여가 요구됨.

□ 국가 이미지 제고 기여도

〈장 점〉

-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가 잘 진행되어 교육 및 각종 활동성과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전년도와 비교하여 외국 학생의 교육 이수가 국가이미지 제고에 상당 부분 기여함.

〈단 점〉

- 설문조사 결과는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지만 이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어려움.
- 설문조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설문문항이 적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
-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한국형 ODA 전략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가 모호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과거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수학 후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에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측정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규 석사과정생과 연수(1개월 이상)생을 구분하여 국가이미지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동문관리에 대한 대학 측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해외에 있는 동문들을 관리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유관기관, 특히 각 대사관과의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하락함. 상세업무별 결과 정보제공과 교육훈련 모두 하락하였으며, 상세업무 중에서는 교육훈련이 가장 높음.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교육훈련은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냄. 정보제공은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낮음.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합리성’, ‘공정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낮았으며, ‘효과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효율성’, ‘효과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합리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는 교육훈련에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세부항목별 결과, 정보제공의 경우 ‘강의계획서, 강의노트 등 e-education 정보가 수업 준비에 도움’과 ‘도서관 강의지정 자료 수업준비에 도움’이 가장 높은 반면, ‘학사관련 정보 체계성’, ‘수업 관련 정보 충실히 제공’, ‘사용자 지원메뉴 구성의 적절성’ 등이 가장 낮게 나타남. 교육훈련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제공하는 교육 내용 난이도 적절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제공되고 있는 교육 내용의 난이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점검 및 지속적인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정보제공과 교육훈련 모두 하락하였으며, 상세업무 중에서는 정보제공이 가장 높음.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모두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효율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높았으며, ‘구비성’과 ‘공익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효율성’, ‘성실성’ 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편리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았음.
- 세부항목별 결과, 정보제공의 경우 ‘강의계획서’, ‘강의노트’ 등 e-education 정보가 수업준비에 도움 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문의 및 불편사항 접수’를 위한 메뉴 구성과 ‘문의 및 불편사항 접수 메뉴 구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교육훈련의 경우 ‘담당자와의 접촉 용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제공하는 교육 내용 난이도 적절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제공되고 있는 교육 내용의 난이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점검 및 지속적인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실적

1-3-1. 연구실적의 우수성

□ 교원의 연구업적 정도

<장 점>

- 전임교수 1인당 국제학술지 논문게재수가 0.23건으로 B등급에 해당함.

<단 점>

-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이 미흡함.
- 전임교수 1인당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수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위상과 명성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임.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기초로 연구논문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존의 연구수행과 연구논문 실적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
- 2013년도 연구과제를 검토하면 국제학술지에 시의성 있는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연구테마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연구수행과 학술논문 도출을 병행하여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1-4 교육과정 운영 관리

1-4-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운영

<장 점>

- 개발 및 공공정책분야 국제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개발정책 관련 교육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외국인 학생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공공분야 출신 비율이 70%로 공공부문의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국내·외 국제개발정책전문가 양성이라는 기관 설립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교수의 비율을 늘려감으로써 내실 있는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음.

- 외국 학생들의 논문 작성 지도를 위한 교과과정도 개선해 왔음.
- 해외 동문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DB 구축 작업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단 점〉

- 교과과정 개편의 원칙과 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교수진의 전공다양성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내우수 국제대학원과의 MOU를 통한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제(정원의 10% 내)를 운영하여 교수진의 다양성과 강좌의 다양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생모집 방법과 장학금 재원 확충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관 설립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재학생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함.

1-4-2. 교원 책임시수의 적정성

□ 국립대학 책임시수 준수 여부

〈장 점〉

- 논문지도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연간 주당 18시간 (6과목 18학점)의 책임시수를 잘 준수하고 있음(연간 4과목, 12학점, 총 192시간 강의).

〈단 점〉

- 해당 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1-5 교육·연구협력 추진

1-5-1.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대학원 교육과정 참여 정도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교육참여 실적

<장 점>

- 2013년 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들이 외부강사로 참여한 사례는 16건 중 13건으로 81%에 해당함.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연계한 활동을 통하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단 점>

-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외의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교육참여 실적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외의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참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강의 참여제도 구축의 적정성

<장 점>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교육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 기획조정실을 거쳐 공모를 하는 등 형평성 있는 강의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대학원 전임교원 중 연구기관 근무경험이 있는 교원을 확보하고 있음.

<단 점>

- 협력지침과 운영규칙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수행실적의 경우 구체성면에서 다소 미흡함.
- 공문, 홈페이지 이외의 타겟형 홍보(Hi-Brain Net 등)에 대한 활용방안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공문, 홈페이지 이외의 타겟형 홍보(Hi-Brain Net 등)에 대한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1-5-2.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정 참여 정도

□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참여 실적

<장 점>

- 2013년의 경우 대학원 교원의 연구기관 연구참여 실적이 22건으로 우수함.

<단 점>

- KDI국제정책대학원이 2013년도에 수행한 연구실적이 제시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KDI국제정책대학원이 2013년도에 참여한 연구과제 수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참여 제도의 적정성

<장 점>

- 대학원 교원의 연구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관련규정 및 지침이 규정되어 있음.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원을 한국개발연구원(KDI) 겸임연구원으로 임용 시 KDI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단 점>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원의 연구과제 참여만을 독려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단순히 연구과제 참여만을 독려하는 것보다는 과제의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II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교육·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대내·외 환경 분석이 잘 이루어졌으며,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 및 성과가 뛰어남.
- 우수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지원자 수가 증가하였음.
- 교육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뛰어남.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의 발굴 노력이 뛰어남.
- 최우수 강의교원 포상제, 1급 학술회의 참여 지원 등 성과중심의 경영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다양한 국적의 교수인력을 충원하였음.

<단 점>

- 홈페이지 개편이 현안문제로 선정된 점에서 보면,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이 의문시됨.
- 현안문제가 대학인지도 제고 및 학생 유치에 치중하고 있음.
- 교수의 교육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 과정에 대한 개발노력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제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변화와 기관이 당면한 과제를 인식하는데 초점을 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교수의 교육 능력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책 등 평가 보상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 과정의 개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관의 지역을 다각화하고 그 수를 향상시킴으로써 시각과 경험의 다양화 및 범위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실적이 잘 정리되었음.
- 각 그룹별(교원, 직원, 학생) 특성에 맞는 소통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 점이 뛰어나.
- 혁신 아이디어 제안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음.
- 국가 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이 뛰어나.
- 기관장의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노력과 성과가 돋보임.
- 한국의 발전 경험을 외국에 알리는 노력을 기울임.
- 해외 동문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홍보 및 협력가능성을 높임.

<단 점>

- 학생 및 교직원의 상향식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 비보직 교수와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함.
- 소통의 통로 중 교육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회의 이외에 기관장이 주도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모임이 많지 않음.
- 해외 선진 교육기관과의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및 협력 추진 노력이 부족함.
- 기관장의 대외활동이 많지 않고, 발전 경험 전수에 집중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학생 및 교직원의 상향식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함.
- 비보직 교수와 직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위원회에 직급별, 직종별 대표의 참여의 확대가 필요함.
- 온라인 대화 창구 외에도 기관장이 참여하고 구성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선진 교육 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를 공동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 노력의 강화가 필요함.
- 국가정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연구주제 확인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장이 연계를 맺고 활동하는 외국 및 외부 기관을 다양화하여 기관의 홍보 및 협력연구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 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음.
- 전 직원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음.
-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 연구윤리 규정이 잘 정비되었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 보고서 표절 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

〈단 점〉

-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규정에 관한 교육이 부족함.
-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함.
- 부패 방지를 위한 내·외부 신고 제도가 미비함.
- 강화된 연구윤리기준(인용의 정확화 및 정밀화 등)에 대한 지속적 교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표절 검색 프로그램의 검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가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연구윤리의 준수 노력 및 성과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함.
- 연구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규정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패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패방지 신고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와 연계하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업적평가의 세부지표가 주관화되지 않도록 등급별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내부 규정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표절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표절 검사 결과를 연구자에게 자체적으로 알기는 것보다 업적 평가와 인사고과에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교수회의 이외에도 신입연구자나 학생 뿐 아니라 기존 구성원에 대해서도 관련 매뉴얼 활용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4대 경영목표와 6대 경영목표 실천계획 및 27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하여 실천 계획과 일관성 및 상호연계성을 고려하고 기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점이 인정됨.
- 국내·외 환경변화와 기관의 위상분석을 토대로 SWOT분석을 통해 전략방향을 모색하였고, 당면현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였음.
-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대한 환경변화를 맞이하여, 새로운 공공교육과정의 개발 및 우수교원과 학생의 유치가 중요한 당면한 현안으로서 이에 부응하는 연계방안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함.
- 기관의 설립목표에 부합되면서도 각각의 당면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는 점이 두드러지며, 특히 연계방안들이 구체적이며 달성 가능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전체적으로 실천계획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세부추진과제별로 설정한 성과목표가 구체적이며 실적을 반영한 성과달성도 또한 100%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냄.
- 캠퍼스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수요를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관리학 석사과정 신설을 위한 체계적인 수요조사, 교육과정개발, 담당인력 증원의 성과를 이룬 것은 바람직함.
- ‘대학원 기능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의 강화’를 위하여 WBI, ADB,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 중심으로 교육연구 협력기관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발전경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확산하는데 긍정적임.
- ‘관리학 석사과정 신설’과제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교과과정 개설, 규정개정, 담당교수초빙 등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성이 있음.
-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ODA 중점협력국 등의 해외학생, 국내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동문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노력은 긍정적임.

〈단 점〉

-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분석을 종합하여 실천계획을 도출하는 논리적과정이 부족하고, 각 실천계획의 추진일정과 추진조직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세계 유수의 개발·정책대학원으로서의 발전’과제에서 교육 및 연구를 모두 강조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하나, 연구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실천계획이 부족하며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 제고 실천계획은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 우수학생 유치나 최고의 글로벌 교육기관이라는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가동을 위한 과제가 있으나,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시스템 계획의 경우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 세부 실천계획 중 행정업무 혁신과제로서 스마트 회의 시스템을 도입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본 기관의 행정 및 재무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실천 계획이 다소 미흡함.
- 제시하고 있는 성과목표는 대부분 실천과제의 진행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천계획에 대한 산출 및 결과를 측정하는 성과목표 측정치로는 부족함.
- 박사과정 프로그램 개편 및 기존 석·박사 과정의 충실화 및 특성화 실천과제에 대한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활성화방안 및 전략 검토, 의견반영 등은 성과 지표로서는 미흡함.
- 성과의 성격상 비계량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성과목표와 목표치에 비계량지표가 많이 제시되어 있음.
- 신설되는 공공관리학 석사 교과과정의 경우 본 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전과의 부합성에 있어 다소 미흡함.
- 공공관리학 교과과정이 행정학, 경영학, 국제관계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의 수요에 맞추어 경영학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면 기존의 MBA과정과 차별성이 없어질 수 있음.
-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의 인센티브 지원제도로는 연구교육인력의 이탈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함.
- 실천계획의 도출에서 외부 및 내부 환경 분석을 반영한 논리적 과정이 미흡하며, 구체적 실현기능과 수단에서 추진조직 및 추진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실천계획으로서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고, 경영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본 기관의 재무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 추진이 필요함.
- 성과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산출 및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지표로 개발하고 설정함으로써 실천과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이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임을 고려하여 ODA 중점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국외우수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신설되는 공공관리학 석사 교과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대내 전문가들이 교과목 제안을 하고 이해관계자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평가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경영목표와의 연계성 및 실현가능성, 현안에 대한 타개책, 실천계획의 타당성, 중요성과 시의성을 반영하여 실천과제를 평가한 것은 바람직한 방법임.
- 새로운 공공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공공관리학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우수전임 교수를 확보하였으며, 우수학생 선발국가를 67개국으로 확대한 성과는 바람직함.
- 전체적으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선정배경과 이유가 잘 정리되어 있고, 중점추진 과제들이 본 기관의 목표와 잘 연계되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범위안에서 구축되었음.

<단 점>

- 중점추진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은 다소 미흡함.
- 중점추진과제 ‘새로운 공공교육 수요에 부응한 교과과정의 신설 및 개편 기획’에서 공공관리학 석사과정의 신설 검토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경영학 석사과정과 내용면에서 차별이 뚜렷하지 않아 중점추진과제로서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이 다소 떨어짐.
- 중점추진과제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부족하며, 중점추진과제의 선정 절차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알 수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하여 5가지의 평가요소별 가중치 및 고려방법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구원장의 경영목표를 반영하는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도록 권고함.
-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목표를 좀 더 실질적인 도전적 목표치로 명확히 설정하고 실행과정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과제별로 국가정책의 부합정도 등 선정배경과 이유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효과적임.
- 교직원 인센티브 제도에서 행정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과 같은 부분도 고려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일정수준 숫자 이상의 국내·외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하여 홍보시스템 구축에 보다 치중하여야 할 것임.
- 박사과정 및 중단기과정의 활성화도 중요하나 본 기관의 주가 되는 신설 석사과정이 기존의 MBA프로그램과 확실하게 차별성이 있도록 교과과정개설, 교원초빙, 신입생 선발 등의 과정에 대하여 성과목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대학원 기능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과제는 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에 치중하고 있는데 본 기관이 교육 및 연구의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인프라의 확보가 중점추진과제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내부고객 요구에 부응하여 가족돌봄휴직제도 운영, 스마트회의 시스템 도입, 책임과목 감면기준 조정, 비전임교원의 임용절차 변경, 재임용기간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 실적을 창출함.
- 캠퍼스 이전에 대한 능동적 대응, 세계 유수의 개발·정책대학원으로의 발전, 대학원 우수 구성원 확보 및 효율경영,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의 유기적 확대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창출함.
-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예산정원 및 정년퇴직 인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인력수급 계획을 통한 장기적인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함.
- 교원은 서류심사와 채용세미나 및 면접심사로 직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으로 심사기준과 전형절차를 진행함.
- 사람인 등 주요 채용사이트와 각 대학교 경력개발센터 및 취업지원센터에 채용 공고를 게재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공문 발송 및 채용공고를 안내함.
- 신입교원 1과목 감면혜택, 교내연구비 연 600만원 지급 등 채용우대제도를 활용함.

<단 점>

- 기관 고유 기능과 연계한 환경변화에 따른 이슈 분석이 미흡하고, 운영실적도 조직 신설 및 개편 실적 위주로 제시하였으며, 타당성 및 효과 부분도 구체성이 결여됨.
- 1차 고객인 학생(특히 여건이 어려운 외국 학생) 대상 요구사항 파악이 가장 중요하나 관련 실적이 없음.
- 제시한 고객 요구사항 중 상당수는 일반적 행정처리 사항 수준임.
- 내·외부 고객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분명하지 못함.
- 경영목표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의 제시가 미흡하여 목표 달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음.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미흡함.
-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영체계가 미흡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기준과 채용절차에서 실적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심사과정에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는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
- 채용 기준 및 절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가 부실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발전방향, 제안사항 등의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운영 성과와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조교수 채용 시 최저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운영계획의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교원의 1급 학술회의 발표 시 참가비 전액지원 혜택 부여와 학술파견 및 자율연구년제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함.
- 직급/직종별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교원의 경우 학술파견 및 자율연구, 1급 학술회의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직원의 경우 조직관리 역량교육, 직무 특화교육, 직무관련 세미나, 기본실무교육 등을 운영함.
- 연간 업무일정에 따른 교육계획과 교육 이수를 통한 추진업무에 교육내용 활용 및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참조하도록 하는 등 담당 업무 추진과 직무교육 이수를 연계함.

〈단 점〉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당해 연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미흡함.
- 교육훈련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부족하고,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성과분석이 미흡하여 차년도 계획수립에 환류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과 사전 수요조사,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에 기초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함.
- 학술파견, 자율연구 등의 결과물에 대하여 논문게재를 의무화하는 등 결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가 보다 객관적일 필요가 있음.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교원은 연 1회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으로 평가하고(100% 계량평가), 직원은 연 2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차별적으로 평가함.
- 교원의 연간 최소기준 점수는 총 445점으로 이 중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은 각각 2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하며 그 비율은 90%임.
- 업적평가시스템 개선 노력으로 정량지표를 4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평가 시행 전 직원근무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경영목표를 연계하는 등 실적이 있음.
- 각 교원이 제출한 해당 연도의 실적을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규정상의 세부 기준을 근거로 건별로 심의, 과거 실적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중복된 내용으로 업적물 발간 시 기인정 점수를 공제한 점수로 실적에 반영함.
- 직원의 경우 평가자의 피평가자 면담, 평가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평가 피드백의 절차를 통해 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
- 교원의 경우 출판과 연구년도의 불일치에 따른 점수 인정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1건) 제기가 있었으며, 직원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없음(교원업적평가규정, 임용 및 승진규칙).
- 평가결과는 금전적 보상으로 연봉에 100% 반영하고, 비금전적 보상으로 승진, 재임용, 포상, 교육훈련 등의 심의 기준에 활용함.

〈단 점〉

- 비연구직 평가지표에 대한 계량화 노력이 다소 미흡함.
- 기획팀이 평가제도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문제가 있음.

- 승진, 정규직 전환, 재임용 시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
- 직원 승진 및 재임용 시 평가결과에 대한 최저기준을 설정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비연구직의 업무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 업무 중심으로 지표를 계량화하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를 승진 및 재임용 시 평가결과에 대한 최저기준 설정에 활용하고(3년 간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 등), 평가결과를 100% 승진심사에 활용하여 인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관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노사관계 갈등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노사협의회는 연 4회 실시되었음.
- 수시대화창구인 ‘고충처리상담소’와 ‘대학원장에게 바란다’ 운영실적이 각 4건, 5건으로 양호하며 매월 1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원장과의 Casual Meeting이 정례화 되어 있음.
- 노사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노사간 쟁점사항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토의된 후 이해되고 있음.
- 노사 각 1인으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실적이 4회로 양호하며 고충상담자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결됨.
- 7회의 노무관리담당자 교육, 5회의 일반관리자 교육을 실시함.

〈단 점〉

- 노사협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우수하나 노무관리 역량강화 노력은 미흡함.
- 노사협의회 의결, 협의, 보고사항이 구분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음.
- 노사협의회를 통한 갈등관리 이외에 다른 통로의 갈등관리 역량이 미흡함.
- 설문조사와 설명회는 갈등이슈의 발견방법으로 이를 통한 구체적 갈등관리과정이 미흡함.
- 노사관련 교육 내용의 구성원 공유노력이 미흡함.
- 전직원 설명회로서 1회의 노사간담회가 개최되어 운영이 미흡함.

- 노사협의회가 한국개발연구원과 동시에 개최되고 있는데 기관의 독자성을 고려하면 개별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일반직 인사관리 외 노무 관리에 대한 교육, 훈련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됨.
- 구성원의 과반을 점하는 임시직 직원이 정식 고충처리제도에 접근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고충처리제도 중간 단계에 이들을 위한 1:1 고충처리상담 전담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노사협의회 안건은 의결, 협의, 보고사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함.
-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사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교육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행정직원과 교수요원 등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한 의사소통통로의 제도화가 필요함.
- 제안제도,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종합하여 전체구성원의 하의상달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기본교육사업비 편성에 있어 2013년도 기본교육사업비는 약 9,900백만원이며, 정규 학위과정 예산편성액은 약 7,395백만원으로 75%(단기교육과정 25%)를 차지하고 있어 적절한 수준임.
- 기본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83%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액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연 1회 지급하고 있으며, 추계액 기준 100%를 적립하고 있어 적정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은 2.4%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2,342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2010년에 예산상 능률성과급과 직급보조비를 성과연봉으로 전환하고, 연봉체계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함.
-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49.4%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연구회 평가기준 (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호봉테이블 등 근속기간과 연동되어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은 존재하지 아니함.
- 기본연봉에 대하여 전년도 평가결과가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 연봉제를 적용·실시하고 있으며 등급별 차등지급률이 최고-최저 $\pm 2\%$ 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등급별 인원 또한 최고-최저등급에 각 10%로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교원의 경우 최고등급이 139%, 최저등급이 56%로 최고-최저 등급 간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함.
- 직원의 경우 최고등급이 150%, 최저등급이 79%로 최고-최저 등급 간 2배 정도 차이가 나도록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성과연봉 지급 시 교원과 직원 모두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의 인원을 배분하고 특정등급에 50% 이상 배분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기준을 준수함.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지급 시 교원의 경우 최고-최저 등급 간 4.9배, 직원의 경우 2.7배의 차이가 있어 평가기준(2배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인원배분비율 역시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 특정등급에 50%이상 배분하지 않아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능률성과급을 업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분을 수탁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재정기여도를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기준에 부합하게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이 업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공통지적사항인 학위취득 국가 편중문제 개선과 관련하여 유럽박사 2명(임용확정 후 입사 포기), 캐나다 박사 1명, 국내 박사 1명으로 교원을 채용하는 등 공통지적사항의 개선실적이 우수함.
- 담당부서별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행 후 최종실적 점검 및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고, 개선과제를 유형화하고 개선 완료된 과제 비율을 구체적 수치로 관리하며, 개선이 미완료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년도 경영목표 세부추진과제에 반영하여 적극 개선하는 등 기본적인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추진절차를 구성하고 있음.
- 신규 교과과정 결정 등에 있어 학위프로그램 수요 조사 등 이해관계자나 관련 전문가 등 대내·외적 의견수렴을 거침.
- 개선과제명으로 그룹화하여 전년도와 비교하며 개선실적을 수치화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개선실적이 상승함.
- 연구장려금 기준개선을 통해 5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함.

<단 점>

-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과제 34개 중 7개 과제가 완료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개선과제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평가결과 및 개선계획에 대한 공유와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함.
- 구성원 연구결과에 대한 정부정책의 활용정도, 기여도, 지원성과 등을 평가하는 내부 시스템 가동과 관련하여 시간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개선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하였음.
-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실적이 모호하고 추상적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지적사항의 존부와 관계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음.
- 미완료나 추진중 과제가 완료되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평가결과 개선체계의 구성에 있어 개선결과가 다음연도의 경영에 반영되면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개선환류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채용공고 시 우대조치명시, 서류전형 시 가점부여(3점) 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 관련기관 등에 지원요청 등을 하고는 있으나, 장애인 채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 전년도에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매우 미흡함에도 해당 기간 중에 신규채용 실적이 없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실적이 매우 미흡함(0.8%)하고 장애인고용률이 수년 째 미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관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고용률 달성을 위한 기관장과 기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대책회의, 계획수립, 관련기관방문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중·장기인력운영계획의 사회형평 채용 항목을 구체화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채용 목표를 달성하였고, 청년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하였으며, 계약직으로 전환한 실적(1명)이 있음.
- 청년인턴 운용의 전 항목에 있어 매우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 오리엔테이션 교재, 사전교육,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근무수행능력·태도의 정기적 평가 등이 잘 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활동 지원 등이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고충해결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 내용이 부실하고, 고충해결 처리 담당관을 지정한 내역이 없으므로, 청년인턴 고충해결 프로그램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설문조사,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 등을 잘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부여 근거가 연구원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2.0%로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실적이 없는 등 기관 차원의 조치와 노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기본계획수립 및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중·장기인력운영계획, 임시직원규칙,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계획에서 차별해소를 위한 근거(임시직원규칙)를 마련하였음.
- 연구원 차원의 비정규직 운영계획(비연구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이 존재함.
- 행정직 직원에 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복지에서 차별이 없음.
- 비정규직 직원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그 규정이 상세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 기관의 규정과 계획에서 비정규직 임금 및 차별해소를 위한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6

육아정책연구소

평가등급 현황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 등급 |
|-------|----|
| 연구 분야 | B |
| 경영 분야 | B |
| 총 점 | B |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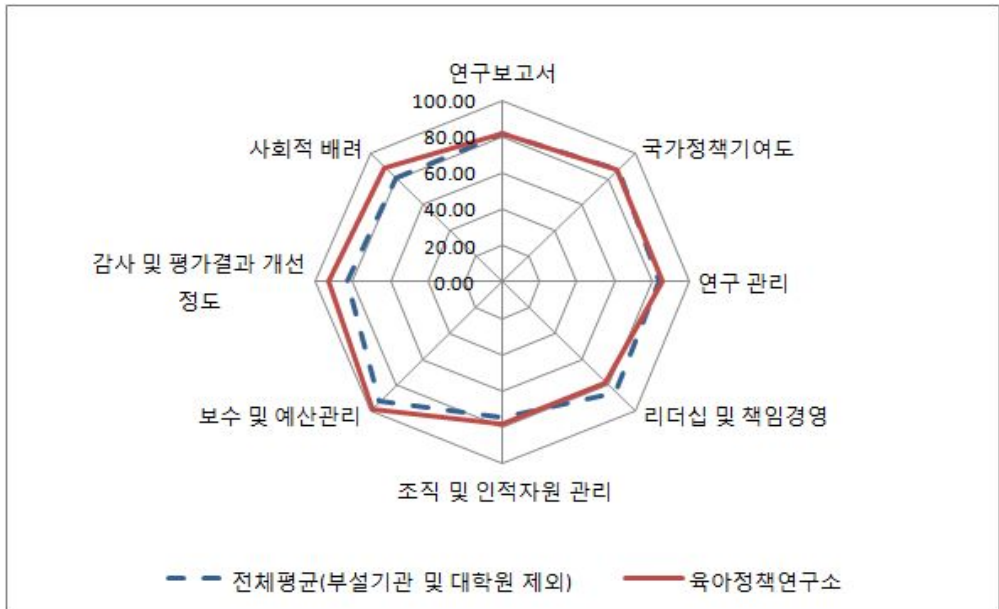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1-1. 연구보고서 |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B |
| |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 C |
| 1-2. 국가정책 기여도 |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 B |
| | |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B |
| |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 수립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B |
| |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 |
| 1-3. 연구 관리 |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 - |
| |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
| |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우수 |
| | | <input type="checkbox"/>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A |
| |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input type="checkbox"/>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 B |
| |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 B |
| |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B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S |

② 경영 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등급 |
|-------------------------------|---|---|----|
|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2-1-1. 리더십 |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 A |
| | |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 A |
| | |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B |
|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B |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C |
| | |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 B |
| | |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 C |
| | |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A |
| | 2-2-2. 노사관계 선진화 |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 B |
| 2-3. 보수 및 예산관리 |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S |
| |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 S |
| | |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 B |
|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A |
| 2-5. 사회적 배려 |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S |
| | |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A |
| | |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S |
| |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B |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육아물가지수를 새롭게 개발하는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지나치게 도식화되거나 단순화된 정책 이행 방안의 경우 활용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새정부의 중점 정책 비중에 부합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 수립에 크게 기여함.
- 인력을 보충하고 연구의 내실화를 강화하여 후속 연구가 확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과제 발굴을 위해 원내 내부제안은 물론 관련 부처 및 기관, 학회, 온라인과제 제안, KICCE i-POL 모니터링반 운영을 통해 외부로부터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나, 다년도 수행이 필요한 중·장기 기본연구과제 발굴 노력이 미흡함.
- 협동연구의 추진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고, 규정화 하고 있으며, 산·학·연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맞춤형 협동연구를 추진하고자 노력함.
- 협동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외부에서의 연구과제 발굴노력 및 구체적인 선정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이익 배제가 아닌 협동연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 평가위원 풀(Pool)을 전공별 분야별 평가위원의 확대 등이 필요하고, 평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에 있어서 타 기관의 보고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2013년도 정책홍보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수요자 특성별로 중점 사업을 채택한 점은 긍정적이나, 연구 성과 배포 및 활용에 대한 피드백이 다소 형식적 수준임.

[경영 분야]

- 기관장의 구성원과의 소통 노력과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노력은 뛰어나나, 전체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고, 현안 문제 선정의 타당성 확보 및 대내·외 의견 수렴이 부족하며, 기관의 연구 역량 강화 노력도 부족하고, 표절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 미흡함.
- 중·장기 인력계획을 통한 충원, 조직개편을 통한 연구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연구 역량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정부부처 사이에 균형된 시각으로 정책조정 노력을 기울였으며, 윤리경영의 위한 제도를 잘 정비하였음. 그러나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의사소통통로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제도, 표절검사의 인사고과 연계 등 윤리확립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당면현안에 대한 타개책을 반영하고 있으나 경영목표와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연계방안이 실질적인 연계방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직원평정시스템의 도입 및 MIS시스템의 강화로 기관 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조직 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함.
- 연구직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실적 항목의 배점을 70%의 비중으로 구성하고, 행정직은 부서별 핵심성과지표를 새로 선정하여 측정함으로써 전체 점수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를 100% 승진심사에 활용하여 인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관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노사화합을 위한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내부 의견 수렴이 활발하며 월 단위의 정례화된 노사협력증진프로그램이 있으나 노사협의회 개최의 정례화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지 않는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적립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적정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였으며,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과 기본연봉·성과연봉·결산상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지급 시 재정기여도를 반영하는 문제점이 있음.

- 기본적인 국회지적사항 개선절차, 기본적인 연구기관 평가개선절차를 가지고 지적사항 개선을 완료하였으나 평가결과 자체개선시스템의 구축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지적사항 개선실적이 개선성과 및 경영과 연계되는 개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 고용률 3.2%를 달성하여 평가기준(2.5%)을 준수함.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청년인턴제 운용 실적이 양호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이 6.0%에 달하여 양호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연구원 차원의 비정규직 운영계획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은 다소 미흡하고, 비연구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바, 연구직과 비연구직을 불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규직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역량있는 미래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누리과정의 운영 현황을 매우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하고 심도있게 분석한 점이 우수함.
- 육아물가지수라는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육아 물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및 추세 교육에 유용한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유아 관찰 척도를 활용하여 유아의 발달 및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결과를 시기에 따라 영역별 효과성을 비교 분석한 방법이 우수함.
- 영유아 교사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선행 연구에 비해 차별성이 있으며, 복지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대 영역별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한 후 단계별 정책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단 점>

- 전반적으로 정책 제언이 다소 포괄적인 편이어서 세부 추진 전략(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미진한 측면이 있음.
- 설문조사나 심층 면접 조사에서 대상의 표집 방법이나 내용 분석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지 않거나 결과 분석이 자료 수집 과정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지역사회 공동 육아 정책 연구의 경우처럼, 조사 대상을 현재 관련자에 국한함으로써, 잠재한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정책 연구와 시행의 보편성과 역동성을 제한할 수 있음.
- 일부 연구에서 지나치게 도식적인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제안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결론을 제시한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이행의 재정이나 전달 체계의 실천적 방안에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육아 물가 조사를 서울 지역에 한정해서 실시했는데 서울 물가가 다른 도시 특히 중소 도시나 농촌 지역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보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함.
- 일부 보고서에서 정책 제언의 근거가 불분명하여 연구 결과와 상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질적 관리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유형별 또는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자원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육아정책연구소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 기여도와 영향력의 확대가 두드러지는 기관이며 특히 영유아 보육문제는 새 정부 공약 중 하나로서 이슈가 되는 문제이므로,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실 설치 등 조직을 강화하고 TF 구성 운영을 통해 과제 수행 및 지원에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원 실적도 많음.
-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와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 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 연구원의 인력규모에 비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등 다양한 부처의 과제에 참여 및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정도에 따라 지원의 비중을 달리하여 지원의 질적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사주제를 반복적으로 연구하였으나 이는 같은 주제를 세분화하고 그 효과의 추이를 해마다 분석해달라고 하는 담당부처의 연구 요청에 대응한 것임.

〈단 점〉

- 급작스럽게 늘어난 국정과제에 비하여 연구원의 인력이 부족하여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 기관 내부에서 국정과제 참여 및 지원실적을 지속적으로 follow-up 하고 검증 및 보완하는 시스템이 미흡함(교육부의 유치원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의 효과 등).
- 누리과정에 관련한 정책대안의 모니터링과 질 관리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규 및 비정규 인력의 충원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국정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 육아정책연구소 특성에 맞는 육아, 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와 중·단기 과제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시행된 과제의 적절한 기여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행된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효과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유보통합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형 유아교육·보육 발전 로드맵’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정책수립에 기여하였음.
- 수시과제의 연구결과들이 즉시 정책화됨으로써 국가정책 수립 및 지원에 기여함.
- 유보통합,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함.
-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요청한 긴급/수시과제와 관련하여 총 24개의 연구과제와 사업을 단기간 내에 수행하여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 긴급 및 수시요청에 대한 예산을 연구소가 미리 확보함으로써 수시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국정 운영과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할 필요에 근거한 것임.

〈단 점〉

-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연구소기관이 주어진 연구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기관으로서의 선제적 대응 능력이 미흡함.
-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긴급요청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전체 사회적 맥락에서 거시적으로 육아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연구는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육아에 관련한 국정과제에서는 적절한 자원배분을 통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선제적 대응을 하는 등 선도적 지위를 점하고 관련 정부부처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제안함.
- 연구기관으로서 현안과제로 선택될 연구과제를 미리 발굴하고 개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긴급대응의 결과물이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축적된 연구실적과 자원을 바탕으로 수시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야 함.
- 대응의 노력에서 그치지 말고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조달과 정책 수립 및 운영, 관리 로드맵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 집필에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사업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일반연구과제 수행 시 유아교육·보육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의 정책연구 협의회를 통한 원활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다양한 국내·외 기관(국제기구, 연구기관, 대학 등)과 정책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를 수행함.
-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기관의 규모에 비해 국회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어 관련 부처와 협력이 용이하며 이로 인해 국정과제 수행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
-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국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나, 실제 실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음.

〈단 점〉

- ‘한국형 유아교육·보육 발전 로드맵 연구’의 경우 한국유아보육학회·한국보육학회와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양 기관의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기관과의 정책연구 네트워크 운영 실적이 미흡함.
- 실현되지 않은 계획단계의 네트워크가 실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대부분의 사업이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활용 가능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하는 관련 정책대상자들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하여 원활하게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특정 기관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나 양적인 팽창 보다 연구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함.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국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책 실현을 위해 연관성이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정책화 과정이 이루어짐.
- 우리나라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문제가 가정을 넘어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는 데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기여함.
- 연구과제의 결과물이 법령개정 및 근거법령 제정, 관련 안전에 활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실행된 과제들의 정책 기여도가 높음.

〈단 점〉

- 교원, 학부모 등과 같은 정책의 수혜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요구파악,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정책화 과정이 미흡함.
- 절대적인 필요성이 크지 않은 연구들이 정책화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향이 보이며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있음.
- 연구종료와 정책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일시가 명시되지 않아 과제 종료 후 정책화를 위한 노력의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대상을 이용한 정책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업,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포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많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정책실현에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연구과제의 필요성, 중요도,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비교분석하여 연구과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음.
-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한 대안이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본 연구와 관련된 실적만을 제시하여야 함.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고 논의한 것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함.

-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에 반영되고 논문도 게재되어 지식 및 정책의 실현 정도가 높음.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유보에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방향을 제시함.
-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문가 협의회가 2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선도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요구 및 의견이 반영되었음.
- 유보통합을 위한 단계별 방안과 연계된 적절한 후속과제 연구계획이 수립됨.

〈단 점〉

- 학술대회가 주로 한국보육학회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어 유아교육 관련 학회와의 공조 노력이 부족함.
- 많은 실적들이 연구가 끝나기 전에 정책화됨으로써 연구의 결과가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연구에서 사용된 간단한 용어 등이 피상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며, 사전 연구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면 본 연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사전 연구 결과에 해당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유보통합의 취지에 맞도록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학회와의 적극적인 공조 노력이 필요함.
- 정책 실현의 수준은 높으나 전적으로 본 기관의 연구 기여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선도과제의 취지를 살려서 사전에 충분히 연구된 결과물이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램.
- 육아정책연구소의 인력보충 및 내실화를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후속 및 관련연구들이 전국적인 풀(Pool)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처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실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교육과 보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속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와 동일함. 상세업무별 분석결과, 기본 연구는 상승한 반면 수탁연구는 크게 하락함. 연구과제에서는 정보제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본연구 순인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중에서는 수탁연구가 가장 낮음.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조정실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기본연구, 정보제공 등은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수탁연구와 공동연구는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특히 공동연구에서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준비성’, ‘성실성’, ‘합리성’, ‘공익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낮았으며, 서비스 과정품질의 준비성과 성실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전문성, 효과성, 환경품질 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환경품질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별로는 수탁연구와 공동연구의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대부분 낮음. 특히, 공동연구의 준비성과 편리성이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전문 인력·조직 보유’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 관련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체계 구비’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진행 시기 및 신청기간 적절’, ‘기관(공동/협동연구자) 의견, 불만사항 제시 편리’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정보제공의 경우 ‘제공 정보를 수용하기 쉽도록 구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진행 시기 및 신청기간의 적절성 확보, 고객 의견을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채널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기본연구가 전년 대비 점수가 크게 상승한 반면, 정보제공은 소폭 하락함. 연구과제에서는 수탁연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보제공 순인 것으로 나타남. 상세업무 중에서는 공동연구가 가장 낮음.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공동연구를 제외하고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수탁연구에서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반면, 공동연구는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환경품질의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높았으며, ‘전문성’과 ‘공익성’의 상승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특히 ‘합리성’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공동연구를 제외한 업무 유형에서 연구과제에서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공동연구의 ‘준비성’, ‘대응성’, ‘편리성’ 등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연구목적 이해’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 인력·조직 보유’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수탁연구의 경우 ‘의견, 불만사항 제시 편리’의 항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진행 시기 및 신청기간 적절’이 낮은 만족도를 보임. 한편, 정보제공의 경우 ‘정보제공서비스를 통한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확산)노력’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를 진행하는 시기 및 과제 신청기간이 적절한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과제 발굴을 위해 원내 내부제안은 물론 관련 부처 및 기관, 학회, 온라인과제 제안, KICCE i-POL 모니터링반 운영을 통해 외부로부터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 육아 정책관련 다양한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연구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있으며, i-POL 등 인터넷 기반 상설 수요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총 75건의 발굴 과제 중 11건을 기본연구과제로 선정했으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내용이라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부를 반영한 점이 돋보임.

- 과제 심의를 위한 다차원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있어 세밀한 심의가 가능함.

〈단 점〉

- 발굴대상 범위가 넓은데 비해 발굴과제의 선정률은 낮아 발굴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과제선정과정에서 외부 인사는 과제 적정성에 대한 자문역할만 하고 과제선정회의에는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
- 심의과정에서 서면 검토와 최종 검토 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구과제 발굴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과제선정과정에서 외부인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 원외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과제선정회의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 과제 선정시 정부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이 돋보임.
- 선정위원회에 원내·외의 전문가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음.
- 수시연구결과를 최종보고서 발간 즉시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수시과제 수행과정에서 중간보고(외부 전문가 1인) 및 최종보고(외부 전문가 2인)의 검토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행함으로써 진도 관리 및 보고서 질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과제를 모두 수시연구과제로 선정·추진함으로써 과제 발굴의 다양성과 수시성이 미흡함.
-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거치지 않아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구과제와 수시연구과제의 발굴 및 선정과정을 분리하여 각각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독자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진도관리 및 보고서 질 관리 차원에서 보고서 검토보다는 연구심의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시과제라고 하더라도 연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중간평가를 받아야 보다 높은 질의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의 추진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고, 규정화하고 있음.
- 산·학·연 전문가의 풀(Pool)을 구성하여 맞춤형 협동연구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협동연구 과제를 다양한 국가와 전문가들로 네트워킹하여 적절하게 수행함.
- 협동연구의 필요성과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음.

〈단 점〉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외부에서의 연구과제 발굴노력 및 선정에 있어서 다소 구체적이지 못함.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음.
-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적 구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
- 협동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외부에서의 연구과제 발굴노력 및 구체적인 선정과정이 미흡함.
-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의 경우 협동연구성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하여 피상적임.
- 협동연구에서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와의 참여비율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인적 구성 풀(Pool)이 전공별·소속별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외부에서의 연구과제 발굴노력 및 구체적인 선정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불이익 배제가 아닌 협동연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협동연구에서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와의 역할분담에 따른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 체계와 운영에 관련한 규정을 잘 정비하고 있음.
- 평가단계별 평가표의 평가지표별 배점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있음.
-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 외부평가자 풀(Pool)을 확대 구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함.

〈단 점〉

-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함.
- 평가자 1인당 평가제한 건수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제시가 필요함.
- 평가자의 과도한 평가업무 발생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함.
- 유아교육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기보다는 전공영역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표절검사에 대한 점검시스템 확인절차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보고서 기술에 있어서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필요함.
- 수시과제의 경우 어떠한 평가체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자 1인당 평가제한건수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제시가 필요함.
- 평가자의 다수과제 평가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전문가 풀(Pool)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데이터운영위원회와 출판·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 관리세칙’과 ‘출판편집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지식재산 관리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위원회별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세칙을 갖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 연구성과의 효율적 홍보·확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홍보를 위한 연간 달성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QR코드, Facebook, Twitter, 블로그 등 첨단정보화 수단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2013년도 정책홍보 계획을 수립할 때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추진과제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인.
- 10대 추진전략 중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요자 특성별로 중점 사업을 채택한 점은 체계적임.
- 2012년도 실적을 토대로 2013년도 목표를 설정한 점과 목표대비 달성률을 기록한 점은 긍정적인.
- 연구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한 점은 긍정적인.
- 연구결과 확산을 위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작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의 해외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인.
- 배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이메일 배포를 활용한 점은 긍정적인.
- 우편물의 반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인.

〈단 점〉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수립, 전략적 활용, 성과 분석과 환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지식재산 보호 및 보안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구축한 시스템을 통한 성과 실적은 다소 일반적인 수준임.

- 홍보·확산 계획에 중·장기목표에 바탕을 둔 단기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홍보·확산 실적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계량실적을 통해 성과를 보여주는 점은 긍정적이나 피드백을 통해 개선된 바를 보여주는 점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연구성과 확산 실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당기의 차별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제시가 미흡함.
- 연구실적 확산의 성과가 발간·배포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없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가능성이 큼.
- 연구성과 배포 및 활용에 대한 피드백이 다소 형식적 수준임.
- 이슈페이퍼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실시하여 활용도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전략적 활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성과지표의 활용을 권고함.
-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추가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분석도 아울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당해 연도 연구성과 확산·홍보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둔 성과지표와 단기 목표치의 제시가 필요함.
-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 효과성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확산 수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성과 홍보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보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한 효율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접근보다 가장 효율성이 높은 부분에 자원을 집중하여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홍보 TF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두기보다 연구원 내에서 홍보를 십시일반 하는 등의 전략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성과물을 배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슈페이퍼를 실질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때 시의적절하게 생산하는 등 창조적인 연구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75편(27.94건/16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추진전략이 잘 정리되었음.
- 간담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함.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잘 정리되었음.
-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충원하는 점이 돋보임.
- 조직개편을 통하여 연구인력의 전문성 및 대외 대응력을 높이려 함.
- 세종시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양육친화도시 확산의 시작점으로 삼음.

〈단 점〉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부족함.
- 급변하는 육아 환경은 현안문제가 아니라 기관을 둘러싼 외부 환경임.
- 낮은 기관 인지도가 기관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인지 의문임.
-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관장의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연구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책 등이 부족함.
- 연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인력충원을 위해 중·장기인력계획을 세웠으나 채용은 상시채용시스템 운영과 같은 단기적이고 결원인력의 신속한 보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안문제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책 등 평가보상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 과정의 개발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그리고, 융·복합 과제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 중·장기인력계획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수요공급을 분석한 충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융·복합 연구과제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의사소통 제고를 위한 내부 건의함 제도와 Freshboard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음.
- 전 직원과 월1회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의사소통을 활성화함.
- 국가 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이 뛰어나.
-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및 협력 추진 노력과 성과가 뛰어나.
- 국제 저널을 발간하여 연구원의 위상을 높인 점이 돋보임.
-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균형된 시각으로 부처 간 정책의 조정 노력을 함.

〈단 점〉

-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채널이 부족함.
-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함.
- 직급별, 팀별 간담회의 운영이 제한적임.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확보 노력이 다소 부족함.
- 기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활동에 대한 자료가 미흡함.
- 홍보를 위한 대외활동에 있어서 주요 언론과의 연계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에 직종별, 직급별 대표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을 제도화하여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이 그룹별로 관련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실질적 연구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확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법인화를 위하여 정부 각 기관뿐 아니라 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에 대한 노출 빈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 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규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음.
-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카드사용의 투명화, 평정시스템의 신속화 등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활용함.
- 자체 감사 시 외부인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강화함.
-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 잘 정비되었으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이 잘 이루어졌음.
- 연구보고서 표절검색시스템(Copy Killer)을 도입하여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하였으며, 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로 연구윤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외부 평가자에게도 연구윤리 평가기준 자료집을 배포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를 높임.

〈단 점〉

- 자기 부패진단, 청렴도점검시스템의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됨.
- 청탁등록 및 클린신고센터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함.
- 평정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계량화하였으나 주관적 평정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한 등급별 판단기준의 제시가 미흡함.
- 표절점검시스템의 결과와 사후 조치가 제도적으로 연계되지 않음.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부족함.
- 외부 공동연구진에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윤리위반 시의 조치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실질적 효과가 있는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부패방지를 위한 신고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와 연계하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평가 및 평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의 중요성 및 규정에 대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표절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도록 표절 검사 결과를 연구자에게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업적 평가와 인사고과에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외부 공동연구진에 대해서도 연구윤리 위반 시의 조치사항을 명문화하여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4대 경영목표와 12대 경영목표 실천계획 및 연계방안을 설정하고, 경영목표와 당면현안 및 실천계획이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보직자들과 협의, 운영협의회 자문, 외부교수 자문, 연구심의회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점검한 점은 바람직함.
- 당면현안을 상세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영목표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당면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수단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실천계획과 경영목표와의 체계적 연계가 잘 이루어졌고, 특히 설립 기간이 짧고 연구인력이 적은 기관으로서 적절한 목표가 수립되었음.
- 전반적으로 각 목표별 실천계획들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세부실천과제별로 복수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실적을 반영한 성과달성도는 모두 100%를 상회하여 전반적으로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양호하다고 판단됨.
- 기관의 규모에 비해서 연구실적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실천과제의 실행 측면의 성과와 노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미래사회 대비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제시 연구’를 위하여 미래육아정책개발센터를 신설하여 육아관련 선도적 과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 육아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노력은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해 공통된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라고 판단됨.

- ‘육아정책연구’의 등재후보지 유지와 Rutgers대학 NIEER과 교류협력으로 영문저널을 공동 발간한 것은 본 기관의 연구역량과 대내·외 공신력 확보면에서 긍정적인 성과임.
- 기관의 법적 근거 확보는 위상 확보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입법 및 행정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관련되는 환경적 요인에 의존하므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성과목표임.

〈단 점〉

- ‘국가미래를 위한 창조적 육아정책 선도’라는 경영목표에서 미래지향적이거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협력을 위한 연구계획들은 포함되어 있으나 융·복합연구나 창조경제 일자리창출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미흡함.
- 세부 실천계획에서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 성과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력과 예산규모 확대, 성과평가 측정, 모니터링 강화 등 실천과제의 성과를 측정하기보다 자원의 투입 및 과제의 진행과 관련된 것이 있어 성과지표로서 미흡함.
- 누리과정 사업의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강화 실천계획은 기관의 대표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발전포럼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성과가 높지 않음.
- 성과목표가 지나치게 비계량지표로 기술되어 있고, 성과목표치가 불분명하여 성과에 대한 달성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사기진작을 위하여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전문 인력의 활용 및 장애인 채용 등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창조경제와 관련된 융·복합연구나 일자리창출 연구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및 연계방안들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실천 계획 중에 구체성이 부족한 홍보의 확산을 보완하고, 각 실천 계획의 추진일정과 추진 조직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누리과정 사업 등 기관의 중점 사업에 대하여는 좀 더 도전적인 목표치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과제의 실행과정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성과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및 달성치가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고, 계량적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성과목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비계량 지표인 경우 목표달성 상태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직 인력의 충원에서 일정 수준이상 남성의 채용이 필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화, 장애인 고용계획 등이 필요함.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장 점〉

-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의 부합성과 연계성, 실천과제의 중요성 및 시의성 등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확대간부회의,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간부회의 및 경영 전략회의에서 3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함으로써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과제가 선정되었음.
- 기관의 가장 중요한 중점추진과제로서 ‘유아교육·보육 통합·협력을 위한 현안대응 전략 연구 강화’ 과제는 한국형 통합모델 작성과 협력모델 시범사업을 확대한 추진 실적으로서 양호함.
- 대외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과제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발표 참여, 협동연구 및 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추진실적이 있어 양호함.
- 대외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조직의 전문성 강화 등의 계획이 본 기관의 현안 및 당면과제를 잘 반영하는 중점추진과제라고 판단되며, 중점추진과제들의 선정배정 및 이유가 잘 기술되어 있음.
- 전체적으로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협력을 위한 전략의 중점추진과제는 기관의 역할에 부합되는 타당한 과제라고 판단됨.

〈단 점〉

- 신생기관인 만큼 해외 유관 연구기관을 벤치마크하고 협력한 실적은 미흡함.
-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정책에 대한 정책수용성이 높은 연구는 다소 미흡함.
- 국가 정책, 기관의 당면현안의 관점에서 중점추진과제의 전략적 중요성과 시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가 부족함.
- 중점추진과제 선정과정에 있어서 내부 의견만으로 추진되었고, AHP와 같은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지 않아 선정의 타당성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과제는 주로 국내에서의 네트워크에 집중되어 있는데, 선진국과의 국제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연구를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조직의 전문성 강화’ 과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능력 성과급제도, 누적식 연봉제 등과 같은 성과중심 평가와 보상시스템 구축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고유 기능과 연계된 환경변화 이슈 도출은 대체로 적절함.
 - 새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요구, 저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와 육아에 관련된 제도 강화, 정부차원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 확보의 필요성 제기
- 육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 및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스템 통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연구윤리 및 인간 존엄에 대한 외부적 요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을 신설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를 동일 수준으로 개선하고, 직원평정시스템의 도입 및 MIS시스템의 강화로 기관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함.
- 평정업무의 효율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카드 실사용자 등록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카드 관련 규정을 강화함.
- 다양한 상하 간 의사소통 제도 마련을 위하여 이메일 정보대상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표절검사 서비스 도입으로 연구윤리를 강화함.
- 노무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무관리 담당자 훈련을 강화하고, 노무법인과 정기 자문계약을 체결함.
- 우수 신규직원 채용을 위하여 다양한 전공자 채용, 신규채용 관련 제도 개선, 외부 전문가 면접위원 초빙,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인성역량검사전형 등을 실시함.
- 우수 내부 직원의 유지를 위하여 승진직원 처우개선 제도 개선, 직원평정지침 개선, 계약직 복리후생 개선, 직원교육훈련 강화 등의 노력이 있음.

〈단 점〉

- 환경분석의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변화 요인의 도출과정 및 도출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조직 개편 실적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함.
- 고유 기능과 연계된 외부고객 요구사항 파악 노력이 부족함(제시한 사항은 일반적 행정처리 사항 수준).
- 경영목표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의 제시가 미흡하여 목표 달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음.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미흡함.
- 중·장기 및 연도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 정밀한 분석이 없는 증원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함.
- 채용 기준 및 절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가 부실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기준과 채용절차에서 실적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심사과정에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는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의 핵심기능, 경영목표, 주요 이슈 등을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의 요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상시 의견수렴(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지수) 개발이 필요함.
-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목표 달성의 점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경영목표와 연계된 중·장기 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소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급/분야별, 교육영역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실적은 양호함.
- 그룹 멘토링을 통한 케이스 스터디, 기관 내 전문가 활용, 기관 내 전파교육, 수요워크숍을 통한 연구방법론 등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에 해당.
- 기관 규모에 비해 역량강화를 위한 실적은 우수함(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소규모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해 환류체계를 강화한 실적은 우수함.
- AMOS 위탁교육 실시 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SPSS 15대(8,250천원) 추가 임대
- 연구년제 운영, 학위과정 휴직제도, 학위과정 이수 지원제도 등 다양한 직원경력개발 및 직원 역량강화제도를 운영함.
- 교육훈련 예비조사,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 실시, 교육훈련결과 모니터링 등의 직원 교육훈련 환류체계를 구성함.
- MIS 설문조사 틀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만족도와 교육훈련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 2013년 총 교육훈련 집행액은 12,500천원으로 전년도 2,764천원보다 증가하였고, 1인당 교육훈련비도 417천원으로 전년도 106천원보다 증가하였음.

<단 점>

- 중·장기 및 연도 교육훈련계획 부재.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의 확보가 다소 미흡함.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미흡함.
- 교육훈련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연구년제의 결과물에 대한 논문 게재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교육훈련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연구직과 연구지원직은 연구실적, 원내활동, 원외활동, 직무수행의 평가요소로 평가받고, 행정직은 직무수행, 정량평가, 부서별 핵심성과지표로 평가됨.
- 연구직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실적 항목의 배점을 70%의 비중으로 구성하고, 행정직은 계량지표뿐만 아니라 부서별 핵심성과지표를 새로 선정하여 측정함으로써 전체 점수비율을 40%까지 확대함.
-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 구성원 의견수렴 및 각 직급 대표가 참석하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평정지침을 개선함.
- 다면평가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평정자가 예측이 가능한 계량지표의 도입을 확대하고, 전산시스템인 직원평정시스템의 도입으로 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함.
- 평정결과를 직원평정시스템으로 개인별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두어 평가에 대한 개인의 의견수렴 창구를 제도화함.
- 평가결과의 금전적 보상으로 연봉 및 성과급을 정부기준에 맞추어 적용하고, 비금전적 보상으로 승진, 재임용, 포상, 교육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함.

〈단 점〉

- 행정직의 계량화 노력은 다소 미흡함(정량지표로 제시한 제안제도, 교육이수실적, 정보 보안은 비핵심업무임).
- 평가 시행상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는 없음.
- 승진심사 시 최근 2년 간 근무평정결과를 60%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관기여도 (해당 분야 업무의 전문성)를 30% 반영하는 근거가 불명확함.
- 소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승진 임용자를 최종 결정하는 제도는 부적절함.
- 업적평가에 단위점수를 부여하는 것 외에 논문게재 실적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함.
- 기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평가를 부서평가, 경영목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함.
- 연구관리지침 상 이의신청제도의 명문화가 명확하지 못함.

- 현직급 재직기간을 승진심사 기준에 5점 산정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행정직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 업무 중심으로 지표를 계량화할 필요가 있음.
- 전사적인 관점에서 팀과 개인 간 성과를 연계하여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성원들에게 문제점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개정안 마련, 설명회 및 사후 의견수렴이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함.
- 평가결과를 100% 승진심사에 활용하여 인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관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2013년 7월에 2013년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인상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차등폭에 대하여 정부지침을 준수한 노사협약이 이루어짐.
-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지방노동청 등으로부터 채용에서 퇴직까지 필수 노무관리 등에 관한 교육, 훈련을 받고 있음.
- 문화의 날, 월례회의가 월단위로 정례화 되어 있어 노사협력 증진프로그램이 조직화 되어 있음.
- 성과연봉제 설명 등 노사간담회가 열려 노사화합을 위한 의사소통이 활발함.
- 내부 건의함, 청년중역임명제도를 통하여 내부 의견 수렴이 활성화되어 있어 총 24건이 제안됨.
- 2013년 총 4건의 고충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음.
- 총 6회의 노무담당자 교육과 4회의 노무사 자문이 이루어짐.
- 분기별 노사협의회 및 반기별 노사간담회가 이루어짐.
- 소장실 개방 등을 통한 수시대화 창구 개설 등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짐.

〈단 점〉

- 2013년 노사협의회가 4회 열렸으나 노사협의회가 열린 시점(12월 23일, 12월 27일)이 연말에 치우쳐 있음.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과 달리 제3차, 제6차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안, 능률성과급 지급기준안 등 협의사항을 의결사항으로 운용하고 있음.
- 별도의 고충처리위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일반관리자 노무교육의 내용이 인사관리 측면에 치우친 한계를 가짐.
- 의사소통 통로가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 등 공식적 부문에 치우쳐 있고, 소장과의 대화 등 직접 통로에 의존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 발생시 개최되는 노사협의회 외에도 분기별로 정례화된 노사협의회 개최가 바람직함.
-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등은 노사협의회 규정 제19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운영 시 협의사항으로 운용하여야 함.
- 소장과 연구 및 행정직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매개역할을 수행할 중간관리층의 의사소통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고충처리위원회, 제안제도, 내부 건의함 등의 의사소통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의 운영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에서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는 33%이며, 2014년에도 59%로 편성되어 있어 적절한 수준임.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13%, 2014년 15%로 연구회가 제시한 평가기준(30% 이하)을 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은 2012년 7.9%로 연구회 제시 기준(10~20% 범위 내)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2013년 10.0%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3년에 수행한 10건의 수시연구사업비 집행비율은 89%로 높은 수준이며, 수시연구과제 집행에서 외부위탁연구비로 집행한 금액은 없음.
- 퇴직금의 적립은 매분기 균등한 수준으로 적립하고 있고, 퇴직예치금은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1%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200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연봉체계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부합함.

- 기본연봉에는 직무급과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수당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이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2%로 성과연봉체계에 대한 평가기준(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책정방식을 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차등지급률이 $\pm 1\%$ 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인원배분비율 또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의 지급 시 평가결과에 따라 간부직의 경우 $\pm 33\%$ 의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고, 비간부직의 경우 $\pm 15\%$ 의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등급별 인원배분비율 또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이 $\pm 33.4\%$ 로 최고-최저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하고 있으며, 인원배분비율 또한 최고-최저 각 10%씩 배분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3년 제도개선을 통해 업적평가와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기여도(재정기여도)를 각각 5:5로 반영하여 능률성과급을 지급함.

〈단 점〉

- 능률성과급 지급시 재정기여도 반영으로 인해 소수의 연구위원에게 집중되어 성과급이 지급됨.

〈개선 및 건의사항〉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이 업적평가를 중심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수탁과제 또한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수행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 지적사항 32건 중 개선완료가 32건으로 대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완료함.
- 국회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절차를 두고 있음.
- 평가결과 지적사항 직원설명회를 열어 전 직원이 이해하는 등 개선절차를 가짐.
- 기관장과 선임연구위원의 월 1회 정책간담회로 정책현안 대응 역량을 제고함.
- 인사위원회 서류 검토 및 면접에 외부 인사위원 참여로 인력채용시스템을 강화함.

<단 점>

- 평가결과 지적사항의 개선 추진 실적 및 결과 공유 부족 등 평가결과 자체개선시스템의 구축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구체적이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결과 지적사항의 개선결과 및 성과도 전 직원이 공유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유사항목별로 그룹핑하여 개선계획을 입안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2013년 장애인 고용률이 3.2%로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연평균 고용률 2.5%를 상회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한 실적이 있음.
- 중증장애인에게 비즈니스 등급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장애인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장애인 자리배치, 담당업무, 이동에 있어 ‘장애인욕구’를 파악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면 좋을 것임.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 목표 달성, 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 청년인턴 1명을 계약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음.
- 청년인턴 고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라서 청년인턴 운영을 근무관리, 교육지원, 취업활동지원, 고충처리, 세미나 참석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음.
- 기관 자체적인 청년인턴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인턴 전용 오리엔테이션 관련 자료를 마련하며, 멘토링 양식의 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인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규정(가산점 부여)이 마련되어 있으며, 우선고용률이 6%에 달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사업장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서울북부보훈지청)에 직원채용 협조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이 적정함.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임금, 처우에 관한 연구소 차원의 독자적인 규정이 존재함.
- 연구소 차원의 비정규직 운영계획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은 다소 미흡함.
- 비연구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존재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규정, 조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연구직과 비연구직을 불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IV

제도개선 건의사항

1. 연구회·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제언
2. 연구기관 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1

연구회·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제언

| 구분 | 발전 및 제도개선 사항 |
|-------------|--|
|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연구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방법 마련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필요 - 융·복합 과제 개발 노력 강화 필요 -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상향식 의사소통채널의 제도화 필요 - 연구윤리, 윤리경영교육의 강화 필요 - 외부 전문가 선정 방식의 개선을 통한 기관 중심의 균형잡힌 외부 전문가 선정 필요 |
|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지적 현안사항에 대한 표준지침 제정을 통한 업무제도 표준화 필요 (ex. 외부 전문가 및 네트워킹 관련 규정, 연구원 원외활동, 수시과제 선정 및 관리, 수탁용역 수입 추정 및 산정 등) -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이슈 발굴 방안 제도화 필요 (ex. 설문조사 통합 실시 등) |

2 연구기관 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 구분 | 발전 및 제도개선 사항 |
|-------------------|---|
| 평가기준 전반에 관한 제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개념정의 필요 (ex. 융·복합, 선도적인 국가정책 등) - 평가편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항목별 중점검토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 - 세부평가기준을 나누어 양적 기준은 등급화, 질적 기준은 등급 및 판정근거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 - 정량평가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점수화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필요 - 공통적인 정량지표 포함 고려 필요 (ex. 유료배포연구보고서 비율 등) - 연구원장이 연구기관 역량강화 및 적절한 연구과제 선정·수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는지에 관한 지표 신설 필요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 평가에 연구자 연구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지표 신설 필요 - 요약본에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개선실적을 표 형식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국가정책기여도 평가에 중점을 두어 전략 및 정책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연구관리·경영관리의 경우 시스템 점검 선의 평가로 축소할 필요 - 연구윤리 준수 평가 강화 - KDI 국제정책대학원 평가지표 대폭 수정 필요 (ex. 강의시수는 기준선 충족여부만 평가하고 기타 지표 보완) - 평가위원 서술평가로 이루어지는 부분의 서술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하여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 - 평가위원 간 격차를 보정할 연구회 지침 검토 및 새로운 지침 설정 논의 필요 |

| 구분 | 발전 및 제도개선 사항 |
|--------------------|--|
| <p>평가지표에 관한 제언</p> | <p>〈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감사 공통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판단의 객관화 지표 필요 <p>〈리더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운영제도 및 관행 평가가 아닌 기관장의 실질적 노력 평가 필요 <p>〈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융·복합 및 새로운 과제 발굴 수행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기술 및 발굴 수행 노력 기술 필요 <p>〈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 착안사항의 구체적 제시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 담보 필요 - 3대 중점과제 설정시기를 연초로 하고, 이에 대한 연중 관리 및 평가 체계 마련 필요 <p>〈기관의 현안과제 선정의 타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 제시 필요 <p>〈노사관계 선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대상에 의한 구분을 없애고 노무역량교육/훈련으로 지표 통합 필요 - 노사 간의 의사소통채널과 노사협력증진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지표화 할 필요 - 노사간담회와 수시대화 창구 등을 통합하여 개선할 필요 <p>〈단체협약 내용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식년, 안식월 기준 상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정 필요 - 주요 확인사항에 대한 명문화 규정을 단체협약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할 필요 <p>〈예산운용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이월금을 반영한 예산편성은 3월경 마무리되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편람 재검토 필요 - 수시사업비 집행 비율 산정 시 미지급비용이 포함되도록 양식 개정 필요 <p>〈기본연구사업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개 연구기관 대다수가 S 또는 A 등급에 해당되므로, 지표 개선 필요(ex. 과제별 3분기 이내 집행비율, 연구사업비 정산시스템(자체점검 및 감사 포함) 구축 여부 등) <p>〈성과연봉제 이행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7단계 척도는 일부 지표만 준수하더라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 중요사항(ex. 호봉제, 비누적식 운영 등) 미준수 시 점수 획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평점체계 개선 필요 |

| 구분 | 발전 및 제도개선 사항 |
|--------------|---|
| | <p>〈사회적 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배려 전 지표에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평가 시 제출하도록 할 것 - 고용인원을 고려하는 평가지표는 연말기준이 아닌 월평균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 |
| 평가 과정에 관한 제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편람 및 평가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사전교육 필요 - 평가기준이 해당기간의 실적에 한정되는 것인지, 누적 실적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인지 연구기관에 교육 필요 - 보고서 및 근거자료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ex. 실적보고서 작성자 기재 등) - 현재 1팀 2인으로 구성된 리더십 평가위원을 2팀 4인으로 개선할 필요 - 실사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연구기관에 사전 전달하여 현장평가 시 관련 자료가 즉시 제출되도록 조치할 필요 - 소명자료의 제시는 보고서에 기술되었던 내용 중 평가위원의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한정하고, 무분별한 이의제기 및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페널티를 정할 필요 -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평가보고서 우측 하단에 꼬리말을 넣어 연구기관을 표시할 필요 - 평가위원들에게 방대한 내용을 정리한 핵심사안의 제공 필요 - 현장평가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중 휴식일 또는 휴식시간 충분히 확보할 필요 2) 연구기관 담당자 전원의 명찰 패용 필요 |
| 사후조치 등 기타 제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람 제시 외 우수사례의 제시 기준 추가 필요 - 항목별 최우수기관의 보고서를 연구기관에 책자 등 형태로 배포할 필요 - 개선목표와 개선실적이 개선성과 및 경영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 - 평가결과를 기관장 연봉뿐만 아니라 직원 성과연봉 차등지급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기관평가가 기관 및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결과 통보 이후의 후속조치를 강화할 필요 |